

2002~2008  
주요업무계획자료집

2008. 10

농림수산식품자료실



0016240

 농림수산식품부

2002~2008  
주요업무계획자료집

2008. 10



# 총 목 차

1.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2002. 1) .....	1
2. 2002년도 농업·농촌정책 추진계획(2002. 4. 25) .....	39
3.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2003. 3. 14) .....	57
4.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2003. 7. 28) .....	81
5.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2004. 3. 8) .....	101
6.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2005. 3. 15) .....	227
7.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2006. 1) .....	359
8.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2007. 1) .....	557
9. 2007년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2007. 3) .....	689
10.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2008. 3. 18) .....	865

2002 年 度  
主 要 業 務 計 劃

2002. 1.

農 林 部

“국민을 생각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 목 차

I. 일 반 현 황 .....	5
II. 「국민의 정부」 농정성과와 과제 .....	6
III. 2002년도 농정 주요시책 .....	9
1. 「선택과 집중」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 .....	10
2. 소비자 만족의 생산·유통체계 구축 .....	14
3. 농가경영혁신과 소득안정기반 강화 .....	17
4. 고부가가치 수출농업 육성 .....	20
5. 협동조합의 유통·경제사업 확충 .....	23
6. 농촌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	26
7. WTO 농업협상 적극 대응 .....	28
IV.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	30
V. 농촌진흥청·산림청 주요업무계획 .....	32
VI. 국정과제 및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상황 .....	36





# I. 일 반 현 황

## 조 직

- 농 림 부 : 3,689명(본부 505, 소속기관 3,184)
  - 1차관보, 1실, 10국, 33과, 4개 소속기관
- 농촌진흥청 : 2,052명(본청 297, 소속기관 1,755)
- 산 림 청 : 1,433명(본청 177, 소속기관 1,256)
- ※ 농업기반공사(5,912명), 농수산물유통공사(500명), 한국마사회(722명)

## 예 산

- 2002년 농림부문 예산은 전년대비 5.4% 증가한 9조 2,851억원
  - 농림부 8조 1,856억원, 농촌진흥청 3,595억원, 산림청 7,400억원
  - \* 2002년 전체예산중 농림부문 예산 비중은 8.0% 수준
- 쌀값안정지원과 농가소득안전망 확충을 적극 뒷받침
  - 양곡수매, RPC 운영자금 등 쌀값안정대책에 집중 지원(4,492억원 → 6,870)
  - 논농업직불제 ha당 지원단가를 2배로 증액(2,105억원 → 3,929)
- 농산물유통소프트웨어 확충, 기술개발과 정보화 기반 강화에 지원
  - 조합유통활성화, 농업관측, 전자상거래 등에 중점 지원(3,987억원)
  - 농림기술개발, 농업벤처육성, 농업인정보화 교육 등에 예산증액(593억원→641)

## Ⅱ. 「국민의 정부」 농정성과와 과제

### 지난 4년간의 성과

- 빈번한 기상이변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의 노력과 농업용수 개발 등 생산기반 투자에 힘입어 4년 연속 풍작을 실현
  - 집중호우('98~'99), 90여년만의 가뭄('01) 등 기상재해를 극복
  - 지난해의 쌀 수확량(3,830만석)은 '91년이후 최대 수준
    - \* 다만, 연속풍작과 소비감소로 과잉재고 처리문제가 현안과제로 대두
  
- IMF 경제위기에 따른 농가수지 악화, 부채상환능력 취약 등에 대응하여 부채경감대책 등을 통해 농가경영안정기반 조성
  - '98이후 정책자금 상환 연기 등 부채경감대책을 추진하여 부담 완화
  - 특히,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지난해에는 14조 7,401억원의 부채에 대해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율인하 조치
  
- 농가소득보전과 자연재해로부터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정사상 처음으로 「논농업직불제」와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도입
  - 논경작 농가의 96%인 1,023천 농가에게 논농업직불제에 의한 보조금 지급(진흥지역 25만원/ha, 비진흥지역 20)
  - 동상해(凍霜害)·우박·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사과·배재배 농가에게 보험금 지급

- 산지(產地)·소비지 유통 인프라 확충과 다양한 수급안정장치 도입 등 지속적인 유통개혁을 통해 제값받는 유통체제 강화
  - 도매시장·유통센터 등 유통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직거래 확대('97 : 5% → '00 : 18)로 농가수취가격제고에 기여
  - 농업관측, 유통협약 등 생산자 조직을 중심으로 한 사전적·자율적 수급조절장치 도입으로 수급 및 가격안정기반 조성
  
-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농촌지역의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 여성농업인의 권익신장을 적극 지원
  - 농촌지역에서도 초고속통신망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ADSL 보급 확대('01.12월 : 모든 읍지역, 753개 면지역)
  - 농가 PC보급('97 : 18.7% → '00 : 29.8), 농업인정보화 교육 등을 추진
  - 여성농업인육성계획을 수립, 여성농업인센타농가도우미 제도 등 도입
  
-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 구제역·광우병 등 악성가축질병에 대한 철저한 검역(檢疫)·방역대책을 통해 축산업의 안정성장기반 확충
  -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 조기획득('01.9월)
  
- 협동조합개혁, 농업기반공사 출범 등 농정관련조직의 지속적인 개혁 추진으로 조직의 효율화와 대농업인 서비스기능 강화
  - \* 농협중앙회 통합, 조직 및 인력 감축(△25,490명)
  - \* 농업기반공사의 인력감축(△1,574명) 및 수세 폐지(연간 300억원)

## 향후과제

- 쌀 수급불균형으로 대두된 **재고누증(累增)문제**와 2004년 WTO 쌀 재협상에 대응할 **근본적인 대책** 필요
  - 생산조정과 소비촉진 등 **수급균형대책** 강구와 함께 **품질고급화**·**농지제도·규모화·소득문제**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쌀산업대책** 마련
  
- 「WTO 도하개발 아젠다」의 출범으로 가속화될 시장개방에 대응,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
  - 품목별 특성에 맞는 **경쟁력 제고방안**과 **국내농산물의 안전성·품질향상** 등을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 대책 수립 추진
  
- 유통개혁, 협동조합개혁의 성과가 **농촌현장에서 조기(早期)에 가시화**되어 농업인들의 실질적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분야별 **상시적 개혁**이 요구
  - 특히, 개방화 진전에 대비하여 **일선조합이 생산·유통·판매의 실질적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농촌인구 감소·고령화**에 대비하고, **도농간 소득·복지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의 농촌복지대책** 마련 필요
  - 농업정책만으로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으며, **농촌문제 해결이 뒷받침**되어야 가능

### Ⅲ. 2002년도 농정 주요시책

#### < 농정추진방향 >

- 개방화 진전 등 여건변화에 대응, 시장지향적 농정 패러다임에 기초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
  - 소비자 신뢰 확보와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유통체계 확립
  - 농업인의 창의와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한 농가경영혁신을 적극 유도하고, 생산자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
  - 농업·농촌발전을 뒷받침할 다양한 소득·경영안정 장치 도입과 농촌복지증진 기반 확충
  - 새로운 WTO 다자간 농업협상에의 적극적인 대응과 국내보완대책 사전 강구
- = 그동안의 농정개혁과제를 착실히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농업·농촌발전 전기(轉期) 마련의 새로운 정책 틀을 정립 =

# 1. 「선택과 집중」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

## < 쌀 >

- ◇ 풍작·MMA 쌀 수입 등으로 공급은 늘어나고 있으나, 소비는 줄어 재고량이 크게 증가('98 : 559만석 → '01 : 989 → '02전망 : 1,380)  
\* 평년수준 생산(3,700만석)시 매년 200 ~ 300만석의 재고 추가 발생
- ◇ 정부수매량 축소에 따라 정부주도의 양곡관리에 한계
- ◇ 2004년 WTO 쌀 재협상을 앞두고 쌀 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  
⇒ 당면과제인 수급균형 회복에 집중하면서, 생산조정·수매제도·쌀 농가소득 문제 등 종합대책을 적극 강구

- 소비급감, 재고증가 등 최근의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적정생산 적극 유도
  - 미질이 떨어지는 **발벼**('01 : 27천ha)에 대한 수매를 중단
  - 논에 벼이외 타작물 재배시 정책적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논에 콩·사료작물 재배시 소득지원을 시범추진(콩 3,000ha, 사료작물 2,000ha)
- 고품질 품종 보급확대, 산지(產地)·품종표시제 도입 등을 통해 고품질 쌀 생산·유통을 촉진
  - 고품질 품종을 전체 재배면적의 50% 이상으로 확대
    - 고품질 벼 품종 저가(△5%) 공급을 통해 조기 확산
  - 질소질비료의 사용량 감축으로 미질을 높이고, 품질에 따른 가격 차별화 유도를 위해 벼 수매 규격 강화(1등, 2등, 등외 → 특등 신설)
  - 포장양곡의 규격표시를 산지·품종연산(年産) 표시제로 개편

- 328개소의 미곡종합처리장(RPC)을 **고품질 쌀 생산유통 중심체**로 육성
  - 우수 RPC를 중심으로 「고품질 쌀 계열화」 사업을 추진하여 품종 선택 등 **생산부터 매입·가공·브랜드화·판매까지 일관처리**
    - 계약재배농가의 생산비 우선매입 및 영농자재공급 등 인센티브 부여
  - 미곡종합처리장의 부족한 **건조·저장시설 확충**과 무이자 **운영 자금 지원확대**(4,225억원 → 1조 850억원)로 벼 매입능력 대폭 제고
  - 산지(產地)·품종별 대표가격 형성을 위한 **미곡유통거래소** 설치 추진
  
- 심각한 쌀 재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소비촉진 노력과 함께 **특단의 재고 처분대책**을 강구
  - 학교급식용·군수용의 **신곡(新穀) 공급**(120만석)과 **막걸리 등 주정용·가공용 쌀의 저가판매** 확대(180만석)
  - 쌀 **가공식품산업**을 적극 **육성**하면서 소비촉진 홍보를 지속 추진
    -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자문단을 구성하여 기술경영상 애로 해소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대외지원 등 **특별 재고처리방안** 마련
  
- 쌀 재협상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종합적인 쌀산업발전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미작(米作)경영안정제**, 수급균형을 위한 **생산 조정제**, 현행 약정수매제 보완과 **공공비축제 도입문제** 등을 검토

## < 원 예 >

◇ 품목별, 경영규모별로 가격 및 품질면에서 경쟁여건이 크게 상이

- 양념류(고추·마늘), 과일은 개방시 가격경쟁력이 취약하나, 무·배추 등은 개방 확대시에도 경쟁 가능
- 시설채소, 화훼(장미·백합·국화 등)는 수출산업으로 성장 가능

◇ 특히, 양념류의 경우 상업형 전업농은 소수인 반면, 쌀 농사 등 다른 작목과 함께 영세규모로 영농하는 농가가 대다수

\* 90만호의 고추재배농가중 75%가 300평 미만 재배

⇒ 일정규모이상의 전업농과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경쟁력 제고대책 집중

□ 품목별 경쟁여건에 따라 경영비 절감, 품질고급화 등 차별화된 정책을 선택하여 집중추진

- 고추, 마늘, 양파 등은 규모화된 농가를 대상으로 품종·종구 개량, 파종·수확작업 기계화 등에 역점
- 사과, 배 등 과일류는 키 낮은 과원(果園) 조성, 브랜드화 등을 중점추진
- 시설채소, 화훼류는 신품종개발, 비용절감시설기술보급 등을 강화

□ 주산지(主產地) 중심의 생산자 조직화로 자율수급 조절기능을 확충

- 고랭지채소전국협의회와 같은 품목별 전국 생산자조직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자조금 조성, 생산·출하조정 등을 적극 실시
- 계약재배 및 계약출하사업을 확대하여 수요에 따른 적정공급 유도  
\* 채소계약재배 : ('01) 5,100억원 → ('02) 6,000, 과실계약출하 : 982억원 → 2,160



## < 축 산 >

◇ UR이후 시장개방에도 돼지, 닭 등 축산업은 위축되지 않고 **전업화·규모화가 크게 진전**되어 오히려 경쟁체질이 강화

\* 돼지 전업농 사육두수/총사육두수 : ('95) 36% → ('01) 67

◇ 다만, 구제역·광우병 등 **악성전염병예방과 위생문제**가 축산업 발전의 핵심

⇒ **외국산과의 품질차별화대책** 및 전염병 상시 **검역방역체계구축**에 역점

□ 사육기반 강화, 품질고급화 등 **축종별 경쟁력 제고대책**을 적극 추진

○ 한우사육기반을 확충하고, 소규모 한우농가 조직화·전업농 일관(一貫)사육 등을 강화하여 **수입육과의 품질 차별화** 유도

- 송아지생산안정제 정착, 혈통관리 등 개량체계 강화, 브랜드화 촉진 등

○ 양돈·양계는 규격돈 출하, 양계장 시설현대화 등을 통해 **수출전략 산업**으로 적극 육성

- 「양돈·양계수급안정위원회」를 통한 자율수급조절 기능강화

○ 젓소는 **집유일원화 정착**('02 : 90%) 등으로 유통비용 절감과 수요기반 확대

□ 월드컵·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에 대비한 **특별검역대책**을 추진하고, 환경친화적 축산으로 **성장잠재력 확충**

○ 구제역, 광우병, 돼지콜레라 등의 **유입방지** 및 청정화 유지를 위한 **검역·방역 활동** 강화

○ 축산분뇨자원화 등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 ('01) 364억원 → ('02) 424(16.5% 증)

## 2. 소비자 만족의 생산·유통체계 구축

- ◇ 농축산물의 품질·안전성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요구가 증가
- ◇ 신토불이(身土不二) 등과 같은 애국심에 호소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소비자의 기호에 맞춘 생산·유통체계의 구축이 시급

### 가.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고품질·안전농산물 공급기반 확충

- 저농약·유기재배 등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지구조성 확대(552개소 → 578)와 원활한 유통 적극 지원
  - 푸른들 가꾸기(132천ha)와 축분액비(液肥)화(400기) 등 자연순환농업을 통해 지력증진 및 화학비료사용 절감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제고를 위해 저농약·무농약·유기재배 농산물의 인증제도 활성화 및 판로기회 확대
    - \* 인증물량 : ('01) 466천톤 → ('02) 600, 전문판매장 : 90개소 → 100
- 안전한 농축산물의 공급을 위해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의 조기정착을 강력 추진
  - 상추 등 농약잔류 우려가 큰 30개 품목에 대한 조사물량을 확대하고, 부적합품의 역추적 조사로 시중유통 차단 및 안전농산물 출하 유도
    - \* 안전성 조사 : ('01) 55천건 → ('02) 60(수출 : 1,000건 → 1,200)
  - 모든 도축장(174개)에 대해 '03.7월까지 HACCP을 의무 적용
    - HACCP 미적용 도축장에 대한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실시

-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차원에서 원산지 표시, 유전자 변형농산물(GMO)표시 품목을 확대
  - 신선농산물, 일부 가공제품 이외에 과일 등을 원료로 한 주류 및 전분(澱粉)사용 면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 GMO 표시제 대상품목을 감자까지 확대(현재 : 콩콩나물·옥수수)
  - 축산물거래 기록유지 의무 등을 통해 수입축산물의 둔갑판매 방지
  
- 소비자 기호에 따른 차별화된 고품질 농축산물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품질인증제 등을 더욱 강화
  - 품질인증(등급크가품종 등) 대상품목과 물량을 확대하고, 지리적 명성이 높은 농산물의 성가(聲價)보호를 위한 지리적표시제 시행
    - \* 품질인증 품목/물량 : ('01) 58개/190천톤 → ('02) 82/200
    - \* 보성녹차 지리적표시 제1호 등록 추진('01.12 등록신청 공고)
  -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비파괴 당도측정, 예냉, 건조기기 지원 등 「수확후 관리기술」 개발·보급으로 품질관리 강화
    - 농산물 품질향상과 상품성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사제」 도입 추진
  - 편의성 제고 상품(간마늘, 껍질째 먹는 사과 등), 기능성 상품(키토산 마늘 등)과 같이 품질이 차별화된 제품의 출하 촉진
  - 계란등급제 도입으로 품질향상과 등급에 따른 가격 차별화 유도

## 나. 물류체계개선과 수급조절 기능강화

- 유통경로간 경쟁 촉진과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농가의 판로기회** 확충
  - 도매시장의 표준하역비제도를 도입하여 물류체계를 효율화하고, **전자경매 확대**(’01 : 63개 법인 → ’02 : 72)로 거래의 투명성 증대
  - 소매위주의 종합유통센터는 **도매물류기능을 강화**하고, 공관장·하나로마트는 소비지 농산물유통거점(據點)으로 육성
  -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쇼핑몰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우수업체에 운영자금 지원**(30억원)
    - 전자상거래 실적 : (’00) 500억원 → (’01) 2,700 → (’02계획) 5,000
  
- 규모화, 기계화, 직거래 등 **물류체계 개선**을 통해 **유통비용 절감**
  - **연합마케팅 및 공동브랜드화**로 규모의 유통실현
    - 공동브랜드 출하조직에 대해 공동선별비 추가지원(50억원)
  - 파렛트출하 등 우수조직에 **규격포장비·물류기기** 등 집중지원(673억원)
  - 소비지 대형유통업체 등에 대한 **상품설명회 개최** 등으로 **직거래 확대**(’00 : 18% → ’02 : 30)
  
- 생산자중심의 **사전적·자율적 수급안정**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관측기능 및 유통정보를 확충하여 **생산·출하조정능력** 제고
  - \* 관측품목 확대 : 24개 → 26, 출하유통정보 제공 : 11개 → 23
  - 품목별로 생산자단체를 법인화 하여 농산물수급조절을 위한 **유통협약·명령의 실행** 주체로 활용

### 3. 농가경영혁신과 소득안정기반 강화

- ◇ 농업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기술·경영혁신을 주도할 농업분야의 전문인력 확보가 중요
  - 현행 후계자 제도는 대상자 선정·지원에 치중하여 사후관리와 발전단계별 후속지원에는 미흡
- ◇ 전문농업인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확립

#### 가. 농가경영혁신을 선도할 경영주체의 체계적 육성

- 신규취농에 대한 자금확대와 교육강화 등으로 청년농업인 지속 확보
  - 35세미만의 신규 취농(就農)후계농업인을 확대 선발(500명 → 1,100)하고, 효과적 육성을 위해 지원액 증액(50백만원까지)
  - 영농발전단계에 따라 전업농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후속 지원, 컨설팅 등 사후관리를 강화
- 전업농을 중심으로 경영성과와 발전가능성에 따라 농업종합 자금 등을 집중 지원하고, 기술 및 경영 컨설팅을 활성화
  - 농지구입자금 지원은 일정 영농규모이상 농가에게 집중
    - 농지매매자금규모 확대(1,381억원 → 2,800), 융자금리 인하(4.5% → 3)
  - 경영진단, 기장(記帳)·회계, 마케팅 등에 대한 전문컨설팅 실시(400개소 → 500)로 기술·경영능력 제고
- 신지식농업인 발굴을 통해 농업경영의 모범사례로 활용하고, 경영체별 수준에 맞춰 특성화된 기술·경영교육을 실시

## 나. 현장중심의 농업기술·정보의 실용화

- 영농현장의 기술애로(隘路) 해소와 생명공학(BT)·정보화(IT)를 전통농업에 접목한 **첨단기술 실용화**에 중점 지원(412억원)
  - 선도농가방문, 인터넷 기술공모 등을 통해 **애로기술을 수집**하고 産·學·研 공동연구로 단기간 기술개발
  - 농림기술관리센타를 중심으로 농업과학기술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계**하는 서비스 제공
  
- 농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농업벤처 전문투자조합 3~4개** 결성 추진
  -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을 통해 농업분야 벤처기업 창업 적극 지원
    - \* '01.12월 농업벤처전문투자조합 1호 결성, 금년 1월부터 농업벤처 투자개시
  
- 농촌지역의 **초고속인터넷 활용**을 위한 ADSL 보급 사업을 금년중으로 마무리하고, 농촌 PC보내기 운동을 전개
  - 농촌 PC보내기 운동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세제상 혜택 등을 부여하여 PC 5,000대를 **농가에 보급**
  
- 정보화교육의 확대 및 내실화로 **농업인의 정보활용능력** 제고
  - **농업인 8만명**에 대해 수준에 맞는 체계적인 **정보화교육** 실시
    - '01까지 16만명 교육 완료, '05년까지 40만명 교육 추진
  - 농업인 **홈페이지(500개)** 구축 지원과 **농업정보119**를 활용한 홈페이지 농가 등에 대한 **지도·교육 강화**

## 다. 직접지불제와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지원단가를 인상(40~50만원/ha)하되, 증산과 연계되지 않도록 지급조건 강화
    - 담수(潭水)의무폐지, 타작물 재배허용 등으로 쌀 증산유인이 없도록 하고, 논직불제를 생산조정과 연계하는 방안 검토
    - 1~2월경 실제경작여부 등을 점검하여 부적격자 지원 방지
  - 친환경직불제·경영이양직불제 등은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내실화
    - 친환경직접지불제는 대상지역을 확대(상수원 보호구역 등 → 전국)하되, 지원요건은 무농약(無農藥) 인증 농가로 한정
    - 경영이양직불제는 농지임대차 보다는 매매방식으로 전환
    - 밭농업 직불제는 '03년 시행을 위해 399개 오지면을 대상으로 밭 경사도 조사 및 대상지 구역도 제작
  - 농작물재해보험은 지난해의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대상품목·정부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보험가입 활성화 유도
    - 금년부터 보험대상품목에 포도·단감·감귤·복숭아를 포함하고, 국고지원을 확대(순보험료 30%, 운영비 50% → 50, 70)
      - 대상재해 확대(호우), 보험료 분납, 필지별 가입 허용 등 제도개선
- \* 경북 청송의 한 농가(사과 35천평 재배)는 8,745천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후, 작년 4월 동상해 발생으로 93,410천원의 보험금 수령

## 4. 고부가가치 수출농업 육성

- ◇ 농산물전체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구제역 발생과 주요 수입국의 경기침체로 돼지고기, 김치, 인삼 등의 수출은 감소
  - \* 전체 농산물 수출 : ('00) 1,532백만불 → ('01) 1,600(4.4%증)
  - \* 돼지고기 48백만불('00대비 △35.7%), 김치 70(△11.2), 인삼 74(△6.3)
- ◇ 고품질·안전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확충과 시장다변화 필요

### 가. 수출농산물 공급기반 조성

- 18억불 수출을 목표로 경쟁력 있는 고품질 농산물을 수출전략 품목으로 선정하여 생산 및 수출기반 확충
  - 채소·과실·화훼 전문생산단지의 조성을 확대('01 : 89 → '02 : 100) 하고, 김치·인삼의 고품질·브랜드화 및 우수성을 집중홍보
  - 구제역 발생으로 중단된 돼지고기의 수출재개를 위해 청정화 유지 및 규격돈 생산기반 확충
  - 닭고기 수출촉진을 위해 종계장 등 시설현대화와 뉴캐슬병 근절
- 수출물류센터 설치 등 물류체계를 개선하여 수출농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물류비 절감
  - 저온(低溫)유통·일관수출체계를 갖춘 수출물류센터(광양, 마산) 준공
  - 예냉·선별·저장 등 수확후 관리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확산

\* 깻잎 등을 수출하는 경북 수륜농협은 최장 100일정도 신선도가 유지되는 신기술을 개발하여 고소득 실현(장당 수출가격 : 26원, 국내 : 12)



## 나. 수출지원 및 생산자 중심 수출역량 강화

-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자금지원 및 정보제공기능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적극 해소
  -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구매·유통자금 지원 확대**
    - \* 수출관련자금 지원규모 : ('01) 3,758억원 → ('02) 4,040
  - 농수산물무역진흥센터('02.10월 준공)를 활용하여 우수 농산물 전시·홍보·정보제공 등 종합적인 수출지원체계 구축
  - 농산물 **수출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현장밀착형 컨설팅** 등을 통해 기술지도 및 애로해소에 중점
    - 가격상승 위험보험 가입대상품목 확대 및 부보율 상향 조정 등
- 수출농산물 생산자의 조직화를 촉진하고 수출업체간 공정경쟁을 유도하는 등 **자율적인 수출역량 강화**
  - 파프리카, 돼지 등 품목별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수급조절과 대외홍보 활동 등을 적극 지원
  - 농산물 수출에 앞장서고 있는 **협동조합, 산지유통센터** 등을 지역 **농산물 수출기지로 육성**
    - 우수조직에 대한 수출관련자금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 「농림수산식품수출입조합」내 품목별 수출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수출업체간 과당(過當)경쟁 방지**
    - 덤핑수출, 저급농산물 유통 등 예방으로 수출협상력 제고

## 다. 주요 지역별 수출활성화 방안

- 일본은 돼지고기, 채소, 김치, 인삼, 화훼 중심으로 대형 유통업체 등과 연계한 현지 유통망을 구축하여 시장 점유율 제고
  - 금년 상반기중에 돼지고기 수출이 재개되도록 대일교섭 및 홍보활동 강화
    - 콜레라, 구제역예방접종 등에 문제가 없는 제주도산의 우선수출 협의
  - 잔류농약 등 채소류 안전성 조사 및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수출시기·물량 등을 자율조절하여 안정적인 수출보장
  
- 중국은 WTO 가입에 따라 고품질 우리농산물 소비가 가능한 대도시·고소득층을 대상으로 거점 수출시장 확보
  - 인삼 수출을 위해 수입의약품 등록 조기획득 적극 추진
    - 타국의 저가 인삼과 차별화를 위해 현지 TV광고 등을 시행
  - 「春節(구정)」 등 선물용 대량수요철을 겨냥하여 심비디움, 호접란 등 화훼류의 수출을 촉진
  
- 미국·러시아·동남아 등 성장시장은 시장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여 새로운 시장 개척
  -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특판전(特販展) 개최 및 수출홍보 등 해외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 강화
  - 월드컵, 아시안 게임 등 국제행사를 우리농산물 홍보기회로 활용
    - \* 월드컵 기간중 우수바이어 초청 및 다양한 이벤트 행사 개최

## 5. 협동조합 유통·경제사업 확충

- ◇ 「국민의 정부」 출범(出帆)이후 협동조합개혁 추진으로 조합의 경제사업규모가 증대하고 있으나, 신용사업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
  - \* 판매사업(조합당) : ('97) 71억원 → ('00) 99 (40% 증가)
- ◇ WTO 체제하에서 정부주도 지원정책의 한계를 협동조합의 유통·경제사업 기능과 역할을 확충하여 적극 보완 필요

### 가. 일선조합의 산지유통 기능 대폭 강화

- 조합간 사업연합, 품목별 연합조직 활성화 등을 통해 생산·유통계열화와 공동출하사업을 촉진하여 규모의 경제 실현
  - 사업연합·합병조합 등 규모화된 조합을 대상으로 중점 지원
    - 협동조합의 산지유통기능 확충을 위해 운영자금(4,800억원)을 지원
      - \* 강원지역 고랭지채소 연합판매(27개조합 참여) : '맑은 淸' 공동브랜드
  - 과실·채소·축산 등 품목별 전문조합의 전국단위 연합회 결성을 통해 수급조절 및 소비촉진 활동 강화
    - \* 예산능금 등 10개 조합이 「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 설립('01.12)
- 유통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경제사업의 효율화·전문화 촉진
  - 전문경영인 영입 및 책임경영체제 구축 등으로 경영성과 제고
    - 우수조합에 대해 정부 및 중앙회의 저리자금 지원 확대 추진
  - 경제사업 종사직원 교육 강화 및 인센티브제 실시

## 나. 일선조합의 경제사업기반 확충

- 중앙회 직영사료공장 등의 회원조합이관, 자회사화 및 공동 운영 등을 통해 조합의 경제사업 기반 확충
  - 사료 등 가공공장의 운영체제를 회원조합 참여 방식으로 개편
    - 9개 사료공장의 일선조합 이관 및 자회사화 추진 등
  - 농협유통과 축협유통을 합병하여 일선조합 계통출하체제 강화
- 공동구매사업에서의 일선 조합 편익제고를 위한 유통성 부여 등 구매방식 개선으로 농약비료 등 농자재 공급가격을 인하
  - 농업용면세유 공동구매로 유류공급가격 인하(약 500억원)
  - 구매물량 등에 따른 조합별 차등가격적용, 사이버 구매, 비수기(非需期) 현금할인 구매 등 농자재 구매방법을 다양화
    - \* 안성 13개 농협은 사료공동구매로 연간 15억원이상 절감(가격 10%인하)
- 중앙회는 일선조합의 경제사업 지원을 위해 소비지 시장유통망 확충, 전자상거래 기반조성, 저리자금 지원을 적극 추진
  - 종합유통센터 중심으로 권역별 소비지 유통망을 확충하여 권역내 산지 일선조합의 공동출하 역량 강화
  - 일선조합은 기업 등 대형실수요자(B2B), 소비자(B2C)와의 전자상거래 산지거점으로 육성
    - \* 농협 농·축산물 전자상거래 목표 : ('01) 400억원 → ('02) 700
  - 조합의 안정적인 판매사업을 위한 저리자금지원 확대('02 : 1조 1,400억원)

## 다. 신용사업 건전화로 경제사업 추진역량 확대

- 지난해 제정된 농협구조개선법에 따라 조합경영평가, 재무상황 등을 정례적으로 점검하여 조합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 치유
  - 금년중에 부실조합은 부실규모, 경영전망 등에 따라 정상화 합병·청산으로 나누어 정리
    - 청산대상조합의 경우, 신용사업 계약이전에 의해 고객피해 최소화
  - 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해 합병명령, 사업양도, 계약이전 등 적기(適期)시정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
    - 부실채권의 효율적 관리 및 조합건전성 제고를 위해 농협자산 관리회사를 설립 추진
  
- 농업인의 금융부담 경감 등을 위해 농업금융개혁 지속 추진
  - 상호금융대출금리는 시중금리와 연계하여 운용토록 지도
    - \* 상호금융 신규대출금리 : ('00.12) 10.72% → ('01.11) 8.54(△2.18%P)
  - 개인별 신용평가에 의한 대출을 제도화하고, 상호금융예금자보호 기금확충('01 : 1,329억원) 등으로 조합 신용사업의 건전성 제고
  
- 금융시장 및 농업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단계별 추진방안 마련
  - 농업인단체·협동조합 관계자·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제도개선 등 적극 추진

## 6. 농촌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 ◇ 농업경쟁력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농촌의 교육·의료 등 복지문제가 동시에 해결되어야 가능
  - 젊은층 이농과 농촌공동체 위축 심화는 열악한 교육문제가 주요인
    - \* 농가의 교육비가 도시유학 등으로 도시가구보다 2배 수준
- ◇ 농촌복지·지역개발에 있어 관할부처 분산에 따라 체계적 지원 미흡
  - ⇒ 농업과 2·3차 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농촌지역의 교육·의료 등 복지증진대책 적극 강구 필요

### 가. 농촌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 농촌의 활력 유지와 젊은 인력의 정착을 위해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촌지역균형개발대책을 범정부차원에서 추진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복지대책 마련
- 주택, 도로, 상·하수도 등을 정비하여 농촌생활환경을 개선
  - 정주권(280개) 및 문화마을(50개)사업으로 생활기초시설 등을 정비
    - 사업설계시 주민희망시설을 우선 반영하는 상향식 개발방식 적극 도입
  - 상수도가 공급되지 못하는 농촌지역의 식수해결을 위해 마을 단위의 대형관정 설치('01까지 : 3,351개소 → '02 : 480)
- 농업인자녀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여성농업인의 복지 확충
  - 실업계 고교생자녀를 둔 농가에게 입학금·수업료 지원(396억원)
  - 농가도우미제도를 농촌지역 전 시·군으로 확대(3,200명 수혜) 하고, 고충상담 등을 위한 여성농업인센터(18개소)를 운영

## 나. 농촌환경과 연계된 다양한 농외소득원 확충

□ 농촌의 문화경관(景觀)과 농업체험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 수요충족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린투어리즘 실시

○ 전국 18개소에 녹색농촌체험시범마을을 신규로 조성(18억원)

\* 경기도 포천 교동마을의 경우, 마을인근의 명소 안내를 팜스테이와 연계하여 연간 호당 약 2백만원의 순소득 실현

○ 도농간의 정보교류활성화를 위한 「도시농촌교류추진협의회」 발족 추진

□ 농산물가공산업을 그린투어리즘과 연계하여 생산·판매 촉진

○ 된장, 메주 등 부업규모 전통식품을 지역특산품으로 발전

\* 강원 정선의 「메주와 첼리스트」는 전통장류의 판매촉진에 기여

○ 농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경영평가와 컨설팅을 강화하고, 케이블 TV 등 홈쇼핑을 통한 마케팅 집중 지원

□ 농촌취업기회 확충을 위한 특산단지 및 농공단지 활성화

○ 농촌지역 특산단지의 운영 내실화 및 특산물에 대한 홍보관측 강화

- 신규단지 조성은 최대한 지양하고, 발전가능성 있는 단지에 중점 지원

○ 농공단지의 부지(敷地)조성비 지원을 확대(최고 3만원/평 → 10)하고,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전문단지를 육성

\* '02 신규조성(4개소) : 강원 원주, 충남 금산·예산, 전북 남원

## 7. WTO 농업협상 적극 대응

- ◇ WTO 도하개발아젠다 출범으로 금년부터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다양하고 집중적인 대외교섭활동 강화 필요성 증대
  - 2002.3월부터 1년 이내에 관세·보조금감축의 세부원칙 결정
- ◇ 세계적인 교역자유화라는 흐름의 틀 내에서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국민적 지혜를 모아 협상에 총력대응하고 보완대책을 사전 강구

### 가. 주요 협상내용과 전망

- 2003.3월까지의 세부원칙(Modality) 협상에서는 관세와 보조금 감축의 폭·속도·방법 등을 중심으로 수출국들의 공세 예상
  - 실질적 ‘시장접근개선’과 ‘국내보조감축’을 두고 논쟁 불가피
- 2003. 4월부터 진행될 양허협상에서는 개도국지위 유지 여부가 관건이나 국제사회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못한 상황
  -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쌀수매 등 국내보조와 관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속도로 감축해야 하는 부담 발생
    - \* WTO 관세 감축의무(연평균) : 선진국 6%, 개도국 2.4%
- 2004년 쌀 재협상은 현행 관세화 유예조치의 연장여부에 관한 사항이지만, 우리의 협상입지(立地)는 유리하지 않을 전망
  - 관세화시에는 국내외가격차가 커서 수입급증이 우려되며, 관세화 유예연장시는 수출국들의 과도한 추가 시장개방요구 예상
    - \* 현재 진행중인 협상 결과는 2004년 쌀 재협상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



## 나. 협상추진체계의 강화

- 금년부터 본격화될 농업협상에 대비하여 협상대응체제를 보강
  - '98부터 운영하고 있는 WTO농업협상대책단을 확대 개편
    - 민간연구기관, 관계부처 참여를 확대하고 전략협의 활성화
  - 협상전담 고위급 직위 및 농업협상 전담부서 신설 등 통상 관련 조직을 강화하여 통상교섭력 제고(앞으로 1년이 매우 중요)
    - \* 세부원칙양허협상 등 빈번한 고위급 회의참석과 국내홍보 등에 적극 대응 필요
- 예상시나리오별로 영향을 분석하여 정밀한 논리를 개발하고, 품목별로 선별 대응함으로써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
  - 품목별 영향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완대책 병행 수립
- 적극적인 홍보와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
  - 공청화·설명회·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협상상황을 정확히 전달

## 다. 대외교섭활동의 강화

- 수입국간 공조를 바탕으로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NTC) 등 수입국 공동입장을 세부원칙 협상에서 적극 반영
  - 관세·보조금의 신속적이고 점진적인 감축원칙 관철에 역량 집중
- 주요 수출국·개도국과의 신뢰구축을 통해 협상에 따른 피해 최소화
  - 미국·중국 등 주요 수출국과 고위책임자간 대화채널 보장
    - 양허협상시 제기될 국가별 관심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비

## IV.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94년 UR시 「先협상 後대책」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교훈 삼아 대외협상과 국내대책 마련을 동시에 추진
- ◇ 농업내부의 힘만으로 농업·농촌문제 해결이 어려우므로 범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新)농업·농촌 특별대책 마련
- ◇ 각계의 공감대를 토대로 농정방향을 새롭게 정립

### 1. 특별대책위원회 구성방안

- 정부 및 농어업인, 소비자, 학계, 언론계를 대표하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농협중앙회장·수협중앙회장 등 농어업인단체대표(9인), 소비자단체대표(5인), 학계 등 전문가 및 언론인(9인)을 위원으로 위촉
    - \* 당연직 위원 : 재경부·농림부·해수부·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
- 농림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1급 등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시·도에도 지역위원회를 별도 운영
  - 실무토론 및 의제도출을 위해 3개분야의 분과위원회 구성
    - \* 경쟁력제고, 소득안전망 확충,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분과위원회
  - 위원회의 행정업무 지원 등을 위해 농어업분야에 각각 사무국 설치
    - 관계 부처 및 기관·단체의 공무원·직원 파견 조치

## 2. 중점 논의방향

- WTO 협상에 대비하고, 시장개방 확대·농산물 수요의 고급화·다양화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을 정립
  - 농업인단체 뿐만아니라 소비자·시민단체·전문가 등과의 폭넓은 의견수렴 및 전문 조사·연구사업 수행
  - 분과위원회,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새로운 농정비전, 중장기 정책방향과 실천계획 수립
  
- WTO 농업협상대책, 품목별 경쟁력제고 대책 및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대책 등 주요 농정현안(懸案)에 대한 합의를 도출
  - 합의된 과제에 대해서는 예산반영·제도개선 등을 추진
  - 농업·농촌특별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평가 실시

### < 주요 논의과제 예시 >

- 경쟁력분과 : WTO 협상에 따른 품목별 경쟁력제고
  - 쌀생산조정, 수매제도 보완, 과잉재고대책 등 쌀산업발전중장기대책
  - 여건변화에 대응한 농지소유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 규모화된 전업경영체 육성 등 농업구조개선대책
  
- 소득안정분과 : 소득안전망 확충과 경영안정체제 확립
  - WTO가 허용하는 다양한 직접지불제 및 농외소득원 확충
  - 자연재해와 가격변동에 대한 효과적인 위험관리체계 구축
  
- 지역개발 및 복지분과 : 농촌활력 증대 및 도농간 복지균형 유지
  - 농촌의 교육·의료·문화 등 기초생활서비스 확충
  - 도시자본의 농촌유입확대를 위한 방안 적극 강구

## V. 농촌진흥청·산림청 주요업무계획

### 1. 농촌진흥청 : BT와 IT를 접목, 선진농업 실현

#### □ G7 수준의 생명공학·첨단농업 기반을 조기에 구축

- 바이오그린 21사업(2001~2010, 7,000억원 투입)의 착실한 추진
  - 예산의 70%이상을 국내 전문인력에 지원, 모든 연구역량 결집
- 농업생명공학의 기본소재인 **유전자원**을 최대한 확보·활용
  - 유전자원의 수집확대('01 : 188천점 → '02 : 195)를 위해 국제협력 강화
- 벼, 고추, 배추 등의 유전자 기능분석 등 **원천(源泉) 기반** 기술을 체계화하여 신품종 육성 촉진
- **생명공학(BT)과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신속한 보급을 위해 Cyber 「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 설치

#### □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및 수출확대를 위한 기술지원 강화

- 벼 **우량품종과 기능성 특수미** 개발을 확대하고, 지역에 알맞은 **고품질 품종재배** 중점 지도
  - 중앙기술지원단 편성 및 「고품질 품종 종자지원센터」 설치 운영
- 과수·화훼 등 수입대체 품종육성으로 로열티 지급문제 해소
- **인삼 전담부서** 설치를 통해 품종 개량, 재배기술 개선, 농약 저사용 등 기술지원 강화
- 사육단계에 따른 사양관리기술 개발로 품질을 **고급화차별화** 하고, 물태지 발생률 감소 및 양계 수출품목의 다양화 연구

-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를 재평가하고 친환경농업 기술을 정착
  -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실태를 정밀 분석하여, **국내 농업·농촌 개발 뒷받침**
  - 농업인 건강관리실(120개소), 환경친화형 화장실(157개소) 설치 등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의 지속 추진
  - 향토음식 맥 잇기(36개소), 전래솜씨 전수(110개소), 테마마을 육성 등을 통해 **농촌의 전통가치**를 농가 소득원으로 연계
  - 비료·농약사용량 감축 등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기술의 체계화**
    - 「유기농업종합연구반」운영 강화로 유기농업기술의 조기현장 활용
  - 수질오염 방지, 내염성(耐鹽性) 품종 개발, 신속 제염방법 등 **간척지 친환경 농업기술**을 개발
  
- 농업인의 기술·경영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현장밀착(密着)형 농촌지도체제 강화**
  - 중앙의 연구·지도인력을 농촌현장에 투입, **총력 기술지원**
    - 157개 시군 컨설팅지원반 운영으로 현장애로기술 적극 해결
  - 농업인의 수요에 부응하는 **품목별 전문교육 연중 실시**
    - 인터넷, 원격영농상담시스템 등 사이버매체를 통한 첨단기술 보급
  - 생활개선회·4-H회·농촌지도자회 등 학습단체와 협조하여 **쌀소비 촉진, 쌀품질 고급화, 의식개혁, 홍보** 등을 적극 추진

## 2. 산림청 : 「세계 산의 해」, 산을 더불어 사는 터전으로 육성

- 육림(育林)사업의 내실화 등 산림의 계획적인 육성으로 경제림의 이용가치를 제고하고 숲의 탄소흡수능력 확충
  -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축소하되, 전문임업기능인에 의한 기술적 육림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육림효과 제고
    - 공공근로 : ('01) 79천ha → ('02) 45, 육림 : 49천ha → 101
  - 이미 조성한 경제림단지(80개소, 400천ha)에 대한 일제 정비 추진
  - 품종심사관 지정·운영 등 산림수종 품종보호대책 적극 강구
- 임업인의 소득·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강화 및 국산목재 이용촉진
  - 독립가임업후계자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확대(135억원 → 142)와 용자상환기간 연장(임도시설 15년 → 20)
  - 견고한 임도구축을 위한 「외부감리제도」를 신설하여 전문성 제고
  - 국산재로 만든 의자책상 등의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중점 추진
    -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개정('01)으로 우선구매 근거 마련
- 자연친화적 산지관리체계를 확립하여 난개발 방지
  - 산지관리법 제정 추진으로 산지전용 허가시 산지관리위원회의 사전심사제, 재해방지명령제도 등을 도입하여 산지훼손 억제
  - 채광·채석 중단지(中斷地) 복구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복구비 예치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채광·채석지 관리 강화

- 생물다양성 및 산림건강성 유지를 위한 산림생태계 보전 강화
  - 백두대간 훼손지 매입·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생태숲 조성 확대(6개소)로 **산림생물 서식기반 조성**
  - 5대강유역 수원함양 보안림 지정 확대(23천ha) 등을 통해 **산림의 '녹색댐' 기능 제고**
  - 초대형 헬기 등 항공기 추가 도입(4대) 및 확충된 헬기격납고(7개소) 활용을 통해 **산불 조기진화체계 강화**
  - 산사태(沙汰)방지를 위한 사방사업 확대로 **산림재해 감소 추진**
  
- 「세계 산의 해」를 맞아 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고하고, 산촌을 **녹색관광의 거점지역으로 집중 육성**
  - 「산의 날」 지정, 「산림헌장」 제정, 국제 학술대회 등 산의 해 기념행사와 언론사 특집 홍보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 확산**
  - 자연휴양림 조성 및 농촌관광자원 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산촌 개발**  
 \* ('01까지) 조성 완료 47개소 → ('02) 설계 15개소, 조성 46개소
  
-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적 산림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국제산림자원 협력외교 증진**
  -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해외조림 확대 및 국내 산림자원 육성
    - 해외조림계획 : ('01까지) 69천ha → ('02) 8
  - 황사방지를 위한 중국 사막화 조림사업을 추진

## VI. 국정과제 및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상황

### 100대 국정과제

- 100대 국정과제중 농림분야는 농업경쟁력 강화 등 총 7대과제, 51개 실천과제로서, 세부과제별로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추진중
  - 농림분야 실천과제수(51) : 농림부 38, 농진청 5, 산림청 8

#### ※ 농림분야 국정과제

- ① 복잡한 유통구조는 대폭 축소해야, ② 개방화시대 농업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③ 쌀 자급유지, 양곡유통은 시장중심으로, ④ 생활여건 개선으로 가고 싶은 농어촌을, ⑤ 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인 형태로, ⑥ 산림자원 육성으로 쾌적한 공기를, ⑦ 국가 연구개발사업, 더 많은 성과가 있도록

### 대통령 지시사항

- 총 40개 지시사항에 대해 19건은 조치완료, 21건은 추진중
  - 조치완료된 19개 사항은 「구제역 확산에 철저히 대처('00.4.4)」, 「공기업 감사결과에 따른 철저한 개선('00.9.19)」 등임.
  - 추진중인 21개 사항은 「WTO체결에 따른 농업대책 마련('01.11.20)」, 「쌀 수급대책 마련('01.8.20)」 등임.



## 규제개혁 추진상황

- 「국민의 정부」출범 이후 농업경쟁력 제고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농업분야 규제 지속정비
  - '98년도에 527건을 정비하고, '99년에 38건 추가정비
  - '00~'01년에는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불편해소를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새로운 개혁과제를 발굴개선
    - 축산업(사료첨가제 제조 등) 진입 규제완화, 농지취득요건완화 등 소규모 농지거래 제도개선, 민원첨부서류폐지 및 처리기간 단축
- 금년에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맞추어 농산물포장의 표시사항 등에 관한 규제정비를 중점 추진할 계획

## 내부혁신 추진상황

- 안전한 농식품 공급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가축방역 및 농산물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중점을 둔 농정조직 개편
  - 수의과학검역원 질병방역부 신설 등을 통해 동물방역기능 강화
  - 농산물품질관리원에 GMO농산물 전담검정기구 신설
  - 조직 및 인력관리의 전문화를 위한 조직인사담당관 신설 추진
- 농림공직자의 업무처리 태도 등에 대한 민원만족도와 전화응대 친절도를 조사하여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대민서비스 기능 확충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촌활력증진을 위한  
2002년도 농업·농촌정책 추진계획

2002. 4. 25

농 립 부

“국민을 생각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 보 고 순 서

I.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적극 추진 .....	44
II. 선택과 집중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	47
III. 농촌활력 증진방안 본격 강구 .....	51
IV. WTO 농업협상에 적극 대응 .....	53



## 2002년도 정책방향

### < 농정여건 >

- 부채대책, 직불제 등 농촌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쌀 등 주요 농산물가격의 하락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상존
- WTO 도하개발아젠다 출범, FTA협상 진전 등에 따라 농업의 개방폭이 확대되는데 불안

### < 정책방향 >

- 민생안정 차원에서 농업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소득불안 요인이 최소화되도록 쌀값 안정, 금융비용 경감방안 등을 적극 추진
- 세계화·개방화에 대응, 우리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농업경영체 육성, BT·IT산업의 접목, 소비자 중심의 생산·유통 실현에 역점
- 농촌활력 증진을 위한 모멘텀(Momentum)을 마련하기 위해 농촌에 사람과 자본이 모이도록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
- 금년부터 본격화된 WTO 농업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기 위해 협상역량을 높이고, 이해당사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

# I.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적극 추진

## 1. 쌀의 수급균형과 적정가격 유지

◇ 연이은 풍작, 의무수입량(MMA) 증가로 쌀 공급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소비는 감소하여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이 대두

□ 조속한 수급균형 달성을 위해 다각적인 생산감축 노력 경주

○ 밭벼 수매중단, 타작물 재배유도 등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

○ 단위면적당 생산수량이 줄어들도록 고품질 품종확대 및 질소비료 사용 절감 등을 적극 추진

\* 쌀 소득 의존도가 높아 단기간내 급격한 생산 감축은 어려운 상황

□ 올 10월말 재고는 적정량의 2배(1,380만석)수준이 될 전망이므로 수확기전에 재고쌀의 긴급처리대책 강구

○ 주정용, 가공용 등으로 200만석 정도를 低價로 공급하고,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추진

□ 민간유통기능 활성화를 통해 수확기 쌀값 적정수준 유지

○ 정부보유 쌀의 시장방출을 조절하여 쌀값의 계절진폭 확보

○ 수확기 출하물량을 충분히 흡수하여 과도한 가격하락 방지

※ 쌀산업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생산조정, 소득안정, 공공비축제 등)을 농특위 논의과정을 거쳐 마련, 단계적으로 시행

## 2. 금융부담 경감과 경영위험관리 강화

- ◇ 농업소득이 정체된 상태에서 차입금 의존도가 높은 농업인에게는 금융비용이 큰 부담
- ◇ 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미흡

□ 농산물가격 하락 등에 의한 收益率 저하와 시장금리 인하 추세 등을 감안, 중장기 정책자금과 기금의 금리인하를 추진

○ 자금의 상환기간도 연차별 투자수익성을 감안하여 조정

\* 시중금리/정책금리 비교(%) : ('97.2) 12.1/5.0 → ('02.2) 7.0/5.0

\* 사후적 부채대책 보다는 금리인하 등 사전적 부담경감이 더 바람직

□ 건실한 경영체가 재해, 가격폭락 등에 따른 일시적 경영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상시적 「경영희생지원 제도」 도입·운영('03부터)

○ 高額투자 경영체를 대상으로 희생가능 여부를 철저히 심사하여 적격자에 한해 특별경영자금 지원

- 희생 가능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한 기구설치(농협중앙회)

□ 「농작물재해보험」은 대상품목을 사과배 이외에 포도·단감·감귤·복숭아까지 확대하고 운영비 등 지원강화

○ 순보험료·운영비의 지원을 인상과 보험료 分納 및 보험재해 추가(凍·霜害, 우박, 태풍 + 豪雨) 등 제도개선

\* 지원을 : 순보험료 30% → 50, 운영비 50% → 70 (미국 : 운영비 100%)

○ 협동조합 보험상품인 「가축共濟」의 대상품목 확대(닭 추가)



### 3.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제 내실화

- ◇ WTO 체제에서 가격지지 보조가 어려워 세계 각국이 직접 직불제 등 소득보전장치를 강화해 나가는 추세
  - \* (미국) 생산자유회계약직불 등 4개 제도, (일본) 전작보상 등 3개
- ◇ WTO 규정에 맞는 직불제 확충과 지원방식 개선 등 내실화 추진

- 「논농업직불금」은 농업소득 의존도가 높은 농가 중심으로 지급되도록 지원체계를 개편
  - 금년에는 지급단가를 인상하고, 논외 담수의무 해제 및 재배작목 자유화(과수·관상수 등은 제외)
    - \* 지급단가 : ('01) 20 ~ 25만원/ha → ('02) 40 ~ 50
  - 2003년부터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 경영규모별 농가특성을 감안한 실효성있는 제도개선방안 마련·시행
    - \* 전업농의 경영안정을 위해 보험성격의 소득안정장치 도입 방안 검토
-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올해부터 대상지역을 상수원 보호 구역에서 전국으로 확대
  - 다만, 지급대상은 無農藥 이상 친환경품질인증 농가로 한정
- 농촌 지역사회유지와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조건불리지역 밭직불제」는 圖上연습 등 시행준비
  - 399개 奧地面에 대한 경사도 조사 및 구역도 작성 추진

## II. 「선택과 집중」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 1.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 중점 육성

◇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작목과 농업 경영체를 대상으로 자금 및 기술·정보 등 集中 지원(중전의 일률적 지원 지양)

- 벼 농사는 3ha이상의 규모가 되어야 소득문제 해결이 가능하므로 영농규모화를 적극 추진
  - 농지 규모화 자금은 2~3ha 농가에게 중점지원('02 : 3,159억원) 하고, 농지 流動化를 위해 농지양도세 면제기간 단축 등 추진
    - 규모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연차적으로 확충
  - 高齡 농업인에 대한 「경영이양직불제」는 규모화 효과를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추진(지급대상 확대, 분할지급방식 도입 등)
- 원예, 축산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전업화규모화된 경영체 집중육성
  - 생산시설의 기계화·자동화와 품질향상을 위한 자금지원 확대 및 품목별 생산자조직 중심의 계열화·브랜드화 촉진
  - 축산의 경우, 악성질병의 예찰, 신고, 방역 및 재발방지대책 강화
- 농업자금지원은 협동조합이 경영체의 경영능력과 투자계획 등을 심사·대출하는 「농업종합자금」 방식으로 일원화
  - 시설·운영자금 통합지원, 1억원이상 대출은 컨설팅 제도화
    - \* 「농업종합자금제」는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채증가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 2. BT·IT 접목으로 농업성장 牽引

◇ 농업자원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BT·IT를 활용한 高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 농업발전의 要諦

- 세계 5위의 농업생명공학 기술국을 목표로 유전체(Genome) 분석 및 고부가가치 形質轉換(GMO) 동·식물 개발 본격 추진
  - 유전체 분석에 대한 선진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미국·일본 등과의 공동연구 확대
    - 벼는 미국·일본, 돼지는 중국·덴마크와 유전체 분석중
  - 耐병해충 벼, 빈혈치료제(돼지) 등 첨단육종과 유용물질생산 촉진
  - ※ 농촌진흥청에 「농업생명공학연구원」을 설립·운영중('02. 3월)
- 농업인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 개발되도록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품목별 협의체」 운영(독농가, 인근대학 등 참여)
  - 연구성과가 현장에 쉽게 적용되도록 산·학·연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원격영농상담소 운영(44개) 확대
  - 농업벤처를 육성하여 개발된 농업기술의 산업화를 촉진
    - 농업전문투자조합 추가결성(2개)으로 농업벤처 창업기반 확대
- 농업인의 정보활용능력을 높여 농업경쟁력 강화 뒷받침
  - 금년에 완료되는 농촌 ADSL보급사업에 맞춰 정보화교육 확대(8만명)
  - 농가의 인터넷 판매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지원(1,600개)

### 3. 소비자 중심의 생산·유통 실현

◇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가격보다는 품질, 안전성, 브랜드 등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더욱 중요

□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유통시스템 정착

- 품질인증 대상품목을 확대(58개 → 82) 하고, 우수 브랜드에 대해 공동선별을 위한 지원과 소비지 홍보 강화
- 그동안 미흡했던 수확후(선별, 저장, 수송) 품질관리 기술의 개발 지원을 확대

□ 농산물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과정에 소비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부적합품의 시중유통 차단

- 채소류는 시장출하 이전 圃場단계에서 안전성 점검을 강화하고, 도축장은 '03.7월까지 위생안전기준(HACCP) 적용 의무화
- 원산지표시 위반 등에 대한 「벌칙 下限線」을 도입, 단속의 실효성 제고

□ 엄격한 품질관리(리콜 등)와 유통비용 절감 등을 위해 협동조합 중심의 농산물 판매 활동을 대폭 강화

- 협동조합 또는 영농조합법인 상호간 聯合마케팅 촉진

\* 강원도 고랭지채소 '맑은淸'(27개조합), 안성시 '안성맞춤'(13개조합)

- 중앙회는 수요처 발굴 등을 통해 일선 조합의 판매활동 지원

\* 「농협중앙회」와 「삼성테크코」간 농산물유통 전략적 제휴

## 4. 세계를 지향하는 수출농업 육성

- ◇ 최근들어 파프리카, 화훼 등 신선농산물의 수출이 크게 증가  
 \* '97~'01 : 파프리카 2 → 34백만불, 화훼 5 → 32, 배 9 → 20, 김치 40 → 69
- ◇ 우리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수출농업으로 개척

### □ 고품질·안전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출기반 확충

- 채소·과실·화훼의 전문생산단지 조성을 확대('01 : 89 → '02 : 101)
- 一貫수출 지원체계를 갖춘 수출물류센터(광양, 마산) 설치  
 - 豫冷·選別·포장·훈증·소독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 □ 수출금융, 동·식물 검역 등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

- 수출자금을 확대('02 : 4,040억원)하고 금리 등 지원조건 개선
- 수입국의 검역강화에 대비, 잔류농약검사를 철저히 하고 병해충 檢疫 등 9개분야 기술지원단의 현장 컨설팅 실시(80회)

### □ 수출유망품목을 중심으로 국가별 특성에 맞는 시장개척 활동 강화

	<u>핵심 품목</u>	<u>추진 전략</u>
□□ 일 본	신선채소	현지 대형유통업체 제휴
□□ 중 국	인삼	수입의약품 등록 조기 획득
□□ 대 만	사과, 배	선별, 포장 등 품질관리 강화
□□ 미 국	과실류	僑胞시장 외에 틈새시장 개척

※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농산물 수출확대의 중요한 轉機로 활용  
 (인천공항내 홍보데스크 설치, 우수바이어 초청, 배너광고 등)

### Ⅲ. 농촌활력 증진방안 본격 강구

#### 1. 도시자본 유치 및 그린투어 활성화

- ◇ 농가소득은 교육·의료비 등으로 도시에 流出되는데 반해, 도시자본은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농촌에 流入되지 않는 상황
- ◇ 제도개선으로 도시자본의 농촌유치 계기 마련 가능

- 농촌에 사람과 자본이 들어오도록 농촌투자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
  - 도시민이 농촌주택과 텃밭을 보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소년수련시설·레포츠시설 등의 농지조성비 감면
  - 전통식품 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설기준 완화 등 추진
  - ※ 「농촌투자유치센터」를 설치, 투자알선 및 애로요인 해소
- 농촌사회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농지와 산지제도 개선
  - 도시민의 주말농장·체험농장용 농지(1,000㎡미만) 취득을 허용
  - 도시계획 지역내 山地의 이용행위도 대폭 완화
- 국민의 餘暇수요를 농촌관광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농촌생활 체험, 역사문화 탐방, 향토음식 등을 패키지로 상품화
  - 녹색농촌체험마을(18개), 전통테마마을(9), 산촌마을(61)을 시범 조성
  - 마을안길 정비 등 기존시설 보완과 포털사이트 구축(소개, 예약 등)

## 2. 농촌의 교육·의료 등 생활여건 개선

- ◇ 낙후된 농촌의 교육·의료여건이 離農의 주요인으로 작용
  - \* 농촌학생 1인당 교육비는 도시유학 등으로 도시의 2배 수준
- ◇ 농촌활력 증진을 위해 교육 등 복지부문의 획기적 개선 필요

- 농촌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종합대책 마련(교육인적자원부)
  - 농촌근무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농촌형 교육과정 개발, 자율학교 활성화 등을 통한 名門학교 육성
  - 농업인 자녀(고교생 및 대학생) 학자금 지원대상 조정 및 농촌 학생기숙사 설치 확대
-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인력 및 시설을 확충하여 농촌지역의 의료 서비스를 내실화하고, 건강보험료 부담경감 방안을 검토(보건복지부)
  - 특히, 농촌특성에 맞는 한방진료와 물리치료 장비를 확충하고, 공중보건韓醫師 증원('01 : 118명 → '02 : 334)도 추진
- 농업인 연금에 대한 국고보조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여성 농업인의 복지수준을 향상(농가도우미사업,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 ※ 교육·의료·연금 등 농촌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농촌복지증진대책을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범정부차원에서 마련

## IV. WTO 농업협상에 적극 대응

- ◇ 내년 3월까지 시장개방 및 국내보조 감축의 폭과 방법에 대한 「세부원칙(Modality) 협상」 종료 예정
  - 세부원칙은 품목별 협상과 각국 농업정책의 지침이 되므로 앞으로 수출·수입국간 치열한 공방 예상

### □ 분야별 핵심쟁점에 우리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 강화

- 시장접근 분야는 점진적 관세감축과 저율관세수입량 최소화
- 국내보조는 감축폭 완화 및 허용보조의 신축성 확보
- 농업분야의 개도국 지위 유지를 위한 설득 노력 전개
  - \* OECD국가, 첨단제품수출 등을 이유로 개도국 졸업압력 심화예상

### □ 수입국간 공조관계 유지 및 주요 수출국과의 협상노력 강화

- “농업의 非交易的 기능(NTC)”을 강조하는 EU·일본 등과의 공조관계를 최대한 활용
  - NTC 각료회의 공동개최('02.6) 등 공식·비공식 협력활동 강화
- 품목별 협상에 대비하여 미국·중국 등 교역상대국과 다양한 대화채널을 갖추고 우호적 분위기 조성

### □ 협상 專擔部署 등 통상관련 조직을 확충하여 대외협상력 제고

- 농업통상업무를 전담할 職位 설치(한시적) 추진

\* 외국사례 : 차관급 대외전담심의관(일본), USTR소속 농업담당대사(미국)

- 협상의 투명성 제고, 의견수렴 등 국민적 이해를 바탕으로 협상 전개



<첨부 1>

「국민의 정부」 농정개혁 성과

□ 외환 위기로 초래된 농가경제 위기극복에 적극적으로 대처

○ 「농어가부채경감특별법」을 제정·시행하여 15조원 규모의 부채상환 延期와 금리인하 조치(부담경감 : 3조 8,500억원)

○ 논농업직불제와 농작물재해보험제 등 소득안전망을 새로 구축

\* 1,023천 농가에게 논농업직불제에 의한 보조금 1,910억원을 지급

□ 농산물 유통부문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유통개혁 가시화

○ 도매시장 29개, 종합유통센터 9개 등 시설투자는 거의 마무리

\* 主産地의 豫冷, 저온저장, 선별, 포장시설 등도 대폭 확충

○ 대형유통업체와 産地간 직거래가 크게 증가('97 : 5% → '01 : 23)

○ 고추 등 양념채소류의 가격 振幅率이 완화('97 : 48% → '01 : 24)

□ 농업협동조합, 농업기반공사 등 농정관련 조직을 개혁하여 조직의 효율화와 대농업인 서비스 강화

○ 「노량진수산시장」과 「한국냉장」 민영화로 공기업 경영혁신 선도

◇ 지난해 농가소득이 IMF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등 농가 경제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극복

\* 농가소득 : ('97) 23.5백만원 → ('99) 22.3 → ('01추정) 23.6

<첨부 2>

지난해 업무보고시 주요지시사항 조치결과

지 시 사 항	조 치 결 과
1.농외소득 증대방안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외소득 대책추진반 구성·운영('01.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농외소득 실태조사 및 사례분석</li> <li>- 농외소득증대 중장기 추진계획 확정('01.5)</li> </ul> </li> <li>◦ 그린투어리즘 세부사업지침 마련·시행('01.12)</li> </ul>
2.농작물재해보험 제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품목확대방안 수립('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대상품목을 포도·단감·감귤·복숭아까지 확대</li> <li>- 확대품목에 대한 보험요율 산출('02.1)</li> </ul> </li> <li>◦ 농작물재해보험법시행령 개정('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료 분납제도 도입, 대상재해 확대 등 제도개선</li> </ul> </li> </ul>
3.농업금융제도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호금융 금리인하 : ('00말) 10.72% → ('01말) 8.66 → ('02.2) 8.04</li> <li>◦ 대출기간연장시 부가하던 기간가산금리 폐지('01.3)</li> <li>◦ 농지매매 촉진 등 19개사업 금리인하('01.10, '02.1)</li> </ul>
4.일선농협 중심의 농산물 유통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產地유통센터 설치 확대('01년 20개소, 누계 196) 및 산지유통전문조직 지정(74개소)</li> <li>◦ 產地농협에 대한 유통자금 지원 : ('01) 161개 조합, 5,000억원</li> </ul>
5.WTO농산물협상 철저히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하개발아젠다에 대응, WTO 농업협상대책단 확대 개편('0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나리오별, 품목별 영향분석 및 협상전략 준비</li> </ul> </li> </ul>

# 주요 현안 업무 보고

2003. 3. 14

공 립 부



# 보 고 순 서

I. 당면 현안과제 .....	61
1. 2003년산 추곡약정수매가 처리 .....	63
2. 한·칠레 FTA 후속조치 .....	64
3. WTO/DDA 농업협상 적극 대응 .....	66
II. 주요 정책과제 .....	69
1. 쌀산업정책의 전환 .....	71
2. 우유수급 안정화 방안 .....	74
3. 새만금의 친환경적 개발 .....	76
III. 「참여정부」 농정추진방향 .....	77



## I. 당면 현안과제

1. 2003년산 추곡약정수매가 처리

2. 한·칠레 FTA 후속조치

3. WTO/DDA 농업협상 적극 대응





# 1. 2003년산 추곡약정수매가 처리

## 과제개요

- 영농기 이전에 국회 동의를 거쳐 수매가 예시 필요
- 수매가를 '02년산 대비 2% 인하하고, 논농업직접지불제 보조금을 800억원 증액하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2.6)

## 각계의견

- 농업인단체는 어려운 농가경제를 감안하여 3% 인상 요구,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수매가 인하에 반대 입장 표명
  - 수매가를 인하할 경우에는 추가소득보전대책을 마련하되, 그 혜택이 전체 농업인에게 고루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
- 수매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여론은 형성되고 있으나, 사상 최초의 수매가 인하에 따른 부담으로 국회처리과정에서 논란 예상

## 추진방안

- 개방화, 공급과잉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여·야 및 농업인 단체에 수매가 인하의 불가피성을 적극 설명
  - \* 국내외 가격차가 축소되지 않을 경우 개방확대시 가격하락 충격이 가중
- 정부안의 원활한 국회통과를 위해 추가적인 소득보전 또는 농가부담 경감방안 등을 마련

## 2. 한·칠레 FTA 후속조치

### FTA 타결영향

- 가장 우려되었던 사과·배 등이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
  - 피해는 주로 시설포도 및 가공용과일 등에서 발생
    - 시설포도는 10년간 2,000억원 피해 발생 예상(주로 충북, 경북)
    - 가공용 과일, 복숭아 등은 소비대체에 의한 간접피해 예상
  - 협정발효 초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피해가 더 클 전망
    - 단계적으로 관세가 감축되어 피해규모는 협정발효 첫해 124억원, 관세감축 최종년도(10년차) 864억원 수준
- \* 10년간 직·간접 피해액은 6,000억원 수준 추정('02.6, 연구용역결과)

### 문 제 점

- 농업인단체는 이번 FTA의 피해뿐만 아니라 향후 FTA 확산 등 시장개방 확대를 우려하여 한·칠레 FTA 비준을 반대
    - 여·야에서도 농업인단체의 요구 등을 감안, 소극적 입장
  - 농업인들은 기금설치 등 명확한 재원대책 없이는 정부대책의 실효성을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
    - FTA 보완대책을 위한 기금설치에 대해 관계부처간 이견
- \* 일부부처는 기금설치 보다는 예산으로 지원하자는 입장

## 추진방안

- 농업인의 신뢰를 확실히 하기 위해 「FTA이행특별법과 시행령」을 제정, 피해지원기준 및 절차 등 명확화(선대책, 후비준)
  - 경쟁력이 없는 농업인에게 폐원보상 또는 작목전환 지원
    - \* 시설포도농가 4천호중 약 1천호 폐원 대상(예: 300평당 1천만원)
  - 경쟁 가능농가는 시설현대화·규모화·품질향상 등을 지원
    - \* 수송에 30~40일이 소요되는 칠레산 포도는 kg당 3천원, 고품질 국산은 12천원
  
-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별기금을 설치·운영
  - 기금은 1단계로 7년간 8,000억원 규모로 조성·운영
    - 기금의 재원은 정부출연금, 기부금, 수익금 등으로 조성
  - 농업인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지원상황 수시 점검
  
- 「FTA이행특별법」은 FTA 국회비준 동의안과 연계 처리
  - 농업인단체·국회 등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정부지원대책에 대한 확신 및 공감대 형성
    - \* 그동안 9차례 농업인단체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 「여·야정」 협의를 통해 의원입법으로 추진
  
- ※ FTA이행특별법 제정에 대해 FTA이외에 DDA협상까지를 포함하여 농업지원에 관한 일반법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음

### 3. WTO/DDA 농업협상 적극 대응

#### (1) 관세 및 보조금 감축 등에 관한 원칙

##### 협상동향

- WTO는 3월말까지 예정된 세부원칙 수립을 위해 지난 2월 의장초안 배포
- 의장초안은 UR보다 급격한 감축율, 개도국 대폭 우대 반영
  - 농산물관세 : 선진국 경우 평균 40~60% 감축(UR : 36%)
  - 농업보조금 : 선진국 경우 총액기준 60% 감축(UR : 20%)
  - 개도국우대 : 감축폭 완화(%), 이행기간 연장(2배), 전략품목 신설 (관세감축 및 저율관세쿼타 증량 부문에 특혜)

##### 문제점

- 수출국 주장과 의장초안은 우리농업이 감내하기 힘든 수준
- 초안 배포 이후 개도국 지위유지에 초점을 맞춰 대응함에 따라, 공조해 오던 선진수입국들과 미묘한 입장차이 발생

##### 추진방안

- 관세 및 보조금 감축폭 최소화에 목표를 두고 총력 대응
  - 기존의 NTC그룹 국가(EU, 일본, 노르웨이 등)와의 공조외에 주요개도국 및 제3의 수입국 등과의 유대강화
  - 협상과정에서 의원외교 및 농업인단체 등 NGO활동 적극 지원
  - 농업인단체가 추천하는 학계의 전문가를 협상대표로 참석 조치

## (2) 개도국 지위유지

### 협상여건

- UR협상보다 개도국 우대조치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여 수혜개도국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시도 예상
  - 비농업부문을 중심으로 개도국 분류기준 객관화 움직임
- 우리농업여건은 개도국 수준이나, 전반적인 경제발전 수준 등으로 인해 개도국 지위에 대한 국제적 시각이 부정적
  - OECD 가입, 고도화된 경제구조, 첨단제품 수출 등
- 개도국 지위는 주요 교역상대국의 동의를 얻는 것이 관건

### 추진방안

- 국제기구의 개도국 분류기준 설정작업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외교활동 전개
- 개도국 지위의 불가피성을 이해당사국에 적극 설득
  - 세부원칙(Modality) 협상은 개도국 입장에서 대응
  - 양허협상 단계에서는 개도국 기준에 맞추어 이행계획서 제출
    - \* 경영규모 영세성, 높은 고령농가 비중, 구조조정 소요기간 등 강조
- 주요 국가와 통상현안을 해소하여 우호적 분위기 조성

### (3) 2004년 쌀 재협상 준비

#### 기본입장

- 국내외 가격차를 감안, 관세화유예 유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

#### 문제점

- 관세화유예를 위해서는 저율관세 의무수입량 확대 등 추가 양보가 불가피하며, 교역상대국의 무리한 요구 예상
  - 일본·대만·이스라엘은 추가부담을 감안, 관세화로 전환
    - \* 관세화가 유예되더라도 관세감축은 지속(Shadow reduction)
- 저율관세 의무수입량 증량은 DDA 세부원칙협상 결과, 우리의 개도국지위 유지 여부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 전망
  - ※ 개도국 전략품목(SP) 적용이 가능하다면 관세화 유예의 유불리 재검토 필요

#### 추진방안

- 현재 논의중인 세부원칙 협상결과를 고려, 정밀한 영향분석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범정부적으로 대처
  - 협상개시전에 주요협상 상대국을 접촉, 요구조건 등 입장 파악
  - 개도국 지위, 전략품목 적용가능성, 저율관세 의무수입량 증량요구 등에 따른 이해득실을 판단하여 대응
- 어느 경우든 쌀개방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국내 쌀산업의 구조개편 촉진과 농가소득안정장치 강화

## Ⅱ. 주요 정책과제

1. 쌀산업정책의 전환
2. 우유수급 안정화 방안
3. 새만금의 친환경적 개발





# 1. 쌀산업정책의 전환

## (1) 쌀 수급균형 조기달성

### 여 건

- 국내생산, 의무수입량 증가와 소비감소로 **공급과잉** 기조 형성  
\* 재고량 : ('96) 169만석 → ('00) 679 → ('02) 1,040 → ('03.P) 1,190
- 특히, 농업인들은 IMF이후 소득이 안정적인 쌀생산에 치중

### 문 제 점

- 소득보전장치 미흡 등으로 본격적인 감산에 어려움
- 과잉재고량을 국민정서에 어긋나게 일시에 처리하기도 곤란

### 추진방안

- 2005년까지 3년내 수급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재배면적 감축, 시장기능에 의한 가격형성 등 **생산조정 본격화**
  - 금년에 5만ha의 벼 재배감축('02 : 1,053천ha → '03.P : 1,003)
  - 한계농지 위주로 3년간 생산조정제 실시(27,500ha)
- 쌀 수요처 창출, 특별재고처리를 통해 **적정 재고**(600만석) 달성
  - 국방부·교육부와 협조, 군급식·학교급식의 식단 개선(연간 110만석)
  - 3년간, 매년 300만석 수준의 특별재고처리
- ※ 특히, 농업분야 남북고위급회담을 창설하여 북한동포의 식량난 완화, 북한농업개발 등을 지원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300만석 수준의 대북지원을 추진

## (2) 고품질 쌀 생산·유통체제로 혁신

### 여 건

- 쌀도 품질에 따라 가격차이가 크게 발생
  - \* 고품질 쌀(브랜드) : 4,500원/kg, 일반쌀 : 2,300원/kg
- 중국 등 값싼 외국산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품질차별화가 관건

### 문 제 점

- 고품질 쌀에 대한 인식이 낮고, 필요한 정보제공도 미흡
- 생산이후 건조·저장시설 등이 부족하여 품질향상 제약

### 추진방안

- 미곡종합처리장(RPC)을 중심으로 고품질 쌀 생산·저장·가공·유통체계 정착
  - 계약재배 참여농가와 우수 RPC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건조·저장시설을 확충하여 산물벼 처리능력 제고(30%→70)
- 비료·농약 사용량 감축으로 친환경 쌀생산 유도
  - 화학비료 사용은 줄이되, 유기질 비료는 공급 확대
  - 친환경농업 이행정도에 따라 직불금 지급단가 차별화
- 고품질 쌀에 대한 시장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정비
  - 산지·품종·도정일자표시를 의무화('04.1월 시행)
  - 미질평가 강화, 표시내용의 적합성 검증 및 Recall제 정착
- 정부매입제도를 개선, 지역별로 2~3개 품종으로 제한매입

### (3) 쌀산업의 구조개편 및 소득안정

#### 여 건

- 영농의 편의성 때문에 영세·노령농업인의 비중이 매우 높음
  - \* 0.5ha 미만농가 : ('96) 496천호(비중 33.0%) → ('01) 462(34.2)
  - \* 경영주 60세이상 : ('95) 635천호(47.0%) → ('01) 750(55.6)
- WTO/DDA 이후 쌀농가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

#### 문 제 점

- UR이후 영농규모화를 추진해왔으나 영세·고령농업인의 탈농대책 미비, 평균적 분산지원 관행 등으로 성과는 미흡
  - \* 3ha이상농가 : ('95) 34천호(2.8%) → ('00) 41(3.8)
  - 대부분 탈농이후 생활준비가 부족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
  - 경영이양직불제는 1회성 지원, 낮은 단가로 실효성 한계

#### 추진방안

- 2ha이상 발전 가능성 있는 농가 중심으로 규모화 유도
    - 농지매입자금 지원확대 및 임대차 활성화
    - 소득보전직불제 확충, 재해지원 현실화 등을 통해 경영안정 도모
  - 고령·영세농이 안심하고 은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조기은퇴촉진과 은퇴후 소득안정을 기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소규모농가는 유기재배·특색미 재배 등 품질차별화로 승부
- ＝ 올 상반기까지 종합적인 「쌀산업구조개편방안」 마련 ＝

## 2. 우유수급 안정화 방안

### 여 건

- 2002년에 생산은 증가한 반면, 소비는 감소하여 50만톤의 잉여 原乳가 발생
  - \* 생산 ('01) 234만톤 → ('02) 254(증 8.3%), 소비 ('01) 207만톤 → ('02) 204(감 2.0%)
- 원유 수집은 낙농진흥회와 일반유업체를 통해 하고 있으나, 낙농진흥회의 전량집유, 가격 보장으로 생산이 증가
  - \* '02년 농가 평균 수취가격 620원/kg, '01년 생산비 446

### 문 제 점

- 젓소 도태, 잉여원유 차등가격제를 시행, 생산감축을 유도 하였으나 효과는 미흡
  - \* '02년 젓소 24천두 도태, 잉여원유에 대하여는 정상가격의 70% 수준 지급
- 낙농진흥회의 운영이 시장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 곤란
  - 낙농가들이 반대하면 가격인하 또는 생산조정이 어려움
    - \* 총회(4명, 만장일치제), 이사회(16명, 생산자 7명, 유업체 4, 소비자학계 2, 기타 3)
  - 원유가격 보장, 전량 집유 등 시장기능 적용이 어려운 현행 제도에서는 과잉생산 지속 불가피('03 잉여예상 : 30만톤)
- 두유 등 대체음료시장이 확대되어 우유 소비는 감소 추세
  - \* 1인당 연간 우유소비량 : ('97) 37.1kg → ('02) 34.9kg(일본 '01년 35kg)

## 추진방안

- 낙농산업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강력히 추진
  - 시장기능에 의한 수급조절, 낙농진흥회 체제의 개편, 우유 소비촉진대책 등을 강화
- 원유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낙농조합이 참여하는 계획생산제(Quota) 도입
  - 쿼터 초과량은 단계적으로 가격을 인하, '06년부터는 국제가 적용
  - 쿼터실시에 따른 농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금년에는 15만톤(22천두분)에 대해 생산감축 보상 실시
- 낙농진흥회의 의사결정구조를 개편
  - 총회의 만장일치제를 다수결로 완화하고, 이사회 구성·운영에 학계·소비자대표 참여 확대
- 생산자단체 중심의 우유소비 확대 추진
  - 소비자단체와 협조하여 우유요리 개발·보급, 홍보 등
- 재고분유는 국제가격 수준으로 판매하여 수입분유를 대체하고,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등 추진(1,000톤)

\* 현재 분유재고 15.5천톤(전지분유 2.3, 탈지분유 13.2)

### 3. 새만금의 친환경적 개발

#### 추진상황

- 철저한 수질보전대책을 전제로 '06년까지 방조제 공사 완료
  - 만경강동진강유역에 환경기초시설과 호소내 습지 등을 설치
- 수질모니터링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공개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적 우려 해소
  - \*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는 수질보전대책이 정상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이용계획

- 친환경적 개발을 원칙으로 지역균형발전·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미래지향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 우선, 전북도에서 전문기관용역·공청회 등을 통해 기본 개발구상 마련
  - \* 전북 발전연구원에 용역발주를 위한 연구범위 등에 관한 기초연구 의뢰

#### 추진방안

- 「새만금신구상추진위원회」와 연계, 관계부처·민간전문가로 실무기획단을 구성·운영
  - 개발구상, 토지수요, 환경문제, 자원확보방안에 대해 협의
- '05년말까지 각계 의견수렴, 환경영향 평가 등을 거쳐 효율적인 토지이용방안 수립

### Ⅲ. 「참여정부」 농정추진방향

#### 기본방향

- 균형발전사회를 지향하는 새로운 농정을 마련
    - 농업위주의 정책에서 탈피, 농업정책과 농촌정책을 병행
  - 「산업으로서 농업」은 시장을 중심으로 효율성 지향
    - 경영규모 확대, 고품질 농산물생산 및 수출확대 등 지원
  - 「사회적 약자로서 농업인」에 대한 사회보장 지원 확충
    - 농업구조개편과 선순환 관계가 되도록 연계성 강화
- ※ 영세소농의 경영 및 소득구조, 복지실태를 조사, 정책에 반영

#### 핵심과제

##### 농가부채경감

- 부채부담이 과중한 농가에 대해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하도록 획기적인 부채경감방안 강구
  - 농가부채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정책자금부채의 상환조건을 5년거치 15년상환, 금리 1.5%로 개선하는 부채경감특별조치법을 정기국회까지 마련
    - \* 농가부채 : 27.6조원(정책자금 15.1조원, 상호금융 및 기타 12.5조원)
- 연체 등 정상상환이 곤란한 농가는 경영평가를 거쳐 회생 가능한 경우에 선별지원(Work-Out방식)
  - 「경영회생지원제도」(금리 4%, 지원규모 500억원 등)를 확대·발전

## 직불제 확충

- 현재 시행중인 직불제에 대해 **중간평가**를 실시, 대폭 **보완**
    - 무차별적 지원 사양, 친환경농업 인센티브 강화
  - 직불제 예산을 **농업예산의 20%까지 확대**하는 중장기계획 수립
    - 구조개선 촉진, 공익적 기능 유지 등과 연계한 직불제 확대
- \* 외국의 직불예산비중 : 미국 36%, 일본 13, 한국 7

## 농촌 활성화

- **전통식품산업육성** 등을 통한 소득증대와 농업인 편익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 개선
- 도시민 등의 **외부투자**가 유치될 수 있는 기반조성
  - 주 5일근무, 농촌주택 취득시 양도세 면제 등 여건변화 적극 활용
  - 투자유치센터 운영, 지자체의 주도적 참여 등을 활성화

## 농촌복지개선

- 「**농어촌복지특별법**」을 제정, 범정부차원의 추진체계 구축
    - 총리산하에 특별위원회 구성, 중장기계획수립 및 집행점검
  - 복지분야 투자재원마련을 위해 **농특세 시한연장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
- \* 관련 대선공약 : 복지특별법 제정 및 농특세 연장

## 협동조합개혁

- 농업인 단체 등의 개혁의지를 동력으로 **자율적 개혁** 유도
    - 중앙회는 단계적 신경분리, 일선조합은 **규모화경영책임 강화**
- ＝ 특별 T/F를 구성, 「미래를 열어가는 농촌」의 청사진 제시(상반기)＝



- 현재 농업·농촌은 지난 UR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음.
- WTO/DDA 협상이 타결될 경우, 농가소득은 전반적인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 이는 결과적으로 농촌사회의 위축으로 이어져 지역불균형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임.
-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우리의 농업·농촌이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 ① 농업구조조정의 연착륙 유도
  - ②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 ③ 농촌사회의 활력회복에 중점을 두어 농정을 추진해 나가겠음.
- 특히, 경제적 약자인 농업인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 저희 농림공직자는 「신뢰농정, 현장농정, 참여농정」을 업무 지침으로 삼아 심기일전하여 새로운 각오로 농업·농촌 살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음.

# 주요농정추진현황

2003. 7. 28

농림부



# 목 차

I. 주요농정 추진 상황 .....	85
1. 쌀산업 구조개편 .....	85
2. 한·칠레 FTA 특별대책 .....	87
3. 농가부채의 근원적 해결방안 .....	89
4. 협동조합 개혁 추진전략 .....	90
5. 농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	91
6. 조직정비·기능혁신 및 예산구조 개편 .....	92
7. 새만금사업 추진대책 .....	94
II. DDA 농업협상과 농업·농촌대책 .....	95
1. DDA 농업협상과 대책 .....	95
2. 개방화 시대의 농정 기조 .....	97
3. 농업·농촌대책 방향 .....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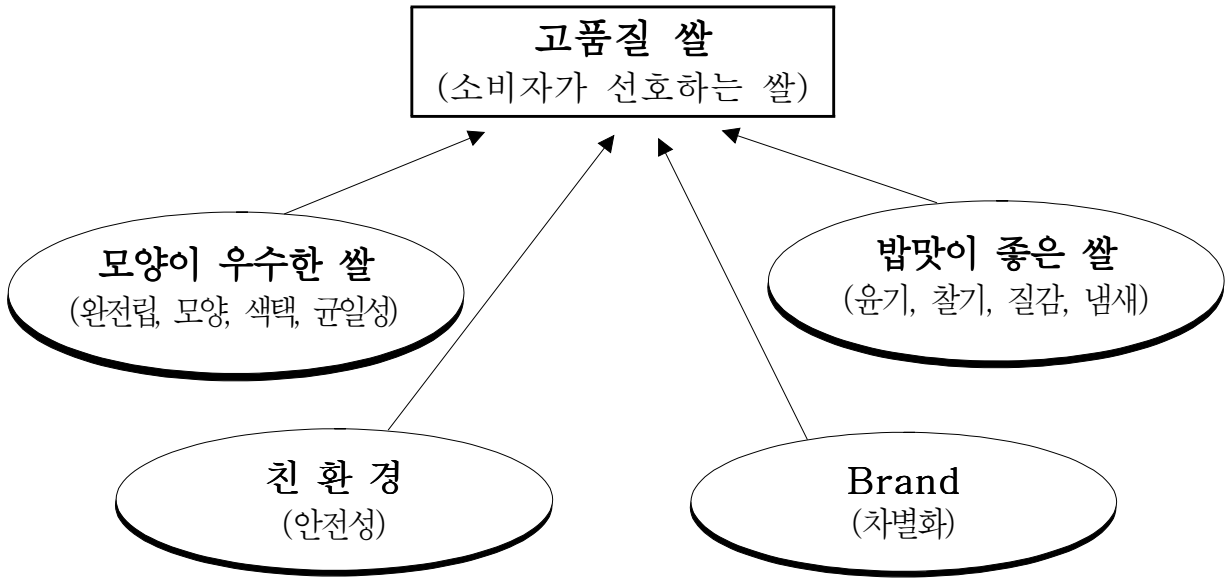
# I. 주요농정 추진 상황

## 1. 쌀산업 구조개편

- 개방 확대에 쌀값이 하락하여도 쌀소득만으로 가계비를 충족할 수 있는 6ha 수준으로 규모화를 유도하고, 2010년까지 전업농 7만호를 육성, 경쟁력 있는 쌀 산업 기반을 구축
  - 현재 2~5ha 수준의 젊고 유능한 농가를 앞으로 자립가능한 전업농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영농규모화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금리 등 지원조건도 개선
  - 고령·영세농은 은퇴 후 소득문제로 경영이양을 꺼리고 있으므로 경영이양직불금을 대폭 인상하고, 매월 분할 지급
    - \* 1ha의 60~69세 농가 경영 이양시 월 41만원씩 최장 10년간 수령
- RPC 중심의 계열화를 통해 품종통일, 저투입농법, 수확후 관리(건조, 저장, 가공) 강화, 브랜드화 등 고품질쌀 생산체제 정착
  - 경영이 부실한 RPC의 통합·합병을 촉진하고 독립법인화 등을 통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여 품질고급화의 핵심체로 육성
  - 소비자가 좋은 쌀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쌀 포장표시제(품종, 가공일자 등)를 '04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시중유통쌀의 점검·평가기능을 강화
- DDA이후에 대비 「공공비축제」 도입 등 전반적인 양정제도 개편 검토

# 고품질쌀 생산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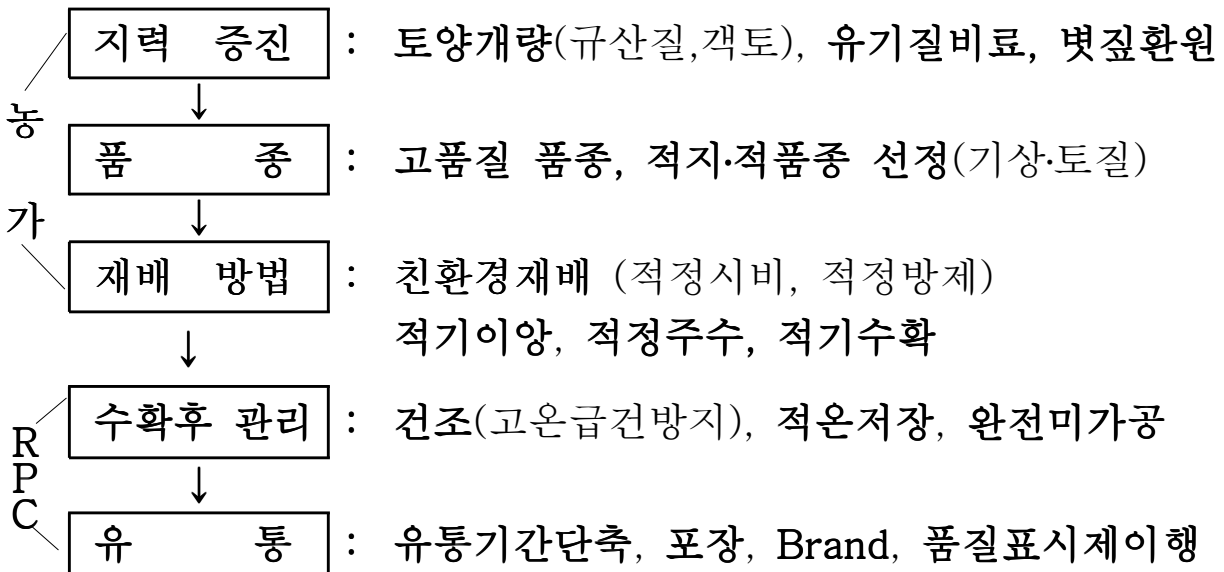
## □ 고품질 쌀



\* 고품질 브랜드 쌀(예 “한눈에 반한 쌀”) : 4,000 ~ 4,500원/kg, 일반쌀 : 2,300원/kg

## □ 고품질 쌀 생산전략

= 미곡종합처리장(RPC)을 핵심체로 생산부터 유통까지 계열화 =



## 2. 한·칠레 FTA 특별대책

### 그간의 추진상황

- 「선대책 후비준」 원칙에 의거 한·칠레 FTA 체결에 따른 피해농업인 보상 및 지원대책을 최종 확정·발표(7.16)
  - 포도·복숭아·키위 등 직접피해 품목의 경우 농가 희망에 따라 폐업시 3년 순소득분을 지급, 경쟁이 곤란한 소규모 농가의 구조조정을 유도
  - 과수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시설현대화, 과수기반정비 등을 지원하되
    - 수입급증에 따른 가격하락에 대비, 「개방적응 소득보전장치」(미국의 TAA제도와 유사한 형태) 마련
    - \* 협상과정에서부터 농업인단체 설명회(18회), 밤샘토론(2), 당정협의(5) 등 의견 수렴 및 보완과정을 거쳐 총 1조원 규모(지방비 2천억 포함) 지원계획 수립
-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별기금을 설치하고 추가 FTA 까지 고려한 기본법으로 「FTA이행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 고위 당정회의, 여·야·정 회의, 의원 개별설명 등을 통해 의원입법으로 제출(7.23)
    - \* 칠레산 농산물 수입 급증시 긴급관세조치(SG) 발동 및 원산지 판정기준 강화를 위해 관세특례법 제정 등 추진
- 국회의원 개별접촉 결과, 대부분 지원대책과 법 취지는 이해하나 농업인 단체의 FTA 반대로 지원법 처리에 소극적 입장



## 향후 추진전략

- 농업인의 불안감이 불식되도록 FTA이행지원특별법 및 지원대책에 대한 홍보를 가일층 강화해서 정부의 지원의지에 대한 공감대를 최대한 확산
  - 농업인대상 홍보물 제작·배포, 전국 농촌지도자에게 장관친서 송부
  - 과수 주산지 순회 설명·토론회를 재개최하고 지역 국회의원의 설명·토론회 동참을 적극 추진
- 범 정부 차원의 전략적 공조로 국회심의 분위기 적극 조성
  - 고위당정회의 또는 여야정 협의를 통해 당 차원의 협조 추진
- FTA이행지원특별법과 농특세법 등 농업인 지원특별법의 제·개정을 연계 추진하여 반대서명 의원의 입장변화 명분 제공

### < 추진 상황 >

- 농특세법 : 재경위 계류
- 부채특별법 : 농해위 계류(법안심의시 정부입장 반영)
- 복지및지역개발특별법(제정) : 법안 성안 완료, 국회 법제실 검토 중

### 3. 농가부채의 근원적 해결방안

□ 호당 평균부채 감소, 정상상환 증가 등 부채문제가 다소 호전되고 있으나, 소득정체 등으로 빚을 내서 빚 갚는 **악순환 구조**가 지속

○ 고액부채농가, 연대보증 피해농가 등은 소득에 비해 **상환 부담이 과중**

\* 호당부채 : ('01) 2,038만원 → ('02) 1,990, 정상상환비율 : ('01) 42% → ('03.6) 75

□ 이번 대책은 부채문제가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도록 **상시 경영 회생 시스템과 능력에 맞는 상환제도** 마련에 중점

① Work-Out 방식인 「**경영회생지원제도**」를 **상설화**, 부채문제를 초기단계부터 해결하는 체제 구축

- 회생가능성을 엄격히 심사하고, 자산매각 등 자구의무도 부과

② 정책자금은 소득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상환기간 장기화** 및 **금리인하**

③ 재정소요 최소화 및 조기상환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 강화**

- 단기성자금(2.7조원) 제외 및 상환기간별 금리차등제 도입

④ 연대보증 피해농가의 **실질적 부담완화**를 위해 상환기간 장기화

※ **부채대책위원회**는 이러한 방향에 합의하고 정부에 건의

□ 정부안을 확정하여 국회 계류중인 부채특별법개정안에 반영

## 4. 협동조합개혁 추진전략

- 개혁과제 및 추진방법 등에 대한 농민단체·중앙회·조합장 및 노조의 이해관계가 대립하여 개혁작업이 다소 부진
- 신·경분리 추진 시한과 시·군지부 폐지 등에 대한 입장 차이
- 전략적 접근을 통해 실질적인 개혁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단계별 추진
  - ① 「선중앙회 후조합」 방식에 따라 효율적으로 추진
    - 중앙회 개혁과제는 농민단체의 개혁의지를 동력으로 우선 추진
      - 신·경분리, 책임경영 확립 등 지배구조 개선
      - 시군지부는 「1군 1조합」지역부터 폐지, 신용점포로 전환
    - 일선조합 개혁은 원칙·기준에 따라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자율개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 부실조합 기준 강화, 경영공시제 등의 도입으로 광역합병 촉진
      - 조합장 선거 선관위 위탁 및 부정선거처벌 강화 등 선거관리 개혁
  - ② 「선자율 후조정」원칙에 따라 「농협개혁위원회」로부터 8월중으로 건의안을 제출받아 개혁 추진
    - 미합의 사항은 복수안으로 제출받아 정부가 개혁방안 조정
  - ③ 법 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은 조기 시행하고, 합의도출에 시간이 걸리는 조합장 선거제도(직간선제) 문제 등은 2단계로 추진
- 올 정기국회에서 정부입법으로 농협법 개정 추진

## 5. 농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 우리농업의 활로는 소비자 신뢰를 통한 소비기반 확보에 있으므로 본격적인 농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시스템 구축
  - 주요 품목 및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홍보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7.1)
  - 홍보관련 예산(59억원)과 마사회적립금 등을 활용하여 쌀, 우유, 과일 등에 대한 소비홍보 추진
    - \* 내년도 예산안에 홍보관련 예산 대폭 증액 요구
  - 품목별 생산자단체도 스스로 자조금을 모아 홍보 강화
    - \* 조성품목 : 우유, 돼지, 닭, 참다래, 파프리카, 사과, 시설포도 등
- 홍보방식도 민간 전문기획사에 아웃소싱, 상업광고방식을 적극 도입
  -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영상매체 및 인기스타 등을 활용

### —<LOVE米 캠페인 사례>—

- ◇ 청소년의 신뢰가 높은 TV 방송 3사의 아나운서들이 참여하여 「밥 중심 식단의 영양 균형성」을 홍보, 8월 중 러브米 가족캠프 운영

-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03 하반기), 품목별·시기별 체계적인 홍보
  - 친환경·품질인증 농산물에 대한 홍보 강화로 소비자 신뢰 확보
  - 수급상황에 따른 일회성 홍보보다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 유도
    - 농산물 파워브랜드 전시회(10.24~26), 축산물 브랜드전(10.31~11.2)

## 6. 조직정비·기능혁신 및 예산구조 개편

### 조직정비·기능혁신

= 21C 농정여건에 대응, 미래지향적이고 선진화된 조작기능으로 개편 =

- 새롭게 부각되는 농업협상·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수급 기능 등을 축소하는 1단계 조직 개편 단행(7.1)
  - 시장과, 농업기계자재과, 무역진흥과는 폐지하고, 농업협상과, 소비안전과, 농업기술지원과를 신설
  - 친환경 농산물 유통기능 등 친환경농업 정책 기능 강화
- 정부혁신위원회와 협의, 농림부의 기능을 생산·수급조절 위주에서 식품안전, 농업인소득, 농촌개발 중심으로 전환
  - ① 농림부의 명칭도 미래지향적인 「농업식품농촌부」로 변경
  - ② 농림부 局조직을 품목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완전 재편
  - ③ 집행기능은 지방 또는 민간으로 이관, 정책중심 조직으로 전환
  - ④ 소속기관은 행정수요 변화에 맞춰 과감히 통폐합
    - \* 농관원, 수과원, 식물검역소를 (가칭) 「농축산물 검사검역청」으로 통합 검토
- 조직의 유연성(flexibility)을 제고하는 상시혁신체제를 구축
  - 젊고 참신한 인재들의 열정과 아이디어를 결집하기 위해 주니어보드를 구성·운영 계획(현재 공모중)
  - Agro-cafe(토론방), 동호회 활성화 등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

## 예산구조 개편

- '04년부터 농업인에게 실제 지원되는 예산(사업예산)과 **채무상환 예산을 명확히 구분하여 투명성 제고**
  - 차입한 투융자 **채무상환액이 1/3정도 포함되어 있어 실제 투자액보다 과장되었다는 비판 해소**
    - \* '03농업예산 : 8.7조원, 그중 채무상환이 3조원으로 35% 차지
  - 앞으로 **신규차입을 억제하면서, 양곡증권 원리금상환이 종료 되는 내년에 양곡기금을 공자기금에 통합 추진**
    - \* '02년말 양곡기금의 공자기금 등 차입금 : 4.8조원
- 가격지지, 기반정비 예산은 줄이는 대신, 직불제 등 **농가소득 보전과 농업인 복지·농촌지역 개발 지원예산을 확충**
  - 일반 경지정리 사업은 중단한 반면, 직접지불 및 복지소요 예산은 '03년보다 대폭 증액(1.9배) 요구
- 농특세 연장과 관련하여 12개 부처에서 분산투자되고 있는 **농특세 사업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 추진**
  - 농특세는 복지·교육 및 지역개발 분야에 집중 투자
  - **평가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통합조정 기능을 강화**
  - 농업인에 대한 지원예산은 농업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가급적 농업예산으로 편성**

## 7. 새만금사업 추진대책

### □ 다각적인 소송대책을 강구, 항고심과 본안소송에 적극 대응

○ 서울행정법원은 계류중인 행정소송('01.8.21 제기)과 관련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6.12)에 대해 방조제공사 집행정지 결정(7.15)

- 서울고법에 즉시항고(7.15)하고, 행정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의 범위를 확정받아 바로 보강공사를 재개(7.18)

\* 태풍·집중호우 등 재해에 대비 차질없이 보강공사를 진행중

- 서울행정법원에 증인 5명을 신청(7.18)하고, 전복도가 보조참가를 신청(7.19)함에 따라 재판은 상당기간 연장될 전망

○ 앞으로 변호인단을 보강하고, 법리를 강화

- 우선 항고심에서 집행정지의 요건결여를 집중 부각시키고, 수질 및 경제성문제도 적극 방어

- 본안심리에서 추가자료 제출 및 증인 추가 신청

### □ 「새만금사업특별위원회」와 협조, 토지이용계획 조기 수립 추진

○ 토지이용계획은 친환경적이며 경제성이 높고 전북도민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립

- 특별위원회의 활동일정('04.12월)을 앞당길 수 있도록 당과 협조

## Ⅱ. DDA 농업협상과 농업·농촌대책

### 1. DDA 농업협상과 대책

#### 협상동향과 전략

- 지난 3월 관세와 보조금 감축 등에 관한 세부원칙(Modality) 합의실패 이후 9월 칸쿤 각료회의 합의를 목표로 협상진행 중
  - 의장 초안에 대한 수출국과 수입국간,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 차이가 커 합의전망이 불투명
    - \* 관세감축 : 선진국 40~60%(UR36%), 개도국 25~40%(UR24%)
    - \* 보조감축 : 선진국 60%(UR20%), 개도국 40%(UR13.3%)
  - 최근 EU의 공동농업정책 개혁안 타결(6.26)을 계기로 주요국간 의견조율이 이루어질 경우 협상 진전도 가능한 상황
- 관세 및 보조금 감축폭을 최소화하는데 모든 협상 역량을 동원하여 대응
  - 일본·EU 등과 NTC그룹을 형성, 수출국 주장에 공동 대응
  - 강경 수입국, 개도국그룹 등 다양한 그룹과도 쟁점별로 공조하여 대응
  - 장·차관의 주요국 직접 방문 등 적극적인 외교활동 전개
- 세부원칙 협상 단계에서부터 개도국 지위유지에 협상력 집중
  - 개도국 세분화 시도를 저지하고 주요국과의 양허협상에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



- 2004년 쌀재협상을 대비하여 세부원칙 협상에서 관세감축, 시장접근물량 최소화 등 쌀협상에 유리한 여건 조성 노력
- 칸쿤 회의결과를 감안하여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주요 상대국의 입장을 파악하는 등 사전 정지 작업
- 협상동향을 적극 홍보하여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협상을 추진
- 예상 시나리오별로 국내농업에 대한 영향분석을 하고 국내 대책 수립을 위해 Task Force 설치·운영중

## DDA 협상영향 전망

- DDA 협상은 WTO의 틀 속에서 시장개방을 확대·심화 시키기 위한 협상이므로
- UR협상보다 국내 농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전망
- 2005년 이후에는 쌀 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
- DDA 협상 타결에 미리 대비하여 주요 선진국들은 농업부문에 시장 원리를 확대 도입하는 방향으로 농정개혁을 추진
- EU : 농산물 생산과 정부보조의 연계 축소 및 농촌개발투자 확대
- 일본: 쌀 관세화 및 수매제폐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실시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정기조의 대전환 필요

## 2. 개방화 시대의 농정 기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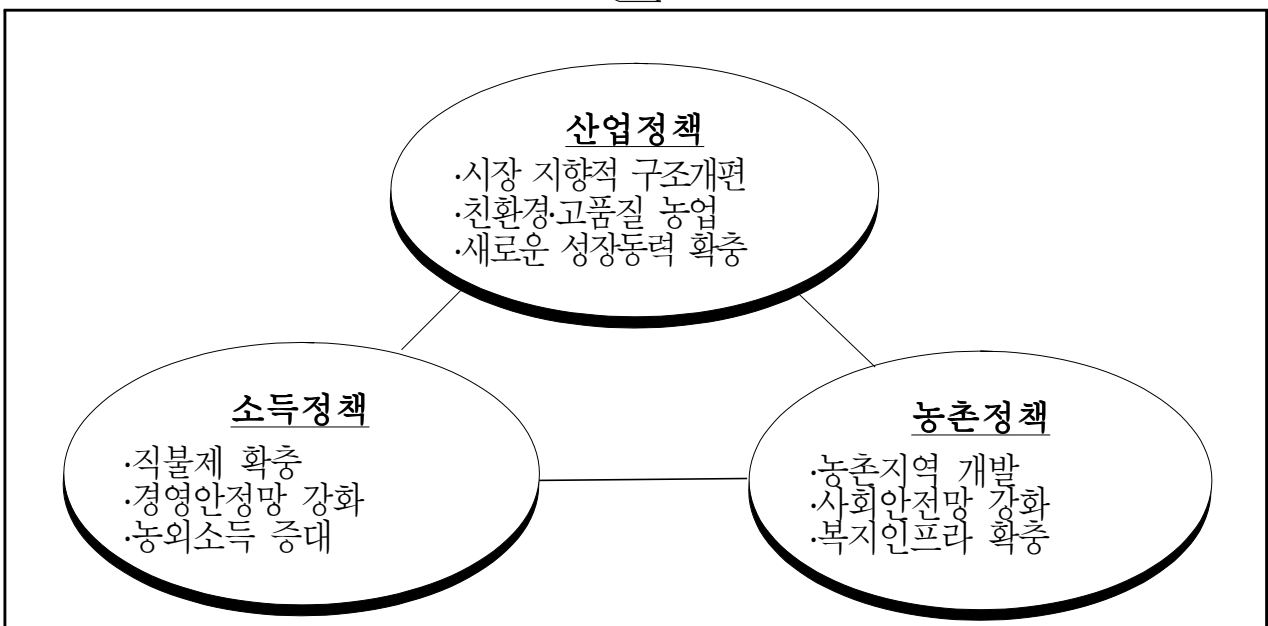
= 시대에 앞서가는 새로운 패러다임, 농업·농촌비전, 농정의 기본틀 확립 =

### 농정패러다임의 전환

- 정책방식 : 정부주도, 가격지지 → 시장지향, 소득보조
- 정책중점 : 생산자·증산 중심 → 소비자·품질 중심
- 정책범위 : 농업위주 → 식품·농촌으로 확대
- 농촌성격 : 농업생산공간 → 생산+정주+휴양공간

### 농업·농촌 비전과 정책방향

- ◇ 농 업 : 지속가능한 생명·환경산업
- ◇ 농업인 : 잘사는 전문 직업인, 국토·환경지킴이
- ◇ 농 촌 : 살고싶은 쾌적한 도농 교류·정주공간



### 3. 농업·농촌대책 방향

#### 가. 개방화시대에 적응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

##### □ 농업구조를 시장 지향적으로 과감히 개편

- 농산물 가격이 시장기능에 의해 결정되도록 관련제도 정비
  - 진입 및 규모화 저해 규제 대폭 완화('05까지)
- 소유 중심에서 이용 중심으로 **농지제도 혁신**
  - 농지법 개정('04), 농지은행·신탁제도 도입('06)
- 농가 유형별로 **차별화된 정책 수단**을 적용하여 구조조정을 촉진
  - **농업인 개념 재조정** 방안 검토

##### □ 소비자들이 우리농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농장에서 식탁까지 **농식품 안전관리체계 정착**
  -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확대 및 생산이력제 도입('04)
- 유기농업 등 **기술집약적 친환경농업**을 확대, 부가가치를 제고
  - 친환경 인증 농산물 비중을 10%까지 확대('10)
- 비료·농약 등을 적게 쓰는 **저투입농법**을 전체 농업으로 확산
  - 유기질 비료의 공급은 확대하는 대신 **화학비료 지원은 중단**('05)

##### □ 수출촉진 및 전통음식문화 세계화 등 성장동력 확충

- 고품질농산물 및 기능성 식품 육성으로 **수출농업 견인**
  - 수출용 국가 브랜드 개발('04), 중국 등 해외시장 개척 강화
- 김치 등 우리식문화 해외홍보 강화 및 해외한국음식점 네트워크화

## 나. 직불제 등 다양한 소득원으로 농가소득안정

- '13년까지 직불금 포함 이전수입을 농가소득의 30% 수준으로 확대
  - DDA 등으로 가격지지정책의 축소가 불가피하므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다양한 직불제를 도입
    - 농가소득중 직불금 비중 확대 : ('02) 1.4 → ('13) 10% 수준
  - 개방폭 확대에 맞추어 직불제 유형을 단계적으로 확대
    - '04년에 경영이양직불제를 분할지급 방식으로 개편하고, 조건 불리직불제 및 친환경축산직불제 도입
    - '05년에 경관보전직불제, '07년에 소득안정직불제 도입 검토
- 주5일 근무제, 국민연금시대 등 사회여건 변화를 호기로 삼아 농촌관광 등 새로운 농외소득원을 적극 개발
  - 농촌경관을 활용한 펜션·녹색체험마을 등 관광자원 확대
    - 전통문화 등 향토지적재산, 지역축제를 통한 5都2村운동 전개
  - 대표 향토산업의 대대적인 발굴·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 함평 나비축제, 원주 한지 문화제 등
- 재해 등에 따른 농가경영 불안해소를 위해 소득 안정망 구축
  -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품목 및 재해대상 범위 확대
    - 포도·단감·복숭아 전국 확대('04), 수도작·시설채소('08까지)
    - 중장기적으로는 농업재해보험으로 확대를 검토('09)

## 다. 농촌지역 개발 및 복지 증진

= 국가균형발전은 농촌과 도시를 연계한 균형발전이 중요 =

- 도시자본의 투자유치를 촉진하여 농촌지역의 활력을 증진
  - 농촌주택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를 계기로 「제2주택 갖기」붐 조성
  - 한계농지를 농촌형 성장 산업인 **관광·휴양실버타운**으로 개발
  - 지자체 주관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농촌지역종합개발** 추진
    - 3~5개 마을단위로 차별화된 특성화 개발
    - 중소도시와 주변 농촌마을이 연계발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농촌의 취약한 **의료·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도시에 뒤지지 않는 수준으로 삶의 질 향상
  - 의료·연금 등 사회안전망을 농촌실정에 맞게 보강·확충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04), **건강보험료** 50%까지 경감('06)
  - 소규모 학교 운영 내실화, 대학특례입학 기회 확대, 교육비 부담 경감, 우수교원 확보 등으로 **농촌교육 환경을 개선**
  - 보건·의료·영유아 보육·여성 및 노인 복지 인프라 확충
  
- 부처별로 분산된 농어촌 복지·지역개발 업무의 **종합조정체계 구축**
  -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지역개발촉진특별법**」 제정('03)
  - 농특세를 농촌지역 개발 및 복지증진에 집중 투자('04)

새로운 농정의 원년  
2004년 업무계획

2004. 3. 8.

농 립 부



# 목 차

I. 2003년 농정 성과와 반성 .....	105
II. 농업·농촌 종합대책 추진시스템 구축 .....	117
III. 200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	137
1. 쌀 협상과 쌀산업 구조개편 .....	139
2. 한·칠레 FTA비준 후속 대책 .....	153
3. 농업 전문인력 양성 .....	156
4. 소비자 지향의 고품질·안전농산물 공급 .....	161
5. 선진국형 농산물 유통혁신 .....	176
6.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장치 강화 .....	183
7. 농촌 복지 및 지역개발 본격 추진 .....	190
8. 농정제도 개혁 .....	196
IV. 2004년 업무혁신 계획 .....	205

<참고> 1. 혁신체크리스트

2. 대통령 지시사항 및 '03년 업무보고 추진실적

붙임 : 농촌진흥청, 산림청 업무계획





# I. 2003년 농정 성과와 반성



# I. 2003년 농정 성과와 반성

## 1. 지난 1년간의 농정 성과

### <참여정부 출범 당시의 여건>

- ◇ '95년 WTO 출범 이후 누적된 농업의 어려움 극복 및 농촌 사회 유지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참여정부 출범
  - 쌀·우유 등 소비 감소에 따른 공급과잉 해소, 농업과 환경의 조화, 가축질병 방역 등이 새로운 현안으로 대두
- ◇ 한·칠레 FTA 협정서명('03.2) 및 DDA 모델리티 협상 시한('03.3월말) 등 개방 확대에 대한 농업인들의 우려 고조
  - 농업문제에 국한하기 보다 국가 경영전략 차원에서 도·농 균형발전과 복지향상 등 종합적인 대책을 요구

### 가. 농정환경 변화에 대비한 농업·농촌 종합대책 수립

- DDA·FTA 등 개방확대에 따른 농업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10년후 우리 농업·농촌의 비전을 형상화
  - DDA 출범이후 농정개혁 준비작업을 바탕으로 지난해 5월 농정기획단, 8월에 농정개혁자문단을 구성, 대책 수립을 가속화
  - 농민단체, 학계, 지자체 등 각계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발표('04.2.23)
    - DDA 이후 작동이 어려운 쌀 수매제, 최저가격보장제 등을 대체할 시스템 개발(공공비축제, 직접지불제 등)

- 경쟁력이 없는 농가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면서 개방화 시대에 우리 농업을 지켜내기 위해 **규모화·전문화** 촉진
- 농업정책과 병행하여 농촌지역개발, 농촌형 복지정책을 확대함으로써 농업 **구조조정**의 **연착륙**을 유도

○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고 **투융자 10개년 계획 수립**

- 부처간 의견조정(12차례)을 거쳐 향후 10년간 총 119조원 투융자 계획을 확정하고 전반기 투융자소요 51조원은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반영

□ 농업·농촌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시스템 정비**

- FTA지원특별법 : FTA기금 설치,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및 구조조정 촉진, 수입 급증시 경영안정 보완장치 마련 등
- 부채경감특별법 : 이미 대출된 정책자금의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등
- 삶의질향상특별법 : 범정부차원의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체계 구축
- 농어촌특별세법 : 농특세 시한을 2013년까지 10년간 연장

**나. 주요 농산물의 수급균형 조기 회복**

□ 생산감축소비촉진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쌀 재고 수준을 대폭 축소**

- 쌀 생산조정제와 작황부진, 재고특별처리 등으로 지난해 말 쌀 재고 수준을 678만석으로 감축, 적정수준에 근접
- 주정용공급(70만석), 인도적 차원의 대복지원(278만석) 등
- \* 재고량 : ('00) 679만석 → ('01) 927 → ('02) 1,040 → ('03) 678

□ **낙농가와 합의를 통한 우유 생산감축**(※ 성공사례로 분석)

- 낙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이해·설득으로 원유 생산 감축에 합의, '03.7.16부터 시행
- 낙농진흥회의 하루 원유 잉여량이 810톤에서 400톤 수준으로 감소하고, 분유재고량도 17천톤에서 8천톤으로 축소(적정 6~8천톤)

□ **생산자 중심의 자율수급 조절 가능성 확인**

- '03년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조절 명령제**를 시행하고 감귤 과잉구조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사업 추진
  - 과잉생산 기조하에서 적정 수취가격을 유지(약 22%를 시장격리)

**다. 농촌사회 활력증진을 위한 규제 완화**

□ **도시민의 농지소유 허용 및 한계농지 개발 활성화**

- 농지법 개정으로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경우 비농업인도 0.1ha 이하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03.1.1)
  - \* 관련 농지거래 활성화 : 총 66천건, 4,100ha(전체 농지거래면적의 6%)
- 한계농지 개발 촉진을 위해 사업시행 자격 완화 등 규제 완화
  - 농업이외의 체육·문화시설 등으로 다양화하고 일반인의 참여도 허용(농촌투자유치센터 본격 운영)

□ **농촌 제2주택 보유 촉진을 위해 관련세제 개편**

- 양도세 부과 1가구 1주택 산정시 농가주택은 제외토록 하는 한편, 상시 거주하지 않을 경우 별장으로 중과세하던 지방세법을 개정

## 2. 반성과 교훈

### 가. 사회적 갈등에 대한 효율적 대처 미흡

#### □ 한·칠레 FTA 관련, 농민단체 타협

- 「선대책 후비준」 원칙에 따라 농민단체 주장을 대폭 수용하였으나 일부 단체는 개방 자체를 반대하여 효과적인 설득이 곤란
  - 범정부적으로 국회 및 농민단체에 대한 설득에 총력을 경주하였으나 비준까지 많은 절차와 시간이 소요
- 현장 농업인의 이해 반영체제 및 대표성 있는 농민조직이 취약하여 정부와 농업인 사이에 오해와 불신을 증폭

#### □ 새만금사업 추진과정에서 환경단체와 대립

- '01년 정부방침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업 찬반논쟁 지속
  - 환경단체는 사업을 반대하는 반면, 전북도민은 사업의 조기 완공을 희망
- 서울행정법원의 방조제공사 집행정지 결정('03.7.15)에 대한 항고심에서 승소('04.1.29), 현재 본안소송에 적극 대응 중
  - 친환경적 개발의 모범사례로 삼을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 필요

쌀과 DDA 협상 등에 대비, 대화·협의 채널을 강화하되 농업분야에 특수한 갈등조정을 위한 합리적 프로세스 강구

## 나.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구조조정 지연

### □ 쌀 국내외 가격차 축소 노력 미흡

- '03년산 추곡수매가 2% 인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 국회 동의과정에서 논농업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지급상한 확대(2ha→3ha)만 반영하고 추곡수매가는 동결

### □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이해조정 부족

- 자율적 개혁을 유도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에 농협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농민단체와 협의 추진
- 중앙회 신·경분리 등 핵심쟁점에 대해 이해가 대립하여 법개정 지연 등 가시적인 성과 미흡

농업·농촌 종합대책에 제시된 개혁 로드맵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제 2단계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

## 다. 농업·농촌문제에 대한 공감대 확보 미흡

### □ 정부와 농업인 사이에 직접 의사소통 부족

- 농업인과 쌍방향 대화채널의 부족으로 정부와 농업인 사이에 오해와 불신 지속

### □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체계적인 농업·농촌 가치 프로그램 부족

- 농업투자에 대한 불신과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 상존

농정에 대한 참여의 폭을 넓히고 농업인 중심으로 홍보방식도 개편,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 3. 주요 과제별 추진실적

번호	계획 또는 지시내용	구분	2003년 목표	목표대비 실적	평가결과
1	농업·농촌종합대책 수립	업무보고 및 지시사항	개방확대 대비 및 농업 체질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농업·농촌종합대책 및 119조원 투융자계획 확정·발표('04.2.23)	완료
2	한·칠레 FTA 대책마련	"	한·칠레 FTA로 인한 피해예상 분야에 대해 보완대책 마련	◦FTA지원대책 수립 ◦농업인지원 4대 특별법 제·개정 추진	완료
3	농가부채 대책수립	"	농업인의 부채부담 경감 및 농가 경영회생지원	◦부채 경감법 개정 (상환조건 개선 및 금리 인하) ◦「경영 회생 지원제도」 상설화	완료
4	농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	체계적인 홍보시스템 구축 및 지속적 홍보 추진	◦홍보 전담조직구성 ◦TV, Radio 등에 품목별 홍보 추진	계속
5	조직정비·기능혁신	"	미래지향적 조직정비·기능혁신 방안 마련	◦1단계 조직개편 완료 ('03.7.1) ◦2단계 개편안 마련중	계속
6	농업예산구조 개편	"	농업인 실제 지원예산 구분 및 농특회계 신규차입 최소화	◦채무상환예산과 사업 예산 구분 표시 ◦농특회계 신규차입 최소화로 예산 구조 투명성 및 건전성 제고	계속
7	WTO/DDA 협상관련 시나리오 준비 및 계획 수립	"	협상에서 쟁점별 우리 입장 반영 및 영향 분석	◦주요국과 공조강화 및 우리입장 적극 개진 ◦쟁점·품목별 영향 분석 및 대책 수립	계속
8	새만금사업 추진	"	◦환경단체의 소송에 적극 대처 ◦미래 지향적인 토지 활용 방안 마련	◦항고심 승소(집행장지 결정 취소'04.1.29) 및 본안소송 적극 대응 ◦합리적인 토지 이용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	계속
9	수매제도 개혁과 쌀산업 구조개편	"	◦쌀산업구조개편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	공공비축제 도입, 민간 중심의 유통기능 강화 등 쌀산업종합대책 마련	계속
10	농지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	"	농지제도 혁신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중장기 농지제도 개선 방안 마련 ※과제별 검토 및 의견수렴중	계속

번호	계획 또는 지시내용	구분	2003년 목표	목표대비 실적	평가결과
11	농민단체와 정부간 타협 방안 수립	업무보고 및 지시사항	농민 단체의 참여를 통한 갈등해소와 지지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정협의회 구성</li> <li>농민 단체와 간담회 (34회) 및 지역 토론회·설명회 등을 실시</li> </ul>	계속
12	우유수급 안정화 방안	"	원유 생산 감축 및 소비촉진 홍보를 통한 수요확대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낙농가와 협의를 통한 생산감축대책 마련</li> <li>TV CF 등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li> </ul>	완료
13	협동조합개혁 추진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회의 효율적 경영체제 구축</li> <li>일선 조합의 경영 규모화·전문화 유도</li> </ul>	농협법 개정 추진중	계속
14	농식품 안전관리체계 정착	"	안전농산물 생산·유통 체계 구축	GAP, 생산이력제 등 농식품 안전관리 체계 도입	계속
15	농산물수출확대	"	17.6억불	18.6억불	완료
16	다양한 직불제 도입 및 직불예산 확대	"	직불제 보완내실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영이양직불제 개편, 쌀소득보전친환경 축산직불제 신규 도입</li> <li>농림부 소관예산중 직불 예산 비중 확대 *('03)6.8%→('04)8.4</li> </ul>	계속
17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04년 포도, 단감, 복숭아, 감귤 전국 확대 실시 및 운영비 지원 확대	완료
18	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촌지역 활력증진</li> <li>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방안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특성을 살린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추진</li> <li>「삶의질향상특별법」 제정으로 범정부적 지원 체계 구축</li> </ul>	계속
19	농촌관광방안 마련	지시사항	도·농 교류활성화 및 도시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방안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민과 함께 하는 농촌가꾸기 종합 대책」 수립</li> <li>투자유치를 위한 세제 개편</li> </ul>	계속
20	정책별 고객관리 개념 도입	"	정책입안, 결정 및 집행과정별 이해 관계자에 대한 홍보와 의견 수렴	정책고객관리 시스템 구축 및 E-mail을 통한 의견 수렴 실시	완료

## 4. 정책과제 성공사례 : 우유 수급 안정

### □ 추진배경

- 우유 생산 증가와 소비 감소로 '02년초부터 잉여량이 급증
  - 원인 : 원유가격 보장에 따른 생산 증가, 두유·쥬스 등 대체음료 소비증가에 따른 시유 소비 감소
    - \* 1인당 연간 시유소비량 : ('97) 37.1kg → ('00) 35.6 → ('01) 36.5 → ('02) 34.9
- '02년도 잉여원유 처리를 위해 1,387억원을 투입하고 소비 홍보를 추진하였으나, 수급불균형 상황 지속
  - 지난해 초 수급상황으로는 매년 30만톤(810톤/일)의 잉여원유 발생, 연간 1천억원 이상의 자금 소요 전망

### □ 대책내용

- 낙농진흥회의 '03년 예상잉여량 30만톤(810톤)중 15만톤(410톤) 감축 추진
  - 우선 폐업보상을 통해 감축을 하고, 나머지 물량은 농가별 생산 목표량(Quota)을 부여하여 감축

### □ 낙농가대표와 합의과정

- ① '03.3월부터 50여일간 도별 낙농가대표·낙농조합장 20여명과 10차례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대책안을 마련
  - 협의된 대책안을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상정·의결(5.12)

② 증산농가 중심으로 일부 낙농가들은 감산대책을 적극 반대 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우유 버리기, 젖소 풀어놓기 등 집단행동

- 생산자단체인 낙농육우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 낙농가대표를 참여시켜 협의체를 구성
-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당초 안대로 추진할 계획임을 표명하면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 권고

③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해 7.9일 낙농가대표(12명)와 보완 대책에 합의서 작성·서명, 7.16부터 시행

\* 추가대책 회의 : 낙농가 자체회의 7차례, 정부와 회의 4차례

## □ 추진성과

○ 농가별 생산목표량 부여를 통한 우유 수급조절체계를 마련 함으로써 수급안정 달성

- 낙농진흥회의 하루 잉여량이 810톤 수준에서 400톤 수준으로 감소
- 우유 생산감축에 따라 '03년 예산 203억원을 절감하고, 앞으로 500억원 수준 이하 소요 전망(대책전 1,000억원 전망)

\* 잉여량 : ('03.1월) 817톤 → (5월) 636 → (8월) 412 → (10월) 353 → (12월) 414

\* 예산 : ('02) 1,387억원 → ('03.예산/실적) 1,063/860 → ('04. 전망) 573

- 분유 재고량도 17천톤에서 8천톤으로 감소

\* 분유 재고량 : ('03.3) 17.2천톤 → (6월) 14.4 → (9월) 10.9 → (12월) 7.9

※ 보완과제 : 우유 수급안정의 바탕위에서 낙농산업 발전대책 수립 추진(전문가들로 낙농발전협의회 구성 '03.9)

## □ 정책적 시사점

### ① 문제의 본질을 파악,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

- 과잉생산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농가별 감축후 생산목표량을 부여하여 사실상 농가쿼터제 실시

### ②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대화와 설득으로 합의를 거쳐 추진하는 민주적 절차가 효율적

- 낙농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4차례 대화와 설득을 통해 감산 정책의 불가피성을 이해시켜 합의하에 추진
- 국회·언론 등에 대책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낙농가의 요구를 합리적인 선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③ 기본원칙은 지키면서 농가의 요구를 반영, 원만하게 추진

- 당초 설정된 감축기준을 유지하여 기본원칙을 견지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증산한 농가 구제, 감산율 조정(18.4→9%), 경영자금 지원(351억원) 등 낙농가의 요구를 일부 반영

### ④ 단기적인 문제를 해결하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

- 폐업·감산 보상금을 지급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일시적으로 자금이 소요되더라도 장기적인 재정절감 도모
- 단기적인 생산과잉을 억제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등 장·단기 대책을 구분, 단계적으로 접근

## Ⅱ. 농업·농촌 종합대책 추진시스템 구축



## II. 농업·농촌 종합대책 추진시스템 구축

### 1. 투융자 집행·평가체제 구축

#### < 그 간의 집행·평가체제 >

- WTO 출범에 대비, '92년부터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국고 62조원('92~'02)을 투융자 하였으나, 생산위주 투융자로 생산성 향상에 불구, 실질 농가소득이 정체되고 일부농가 부실사례 발생

\* 호당 농가소득('95불변) : ('95)21,803천원→('97)21,910→('02)21,853

- 투융자의 집행에 있어 효율적 평가 및 관리시스템이 미흡
  - 지원대상 농가의 수용능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자금 지원후 철저한 사후관리시스템이 미흡
  -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추진으로 농업인과 지자체, 지역농업기관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소홀
-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한 환류 과정도 충분히 작동하지 못함

#### < 향후 집행·평가체제 구축방향 >

- 지원대상자의 엄격한 심사와 사후관리로 투융자 부실화 방지
- 지자체, 협동조합, 지역대학간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농업인의 투융자 수용능력을 제고
-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환류(feedback)를 제도화



## 1.1 투융자 집행체제 구축

### 가. 현황 및 문제점

- 대상자 선정 심사사후관리 미흡으로 일부 투융자 부실 초래
  - 투융자 집행과정에서 자격미달자가 선정되거나 충분한 계획없이 사업을 신청하여 투융자 부실의 원인이 됨
    - \* 정부지원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보조금을 받은 후 부실화되거나 명의도용 및 보조금 횡령사례 발생
  - 정부지원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나 경영능력이 부족하여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의 필요성 대두
- 농업 정책자금 취급기관이 한정되어 있어 경쟁을 통한 대농업인 서비스 개선에 한계
  - 현재 대출기관은 농협이고 자금관리도 농협에 위탁
  - 일부 농산물 가공업자 등의 경우 주거래 은행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자금 대출을 위해 농협 이용이 불가피
    - \* 민간 RPC 거래은행(115개) : 농협(77), 시중은행(11), 지방은행(27)
- 전농가를 지원대상으로 함에 따라 선택과 집중 미흡
  - 모든 농가에 대한 평균적 지원, 고령농 은퇴지원 미흡으로 농업구조조정의 효과가 예상보다 낮아 농가의 규모화 부진
    - \* 농가 호당 경지면적 : ('92) 1.26ha → ('98) 1.35ha → ('01) 1.45ha

## 나. 투융자 집행체제 구축방안

### □□ 대상자 선정

- 「선심사 후지원」 원칙으로 농업경영체의 사업타당성, 경영능력을 엄격히 심사하여, 적격자 선발
  - 대출기관이 재무·비재무 평가모형을 개발하여, 경영능력과 사업성을 심사·평가
  - 농가의 사업계획에 따른 자금수요에 따라 적기에 자금 지원
-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구조조정 촉진
  -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농업경영체에 대해 금융원리에 따라 집중지원이 가능한 **농업종합자금**을 계속 확대
    - 2007년까지 총35개 사업을(시설·개보수·운영자금·농기계구입자금 등) 하나로 묶어서 연중 수시 지원(package loan)하는 종합자금제로 통합
  - 농가 경영기록 관리방식을 현행 자가방식에서 전문기관이 대행하는 체제로 전환
    - 농업기술센터, 회계법인, 컨설팅기관 등에서 농가와 계약을 체결

### □□ 자금 지원

- 정책자금 취급을 일반은행에 단계적 개방, 서비스 개선
  - 자금규모, 용자조건(단기·중기·장기), 대출취급의 전문성, 자금수혜자의 범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개방 우선순위 결정
    - 지원대상자 선정이나 지원절차가 비교적 단순하고, 지원규모도 크지 않은 정책자금부터 개방

- 가축계열화사업자금에 대해 금년 중 우선 개방 후, 여타 정책 자금으로 단계적 개방 검토

- 취급기관 개방에 따른 제도개선 및 문제점 보완을 위한 연구 용역 및 시범사업 준비('04년 상반기)

#### □ 융자금관리기관을 농협에서 분리, 대출기관의 책임성 제고

- 농특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단법인으로 (가칭)농업정책자금관리단 설립

\* 현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단법인 설립 준비 중

- 정책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접근

- 우선, 농특회계 관리 업무와 사후관리 업무를 위탁
- 일반은행에 정책자금 취급권한 부여시 대출금 종합관리 기관 역할 담당
- 향후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의 기능과 조직을 종합적인 농업정책 금융기관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 검토

#### □□ 사후 관리강화

- 금융기관이 대출농가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경영컨설팅을 실시하여 경영애로를 조기에 진단·조치

- 대출정보, 농가경영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대출성과 분석 및 추가지원 판단

- 농업정책자금관리단에 검사팀을 신설하여 대출금의 목적의 사용시 환수조치 등 사후관리 강화

## 1.2 투융자 수용역량 강화

### 가. 현황 및 문제점

- 농업인의 수용능력을 고려않고 **평균적으로** 지원하여 투융자 부실 초래
- 농업인 뿐만 아니라 지자체나 협동조합이 지역농업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기술 능력 향상** 필요

### 나. 추진계획

- **경쟁력 있는 전문 농업인 육성**
  - 기술·경영혁신 교육강화 등 **경영능력 향상** 지원
    - '04년부터 후계농업인 교육기관을 공개모집, 품목별 전문교육 실시
  - **성공모델 확산**을 통해 벤치마킹 유도
    - 신지식 농업인의 전자상거래 콘텐츠 구축('04.5), 농업인간 정보교류 활성화로 농가간 기술경영능력 제고, 마을단위 공동컨설팅 도입
- **협동조합·민간업체의 조직화 및 계열화 촉진**
  - 조직화 및 계열화를 통해 **생산과 유통의 효율성** 제고
    - 산지유통센터(APC), 미곡종합처리장(RPC), 축산물종합처리장(LPC)을 공동마케팅 조직으로 발전
  - 경쟁 촉진으로 **우량 광역 브랜드** 출현을 뒷받침
    - 축산물 우수 브랜드 인증제도 도입과 우수 브랜드에 대한 홍보지원 강화
- **지역농업협력 체계화**
  - 산·학·연·관 지역농업 클러스터 구축
    -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기술지도 등 수행을 위해 지역 농대 교수를 특화사업 겸임연구관으로 활용하는 제도 운영
  -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농업 발전을 주도
    - 지자체가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특수 시책을 자율적으로 수립

### 1.3 투융자사업 평가체제 구축

#### 가. 현황 및 문제점

- 농업인 등 고객관점에서 계량화된 평가지표 설정 미흡
  - 예산집행 등 투입측면에서 성과를 평가함에 따라 소득향상, 생산비 절감 등 실질적 성과측정 미흡
  - 계량화된 지표 설정이 미흡하여 객관적인 평가에 한계
- 개별사업 단위별로 평가함에 따라 사업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한 평가 미흡
  - 선도효과가 필요한 사업, 보완대책으로 추진중인 사업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
  - 개별사업이 아닌 시책이나 정책차원의 평가 미흡
-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feedback)과정 미작동
  - 성과가 없거나 비효율적인 경우에도 환류에 의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해 정책이 그대로 추진되는 등 편의적 행정 추진
- 평가에 대한 농업인, 관련기관의 불신으로 투융자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 제기
  - 농정 수혜자인 농업인은 투융자의 체감효과가 낮다고 평가
  - 관련기관, 언론 등에서는 비효율적 투융자 사례를 들어 농업 농촌 투융자에 대해 회의적 시각 견지

## 나. 투융자사업 평가체제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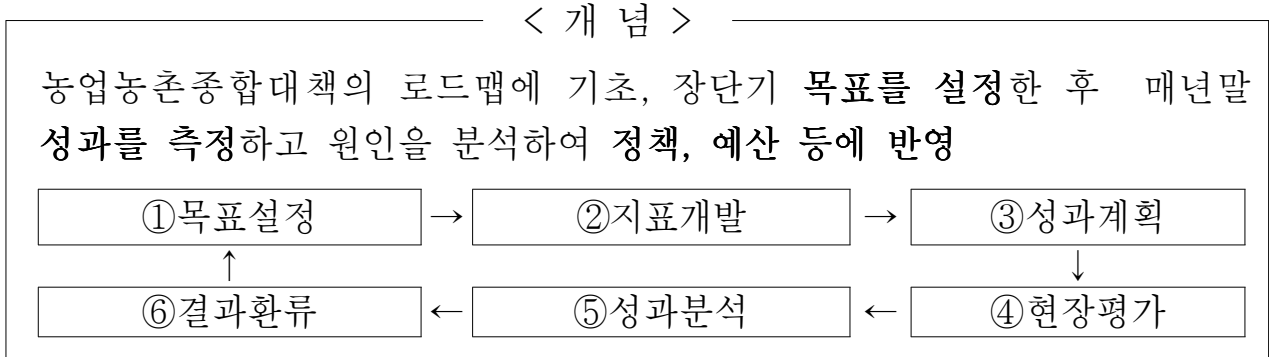
### — < 기본 방향 > —

- ◆ 예산·투입중심 평가에서 결과영향 등 고객중심 평가 강화
- ◆ 객관적 평가를 위해 계량화된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 활용
- ◆ 사업을 시책·정책별로 그룹화하여 체계적 투융자 성과관리
- ◆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구조조정 등 환류 강화

- 고객관점에서의 계량화된 성과측정지표 개발
  - 단위사업별로 소득, 생산비절감, 안전성 제고 등 고객관점에서의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평가
  - 평가지표는 계량화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 제고
- 개별 사업을 시책·정책별로 그룹화한 후 장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측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농정성과를 관리
  - 172개 사업을 12개 정책, 58개 시책으로 그룹화하고 시책·정책별로도 평가
- 성과평가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실효성 있는 환류 실시
  - 평가결과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하고 농업인, 학계, 소비자들의 의견수렴
  - 평가자료 및 결과는 D/B화하여 관련기관에 제공하고 차기평가에 활용
  - 평가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A, B, C 등급으로 구분, 등급별로 예산 조정 및 통폐합·일몰·정책방향 재 설정 등 정책 구조조정 실시
    - A등급 : 정상추진, B등급 : 예산 및 사업조정, C등급 : 일몰, 통폐합
- 평가 내실화를 위해 조직 및 인원보강
  - 상반기중 투융자 평가를 전담하는 재정평가과 신설
  - 평가 결과는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농업인, 학계 등으로 구성되는 투융자사업평가위원회에 상정·심의

## ※ 119조원 투융자평가시스템(성과평가)

### <성과평가 개념>



### <성과평가 세부과제>

추진절차	추진과제
① 목표설정 (’04.2)	◦농업·농촌종합대책 세부실천계획 로드맵에 의거 사업부서는 정책별(전략목표,국별), 시책별(성과목표,과별) 장단기 목표 설정
② 지표개발 (’04.2)	◦구체적 목표인 성과목표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설정
③ 성과계획 (’04.5)	◦일년동안 투입되는 예산과 정책목표를 매칭, 성과계획서 작성
④ 현장평가 (’04.4 ~ 12)	◦사업부서는 성과목표, 성과지표, 진척도 점검 ◦평가부서는 정책프로세스, 농업인의 반응, 효과 등을 현장평가
⑤ 성과분석 (’05.1 ~ )	◦사업부서는 계획대비 성과달성도 분석, 자체성과보고서 작성 ◦평가부서는 자체성과 및 현장평가를 토대로 총괄보고서 작성
⑥ 결과환류 (’05.1 ~ )	◦성과달성도(등급:A,B,C)에 따라 예산가이드라인 설정하고, 폐지·통폐합·일몰 등 정책조정 ◦성과우수자에 표창 수여, 근평 등 인사관리 추가 활용검토

## 2.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역량 강화

### 가. 현황 및 문제점

- 지금까지의 농정시책 홍보는 주로 농민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농업인과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 프로그램이 미흡
  - 농업인들은 개방 대응체계가 미흡하다고 보는 반면, 일반 국민들은 농업투융자의 효율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상반된 비판
- 소비자와 농업인간 공감대도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
  - 소비자는 여전히 우리 농산물의 품질안전성에 불안감을 갖고 있고, 농업인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체계 미구축
- 홍보대상의 수용성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인 정책홍보로 홍보효과에 한계
  - 홍보 대상별로 특성과 니즈(Needs)를 파악하여 차별화된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전문조직이 필요

### 나. 홍보전략

- 홍보내용과 홍보대상을 분리하고, 상호 차별화된 홍보 추진
  - 홍보내용 : 정책홍보, 농업·농촌 가치홍보, 농식품 소비촉진 홍보
  - 홍보대상 : 농업인, 국회, 언론, 소비자 등으로 구분
    - 특히, 일반 농업인에 대한 직접 홍보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를 강화하여 신뢰회복에 중점
- 홍보방식은 민간의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전담 조직 신설 등 추진체제 정비



## 다. 추진계획

### 정책홍보

- = 대상별로 차별화된 홍보를 추진하여 무관심층은 선점하고, 지지세력은 강화하며, 반대세력은 설득하는 전략으로 추진 =
- 농업인/농민단체와 직접 대화를 통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종합대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데 주력
  - 농촌 선도농업인 6만명을 PCRМ으로 구축하여 직접 홍보
  - 농업의 특성을 감안, 지방대학 교수 등을 통해 지방지·지역 소식지를 적극 활용하여 농업인 직접 홍보를 강화
  - 정기적인 전국 순회 농정설명회(Road Show) 개최로 농업인의 정책 결정 과정의 참여, 정책홍보 및 현장여론 수렴기회 확대
- 언론, 시민단체, 일반국민 등 농업문제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계층에 대해 TV방송 등을 활용한 홍보로 지지기반 확산
  - 장·차관의 TV·라디오 대담시 소비자 문제를 중점 부각
  - 식문화 등 고유의 전통문화, 생태환경 등 일반 국민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다양한 TV·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협찬
  - 정책 수립과정에 일반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언론계·학계·시민단체 등과 협력관계 강화
- 농업관련기관, 연구소, 농대교수 등을 통한 간접적 홍보활동 유도 (언론 기고, 대담 출연, 강연활동 등) 지원 강화(자료 제공 등)

## 농업·농촌 가치홍보

= '03년 홍보 성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와 일반국민의 정서에 호소하는 본격적인 이미지 강화 추진 =

□ '03년 추진한 TV CF로 관심유도에는 성공하였으므로, 이를 심화하여 농업·농촌 가치 이미지 강화를 위한 TV CF 보완

○ 공감의 폭을 넓히기 위한 다각적 표현과 반복적 전달을 통해 이미 구축된 이미지 강화

□ 체험을 통해 농업·농촌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프로모션 추진

○ 도심에서 농촌의 정취를 느끼고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해 「빌딩 숲 보리밭」 축제 개최

○ 대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농촌 체험 행사를 실시하고, 수기 공모와 우수 작품 선정, 선진 농업 현장 견학 기회 제공

○ 농업인을 초등학교 일일교사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추진

□ 다양한 TV 기획프로그램을 통해 농업·농촌 가치 공감대 확산

○ 농정의 변화, 외국의 사례 등 다원적 기능 관련 주제로 시사 다큐형태의 기획 프로그램 제작·방영

○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한 농업·농촌의 가치 홍보방안도 지속 추진

## 농식품 소비촉진 홍보

= 품목별·계층별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되, 장기적으로 생산자 단체의 자조금을 활용한 홍보로 전환 =

□ 금년도 사용 가능한 소비촉진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품목별로 차별화된 홍보 실시

○ 예시) 쌀(Love米), 화훼(꽃 생활화), 친환경 농산물·신선채소·과일 (건강·안전·고급농산물 이미지 홍보), 축산물(브랜드 홍보), 한과 전통주 등 가공품(국산농산물 사용, 건강 증진 등)

□ Well Being 등 최근의 건강 선호 추세를 감안한 TV 프로그램·캠페인 제작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소비촉진 홍보 추진

○ (가칭)「무지개 식탁 만들기」 프로그램을 제작, 하반기 반영 - 60분×6편 기획물로 농산물 색깔별 영양소와 건강효과를 분석

○ 「하루에 5가지 과채류 먹기 캠페인」 등 청소년이 우리 농산물과 친숙해질 수 있는 이미지 마케팅 실시

□ 인터넷, 휴대폰 등 청소년층이 선호하는 매체를 활용하고, 주부층에 대해서는 요리·건강 식생활 관련 TV·잡지를 활용

○ 도시민은 농촌관광, 체험프로그램, 전통문화 이벤트와 연계 홍보

○ 특히, 「우리 술 Festival」을 개최하여 지역 식문화와 연계한 전통민속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세계화하는데 노력

## 「농업농촌 홍보센터」 신설 등 홍보 추진체계 정비

= 농업·농촌 홍보가 지속적·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 재단 신설 등 전문성 및 총괄기능 강화 =

### □ (가칭)「농업농촌 홍보센터」 신설로 홍보의 전문성·지속성 강화

#### ○ 주요 사업내용

- 농산물 소비촉진, 농업·농촌 가치 홍보 등 전반적인 홍보사업 수행
- 정부 및 생산자단체의 홍보사업 대행
- 홍보효과의 검증 및 Feedback

#### ○ 재원 : 마사회 적립금 등 관계기관 출연금

#### ○ 사무국 : 일반인력을 최소로 운영하고, 홍보분야 외부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등 전문성을 높이면서 외부발주 (Outsourcing) 방식도 폭넓게 활용

#### ○ 추진일정 : 운영방식에 대한 전문기관 용역(상반기까지)에 따라 설립 추진

### □ 농정홍보를 총괄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전체적인 방향 설정 및 관련사업간 조정 기능을 강화

#### ○ 관련공무원, 농협 등 생산자단체,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 ○ 주요기능 : 총괄 홍보전략 수립, 기관간 기능 조정, 홍보 추진 상황 평가 및 성과 분석 등

### 3. 농정조직 및 인력구조 개편

#### 3.1 현 농정조직의 문제점

- 개방확대, 자연재해 빈발 등으로 농가경영·소득안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를 담당할 조직이 불충분
  - 다양한 형태의 직불제, 농업경영 위험 완화, 워크아웃시스템 등
- 농촌정책에 관한 범정부적 정책조정기능이 취약하고 생산기반 정비 등 “농업개발” 위주로 편제
  - 농촌다움(Amenity)을 기반으로 한 관광 등 지역개발과 농촌 문화 콘텐츠 보전·발전, 농촌복지 증진이 시급
- 농업생산 이후 유통·가공·식품 분야 등 전체 Food Supply Chain을 포괄할 수 있는 체계 미흡
  -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바탕으로 규모화·현대화 지원, 식문화 재정립 및 해외전파 지원 등이 필요
  - 농식품 안전관리도 새로이 부각되는 「Farm to Table」 원칙에 따라 생산단계부터 안전성 강화 방향으로의 재정립 필요
- 농정조직이 품목을 위주로 구성되어 생산을 중요시하고 정부 수매 등 시장 개입을 초래
  - 일반 농산물의 증산정책에 치중한 결과 환경친화적 농업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적극적 대응이 미흡

## 3.2 농정조직의 개편

### 가. 기본방향

◇ 「농림부」는 「농업·농촌 종합대책」 등 새로운 농정기조에 맞게 농업정책·식품정책·농촌지역개발정책 등 3대 핵심 기능을 수행

- 농가의 경영안정·구조조정, 워크아웃 및 협동조합개혁 전담 조직을 신설
  - 투융자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심사·평가기능을 대폭 강화
- 새로이 추진되는 농촌지역의 종합개발과 관광 등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 및 농촌복지를 담당할 조직 신설
-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산업」 전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농업 생산·유통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
  -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 농식품 안전성 관리기능(GAP 등) 강화
- 생산기능은 축소하되 BT 등 첨단기술과 접목된 환경친화적 방향으로 재정립
- 집행적 성격의 업무를 지방 또는 민간에 적극 이양
  - 생산기반정비, 농산물검사, 종자보급기능 등 집행기능은 단계적으로 지자체 또는 민간에 이양
- 「농촌진흥청」, 「산림청」, 산하기관은 새로운 업무 수요에 맞게 개편

## 나. 농정조직 개편 추진

- 농업정책국을 농가의 경영안정과 구조조정, 워크아웃 및 협동조합개혁을 전담하는 「농업구조정책국」으로 개편
  - 농가경영안정·소득지원·농지규모화 등의 구조조정정책과 직접지불, 농업금융정책, 협동조합 및 인력육성 등을 담당
- 농촌지역개발기능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농촌개발국」을 「농촌정책국」으로 개편, 기존의 생산기반 조성 기능을 축소
  - 농촌관광, 지역개발, 새로운 농촌 소득원 개발과 농촌복지를 전담
- 예산·기금의 심사·평가기능을 총괄하는 「재정평가과」 신설
-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기능과 조직도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
- 「농업기반공사」 및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기능과 조직도 재검토
  - 「농업기반공사」는 농업 구조조정과 농촌 지역개발 지원기관으로 전환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전문기관으로 개편

연내 조직개편을 완료하되 법 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은 조기 시행

### 3.3 인력구조 개편

◇ 새로운 정책수요에 알맞는 전문인력 충원·인사교류 확대 및 자체 교육·훈련기회 부여, 인력의 효율적 관리

□ 새롭게 추진되거나 수요가 늘어난 정책에 맞추어 이를 담당할 **외부 전문가를 충원**

○ 농촌관광·복지, 홍보 및 식품안전 등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외부 전문가를 유치

- 산하기관·단체도 새로운 업무에 맞는 외부 전문가 영입

□ 관련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인사교류를 확대**하여 전문성 제고 및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 구축

○ 중견관리직(3-5급) 정원의 5% 수준을 일정기간 상호파견 하는 형태의 교차근무 추진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와 상반기 중 협의를 거쳐 실시 하되 성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본부와 산하기관·단체와의 상호 교체 근무도 시범 실시

- 교류자에 대하여는 본래의 기관으로 복귀시 적정보직 부여 및 승진 등 인사상 우대조치

○ 산하기관·단체도 자체실정에 맞게 업무관련 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업무의 전문성 향상



-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국내외 교육기관·관련단체·업체 등에 **교육 및 현장 훈련기회 확대**
  - 민간기업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민간 경영기법 도입 및 전문성 제고
  - 해외 훈련과제를 농촌관광, 복지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과제를 선정하여 운영
  - 농업관련기관 합동 현장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본부·산하기관·단체와의 현장중심의 전문 합동교육을 통해 전문성 향상과 함께 현장을 이해하고 상호협력을 증진
- 부내 워크숍·토론 등의 **활성화**를 통해 업무능력을 제고
  - 주요 정책사업계획 수립시 수평적 워크숍 활성화
    - 단계별·계층별 토론을 활성화 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추진상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
  - 부내 연구모임을 중심으로 한 토론을 활성화 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
- 「희망보직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열린인사 추진**
  - 본인의 희망과 상사의 추천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양방향 의견을 수렴하여 적임자를 보직
  - 직렬 구분의 탄력적 운영으로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효율적 인력운용 및 직원의 사기양양

### Ⅲ. 200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 Ⅲ. 200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 1. 쌀 협상과 쌀 산업 구조 개편

##### 1.1 쌀 협상 대응

###### 가. 쌀 협상 성격

###### < UR 협상 결과 >

- 우리나라는 「예외 없는 관세화원칙」에 대한 특별조치에 합의함으로써 쌀에 대한 관세화를 10년간 유예
- 관세화유예와 동시에 국내소비량의 1~4% 상당의 저율관세 수입량(MMA)을 허용하고 금년까지 이행중임  
(’95 : 5만1천톤 → ’04 : 20만5천톤)

- 쌀 협상은 협정의 기본원칙인 관세화에 대한 “한시적 예외조치”의 시한만료에 따른 후속 협상임
- 쌀 협상은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한 협상”이며 유예와 관련된 조건을 협의하는 협상임
-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하여는 이해관계국의 합의를 얻기 위한 추가적인 양보(additional and acceptable concessions)가 불가피
- 관세화할 경우, 기준년도(’86~’88) 관세상당치(TE)를 ’95년도부터 적용한 것으로 가정하고, UR협상의 최소관세감축률(10년간 10%)을 가상 적용(Shadow Reduction)
  - 2005년부터는 관세상당치(TE)의 90%로 관세화하고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협상에서 결정되는 바에 따라 향후 관세 감축이 적용됨

## 나. 쌀 협상의 여건

- 관세화 유예와 관세화 모두 장·단점이 있음
  - 관세화 유예시에는 합의된 의무 수입량만 수입되므로 연도별 쌀 수입량의 예측이 용이한 반면, 유예 대가로 MMA 증량을 포함한 상대국의 과도한 요구 직면 가능성
  - 반면 관세화시에는 과도한 MMA 증량은 피할 수 있는 반면, 국제가격·환율 변동, 향후 관세 감축 등에 따른 수입량 급변 가능성 있음
  
- 쌀 협상은 관심국가들과의 양자협상이 핵심
  - 미국, 중국, 호주 등 관심이 다른 국가들과 개별적인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여 각각 합의를 이루어야 함
  - 개별 국가들과의 협상결과를 종합하여 공동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어려움 있음
  
- DDA 협상일정 지연으로 '04년 Modality 합의 가능성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객관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쌀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금년 2월 WTO 협상의장단이 구성되는 등 협상 재개 움직임은 있으나 당초 협상시한인 금년말까지 합의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임
    - 미국 대선('04.11), EU 회원국 확대('04.5)

## 다. 쌀 협상 추진절차

- 농업협정문에는 ‘이행 마지막 연도(’04년)에 특별대우(관세화 유예) 계속여부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고 동 연도에 종결’ 하도록 규정
- 일본, 대만, 이스라엘의 경우 관세화 전환 3개월 전까지 수정 양허표를 제출하고 검증절차를 거쳤으나, 아직 관세화 유예 지속을 위한 협상 사례는 없음

### — < 2004 쌀 협상 절차 > —

- (1) 우리나라가 WTO 사무국에 쌀 협상개시 의사통보
- (2) WTO 사무국은 우리 통보내용을 회원국들에게 통보
- (3) 관심국가는 90일내 협상참가 의사를 우리나라와 WTO 사무국에 통보
- (4) 관심국가와 양자협의를
- (5) 협상결과를 WTO에 통보하고 회원국들로부터 3개월 검증 절차를 거침

- 우리나라는 협상 개시 의사를 '04.1.20일 WTO 사무국에 통보
  - '04.3.8일 현재 협상 참가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해온 국가는 없음
  - 미국, 중국 등 주요 참여 예상국들은 쌀 협상에 대비 내부 체제 및 입장 정리중인 것으로 관측
- 관심국들이 협상 참가의사를 통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4월 이후 본격적인 양자협상이 진행되며, 3개월 검증절차를 고려하여 9월말까지 종결할 예정

## 라. 쌀 협상 대응방향

- 쌀 산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관점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협상을 추진
  - 쌀 협상의 주요내용은 **관세화 유예에 따른 의무수입량 증량 수준 및 유예기간**이 될 것임
    - 그러나 대만의 협상 사례에서 보듯이 의무수입량 수입방법, 의무수입량 용도제한 문제 등도 유예조건으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
  - 상대국의 요구조건이 과도하여 관세화 할 때보다 쌀 산업에 더 불리한 경우에는 실리 확보방향에서 대응
  - 협상 대안간 신축성 유지를 통해 협상력을 높이고 협상대안 비교 및 국내영향 분석 등을 토대로 최종입장을 결정
- 협상력 극대화와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쌀 협상은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국내 공감대 형성 방안**을 수립·추진
  - 협상의 성격과 절차에 대한 정확한 사실인식의 확산과 ‘참여와 대화’로 협상대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출에 노력
  - 농민단체, 언론계, 학계, 국회 등 여론 형성 그룹별로 여론 수렴과 홍보 주력
  - 지자체 공무원, 농협직원 등을 통한 농촌현장 홍보 병행

## 1.2 쌀 전업농 육성

### 가. 현황 및 문제점

□ UR이후 개방확대 등 쌀 산업 여건변화에 대비, '95년부터 '03년까지 86천호의 전업농 선정·육성 추진

○ 선정 전업농에 대해서는 영농규모화 사업을 지원하고, 경영진단 및 지도 등을 통한 사후관리를 실시

\* 영농규모화사업 지원규모 : 77천ha(매매 27, 임대차 50)

○ 현재 86천호 쌀전업농은 전체 벼 재배농가의 8.7%이나, 총 경영면적은 전체 벼재배면적의 24.9%(253천ha)를 담당

- 전업농은 일반 벼 재배 농가에 비해 평균 경영규모가 넓고, 상대적으로 젊은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음

〈쌀 전업농과 일반농가 비교〉

	호당 경영면적	평균 연령	평균 소득
전업농	2.95ha	49세	3,456만원
일반농가	1.04ha	59세	2,023만원

□ 전업농 선정시 규모, 연령, 영농의욕 등을 고려하기 보다는 전업농수를 늘리는데 중점을 두어왔고,

□ 사업지원 방식은 선택적·집중지원 방식보다는 지역별·규모별 균등방식 지원으로 인해 3ha이상 전업농 창출이 지연됨

\* 규모별 지원내역('01~'03) : 1ha미만 16.4%, 1~2ha 25.4%, 2~3ha 27.6%

\* 3ha이상 창출농가 비율('01~'03) : ('01)15.3%→ ('02)16.7→ ('03)42.7

○ 현행 전업농의 영농규모화 사업은 쌀 협상이후 쌀값하락 여건에 대비하여 개선할 필요



## 나. 추진계획

◇ 금년은 「7만호 쌀 전업농 육성 원년」으로 개방체제에 대비한 규모화사업 개편 등 전업농육성사업 본격 추진

□ '95년 이후 선정해 온 86천호 전업농과 비전업농 중 규모(2ha이상)·연령(50대이하)·영농의욕 등을 고려하여 7만호 집중 육성 대상자를 분류

○ 육성대상자에 대해 3년 단위로 재조사 및 평가 등 사후관리 강화

□ 3ha이상 규모화된 전업농 창출을 위하여 사업방식 개선 추진

○ 3ha이상 전업농 : ('03) 42천호 → ('04) 44천호 → ('10) 70천호

\* 영농규모화 사업물량 : ('03) 7,350ha → ('04) 7,688 → ('10) 21천ha

○ 사업추진은 2~5ha 규모 전업농에게 선택적으로 집중 지원하고 지원시 경영진단을 의무화하여 경영체별 경영능력 배양

○ 경영이양을 통해 공급된 농지('04 : 5,552ha)는 전업농의 규모화에 모두 공급

\* 한칠레 FTA 비준안 관련 경영이양 대상 상한 연령 확대(69 → 72세)

□ 쌀 협상이후 쌀값하락 여건에서도 전업농이 소득을 유지하면서 경영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

○ 규모화사업(농지매매 및 농지임대차) 지원방식 및 조건을 개선

○ 쌀산업의 구조 개선 촉진을 위하여 경영이양직불제를 개선

## 1.3 쌀농가 소득안정 방안

### 가. 현황 및 문제점

- WTO/DDA, '04년 쌀협상에 따른 시장개방 폭 확대에 대응하여 쌀농가의 소득안정장치 확충 필요
  - 쌀협상에서 관세화하는 경우 수입급증에 따른 쌀값 하락이 우려되며, 관세화를 유예하더라도 MMA 물량 증량과 공급과잉기조 지속에 따른 쌀값 하락 전망
- 친환경직불 성격의 논직불제는 WTO 협정에 따라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비용 증가액이나 소득감소액만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개방 확대 이후 소득감소에 탄력적 대응이 어려움
  - 논직불제는 지속적인 지급단가 인상 논란 및 구조조정 저해 효과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
- 감축대상보조인 쌀소득보전직불제는 '02년 도입 이후 쌀값 안정으로 쌀소득보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
  - DDA 협상에서 큰 폭의 보조금 감축이 이루어지고, 쌀값이 크게 하락할 경우 AMS부족으로 지급이 제한되는 문제 발생 예상
- 친환경직불제는 친환경농업 확산, 환경보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편 필요
  - 현재 친환경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어 친환경 농업 확산에 어려움
    - \* 직불금 지급 현황('03) : 면적 1만ha , 농가 12천호, 지급액 67억원
  - 농가필지별 지원으로 친환경 농업의 외부효과가 낮고 이행 점검 등 사후관리에 어려움

## 나. 추진계획

- **논직불제는 생산가격과 연계되지 않는 생산중립적 직불제로 개편**
  - 생산과 연계되는 담수의무 및 친환경영농 실천의무는 폐지
  - **지급총액 및 지급단가는 일정기간 고정하고, 개방폭 확대에 따른 피해와 소득변화 등을 감안하여 조정**
  
-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시장 개방폭 확대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보험성격의 장치로 내실화**
  - '04년도에는 연속가입자에 대한 농업인 납부금 부담 완화('04.3월)
  - 개방의 영향에 따라 농가가 선택할 수 있도록 농업인 납부금과 보전 수준을 다양화
  
- **논밭으로 분리되어 있는 친환경농업직불제를 통합하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중심에서 저투입농가 중심으로 전환**
  - 가입대상은 외부효과 제고 및 이행점검을 위해 지구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집단화된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참여도 허용
    - \* 계획 면적 : ('04) 9천ha → ('05) 32 → ('10) 78
  - 지급단가는 저투입 농법과 일반 농법간의 소득차이, 생산비 수준 등을 감안하여 결정
  
- **쌀관련 직불제 개편방안에 대해 관계전문가를 중심으로 작업반을 구성, WTO 협정과의 일치성·현장 적용가능성 검증('04.3-6월)**

## 1.4 RPC 경영혁신

### 가. 현황 및 문제점

- 벼의 수집에서 판매까지 일괄 처리를 통한 비용절감, 미질 향상을 위해 '03년까지 RPC 328개소, 건조·저장시설(DSC) 568개소 설치
- 건조능력 : 1,253만석, 저장능력 : 644만석, 가공능력 2,396만석
- 시장개방 폭 확대 이후 시장 경쟁심화, 정부수매량 감축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RPC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나 전체 농협 RPC의 45%인 90개소가 적자
- 운영자금 무이자 지원에도 불구하고 **원료곡 고가 매입, RPC간 과당경쟁** 등으로 적자 발생

#### ※ 농협 RPC 경영상황

	'96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평균손익(백만원)	79	11	△61	△220	△127	△27
적자RPC(개소수)	8	78	105	158	129	90

#### ※ 민간RPC : '97년이후 26개소 부도(재가동 15, 철거 5, 부도 중 6개소)

- 농협 RPC는 조합경영과 RPC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원과의 관계에 따른 원료곡의 고가매입 등이 경영악화의 주요인

\* 원료고가매입 : (농협RPC) 55,558원/40kg, (민간RPC) 54,869

- 쌀 소비는 매년 감소추세이나, RPC의 쌀 가공능력은 줄어들지 않아 RPC간 과당경쟁 불가피

\* 1인당 소비량 : ('70)136.4kg→('90)119.6→('00)93.6→('02)87.0→('03)83.2

\* RPC 가동률 : ('98)52% → ('99)48 → ('00)47 → ('02)44 → ('03)45

## 나. 추진계획

- 정부지원 희망 RPC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RPC를 등급화하여 시설·운영자금 차등지원
  - 평가기준은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과 RPC, 시·군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04.2월)
    - 영업이익 등 수익성을 중심으로 수확기 원료곡 확보율 등도 반영
  - 경영평가는 객관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평가기관**이 실시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심의위원회에서 확정('04.4월)
  - 평가결과에 따라 RPC를 6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최하위 등급** (17개소 내외) RPC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중단**('04.5월)
    - \* '04 정부지원 : 운영자금 9,184억원, 시설자금 90억원
  
- 경영평가결과 최하위 등급 RPC, 자율통합 신청 RPC 등을 중심으로 **통합·합병**을 추진
  - 최하위 등급 RPC는 통폐합 권고후 권고 이행시 지원 재개
    - \* RPC 통폐합은 '12년까지 62개소 이상 추진
  - 자율적인 통폐합을 촉진하기 위해 통폐합 RPC에 대해서는 **시설·운영자금 지원시 우대**
    - \* 통합 RPC에 대해 운영자금은 최고 30억원, 건조저장시설 3개소 설치 추가 지원
  
- 농협 RPC는 조합경영과 분리하여 전문가 중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 사내분사제의 도입을 확대('04:5개소)하고 분사장을 전문가로 선임
    - \* 사내분사 설치(개소수, 누계) : ('04) 10개소 → ('12) 50개소
  - 장기적으로 자회사 형태의 독립법인으로 전환 추진
  
- ※ 민간 RPC는 관련협회를 중심으로 원료권 인접 RPC간 자율통합 추진

## 1.5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

### 가. 현황 및 문제점

- '01년부터 고품질 쌀 생산·유통을 위해 고품질 품종 재배 면적 확대, 밭벼 재배억제, 질소질 비료 사용 감축을 추진
  - '03년 현재 고품질 품종 재배면적은 93%까지 확대되었고 밭벼 재배면적은 14천ha로 감축('01년 27천ha)
- 우리 쌀은 외관상 품위, 관능적인 맛에 있어서 외국의 고급 쌀에 비해 우수하지 못한 상황
  - 고품질 품종 개발·보급의 확대, 재배관리 표준화, 체계적인 수확후 관리, 고품질 쌀 시장의 형성 및 소비자의 인식제고 등이 필요

### 나. 추진계획

- 지역특성에 맞는 고품질 종자 보급 확대 및 재배관리 표준화 추진
  - RPC, 농업기술원,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지역농업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지대별 특성에 맞는 고품질 표준재배법 설정
  - 고품질 품종 중심으로 정부 보급종 공급량 확대('03:13천톤 → '04:15)
  - 유기질비료 공급, 겨울철 녹비작물 재배, 볏짚 환원 등을 통해 논외 지력을 증진하고 질소비료 사용 감축 유도('03:11.5kg → '04:11)
- RPC를 고품질 쌀 생산·유통의 중심체로 육성
  - 산물벼 처리능력 제고를 위해 건조저장시설 확충('04:80개소, 64천톤)
    - RPC의 건조·저장시설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민간사업자와 생산자단체간 지원조건 차이 축소
    - \* 지원단가 : ('99) 450 → ('03) 450 → ('05이후) 500백만원
  - RPC와 농업인간 계약재배 확대 및 내실화 추진('03:245천ha → '04:300)

□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고품질 쌀 유통기반의 조성**

○ **포장양곡 표시제도의 이행상황 점검을 강화하고, 표시 불이행 및 허위표시의 경우 처벌조항 강화 추진**

- 수시단속(시군 자체실시), 특별단속(농림부, 시·군, 농관원 합동, 분기별 1회)을 통해 이행상황 점검
- 현행 양곡관리법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해 제재효과가 미흡하므로 금년 양곡관리법 개정시 강화

○ **시중 유통 브랜드 쌀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시기·회수도 늘려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브랜드 쌀 품질관리체제 구축**

- \* 평가 대상 : ('03) 15-20kg → ('04) 4-20kg 포장단위로 확대
- \* 평가시기 및 회수 : ('03) 8-10월, 3회 → ('04) 3-8월, 4회

□ 단경기 시중유통 쌀의 원료곡으로 사용되는 정부수매물량의 품질고급화를 위해 '04년부터 **수매·방출 체제 개편**

○ **정부수매물량은 시·군별로 자율 선정한 3개 내외 품종을 중심으로 실시**

- 시·군별 수매품종 선정 결과, 전체 166개중 157개 시·군이 3개 품종을 선정('04.12)
- 원활한 수매검사를 위해 검사원의 품종식별 능력을 높이고, 수매 사전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분쟁발생시 처리대책 마련('04.8월)

○ **현재 단일등급인 정부쌀 검사등급을 밥쌀용·가공용 등 용도별로 다양화하고 밥쌀용 검사기준을 시중 유통쌀 수준으로 강화**

- 검사기준 개정안을 마련('04.7월)·고시하고 '04년산부터 적용

## 1.6 추곡수매제도 개편

### 가. 현황 및 문제점

- WTO 출범 이후 보조금감축으로 수매물량이 줄어들어 따라 수매 제도의 소득지지효과와 수급조절기능 위축
- WTO/DDA 협상에 따른 보조금 추가 감축과 쌀소득보전 직불제의 도입으로 수매량이 더욱 줄어들게 되는 경우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량확보도 어려울 전망
  - 하빈슨 의장 초안의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60% 감축)하는 경우 DDA 이행 4년차 이후 수매제도 유지 곤란
    - \* 수 매 물 량 : ('95) 955만석 → ('00) 629 → ('03) 521
    - \* 직접소득효과 : ('95) 2,613억원 → ('00) 985 → ('03) 416
- 시장가격의 참조가격 역할을 하는 수매가가 시장가보다 높아 수급상황을 반영한 가격형성을 저해함으로써 시장왜곡이 심화
  - \* 수 매 가 : ('95) 133천원/80kg쌀 → ('00) 161 → ('03) 168
  - \* 시 장 가 : ('95) 125천원/80kg쌀 → ('00) 159 → ('03) 163

### 나. 추진계획 : 공공비축제로 전환

- 현행 추곡수매제도를 WTO에서 허용하는 시가매입·시가방출 방식의 공공비축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 비축물량, 매입·방출 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연구 용역을 거쳐 마련하고, 전문가·농업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04.9월)



□ 공공비축제 도입 기본방안

○ 비축목표

- 흉작에 대비한 식량안보의 확보를 위해 600만석 내외로 설정

○ 비축물량 매입

- 비축물량은 수확기 매입물량 등으로 충당
- 수확기 지역별 산지가격으로 매입

○ 비축물량 보관

- 정부비축용 창고 신축·창고관리 체계화 및 민간의 우수한 창고와 도급계약을 체결

○ 비축물량 방출

- 회전관리를 위해서 매년 일정물량을 방출
- 비축물량은 공매 등을 통해 유통업체에 판매
- 연간 방출계획을 사전 고시하여 예측가능성 확보
- 정부쌀 직접 공급은 군수용 등으로 최소화

□ 공공비축제의 도입시기와 관련, 일부에서는 AMS 부족시까지 수매제를 유지하자는 의견도 제시

○ 그러나 개방에 대비한 시장기능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05년부터 도입

□ 공공비축제의 도입근거 마련을 위해 정부수매 중심의 양곡 관리법 개정 추진('04.9-12월)

## 2. 한·칠레 FTA 비준 후속대책

### 가. 현황 및 문제점

- 한·칠레 FTA 협정은 국회비준 동의('04.2.16) 및 양국간 외교서한 교환으로 **4월1일 공식발효**
- FTA이행지원특별법도 국회 통과('04.3.2)로 동시 시행 예정
- FTA지원기금 확대에 따른 지원대책 보완 및 협정이행에 맞춘 지원체계 조속 구축 필요
- 국회 심의과정에서 기금규모확대(당초 8천억원 → 1조2천억원)

### 나. 추진계획

- 한·칠레 FTA지원대책 추진체계 구축(4월중)
  - 시행령을 조기에 확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
    - 농업인·소비자단체·관계부처 등으로 **FTA이행지원위원회** (위원장: 농림부장관)를 구성, 세부지원방침을 심의·확정
  - 지방에서 지역단위 과수산업비전과 육성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고 중앙은 지방의 사업계획을 평가 후 지원
    - 생산·유통·소비·촉진·수출 등 관련사업간 연계성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평가하고 지원규모 결정
  - FTA 지원기금 설치 및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 지원사업 내역·추진체계 등에 대한 의견수렴 후 기금운용계획 확정·시행

□ 개방체제에서도 지속 가능하도록 경쟁력 제고에 중점지원

○ 기존 과원에 대해 고품질·안정 생산 및 원가절감이 가능하도록 시설현대화 지원

- 포도 비가림시설, 참다래 네트시설, 복숭아 관·배수시설, 키낮은 사과원, 배 지주시설, 감귤 비가림시설 등
- 과원규모화, 전문생산(수출)단지 기반조성, 농기계임대, 우량묘목 생산지원 등

※ 과잉생산유발, 개별유통시설 설치 등 구조개선에 역행하는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외국산과 차별화할 수 있는 유통체계구축을 지원

- 거점산지유통시설, 국산과실 가공공장 현대화, 국산과실 소비촉진 및 수출증대 홍보지원 등

○ 지역특성과 지역농업의 비전에 따른 시·도별 과수산업관련 생산·유통 육성계획 마련

- 사업시행지침안을 미리 시·도에 예시하여 지역단위계획을 수립토록 조치(3월 중)
- 한·칠레 FTA 발효와 함께 사업이 추진되도록 사업수요조사 및 대상자 가신청 등 사전준비 완료(4월초)

□ 협정이행에 따른 경영안정장치 마련 및 구조조정 촉진

○ 개방충격 완화를 위해 소득보전직접지불제 도입

- 관세가 감축·철폐되는 피해품목에 대해 칠레산 수입급증으로 국내산 가격이 20% 이상 하락시 일정부분 소득보전

※ “과수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소득보전직불제 도입방안”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시행방안을 마련, FTA지원위원회에서 최종확정(4월)

- 과수 전문경영체 육성을 위한 **폐원보상 및 과원유동화** 촉진
  - 전업농에게 과원을 매각할 경우 매각농가 지원(1년간 소득보전)
  - 시설포도, 참다래 등 직접피해 품목은 희망시 폐원보상(3년간 소득보전)
  - ※ 시행령에 따라 FTA지원위원회에서 지원절차 등 세부 시행계획을 확정(4월)
  
- 칠레산 수입 농산물 관리체계 완비로 피해 최소화(3월말)
  - 무관세 할당물량(쇠고기 등 7개품목 4,480톤) 수입 관리
    - 농림부장관의 추천을 통하여 수입권공매(공개경쟁입찰)
  - 제3국산 우회 수입방지를 위한 엄격한 원산지 판정기준 설정
    - 육류·신선과실류는 칠레에서 완전 생산된 경우에만 인정
  - 긴급수입제한조치(SG) 및 사전모니터링 운용
    - 수입급증으로 피해발생시 농산물에만 인정되는 안정장치확보
    - 피해예상품목에 대해 수입량, 가격 등 상시모니터링체제를 구축하여 SG발동에 소요되는 피해조사기간 단축
  
- 농업인의 이해도 및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
  - **지역설명회**를 통해 사업내용 설명 및 **현장의견 수렴**(3월)
    - 시·도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책 설명 및 의견수렴
  - 홍보물 제작·배포 등으로 농업인, 지자체 등 이해도 증진(3월)
    - FTA내용·영향 등 농업인의 불안심리 해소에 중점
  - PCRМ, 홈페이지 등을 통한 지원대책설명 및 의견수렴(수시)
  - **한·칠레 FTA백서**를 발간, 추가적인 FTA 및 기타 농업 개방 대책의 시금석으로 활용(5월말)

### 3. 농업 전문인력 양성

#### 가. 현황 및 문제점

- 농가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 추세에 따라 미래 농업담당자를 육성하기 위해 '81년부터 후계농업인육성사업 추진
  - '80년대에는 농어촌 청소년의 이농방지에 중점을 두었고, '90년대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규모를 확대하였으나 기존농 위주로 지원
    - '81~'03까지 122천명을 선발, 2조 2,076억원의 자금지원
- 농촌의 청년층 인구 급감, 노령화로 후계인력 확보 애로
  - 최근 젊은 인력의 감소와 인구의 노령화가 심화되는 추세
    - 농가비율(40세미만/60세이상,%) : ('70)35.2/15.2→('90)14.6/31.3→('02)4.1/56.8
  - 농업인력 양성기관으로서의 농업계 학교의 역할 미흡
    - 농업계 고등학교 감소('85:61개→'00:26) 및 취농율 하락('90:24.2%→'02:6.4)
    - 대학진학률 상승('90:22.3%→'02:49.1) 및 농과대의 생산분야 학과 축소
- 후계농업인 교육이 형식적이고, 선정후 1회만 지원 하는 등 체계적 지원 미흡
  - 시·도별 집합식 통합교육 실시로 복잡 다양한 농업인의 요구(Needs)에 미흡

## 나. 추진계획

### □□ 신규 정예인력 육성

- ◆ 우수인재를 창업농으로 선발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한국농업전문학교 기능강화 및 대학생 등 청소년의 영농정착 기회 확충
- ◆ 창업농의 정책자금 지원규모 확대, 현장밀착 지도 등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기존농 위주의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을 **창업농 육성사업으로 전환**하고 체계적 지원('04)

○ 35세미만의 창업농 1천명을 선정, 800억원 지원

※ 지원조건 : 연리 4%, 5년거치 10년상환, 20~100백만원

- 연차적으로 최고 2억원 수준까지 지원규모를 확대('07까지)

- 창업농 교육을 특성화대학 등 공개모집방식으로 변경('04.1)

○ 창업농의 안정적 영농정착과 경영혁신을 위한 「**창업농 후견인제**」 도입('05)

- 지역대학 교수 등 전문가 선정, 전담지도 실시

- 현장방문지도를 원칙으로 하고, 온-라인을 통한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방법 활용

\* 우수농가 선정, 대상자 모집 등 준비('04.10)

□ 한국농업전문학교를 창업농 양성 전문기관으로 재편

- 전문대학과정 위주에서 실제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강화
  - 창업단계의 위험관리교육 등 기술·경영·마케팅 위주로 개편
- 현행 3년제 학과 과정 외에 전문직업훈련과정 신설('06)
  - 다양한 품목별 직업훈련과정(6개월, 1년, 2년 등) 설치
  - 한국농업전문학교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04.5) 및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04.6)

□ 영농 희망 대학생 등 청소년의 영농정착 기회 확충

- 영농정착 희망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업연수과정 설치·운영('05)
  - 농과계는 물론 비농과계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실시
    - 3학년생을 대상,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전국단위로 모집(100명)
    - 2년간 방학을 이용하여 전문교육, 해외연수 등 체계적으로 교육
  - 교육여건 및 능력이 우수한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연수프로그램 개발(하반기) 등 제도도입 추진
- 신지식농업인 등 우수농가에서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우(농업인턴) 창업을 지원('05)
  - 청소년에게 선도농업 연수기회를 제공하여 창업 동기 부여
    - 신지식농업인회, 전업농, 지자체와 협의회 개최('04.5)
    - 우수농가 선정, 농업인턴쉽 대상자 모집 등 준비('04.10)
  - 1년 이상 농업인턴쉽 참여자는 창업농으로 선정·지원

## □□ 우수농업인 집중지원, 전업농(선도농)으로 육성

- ◆ 후계농업인 등 정책자금 지원 농가중 사업실적이 우수한 농가를 선별·집중 지원하여 전업농·선도농으로 육성
- 경영교육 및 현장밀착 컨설팅 강화, 우수농가의 규모화 지원, 성공한 농업인 사례 확산 등

□ 경영교육 및 **현장 밀착형 컨설팅 강화**로 경영혁신을 지원하고, 투자규모 확대에 따른 위험부담 완화

○ 교육기관 공모 및 평가 등 경쟁방식을 도입, 우수한 교육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교육의 질 향상

- 교육수요조사 실시('04.상반기) 및 교육기관 공모('04.하반기)

○ 농업경영컨설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05년 지침에 반영 ('04.9~11)

- 지원대상 확대 및 현장밀착 컨설팅 추진방안 마련

- 마을단위 공동 컨설팅제 도입 검토

□ 사업실적 **우수농가를 선별**, 집중 지원하여 **전업농(선도농)으로 육성**

○ 후계농업인 사업자금을 지원 받은 농가의 경영실태 평가

-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후 5년 경과하고, 경영장부를 기재하는 농가

- 농민단체의 자체평가를 거친 후 정부주관으로 전문평가기관을 선정 최종 평가



- 평가결과 우수농가를 선별, 집중지원하여 투자의 효율성 제고
  - 최고 2억원까지 경영개선자금 추가지원
  -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규모, 지원금리 등에서 차별화

□ 신지식농업인을 지속적으로 발굴, 성공사례 확산

- '99부터 지식농업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성공한 농업인 173명 선발
- (사)신지식농업인회를 중심으로 자율적 운영 기반을 마련, 다른 농가에 노하우 전파
  - 「신지식농업한마당」 포탈사이트를 통한 지식·기술 등 확산
  - 이미 선정된 신지식농업인에 대한 정기적 재심사를 통한 자질 검증('04 하반기)
- 신지식농업인 우수생산품 홍보·판매를 위한 전자상거래 포탈사이트 구축·운영('04.5)

□ 농업벤처의 창업활성화 및 투자유치 지원

- 수도권 중심의 창업보육센터(서울1, 경기2)를 권역별로 확대지정 추진
  - 창업분위기 확산을 위한 창업경연대회 개최('04.10월)
- 유망벤처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
  - 2개 농업전문 투자조합의 투자 활성화('03말 투자잔액 116억원)
  - 유망 농업벤처를 대상으로 투자박람회 개최('04.11월)

## 4. 소비자 지향의 고품질·안전농산물 공급

### 1.1 농산물 안전성 제고

#### 가. 현황 및 문제점

- 안전·고품질 농산물 공급을 위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품질인증 및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 확대
  - 재배단계의 농산물 안전성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
    - 농산물 안전성조사 : ('99) 29천건 → ('03) 59
  - 농산물 품질인증제, 친환경농산물인증제를 실시하여 우수농산물 생산을 촉진하고 소비자 신뢰확보 추진
    - 품질인증 : ('99) 174천톤 → ('03) 250
    - 친환경 인증 : ('01) 88천톤 → ('03) 366
- 생산·유통과정의 일관된 안전 관리 시스템이 미흡하여 소비자들의 불안감 상존
  - 소비자의 안전의식은 앞서가고 있으나 생산자 의식은 미흡
  - 생산이력 등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고 안심할 수 있는 제도 미비
  - 농축식품 안전정보시스템 및 종합서비스 제공 체제 미비

#### 나. 추진 계획

- 농약 등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고 생산자 교육 강화
  - 사용 가능한 농약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면적 재배작물에 대한 농약등록·안전사용기준설정을 위한 시험 추진(20개 작물, 60개 농약)

- 농약 오·남용 방지를 위한 농가교육 대폭 확대
  - 생산자 리더층 대상으로 안전성 전문 교육 과정(80명)을 신설하고, 영농기전에 집합교육(550천명) 실시(2~4월)
  
- 새로운 농산물 안전관리제도인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의 조기 정착 기반 조성**
  - GAP 본격 시행을 위해 법령정비, 교육체계 구축, 품목별 재배관리지침 등을 마련
    - 인증기준, 허위표시 처벌 기준 등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04. 하반기)
    - 기존 66개 품목 관리지침 보완 및 15개 품목 신설('04. 하반기)
    - 교관 양성, 교육프로그램 마련 등 교육체계 구축('04.10월)
  
  - 과일·채소·특용작물을 재배하는 350개 농가를 대상으로 GAP 시범사업 추진(토양수질 검사 비용 전액 지원, 3~10월)
  
- **안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부적합품의 시장유입을 원천 차단**
  - 농산물 안전성조사를 확대('04 : 60천건)하고 안전성 정밀분석 시스템을 도단위에서 시·군단위까지 확충
    - 3개 산지거점 시·군(농관원 출장소)에 분석실 설치('04. 11월)
    - \* '09년까지 47개소로 확대 계획
  
  - 안전기준 위반자는 엄격히 제재
    - 위반자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D/B화하여 관리하고 각종 지원 사업의 기준을 개정하여 지원 금지 등 불이익 조치
    - 위반조사 실적 등을 공개(분기 1회)하여 생산자 들의 경각심 고취

□ **생산이력제 도입 및 시범사업 추진**

- GAP농산물·수출농산물·친환경농산물 등에 적용될 수 있는 실시기준 마련('04 하반기)
- 생산부터 최종소비 단계까지 관리할 수 있는 전산 Model 개발로 문제발생시 신속히 원인규명을 할 수 있도록 추진('04~'05)
- 배·파프리카 등 생산자조직이 활성화되어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실시('04~'05)

□ 소비자가 직접 **안전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신뢰 확보

- 소비자 중심의 농식품안전자문단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농·소·정협의회의 농산물 안전성 점검 지원 강화
- 농식품 안전정보를 포털서비스하기 위한 **중장기 정보화 계획 수립**
  - 농식품 안전정보 포털(www.foodsafety.go.kr) 구축을 위한 농식품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04.3월)

◇ 생산에서 최종소비까지(Farm to Table) 선진국 수준의 안전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국무조정실 식품안전기획단과 연계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 1.2 축산물 위생·안전성 관리 강화

### 가. 현황 및 문제점

- **축산물 위생·안전성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제도는 상당수준 정비**
  - **가축 사육단계** : 동물약품 및 사료 안전기준 설정·운용
  - **도축·가공단계**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도입 및 적용확대
    - 소·돼지·닭 도축장(162개소)에 대해 '03.7.1부터 HACCP적용 의무화
    - '04.1월 현재 107개소 적용중, 미적용업체는 영업정지등 행정처분
    - \* HACCP 적용이후 도체중의 일반세균수가  $10^{5-6}$  에서  $10^{2-3}$  수준으로 감소
    - 육가공장은 희망업체에 한해 적용('04.1월 현재 97개 업체 적용)
  - **유통단계** : 냉장유통 의무화 및 축산물 회수(Recall)제도 운영
    - \* 식육 판매단계(정육점 등)에서의 원산지 및 등급표시 의무화
- **이에 따라 위생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으나 선진국에 비해 미흡**
  - 사육단계에서 항생제등 과다사용, 휴약기간 미준수 등
  - 도축장·유통업체 종사자의 위생관념·제도 미흡, 둔갑판매 잔존

### 나. 추진 계획

- **사료 및 동물약품 관리강화 등 사육단계 안전성 제고**
  - **사료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사료에 혼합가능한 동물약품의 종류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53종→30종 내외)
    - 외국사례 등 실태조사(6월), “유해사료의범위와기준” 개정(하반기)
  -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제도 도입 준비('06 도입)**
    - '03년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료공장 HACCP 지침 제정(10월)

- 동물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농가교육 강화**
  - 상반기(4월) 및 하반기(10월)에 3개 권역별 순회 교육 실시
  - 홍보용 비디오를 제작·배포하여 각종 농가교육에 활용토록 지도(6월)
- 식육중잔류물질검사요령(농림부고시)을 개정하여 **잔류위반농가에 대한 관리 개선방안 마련**
  - 잔류위반농가 명단, 사육두수, 출하도축장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10월)

#### □ 도축·가공·유통업체의 HACCP적용 확대

- **도축장 HACCP 운용실태**를 집중 점검, 금년중 정착 추진
  - 상·하반기에 걸쳐 시·도간 일제 교차점검 실시
  - 미실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 실시
  - \* 이미 실시한 업체에 대하여도 운용실태 본격 점검(하반기)
- **가공장 HACCP 자율적용 확대**를 위한 홍보 등 지원 강화
  - 군납, 집단급식업소 등에 HACCP제품 우선 사용 협조 요청
  - HACCP 실시 가공장에 원료육 구매자금 등 우선 지원('04 : 376억원)
  - 도축장과 연접한 가공장 설치시 시설자금 우선 지원
- **보관·운반·판매업소에 HACCP도입**을 위한 지침 마련(10월)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개정(7월), HACCP 고시 개정(10월)

#### □ 유통중인 축산물의 위생검사는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실시

- 도축장 HACCP 의무적용에 따라 도축장 검사물량을 줄이고 **가공이후 단계에 대한 검사를 강화**
  - 비가열 식육가공품에 대한 위생검사강화 방안 수립(상반기), 비가열 식육가공품 원료에 대한 검사 실시(하반기)
- 수거검사는 집단급식소, 어린이 기호식품 등을 위주로 실시(5,880건)

- 소비자가 구입한 쇠고기의 생산내역과 품질·안전성을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쇠고기 생산이력제」 도입 추진
  - 개별 소에 대해 고유의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귀표를 장착한 후 출생·이동·사양관리내역 등을 신고토록 하고 이를 D/B화
    - 도축단계 이후는 식육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토록 하고, 소비자는 동 번호를 이용하여 생산이력 확인
  - 금년 상반기중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우수 브랜드 업체를 중심으로 시범사업 착수('04 하반기)
    - 전문가 중심으로 T/F를 구성하여 추진계획 수립(4월)후 공청회 등을 거쳐 추진방안 확정(6월)
      - 개체식별번호 시스템, 제공 정보내용 및 사후관리방안(DNA검사) 등 결정
    - 시범사업 시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
  - 관련법 제정('06년) 및 희망업체를 중심으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 음식점에서의 “식육원산지표시제” 도입(보건복지부와 협의)
  - 현재 정육점까지 의무화된 식육 원산지표시제를 음식점까지 확대
    - \* 그동안 보건복지부 등과 실무협의를 거쳐 대체적인 추진방향 합의
  - 둔갑판매 사례가 많은 쇠고기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추후 확대검토
    - 대상음식점의 범위 등 구체적 시행방안은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의(금년중 식품위생법 개정 추진)

## 1.3 축산물 브랜드 육성

### 가. 현황 및 문제점

- 축산물브랜드에 대한 생산자와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브랜드 수가 빠르게 증가
  - \* ('99) 194개 → ('02) 525 → ('03) 700
- 고품질의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우수브랜드는 아직 미흡
  - 우수 브랜드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하고 사양지침 등도 미비
    - 브랜드축산물이 품질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는 지적이 있는 등 소비자의 신뢰가 아직 높지 않은 실정

### 나. 추진계획

- 축산물브랜드 개념을 담은 경영지침서 발간·보급
  - 품질의 균일성, 위생·안전성, 규모화 등 브랜드 개념을 명확히 하고 브랜드 경영체가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작성(5월)
- 지역축협 등을 중심으로 규모화된 브랜드경영체 집중 육성
  - 일정규모 이상 농가를 조직화하고 생산·판매관련 브랜드 규약을 제정하는 등 의욕 있는 경영체에 정책자금 집중 지원('04 : 932억원)
    - 브랜드규약에는 품질·위생·안전성 및 출하계획 등 우수 브랜드로의 발전을 위한 기본 내용이 포함되도록 지도
    - 우수 경영체에 대해 무이자 인센티브 자금 지원('04 : 122억원)
  - 지자체에 지역대학, 연구기관, 관련 업체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농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사업개발, 기술경영자문 등 실시
    - 도별로 전문가 15~20명으로 구성된 「사업 지원단」 운영



□ 브랜드경영체에 대한 경영컨설팅 등 지도 강화

- 농협중앙회에 브랜드지원팀 신설(2월) 및 민간 전문 컨설팅 업체 육성
  - 브랜드컨설팅 업체 지정제도를 도입('04)하고 컨설팅 자금을 지원('05~)
- 브랜드 경영 및 자가진단프로그램 개발·보급(12월)

□ 브랜드경영체와 대형유통업체의 연계체계 구축 지원

- 브랜드 경영체와 유통업체간 정례협의회를 개최하여(년 2회) 상호 이해 증진 및 판매협약 지원
- 브랜드육 판매 우수 유통업체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04 : 79억원) 및 정부시상 추진

□ 우수 브랜드 인증제도 도입

- 민간중심의 '축산물브랜드 인증위원회'를 구성(3월)하여 우수 브랜드 인증지침 마련(6월)
  - 인증기준, 절차 및 사후관리 등 자체 운영규정 마련·운영
- 브랜드 인증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현장실사 후 선정(10월)
- 우수브랜드에 대해서는 인증마크를 개발(8월)하여 소비자 신뢰 제고
  - 2년마다 재평가하여 부실 브랜드는 인증 취소

□ 우수 브랜드에 대한 홍보지원 강화

- 홍보책자 발간 및 농림부, 농협 등 홈페이지에 관련 코너 마련
- 브랜드경진대회(10월) 및 심포지엄 개최(3월)로 소비자 인지도 제고

◇ **축산물 브랜드** 육성을 위생·안전성·친환경·품질 등 주요 축산과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축'으로 활용

## 1.4 가축방역 시스템 개선

### 가. 현황 및 문제점

- **국내외 인적·물적교류 증대로 '00년 이후 구제역·가금 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방역대책 적극 추진**
  - 평시에는 국경검역, 질병예찰, 예방접종 등 예방방역 추진
  - 질병 발생시에는 축종별 SOP에 따라 특별방역조치 시행
    - 의심축 정밀검사 결과 양성판정시 위험지역(3km) 및 경계지역(10km) 설정, 이동통제초소 설치, 가축 살처분, 가축사료 이동통제 등 실시

#### < 가축방역업무 기관별 역할기능 >

- ◇ 농림부 :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 축산물 위생정책 수립
  - \* 수의과학검역원(지원 5, 출장소 14개)에서 기술지원 및 국경검역 담당
- ◇ 시도(44개 가축위생시험소), 시·군 : 예방접종 등 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
- ◇ 방역지원본부(도본부 8, 출장소 38개) : 채혈, 예방접종 등 현장업무 지원

- **가축질병 발생 위험은 증가하고 있으나 농가와 지자체의 인식 부족, 방역기관의 인력부족 등으로 예방방역활동 차질 초래**
  - 축산농가의 축사소독·예방접종 등 방역 소홀, 지자체장의 관심 부족
  - 특히, **시·군은 방역·축산조직이 축소되고, 낮은 보수, 열악한 근무여건 등에 따른 수의사들의 근무기피로 방역인력 절대 부족**
    - 전체 234개 시·군중 축산전담과는 14개, 방역전담계는 48개 시·군만 설치, 여타 시·군은 축산계(평균 4명) 등에서 1~2명이 방역업무 수행
    - '04.2월 현재 118개 시·군(50%)만 수의직공무원 확보
  - ※ 금년부터 6년제 과정 수의사가 배출되어 수의사 확보에 더욱 어려움 예상

## 나. 개선 방안

### □ 예방원칙에 입각하여 평시 가축방역 활동을 강화

- 동남아 등 질병발생국 여행자 대상 국경검역 집중 실시
  - 탐지견 운영 확대('03 : 12→'04 : 19두) 등으로 불법 휴대축산물 검색 강화
  - ※ 휴대품 신고의무 위반자 범칙금 부과(5 ~ 500만원)
- 농가의 소독·예찰 철저를 위한 제도개선 및 교육 강화
  - 농장소독시설 기준 및 소독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농가교육 강화
  - 표준화된 예찰지침 마련, 지역별 담당관제 운영 등 상시 예찰체계 구축
-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 책임과 능동적인 역할 강화
  - 방역활동상황을 평가, 축산정책자금 등 지원 차등화 및 대외 공표
  - 제주도 등 질병청정지역 등급제 도입, 살처분 보상금 지방비 분담 추진
  - 농림부 및 지자체 등으로 합동기동방역반 상시 편성, 초동방역 체계 보강

### □ 가축방역 역량제고를 위한 행정조직 및 인력 확충

- 시·군 축산·방역조직 보강 및 수의직 공무원 처우개선
    - 가축사육두수 등 감안, 적정 수준으로 축산·방역 조직 및 인력 확대
    - \* 시·군당 최소한 수의직 1명은 기본적으로 근무토록 추진
    - 수의직공무원 보수체계의 단일호봉제 전환, 수당 현실화(70천원→의무직수준)
  - 수의사가 일정기간(3년) 방역기관에 근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대체해주는 「공익수의관제」 도입 추진
  - 수의과학검역원과 식물검역소를 통합, 「동식물방역청」으로 개편
- ⇒ 5월말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가축방역종합대책 수립·시행

## 다. 주요 질병별 대책

### 구 제 역

- 2000년 최초 발생이후 2002. 5월부터 경기도 안성 등지에서 재발생
  - '02.11.29일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 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
    - ※ 바이러스 분석결과 중국교포 등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 동북아시아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 발생국가와의 교류확대로 유입 가능성이 증대되고, 국경검역만으로 병원체의 유입을 완벽히 차단할 수 없는 실정

- 구제역 유입 위험이 높은 3~5월중 특별방역대책 추진
  - 육류 등 휴대품검색 및 적발시 처벌 강화 등 국경검역 강화
    - 구제역 위험지역 운항노선에 검역탐지견 집중 투입
  - 매주 수요일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을 내실화, 농장 및 관련 시설 소독 강화
    - 마을별로 조직된 공동방제단(9,725개)을 활용, 고령농가 등 소독 지원
  - 과거 발생지역, 밀집사육지역 등 방역 취약지역 관리와 예찰 강화
    - 방역 취약지역(38개 시·군)별 담당자 지정 관리 및 가상연습 실시
- 구제역 재발생시 살처분과 함께 긴급 예방접종 실시
  - 발생양상별로 예방접종 방법, 접종범위, 살처분 등 모델을 미리 설정, 신속 대처
    - 예방접종약 확보 : 460만두분(국내 완제품 30, 영국 항원뱅크 430)

## 광우병

- '96년 광우병이 사람에게 문제가 된다는 영국의 연구결과에 따라 관련제품 수입금지, 광우병검사 및 육골분 사용제한 등 방역 강화
- 우리나라는 광우병 발생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임
  - 소 생산물 대부분이 식용으로 소비, 소뼈 등의 소급여 가능성 적음
  - \* 양 스크래피나 광우병에 걸린 소의 육골분 등 섭취로 발생, 잠복기는 2~8년

### □ 사료 안전관리 강화 등 광우병 예방대책을 강도높게 추진

- 동물성 사료원료의 반추가축사료 혼합여부 검사 강화
  - 사료생산라인 구분, 동물성 사료 유통추적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 발생가능성이 높은 위험축군을 집중검사, 연차적으로 검사물량 확대('04 : 2,200건→'05 : 3,000건→'06 : 5,000건)
  - 신경증상 소 등 위험축군은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지육내장 등 계류

### □ 유사시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전대책 수립('04. 5)

- 발생시 도축되는 소 전두수를 검사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 확보
  - 신속진단키트 구입예산 확보(3만두분) 및 충분한 검사시설 확보
  - 시·도의 광우병 검사인력 증원, 공익수의관제도 도입 추진
  - \* 일본은 전두수, 프랑스·독일은 24개월령 이상, EU국가들은 30개월 이상 검사 실시
- 발생시 식용금지에 대비하기 위한 특정위험물질(SRM) 처리시설 설치
  - SRM 제거를 위한 도축장 시설 개·보수('07년까지 30개소)
- 쇠고기 수매 등 소 사육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방안 사전 강구

## 가금인플루엔자

- 작년 12.10 충북 음성에서 최초 신고 후 '04.3.3 현재 9개 시·군 (7개 시·도) 18개 농가에서 발생, 2.5일 이후 발생이 없음
  - \* 선진국 사례 : 미국 2년('83), 네덜란드 6월('03), 이태리 1년('99), 멕시코 근절못함('95)
- 374개 농가 닭·오리 등 495만수 살처분(보상금 등 1,500억원 소요)
- 베트남·태국 등 아시아 10개국과 미국에서 가금인플루엔자가 동시에 발생, 수입금지 조치(베트남, 태국은 감염환자 발생)
  - \* WHO에서 우리나라 방역대책이 모범적이라고 발표('04.1.29)
  
- 추가 발생 등 이상이 없을 경우 마지막 발생('04.2.5) 30일이 지난 3.10일경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4월중순 경 종식선언
  - 종식선언은 전문가 회의(3.12)를 거쳐 과거 발생농장의 병원체 잔존여부 확인을 위한 입식시험(30일간) 종료 후 추진
- 재발방지를 위해 예찰·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
  - 마지막 발생지역인 천안 반경 30~40km의 “특별관리지역”에 대해 매일 2회 예찰·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 추가 발생 억제
  - 농가자율 예찰·소독 강화 및 의심시 신고를 위해 “예찰·소독 지침” 핸드북 제작 배포
    - \* 정부 및 관련 단체·협회는 소독차량으로 공공장소와 도로 소독 및 지도 강화
  - 도축장(육계)·농장(산란계)에 대한 혈청검사 강화로 사전 검색
- 동남아 발생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국경검역에 활용하고, FAO·WHO·OIE가 공동 방역을 모색하고 있는 점을 감안
  - 국제규정 마련 등을 위한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공조체제 유지
- 방역대책 및 수급안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대언론 협조 강화

## 1.5 친환경 농업 육성

### 가. 현황 및 문제점

- '97년 친환경농업법을 제정하고 '04년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친환경농업기반 마련
- 친환경 농산물은 전체농산물의 2% 수준으로 아직 시작단계
  - 농가수는 23천호,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은 366천톤이고, 그중 채소류가 48%로 가장 많음
    - \* 일반 농산물과 비교시 쌀 30%, 배추·상추·포도는 2배 정도 가격이 높음
- 미국(유기농 950천ha)과 일본(유기농 1천ha) 등 선진국에서도 친환경 농업이 확대되고 있음
  - 최근 중국·러시아로부터 콩·밀 등 유기농산물 904톤이 수입되는 등 친환경농업의 기반을 조속히 마련치 못할 경우 국내 시장을 외국에 빼앗길 우려

### 나. 추진계획

- 친환경농업의 조기 확산을 위해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는 농업인의 연착륙(soft landing) 지원**
  - 신규 친환경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술 및 경영 컨설팅
    - 주관기관 : 한국농업전문학교, 환경농업단체, 농협 등
    - \* 연간 5천호 수준 친환경농업 신규 참여 유도
  - 신규 친환경농업인의 초기단계 소득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친환경직불제를 재편**
    - 현행 인증농가 중심의 직접지불 지원을 **저투입농가 대상으로 확대**
    - \* 상수원보호지역(66천ha) 등에 우선 추진하여 농업의 다원적 기능 제고
    - \* 금년 중 재편방안을 마련하여 2005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

□ 친환경농업의 지원 체계개선

- 유통과정에서의 품질관리강화를 위하여 **유통업자에 대한 인증추진**

\* 미국, 유럽 등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

- 친환경 지구조성사업의 규모에 신축성을 두어 현장적용에 편리토록 추진

- ('03년) 대지구 50ha(10억원) 및 소지구 10ha(2.5억원)로 구분  
→ ('04) 10ha이상(10억원)으로 통합

□ 친환경농산물 전용 Cyber Mall구축 등 유통활성화 지원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수매자금을 확대지원**하고('04년 150억), 판매장을 대폭 확대 설치(125개소 →170)

- 생산자단체의 자조금 조성을 지원하여 생산자단체의 자발적인 판로확대, 수급조절 등을 유도

- 친환경농산물 전용 Cyber Mall 구축 추진

- 농림수산 정보센터의 a-peace.com과 연계 구축

□ 토양개량, 농업환경계측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확보 등으로 친환경농업의 **증장기적 기반 구축**

- 토양개량제(67만톤), 유기질비료(60만톤) 공급 확대로 토양개량 지속 추진

- 전국 농경지를 환경적 중요성에 따라 등급구분, 비료·농약의 환경위험 정도 등 농업환경 관련사항의 D/B 구축 및 지도 작성

- 토양평가관리기사(12월 시험실시), 유기농업기사('05년 실시) 등 제도 시행으로 민간 전문인력 확보

□ **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에서 금년부터 추진하는 **4대강 비점 오염원 종합대책**을 환경부와 협조하여 친환경농업과 연계하여 적극 추진



## 5. 선진국형 농산물 유통 혁신

### 5.1 마케팅지향형 산지 유통혁신

#### 가. 현황 및 문제점

- 초대형 할인매장, 전자상거래 등 신유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지에서부터 마케팅의 규모화, 푸드체인의 전문화가 절실
- 농가 생산단계의 영세성을 마케팅의 규모화·전문화를 통하여 보완하고 농업구조조정 촉진
- 그 동안 역량 있는 산지유통전문조직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산지유통시설을 확충하여 산지마케팅 전문화 토대를 마련해 옴
- '03년말 산지유통전문조직 290개, 산지유통센터 208개소
  - \* 조직당 농산물매출액 ('01) 109억원 → ('02) 121억원
- 대부분 지역조합단위 소규모 판매사업 수준에 머무르고 사업 경영면에서 비즈니스 마케팅의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
- 상품의 물량·품질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마케팅 추진과 소비자가 다시 찾는 브랜드 육성에 한계
- 산지유통의 정보화 기반이 취약하고 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품질관리 기술 보급체계 미흡

## 나. 추진계획

- 기존 산지마케팅조직의 마케팅사업을 규모화하고 기업적 요소를 강화하여 차세대 공동마케팅조직으로의 혁신을 지원
- 독립채산형 전문CEO 책임경영체제를 정착시키고 출하협약·공동계산 등을 통하여 생산-마케팅 계열화
  - \* 출하협약 핵심내용 : 품종재배법 통일, 공동선별계산, 공동브랜드, 의무출하 등
- 마케팅 사업을 郡단위로 규모화하고 공동브랜드·품질·안전성 관리를 체계화하며 전처리·가공으로 사업영역을 확대

### < 한국참다래유통사업단 사례 >

- ◇ 종전 흡고구마와 차별화된 세척 소포장 고구마 상품을 1.9배 높은 가격으로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 연중 공급, '03년 50억원 매출
- ◇ 저장, 세척, 선택보전 신기술 자체 개발, 전라·충청권역 농가와 계약재배
- ◇ 전문경영인 책임경영 정착, ERP(전사적자원관리)체제도입 등 지속적 경영혁신

- 혁신요소를 갖춘 공동마케팅조직을 별도 선정, 집중지원(3월)
  - 거점 산지조직 광역화, 조합간 사업연합, 유통기업과의 공동 투자법인 등 다양한 모델 개발
  - '04년 전국 20개소 시범 선정 추진
- 기존 산지유통조직은 성과평가와 인센티브·퇴출 방식으로 마케팅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유도(연중)
  - 평가 부진 APC 운영 및 시설자금 지원 전면 중단, 우수조직 인센티브 강화

- 공동사업법인 법제화, 출자제한 해제 등 **제도개선 추진**(농협법 개정)
  - 조합간 연합사업에 법인격을 부여
  - 조합의 마케팅 자회사 설립출자와 외부자본의 조합 우선 출자를 용이하게 하여 마케팅조직의 설립 기반 조성
  
- **공동마케팅조직의 조기정착을 위한 집중 지원 추진**
  - 무이자 계약재배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대상 품목제한 폐지(4월)
  - 공동마케팅조직 회원농가에 대한 **농업종합자금 우대 기준** 마련(11월)
  - 공동마케팅 조직에 대한 시설·운영 지원 확대
    - 대규모 APC(시설규모 30억원 이상)를 우선 지원
    - 고품질 상품화를 위한 공동 선별비 지원 확대(소요비용의 40% → 50%)
  - 지자체 주도의 산지조직간 사업협력 조정, 브랜드 개발 및 지역대학과의 기술·경영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촉진
  
- 산지유통혁신을 위한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
  - 효율적 경영과 생산·출하거래 및 고객관리능력제고를 위한 정보시스템 등 산지마케팅조직 정보화 시범 추진(11월)
  - 공동마케팅조직과 종합유통센터간 전자수발주 체제 구축(12월)
  
- 마케팅 전문화를 주도할 **유통인재 활용을 촉진하고 수확후 관리기술 지원 체계화**
  - 공동마케팅조직이 전문경영 CEO 영입 또는 농산물품질 관리자 고용시 인센티브 자금 지원(5월)
  - 유통인재 양성을 위한 「**농산물 유통전문교육과정**」 신설·운영(3월)
    - 유통단계·분야별로 특화된 3~9개월 전문교육과정 개설
    - \* 전문과정 : 저온저장, 브랜드 개발, 안전성 관리, 물류개선, 수출마케팅 등
  - 품목별 수확후 관리기술 매뉴얼 개발 및 사이버컨설팅 실시(8월)

## 5.2 소비지 물류 혁신 및 도매시장 운영 효율화

### 가. 현황 및 문제점

- 파렛트, 지게차, 플라스틱 상자 등 물류기기 및 포장자재 지원 등으로 **포장화율은** 진전되었으나 **하역기계화율은** 아직 저조
  - 농산물 파렛트 출하율이 종합유통센터 등 대형할인점은 52%로 기반이 구축되었으나 도매시장은 아직 매우 부진한 상태
    - \* 유통주체별 하역기계화율('02) : 대형유통점 52%, 도매시장 1% 미만
- 도매시장·종합유통센터 등 **소비지 유통시설은** 확충되었으나 시장여건 변화에 대응한 **운영의 효율성 제고**는 아직 미흡
  -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설('04) : 4개소 건설, 1개소 완공예정(금산)
- 거래제도의 탄력적 운영, 노후시설 보완, 전자상거래 촉진 필요

### 나. 추진계획

- 농산물 파렛트 출하를 적극 촉진, 물류비용 절감 추진
  - 처리물량이 가장 많은 가락시장의 파렛트 출하 적극 추진
    - 과일류의 파렛트 출하율은 대형할인점 수준으로 높이고, 대량 출하 품목인 무·배추 등은 산지유통인 연합회의 파렛트 출하를 적극 유도(연중)
    - 도매시장의 파렛트 출하 촉진 인센티브 지원제도 도입(3월)
      - \* 파렛트 1매당 10천원(정부 5 : 공사 5) 지원 : ('03) 42 → ('04 P) 400백만원
  - '04. 2월 개장한 **강서도매시장**은 초기부터 파렛트 출하를 기본으로 하여 파렛트 출하 시범시장으로 육성
    - 지게차·전동차·핸드카·콘베어 등 하역기계화장비 지원(2월)

- 농산물 파렛트 출하 촉진을 위한 **물류표준화 자금 지원 확대**
  - 물류표준화사업 보조지원율 인상 및 기기 공동이용 지원 확대
    - 물류기기 구입자금 보조율 인상 : ('03) 40 → ('04) 50%
    -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확대 : ('03) 35 → ('04) 64억원(83% 증)
  - 농산물규격출하 지원은 포장화에서 공동선별 지원으로 전환
    - 규격포장 출하 지원 : ('02까지) 2,284 → ('03) 546 → ('04) 516 억원
    - 공동선별 지원 : ('02까지) 13 → ('03) 34 → ('04) 70 억원
  
- **도매시장의 효율적 운영과 하역기계화 여건 조성을 위하여 거래제도 등을 개선**
  - 고품질·공동선별·친환경·특산품이 우대 받도록 거래체계 개선
  - 전문가 의견수렴 및 시장관계자 등에 대한 공청회 등을 거쳐 제도 개선안 마련(7월)
  
- **노후시설 정비, 필요시설 확충 등 「시설보완계획」 추진**
  - 가락시장은 시설보완, 하역기계화, 영업장 재배치 등 종합정비를 위한 리모델링 연구용역 실시 및 시설보완계획 수립(3월)
  - 지방도매시장은 입주여건 등을 감안, 선별·포장 등 물류기능 등을 추가, 종합적 유통시설로 복합화 추진(7월)
  
- **종합유통센터간 경영통합 및 민간 전자상거래 촉진**
  - 종합유통센터간 경영통합을 위해 산지-소비자간 총 공급관리 시스템을 구축
    - 공동구매·물류통합 : 수도권 → 전국단위로 확대(12월)
  - 농산물 전자상거래 사이트 인증제도 및 농산물 전자상거래 표준 소비자 보호협약 개발(12월)

## 5.3 농식품 수출 확대

### 가. 현황 및 문제점

- 지난해 농산물 수출은 '02대비 13.4% 증가한 18.6억불을 달성하였고 **금년 목표는 20억불로 설정**
  - \* 수출동향('02→'03) : 김치 79백만불 → 93, 채소 89 → 101, 인삼 55 → 67 등
- 그 동안 지속적인 수출확대 노력으로 일본·중화권 등에 한국 농식품에 대한 수요층이 형성됨(대형소매점에서 한국산 판매코너 운영 등)
- 안정적인 농산물 수출 확대의 전제 조건인 생산-물류-해외 마케팅 시스템구축이 부족
  - 농산물 수출업체가 영세하고, 국제적 수준의 안전성·규격 출하 등 품질관리가 미흡하여 수출확대에 걸림돌로 작용

### 나. 추진계획

- FTA 등 개방 확대에 대비한 **중장기 수출전략 마련(6월까지)**
  - 수출입조합, 식품관련협회, 농유공 등과 협의체를 구축하여 추진
    - \* 주요내용 : 품목별 수출전망, 수출확대대책 및 수출핵심품목 우선순위 등
- 수출용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 및 효율적 물류기반 구축**
  - 현재 운영중인 전문생산단지(108개)를 원점에서 평가(3~6월)하여 우수단지와 부실단지를 선별, 정예화
    - \* 우수단지에는 시설 추가지원, 안전성 소요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 수출물류센터를 연내 완공개장(광양 3월, 마산 7월)하여 시범운영
    - \* 시범운영후, 중장기적으로 수출농산물의 집하검역·통관 등이 One-Stop으로 이루어지는 수출물류의 중심지로 육성

- 규모화 된 수출(500만불이상)이 가능하고 전문생산단지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용 공동대표브랜드제를 시행
  - \* 수출품위를 4단계로 구분하고 1·2등 품위에 대하여 대표브랜드 부착
- 금년에는 신선농산물 위주로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대상품목 확대
- 해외마케팅지원은 기존 바이어 중심(박람회 참가 등)의 방식에서 해외소비자에게 직접 파고드는 방식으로 전환
  - 다국적 유통업체매장을 활용한 판촉활동 등 Direct Marketing 추진
    - 중국 최대의 경제도시이고, 한국산 식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해에 해외농업무역관 신규 설치(하반기)
      - \* 농수산물유통공사 본사에서 주도하는 마케팅지원기능을 해외농업 무역관(5개국 7개소)으로 이관, 국가별로 차별화된 마케팅 실현
  - 해외소비자를 대상으로 한국 식문화 홍보행사(4개국 6개지역) 등 한국음식 및 우리 식문화 마케팅 추진
    - \* 식품박람회 등 행사와 연계하여 한국요리교실(6개국 105회)을 운영하고, 해외 유명 한식 레스토랑의 핵심요리를 발굴하여 홍보
  - 새로운 수출전략품목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생산에서 해외 마케팅까지 일괄 지원하는 개발수출 지원사업 시범 추진
    - \* '04년에는 10개 품목을 선정·지원(가공식품 포함)
- 정부의 수출지원은 「선택과 집중」 원칙에 의거, 농산물 전문 수출업체 중심으로 추진하여 업체의 규모화·대형화를 유도
  - 공동대표브랜드사업, Direct Marketing 추진시에 수출업체의 수출실적, 마케팅능력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선정
  - 수출관련 자금지원은 평가를 통하여 우량 농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자금지원예산 : 보조 289억원, 융자 3,689)

## 6.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장치 강화

### 6.1 직접지불제 확충

#### 가. 현황 및 문제점

- DDA, FTA등 개방화 진전 및 가격지지정책의 제약으로 농가 소득 하락문제에 적극 대응하여 **농가소득안전망 구축 필요**
  -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포괄적 보상시스템으로 직불제를 확충하여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수행
- '04년에는 **경영이양직불제를 분할지급방식으로 확대** 개편하고 **친환경축산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을 도입
  - 직불제 예산은 7,967억원으로 '03년(5,926억원)에 비해 34% 증가하는 등 빠르게 증가
    - \* 직불제 예산규모 : ('01) 2,505억원 → ('02) 4,274 → ('03) 5,926 → ('04) 7,967
  - 다만, '04년 직불예산은 농림부 예산의 8.4% 수준으로 미국 36%('01), EU 70%('01), 일본 13%('01)에 비해 낮은 수준
- 한·칠레 FTA 비준 동의안 처리과정에서 **직불제를 실질적인 농가소득 보전장치로 확대시켜 나갈 것을 약속**
  - 경영이양직불제의 지급 상한 연령을 69세에서 72세로 확대
    - 단, 70~72세 농업인에 대해서는 '0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하되 일시불로 지급
  - 논농업직불제, 친환경직불제 등 기존 직불제도 단계적으로 확대



## 나. 추진 계획

- 연차별 직불제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금년도 신규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05년 이후 직불제 도입을 위한 사전준비에 철저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영농조건이 불리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협약 체결 및 마을 공동기금 조성 등을 요건으로 시행
    - 마을주민 스스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직불금의 일부를 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이를 실천하는 등 상향식 발전 유도
  - **친환경축산 직불제**는 축산업 등록제와 연계하여 사육밀도 감축, 분뇨자원화 등을 조건으로 시범사업 추진
  - **경관보전 직불제, 소득안정계정 등 새로운 직불제의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등 사전준비에 만전
    - \* 향후 10년간 직불예산은 24조원 수준이 반영되었으며, '07년부터 농업예산 중 20% 수준으로 확대('13년 : 25%)
- 직불제 확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 제고**, 농업인의 국토지킴이로서의 역할 부각 및 홍보에 노력
  - TV-CF등을 활용해 공익적 기능에 대한 홍보와 병행하여 도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도농교류 협력사업 과제 개발
- 대폭 증액되는 직불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부족한 일선 인력으로는 각종 직불제 모니터링에 따른 행정수요를 담당하기 어려워 별도의 직불제 모니터링 전담기구 설치 방안 강구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품질관리원 등을 대상으로 검토

## 6.2 농외소득 기반 확대

### 가. 현황 및 문제점

- 자연·환경·어메니티 등에 대한 관심 고조와 함께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인식 확산
  - 주5일 근무제 등으로 도시민의 여가수요가 증대되고 여행 패턴도 가족단위 체험관광을 선호
  - 농촌관광마을의 성공모델이 나타나면서 농업인 및 지자체의 농촌관광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 전남 구례군 지리산 바이오랜드 >

- ◇ '01년부터 민박, 농장, 향토음식점을 네트워크화하여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농촌관광사업을 전개
  - '03년 8천여명 방문, 관광 및 특산물 판매로 4억1천만원 매출 달성

-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한 수용기반이 전반적으로 취약
  - 숙박시설 및 다양한 형태의 체험·휴게공간 등이 부족하고 도시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마케팅·서비스 미흡
  - 지역 주민을 선도할 젊은 지도 인력이 부족
- 최근 들어 분양율이 높아지고 있는 농공단지를 농촌지역 소득 및 새로운 일자리창출의 기회로 활용
  - '02년까지 조성된 농공단지의 분양율은 97%수준으로 일반 지방산업단지의 분양율 94%를 웃도는 수준
  - 지방의 수요증가를 고려하여 농공단지 확대조성 필요
    - \* 농공단지 신규지정 추이 : ('99) 1개소→('02) 4→('03) 11

## 나. 추진계획

### □ 도시민의 수요에 부응한 **농촌관광 여건 조성**

- 농촌관광마을을 체계적으로 조성하여 농촌관광 거점으로 활용  
(’03까지 44개 마을, ’04년 32개마을 조성)
  - 친환경농업과 관광을 접목하여 농산물판로 확보 및 도시민과의 교류 활성화

#### < 충남 홍성군 문당리 >

- ◇ 열정을 가진 지도자와 마을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여 ’93년부터 친환경 오리농법을 시작, 면 농지의 1/3(135만평)로 확대
  - 도시어린이에게 친환경 농업교육 및 체험 등 ’03년 11천여명 유치

- 농촌관광마을간 선의의 경쟁 유도 및 성공모델 창출·홍보를 위한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를 정례적으로 개최(5~11월)
- 마을지도자 등 농촌관광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3~12월)
  - 입문, 지도자, 전문가 등으로 역할에 맞는 현장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운영
  - 한국농업전문학교, 농과계 대학 등에 농촌관광교육과정 개설

### □ **농공단지 확대 조성**으로 농촌형 일자리 창출

- 도로망 확충으로 입지여건이 좋고 사전 입주업체가 75%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 추진(’04 : 30개소 추진, 8개소 완공)
- **지역산업과 연계효과**를 위해 지역특산물 가공·유통업체 적극 유치
  - 지역특화산업단지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수혜지역 확대(3~6월, 산자부협의)
    - \* 지역특화단지 지정기준(고시) : 단지면적의 75% 이상 → 50%로 완화
- 입주업체 시설운영 용자금 상향지원(현행 : 10억원 → 개선 : 25억원)으로 경영안정 도모(3~6월, 산자부협의)

## 6.3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개선

### 가.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2년간** 자연재해를 입은 17천여 농가들에게 **847억원의 재해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
  - 보험금지급 : ('02) 6,953농가 348억원, ('03) 10,149농가 499억원
  - \* 보험 가입농가 : ('01) 8,204호 → ('02) 18,620 → ('03) 16,522
  
- 반면, **보험사업자는 큰 손실**을 입고 재보험에 불참하는 등 보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취약**
  - '02년에는 삼성화재 등 11개 민간보험사들이 240억원의 손실을 입고 '03년 재보험에는 불참
  - '03년에는 보험사업자인 농협이 327억원의 손실을 입음
  - \* '04예산에 보험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농가부담 경감을 위하여 284억원의 특별손실지원 예산 편성
  
- 농가들의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정부지원율을 확대하여 왔으나, 상당수 농가들은 아직도 소득수준에 비해 **보험료가 높다**고 인식
  - 정부지원율 확대 : ('01)39% → ('03)63.5 → ('04)70(정부66, 농협4)
  - ※ 정부예산 : ('01) 23억원 → ('02) 86 → ('03) 162 → ('04) 448
  
- 보험 대상품목 및 재해범위 확대 등을 위한 **보험기반 미흡**
  - 과수위주의 보험품목 운영과 한정된 재해피해 범위로 인해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확실히 담보하기에는 아직 미흡
  - 피해통계 축적 및 손해평가방법 정립 등 보험기반 미 구축

## 나. 추진계획

- 거대 자연재해에 대비, **국가재보험제 도입 추진(상반기)**
  - 재보험 형태는 농경연과 보험개발원이 합동으로 연구한 결과를 반영,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도입
  - 재보험 재원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금 또는 계정 도입
    - 기금 : 보험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이윤 발생시 적립 가능
    - 계정 : 일정기간동안 농협재원 활용을 전제로 운영
  - 재보험 형태 및 재보험재원 확보를 위한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
    - 법 개정안 마련('04.3), 국회 제출, 금년도 시행을 목표로 추진
    - \* 농업인들의 부담경감을 위해 운영비 100% 지원근거 마련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을 점진적 확대**
  - 벼, 시설작물 등 **보험도입가능 품목 추가 선정 검토(상반기)**
    - 학계, 연구기관, 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보험상품개발팀 구성·추진
    - '05년 벼 또는 시설채소의 시범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
    - \* 벼의 경우 쌀소득보전직불제와 연계하여 소득보험으로 가는 방안도 검토
  - 국정감사에서 조기 도입을 요구한 밤, 뽕은감 등 산림품목은 산림청의 용역결과에 따라 **보험도입가능 여부 결정**
- **'04년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계속)**
  - 사과배('03년)에 이어 단감 등 4개 품목도 **전국으로 확대시행**
  - 철저한 보험판매 준비 및 가입자 모집('04.3.1~31)
    - 보험요율 산정, 보험약관 개정, 손해평가인 등 보험관계자 교육
    - 보험약관 리후렛 제작배포, 전문지 게재, 홈페이지 홍보 등

## 6.4 농가부채 부담 경감

### 가. 현 황

- DDA협상, FTA진전 등 개방확대로 농가소득의 감소·정체가 예상되어 소득으로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부채상환부담을 대폭 완화**
  - 정책자금 등 기존부채의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의 경영회생 지원**으로 수시로 부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나. 추진 계획

-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지원여부를 엄격히 심사** 후 상환기간 연장 등 부채경감 조치 시행
  - 농업인들이 부채대책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 강화(3월중)
    - 전문지 광고, 리후렛·문답자료집·포스터 제작 및 배포
  - **부채대책 신청접수(3.5~5.31)**
  - 도덕적 해이 예방을 위해 부채심사위원회의 심사후 지원(3월~연중)
    - 금융자산 과다보유, 안정적인 직업 보유자 등은 지원 제외
- 경영회생 지원제도는 농가의 회생가능 여부를 심사·평가하여 자금을 선별 지원하는 **워크아웃시스템**으로 발전·유도
  - 회생불능농가의 기존 시설 활용도 제고와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시설 인수자에 대해서도 **인수자금 지원**
  - 지원농가에 대해서는 자구이행계획의 이행상태 점검 등을 통해 **사후관리 강화**

## 7. 농촌 복지 및 지역개발 본격 추진

### 7.1 농촌형 복지대책 확충

#### 가. 현황 및 문제점

- 복지 등 농촌정책의 부처별 분산 추진 및 농촌에 대한 관심 부족 등으로 도·농간 복지여건 및 생활환경 격차가 확대
- 농어촌 복지여건 미흡은 영세 고령농의 탈농을 저해함으로써 농업구조개선의 저해 요인으로도 작용
  - \* 복식수업학교의 97% 농촌 소재, 의료기관·인력의 90% 도시 소재
- 농어촌의 노인, 여성, 영유아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가 크게 부족하여 농업·농촌의 특성이 반영된 대책이 필요

#### 나. 추진계획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특별법**」 시행으로 범정부차원의 효율적인 농촌복지 지원 시스템 본격 가동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촌 복지 및 지역개발 정책에 대한 **범정부적 추진체계** 구축('04.6월)
  -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 및 농림부장관 소속의 '실무위원회'를 통하여 농촌 복지정책에 농림부가 주도적으로 참여
- 농어촌 복지, 교육여건 및 기초생활여건 등 **복지실태 조사**('04.8월)
- 복지, 교육, 지역개발 정책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04.12월)하고 **이행상황을 점검**

## □ 농촌형 사회안전망 확충

### ○ 농업인 건강 및 연금보험료 지원을 대폭 확대

- 건강보험료 경감율을 30%로 확대하여 농업인의 의료보장 강화
  - \* 월평균 경감보험료 : ('03년) 22% 경감, 8,550원 → ('04년) 30%, 12,750
- 연금보험료 지원기준을 대폭 상향하여 은퇴농의 노후생활안정 도모
  - \* 1인당 년 지원액 : ('03년) 85,800원 → ('04) 최고 135,500

### ○ 농작업 상해공제를 현실화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 여건 조성

- 사망 또는 장해시 지급하는 공제금의 단계적 인상
  - \* 공제금 : ('03) 사망 300만원 → ('04) 사망 1,000만원 및 특약사항 보강

### ○ 기초생활보장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여 농업인의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확대

- 농가구의 소득평가액 산정시 농지 등 농업관련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 기준 완화 등 농가구의 특성을 반영

## □ 농촌교육 지원 및 여성농업인 복지 증진

### ○ 농촌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확대

- 고교생 학자금 보조(1.5ha미만 대상) 및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 확대
- 영유아(0~5세) 양육비 신규 지원 : 1.5ha미만(49천명) 대상

### ○ 여성농업인의 종합복지 서비스를 위한 「여성농업인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산전·산후 영농지원과 건강보호를 위한 「농가 도우미」 지원수준을 인상



## 7.2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활성화

### 가. 현황 및 문제점

-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 및 홍보 추진
  -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개정으로 농촌주택 추가 구입시 양도소득세 면제 및 지방세 중과 배제
  -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범위 확대
  - 농촌투자유치센터를 운영, 투자정보제공·상담·소개 등 농촌 투자 활성화를 위한 홍보 추진
- 도시와 농촌간에 자매결연을 통해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증가추세
  - 농촌마을과 지자체, 기업체, 도시 아파트단지 등간에 상호 방문, 농산물 직판 등 도농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음
- 도시민이 농촌에 관심을 갖고 도·농교류에 앞장서도록 하는 유인책이 미흡
  - 도·농교류 활성화의 사회적 붐 조성을 위한 홍보강화 필요

### 나. 추진계획

- 운영중인 농촌투자유치센터를 「도·농교류센터」로 확대·개편하여 도·농교류 사업을 전담하는 등 시스템 정비(2~6월)
- 관광전문가, 교수, 기업인 등이 참여하는 도·농교류 자문기구 운영

- 도·농교류센터 내에 ‘농촌내집갓기운동’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사회지도층 인사부터 내집갓기 실천 유도(4~12월)
  - 국정홍보처 등과 협조하여 「농촌내집갓기운동」을 적극 홍보
-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조하여 초중생 농촌체험학습을 적극 장려
  - 주5일 수업제 등과 연계하여 농촌체험학습이 제도화되도록 추진
  - 장학사, 교사 등을 대상으로 농촌관광마을 초청행사 정례 개최(7~8월)
-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붐 조성
  - 「농업인이 뽑은 올해의 도시민상」 제정·시행
    - 농촌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도시민을 11.11일 농업인의 날에 포상함으로써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관심 및 농업인의 자긍심 제고
  - 농촌관광을 홍보하고 지역내 관광자원의 네트워크화를 위한 「농촌관광박람회」 개최(4~7월)
  - 1社1村운동을 통해 도·농간 자매결연 활성화
    - '03.11월 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농민단체간에 1社1村운동 추진협의
    - '04.2월 농협과 경제5단체 실무진이 만나 대책방안 강구
      - 농협은 농촌마을 대상, 경제5단체는 기업대상 수요조사중
  - ※ 기업체의 일방적 지원이 아닌 도·농간 ‘相生원칙’하에 1社1村운동이 추진되도록 농림부·농협·도농교류센터가 협력하여 지원

#### < 강원 화천군 신대리 >

- ◇ '02년 삼성전기(주) 가족과 만남을 계기로 부서 워크샵('03.3), 삼성-화천 만남의 날('03.11), 생명사랑의 운동('03.12) 공동전개 등 모범적인 자매결연 모델 창출

## 7.3 쾌적한 친환경적 농촌개발

### 가. 현황 및 문제점

- '90년부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택과 주민편의·복지시설 등 기초생활시설 정비·확충 추진
  - 농촌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주택 정비 등 정주권개발
    - \* 전국 1,214개 면중 753개 면 및 광역시 1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행
  - 면의 거점마을에 주거단지정비 등 문화마을조성
    - \* '03까지 155개소 완료, 35개소 계속, '04년 신규착수 9개소
- 다양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에도 농촌다움과 쾌적성은 오히려 저하되고, 지속적인 이농 등으로 농촌인구 과소화는 지속될 전망
  - \* 인구 2천명 미만의 소규모 면 증가추이 : ('90) 30 → ('00) 170 → ('10예상) 470개
- 정보화의 진전, 가치관 및 생활패턴의 다양화로 농촌공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변화
  - 농촌이 가지고 있는 농촌다움을 즐기려는 수요 증가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농촌다움 증진 필요
- 그 동안의 생산기반정비 사업은 적은 비용으로 투자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능위주로 시행되어 환경에 대한 고려 미흡
  - ⇒ 농촌다움을 보전하고, 전통·문화·휴양 등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농촌지역개발 추진 필요

## 나. 추진계획

- 농촌다움의 유지·보전과 쾌적함 증진 등 다원적 기능 확충을 위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신규 착수
  - 생활권 등을 고려한 3~5개 마을을 권역단위로 묶어 지역 실정에 맞게 특성화 개발
  - '04년 시범사업으로 16개 권역 착수 및 20개 권역 계획수립
    - 대상지는 공모를 거쳐 심사위원회의 심사 후 선정 : 3월
    - 주민의견조사 및 계획수립 : 3~12월
    - 16개 지구 착수준비 : 7~8월
  
- 농촌주민은 물론 도시민의 농촌정주를 유도하고 국민의 노후·여가활동을 위한 『**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
  - 수요자 취향에 맞게 주거공간을 개발하는 “**맞춤형 전원 주거단지**” 조성 지원('04시범착수 2지구)
  - 영농체험 희망자, 은퇴자 등을 농촌으로 유도하기 위한 “**체재형 주말농원**”, “**은퇴농장**”의 도입 및 확대방안 강구
    - 사업시행 지침 시달 : 1월
    - '05년 대상지 예산요구 : 5월
    - '05년 지원계획 수립 : 11월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와 병행하여 수변공원·소공원·다목적광장 조성, 생울타리 등 **농촌경관정비 추진**
  - 도로위주의 사업을 지양하고 지역특색을 살린 다양한 경관 정비사업 추진방안 강구('05년부터 시행)
  
- 현재 공사중인 농업용수개발, 배수개선, 간척 등 사업지구는 사업계획을 재검토하여 **친환경 정비기법**을 적극 반영
  - 저수지,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물 설치시 친수공간 조성 등 친환경공법을 적용토록 사업계획을 보완

## 8. 농정제도 개혁 : 농지, 협동조합, 지방농정

### 8.1 농지제도 개혁

#### 가. 현황과 문제점

◇ '03년말 농지면적은 1,846천ha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2.8천ha 수준 감소

○ 진흥지역안 농지는 1,062천ha(58%), 진흥지역밖 농지는 784천ha(42%)

□ 그동안 농지제도는 농업발전, 쌀자급달성, 국토환경보전 등을 달성하기 위해 **규제위주로 운용**

○ 농지의 소유와 이용은 헌법의 「경자유전」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자경’**으로 제한

○ 농업진흥지역 제도와 농지전용 제한을 통하여 **우량농지를 적극적으로 보전**

□ WTO/DDA, 쌀 협상 등 여건변화에 따라 규제 위주의 **농지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

○ 자작농육성을 위한 소유·이용제도로는 임차 등을 통한 영농 규모화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데 한계

○ 식량자급을 위한 엄격한 보전제도로는 농지의 타용도 활용을 통한 농촌개발 등 농촌활력을 증진하기에 미흡

○ 쌀값하락 등으로 예상되는 단기·급격한 농지가격 변동에 제도적으로 대응할 필요

□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을 마련** 하고 농업계 내·외의 **광범위한 의견수렴**

## 나. 추진과제

◇ 농지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촌활력 증진을 뒷받침하도록 농지제도를 규제위주에서 관리위주로 개편

### □□ 쌀산업의 규모화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도록 농지의 소유와 이용제도를 혁신

- 농지소유제한은 경자유전의 원칙 범위내에서 최대한 완화
  - 주말·체험영농목적(0.1ha), 이농·상속(1ha) 등 비농업인의 소유상한을 확대
  - 허가제 형태의 농지취득자격증명제를 신고제 형태로 전환
  - 지역발전특구 등 특정지역내에는 농지규제를 폐지
- 전업농의 영농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경목적 소유농지의 임대차위탁영농을 허용
  - 쌀 생산조정제 실시에 맞춰 신고 휴경제도를 도입

### □□ 우량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보전하고, 한계농지 등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는 농촌활력증진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보전제도를 개편

- 농업진흥지역은 생산기반이 정비된 농지를 중심으로 재조정
  -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
- 식량생산과 국토환경보전에 필요한 적정 농지면적은 농업진흥지역과 생산(보전) 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
  - 진흥지역에서 제외된 농지는 생산관리지역으로 편입·관리

-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전용 규제를 면적제한에서 시설제한으로 전환**
  - 현재 10ha미만인 전용허가권한의 지자체 위임범위를 확대
- **농지조성비는 농지조성원가 기준에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변경하여, 농촌지역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전용이익을 환수**
  - 경제자유구역, 제주자유도시 등 특정지구내 공공개발 및 농촌 지역 투자에 대한 감면폭을 대폭 확대

□□ 개방에 따른 농지수급불안 등 농지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지관리기능을 확충**

- 우선, 농지시장의 수급조절을 위해 농지제도개선과 병행하여 **농지유동 정보화 지원 및 신탁기능 등을 도입**
- 단기·급격한 농지가격하락에 대비하여 농지를 매입 후 전업농에게 매도·임대하는 **농지매입 기능 도입도 검토**

#### 다. 추진계획

- 농지제도는 농업의 근간이며 국민경제·생활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도개선안을 마련**
- 농지조성비 개편, 시장관리기능 강화 방안 등은 세부추진 방안도 마련
- 앞으로 **미합의 과제별 찬·반토론회를 개최하여 합의안을 도출하고, 지역공청회 및 관계부처 의견조정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개선안 마련**
- **법령개정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중 정부입법으로 입법을 마무리**

## 8.2 협동조합개혁 가속화

### 가. 현황 및 문제점

- 유통·금융시장의 여건변화 등 경제구조의 변화로 농협의 사업시스템 변화가 시급
- 저금리 시대의 도래 및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 등 경쟁 심화로 일선조합 신용사업의 미래 불투명
  - 저금리 기조에 따른 예대마진 축소, 자본확충 한계 등으로 잠재적 부실 우려
- 대형할인점 중심의 대량유통 구조 정착에 비해 일선조합은 읍·면단위 영세 사업구조로서 산지유통 혁신에 한계
  - ※ 읍·면조합이 전체지역농협(1,116개)의 63% 수준(701개)
- 경영의 효율성 부족, 불투명성 등으로 조합원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농업인의 소득과 직결되는 경제사업 소홀, 선거부정, 높은 보수, 고금리 상호금융 등에 대한 불만 가중
- 경영시스템의 비효율성, 자발적 개혁의지 부족에 대한 비판
  - 상임조합장 중심의 경영체제, 규모의 영세성 등을 극복하기 위한 경영혁신 요구



## 나. 주요 개혁과제

### <기본전략>

- ◆ 농협의 사업체제를 개방적·경쟁적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시장지향적 제도 확충
- ◆ 조합원 등 아래로부터의 개혁의지를 동력으로 개혁추진

#### □□ 시장원리 적용 확대로 경쟁여건 조성

- 농업정책자금 취급기관을 단계적으로 시중은행에 개방
  - 농업인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 서비스 개선 유도
- 농업인의 조합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현행 구역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
- 상반기중 일선조합 상호금융 금리 비교공시를 실시하여 자율적 금리인하 유도

#### □□ 자율개혁을 뒷받침하도록 농협법 개정등 제도개선

- **중앙회** : 회장 비상임 전환, 대표이사 독립경영체제 확립, 사외이사 확대 등
  - ※ 신용경제사업 법인분리는 농업인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검토
- **일선조합** : 선거관리 선관위 위탁, 전문경영인 도입확대, 도시민의 우선출자 허용 등

□□ 조합의 **건전화규모화촉진**으로 협동조합의 **발전기반 강화**

- 금년중 「지역조합 중장기 합병지원계획」을 마련, 경제권·생활권을 고려한 합병권역 설정
- **부실조합**의 신용사업 이전 등 적기 시정조치에 따른 손실액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서 전액보전
  - 부실조합 적용기준도 단계적으로 상향토록 조치
    - ※ 적기시정조치기준(순자본비율) : ('04) 2% → ('06) 4%

□□ 농협의 **경제·유통사업 기능확충**으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

- 조합간 사업연합을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제도화하여 각종 인·허가 및 세제상 혜택 부여
  - 전문경영인에 의한 연합자회사 방식 도입 활성화
- 농산물 판매사업 중심의 **품목조합** 적극 육성
  - ※ 미국 및 유럽의 기업형 협동조합(예 : sunkist) 등을 벤치마킹

다. 추진일정

- 개혁과제를 반영한 **농협법 개정안**을 6월중 국회에 제출
- 경영 시스템 혁신, **경제사업 활성화** 등 법 개정사항 이외의 과제는 농협개혁위원회를 통해 **세부추진계획** 조기마련
- 농민단체·농협간 합의 및 조기이행이 가능한 과제부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개혁 가속화**

## 8.3 지방농정 활성화

### 가. 현황 및 문제점

- 지역 특성에 맞는 농정 추진에 필요한 지원시스템 미비
    - 농업경영과 IT를 활용한 지식기반 농업을 뒷받침하고 농가 및 산업체에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선진체계 구축이 절실
    - DDA, 쌀협상 이후 농산물 교역에 우위를 확보하며, 수출을 확대하고 농업 경쟁력을 제고할 구심체가 필요
    - 영세고령화된 농업인 전체의 평균적인 농업기술수준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어, 「선택과 집중」에 따른 선도기술농가와 핵심 전략기술에 자원을 집중하여 성공사례의 확산 유도
  -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으로 자생적인 경영혁신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관심과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소홀
    - 국토보존, 환경유지, 농가소득증대,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지역단위 종합대책이 필요
    - 과거 투융자가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적으로 지원됨으로써 농업 투융자의 부실 초래
    - 포괄보조성격의 사업인 지역특화사업을 '99년부터 추진하였으나, 예산이 계속 감소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 목적 달성 미흡
- \* ('99) 1,000억원 → ('01) 820 → ('02) 500 → ('03) 410

## 나. 추진계획

-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기술, 정보, 인력 등 모든 가용자원을 통합적·유기적으로 결집한 **지역농업 클러스터 구축**
- 지방대학 교수, 지자체, 농업인, 연구소 등으로 지역농업 혁신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수립, 자원배분, 인력양성 등 총괄조정기능 수행
  - 중앙 정부에 예산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제출할 경우 심사를 거쳐 최대한 예산 지원
- 지역 실정에 맞게 **분야별 또는 권역별**로 클러스터를 구축
- 클러스터간 상호 **네트워크 조성**(Cluster Map 형성)
- 농가에 대해 실질적인 경영·기술 지도, 현장애로 해결 등을 수행할 「**특화사업겸임연구관**」 제도운영
- 지역농업 특화를 위한 **권역별 특화사업**을 발굴·선정
- 기술·경영정보 지원, 현장애로기술 해결 등을 중점 수행
- 금년 3월중에 대학,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300여명을 선정하고 품목(분야)별로 10명 이내로 사업단을 구성하여 사업추진
  - 생산부터 소비까지 단계적 기술을 집중 개발 지원
  - 중앙정부는 사업단 활동비(30억), 지자체는 사업추진 운영비 지원

- 시·도, 시·군이 정부의 농업·농촌 종합대책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을 살린 농업발전계획**을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지원
  - 지자체별로 지역의 농업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농업발전 협의회**를 구성, 정책 개발 및 평가 기능 등을 수행토록 유도
    - 지자체, 지방대학, 연구기관, 농민단체, 산업계 등이 참여
    - \* 지역농정심의회, 지역 농특위를 통한 협의도 가능
  - 지역농업발전계획에 **특수시책**, 특화작목 개발 등 지역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경우 중앙정부의 지원 강화
    - \* 주산지 품목소득비중이 높은 품목 육성방안, 지역특화작목 및 지리적 표시 상품 개발, 보전가치가 높은 경관유지 방안, 지역농업특구 개발방안 등
- 지역특수시책, 특화작목개발사업 중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포괄보조사업 확대**
  - 5월말까지 사업타당성 등을 심사한 후 예산 반영 추진
    - 중앙-지자체간 정책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예산에 우선 반영
  - 지자체는 예산 집행시 지역농업발전협의회 및 지역농업 클러스터를 충분히 활용
- 중앙-지자체간 정책협의 강화
  - 지역농업발전계획 검토, 지역 특수시책·특정품목 과잉생산 방지 등 지역간 정책 조정, 지역 특수시책 지원 방안 등 주요 농정과제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의견조율 기능 확대

## IV. 2004년 업무혁신 계획



## IV. 2004년 업무혁신 계획

### 1. 2003년 성과와 반성

#### 1.1 주요 성과

##### □ 혁신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혁신 분위기 확산

- 부내 「업무혁신T/F팀」과 젊고 참신한 인재들로 구성된 「주니어 보드」를 구성·운영
- 혁신 분위기 확산을 위한 전직원 또는 계층별(5급이상, 6급이하 실무급) 워크숍 개최(5회)
- 부내 연구모임 활성화(8개모임, 475명)와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기능력개발비」 지원

##### □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한 민간의 정책 참여확대

- 「농·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농민단체와의 정책협의를 정례화 하고 「농업·농촌 종합대책」 등 정책 수립시 적극적 여론수렴
- 소비자 단체가 참여하는 「농식품안전자문단」 구성으로 안전한 농식품의 생산·공급체계 구축
- 인터넷 「농정리포터」(명예기자, 540명)를 선정하여 농촌현장의 여론과 정책대안 제시 등 건전한 비판기능을 활성화
- 농산물 부정유통근절을 위해 소비자·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명예감시원제」 운영(2003년 현재 2,600명)



## □ 고객 서비스 증대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 민원인 편의를 위한 「무인키오스크」 안내시스템 구축 및 민원 처리과정과 결과를 실시간으로 휴대폰을 통해 공개
- 영농현장에서도 농산물 출하·가격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휴대폰을 이용(SMS)한 정보 제공
- 동·식물검역 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음성자동시스템(ARS)을 이용한 가축 긴급방역체계 구축

## □ 직렬 타파 및 다면평가 확대 등 인사 제도개선

-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기술직을 총무과장으로 임명하는 등 행정과 기술직렬 교체배치
- 공정·투명 인사를 위한 다면평가 확대 및 직위공모제 추진

## 1.2 반 성

### □ 변화와 혁신에 대한 단계적 전략부재로 혁신추진 미흡

### □ 상설화된 혁신주체 세력이 없어 혁신의 속도 저하 및 지연

- 혁신에 대한 내부의 공감대 형성미흡으로 조직원의 자발적 참여 저조

### □ 농정에 대한 외부의 이해와 신뢰 부족으로 조직원의 사기저하

- 농민단체의 정책불신에 따른 갈등 심화

## 2. 「변화와 혁신」 SWOT 분석

		강점(S)	약점(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변화와 혁신의 필요성 공감</li> <li>◦농정비전 및 목표(농업농촌 종합대책) 구체화</li> <li>◦정보화, 조직인사운영, 국정홍보 노력 등 인프라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직적이고 권위적인 조직문화</li> <li>◦농업의 역할 감소, 부처위상에 따른 사기저하</li> <li>◦농정비전 및 목표에 대한 조직원내 공감대 확산 미흡</li> <li>◦혁신방향 및 전략을 추진할 구심점 부재</li> </ul>
기회(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친환경농산물, 외식산업 및 농촌관광 등 새로운 수요 증가</li> <li>◦정부혁신, 고객만족 행정, 전자정부 등 정부부문 효율성 및 혁신 강조</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lt;S-O 전략&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새로운 농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업무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식품산업육성, 식품안전성, 농촌개발·복지정책 등</li> </ul> </li> <li>◦기능진단을 통해 업무우선순위, 권한이양업무 선정</li> <li>◦정기적 평가를 통한 규제개혁 및 업무 재조정</li> <li>◦민간의 경영기법 벤치마킹, 컨설팅을 통한 업무전문성 제고</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lt;W-O 전략&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PR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li> <li>◦혁신주도세력 형성, 조직신설 및 지속적인 혁신 프로그램마련</li> <li>◦공정하고 투명한 인사</li> <li>◦개방형인사, 직위공모제 등을 적극 활용하여 조직유연성 확보 및 선진조직에 대한 벤치마킹</li> <li>◦동호회 활동지원, 내부토론 활성화를 통한 자유로운 조직문화</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lt;S-T 전략&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책프로세스맵 구축으로 정책 일관성, 신뢰감 회복</li> <li>◦PCRM 등 국민과 대화 확대를 통한 참여 농정 구현</li> <li>◦행정정보공개 등 개방성, 투명성 확보</li> <li>◦정책갈등관리시스템 제도화</li> <li>◦개방화에 적극대응, 농업정책과 타 산업정책과의 조화 등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의 정책 수립·집행</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lt;W-T 전략&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정책 및 역할, 농업의 다원적 기능,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홍보 강화</li> <li>◦혁신 및 정책 성공사례 발굴, 외부홍보를 통한 조직 내 자부심 고취 및 외부의 긍정적 인식 유도</li> <li>◦타 기관(정부·민간)과의 인사교류 등을 통한 상호이해도 증진</li> </ul>
위협(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부의 농정에 대한 편향된 시각 및 전반적 신뢰감 저하</li> <li>◦농민단체들의 정책불신 및 갈등 심화</li> <li>◦WTO/FTA 등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 재량권 제한</li> <li>◦IT·BT산업발전으로 전 산업기반의 변화</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lt;S-T 전략&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책프로세스맵 구축으로 정책 일관성, 신뢰감 회복</li> <li>◦PCRM 등 국민과 대화 확대를 통한 참여 농정 구현</li> <li>◦행정정보공개 등 개방성, 투명성 확보</li> <li>◦정책갈등관리시스템 제도화</li> <li>◦개방화에 적극대응, 농업정책과 타 산업정책과의 조화 등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의 정책 수립·집행</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lt;W-T 전략&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정책 및 역할, 농업의 다원적 기능,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홍보 강화</li> <li>◦혁신 및 정책 성공사례 발굴, 외부홍보를 통한 조직 내 자부심 고취 및 외부의 긍정적 인식 유도</li> <li>◦타 기관(정부·민간)과의 인사교류 등을 통한 상호이해도 증진</li> </ul>

### 3. 2004년 비전과 혁신전략

VISION	<b>젊은 농림부(Young M.A.F)의 실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수적·수동적 이미지를 탈피하여 활력있고 변화를 선도하는 젊은 조직으로 변신</li> <li>◦ 현장농정·참여농정 구현으로 농정의 신뢰를 회복</li> </ul>	



활력있는 조직	찾아가는 농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과장 중심의 책임행정</li> <li>·e-mail보고, 전자결재 활성화</li> <li>·농정포럼 및 워크숍 개최</li> <li>·업무혁신팀 상설화</li> <li>·우수혁신자 인센티브 부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CRM 활성화를 통한 신뢰회복</li> <li>·e-농정 Briefing 등 정책홍보 강화</li> <li>·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li> <li>·민간의 주요정책 평가 참여</li> </ul>



혁신추진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설 혁신팀 신설 및 Junior board 활성화</li> <li>◦ 과제 발굴·개선 및 상시점검</li> </ul>
-----------	---

---

## 4. 2004년 업무혁신 계획

---

### 4.1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

#### □ 국·과장 중심의 책임있는 행정 구현

- 위임전결 규정을 대폭 하향 조정하여 책임행정을 구현

#### □ E-메일 보고 및 의견교환 활성화로 업무효율성 증대

- 극히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대면없는 전자결재 활성화

#### □ 불필요한 일 줄이기 등 근무방식 개선 추진

- 회의 소요시간 예고 및 회수 감축 등 회의방식 개선
- 「집중근무시간제」를 운영하여 업무의 집중도 제고 등  
- 장·차관 등 간부의 「집중 결재시간제」 운영
- 경미한 업무는 6급이하가 전담하여 업무처리 단계 단축

### 4.2 정기적인 토론 등 부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 □ 농정포럼 등 정기적인 토론회 개최

- 농정의 변화와 혁신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초청, 월 2회 정기적인 조찬 농정포럼 “아침을 여는 사람들” 개최
- 농림공직자의 자질 향상 및 의식 개혁, 정책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분기별·정책별 워크숍 개최

□ 정보공유 등 내부의 의사소통 활성화

- 정책수립 및 법령 제·개정과정에서의 정보 공유 활성화로 정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 정보화 시스템을 통한 정보공유, KMS 내실화, 자료확충 등

4.3 인사시스템 개선 등을 통한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

□ 상설화된 혁신팀을 구성하여 부내 업무혁신을 선도

- 서기관급을 팀장으로 하는 「업무혁신팀」을 구성하여 상시적인 부내 업무혁신을 추진

□ 열린 인사제도 도입 등 인사시스템의 혁신

- 주요직위에 본인의 「희망보직제도」 및 상사의 「적임자선발제도」 운영 등 열린 인사제도 도입
- 관련 부처·지방자치단체와의 인사교류 활성화로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 구축
- 행정·기술직간의 직렬 구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효율적 인력운용

□ 혁신 추진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우수자에 대해 포상, 승진시 우대, 해외여행기회 부여 등

#### 4.4 수요자의 정책참여 확대 및 현장중심의 신뢰농정 구현

- PCRМ(Policy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활성화로 정책 Monitoring 시스템 내실화
  - 의사결정의 초기단계인 의제설정 과정에서부터 인터넷을 통한 쌍방향 대화 확대
  - 홈페이지에 정책평가코너를 신설하여 국민의견 수렴 확대
- e-농정 Briefing 등 정책홍보 및 여론 수렴 활성화
  - 온라인 뉴스페이퍼 시스템(가칭 e-농정 Briefing) 등 고객 맞춤형 정보 제공을 통한 전략적 홍보 강화
  - 고객의 의견 수렴 결과를 정책 입안 단계부터 반영하고 고객 위주의 정책 형성 및 행정서비스 개선
- 현장과 일체감 있는 정책추진으로 신뢰받는 농정 구현
  - 정책의 수요자인 농업인과의 현장대화를 수시로 실시하여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전 도출하여 반영
  - 정기적·비정기적으로 농업정책 순회 설명회(Road Show) 개최 및 소관 분야별 농장체험 프로그램 실시
-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 강화로 유기적 정책집행체계 구축
  - 기관간 업무 관련자들의 Group Mailing, 사이버 토론방을 마련하여 정보 및 의견교환 체계 구축
    - '04년 중 업무 유관성이 높은 4-5개 분야를 선정하여 시험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참고 1>

## 혁신 체크리스트 (농림부)

구분	항 목	지 표	'03년 실적	'04년 목표	
혁신 마인드	1	부처의 혁신비전을 명확히 제시하고 공유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원연찬회 개최</li> <li>◦기관장의 업무혁신관련 지시 및 보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회</li> <li>◦8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기1회이상</li> <li>◦정례화</li> </ul>
	2	부처 구성원(특히, 실·국장급 및 일반 직원)의 혁신의지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발적 혁신조직 구성</li> <li>◦기능혁신방향 토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2회</li> <li>◦주니어보드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설혁신팀 구성</li> <li>◦포럼, 워크샵 활성화</li> </ul>
	3	혁신에 대한 자신감을 제고하기 위해 혁신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혁신성공사례 발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3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사례 지속발굴</li> </ul>
혁신 인프라	4	상설화된 혁신전담조직에 핵심인력을 배치하고 자발적 혁신활동이 이루어 지도록 지원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 내외 혁신 추진 조직 운영실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무혁신팀 - 3차례개편</li> <li>◦17명/28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설 혁신팀 공모로 구성</li> </ul>
	5	객관적인 혁신지표를 통해 혁신성과를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혁신성과평가</li> <li>◦근무평정, 승진심사, 보직 이동시 혁신성과 반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무혁신 공유방 개제 및 외부평가</li> <li>◦포상 2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객관적 평가 추진</li> <li>◦인센티브 다양화</li> </ul>
	6	업무효율화를 위해 불필요한 일을 줄이고,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필요한 일버리기</li> <li>◦신업무 창출</li> <li>◦고객서비스 개선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건</li> <li>◦10건</li> <li>◦44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PR을 통한 개선추진</li> </ul>
국정과제	7	부처 구성원들이 국정철학 및 국정 과제와 소관업무의 연계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도록 지원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정운영방향 및 철학에 관한 토론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기별1회 이상</li> </ul>
	8	국정과제 로드맵 중 소관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정과제 세부추진 계획수립</li> <li>◦추진조직 정비내역</li> <li>◦정책조정실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0건</li> <li>◦10건</li> <li>◦7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을 수립</li> <li>◦지속추진</li> </ul>
	9	부처 소관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관장 관련지시 및 보고실적</li> <li>◦추진실적 점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1건</li> <li>◦분기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례화</li> <li>◦정례화</li> </ul>

구분	항 목	지 표	03년 실적	04년 목표
대화와 협력	10 인사교류·정보공유 등 부처 이기주의 완화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가?	◦부처간 이견사항에 대한 대화 노력	◦7건(49회)	◦인사교류를 통한 협조 체계 구축
	11 상하직원간 수시로 대화·토론하는 등 조직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있는가?	◦장차관 직원간담회 ◦사이버 토론방, 동호회 운영	◦9건 ◦토론방5개/ 동호회 12개	◦월 1회 ◦지속확대
	12 토론기법 개발·토론결과의 업무반영 등 생산적 토론문화를 조성하고 있는가?	◦토론결과 개선과제 도출 ◦토론공간마련	◦10건 ◦사이버토론방 신설	◦혁신팀 주관 추진 ◦혁신팀 주관 추진
대외 커뮤니케이션	13 이미 추진중인 방법 외에 부처 정책에 대한 홍보채널을 다양화하고 있는가?	◦E-메일 여론조사 ◦E-메일 홍보자료 발송 ◦PCRM구축, 활용	◦1회 ◦5780명(주1회)  ◦68개 세부 정책별, 107개연계층별 5,142명DB 구축	◦수시 ◦D B 활 용 극대화 및 대상 확대  ◦홍 보 센 터 신설·운영
	14 갈등예방·해결을 위해 절차를 개선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는가?	◦농정협의회 등 농민단체와의 대화실적 ◦위원회 운영실적	◦57회  ◦41회	◦정례화  ◦지속확대
	15 소부처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정책 홍보에 나서도록 지원·동기부여하고 있는가?	◦언론홍보건수 ◦홍보우수기관 및 직원 인센티브	◦158건 ◦-	◦지속확대 ◦인센티브 부여



<참고 2> 대통령 지시사항 및 '03년 업무보고 추진실적

보고 또는 지시사항 (관리번호, 지시일자)	주요 실적	평 가
□□ 우유수급문제도 업무 보고시 보고 (02-20-01, '03.3.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유수급 안정대책 보고(업무보고, 3.14)</li> <li>- 시장기능에 의한 수급조절, 낙농진흥회 체제의 개편, 우유소비촉진대책 강화 등 낙농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li> </ul>	완료
□□ 쌀, 개도국 지위 등 관세인하 문제 국무회의 토론 (02-20-02, '03.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면현안과제로 보고 후 토론 실시(업무보고, '03.3.14)</li> <li>◦개도국지위 유지를 위해 DDA 세부원칙 협상에서 다른 개도국과 공동제안서 제출 등 적극 대응</li> <li>◦쌀 협상의 대안별 영향평가에 대한 분석완료</li> </ul>	완료
□□ 쌀 재고 과잉관련, 수매제 개편방안 수립 (02-20-03, '03.3.14 농림부 업무보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곡수매제를 개편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li> <li>※'공공비축제 도입 준비단'을 구성하고 각계 협의 및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li> <li>◦DDA/쌀 재협상에 대비한 쌀산업구조개편 방안 마련</li> </ul>	계 속
□□ 한·칠레 FTA 지원 대책 마련 (02-20-04, '03.3.14, 농림부 업무보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대책 후비준」을 위해 한·칠레 FTA지원대책 수립(7.16)</li> <li>◦7년간 8천억원의 FTA기금조성 협의</li> <li>- 국회심의과정에서 기금규모를 1조2천억원('04 : 1,600억원)으로 확대</li> <li>◦농업인지원 4대특별법 제·개정</li> </ul>	완료
□□ WTO/DDA 협상과 관련, 시나리오 준비 및 계획수립 (02-20-05, '03.3.14, 농림부 업무보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WTO 농업협상관련 회의에 참석,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총 12회)하고 주요국과의 공조를 강화</li> <li>◦세부원칙 초안의 시나리오에 대해 쟁점별·품목별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선대책, 후개방」 원칙에 따라 농업·농촌 종합대책과 119조원 투융자 계획을 마련</li> </ul>	계 속

보고 또는 지시사항 (관리번호, 지시일자)	주요 실적	평 가
□□ 쌀 재고 처리문제와 관련, 선택 가능한 대안 분석 및 국민 설득 (02-20-06, '03.3.14, 농림부 업무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쌀 재고처리와 관련, 대안별(주정용, 가공용, 해외지원 등) 비용분석과 함께 특별재고처리대책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쌀재고 : 1,005만석('02.10월 말) ⇒ 763만석('03.10월 말)</li> </ul> </li> <li>◦신문보도 등 언론을 통해 대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li> </ul>	계 속
□□ 농산물 소비촉진 홍보방안 마련 (02-20-07, '03.3.14, 농림부 업무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홍보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03.7.1) 하고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전문컨설팅 추진('03.6~8)</li> <li>◦품목별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V, Radio 광고, 리후렛 및 포스터 제작·배부, 홍보대사 위촉, 홍보 event 개최</li> </ul> </li> </ul>	계 속
□□ 농업예산에 대한 이해도 제고 (02-20-08, '03.3.14, 농림부 업무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4년부터 사업성 예산과 채무상환예산을 구분 표시 하여 농업인들에게 실제 지원되는 예산을 명시하고,</li> <li>◦농특회계 차입금 규모를 최소화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li> <li>*차입금(원금)규모 : ('03말) 90,774억원 → ('04말)79,702(△11,072)</li> </ul>	계 속
□□ 농가부채문제 대책 수립 (02-20-09, '03.3.14, 농림부 업무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인부채대책위원회」의 건의('03.7.2)를 토대로 부채경감법 개정('04.3.5)</li> <li>◦상환조건 개선 및 상호금융 대체자금 금리 인하, 경영회생자금 지원 등을 반영하여 시행</li> </ul>	완 료
⑩ 새로운 환경에 적응 하는 농림조직 정비 (02-20-10, '03.3.14, 농림부 업무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 인력 범위내에서 1단계 조직개편 완료('03.7.1)</li> <li>◦업무혁신추진단을 구성(4.28), 2단계 개편안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수급조절 위주에서 식품안전, 농업인소득, 농촌개발 중심으로 전환</li> </ul> </li> </ul>	계 속
⑪ 인사시스템 개혁 (06-70-02, '03.4.8, 국무회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하단체와 협의하여 「인사운영 합리화계획」을 수립('03.6.2)</li> <li>◦인사개혁 Road map을 실천하고 깨끗하고 효율적인 정부구현을 위해 세부실천계획 수립('03. 7월말)</li> </ul>	완 료

보고 또는 지시사항 (관리번호, 지시일자)	주요 실적	평 가
12 각종 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하는 방안 강구 (01-70-03, '03.4.7, 수석보좌관 회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합장선거제도를 선관위에 위탁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실무협의('03.4)를 거쳐 조합장선거제도 개선방안 수립('03.5)</li> <li>◦조합장선거제도 개선방안을 포함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부처협의('03.9)를 거쳐 법개정 추진중</li> </ul>	계 속
13 우수 홈페이지 벤치 마킹 및 행정정보 공개 확대 (06-70-04, '03.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쌍방향 의사소통과 소비자 중심의 편의 및 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03.10)</li> <li>- 여론수렴 및 사이버민원처리 강화에 의한 쌍방향 의사소통을 실현하고 다양한 계층을 위한 편의 기능 및 정보 제공</li> <li>◦홈페이지내 「정보공개방을 신설해 행정정보공개 확대('03.10)</li> </ul>	완 료
14 개혁인프라 구축 (06-70-05, '04.17, 국정과제 회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혁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업무혁신추진팀」 구성('03.4)</li> <li>- Workshop 등 의견수렴을 거쳐 농림관련 조직 기능 혁신방안 마련('03.8)</li> </ul>	계 속
15 중앙정부차원 전자 정부관리기구 운영 방안 마련(부처별 CIO 임명) (06-70-08, '03.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정부 조기정착을 위해 농림부 정보화책임관(CIO) 임명('03.4, 농업정보통계관)</li> <li>◦전자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 2004 농림정보화촉진시행계획 수립('03.12)</li> </ul>	완 료
16 농업경쟁력 강화 관련, 대통령 참석 행사 마련 (02-20-11, '03.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인의 날 기념식행사('03.11.11, 농진청) 참석</li> <li>- 119조 투융자규모 제시, 복지여건 개선 등 농정 대책을 발표</li> </ul>	완 료
17 정부와 농민단체간 타협방안 수립 (02-20-12, '03.5.20 /'03.6.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 비준을 농업인지원 4대 특별법과 연계해 포괄협상을 위한 협의안을 마련</li> <li>◦「농정협의회」를 구성('03.8.2)하고 농민단체 간담회(34회) 및 지역토론·설명회 등을 실시</li> </ul>	계 속
18 장애인 고용대책 추진 (03-70-13, '03.6.3, 국무회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 「장애인 공무원 고용 추진계획」을 수립('03.6)</li> <li>- 신규 공무원 충원 및 전보인사시 장애인고용 추진계획을 실천</li> </ul>	완 료

보고 또는 지시사항 (관리번호, 지시일자)	주요 실적	평 가
19 제도개선 논의 팀 구성 및 혁신과제로 관리 (06-70-17, '03.6.24, 국무회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도개선이 필요한 민원업무에 대한 통합관리 지침을 시달('03.7)하고 제도개선 민원협의회를 구성·운영('03.7)</li> <li>◦각종민원, 제안사항 중에서 제도개선 관련사항을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원협의회 5회 개최, 제도개선 실적: 45건(원료27, 추진중18)</li> </ul> </li> </ul>	계 속
20 새만금사업 소송 대비 및 효율적 토지이용방안 마련 (02-20-13, '03.7.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변호인단 보강(1개법인, 2인 → 2개법인, 13인), 소송 보조 참가(전북도) 등 소송대응체계를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이용계획 수립상황 및 수질·친환경 간척 관련 자료의 재판부 추가전달(항고심 4차례, 본안 소송 4차례), 증인 신문</li> <li>⇒ 서울고법의 항고심(집행정지 사건) 승소</li> </ul> </li> <li>◦총리실 주관으로 4차례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국토연구원을 통해 토지이용방안 마련중</li> </ul>	계 속
21 정책별 고객관리 개념 도입 (06-70-24, '03.7.29, 국무회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방향 의사소통 시스템(속보, 메일, 여론 조사 등)을 통해 정책별 고객관리체계를 구축('03.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개 대분류, 68개 세부 정책별 고객 D/B 구축(5,237명)</li> </ul> </li> <li>◦온라인 뉴스페이퍼로 고객별 맞춤 정보를 제공하고 속보,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 지속 실시</li> </ul>	완 료
22 농지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 (02-20-14, '03.10.16, 중장기 투융자 보고 회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통한 여론수렴과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농지제도 개선 작업반」에서 과제별로 검토 중 ('04.5월말까지 최종 정부안 확정 예정)</li> </ul> </li> </ul>	계 속
23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02-20-15, '03.10.16, 중장기 투융자 보고 회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F를 구성('03.10.23)하고 국내외 다양한 현장사례 조사 및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농촌관광마을 등 29개소와 일본 큐슈지역 11개소</li> </ul> </li> <li>◦마을지도자 및 전문가 자문과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하여 「도시민과 함께 하는 농촌가꾸기 종합대책」수립</li> </ul>	계 속
24 농림부 관련 조직의 미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안 수립 (02-20-16, '03.10.16, 중장기 투융자 보고 회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업반(T/F)을 구성('03.10)하여 농정여건 변화에 따른 산하기관 역할변화와 기능혁신 방안마련</li> </ul>	계 속

보고 또는 지시사항 (관리번호, 지시일자)	주요 실적	평 가
<p>25 농업구조, 경쟁력, 규모, 생산량 등의 변화를 파악, 구조 재편과정을 수치로 정리 (검토이행, '03.10.16, 중장기 투융자 보고 회의시)</p>	<p>중장기 농업·농촌투융자계획 발표(11.11)와 연계하여 보고</p>	<p>완 료</p>
<p>26 농업·농촌대책 수립 및 중장기 투융자 계획 협의·확정 (검토이행, '03.10.16, 중장기 투융자 보고 회의시)</p>	<p>투융자계획안에 대해 관계부처간 의견 조정(12차례)을 거쳐 119조원 투융자계획 발표('03.11.11, 「농업인의 날」)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농업·농촌종합대책에 반영</p>	<p>완 료</p>
<p>27 농어촌지원관련 법안이 FTA비준과 동시에 통과되도록 준비 (검토이행, '03.10.28)</p>	<p>국회의원 면담 등을 통해 FTA특별법 처리 협조 요청 4당 합의('03.12.3)로 FTA비준안과 FTA특별법 등 4대지원법을 연계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 농특세법 : 2013년까지 10년 연장안 통과 - 삶의질향상특별법, 부채경감특별법, FTA지원 특별법 통과</p>	<p>완 료</p>
<p>28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혁과제 등을 스스로 점검하고 결과를 정기국회 이후에 보고 ( '03.11.4)</p>	<p>평가를 환류하여 업무계획 추진에 반영 - 장관 주재 하에 업무 추진실적 평가와 연말까지 마무리계획을 자체 점검 - 부처별 일정에 따라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p>	<p>계 속</p>
<p>29 부처 스스로 점검·평가보고를 토대로 2004년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근거 계획을 재수립하여 내년초 업무보고시 보고 ( '03.11.4)</p>	<p>개혁과제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우리부 업무계획에 반영 - 정책별 실적과 추진방향을 재점검, 실현가능성 있는 업무계획 수립</p>	<p>계 속</p>

보고 또는 지시사항 (관리번호, 지시일자)	주요 실적	평 가
30 농특자금 운영·감독 체계를 개선 (02-20-17, '03.11.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정책자금의 집행·관리기능에 있어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방안 추진</li> <li>- 농특회계융자금 관리업무를 집행기관인 농협중앙회로부터 분리하고, 업무 감독 등 관리기능을 강화</li> </ul>	계 속
31 부처내 혁신 지원 조직 (검토이행, '03.12.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무혁신 지원조직관련 직제개정 준비중</li> <li>- 혁신전담부서 기능 : 혁신 + 평가 + 인사 + 조직</li> <li>- 기구의 재편 : 인사전담부서 → 혁신전담부서</li> </ul>	계 속
32 주5일 근무대비, 쾌적한 삶을 위한 비전제시 - 농림부는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 새로운 모습 제시 (검토이행, '03.1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민을 농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작업단(T/F)구성('03.10.23)하고 「도시민과 함께 하는 농촌가꾸기 종합대책」을 수립</li> <li>※ 중장기 투융자보고시('03.10.16) 도시민을 농촌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02-20-15)</li> </ul>	계 속
33 살처분 등에 관한 합리적 보상방안 마련 (검토이행, '03.1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정보상금이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 확정, 시달('04.1.8)</li> <li>◦살처분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등 지원</li> <li>◦이동제한지역(10km)내의 미 입식 농가와 출하지연 농가 지원</li> </ul>	계 속
34 협동조합 개혁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자율 후조정」 원칙에 따라 「농협개혁위원회」의 건의안을 토대로 농협법 개정안을 마련</li> <li>*농협법 개정안 법제처 심사완료</li> <li>◦중앙회 지배구조 개선 및 일선조합 경영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반영</li> <li>※ 개혁과제 추진방안에 대한 농민단체·농협간 의견대립 등으로 추진일정 지체</li> </ul>	계 속

보고 또는 지시사항 (관리번호, 지시일자)	주요 실적	평 가
35 농업·농촌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각계 의견 수렴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장·군수설명회, 농대학장 간담회, 조합장 설명회, 지역 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 수렴</li> <li>- 농정개혁자문단 회의(5회), 농민단체 간담회(34회), 지역토론회·설명회(8개도), 장관친서 발송(5,000명), 기자간담회, 교수 등 관련전문가 및 기관 의견수렴 등</li> </ul>	완료
36 공공비축제 도입 추진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매제 개편을 위해 각계 토론(12회) 등을 거쳐 공공비축제 기본방안 마련('05년부터 도입)</li> <li>*공공비축제 : 600만석을 기준으로 매년 300만석 내외를 시가로 매입·방출</li> </ul>	계 속
37 지역별 추곡수매 대상품종 제한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품질 벼 생산·유통 체계구축을 위해 '04년산 부터 정부수매 품종을 시·군별 3개 품종 내외로 제한하여 수매</li> <li>◦품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공매는 품종별, 등급별로 실시</li> </ul>	완료
38 미곡종합처리장(RPC)에 대한 정부지원체계 개편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평가, 후지원을 원칙으로 경영우수 RPC 및 구조 조정 추진 RPC에 대한 정부지원을 우선하고 평가 등급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li> </ul>	계 속
39 포장양곡 표시제도 개선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포장양곡 표시사항에 품종, 도정연월일, 등급 등 쌀의 품질을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li> </ul>	완료
40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GAP) 도입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산물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GAP 시범사업 실시</li> <li>- 토양·수질검사비 및 잔류농약 등의 분석비 지원</li> <li>* '04년 시범사업 : 350농가</li> </ul>	완료
41 친환경축산직불제 도입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친환경축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직불제 시범도입(1천농가 대상)</li> <li>- '04 신규도입, 예산 58억원 확보</li> </ul>	완료

보고 또는 지시사항 (관리번호, 지시일자)	주요 실적	평 가
42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추진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권역 단위로 마을별 특성을 살려 농촌다움을 유지·보전하고, 전통문화휴양 등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li> <li>◦지역실정에 따라 기초생활시설, 소득확충시설 및 권역 특성사업 지원</li> <li>◦지역여건에 따라 향후 소득증대사업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개발</li> </ul>	완 료
43 농작물재해보험 사업 실시지역 확대 및 운영비 지원을 인상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3년 사과·배에 이어 '04년부터 복숭아·포도·단감·감귤을 재배하는 농업인은 전국 어디서나 보험에 가입</li> <li>◦운영비 지원을 인상 : '02)70%지원 → '03)80%</li> </ul>	완 료
44 도시자본의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어촌주택을 신규 취득, 1세대2주택이 되더라도 기존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li> <li>◦농어촌 주택을 취득하여 상시 거주치 않더라도 지방세를 초과하지 않도록 지방세법 개정</li> </ul>	완 료
45 「농림어업인삶의질 향상및농산어촌지역 개발특별법」 제정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계부처 협의후 '03.10.31일 법안을 국회에 제출 하여 '04.2.16일 통과</li> <li>※ 법 제정을 계기로 농촌복지·교육·지역개발을 위한 범정부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li> </ul>	완 료
46 농어민건강보험료 지원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납입 보험료 경감 확대 : '03)22% 경감 → '04)30</li> </ul>	완 료
47 농어민연금 보험료 지원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3)7,700원 지원 → '04 하반기)최고 14,800원 까지 확대</li> </ul>	완 료
48 「FTA이행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 지원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별기금을 설치하고 「FTA지원특별법」 제정('04.3.2)</li> </ul>	완 료
49 과수농가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지원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산·유통현대화, 규모화 등 경쟁력제고분야에 중점 지원</li> <li>◦개방적응 기간동안 소득보전 및 폐업지원 제도 도입</li> </ul>	완 료



보고 또는 지시사항 (관리번호, 지시일자)	주요 실적	평 가
50 「부채경감특별법」 개정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환조건 개선 및 상호금융 대체자금 금리 인하, 경영회생자금 지원 등을 반영한 부채경감법 개정('04.3.5)</li> <li>*중장기정책자금 : 금리 1.5%, 5년거치 15년 상환</li> <li>상호금융대체자금·경영개선자금 : 금리 3%, 부채의 조기정상상환시 이자환급을 상향 등</li> </ul>	완료
51 농산물 소비촉진 홍보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쌀 : 소비촉진 TV-CF('03.6), 러브米캠페인</li> <li>◦친환경농산물 : TV·영화관 공익광고</li> <li>◦우유 : TV(주7회)·라디오(주14회) 광고</li> <li>◦돼지고기 : 방송3사 및 유선방송 CF광고</li> <li>◦화훼 : 꽃메신저 위촉 및 신상품 공모전('03.4)</li> </ul>	계속
52 투융자 우선순위 재조정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격지지, 생산기반정비 분야는 축소</li> <li>◦직불제 등 농가소득보전과 농업인 복지·농촌 지역개발 분야 지원확대</li> </ul>	완료
53 우유 수급안정대책 추진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22부터 낙농가대표와 14차례 회의를 통해 잉여량 810톤/일중 410톤에 대한 생산감축대책 합의</li> <li>- 농가별 생산목표량(Quota)을 부여하여 잉여량이 400톤 수준으로 감소</li> <li>◦TV, 라디오 광고, 우유요리 강습회, 검은콩우유 신제품 개발 등으로 시유소비량 증가(9.9%)</li> <li>◦낙농진흥회의의 책임경영체제 정착을 위해 회장을 상근화하고, 전무이사제를 폐지</li> </ul>	완료
54 농어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지소유규모 1.5ha미만 농어가의 0~5세 자녀가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와 유치원 교육비를 최대 월131천원 까지 지원('04 신규도입)</li> </ul>	완료
55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 융자 지원단가 현실화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3년)학기 당 200만원 이내 → '04)학기별 등록금 한도 내에서 신청한 금액 전액을 무이자 융자지원</li> </ul>	완료
56 경영이양 직접지불 사업 개편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장 8년까지 분할지급방식으로 확대 지급하여 고령농의 경영이양을 촉진</li> <li>*'03)2,890천원/ha, 1회 → '04이후)매도 월 241천원(최장 8년), 임대 2,977(1회)</li> </ul>	완료

보고 또는 지시사항 (관리번호, 지시일자)	주요 실적	평 가
57) 논농업직불제 지급 규모 확대 (업무보고)	◦지급규모 : '03)농가당 0.1 ~ 3.0ha → 0.1 ~ 4.0ha	완 료
58) 농업인자녀학자금 인문계고교생까지 지원 (업무보고)	◦농지소유규모 1ha미만의 농업인 자녀중 실업계 고교생에 대해 지원하던 학자금을 인문계 고교생 까지 확대('03년), '04년부터 지원대상을 1.5ha 미만 농가로 확대	완 료
59) 농지소유 및 거래 규제 완화 (업무보고)	◦비농업인의 주말·체험 영농을 위한 농지소유 허용 (세대당1천m <sup>2</sup> 미만) ◦농업경영목적의 농지소유상한 폐지 ◦농지취득절차 간소화	계 속
60) 소득보전직불제 도입 (업무보고)	◦'02년산부터 수확기 산지쌀값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하락 폭의 80%를 보전하는 쌀소득 보전 직불제 도입	완 료
61) 생산조정제 시행 (업무보고)	◦3년간 휴경을 조건으로 300평(10a)당 30만원 수준의 보상금을 지원	완 료
62) 농업의 다원적 가치 홍보 (업무보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홍보를 위한 TV CF(KBS, MBC 주 평균 15회 방영중)와 성공사례를 소개하는 특집프로그램 제작·방영(30회, ABS 농업방송)	계 속
63) 산하기관의 역할 변화와 기능혁신 방안 마련 (업무보고)	◦농업기반공사 : 농업기반조성사업에서 농업구조 조정 및 농촌지역개발을 중점 추진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산물 수출확대 역량을 강화 하고 유통개선에 이바지 ◦한국마사회 : 건전경마 추진과 이익금 사회환원을 통한 기관이미지 제고	계 속
64) 농지조성비감면 확대 (업무보고)	◦농촌지역에 설치하는 교육·의료·복지·관광·체육 시설 등에 대한 농지조성비 감면 - 수도권, 광역시는 제외 ◦한계농지개발사업에 대한 농지조성비 감면 ◦특별 재해지역 안의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 이축 시 농지조성비 감면	완 료

농정 신뢰회복과 도농 상생을 위한  
2005년 주요업무 계획

2005. 3. 15

농 립 부



# 목 차

I. 지난해 정책성과 평가 및 시사점 .....	231
II. '05년 중점추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	238
1. 농림부의 비전달성을 위한 정책목표 체계 .....	238
2.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	239
정책목표 1 : 쌀 산업의 체질 강화 .....	239
정책목표 2 : 전문농업경영체 성장기반 구축 .....	250
정책목표 3 : 농축산물 유통 효율화 및 소비촉진 .....	263
정책목표 4 : 농축산물 안전성 강화 및 친환경농업 확산 .....	273
정책목표 5 : 도농 상생과 농촌 삶의 질 향상 .....	283
정책목표 6 : WTO/FTA 농업협상 대응 .....	292
III. '05년 중점추진 혁신과제 .....	296
1. 지난해 혁신성과의 평가 및 시사점 .....	296
2. '05년 역점 추진 혁신과제 .....	298
IV. 성과측정 추진 계획 .....	304
1. 정책성과 측정체계 .....	304
2. 혁신과제 측정체계 .....	312
V. 마무리 .....	313
<붙임> 1.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실적 점검결과	
2. 입법추진계획	
<참고> 성과지표별 세부내역	



# I. 지난해 정책성과 평가 및 시사점

## 1. 2004년 주요농정 성과

### □□ 농업·농촌종합대책의 실효성과 효과성 제고 기반 마련

- '13년까지 농업·농촌종합대책의 비전을 구현할 수 있는 분야별 세부실천계획 수립 및 '05년 소요 투융자사업비(9.8조원) 확보
  - 품목별 생산자조직 등이 직접 주도하여 현장 농업인 의견 수렴
  - 10개월간 총 729건의 의견을 수렴, 그중 487건(67%) 반영
- 투융자사업의 정책단계별 집행기준과 사업평가체제를 확립하여 119조 투융자의 효율적 집행의 틀과 절차 마련 ('04.5)

### □□ 쌀 협상 적극 대응 및 쌀농가 소득보전방안 마련

- 범정부적 공조와 시민단체 대표의 참여 등 총력대응을 통하여 쌀 산업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협상결과 도출
  - 농림·외교·재경부 중심 「쌀협상대책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
  - NGO 추천 전문가가 협상단에 동행, 협상의 신뢰성 및 투명성 제고
- 쌀농가소득보전방안을 적기에 발표('04.11)함으로써 쌀 농가의 불안감을 완화하고 협상결과 수용여건을 조성
  - '01~'03년 기준으로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산지 쌀값과의 차액의 일정분을 보전할 수 있게 하여 대부분 농민단체의 긍정적 반응 도출

## □□ FTA 보완대책 체계 구축 및 과수산업 경쟁력제고 대책 추진

- FTA지원특별법 제정과 기금 설치로 향후 FTA확산에 따른 농업부문 피해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대응 기틀을 마련
  - '04년 ~ '10년까지 7년간 1조 2,000억원 수준의 특별기금 조성
  - \* 한칠레 FTA 발효로 인한 '04년 수입증가: 농산물 23.5%, 축산물 70.7% 증
- 과수농가 유형별로 차별화된 지원(폐업 또는 시설현대화)과 지자체·생산자단체의 자율적 지역 과수발전계획을 심사·지원
  - \* '04년 무주·진안·장수 사과연합사업 등 총 18개 사업, 408억원 지원

## □□ 농촌 지원체계 구축 및 도농교류 분위기 확산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을 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시너지를 거둘 수 있는 틀 마련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위원회 구성
  - 농어촌복지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안 마련
- 1사 1촌 운동 등 도농교류 확대로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 분위기 조성 ('04.12말 현재 1사1촌 결연 2,404건 체결)
  -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농촌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 개선, 지역 개발 전문인력 양성, 농촌체험마을 기반조성 등 지원
  - \* 도시민 5명중 1명꼴로 향후 1년내 농촌관광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농촌관광에 대한 도시민 선호도 조사, '04.6월)



## □□ 협동조합·재해보험·양정·농지제도 등 제도개혁 추진

- 협동조합의 효율성·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일선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여건 마련(농협법 개정)
  - 중앙회장의 비상임 전환, 사업부문별 대표 책임경영체제 강화
  - 조합공동사업법인 근거 마련 및 일정기준이상 조합의 상임이사 의무화 등
- 농작물재해 국가재보험제도 및 재보험기금 설치를 법제화하여 재해에 대비한 경영위험관리를 강화(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
- 양정제도 개편('05.3 양곡관리법 국회통과) 및 농지규제완화 추진(농지법 국회 제출)
  -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 및 농지 소유 및 이용규제 완화

## □□ 조류인플루엔자 조기 종식과 방역 대책 등 안전 축산기반 마련

- '03년말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를 3개월만에 종식
  - ※ OIE(국제수역사무국)에서 한국을 방역 우수 사례로 평가
- 가축방역종합대책을 수립, 방역체계 기틀 마련
  -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인력 증원 및 공익수의사 도입방침 결정

◇ 2004년은 기상여건 호조 등으로 영농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아 예년에 비해 농가경제가 안정된 한 해였음

- 무·배추 등 일부 채소류를 제외한 쌀·과일·축산물 등 대부분의 농산물의 생산과 가격이 안정세 시현

## 2. 미흡한 점

### □□ 농정 신뢰회복과 농가의 불안감 해소 미흡

-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여 농가 스스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농가의 방향성과 자신감이 부족한 상황
- 농업·농촌종합대책 및 119조 투융자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개방에 대한 농가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는 미흡
  - 농업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성과가 아직 가시화되지 않아, 농업인들이 “자신들의 대책”이라는 인식을 가지는데 한계
- 도농간 생활격차 확대와 농업의 성장정체 및 국가경제에서의 비중 축소 등으로 농업인이 느끼는 소외감도 심화

### □□ 지자체·생산자단체의 정부 의존적 성향이 아직도 남아 있음

- 농정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주도적 역할이 아직 부족
  - 지역특색에 맞는 정책수립 및 지역내 생산자단체·지역대학 등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조정 및 연계 역할이 미흡한 상황
- 협동조합 등 생산자단체의 경우 영세 소농구조를 보완할 수 있는 생산·유통주체로서의 역할 미흡

## □□ 농지제도 개편 등 주요 농정개혁 지연

- 농지제도 개편 등 일부 농정개혁 과제가 공감대 확보 부족 등으로 개정법률안의 국회처리 지연
  - 일부 농민단체는 적정 농지보전·주곡생산기반 유지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소 미흡
- 농협법은 개정되었으나 산지의 유통사업 활성화 등 농업인들이 원하는 가시적인 개혁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

## □□ 안전성·농촌 어메니티 등 국민요구에 대한 수용여건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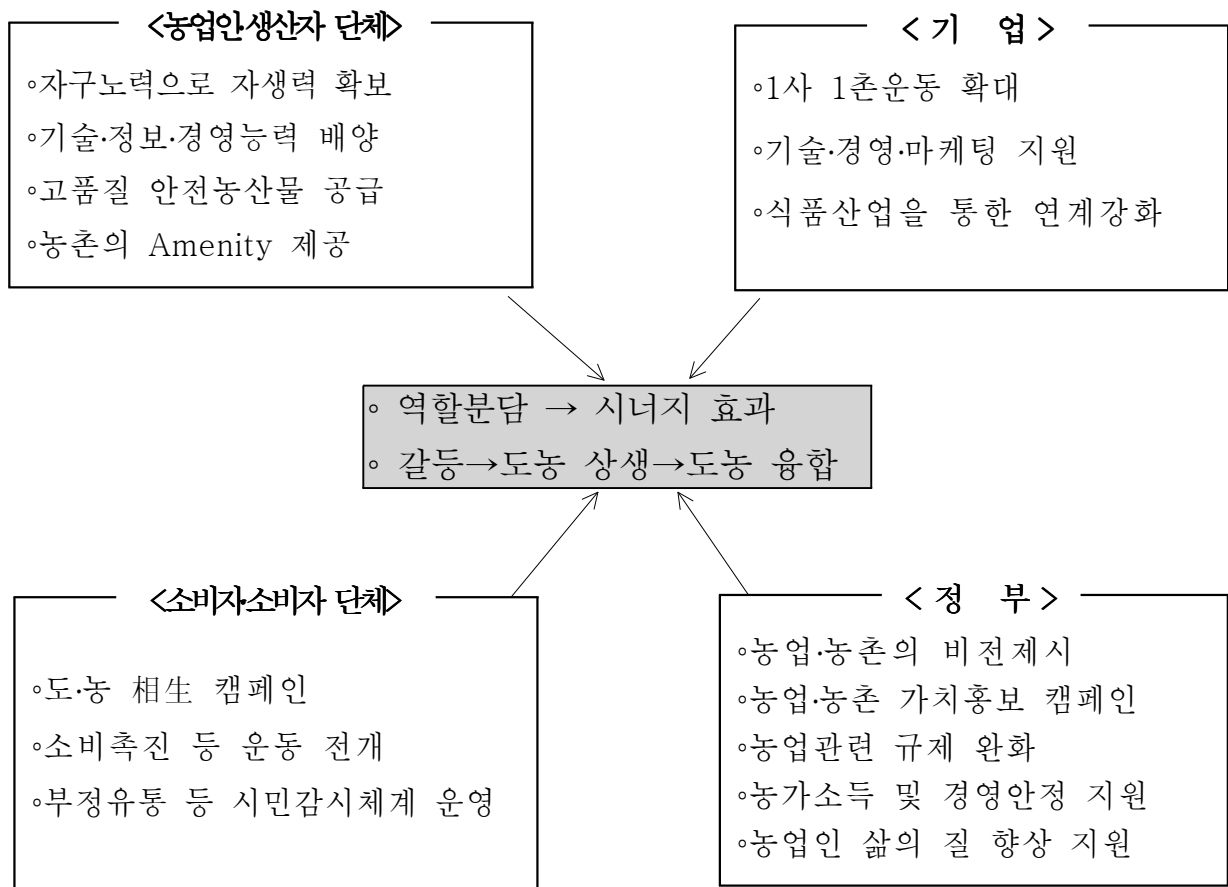
- 농산물의 품질·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고품질·안전농산물의 생산·공급체제는 아직 미흡한 상황
  - '04년 친환경인증농산물 비중은 전체 농산물의 3% 미만 수준
- 쾌적하고 농촌다움을 갖춘 농촌 거주휴양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높아지고 있으나 농촌의 인프라·생활환경 등 수용기반 미흡
  - 또한, 도농교류는 확산되고 있으나, 아직 농촌소득증대 등 실질적인 농촌활력 증진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
- \* 도시민의 농촌관광시 불편한 점으로 화장실 등 편의시설 불비, 청결상태, 교통 및 길찾기 불편 순으로 파악(농촌관광에 대한 도시민 선호도 조사, '04.6월)

### 3. 시사점과 향후 정책과제

#### □□ 정책추진과정에서 참여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

- 개방시대에 정부가 모든 농업·농촌 문제를 혼자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을 정책대상자들에게 이해·설득
- 정부·농업인·생산자단체·소비자·기업 등 주체간의 역할과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고, 적극적인 역할 수행 유도
  - 관련 주체가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인식 확산 필요

#### < 농업관련 주체의 역할분담 >



## □□ 농정의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신뢰확산 유도

- 정부는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농업인·생산자단체·지자체를 돕는다는 농정의 원칙과 일관성 유지
- 정책 수립 과정에서부터 농민·소비자단체 등의 참여제도를 강화
-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적극 추진
  - 특히 금년초에 확정되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과 관련된 분야는 조기에 가시화하고 홍보 추진

## □□ 도농 相生의 농정으로 농업·농촌의 활력 증진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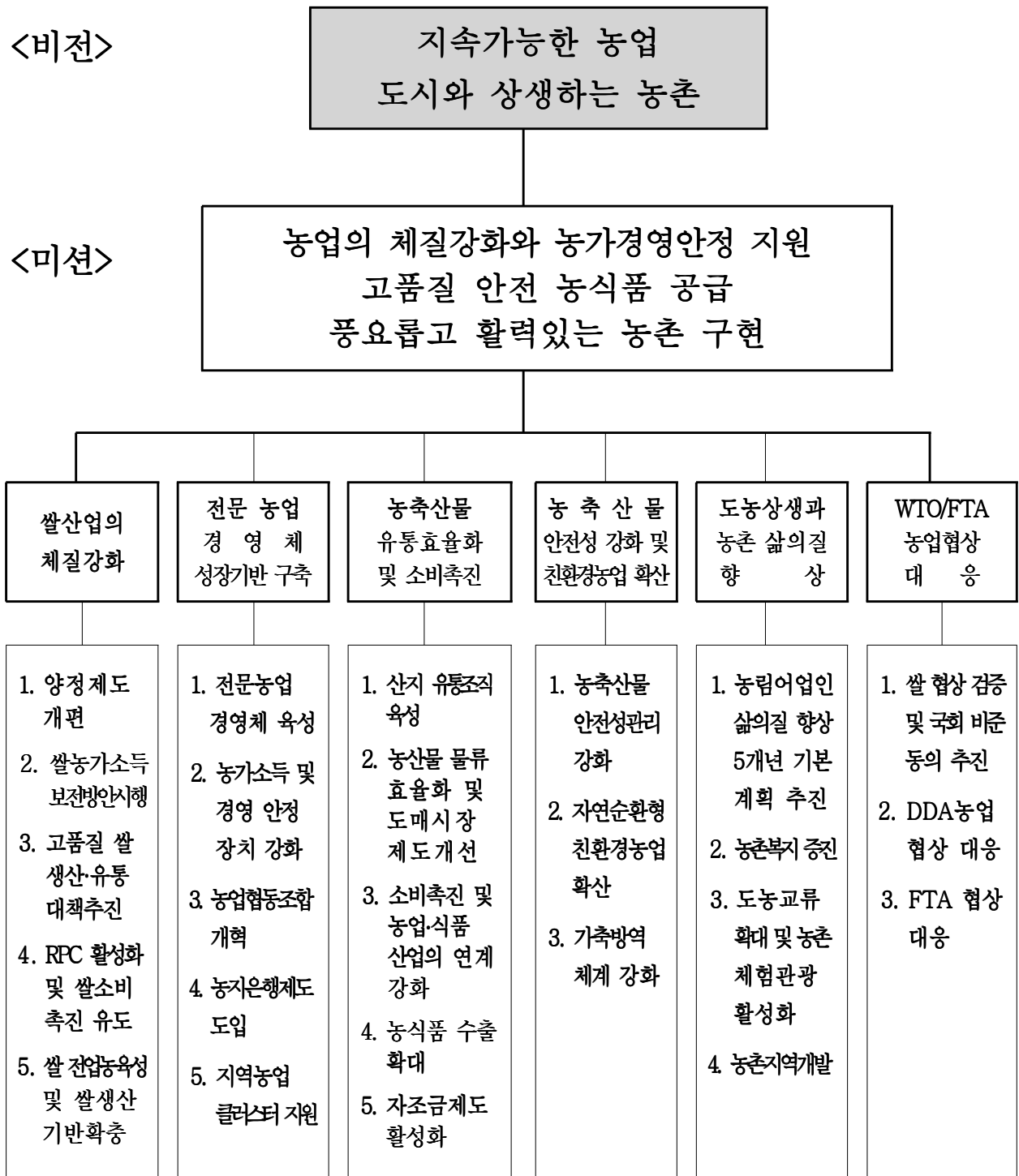
- '04년 1사 1촌 운동으로 조성된 도농 상생 분위기 더욱 확대
  - 타 산업계와 농업계간 상호 입장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환경 조성으로, 도농 상생을 넘어 도농 융합의 기틀 마련
  - 5都 2村 추세를 감안, 국민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농촌관광 기반 마련
- 정부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홍보를 강화, 국민적 공감대를 제고할 필요

## □□ 대내외 농정환경 변화와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과제 추진

- 농업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 i) 당면 현안과제 : 쌀 산업 체질강화와 쌀 농가 소득안정
  - ii) 중장기 과제 : 전문 농업경영체 육성, 농산물 유통개선, 농촌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
-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
  - 농축산물 안전성 관리, 친환경 농업,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 확산 여건 조성

## II. '05년 중점추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 1. 농림부의 비전 달성을 위한 정책목표 체계



## 2.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

### 정책목표 1. 쌀 산업의 체질 강화

---

#### 1) 정책여건

- 쌀협상/DDA협상 이후 시장개방폭은 계속 확대될 전망
  - 쌀협상결과 관세화 유예대가로 의무수입물량은 매년 균등 증량
    - '05년 225,575톤(소비량의 4.4%)에서 '14년 408,700톤(7.96%)까지 증량
    - 의무수입물량중 소비자시판은 '05년 TRQ의 10%에서 '10년 30%까지 균등 증량한 후 '14년까지 30% 유지
  - '04년 합의된 DDA협상 기본골격은 관세와 국내보조 수준이 높을 수록 더 많이 감축하도록 규정
- '04년말(양곡년도) 재고는 710만석(102만톤) 수준이며, '04년 풍작에 따른 생산증가로 '05년말 재고는 1,061만석(153만톤) 수준으로 전망
  - 평년작만 생산(484만톤)되어도 소비감소 등의 영향으로 추가 재고가 발생하는 공급과잉기조 지속 예상

	<u>1995</u>	<u>2000</u>	<u>2004</u>	<u>2005(p)</u>
○ 공 급 량	4,316만석	4,231	3,997	4,340
- 수 입 량	-	77	147	157
○ 수 요 량	3,858	3,551	3,287	3,279
(1인당 소비량)	<b>(106.5kg)</b>	(93.6)	(82.0)	<b>(79.6)</b>
○ 재 고 량	458	679	710	<b>1,061</b>

※ '05년 재고에는 특별 재고처리 물량은 감안하지 않았음

- WTO보조금 감축등으로 추곡수매의 수확기 물량흡수 및 가격지지 기능은 위축되고 있으나 이를 보완할 민간유통기능은 취약
  - WTO 보조금 감축('95 : 2조 344억원 → '04 : 1조 3,598억원)으로 그동안 수매물량은 큰 폭으로 감축
    - 추곡수매물량 : ('95) 955만석(생산량의 27%) → ('04) 494(14%)
  - '03년 농협 RPC 200개소중 45%(90개소)가 적자인 상황에서 쌀 소비 감소, 개방폭 확대등으로 경영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
    - \* RPC 가동율 : ('98) 52% → ('99) 48 → ('00) 47 → ('02) 44 → ('03) 45
  
- 외국산에 비해 국내산 쌀 가격 및 품질경쟁력이 취약
  - 일본은 '95년이후 계속 쌀값을 인하하였으나, 우리는 IMF이후 소득 안정을 위한 수매가 인상으로 국내외 가격차가 4~5배 수준에 달함
    - 국내외 가격차 : ('01) 4.8배 → ('02) 4.9 → ('03) 3.7 → ('04) 4.0
  - '02년이후 다수확 위주 생산정책에서 고품질 쌀 생산·유통 정책으로 전환하여 품질이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 미흡
    - 브랜드쌀(101종) 완전미율 : ('01) 71.4% → ('02) 74.2% → ('03) 82.1%
  
- 쌀전업농이 늘고 있으나 전반적인 영농규모가 영세하고, 노령 농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경영규모화 추진을 제약
  - 쌀전업농 : ('95) 2.5ha수준 14천호(논 3% 경영) → ('03) 3ha수준 86(25%)
  - 0.5ha 미만 쌀농가 : ('95) 496천호(41%) → ('03) 415(44%)
  - 60세이상 경영주 농가 : ('95) 634천호(42%) → ('03) 730(58%)



## 2) 양정제도 개편

### 가. 기본방향 및 추진실적

- 관세화 유예기간중 쌀산업 체질강화 유도를 위해 쌀농가소득 보전방안 마련을 전제로 공공비축제 도입 추진
- 수매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아 발생한 시장왜곡을 해소하고, 수급상황을 반영한 시장가격이 형성되도록 시장 기능을 정상화
  - \* 수매가격 : ('95) 133천원/80kg쌀 → ('00) 161 → ('03) 168 → ('04) 168
  - \* 시장가격 : ('95) 125천원/80kg쌀 → ('00) 159 → ('03) 163 → ('04) 162
- 양정제도 개편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완료(3.2일 국회 통과)

#### < 양곡관리법개정 주요내용 >

- ▶ 식량안보목적의 공공비축제 도입 근거 마련
    - WTO 허용보조 요건을 충족하도록 시장가격으로 매입·판매
  - ▶ 정부관리양곡 매입시 국회동의제를 대통령승인제로 전환
  - ▶ 수입쌀 소비자 시판에 대비하여 수입쌀을 포함한 정부관리 양곡의 매입자격기준 설정 근거를 마련
  - ▶ 양곡의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시기준을 강화하고 허위표시를 금지, 양곡 부정유통에 대한 벌칙 강화
- 올해 쌀 의무수입물량은 225천톤(4.4%)이며 소비자시판은 의무수입물량의 10%(225백톤)로 전량 국영무역방식으로 수입
- ※ '04년산 수매가격이 국회에서 전년대비 동결로 수정의결('05.2.25)되어 수매 양곡(쌀 494만석, 보리 49만석) 가격정산 실시중(631억원 추가 지급)

## 나. '05년 중점 추진계획

- 양곡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단기간내에 정비(6월초까지)
  - 용도별 매입 자격기준 및 거짓·과대 표시의 범위 등에 대한 홍보 강화(6~12월)
- 공공비축제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공공비축물량 매입 추진(연말)
  - 시장가격 결정방법, 비축물량, 매입·방출 방법 등 세부시행 방안은 전문가·농업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6월초)

### < 공공비축제 도입(안) >

- ▶ 비축목표 : 흉작시에 대비해 600만석 내외로 설정
  - ▶ 비축물량 매입 : 수확기에 산지가격으로 매입
  - ▶ 비축물량 방출 : 회전관리를 위해서 매년 일정물량을 방출
- 수입쌀에 대한 양곡표시제 준수 및 소비자시판 이익금 징수
    - 총량쿼타(20천톤)는 모든 국가가 참여할 수 있는 국제입찰로, 국별쿼타(205천톤)는 해당국별로 입찰 구매
    - 소비자시판용 수입쌀 구매입찰시 양곡 표시의무 준수 명시
    - 국내 도매가격 수준에서 유통이 되도록 소비자시판 이익금을 징수하여 쌀소득보전기금 재원으로 활용
  -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잉여재고 특별처리대책 추진
    - 휴경·타작물 재배시도 고정직불(WTO상 생산중립적 직접지불)을 지급함으로써 논에 콩 등 타 작물 재배확대 유도
    - 주정용 등 가공용 공급 확대 : ('04) 81만석 → ('05.P) 158 (증 77)

### 3) 쌀농가 소득보전 방안 시행

#### 가. 기본방향 및 추진실적

- 쌀 협상 이후 수입 증가와 가격 하락으로 쌀 농가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쌀농가 소득보전방안 마련
- 종전 직접지불제로는 농가소득안정에 한계가 있는 점을 보완
  - 논농업직불제는 WTO상 환경보전직불제로 분류되어 단가 인상 곤란
    - \* WTO상 환경보전직불제는 친환경농법과 일반농법과의 비용차이 만큼만 보전가능
  -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쌀값이 계속 하락할 경우 보전수준 미흡
-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고정직불제와 변동직불제를 도입하기 위한 쌀소득보전기금법 개정을 완료(3.2일 국회 통과)

#### < 쌀소득보전기금법 개정 주요내용 >

- ▶ 목표가격 : 쌀의 산지 평균 수확기 가격등을 감안하여 농림부 장관이 고시하되, 3년 단위로 변경('05~'07년목표가격 17만원/80kg)
  - 향후 목표가격을 변경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 ▶ 고정직불금 : WTO규정상 허용보조 요건에 맞도록 타작물 재배 및 휴경하는 경우에도 고정금액 지급(평균 60만원/ha)
- ▶ 변동직불금 : 목표가격과 당년 수확기 평균 쌀값과의 차이의 100분의 85에서 고정직불금(9,836원/80kg)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
- ▶ 대상농지 : '98.1.1 ~ '00.12.31일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현행 농업인 납부금 제도와 대상농지의 4ha 면적 상한은 폐지

## 나. '05년 중점 추진계획

### □ 쌀소득보전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조속히 정비(6월초)

#### ○ 목표가격의 산정방법 및 변경절차 등을 규정(시행령)

-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기준기간대비 변경기간)을 감안하는 세부적인 방안 강구

#### ○ 농업인등(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등록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시행규칙)

- 농지면적과 쌀생산면적등 직불금 지급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등록

### □ 지급대상 농업인 등록, 현지확인등을 거쳐 금년말 고정직불금 지급

#### ○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운영과 대상농지 확인 및 농업인 등록 등의 실무업무 수행을 위해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설치(5월)

#### ○ 쌀농가 소득보전 내용에 대한 교육·홍보(6월)

#### ○ 쌀농가소득보전직불금 지급 대상 농업인 등록(7~8월)

- 읍·면장은 농업인 등록신청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

#### ○ 준수 의무(농지 형상 및 기능유지 등) 확인후 고정직불금 지급(11~12월)

#### ○ '05년 수확기 쌀값('05.10~'06.1) 확정후 변동직불금 지급('06.4월)

#### 4) 고품질쌀 생산·유통 대책 추진

##### 가. 기본방향 및 추진실적

- 쌀 재배에서부터 최종 유통까지 품질향상을 위한 단계별 대책 추진
  - RPC를 중심으로 품종 통일,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도정·가공등 수확후 품질관리를 강화
    - 고품질 정부보급종자 공급을 '04년 28%에서 '08년 50%까지 확대
    - RPC 계약(품종·재배관리)재배 면적을 '10년 400천ha까지 확대
  - 유통단계 고품질 쌀 차별화를 위한 표시제도 및 점검 강화 추진
- '04년 품종·도정일자의 포장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에게 품질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우수브랜드 쌀 홍보 확대
  - '04년산 추곡수매부터 시·군별 수매품종을 3품종내로 제한
  - '03년부터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우수 브랜드쌀(12개) 선정 발표

##### 나. '05년 중점 추진계획

- 6월말까지 쌀품질고급화를 위한 보완대책 수립 -
- 재배단계 : 들녘별 고품질 품종 통일 및 지력 증진
  - RPC·농업인간 생산계열화를 통한 들녘별 품종 통일
    - 시·도 5품종, 시·군 3품종, RPC 2품종 이내로 선정 추진
    - RPC 계약재배 면적 : ('04) 289천ha → ('05) 320천ha
    - 고품질 정부보급종자 공급 확대 : ('04) 14.0천톤(28%) → ('05) 15.6(32%)

- 토양개량제 공급 및 녹비작물 재배확대로 **지력 증진 강화**
  - 규산질비료공급 : ('04) 184천ha, 326천톤 → ('05) 194천ha, 340천톤
  - 자운영·호밀 등 푸른들가꾸기 : ('04) 130천ha → ('05) 135천ha
- 시비(施肥)방법, 수확시기 등 기술지도 강화(사군 농업기술센터)
  - 질소질 비료 시비량은 중장기적으로 7~9kg/10a 수준까지 감축
  - \* '05.7.1부터 화학비료 차손보전 지원 중단

#### □ 수확후 관리단계 : RPC중심의 품종별 관리체계 구축

- 품질향상을 위해 RPC 건조·저장시설을 지원(50개소)하고, 저온저장시설 등 지원대상 범위 확대 검토
  - 건조·저장시설 실태조사 및 시설개선 계획 수립(6월)
- 고온급속 건조로 인한 깨진 쌀 발생 감축 지도(사군 농업기술센터)
  - \* 농협중앙회는 色體·싸라기 선별기 등 지원 계획('05 : RPC 20개소)

#### □ 유통단계 :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관리강화 및 브랜드 홍보

- 포장양곡 표시 점검을 지도에서 단속체제로 전환
  - '04년까지는 위반업체에 대한 주의조치(76건), 금년부터 과태료 부과
  - 생산년도, 중량, 품종, 원산지, 도정년월일 표시에 대한 단속 및 처벌강화(200만원 과태료 → 1,000만원 벌금)
- 매출액 등 **브랜드쌀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지자체별 사전 자체평가 및 선발행사 실시 등 **봄 조성**
  -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우수브랜드 12개 업체 선정 발표(9월)
  - TV방송과 연계 홍보하여 고품질 쌀에 대한 소비자인식 제고

## 5) 미곡종합처리장(RPC) 활성화 및 쌀 소비촉진 유도

### 가. 기본방향 및 추진실적

- RPC의 경영혁신과 건조저장 시설 확충으로 공공비축제 도입에 따른 수확기 정부매입물량 감소분 흡수 등 민간유통 활성화
  - 공공비축제 도입에 따라 정부 수확기 매입량은 '04년 494만석에서 300만석 수준으로 감소될 전망
  - RPC 매입량을 '04년 유통량의 51.6%(1,300만석)에서 '10년 70% 수준까지 확대 추진
  
- RPC 경영 건전화를 위해 '04년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운영자금 차등지원체계를 처음 도입하였고 RPC통합을 추진
  - \* '04 RPC 통합사례 : 충남 연기, 전북 정읍, 전남 보성 등 3개 지역
  
- 현재의 쌀 소비감소 추세 감안시 '13년에 1인당 60kg대 소비 전망
  - \* 외국사례(1인당 연간 소비량) : 일본 61.9kg, 대만 50kg 수준
  
- '02년부터 젊은층 대상 쌀소비촉진 홍보 및 가공품 개발 추진
  - 방송인 등 유명인을 홍보대사로 위촉, 러브米홍보 추진
  - 국민참여를 위한 러브米 마라톤 대회·농촌체험 캠프 등 실시
  - '04년 UN 쌀의 해 관련 특집다큐멘터리 제작·방영
  - 흑미음료, 발효제품, 현미식 취반기법 등 쌀 가공제품을 개발하여 기술이전 추진중(한국식품연구원)

## 나. '05년 중점 추진계획

### □ RPC 시설지원 및 경영개선 노력을 지속 추진

- 건조저장시설(50개소) 신규설치 및 노후시설(50개소) 개보수 지원
- RPC 경영평가에 따라 지원금액 뿐아니라 금리도 차등지원(0~2%)
  - '05년 경영평가 지표를 마련, 평가실시(3~5월)
  - \* '04년 평가지표를 보완하여 수확기 벼 매입능력·시설투자액 부문 반영

### □ 통합 RPC의 조기 경영정상화와 RPC 통합 확대 유도

- 통합 RPC에 대해 경영컨설팅 비용 및 무이자자금 지원 추진
- 농협의 통합 RPC는 농협법상 공동사업법인 전환을 유도하고, 전문가 중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유도
  - \* '05년 통합예정 RPC : 광주광역시, 경기 용인, 전북 김제·고창, 전남 함평
  - \* 농협중앙회도 통합RPC에 경영안정자금, 시설·운영자금 집중 지원 계획

### □ 쌀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가공품 개발 지원 등

- 고품질 쌀 식별 및 구매방법, 가정내 보관방법 등 소비자 교육·홍보
  - 소비단계에서 일정수준 품질 유지를 위한 소포장쌀 구매 유도
    - \* 일본은 10kg이하 소포장 양곡 유통량이 80% 이상, 우리는 20% 수준
- TV 방송프로그램 협찬, 쌀농사 체험이벤트 행사 등 개최
- 쌀가공식품·새로운 용도의 쌀 제품 개발 추진
  - ※ 농촌홍보센터·농림부·농진청·농협·소비자단체등으로 쌀소비촉진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쌀소비촉진 홍보 추진



## 6) 쌀전업농 육성 및 쌀 생산기반 확충

### 가. 기본방향 및 추진실적

- 농업인력 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 **쌀전업농 규모화**를 추진
  - '10년까지 평균 6ha 수준 쌀 전업농 7만호를 육성하여 **벼 재배면적의 50%**(430천ha)을 담당
- '04년 경영이양직불제를 연금방식으로 개선(월 241천원/ha)하고 **쌀전업농육성종합대책 수립**('04.8월)

### 나. '05년 중점 추진계획

- 쌀 전업농의 **영농규모화** 지원 및 생산기반 정비
  - '05년 벼 재배면적의 30%(297천ha)를 쌀 전업농이 담당하도록 유도
    - 전업농이 12천ha의 농지를 매입·임차할 수 있도록 지원(4,769억원)
  - 쌀전업농과 RPC간 계약재배 확대를 통해 판로확보 및 부가가치 제고
  - 경영컨설팅 지원 및 자연재해지원 확대 추진
  - 재해대비 안전영농을 위해 **농촌용수개발** 등 추진('05년 수리답율 78.1%)
    - 대·중규모용수개발 : 112지구 53천ha(준공 16지구 10천ha) 등
- 농업·농촌기본계획에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05년말)
  - 전문가 연구, 농특위·농민단체 논의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 추진
    - 적정 소비모형, **국내 생산 효율성** 및 정책수단을 검토하여 설정
  - 농지보전, 식량수급정책 등에 **중장기 농정지표로 활용**

---

## 정책목표 2. 전문 농업경영체 성장기반 구축

---

### 1) 정책여건

- 개방화에 대응할 기술·경영능력을 갖춘 경영체 육성 필요
  - 60세이상 농가경영주가 계속 증가 추세
    - \* 경영주비율(40세미만/60세이상) : ('90) 15/31 → ('03) 3%/58%
  - '03년 현재 법인경영체는 **5,432개소**(영농조합법인 4,274, 농업회사법인 1,158)
- 전업농 등이 빠르게 증가('03현재 163천명)하고 있으나 아직 규모화가 미흡하며, 법인경영체의 수익성도 낮은 수준
  - 쌀 전업농 생산비중 : ('00) 18% → ('02) 23 → ('04) 28
  - 축산 전업농 사육비중 : ('00) 60% → ('02) 65 → ('04) 71.4
  - 1억이상 영업이익 법인비중 : ('00) 10.7% → ('01)12.2 → ('03) 10.9
- 농가 경영 및 소득안정을 위해 직접지불제도와 농작물 재해보험제도를 도입·시행중에 있으나 아직 충분한 역할 미흡
  - 직접지불제가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미국 17%)
  - 재해보험은 과실 6개 품목에 대해 시행중이고, 향후 수도작 등 대상품목 확대, 거대재해로부터 안전보장체제 구축이 시급
- 협동조합 개혁과 지역단위 산·학·관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영세 소농구조의 한계 보완 필요
  - 농촌 투자유치와 영농규모화 촉진을 위해 농지제도 개선 필요

## 2) 전문 농업경영체 육성

### 가. 기본방향 및 추진실적

- 인구 감소 및 고령자 탈농에 대비('03년 126만 농가 → '13년 80),  
농가 유형별로 차별화된 지원대책 마련
  - 정예농업인력 20만호가 전체 농업생산량의 50%이상을 담당
  - 중소농은 복합영농·친환경농업, 협동조합 중심의 조직화를  
통해 생산·유통 과정에서 고부가가치 실현
  - 고령자 탈농 및 이농 지원을 통하여 원활한 구조조정을 유도
- 신규 영농정착과 기존인력의 정예화를 추진, '13년까지  
96천호 육성(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 마련 '04.12)
  - 젊고 유능한 신규인력(연평균 4,500호)의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강화
  - 기존농가의 교육경영 지원으로 이·탈농 인력대체(연평균 5,100호)
- 전문 농업경영체 활성화를 위해 금융세제 개선 및 규제완화('04)
  - (재)농업정책자금관리단을 설치, 정책자금취급기관 감독 강화
  - 축산경영체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농협이외 금융기관도  
취급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농업인의 자금이용 편의를 개선
  - 농업소득세 5년간 과세 중단,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배제 등 세제 개편
  - 농업법인에 대한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제한 완화

## 나. '05년도 중점 추진계획

□ 다양하고 체계적인 **창업농 정착지원**으로 **신규인력유입** 촉진

○ **영농정착자금** 지원단가의 상향조정('04년 : 1억원 → '05년 : 1억2천만원) 등 영농기반 조기 확보 유도

\* '05년 후계농업인육성 : 창업농지원 800억원(1,000명), 종합자금지원 7,511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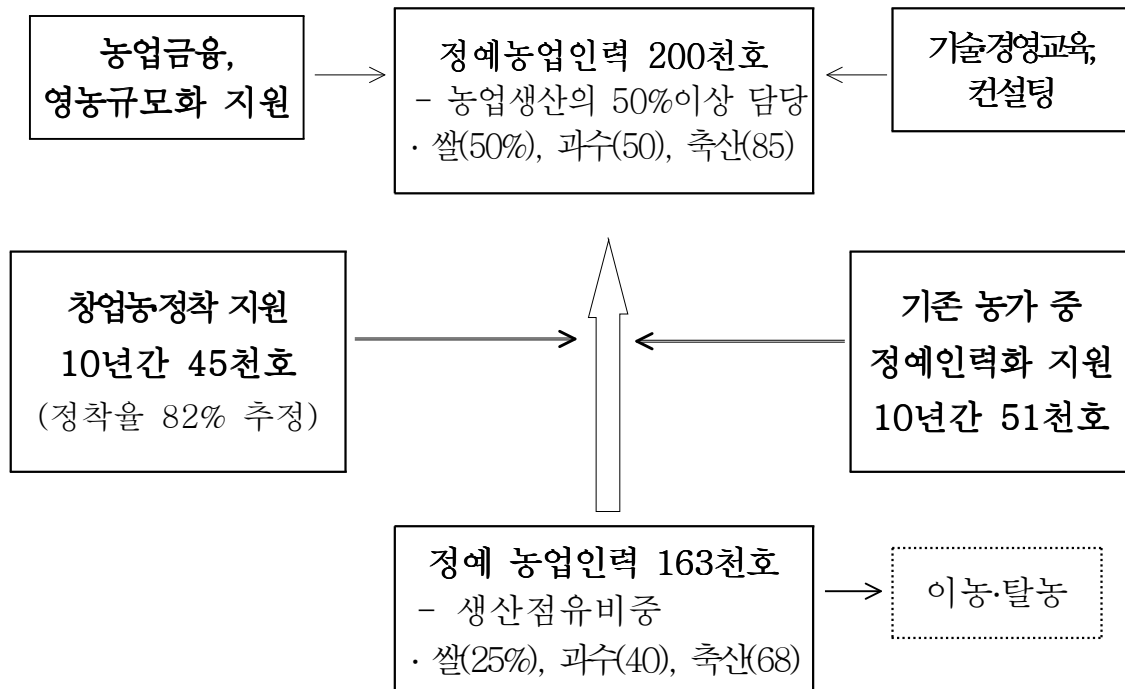
○ **젊은 우수인력**의 농촌유입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농업인턴제**(100명) : 미취업청소년의 영농 실무 및 연수 지원

- **대학생창업연수**(100명) : 대학생의 영농창업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신지식농업인** 등 선도농가가 **창업농의 영농정착**을 밀착지원 하는 **창업농 후견인제**(100명) 신설

### <정예 농업인력 육성체계>



□ 한국농업전문학교를 정예인력 양성의 핵심기관으로 개편

○ 졸업생 보수교육 강화 및 교명변경을 통한 위상제고 추진

- 졸업후 3년이상 영농종사자를 대상으로 1년간 유통·가공 등 추가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과정 개편

\* 한농전 졸업생 영농정착율 96%, 이중 20%가 1억원 이상 영농매출 실현

○ 현행 정규과정을 축소한 **직업훈련과정**(3~12개월) 별도 신설('06)

\* Sandwich식 교육과정 : 전공 이론(학교), 현장실습(농장), 전공심화 및 창업설계(학교)

□ 의식개혁과 자구노력 유도 방향으로 **농업인 교육 체계 개선**

○ 농민단체 중심의 **자율교육** 기능을 대폭 확대('05 : 10억 지원) 하고 지역농협·대학과 연계한 **현장밀착형** 교육 추진

- **작목선택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책임질 수 있는 교육 실시

○ 농업인이 교육기관, 교육과정을 스스로 선택·이수할 수 있도록 **농업인 교육쿠폰(Voucher)** 시범사업 추진

○ 기존 교육과정은 **품목별·수준별 전문과정**으로 세분화

- **성공한 농업인**을 발굴, 교육강사로 활용하여 **벤치마킹** 유도
- 정보화 교육은 공모방식 확대 등 교육방식 다양화

□ 농업인들의 농업정책자금 대출 편의 제고를 위해 취급 금융기관을 시중은행도 취급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

○ 자금수요가 많은 농기계구입자금, RPC운영자금, 종합자금, 농축산경영자금에 우선 도입

□ 금융기관이 사업 타당성 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종합자금 방식을 확대**하여 가능성있는 농업경영체에 대한 집중 지원체계 확충

○ '05년부터 농기계구입자금(1천~2천만원) 및 고품질우량 종자 개발지원 사업을 종합자금방식으로 전환

○ '04년 신설된 「(재)농업정책자금관리단」의 농협 등 정책자금 취급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기능도 강화

□ **농업경영체 활성화 및 벤처농업 지원체계 구축**

○ 전문기술 및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민간컨설팅 지원 확대**  
- 보조율 상향 : 50% → 70, 지원대상 추가 : RPC, 쌀전업농 등

○ 농업법인 회계처리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을 조기에 마무리**

○ **창업보육센터 신설 및 운영비 차등지원**을 통해 벤처농업 활성화

- 창업보육센터 : ('04) 3개소 → ('05년) 1개소 추가(7억원)

- 보육센터 평가를 거쳐 운영비(1억5천만원) 차등 지원

○ **농업벤처창업경연대회(상금3천만원) 개최**로 우수아이템 발굴지원

○ 농업경영체간 정보공유 등을 위한 **농업경영CEO협의회** 설립 지원

□ **농업관련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개발 및 자금 지원

○ 식품 등 농업관련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자금 지원(34억원)

○ 농기계·시설자재 생산 중소기업 **운영자금** 지원(200억원)

- 농기계 생산원자재 구입, 농업용 기자재 생산설비 등 지원

### 3)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장치 강화

#### 가. 기본방향 및 추진실적

- 개방화의 진전으로 인한 농업경영체의 **소득안정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직접지불제 대폭 확대**
  - '13년까지 농가소득 중 직불제 비중을 현행 2%수준에서 10%까지 확대
  - 농업구조개선촉진을 위해 경영이양직불제를 연금방식으로 확대개편
  - **친환경축산직불제·조건불리직불제** 시범사업 추진
  
-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를 확대 개편, 재해농가 경영안정 강화
  - 현재 시행중인 6개 품목(사과·배·감귤·단감·복숭아·포도)을 '13년까지 수도작, 시설채소, 임산물 등 30개 이상으로 확대
  - '04년 **농작물재해보험법을 개정**하여 거대 재해에 대비한 국가재보험제 도입, 기금 설치 및 운영비 전액지원 등 근거 마련

#### 나. '05년 중점 추진계획

- **중장기 직불제 추진계획**을 마련(6월), 추진체계 재정비
  - 직불제를 ①**소득보전형** ②**공익적 기능확산형** ③ **구조개선촉진형**으로 체계화하고 직불제간 상충문제(농업구조조정 저해 등)방지방안 강구
  - 직불제의 효과적인 시행기반 마련을 위해 **농가등록제 도입** 추진
    - 시행방안 연구용역(11월까지), 도상연습 후 추진방안 확정

- 다양한 직접지불제 본격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6억원) 신규 추진
  - 조건불리지역(123억원)·친환경축산 직불제(58억원)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06년부터 본격 추진
    - 조건불리지역 경지경사도 조사를 완료하고 '06년부터는 도서 지역까지 확대
  
- 농작물재해보험 국가재보험제를 도입하고, 재해보험대상 품목 확대 등 제도 개선 추진
  -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및 손해평가요령 등 하위법규 개정(3월)
    - 보험료 할인·할증 및 손해평가방법 등 제도개선방안 마련(3월)
  - 국가와 농협 등 재해보험 사업자와의 재보험 계약 체결
  - 수도작(벼)에 대한 재해보험 도입 방안 연구용역 추진
  
- 가축공제 대상 가축 확대 및 가입률 제고
  - 대상가축 : (현재) 소, 돼지, 닭, 오리, 말 → (추가) 꿩, 메추리
  - 가입농가 사육 가축에 대한 무료 검진 확대, 가축공제 사업 홍보 강화 등으로 가입률 제고 추진
    - 주요 축종 가입률('04→'05) : 소 7%→10, 돼지 50→56, 닭 22→28



## 4) 농업협동조합 개혁

### 가. 기본방향 및 추진실적

- 농업인 등 전문경영체의 농산물 판매지원을 위해 일선조합의 산지유통혁신 및 합병 등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 전문화·규모화된 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광역합병조합이 농산물 판매를 책임지는 체제를 구축
  - 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조합이 1개 시·군 이상을 담당
- 농협개혁의 법적 기틀 마련을 위해 '04년 농협법 개정
  - 중앙회장 비상임 전환 및 이사회 기능강화, 조합장 선거관리 선관위 위탁, 조합공동사업법인 제도 도입 등
  - \* 농민단체·농협이 법 개정과정에 참여하여 제출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

### 나. '05년 중점 추진계획

- 개정 농협법('05.7.1 시행예정)에 따른 하위법령, 자체 정관·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상반기중)
  - 대표이사 책임경영체제로 중앙회 경영구조 정비, 조합장 선거 위탁관리 방법 마련, 조합 설립인가 기준 강화 등
  - 농축산물 유통사업 혁신 등 법이외 개혁과제에 대해서도 이행실적에 따른 조합별 차등지원 등을 통해 개혁을 가속화
  - \* 법 이외 개혁과제를 반영, 농협이 「새농촌새농협」 운동으로 자율개혁을 구체화

- 개정 농협법으로 도입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활성화**를 지원하여 일선농협의 농산물 유통사업 혁신 유도
  -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조합과 동일한 **세제상 혜택**(법인세등록세 등)을 부여하도록 추진
  - 농산물마케팅조직 **운영자금** 및 **산지유통시설** 최우선 지원
  
- **중앙회가 조합의 자율합병**을 적극 유도하도록 지도하고, **부실조합**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
  - 정부의 일선조합에 대한 감독기능과 연계하여 **중앙회의 지도·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일선조합의 **자율합병**을 강력추진
    - \* 중앙회 스스로 '04.12월 ~ '05.1월간 21개 조합에 대해 합병 권고
  - '04년 결산결과를 점검하여 4월까지 **부실조합**을 추가로 지정하고 조합원에게 피해가 없도록 적기시정조치 실시
    - 조합원 수 등 인가기준 미달 조합도 상반기중 실사를 거쳐 합병명령
  
- 중앙회 **신·경분리**는 개정 농협법에 따라 농협에서 스스로 추진계획을 검토하되 정부와도 긴밀히 협조
  - 농림부내 「**신·경분리추진위원회**」를 설치(하반기), 농협의 추진상황 점검 및 농민단체·학계의 의견 수렴
    - '06.6월까지 제출토록 되어있는 자본금 확충방안, 경제사업 수지 개선방안 등 분리 전제조건 및 분리일정을 집중검토

## 5) 농지제도 개선 및 농지은행제도 도입

### 가. 기본방향 및 추진실적

- 시장개방 확대,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농산물 소비구조의 변화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지제도 개선 추진
  - 과도한 농지의 소유제한을 완화하고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농지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 DDA·쌀협상 이후 농지시장의 안정과 전업농 및 농업경영체의 영농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농지은행제도 도입 추진
  - 외국사례조사·연구용역을 통해 농지은행 도입방안 연구('04.12)

### 나. '05년 중점 추진계획

- 농지은행 사업의 법적 뒷받침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국회 계류중인 「농지법」 개정안이 조기 통과되도록 노력

#### < 개정안 주요내용 >

- ① 농지은행을 통해 장기임대하는 경우 임대허용
  - 이 경우 상속농지, 이농자 소유농지의 1ha 소유상한 예외도 인정
- ②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소유제한 폐지로 규모화·기업화 촉진
- ③ 농업보호구역의 전용제한을 강화하되, 농촌소득 증대 및 농촌 생활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설 설치는 추가로 허용
- ④ 농촌 투자 활성화 및 농촌활력 증진을 위해 농지조성비제도 개편
  -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국회 제출(하반기)

- 기존 영농규모화사업 담당기관인 농업기반공사를 농지은행 사업자로 우선 지정·운영하되, 향후 담당기관 확대 검토

\* 취득세·종합토지세 면제 등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협의

□ 금년중 전문가·농업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농지은행의 세부기능 및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2006년부터 본격 추진

○ 농지은행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법 개정에 따른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재원조달방안 마련

- 임대료, 수탁수수료, 정부출연금 등을 활용하고, 농지가격 급락시 영농규모화사업비, 농지조성비 등의 재원 활용 계획 수립

< 농지은행의 주요기능 >

① 농지가격 안정 및 이·탈농 지원을 위해 농지 매입

- 매입·비축농지는 전문농업경영체 등에게 임대 또는 매각

② 도시민 또는 이농·탈농하는 농업인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이 수탁, 전업농 등에게 임대하여 경영규모 확대를 지원

③ 부채농가·재해농가 등의 경영회생을 지원

- 농지은행이 부채농가 등의 자산을 매입(재원: 농지관리기금)
- 농가는 매각대금으로 부채 청산, 농지 등을 다시 장기 임차하여 영농
- 농가의 환매권을 보장, 경영안정 시점에서 재매입이 가능하도록 함

④ 농지유통화 포털 사이트를 통해 농지거래 정보 제공(6월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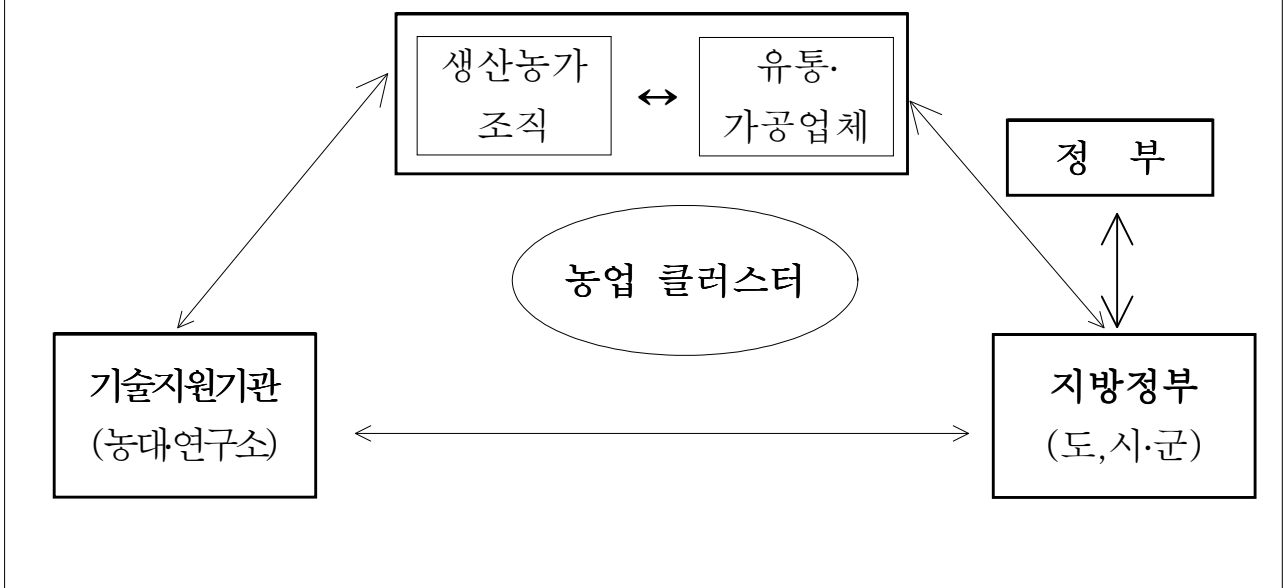
## 6) 지역농업클러스터 지원

### 가. 기본방향 및 추진실적

- 농업·농촌종합대책의 「지역농업발전계획」에 따라 지역 농산업 주체들의 역량을 집중하여 농업혁신과 농가소득을 증대
- 역량을 갖춘 시범 클러스터를 선정, 집중 육성하여 확산 유도
  - 지역 농업전문가들과 T/F를 구성, 추진방안 마련('04.12)
  - '13년까지 전국 100개의 지역농업클러스터 육성 추진
- 참여주체의 자발성 유도와 산·학·관의 유기적 네트워크 형성으로 농촌형 지역혁신체계(RIS)의 단계적 구축 추진

#### <지역농업 클러스터>

◇ 일정지역에 특화된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 등과 관련된 주체를 중심으로 산·학·관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가용자원의 최적이용을 통해 지역농업을 혁신하는 농산업 결집체



## 나. '05년 중점 추진계획

- 지역농업 클러스터 시범사업 대상(10여개소, 120억원) 선정(4월)
  - 지자체·생산자조직·유통가공업체·대학 등이 지역농산업 클러스터사업단을 구성하고 클러스터 사업계획을 수립·신청
  - 시도 농산업 혁신위원회가 사업계획을 심사·평가하여 선정하고 중앙 농산업 혁신위원회에서 최종 선정(지방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
    - \* 심사기준 : 자발성·혁신성·응집성·성공가능성 등 16개 세부지표 활용
  - 클러스터당 연간 10~30억원(국고 50%)씩 3년간 연속 지원 원칙
    - 지원내용 : 주체간 네트워크 구축·전문 교육프로그램·조사연구 등 혁신활동사업, 전략품목 생산기반 조성·마케팅 등
    - 매년 성과를 엄정히 평가하여 추가지원 및 지원중단 여부 결정
- 지역특구제도, 기존 농림사업 및 농진청 연구지원 사업 등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종합적·지속적인 지원시스템 구축(5월)
- 생산·유통·가공 등 지역농산업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중장기 농산업 클러스터추진계획 마련(12월)

### <보성녹차 클러스터 사례>

- 녹차 생산현황 : 군 농가의 3%(274호)가 재배(574ha)
- 참여 주체별 역할 분담
  - 생산·유통주체(녹차연합회, 가공업체) : 녹차 생산, 품질 및 판매 혁신
  - 연구주체(전남대, 한국식품연구원) : 보성녹돈 등 60여 품목 연구
  - 행정주체(도, 군) : 사업지원, 관광사업 등 타산업과 연계 추진

---

## 정책목표 3. 농축산물 유통 효율화 및 소비촉진

---

### 1) 정책여건

- 농산물 시장구조가 생산자 중심(Seller's Market)에서 유통업체 중심(Buyer's Market)으로 급속히 변화
  - \* 대형유통업체 청과물 유통점유율 : ('98) 3.6% → ('00) 6.5 → ('03) 9.7
- 마케팅역량이 강화된 산지조직 육성과 산지유통센터(APC)의 처리능력·활용도 제고가 필요하나 아직 미흡한 수준
  - \* APC 처리능력('03) : 804천톤(전체 청과물 생산량의 6%수준)
- 불필요한 농산물 물류비 절감이 유통효율화의 핵심 요소이나, 산지 유통조직의 영세성 및 도매시장의 시설미비 등으로 효과 미흡
- 생활패턴 변화에 따라 식품가공·외식업체가 농산물 주소비자로 등장
  - \* 제조업GDP대비 식품산업GDP비중: ('98)14% → ('00)16 → ('02)20
-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농업-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 하면서, 이와 관련한 브랜드화·소비촉진 등 마케팅 강화가 시급
- WTO 출범이후 국산 농산물의 수급불안 가능성 증가와 더불어 농식품 수출기회도 확대
  - WTO에 의해 제한되는 정부의 수매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자조금 조성을 통한 생산자단체의 자율적 수급 조절기능 강화 필요
  - 수출 농식품의 국내생산기반 정비와 마케팅 능력 향상 필요

## 2) 산지 유통조직 육성

### 가. 기본방향 및 추진실적

- 시장교섭력을 갖춘 산지 마케팅 조직을 집중 육성
  - '13년까지 개별농가 조직화와 마케팅 역량 강화를 통해 산지 마케팅조직 유통점유비를 원예 50%, 축산 60%로 확대 추진
  - 상품 특성과 농가조직화 정도 등을 감안하여 품목군별로 접근
    - 농산물 : 소규모 다품목 출하조직을 광역 전문유통조직으로 육성
    - 축산물 : 브랜드가치를 가진 경쟁력 있는 유통조직 성장 지원
- 규모화·전문화된 농산물 공동마케팅조직 9개소 선정('04.12)
  - \* 매출규모·시군단위 이상 권역확보·공동 브랜드·품질관리 기준 등 전략적 마케팅체제를 갖춘 품목전문 조합, 연합판매 조직, 유통기업형 등 선정
- 산지유통센터(APC), 축산물종합처리장(LPC)경영평가 및 구조조정 추진
  - 종합평가 후 우수 조직 지원강화 및 부실 APC 지원 중단

### 나. '05년 중점 추진계획

- 규모화·전문화된 농산물 공동마케팅조직을 벤치마킹사례로 육성
  - 공동마케팅조직 선정('05:10개소)시 농가회원제, 공동선별·공동정산, 품질관리등 마케팅조직의 운영방식 심사
  - 공동마케팅조직의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추진
    - 무이자 자금지원(30억원 한도), 홍보 및 정보화 비용 지원 (조직당 2천만원), 외국인 근로자 우선배정 등 추진
    - 과일·채소류 품질균일화를 위한 공동선별비 40~50% 지원



— < “햇사레” 공동 마케팅 사례 > —

- 경기·충북 복숭아 연합사업단을 구성, 브랜드 통합
  - 충북 음성·감곡농협, 경기 장호원·동부과수 등 4개농협으로 구성
  - '03년부터 “햇사레” 복숭아 공동브랜드를 출범하고 4개 농협 조합원(1682농가) 생산량(연간 9천여톤)을 단일 브랜드로 출하
  - '04년 프리미엄 브랜드 출시, 재배 및 수확후관리 통일 추진
- 공동브랜드 매출액 : ('03) 284억원 → ('04) 321억원

□ 지역축협 등을 중심으로 규모화된 축산브랜드경영체 육성

- 일정 규모이상 농가 조직화, 품질·위생관리 브랜드 규약 제정 등 일정기준을 갖춘 경영체(30개소 내외)를 선발, 집중 지원
  - 산지 축산물 생산·유통지원 자금(932억원), 무이자 인센티브 자금(300억원), 포장재비 등 지원
- 체계적인 브랜드 관리를 위한 경영지침서 발간 보급(4월) 및 자체진단 프로그램 개발(5월)

□ APC·LPC등에 대한 경영평가 후 우수시설에 대한 차등지원

- APC는 전문컨설팅업체에 의한 종합평가 실시(4월) 후 지원 차등화
  - 회원농가, 유통시설, 브랜드 인지도 등 산지유통기능 종합평가
  - 평가결과에 따라 부실조직·APC는 자금지원 중단, M&A 촉구
- LPC는 경영평가(3월) 실시 및 지원 대책 수립
  - LPC의 경영활성화를 위해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제 실시 및 운영자금 차등지원(상위권 금리 0%, 중위권 3%, 하위권 지원 배제)

### 3) 농산물 물류효율화 및 도매시장 제도 개선

#### 가. 기본방향 및 추진실적

□ 파렛트 사용과 하역기계화를 촉진하여 농산물 물류 효율화 추진

○ 운송하역, 감모·청소비 등 상품성 향상과 관계없는 물류비 절감

\* 농산물유통비용은 농산물 가격의 43.7%를 차지하며 전체 물류비 중 소모성 물류비 비중은 56% 수준('03년)

□ 경매위주의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과 시설 현대화 추진

#### 나. '05년 중점 추진계획

□ 산지 농산물의 파렛트 출하 및 도매시장 하역기계화 촉진

○ 파렛트 출하 조직에 무이자 인센티브 자금('05년 : 350억원)을 지원

○ 도매시장내 물류 효율화를 위한 설비·장비 지원 (143억원)

□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 및 시설 현대화 계획 수립

○ 定量·定品·定時 거래가 가능한 예약상대거래, 매취상장거래 및 겸영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농안법 개정 추진

○ 하역기계화 등 물류비 절감을 위한 시설 개선추진(금년중 타당성 조사)

□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종합적 물류효율화 대책 수립(11월)

○ 농림부·농협·전문가 등으로 T/F구성 및 농산물물류혁신위원회 설치

#### 4) 소비촉진 및 농업·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 가. 기본방향 및 추진실적

- 식품가공·제조·외식산업 등 성장하는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농산물의 소비기반 확대 추진
  - '04년 「(가칭)농산물가공 및 식품산업육성법」 입안 및 관계부처 협의
- 소비자의 국산 농축산물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소비기반 확보를 위해 체계적 홍보전략을 수립·추진
  - '04년 농축산물브랜드 육성계획 수립 및 각종 브랜드 홍보전 개최

##### 나. '05년 중점추진계획

- 국산 농산물과 식품산업간 푸드체인 강화를 위한 지원 추진
  - 외식·전처리업체 국산농산물 구매자금지원 시범사업추진(30억원)
  - 가공산업 및 전통식품산업의 원료수매자금지원, 경영컨설팅 지원
  - 전통민속주 육성을 위한 주세 추가 인하, 원료사용규제 개선, 전자상거래 허용확대 등 제도개선 지속 추진(상반기)
- 상반기까지 농식품산업육성 종합대책 수립
  - 농식품유통인프라 구축, 생산단체와 식품산업체간 계약재배 지원, 국산농식품 기술개발, 산지농산물 구매지원, 전자상거래 지원, 식품산업 통계조사체제 구축 등

- '05년 4월 출범예정인 농촌홍보센터를 중심으로 각종 이벤트, TV등 언론을 활용한 소비촉진 홍보 추진
  - “TV 연속 기획물” 및 “공익캠페인” 등 영상매체 홍보(15억원)
    - “세계로 가는 한국음식”, “우리 농산물의 비밀” 등
    - 주부·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건강식단 TV프로그램 제작 지원
  - 해외 우리 식문화전을 개최하여 농식품 마케팅 기회로 활용(15억원)
    - 한국음식요리 교실(일본, 중국, 대만 등), 꼬르동블루와 연계한 김치홍보, 한국식품 로드쇼 등 행사를 연중 개최
  - 농산물브랜드대전(9월) 및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10월), 소비자단체 중심의 우수 브랜드 평가 등 우수 농축산물 브랜드 홍보 강화
  - 우리술 페스티벌 개최(5월), 서울국제식품전 개최(11월)

< 농촌홍보센터 운영 >

- 조직 및 구성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설기관
  - 민간 홍보전문가를 채용하여 홍보의 전문성 확보
  - 예산 : 30억원(농특회계 10, 마사회특별적립금 20)
- 주요 기능 및 역할
  -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농업·농촌 가치 홍보
  - 우리 농산물 우수성 홍보 등 농식품 소비촉진 홍보
  - 119조 투융자사업 등 농정 홍보 및 농업인의 성공사례 확산 홍보
  - 농정 현안에 대한 국민 여론 및 동향분석

## 5) 농식품 수출 확대

### 가. 기본방향 및 추진실적

- 수출지원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수출 농식품의 경쟁력 제고
  - '04년 수출용 공동대표브랜드(Whimori)를 개발하여 시범 운영
  - 파프리카 등 주요 수출품에 대한 안전성 관리체계를 강화
- '13년 수출 50억불 달성을 목표로 수출농식품의 경쟁력 제고 및 해외 소비수요 확대를 위한 마케팅 지원 추진
  - '05년은 '04년 20.9억불 대비 10.3% 증가한 23억불로 설정
    - \* '05년 1억불이상 수출목표 품목 : ('04) 김치 → ('05) 김치·인삼
    - \* 중장기 수출목표 : ('05) 23억불 → ('08) 30 → ('13) 50

### 나. '05년 중점 추진계획

- Whimori 브랜드 인지도제고 등 농식품 마케팅 강화
  - \* '05년 Whimori 수출목표 : 파프리카 3,500톤, 국화 2,000만본, 배 300톤
- 한류열풍과 연계, 일본내 한국산 소비품 조성 마케팅 강화
  - “한일 우정의 해” 행사와 연계한 식문화 홍보 행사 개최
    - \* 아이치엑스포 기간(3월~9월)중 관련부처와 공동 개최 추진
  - 농식품 수출홍보대사 위촉 추진(1/4분기) 후 한국농식품 집중 홍보
  - 현지 유통업체와 연계한 한국 농식품 판촉전 연중 개최 추진
- 공동브랜드 참여업체에 대해 전문가를 활용한 품질관리

### 〈Whimori 브랜드 운영 사례〉

- 대상 품목 : 파프리카, 국화, 배 등 3개 품목
- '04년 실적 : 파프리카(62만불), 국화(120만불), 배(23만불)
- 브랜드 출범 및 인지도 제고 노력
  - 런칭쇼 (10.6) : TV도쿄 방영, 아사히신문 등 주요언론 보도
  - TV CF : '04. 10 ~ 11월, 110회 / TBS
  - \* 기타 국내외 박람회 참가 및 일본여행객 초청, 생산시설 견학 홍보 등 실시

### □ 수출용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유통기반 정비 추진

- 수출농산물 생산단지별 평가실시 후 우수단지에 대해 수출물류비를 7~10% 가산 지원하고 시설, 장비 우선지원
- 품목별 품질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수출단지 컨설팅과 연계한 품질기준 실천을 통해 **수출농산물의 품질규격화** 지원
  - 파프리카, 배, 국화, 장미, 방울토마토 등 품질관리 기준 제작(8월)
  - 수출단지별 전담 컨설팅에 필요한 자금지원 및 전담인력 알선
- 수출물류비 지원기준 상향 조정으로 **수출업체 규모화** 유도
  - 지원기준 : ('04) 10만불 이상 수출업체 → ('05) 15만불 이상

### □ 신규시장 개척 및 수출 유망품목 개발·육성 추진

- 수출박람회 참가(중국1회, 동남아4, 러시아1) 및 농식품 판촉전 개최
  - 김치 요리교실, 인삼 TV 광고 등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홍보 확대
- 연간 25개 품목을 선정, **상품개발비·시장개척비 등 지원(7억원)**

## 6) 자조금 제도 활성화

### 가. 기본방향 및 추진실적

- 가격불안이 큰 품목의 농업관측정보를 제공하고 자조금단체 활성화로 생산자조직 중심의 자율적 수급안정체계 구축
  - '13년까지 총 44품목(원예 34, 축산 10) 자조금단체 결성 추진
  - 계약재배·출하물량비중 : ('03)10.7% → ('04)12.3% → ('13)22%
  - 관측대상 품목 : 가격불안 요인이 큰 과채류, 축산물 26개 품목
- 수급조절 능력을 갖춘 생산자단체가 자조금을 조성할 경우 1:1 매칭펀드방식으로 지원을 해왔으나, 아직 성과는 미흡

### 나. '05년 중점추진계획

- 품목별 자조금단체 결성을 적극 유도
  - 원예 : ('04) 11개 품목 → ('05) 17(당근양파토마토 등 채소 4, 화훼 2 추가)
  - 축산 : ('04) 5개 축종 → ('05) 6(한우추가)
- 자조금단체의 생산 점유비중 확대를 유도하여 기능 강화
  - 임의자조금인 원예품목은 자조금단체의 생산점유비중이 높을수록 매칭자금 정부지원비율 차등화(5월, 농안법시행령 개정)
  - 축산물은 수급불안이 반복되는 품목에 임의자조금을 도입한 후 점차 의무자조금으로 전환

\* '04년 현재 축산 의무자조금은 양돈뿐이나 '05년 한우품목 추가조성

— <파프리카 자조금 사례> —

- 구성 : 253개 농가(전체 358농가의 70%)
- 농가단위로 판매액의 1%를 자조금으로 거출
  - 농가 조성액 : ('01) 1.2억원 → ('04) 2.5 → ('05.P) 6.0
- 국내외 판촉전, 마케팅, 농업인 안전성 및 기술교육, TV홍보 추진
  - 수출실적 : ('02) 32백만불 → ('03) 44 → ('04.P) 51
  - 국내소비는 총생산량의 20% 수준으로 증가('02년 약 10% 이하)

□ 축산 의무자조금 조성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의무 자조활동 강화

- 축종 특성에 따라 대의원 수 조정 및 수납기관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원활한 자조금 조성 도모
  - 금년중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의무자조금 조성에 따라 자조 활동 분야를 소비 홍보 위주에서 품질관리, 사전·사후적 수급안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유도

□ 원예상품 과잉생산시 폐기 등 수급조절이 가능한 계약재배 내실화

- 계약재배 물량 확대 : ('04) 950천톤 → ('05.P) 1,130
- 참여농가의 최소계약면적(0.2ha → 0.3) 상향 조정 등 계약재배 사업의 효과 제고

□ 산지생산출하 및 소비동향 관측정보 수집기능 강화

- 대도시 소비자패널단(1천명)을 구성, 소비동향 정보 수집
- 효율적 정보수집을 위해 모니터 요원에 PDA지급('05년: 160대)



---

## 정책목표 4. 농축산물 안전성 강화 및 친환경농업 확산

---

### 1) 정책 여건

-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안전성, 건강** 등 Well-Be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품질에 대한 **신뢰확보**가 핵심과제로 대두
  - 소비자는 식품구입시 가격보다 **안전성을 우선**하는 경향
    - \* '04년 농촌진흥청 구매실태 조사결과 : 안전성(41.5%) > 가격(12.7%)
  - 그동안 검사물량 확대,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도입 등 안전성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결과, 위생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으나 소비자 요구 충족에는 미흡한 수준
    - \* 농산물 안전성 부적합률 : ('98) 11천건/4.2% → ('03) 60/1.5 → ('04) 61/1.3
- **화학비료·농약 투입**에 의존해 온 농업생산 방식, 가축분뇨의 환경 부담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면서 **친환경 농업 필요성** 증대
  - '03년 화학비료 단위면적당 사용량이 350kg/ha, 합성농약 사용량이 12.7kg/ha로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
  - 가축 사육두수 증가에 따라 매일 137천톤('03년 기준)의 분뇨가 발생(연간 49,830천톤)하고 있으나, **경종농업과 연계 미흡**
- 국제 교역·교류의 증가로 **악성 가축질병 유입가능성**이 증대
  -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등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우려 제기
    - \* 구제역 '00년 15건, '02년 16건 발생, 조류인플루엔자 '03~'04년 19건

## 2) 농축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

### 가. 기본방향 및 추진실적

- 농장에서 식탁까지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및 점검 강화로 선진국 수준의 안전성 확보
  -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단속과 제재를 강화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 및 위반농산물 유통 근절
    - \* '08년까지 농산물 안전성조사 부적합률 1.1%, 축산물 잔류물질 0.2%이하 및 미생물 검사 위반율 0.4%이하 유지를 목표
- 우수농산물 관리제도(GAP) 및 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 시범사업 실시(21개 품목, 357농가)
  - \* GAP : 생산수확 후 처리단계의 위해요소를 종합적으로 예방관리하는 제도
  - \* Traceability : 생산부터 판매단계까지 각종정보·이력사항을 관리하는 제도
- 축산물 위생·안전성제고 종합대책을 수립('04.7)하고 한우 우수 브랜드(9개)에 이력추적 시스템 시범 도입('04.10)

### 나. '05년 중점 추진계획

#### 《 농산물 안전성 관리 》

-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의 조기 정착 및 효과 가시화 추진
  - 제도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농산물 품질관리법 개정 및 96개 품목에 대한 재배·안전성 관리지침 마련('04 : 82)
  - GAP·Traceability 시범사업 확대 실시 : ('04) 357호→ ('05) 700호

○ GAP·Traceability **전문가 양성 및 소비자 홍보**

- 한국농업전문학교에 교과과정 마련('05년 140명 교육)
- 지하철 광고, GAP농산물 판촉행사 등(4억원)

○ 수확후 처리 과정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산지유통센터(APC) **위생설비 지원 사업 추진**(2개소, 개소당 10억원)

□ **농업인 안전성 교육 확대 실시 및 안전성 조사 강화**

○ 농약 오·남용 방지 등 안전성 관련 내용 집중 교육

- 시·군별 새해 영농 설계교육(약 50만명) 등 활용
-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 집합교육 신규실시(6월, 12월)

○ **깻잎, 상추 등 30개 취약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집중 조사

- 조사물량을 확대('04 : 60천건 → '05 : 62)하고, 시·군 단위 정밀 분석실을 점진적으로 확충('05년 3개소, '09년까지 38)

○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는 폐기 등 법적제재 외에 직접지불제 등 **정책 지원에서 불이익 조치 부과**

□ **원산지표시 위반 등 위법 행위에 대한 감시체계 및 벌칙 강화**

○ 허위표시에 대한 처벌 형량을 7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으로 강화(현행 :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 명예감시원(3,800명)을 대폭 증원·생산자 등의 감시활동 참여 확대

- 금년에 15,000명 수준으로 증원한 후 '07년까지 10만명 선으로 확대

○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 인상 추진(현행 100 → 변경 200만원)

## 《 축산물 안전성 관리 》

- 사육단계에서 농가의 위생관리 강화 및 안전관리(HACCP) 기준 제정
  - \* HACCP : 원료관리·도축·가공·포장 등 각 생산·유통 단계별로 위해 요소를 예방·통제하는 관리제도
  - 동물약품 안전사용 기준, 출하전 휴약기간 등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순회교육 2회)하고 항생제 등 초과검출시 제재 강화
  - 금년말까지 돼지 사육단계에 적용할 HACCP 지침을 개발
    - '06년 양돈부터 적용하고, 연차적으로 다른 축종까지 확대
  
- 도축·가공단계에서 미생물과 잔류물질 등 검사 강화
  - 식육에 대한 잔류물질 및 미생물검사 강화
    - 검사물량 확대('04→'05) : 잔류물질 102→120천건, 미생물 100→120
    - 도축검사원 충원(6월 100명)으로 도축검사 내실화
  - HACCP 운용 수준을 평가, 운영자금(578억원) 차등 지원
    - 우수 도축장은 무이자, 중위권은 3%, 하위권은 지원 제외
  - 닭·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07년)를 위해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부위별 정형기준 등 마련
  
- 유통단계에 적용할 안전관리기준을 제정하고 위생 관리 강화
  - 판매업소 등에 HACCP 적용을 위한 지침 제정('05.6)
  -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식육판매업소를 신규 개설할 수 있도록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07년부터 시행)
  - 쇠고기 이력추적 시범사업은 2월부터 시험 가동

### 3) 자연순환형 친환경 농업 확산

#### 가. 기본방향 및 추진실적

- 화학비료·농약 등 사용량을 '13년까지 40% 수준 감축하고, 친환경 농산물 유통 비중을 '10년까지 10%로 확대
  - 경종과 축산을 연계하는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 '04년 친환경농업육성 및 농산물안전성 확보대책을 수립('04.4) 하여 중장기 친환경농업 확산 로드맵 제시
  - 농가별, 소규모 지구 단위의 사업으로는 친환경 농업을 확산 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추진
    - '13년까지 경종과 축산이 연계된 1,000ha 규모의 단지 50개소 조성
- '04년부터 친환경축산직불제를 시범 도입하였고 환경부와 공동으로 「가축분뇨관리·이용대책」('04.11)을 수립
  - 가축분뇨 감축을 위한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도입 및 가축 분뇨 자원화 촉진을 위한 법령, 지원체계 정비 방안 등 제시

#### 나. '05년 중점 추진계획

- 농자재 지원 체계 개편으로 저투입 농법을 조기에 확산
  - 금년 7월부터 화학비료에 대한 차손보전사업을 폐지하고 가축분뇨 퇴비 등 유기질 비료의 가격 보조사업 지원 확대
    - 유기질 비료 지원 : ('04년) 60만톤, 210억원 → ('05년) 70, 245
  - 딸기·토마토 등 시설원예작물 천적방제 지원 시범 추진(300ha)

-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 개편 및 친환경 농산물 유통 지원 강화를 통해 친환경인증 농산물 비중을 '05년 3.5%까지 확대('04 : 2.5%)
  - 현재 4단계인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 간소화, 친환경 농산물 유통업자 인증제도 도입 등 추진(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
  - 친환경 농산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특별시와 광역시 등 대도시 중심으로 소비자단체와 합동 점검 실시(매분기)
  - 무항생제 친환경축산물 인증제 도입 추진
  
-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시범조성('06년)을 위한 사업모형 개발
  - 평야지·수계변 등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모형 개발
    - 모형별 기초설계 및 광역단지 조성 예정지역 기초 조사(상반기)
    - 세부사업 지침 마련 및 '06년도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하반기)
  - '06년 시범사업 실시, 평가후 '07년 이후 전국 확대실시
  
-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유도
  -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개보수사업 지원조건 개선(284억원)
    - 지원조건 : ('04) 보조 30%, 용자 70 → ('05) 보조 50, 용자 50
    - 퇴·액비 품질향상을 위해 가축분뇨 전(前)처리시설 추가 지원
    - \* '05년 축분퇴비 판매량 : 170만톤 이상(최근 3년간 평균 대비 5% 증가)
  - 악취저감 등 가축분뇨 비료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강화

□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금년중 **환경부와 공동**으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가축분뇨 부분을 분리 제정

○ 주요내용 : **양분총량제**, 가축분뇨 퇴·액비 관리 기준 등

\* 양분총량제 : 양분축적이 높은 지역은 차년도 양분총량감축목표를 제시, 미이행시 축사 신축 제한, 정책자금 지원 축소 또는 배제

○ 지역별 양분총량 등의 조사·연구를 위해 농림부·농진청·생산자단체·전문가 등으로 **축산환경 모니터링 T/F** 구성·운영

- 지역단위 「양분총량제」는 '07년 시행을 목표로 금년중 세부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친환경축산직불제 정착 및 가축 밀집사육지역 농가 이전 유도**

○ 친환경축산직불 참여농가 확대 : ('04) 512호 → ('05) 900

- 친환경 축산에 대한 홍보 및 교육('05.3~4월)

- '04년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 직불금 요건·단가 등 **개선방안 마련** 및 친환경 축산 우수사례 홍보('05.3월까지)

○ 가축 밀집사육 지역 내의 농가가 축사를 이전하는 경우 환경 친화적인 **축사신축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실시

- '05~'07년간 6개소 추진(돼지·닭·젓소농가)

## 4) 가축방역 체계 강화

### 가. 기본방향 및 추진실적

- 악성 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진화된 방역체계 구축**
  - 국경검역을 강화하여 구제역 등 악성 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국내 방역은 소독·예찰 등 **차단 방역에 중점**
  - 건강한 가축 사육환경을 조성하여 질병 발생요인을 최소화
- '03.12~'04.3월간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 농가, 지자체 등과 총력 대응하여 조기 종식(10개 시·군, 19건 발생)
  - 사전 예방적 방역체계 강화,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위한 **가축방역 종합대책 수립('04.8)**

### 나. '05년 중점 추진계획

- 해외악성 가축질병 유입 방지를 위해 **공항·항만 검역 강화**
  -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 발생 국가의 축산물 등 수입 금지
  - 탐지견 집중 배치로 육류 휴대품 검색 확대('04: 19천건 → '05: 20) 및 여행객 발판 소독조 설치·운영
- 농가 및 지자체의 **자율적 소독, 예찰 등 방역 활동** 및 책임 강화
  - 농장소독 및 예방접종 실시, 전염병 의심가축 조기신고 등에 관한 농가교육 실시(분기별 집합교육)
    - 시·군간 교차점검 방식으로 단속의 실효성 제고



- **공동방제단**(3,880개)을 통해 고령 농가 등 취약 농장 소독 지원
  - 유사시 신속 대응을 위해 **질병별 표준행동지침(SOP)**에 의한 지자체별 정례적인 **모의훈련** 실시(3~5월)
  - 시·도별 방역활동 추진 실적 등을 **평가**, 정책자금 차등 지원
- **조류인플루엔자 등 인수공통전염병의 인체 감염 예방관리 강화**
- 관계부처 합동 「**인수공통전염병대책위원회**」 중심 범정부적 대응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방역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질병 예찰, 검증 및 홍보활동 전개
  - 인체에 질병을 옮길 수 있는 **버려진 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보호시설 확충, 애완동물 등록제 도입 추진(동물보호법 개정)
- **효과적인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 및 인력 확충**
- 평상시 질병예찰 및 발생시 초동 방역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자체 방역인력을 충원**(상반기중 232명이상 증원 추진)
  -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공익수의사제**를 도입('05년 상반기 병역법 등 개정)하고, '06년에 현장배치 추진
- **효율적인 가축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축산업 등록제 시행**
- **금년말까지** 일정규모 이상 축산농가 등록 완료 추진
    - \* '05.3월 현재까지 추진실적 : 대상 축산농가 39천호의 41%인 16천호 등록
  - 시·군·생산자단체와 공조, 대상농가에게 체계적 홍보 실시

## 주요 질병별 방역대책 추진

### ◆ 조류인플루엔자 재발 방지

- 철새 도래 등 유입 가능성이 큰 11~2월간 특별 방역대책 추진
- 철새, 닭·오리 농장 및 도축장에 대한 모니터링 혈청 검사를 강화하여 의심축을 조기에 발견, 초동 방역 철저

### ◆ 구제역 재발 방지

- 유입가능성이 높은 3~5월간 특별 방역대책 추진
  - 건교부, 해수부, 관세청 등 국경검역 관련 부서와 유기적 공조체제 구축
- 과거 발생지역, 밀집 사육지역 등 취약지역 관리와 예찰 강화

### ◆ 광우병 예방 및 발생시 대비 사전대책

- 24개월령 이상으로 폐사하거나 기립이 불가능한 소 등 위험축群 중심으로 검사 확대('04년 2,200건 → '05년 3,000건)
- 동물성 사료의 혼입 여부 검사 강화 등 사료 안전성 관리 강화
- 발생시 도축 검사강화를 위해 인력('05년 도축검사원 100명) 확충
- 척수, 창자 등 특정 위험물질(SRM) 처리시설 2개소('07년까지 10개소로 확대)를 시범 설치, 축산물 검사관 등 교육 강화

### ◆ 돼지콜레라, 닭뉴캐슬병 등 발생 최소화

- 예방접종(예방약 100% 정부 지원) 및 혈청검사 강화
-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철저 및 발생 농장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차등 지급

\* 돼지콜레라·닭뉴캐슬병 예방접종 면역형성률을 각각 95%, 88% 이상 유지

---

## 정책목표 5. 도농 상생과 농촌 삶의 질 향상

---

### 1) 정책여건

- 농촌인구 고령화등으로 인해 복지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교육·의료 등 필수 사회인프라는 도시에 비해 미흡한 실정
  -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서비스, 연금·건강보험 등 사회안전망 정책 강화의 필요성 증대
    - 65세 이상 인구비율('04) : (도시) 6.7%, (농촌) 15.6%
  -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젊은 층의 농촌거주 기피 원인으로 작용**
    - 교원의 농촌근무 기피, 소규모 학교 증가, 문화시설 낙후 등
    - \* 농촌 소규모학교는 2,420개교로 전체 농촌학교 5,149개교의 47%
- 도로·주택정비 중심의 농촌개발 추진으로 **농촌다움(Rurality)을 유지하면서 쾌적함을 높이는 종합적인 농촌개발 미흡**
  - 농촌지역개발 인재 육성, 읍·면과 농촌마을을 연계하여 농촌 특성을 가진 체계적인 지역개발 필요
- 5都2村 추세에 대응한 농촌의 수용기반확충을 통해 농촌관광, 1사1촌운동 등 도농교류의 확산 기반 마련 필요

## 2)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수립·추진

### 가. 기본방향 및 추진실적

-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구현을 위해 농업인 복지여건 향상 및 농촌다움과 조화되는 지역개발 추진**
  - 2013년까지 농촌을 국민의 20%가 거주하는 상생의 공간으로 발전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 제정('04.3)후 범정부적 농촌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삶의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추진**
  - 복지 등 농산어촌 삶의질 실태조사 실시('04.8 ~ 11월)
  -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위원회 구성('04.12)
  -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5개부처가 참여하여 기본계획(안) 마련

### 나. '05년 중점 추진계획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확정(3월)**
  - 확정된 기본계획 국회 제출(4월)
  - 부처별 '05년도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시행계획 수립(4월)
  - 기본계획에 의거 시·도, 시·군별 5개년 계획 수립(6월)
- **기본계획의 평가 및 보완체계 구축(6월)**
  - 기본계획하에서 매년 각 부처는 전년도 추진실적과 당해 연도계획을 3월까지 범정부위원회에 제출
  - 위원회는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해서 당해연도 계획에 반영

— <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주요내용 > —

— 15개부처에서 4개부문 14개 중점과제 추진 —

- 농산어촌의 특수성을 반영한 복지기반 확충
  -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 기능 강화
  -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농어업인 영유아 보육비 지원 확대
  - 농산어촌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확충 등 재가노인복지서비스 강화
- 농산어촌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 농어가 고교생자녀 학자금 및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 우수고교 집중 육성, 농산어촌 교원 수당 신설 및 사택지원 등
- 농촌주민 및 도시민의 수요에 부응한 상향식체계적 지역개발 추진
  - 마을리더, 공무원 등 인적유형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
  - 도로, 상하수도 등 기초 생활여건 개선
  - 어메니티 자원과 연계한 마을, 읍·면 종합개발
- 농산어촌의 소득원 확충을 위해 복합산업 활성화
  - 향토자원 DB 구축 등 소득화·상품화 기반 마련
  - 향토자원과 농산어촌 관광을 연계하여 소득원을 확충

### 3) 농촌 복지증진

#### 가. 기본방향 및 추진실적

- 낙후된 농촌의 복지수준을 개선하여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도모**
- '04년중 건강보험료 추가 경감(22→30%), 영유아 양육비, 고교생 및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 등 농업인 복지지원 확대

#### 나. '05년 중점 추진계획

- **건강보험료 경감을 확대** : ('04) 30%→ ('05) 40%
  - 가구당 연간 평균 경감액 : ('04) 210천원 → ('05) 294
  - 보건복지부와 협의, 보험료 부과 표준소득 산정시 휴·폐경지 등 감액(현재20%) 확대방안 마련
- **농업인 재해공제 지원 및 보상금 수준 확대 추진**
  - 지원대상 및 보상한도(사망기준) : ('04) 653천명, 1,000만원 → ('05) 768천명, 1,500만원
  - 농작업 재해 사고유형 분석을 거쳐 재해보상 범위 확대 추진
- **영유아 양육비,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및 노인복지사업 준비**
  - 영유아(0~5세) 양육비 지원 확대 ('05 : 224억원)
    - ('04) 농지 1.5ha, 102천원 → ('05) 2.0ha미만, 120천원
  - 농촌출신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확대(연간 35천명)
  - 노인층에게 적합한 일거리 및 생활환경 등 고령친화농업 모델 개발
    - 은퇴자 귀농교육, 전원형 은퇴농장(2개지구)

#### 4) 도농교류 확대 및 농촌문화관광 활성화

##### 가. 기본방향 및 추진실적

- 도시자본과 사람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을 활성화시키고 소득향상 및 도농간 균형발전에 기여
- 도농교류의 기반조성을 위해 농협, 농업기반공사, 경제5단체가 중심이 되어 1사1촌 운동 활성화('04년 총 2,404건)
  - 3년간 녹색농촌체험마을 76개소 조성 지원('13년까지 1,000개소)
  - TV, 신문 등을 활용한 농촌문화관광 홍보 및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 초등학생 농촌체험행사 등 개최

##### 나. '05년 중점 추진계획

- 1사1촌 운동을 지속적이고 내실있는 도농교류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매뉴얼 개발 및 우수사례 홍보 강화
  - 실태 조사를 거쳐 1사1촌운동 발전방안을 마련(3월)
    - 농산물 판매 증가 등 도농간 실질적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
  - 1사1촌 운동의 유형별, 추진단계별 내실화를 위해 참여 가이드북 발간·보급 및 우수사례 홍보 강화
  - 농촌체험활동중 사고발생에 대비한 보험상품 보급
    - \* 현재 화천 토고미 마을 등 10개 마을이 보험 가입

□ 농촌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강화

- 농산어촌관광박람회 개최(4.27~5.1) 및 포털사이트 운영 등을 통해 농촌문화관광의 다양한 정보제공 및 체험기회 제공
  - 농촌·전통문화 체험행사 개최, 농촌체험 사진전, 마을소개 팸플렛 경진대회, 학술 심포지엄 등 다양한 행사 개최
- 도시지역 초·중·고생이 재학 중 최소한 1회 이상 농촌문화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
  - 초·중·고생 대상 농촌문화체험기 공모, 농촌생활체험캠프 등 운영
-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 개최, 올해의 도농교류상 시상 등을 통해 우수관광마을 홍보 및 도농교류 공로자 포상 정례화

□ 농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체계마련

-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확대('04 : 32개소 → '05 : 47) 및 '04년까지 조성된 체험마을 성과 평가 후 민간전문가 전담 컨설팅 시범실시
  - 저수지 주변에 체육공원·산책로 등 휴양시설 개발도 병행 추진
- 지자체장이 주도하는 그린투어포럼을 결성하고 지역단위의 체험마을 지원 네트워크 구축(7월)

□ 농어촌 민박 육성을 위한 제도보완 추진('04.11,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시장·군수의 농어촌민박 지정제도 도입, 소방안전 시설기준 강화 등



— < 1사1촌 운동 우수사례 > —

□□ 삼성전기와 화천군 토고미마을(강원)

- '02년부터 직원 가족 농촌체험 실시(250가족, 780명)
- 매월 셋째주 금요일 친환경농산물 식단체 운영(년간 40백만원)
- 농촌마을에서 부서 워크샵 개최(30회, 1,200명)
- 마을에서 매년 5월 마지막주를 삼성의 날로 지정, 축제 개최
- 일손돕기, 전자제품 수리 봉사활동 실시

\* 특산물 판매 등 도농교류관련 매출액 증가 : ('03) 354백만원 → ('04) 593

□□ KG케미칼과 진안군 능길마을(전북)

- '04년 9월 자매결연 체결 후 직원추석선물로 능길마을 및 김포 지역에서 생산한 유기농 햅쌀을 전량 구매 제공(12.8톤, 38백만원)
- '05년 능길마을에서 재배되는 친환경쌀 전량을 직거래 예약
- '04.10월 능길마을에서 직원농촌체험 활동 실시
- 능길마을을 '05년 직원 하계휴양지로 지정하여 연간 2회이상 직원연수 실시 및 분기별 직원 100명씩 봉사활동 등 계획

\* 특산물 판매 등 도농교류관련 매출액 증가 : ('03) 240백만원 → ('04) 297

□□ 라인테크시스템과 포천시 교동마을(경기)

- '04. 5월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계획 수립, 마을 홈페이지 구축 지원
-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협의('04.7) 및 농산물 구매(11백만원)
- 직원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체험행사 실시(7회)

\* 특산물판매 등 도농교류관련 매출액 증가 : ('03) 5백만원 → ('04) 23

## 5) 농촌지역개발

### 가. 기본방향 및 추진실적

-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건설**을 위해 농촌 지역개발 및 농외소득기반 확충 추진
  - **면지역의 마을도로, 상하수도 등 기초생활 기반시설 정비**
    - '90년부터 770개면을 대상으로 생활환경정비(오지, 도서면 제외)
    - '04년까지 4,751마을에 생활용수공급(면주민의 18%에게 급수)
  - **농공단지 305개소('04년) 조성('03년까지 112천명 일자리 창출)**
- '04년부터 3~5개 마을을 소권역 단위로 묶어 주민참여형 상향식으로 추진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36개 권역)

### 나. '05년 중점 추진계획

- 농촌지역개발 및 농촌형 복합산업을 주도할 **농촌지역개발 인재육성 대책 수립(3월) 및 시행**
  - 지역리더, 마을주민, 공무원 등 농촌인적자원 유형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시범교육(4~12월간 1,300여명)
  - 국내외 지역개발 전문가 발굴, DB화, 지역개발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신 직업군 형성지원 등 저변 확대
    - 외부전문가, 출향인사와 농촌마을간 연계활성화방안 마련
- SOC 위주의 면지역 생활환경정비사업에 **농촌경관보전·개선분야를 포함**하고 생활용수개발사업 확대 추진('05 : 346개소)
  - 빈집정비, 자연친화형 소공원, 생울타리 조성 등 추진

□ 면소재지 등 생활권을 고려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미래형 복합 생활공간 조성

- 기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36개)에 대해서는 상반기중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사업 착수
  - '05 신규권역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 면소재지 등 생활권 중심지의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
  - 문화·복지회관, 체육·녹지공원, 소재지 기반정비 등
- 정보이용시설인 디지털사랑방 설치 지원(20개소)

□ 도시민·기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민관공동사업 추진방안 도입

- 전원마을 조성시 인접도로, 부지조성 지원(51지구)
  -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체재형 주말농원, 은퇴농장 등 조성
- 다양한 농촌지역개발 모델을 발굴하여 전문가 워크숍 등 개최

□ 지역농업클러스터와 연계하여 지역특산품 등 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8월)

- 실태조사를 통해 향토자원을 발굴, DB구축
- 발굴된 향토자원의 상품개발, 우수 향토상품에 대한 권리화 방안 마련
  - \* 보성 녹차, 고창 복분자 등 5개품목 지리적 표시제 실시중
  - 향토자원 특구 육성 지원 및 산·학·관 네트워크 형성
  - \* 현재 지정된 6개 특구중 농업관련 특구 : 고창 경관, 고창 복분자, 순창 장류
- 농공단지 확대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특산물 가공업체 유치
  - \* 농공단지 개소수 : ('04) 305개소 → ('05p) 314개소

---

## 정책목표 6. WTO/FTA 농업협상 대응

---

### 1) 추진여건

- 지난해 미국, 중국 등 9개국과의 쌀협상 결과를 담은 이행계획서 수정안을 WTO에 통보('04.12.30)
  - 쌀협상 결과 이행을 위해 금년에는 이행계획서 수정안에 대한 WTO의 검증과 국회의 조속한 비준동의가 필요
  - 언론, 전문가그룹 등은 대체적으로 쌀협상 결과를 수용하는 분위기이나, 일부 농민단체는 소득보완 등 국내대책을 요구
- WTO/DDA의 본격추진과 FTA 협상이 급속히 확산될 전망
  - DDA협상은 지난해에 합의한 기본골격(Framework)을 토대로 세부원칙(Modality) 도출을 위한 집중적인 협상 전개 예상
  - 한·칠레, 한·싱가폴 FTA 체결에 이어 2005년 중 일본, 아세안, EFTA 등 20여 국가와 동시 다발적인 FTA 추진 예정
- 농업분야 시장개방확대는 불가피한 추세이나 농업부문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에는 상당한 기간 소요
  - 대외적으로는 농업분야 적응능력에 맞춘 점진적인 개방이 되도록 협상 노력을 최대한 경주
  - 국내적으로는 협상내용을 정확히 알리고 국내대책을 함께 마련해 나가는 공감대 형성 및 갈등관리 노력 강화

## 2) 쌀협상 검증 및 국회 비준동의 추진

### 가. WTO 쌀협상 결과 검증 대응

- WTO에 통보된 이행계획서 수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되도록 검증절차의 조속한 마무리 추진
  - 쌀협상 결과 이행과 관련된 기술적·절차적 사항, 양자간의 부가적인 사항에 대한 합의문 작성 등을 조기에 완료
- 3개월간의 검증과정에 대비한 쟁점별 대응방안 마련
  - 검증과정에서 이의제기시 최종확정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외교력을 총동원하여 설득 추진
  - 이행계획서 수정안에 합의한 주요국들과 협조하여 공동 대응

### 나. 국회 비준동의 추진

- 쌀농가 소득안정방안, 추곡수매제 개편 등 양정제도개선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개방 불안감 해소 및 비준동의 분위기 조성
- 쌀협상 내용 및 성과, 협상결과가 비준이 안될 경우 예상되는 어려움을 국회·언론 등에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사전 이해 제고
  - 관계부처로 구성된 "쌀협상대책실무추진단"을 중심으로 적극 노력

### 3) DDA 농업협상 대응

- '04.8.1 DDA 농업협상 기본골격(Framework)이 채택되었고, 작년 10월 이후 세부원칙 마련을 위한 기술적 쟁점 논의중
  - 관세·보조금 감축 수준, 민감품목·특별품목 선정 등
- 금년 7월경 세부원칙(Modality) 초안이 제시될 예정이며, 12월 WTO 홍콩 각료회의에서 세부원칙 타결 시도 예상
- 주요 관심사항인 관세와 보조금 감축률 최소화에 협상력 집중
  - 우리의 고관세 구조를 고려한 관세상한 설정 저지 노력
    - \* 우리나라 100% 이상 고관세 품목 142개(전체 농산물의 9.8%)
  -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의 범위 확대와 신축성 확보
  - G10(수입국그룹), G33(개도국그룹) 등 유사입장국과 공조 강화
- 개도국 지위 유지를 위한 노력 지속 추진
  - 세부원칙 협상단계에서는 개도국 우대조치 확대에 노력하고, 우리의 개도국 지위 유지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 조성 zu 주력
  - 세부원칙 타결후 국별 이행계획서 제출 및 양자협의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대응하여 실리를 최대한 확보
-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에 근거한 협상 추진
  - 품목별 영향분석과 의견수렴 결과를 협상전략에 반영
  - 협상의 주요 단계마다 농민단체, 학계 등 대국민 설명 추진

#### 4) FTA 협상 대응

- '04년중 한·칠레 FTA가 발효되고 한·싱가폴 FTA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금년에는 20여개국과 협상예정
  - FTA협상 진행 : 일본, 아세안(10개국), EFTA(4개국)
  - 공동연구 및 예비협상: 멕시코, 인도, 남미공동시장(Mercosur), 미국, 캐나다
  
- 민감품목에 대한 영향 최소화 등 면밀한 협상전략 수립
  - 농업생산액, 품목별 농가인구, 재배면적 등을 기초로 핵심품목을 선정하고 철저한 영향분석 및 세부 대응전략을 마련
  - 수입증가에 따른 피해구제를 위해 양국간 세이프가드제도를 도입하고 우회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원산지기준 설정
  
- 체계적인 FTA 농업협상 대응체제 구축
  - 동시다발적인 협상에 대응, 농림부내 FTA 협상 전담조직 신설
  - FTA 기금을 활용한 전문가 용역 추진 및 국가별 전문가, 농촌경제연구원 등 연구기관 중심으로 협상지원 네트워크 구성
  
- 농민단체 등과 협상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
  - 품목군별 생산자단체, 가공·유통·수출업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FTA민간대책위원회를 통하여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
  - PCRМ을 통해 FTA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농업인, 농민단체를 대상으로 토론회/설명회를 수시 개최

### Ⅲ. '05년 중점추진 혁신과제

#### 1. 지난해 혁신성과 평가 및 시사점

##### 가. '04년 혁신추진 및 성과

###### □□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

- 국·과장 중심의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권한을 대폭 위임하고, 결재단계를 간소화(장관 결재비중 감소 : 10.1% → 7.8%)
- E-mail 간이보고 시스템 구축, 회의 운영방식 간소화, 탄력 근무시간제 운영 및 불필요한 일 버리기 운동 등 추진

###### □□ 인사제도 개선으로 조직의 혁신역량 강화

- 주요 직위의 희망보직제도 도입 및 소속기관 공무원 본부 전입기준 마련으로 인사의 투명성 제고
  - 희망보직 반영률 : 과장급 49%, 계장급 63%
- 외부전문가 특별채용(3명), 국장급 직위공모(2개 직위) 및 중앙과 지자체간 인사교류(6명) 실시

###### □□ 수요자의 정책참여 확대 및 현장중심의 농정 추진

- PCRМ을 통한 농정홍보(72회) 및 주요 정책 설문조사 실시(23회)
- 실시간 온라인 뉴스레터인 「클릭농정뉴스」 발행(49회)
- 소관분야별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실시(82명)



## 나. 평가결과 및 미흡 원인

### 《 '04 혁신평가 결과 》

#### ◇ 국무조정실의 혁신관리 평가결과, '보통' 분류

- 인사개혁 등 정부혁신과제 추진실적은 상대적으로 우수
- 기관의 비전·전략 수립 등 전략적 종합혁신능력 및 혁신지원 시스템 구축 등 혁신관리역량은 부족한 수준

#### □ 미흡원인 분석

- 혁신추진이 혁신담당부서에 머무르고 전 부서와 농정 현장으로 확산되는데 미흡
  - 각종 혁신활동이 일하는 방식개선 등 업무프로세스 개선 위주로 추진되어 사업 분야의 실질적 성과 창출 및 정책 고객인 농업인·소비자의 만족까지는 이르지 못함
- ※ 국무조정실의 '04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보통'으로 평가

## 다. 시사점 및 향후 과제

- 혁신활동을 부내·사무위주에서 고객·사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현장농정·참여농정을 제도화
- 혁신추진이 전 사업부서로 확대될 수 있도록 성과에 대한 합리적 평가·보상체계 구축

## 2. '05년 역점 추진 혁신과제

### 1) 현장농정 구현을 통한 농정 신뢰회복

#### 가. 기본방향

- 정책 결정·집행·평가 과정에 농업인·소비자 등 고객의 참여 제도화 및 농림공직자 현장체험 확대로 고객만족도 제고
- 고객에 의한 정책평가제도를 도입, 고객의 수요에 부응한 정책 추진

#### 나. '05년 중점 추진계획

- 「우리 농업 희망찾기운동」 전개, 농업인의 자신감 회복
  - 농업인단체 등 고객으로부터 농업정책 제안 공모대회 개최 - 제시된 정책을 평가, 우수정책 채택 및 포상금 지급
  - 여성농업인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성공사례 등을 담은 여성농업인 희망찾기 프로그램 제작 방영
  - 농업경영을 혁신하여 우리농업의 비전을 제시한 신지식 농업인 등의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 홍보
- 농림공직자의 농가 현장체험 확대, 농업인과의 거리감 해소
  - 실·국장이하 전직원이 2인 이상 팀제로 농업인과 숙식을 함께하며 영농체험 및 사랑방 좌담회 실시, 애로사항 현장 해결
  - 복귀후 장관명의 서한 발송 및 설문조사 실시 등 지속관리
  - 농림부 본부직원 우선 실시후 전 소속기관·단체로 확대

-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농정에 대한 공감대 확산**
  - 장관의 지역별 「순회농정토론회」 개최 및 농업인·소비자 단체와의 **조찬간담회 등 정례화**(월1회)
  - 농림부의 전 직원이 개인별로 2~3농가(전국 1,000농가)와 **결연**, 수시 **현지동향 파악 및 정책집행**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임직원 등 10만명을 대상으로 **Cyber 농정교육 실시, 대농업인 홍보 요원화**
  
- **규제완화 및 민원·불편사항 신속 처리로 고객만족도 제고**
  -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사전조치 및 **문제발생 즉시 현장방문 해결**
  - 영농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민원 해결
    - 법령에 의한 규제, 다수·반복 민원 등 제도개선 사항을 종합적으로 현장에서 발굴
  - 접수민원에 대해 신속정확한 회신 및 회신 후 2~3일 이내 민원 처리 적정성에 대해 상담하는 **Happy-Call제 도입·운영**
  - 퇴직자 등을 채용, 민원접수에서 처리까지 **One-Stop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해결도우미**」로 활용
  
- 「**정책고객평가제도**」 도입, 고객의 수요에 부응한 정책추진
  - 농업인, 소비자, 관련산업 종사자 및 관계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고객그룹 설정, 정책만족도 평가 실시**
    - 실·국별로 3~4개씩 주요 정책과제(총 25개 이내) 선정
  - 전문 리서치기관에 의뢰하여 **반기 1회 설문조사 실시**

## 2) 성과·고객을 중시하는 통합 성과관리체계 구축

### 가. 기본방향과 추진실적

- 기존의 목표관리제 및 다면평가 외에 정책고객평가, 혁신평가, 민원만족도, 전화친절도조사 등을 추가, 종합평가 실시
  - 현재 개인 업무실적 평가를 위해 **목표관리제와 다면평가**를 실시
    - '95년부터 다면평가를 도입·시행하고 있어 다면평가는 정착된 상황
  - 혁신마일리지, 민원만족도 조사, 전화친절도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개인평가와 연계한 계량화** 등은 미흡하고 **정책고객평가**는 실시되지 않고 있음
- 기존 **목표관리제 업무실적 평가**를 개선하여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고 성과지표를 계량화, **상시적인 평가체제**를 구축
  - 현재 **직위별 업무난이도**, 업무량 구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
  - 재정사업, 비재정사업 등 업무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
  - 성과지표의 계량화 미흡,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 연간 1-2회 평가로 평가의 객관성이 부족
- 평가결과는 우선 성과급에 반영하고, 장기적으로 **연봉인사**에도 반영
  - 현재도 성과급에는 적용하고 있으나 객관성 문제·제도적인 뒷받침 부족 등으로 **연봉인사**에 직접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

## 나. '05년 중점 추진계획

- 현재 상이한 목적으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평가를 종합,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 기존 목표관리제, 다면평가에 정책고객평가, 혁신평가, 민원 만족도 조사, 전화친절도 조사 등을 통합

(현행)

다면평가
<p>농정업무평가</p> <p>(목표관리제)</p>

(개편후)

다면평가	
농정 업무 평가	재정사업평가
	비재정사업평가 (기획·성과평가)
정책고객평가	
농정혁신평가	
민원만족도 평가	
전화친절도 조사	

⇒

- 수시평가를 추가하고, 각각의 평가에 가중치를 두어 종합 평가 후 조정작업 추진

### 농정업무평가

- 직위별로 업무량·중요도·난이도에 따라 분류하여 가중치 부여
  - 조직진단 및 전문가의 컨설팅, 부내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
- 투용자가 수반되는 재정사업평가와 제도개선 등 비재정사업 평가로 구분

① 재정사업 평가 : 사업별 계량화된 성과지표 설정 후 성과평가

\* 재정사업 자체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 04년 사업에 대해 3월까지 실시 예정

② 비재정사업 평가 : 비예산사업의 기획·성과 평가

- 기획평가 : 전자결재보고내용의 품질에 따라 상급자가 연중 평가

- 성과평가 : 농정 전문가로 구성된 성과관리위원회에서 평가

### 기타 평가

③ 정책고객평가 : 전문 리서치기관이 농업인 등 설문조사

④ 혁신평가 : 혁신 과제 제안·채택 실적, 혁신성과 등 평가

⑤ 민원만족도 : 전문리서치기관이 민원 제기자를 대상으로 조사

⑥ 전화친절도 : 전문리서치기관이 전직원 대상 친절도 조사

⑦ 다면평가 : 부처내 상급자, 동료, 하급자가 평가

□ 통합 성과관리체계는 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 1단계('05년) : 농림부 본부 국·과장급의 성과급 지급에 활용

○ 2단계('06년) : 농관원 등 산하관서 간부, 본부 직원까지 확대

○ 3단계('07년) : 산하관서 직원까지 확대하고 연봉, 인사에도 반영

'05년 상반기중 직위분류, 업무계획서, 평가요소의 비중 등을 검증하기 위한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거쳐 하반기중 추진방안 마련

## 기존 평가체계와 통합 성과관리체계 비교

구 분	현행 평가체계	통합 성과관리체계
평가체계	○ 각종 평가가 상이한 목적으로 독립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성과관리에 한계	○ 각종 평가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성과를 통합 관리
평가내용	○ 다면평가 ○ 업무평가	○ 다면평가 ○ 업무평가(재정·비재정사업) ○ 정책고객평가 ○ 혁신평가 ○ 민원 만족도 ○ 전화친절도
업무평가	○ 연간 1-2회 평가  ○ 직위별 업무량·중요도·난이도에 대한 고려부족  ○ 재정사업·비재정사업 미분리  ○ 평가자의 주관에 기초한 정성평가 중심  ○ 내부평가	○ 연중 상시 평가  ○ 업무량·중요도·난이도에 따라 4개 등급화  ○ 재정사업과 비재정사업 분리  ○ 계량화된 정량 평가 중심 - 재정사업 : 계량화된 성과평가 결과 적용 - 비재정사업 : 상시평가·계량평가  ○ 내부평가·외부평가 병행
평가결과 활용	○ 성과급에만 반영	○ 단기적으로 성과급, 중장기적으로 인사에 반영

## IV. 성과측정 추진계획

### 1. 정책성과 측정체계

**정책목표 1 : 쌀 산업의 체질강화(6건)**

성과지표명	연도별 목표치	성과지표(산식)	성과지표 측정방법
○양곡관리법 개정여부	○'05년도중 양곡관리법 개정	○양곡관리법 개정여부	○법 개정여부로 평가
○쌀농가 소득 안정 정도	○'01~'03년 평균 1ha당 소득(7,278천 원)의 98% 이상유지	○(당년ha당 쌀소득/기준년도 ha당 쌀소득)×0.98	○논벼 1ha당 소득으로 평가 - 1ha당 고정직불금 : 농림부 예산집행실적('05.12) - 1ha당 고정직불금 : 농림부 예산집행실적('06.5)
○RPC 쌀 매입량 비중	○RPC매입량 비중 ('05: 54.5%) * ('00) 44.4 → ('04) 51.6 → ('13) 70.0	○(RPC 매입량/ 당년도 생산량×유통비율 (73%))×100	○시도가 RPC별 벼 매입 실적을 파악, 농림부에 보고한 자료 및 농관원의 RPC별 원료벼 매입실적으로 평가
○쌀 품질 평가지수	○식미,품위,품종 순도, 소비자만족도 평가 등	○4개지표중 3개이상 달성시 우수, 2개이상 달성시 보통, 1개 달성시 미흡으로 평가	○식미(한식연), 품위(농관원), 품종 혼합비율 분석(농진청), 소비자만족도 평가(소비자연맹) 등으로 개별 평가
○쌀 전업농의 농지점유비	○쌀 전업농의 농지 점유비('05: 30%) * ('00) 18 → ('03) 25 → ('04) 28 → ('10) 50	○쌀전업농 농지면적/전체 벼재배면적	○중간평가(4회):매분기말 사업추진실적 보고서 ○최종평가(1회):사업종료후
○배수개선담 및 수리담 비율	○배수개선담율:( '05)68.6% * ('00) 51.6 → ('06) 69.7	○(배수개선완료면적/ 배수개선대상면적)×100	○각 시도 및 농업기반공사의 연도말 조사결과로 평가 ○각 시도 및 농업기반공사의 연도말 조사결과로 평가
	○수리담율:( '05)78.1% * ('00) 76.6 → ('04) 77.9 → ('13) 81.8	○(수리담면적/전체 논면적)×100	



## 정책목표 2 : 전문 농업경영체 성장기반 구축(5건)

성과지표명	연도별 목표치	성과지표(산식)	성과지표 측정방법
○창업농 영농 정착율	○창업농 영농정착율 : ('05) 84% * ('03) 81 → ('04) 81 → ('08) 90	○(최근 3년간 창업농 지원자수-취소자)/최근 3년간 창업농 지원자수	○창업농 지원자수(최근 3년간 창업농) 대비, 시군이 사업 추진을 취소한 인원을 기준으로 연말 시도자료로 평가
○전문농업경영체 농업생산비율	○쌀 전업농의 생산 점유비 : ('05) 30% * ('00) 18 → ('04) 28 → ('10) 50	○(쌀 전업농지면적/전체농지면적)×100	○영농규모화사업종료 후 농업기반공사의 사업추진 실적 결과 보고서로 평가
	○축산 전업농의 사육 비율 : ('05) 73.0% * ('00) 59.6 → ('04) 71.4 → ('13) 85.0	○(전업농 사육두수/전체사육두수)×100	○농관원이 분기별로 발표하는 가축통계조사 결과로 평가(한우, 젖소 50, 양돈 1000, 양계 3만수 이상)
	○과수 전업농의 생산 비율 : ('05) 40.7% * ('03) 39.8 → ('04) 40.0 → ('13) 51.0	○(전업농과수면적×10a당 수량/전체 과실생산량)×100	○농업기반공사의 사업추진 실적 결과 보고서로 평가
○직불금 비중 및 직불 투융자 비중	○직불금 비중('05:3.3%) * ('02) 1.4 → ('04) 2.8 → ('06) 3.7	○직불금 : (직불투융자/농가수)/농가소득	○당해년도 농가소득은 익년도에 발표되는 통계청 농가경제 조사치로 평가
	○직불 투융자 비중 ('05:12.6%) * ('03) 9.7 → ('04) 10.8 → ('06) 13.5	○직불투융자 : 직불투융자/농업투융자	○농림예산 및 투융자는 당해연도 12월(국가예산 확정시기)에 평가

성과지표명	연도별 목표치	성과지표(산식)	성과지표 측정방법
○재해보험 및 가축공제 가입율 가입금액	○재해보험 가입율 (‘05 : 19.1%) * (‘02) 18.3 → (‘04) 18.2 → (‘06) 20.0	○가입율=가입면적/ 대상면적	○재해보험사업자의 보험 가입 추진후 실적결과로 평가
	○재해보험 가입금액 (‘05 : 528,817백만원) * (‘02) 271,186 → (‘04) 534,415 → (‘06) 544,682	○가입금액=Σ 개별 가입농가의 가입금액	○재해보험사업자의 보험 가입 추진후 실적결과로 평가
	○가축공제 가입율 (‘05 : 26%) * (‘02) 8.6 → (‘04) 20.7 → (‘07) 33.7	○가입율=(총가입두수/ 가입대상15개축종 전체사육두수)×100	○10월까지 가축공제 가입 실적을 자체집계
	○가축공제 가입금액 (‘05:1,484,395백만원) * (‘02) 771,251 → (‘04) 1,022,741 → (‘06) 2,123,608	○가입금액=Σ 개별 가입실적 자체집계	○10월까지 가축공제 가입 실적을 자체집계
○농지은행 제도 도입여부	○농지법, 농업기반 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 개정  ○농지은행사업 세부 시행절차 및 운용 지침 수립  ○농지유통화 포털 사이트 구축	○법령개정(50%), 사업 시행지침수립(25%), 포털사이트구축(25%)  여부	○‘05년말 기준으로 설정된 목표의 이행여부로 평가

### 정책목표 3 : 농축산물 유통 효율화 및 소비촉진(5건)

성과지표명	연도별 목표치	성과지표(산식)	성과지표 측정방법
○소모성 물류비 비율	○소모성 물류비 비율 : ('05) 53.9% * ('98) 67.4 → ('00) 58.7 → ('04) 55.0 → ('06) 52.7	○(톤당운송비+ 하역비+ 감모·청소비)/톤당 물류비×100 -대상: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사과, 배, 포도, 감귤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주요 농산물유통실태 조사 결과로 평가
○우수브랜드 인지도 조사	○매년 2%의 인지도 상승 목표: ('05) 23% * ('03) 19 → ('06) 25	○소비자 조사에서 나타난 대상 브랜드 인지도 평균	○소비자에 의한 시중유통 농산물 브랜드 선호도 조사로 평가
○국산 농축산물 소비자만족도 조사	○첫 조사로 비교군이 없으므로 우선 50% 목표설정 후 '06년 이후 목표치 조정	○5점 척도 설문조사로 측정하며, 이를 100점으로 환산(점수/5×100)	○전국 도시가구 1,000호를 대상으로 가격·포장·관능·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05.하반기) 결과로 평가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소비 실태조사와 병행 실시
○농 식품 수출 실적	○수출목표 : ( '05) 2,300백만불 * ('00) 1,532 → ('04) 2,085 → ('08) 3,000 → ('13) 5,000	○달성율(%)=(연간수출 실적/수출목표)×100	○수출실적은 관세청 농식품 수출통계 자료로 평가 (연도말)
○자조금단체의 생산점유 비중	○생산점유비중('05년): 채소 15%, 과일 48, 축산물 37 * 채소 : ('01) 3.0 → ('04) 10.2 → ('07) 27.5 * 과일 : ('01) 5.4 → ('04) 41.6 → ('07) 68.9 * 축산 : ('01) 26 → ('04) 26 → ('07) 57	○ $\sum [(자조금단체 농산물 생산량(사육두수))/품목별 총생산량(사육두수)] \times 100$ / 10년 목표자조금 품목수(채소14, 과수7, 축산6)	○채소·과실은 매년 자조금 사업승인 완료시기(3월하순) 자조금 사업자가 제출한 품목별 구성원의 생산량 결과자료로 평가 ○축산물은 10월말 기준 자조금단체의 자조금실적 집계결과로 평가

## 정책목표 4 : 안전성 강화 및 친환경농업 확산(5건)

성과지표명	연도별 목표치	성과지표(산식)	성과지표 측정방법
○농축산물안전성 조사 부적합율	○농산물안전성조사 - 부적합율: ('05) 1.3% * ('03) 1.5% → ('04) 1.3 → ('08) 1.1	○(부적합농산물건수/ 전체안전성조사건수) ×100	○농산물은 농관원의 농산물 안전성 조사결과로 평가 (연도말)
	○축산물 안전성조사 잔류물질 및 미생물 위반율 ('05)목표(%) - 잔류물질 : 0.25 - 미생물 : 0.44 * 잔류물질 : ('00) 0.11 → ('06) 0.24 * 미생물 : ('00) 0.16 → ('06) 0.43	○(위반건수/잔류물질등 검사건수)×100	○매년 3/4분기까지의 시도 축산물 위생검사기관의 검사결과로 평가 * 주요국 잔류물질 위반율('00) : 미국0.46, 호주0.21, 일본0.05
○단위면적당 화학농약사용량	○화학농약 사용량 : ('05) 12.3kg/ha * ('00) 12.4 → ('04) 12.6 → ('13) 7.4	○농약출하량(성분량)/ 경지이용면적	○농약공급협회의 당해연도 합성농약 출하량을 농관원의 경지이용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것으로 평가
○친환경인증 농산물 비율	○친환경농산물 비율 '05목표 : 3.5% * ('00) 0.2 → ('04) 2.5 → ('10) 10.0	○(당해년도친환경인증 농산물물량/전체 농산물생산물량)×100	○농관원에서 인증물량은 차년도 1월중에 집계한 결과, 전체 농산물생산 물량은 차년도 5~6월경에 집계한 결과로 평가

성과지표명	연도별 목표치	성과지표(산식)	성과지표 측정방법
○가축분뇨퇴비 판매량	○가축분뇨 퇴비판매량 (‘05) : 1,737천톤 * (‘00)1,292 → (‘04)1,654 → (‘06)1,824	○‘05년 퇴비량	○매년 1·7월에 농촌진흥청에서 정기조사
○해 외 여 행 객 휴대육류 검색 건수 및 돼지 콜레라뉴캐슬병 예방접종 면역 형성률	○해외여행객휴대육류 검색 건수 : ‘05목표 20,000건 * (‘00) 5,053 → (‘04) 19,200 → (‘06) 21,000	○국제공항,항만에서 해외여행객의 불법 휴대 축산물 검색건수 (검역원 실적)	○검역원에서 집계한 결과로 평가
	○돼지콜레라 면역 형성률(‘05: 95%이상) * (‘00) 96.1 → (‘04) 95.4 → (‘06) 96.0	○예 방 접 종 률(면역 형성률) : (면역형성/ 검사두수)×100	○검역원에서 집계한 결과로 평가
	○뉴캐슬병 면역형성률 (‘05 : 88% 이상) * (‘00) 64.5→ (‘04) 85.7 → (‘06) 90.0	○예 방 접 종 률(면역 형성률) : (면역형성/ 검사두수)×100	○검역원에서 집계한 결과로 평가

## 정책목표 5 : 도농 상생과 농촌 삶의 질 향상(3건)

성과지표명	연도별 목표치	성과지표(산식)	성과지표 측정방법
○녹색농촌체험 마을 방문객수 농촌관광 매출액 증가율	○마을당 방문객수 : (‘05) 11,533명 * (‘03) 7,007 →(‘04) 9,611 →(‘06) 13,840	○ [(당해년도실적-전년도 실적)/전년도실적] ×100	○지자체(시군)가 행정조사를 실시(매년 11월말)한 자료로 평가
	○마을당 농촌관광 매출액:(‘05) 169,897천원 * (‘03) 104,878 → (‘04) 141,581 → (‘06) 203,876	○ [(당해년도실적-전년 도실적)/전년도실적] ×100	○지자체(시군)가 행정조사를 실시(매년 11월말)한 자료로 평가
○복지지원 수혜 인원 및 지원액 증가율	○수혜인원 증가율 : (‘05) 12.1% (1,506천명) * (‘01) 0.3 →(‘03) 1.2 →(‘06) 3.6  ○지원액 증가율 : (‘05) 3.9%(6,304천원) * (‘01) 13.3 →(‘03) 8.5 →(‘06) 4.8	○ [(당해년도 수혜인원 및 지원액-전년도 수혜인원 및 지원액)/ 전년도 수혜인원 및 지원액] ×100	○국민건강관리공단, 농협, 보건복지부에서 작성한 통계자료를 통해 농민 지원자 및 예산집행실적을 평가(12월)
○농촌주민의 만족도	○전년대비 불만족도 축소 및 만족도 제고	○보건의료서비스, 기초생활여건, 생활 환경쾌적성, 복지 수준, 교육, 문화 여가시설 등에 대한 5개 척도 만족도 조사	○전문조사기관을 선정하여 농촌주민들을 대상으로 표본 설문조사 (11월)한 결과로 평가

## 정책목표 6 : WTO/FTA 협상 대응(1건)

성과지표명	연도별 목표치	성과지표(산식)	성과지표 측정방법
○ 쌀 협상 검증 및 국회비준 동의 추진	○ 쌀협상 WTO 검증 : 검증완료후	○ 쌀협상 검증, WTO와 FTA 농업협상에 능동적인 대응체계 구축 및 공동대응 여부	○ 협상관련 계량적인 성과지표 설정이 어려워 협상결과의 대응노력과 최종협상 결과 내용 및 국내수용 분위기 등으로 평가
○ DDA 농업협상	○ DDA 농업협상 : 세부원칙 확정후 및 연말평가	○ 주요 쟁점별 대응논리 등 철저한 협상대책 마련 및 입장을 같이 하는 주요국과의 협상에 대한 합동대응 여부	
○ 새로운 FTA 협상대응	○ FTA 농업협상 : 각 국가와 FTA 최종타결 후 및 연말평가	○ 농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협상결과의 원만한 수용 분위기 조성 여부	

## 2. 혁신과제 측정체계

### 혁신과제 1 : 현장농정 구현을 통한 농정신뢰 회복(2건)

성과지표명	연도별 목표치	성과지표(산식)	성과지표 측정방법
○주요정책 고객 만족도	○'05상반기 대비 5% 향상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	○실·국별로 3~4개의 주요 정책과제(총 25개 이내) 선정 ○전문 리서치기관에 위탁하여 반기별로 면접, 전화, FAX 등을 통해 연 2회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로 평가
○민원서비스 만족도	○('05) : 63.8% * 전년대비 10% 상승 * ('01) 59.9점 → ('02) 60.8 → ('03) 52.0 → ('04) 58	○민원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	○1년동안 농림부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 중 무작위 추출로 표본 설정 ○전문리서치기관에 위탁하여 반기별로 면접, 전화설문 조사한 결과로 평가

### 혁신과제 2 : 성과고객을 중시하는 통합 성과관리체계 구축(2건)

성과지표명	연도별 목표치	성과지표(산식)	성과지표 측정방법
○통합 성과관리 체계 구축 정도	○'06년도 성과연봉제에 적용 가능한 성과 관리체계 구축	○통합 성과관리체계 구축 여부	○통합 성과관리체계 운영지침 수립 여부 조사결과로 평가
○고객(적용대상 직원) 만족도	○70% 이상 만족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적용대상 직원 만족도	○통합 성과관리체계 적용 대상 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설문조사한 결과로 평가



## V. 마 무 리

◇ 농림부 공직자들은 보고드린 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문제가 있으면 답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 ① 현장 농업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참여확대와 함께,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방지하는데 노력
- ② 정책추진에 있어 농업인·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정부가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적극적인 동참으로 시너지 효과를 제고
- ③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기에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한편,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농정신뢰를 회복

◇ 또한, 농업·농촌이 느끼고 있는 소외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함께 경제계·도시와의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 도농 相生이 농가 소득증대 등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경제계의 협조를 이끌어 내고, 이를 범국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도농 융합으로 승화함으로써
-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실적 점검결과

### I. 자체 점검결과 총괄

	계	완료	완료요청중	추진중
계	66	11	37	18
계획수립사항	38	9	17	12
검토이행사항	28	2	20	6

### II. 추진현황 점검결과

□ 계획수립사항 : 38건

번호	주요 지시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비고
1	쌀, 개도국 지위 등 국무회의 보고의제로 토론('03.3.6, 수석보좌관 회의시)	농림부 주요현안업무보고시 당면현안과제로 보고후 토론('03.3.14)	완료
2	우유수급 문제도 업무보고시 보고('03.3.11, 제10회 국무회의시)	우유수급문제 보고('03.3.14) -원유 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생산제 도입 등	완료
3	수매제 개편방향 수립 및 설득('03.3.14, 농림부 업무보고시)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 및 공공비축제 도입 추진 -수매제 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및 지역별 토론·설명회 개최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제출(11.9) 양곡관리법 개정법률(안) 임시국회 상정('05.2)	추진중
4	FTA이행특별법 제정 추진('03.3.14, 농림부 업무보고시)	FTA이행특별법 본회의 의결, 제정완료('04.3.22, 법률 제7207호)	완료 요청중
5	WTO/DDA협상 관련, 시나리오 준비 및 계획수립('03. 3.14, 농림부 업무보고시)	농업협상그룹 의장초안을 중심으로 복수의 시나리오 수립('03.4) 시나리오별 영향분석 및 국내보완 대책 검토를 위한 T/F설치(팀장 : 차관보, '03.5.13)	완료 요청중
6	쌀 재고처리 관련 선택가능한 대안분석 및 국민설득('03. 3.14, 농림부 업무보고시)	쌀 재고처리 대안별 비용분석 및 홍보 -대북지원을 가장 유리한 재고처리 방안으로 분석 -조선일보 등 6회에 걸친 기고를 통하여 국민설득	완료 요청중

번호	주요 지시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비고
7	농산물 소비촉진 홍보 등을 위해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 ('03. 3.14, 농림부 업무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산물유통국 및 공보관실에 홍보 전담부서 신설('03.7)</li> </ul> </li> <li>다양한 홍보사업 개발·시행</li> </ul>	완료 요청중
8	농업예산 전면 재검토 ('03.3.14, 농림부 업무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4년도 예산구조를 변경하여 사업성예산과 채무상환 예산을 구분</li> <li>신규차입을 최소화하여 차입금(원금)규모 축소</li> </ul>	완료
9	농가부채 문제 대책 수립 ('03.3.14, 농림부 업무보고서)	농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공포('04.3.5)	완료
10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농림조직 정비('03.3.14, 농림부 업무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림부 조직정비 방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03.4.7, 4.21)</li> <li>행정혁신업무 기능강화를 위한 직제개편 ('04.3.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인사담당관실을 혁신인사담당관실로 개편,</li> </ul> </li> <li>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 FTA체결에따른지원특별법제정·시행에 농림조직정비('04.8.20)</li> </ul>	추진중
11	각종 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하는 방안 강구 ('03.4.7, 수석보좌관 회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협동조합법 개정·공포('04.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선 조합장의 선거관리를 구사·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li> <li>-선거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등</li> </ul> </li> </ul>	완료 요청중
12	환경부 홈페이지 벤치마킹 ('03.4.8, 제16회 국무회의시)	농림부 홈페이지 개선사업('03.7.21 ~ 10.17)시 벤치마킹 내용을 반영하여 □□정보공개자료방□□ 신설('03.10.22)	완료
13	인사시스템개혁 ('03.4.8, 제16회 국무회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사개혁 과제별 세부실천계획 수립·추진 ('03.8)</li> <li>인사제도 관련 전담공무원·기구배치 완료('02.3)</li> <li>산하단체 「인사운영 합리화계획」 수립('03.6)</li> </ul>	완료
14	개혁성공을 위해 개혁인프라 구축 ('03.4.17, 제1회 국정과제회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혁신추진 지원조직 구성 및 혁신과제 추진절차 마련 ('04.4.26)</li> <li>혁신마일리지, 인센티브제 도입 및 혁신 웹사이트 『혁신참여광장』 개설('04.6.17)</li> </ul>	완료 요청중
15	정보화책임관(CIO) 임명 ('03.5.6, 국무회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림부 CIO 지정·운영('98.2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관련 CIO 협의회 운영</li> </ul> </li> <li>농림정보화계획 종합조정('03.12)</li> </ul>	완료
16	농업경쟁력강화 관련 대통령 참석 프로그램 마련 ('03.5.9, 국정과제회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념식행사('03.11.11, 농진청)에 VIP참석</li> <li>-119조 투융자규모 제시, 복지여건 개선 등 대책발표</li> </ul>	완료
17	농민단체와 정부간 타협방안 수립('03.5.20, 국무회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정협의회, 농정실무협의회 구성 및 14개 농민단체 책임담당관 지정('03.8.2)</li> <li>VIP 농민단체 오찬간담회('04. 1. 6 ~ 7)</li> <li>품목별 단체장 간담회 개최('04.4.22, 장관)</li> </ul>	완료 요청중

번호	주요 지시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비고
18	장애인 고용대책 추진('03.6.3, 제25회 국무회의시)	◦장애인 공무원 고용 추진계획 수립('03.7) - 장애인고용 세부추진계획 수립, 소속기관 시달	완료 요청중
19	제도개선 민원 논의 팀 구성 및 혁신과제로 관리 ('03.6.24, 국무회의시)	◦민원제도개선시스템구축('04.6) ◦'04년 민원제도개선 추진 실적 - 총검토과제 152건 중 개선추진 105건, 중장기검토 15건, 개선불요 32건	완료 요청중
20	새만금사업의 보강공사에 만전을 기하고 갱신된 자료 준비 등 소송에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 나갈 것 ('03.7.22, 국무회의시)	◦방조제 유실방지를 위한 보강공사를 차질없이 추진중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 추진 중(국토연구원, '03.11~'05.6) ◦총리실·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항소심에 철저를 기할 계획 - '05.2.4 1심판결, 2.21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추진중
21	정책별 고객관리 개념을 도입하여 관리('03.7.29, 국무회의시)	◦농림부 정책고객서비스(PCRM) 시스템 구축('04.2.23) - 정책고객 50천명 확보하여 맞춤형서비스 및 의견수렴 실시	완료
22	농지정책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03.10.16, 농어촌 투융자평가 관련보고서)	◦농지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농지법개정(안) 국회제출 ('04.11.2),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계류중 ◦농지은행제도 도입을 위한 시행방안 마련 및 관련법령 개정 추진('05)	완료 요청중
23	농촌관광방안 마련('03.10.16, 농어촌 투융자평가 관련 보고서)	◦도시민을 농촌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작업단 구성·운영('03.10~'04.1) ◦「도시민과 함께하는 농촌가꾸기 종합대책」수립 ('04.1.17)	완료 요청중
24	농업정책과 농림부관련기구의 미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안 수립('03.10.16, 농어촌 투융자평가 관련 보고서)	◦산하기관 기능혁신 추진방안 수립통보('03.10.24) ◦산하기관 기관별 기능혁신 방안(1차)보고(10.28~10.30) ◦기관별 기능혁신방안 보고회 개최('04.1.9) ◦농수산물유통공사 기능혁신방안 세부실천계획 수립시행 ('04. 8)	추진중
25	농특자금운영감독체계를 개선 ('03.11.24, 산림조합중앙회 농특자금 불법운용 실태 및 대책보고서)	◦농특회계 용자업무지침 등 관련규정 개정('04.3) ◦재단법인 농업정책자금관리단 설립('04.5.20)	완료 요청중
26	무역외 수지개선요인 목록화, 중장기대책 수립('04.1.6, 제2회 국무회의시)	◦무역외 수지 개선을 위한 자체리스트 5건 발굴 ◦재정부에 자체 리스트(5건) 제출 => 대상 과제로 선정하기에 부적절	완료 요청중
27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추진 ('04.1.9, 식약청 방문시)	◦유통국장(팀장) 및 관련 기관전문가 등으로 농식품안전팀 구성 운영('04.3) - EU·일본의 식품안전기본법 조사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공동입법 추진(3월중 국회 제출)	추진중

번호	주요 지시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비고
28	비무장지대 자연생태계 보전 방안('04.1.13,제3회 국무회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부에 DMZ(접경지역포함)일원 산림생태계 보전대책 통보(04.2)</li> <li>◦비무장지대의 환경생태 조사분석 및 영향평가(2001.8 ~ 2004. 5)</li> <li>◦비무장지대 생물상조사 보고서 작성('0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서 결과에 따른 대책마련</li> </ul> </li> </ul>	추진중
29	축산물유통 및 식품안전을 식생활안전차원에서 검토 ('04.1.13,제3회 국무회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 착수('04.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단계적으로 확대</li> </ul> </li> <li>◦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도입을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계류중</li> </ul> </li> </ul>	추진중
30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축산 농가 피해 최소화 및 소비 촉진방안('04.1.27,제5회 국무회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살처분 보상금 458억원 등 총 1,531억원 규모의 특별 지원대책을 수립, 축산농가 경영안정 도모</li> <li>◦닭고기 등 소비홍보로 산지가격은 높은 수준 유지</li> </ul>	완료 요청중
31	방치된 오염원 해소대책 마련 ('04.2.10,제7회 국무회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4추진현황(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비닐수거비 지원 : 85천톤(2,550백만원)</li> <li>- 폐비닐, 폐영농자재 수거의 달 운영 : 2회(3월, 11월)</li> </ul> </li> <li>◦'05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비닐수거비 지원 : 85천톤(2,550백만원)</li> <li>- 폐비닐, 폐영농자재 수거의 달 운영 및 수거홍보 추진 : 2회(3월, 11월)</li> </ul> </li> </ul>	추진중
32	투융자 개별사업 선정은 지역혁신클러스터 개념에서 체계적 정리('04.3.8,농림부 업무보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융자심사평가시스템 혁신방안 마련('04.4)</li> <li>◦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추진 확대를 위해 지역특화사업 등 23개 농림사업을 군특회계로 이관('04.7)</li> <li>◦지역농업클러스터 추진방안 마련('04.8)</li> <li>◦지역농업클러스터 워크숍 개최('04.9)</li> </ul>	완료 요청중
33	시장환경에 맞는 식량안보개념 필요, 대안마련 ('04.3.8, 농림부 업무보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쌀협상/DDA협상이후 개방 폭 확대에 대비, 양정제도 개편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비축제 도입 및 쌀농가소득보전직불제 개편 추진</li> </ul> </li> <li>◦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관련 법률 국회제출('04. 12)</li> </ul>	추진중
34	쌀산업에 외국자본과 인력 도입방안 연구 ('04.3.8, 농림부 업무보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 투자현황과 투자확대 방안 검토</li> <li>◦연구과제 선정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검토</li> </ul>	완료 요청중
35	백두대간 보호지역석회석 광산개발 대책 ('04.3.8, 농림부 업무보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백두대간 광산개발 대책 회의 개최 (4회)</li> <li>◦보호지역의 지정 원칙과 기준(안) 마련(산림청·환경부)</li> <li>◦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04.6.21 ~ 7.5)</li> <li>◦일정조건하에 석회석 등 부존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05.1.1)</li> </ul>	완료 요청중

번호	주요 지시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비고
36	맞춤형 농촌관광 방안 모색 ('04.3.8, 농림부 업무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은퇴자, 고령자 등을 위한 실버농업단지 조성방안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진청에서 실버농업모델 개발 등 연구착수('04.3~'06)</li> <li>- 은퇴농장 조성 추진('05계획 : 2지구)</li> </ul> </li> <li>◦도시민의 제2주택 갖기 활성화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세제 개선 및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04.12)</li> <li>- 농촌경관주택 표준설계도(6종) 개발('04.12)</li> </ul> </li> </ul>	추진중
37	북한의 조립사업 지원방안 강구 ('04.4.7, 통일부 업무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간차원의 묘목지원으로 북한 조립 복구 지원('04.4)</li> <li>◦금강산지역 산림병해충 방제 및 방제용 약제, 기자재 지원(305백만원)</li> <li>◦UNEP와의 남북환경 협력사업 추진관련 회의 및 실무 협의회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와대('04.11), 국소실('04.12)</li> </ul> </li> <li>◦묘목지원 등 주관부서의 복구계획에 참여(통일부 및 건설교통부)</li> </ul>	추진중
38	한·일 FTA협상 ('04.6.1, 제25회 국무회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일 FTA추진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03. 12. 29~'04. 4. 28)</li> <li>◦협상대책 수립 : 양허초안 등 작성기준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관보 주제 FTA 전략회의 개최('04.9.17)</li> </ul> </li> </ul>	추진중

## □ 검토이행사항 28건

번호	주요 지시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비고
1	농업·농촌종합대책 및 중장기 투융자계획안에 대해 부처 협의 후 계획 확정 할 것 ('03.10.16, 농어촌 투융자 평가 관련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농촌 투융자계획(안) 경제장관간담회 토의 ('03.11.5, '03.11.7)</li> <li>◦농업인의 날 중장기투융자계획 발표('03.11.11, 대통령)</li> </ul>	완료
2	농업구조, 경쟁력, 규모, 생산량 등의 변화를 파악, 구조개선과정을 수치로 정리 할 것 ('03.10.16, 농어촌 투융자 평가 관련보고서)	◦주요 현안 보고내용에 포함해서 대통령 보고완료 ('03.11.10)	완료 요청중
3	농어촌 지원 관련 법안이 FTA비준과 동시에 통과 되도록 준비 ('03.10.28, 제47회 국무회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대 농업지원법 제·개정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특별세법('03. 12. 22)</li> <li>-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04. 2. 16)</li> <li>-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04. 2. 16)</li> <li>-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04. 3. 2)</li> </ul> </li> </ul>	완료

번호	주요 지시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비고
4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혁과제 등을 스스로 점검하고 결과를 정기국회 이후에 보고해주기 바람. (‘03.11.4, 제48회 국무회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혁신 연찬회 개최(‘04.1.27)</li> <li>◦‘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대통령 보고(‘04. 3. 8)</li> <li>- 투융자 집행 평가시스템 구축 등</li> </ul>	완료 요청중
5	부처 스스로 점검, 평가 보고를 토대로 2004년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근거 계획을 재수립하여 내년도 업무보고시 보고(‘03.11.4, 제48회 국무회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통령 업무보고 완료(‘04. 3. 8)</li> <li>- 2003년도 농정성과와 반성</li> <li>- 농업농촌 종합대책의 효율적 추진시스템 구축 등</li> </ul>	완료 요청중
6	주5일근무대비, 쾌적한 삶을 위한 비전 제시 (‘03.12.23, 제56회 국무회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민을 농촌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작업단 구성·운영(‘03.10~’04.1)</li> <li>◦「도시민과 함께하는 농촌가꾸기 종합대책」 수립(‘04.1.17)</li> </ul>	완료 요청중
7	부처내 업무혁신 지원조직 개편(‘03.12.10,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장 현안보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혁신인사담당관실을 폐지하고, 혁신인사기획관실을 신설</li> <li>-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령 개정(2005.1.1, 대통령령 제18641호)</li> </ul>	완료 요청중
8	살처분등에 대한 합리적 보상방안과 방역추진체계 제도화 (‘03.12.30, 제57회 국무회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장려금지급요령 고시 개정(‘04.5.21)</li> <li>◦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 강화(완료)</li> <li>◦가축방역종합대책 수립(‘04.8.25)</li> </ul>	완료 요청중
9	일자리창출방안 취합 보고 (‘04.1.20, 제4회 국무회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 및 관련 산업분야 일자리 창출방안 제출지시(2004. 2. 4)</li> <li>◦재경부에서 2.3. 및 2.19.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방안"을 대통령께 보고</li> </ul>	완료 요청중
10	우리 쌀 산업, 외국현지 생산 수입방안 검토 (‘04.3.8,농림부 업무보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농업투자환경조사 실시(베트남, 필리핀)</li> <li>◦생산과잉, 소비감소 등 국내 쌀산업 여건과 농업인의 정서를 감안, 우리 쌀산업을 일정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후 투자방안 강구</li> </ul>	완료 요청중
11	축산분뇨처리시설 시스템 분석평가 보고 (‘04.3.8,농림부 업무보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림부와 환경부가 농특위를 방문하여 함께 보고서를 작성, 농특위에서 청와대 보고(‘04.4.19)</li> <li>- 축산분뇨 적정 처리 방안 등</li> </ul>	완료 요청중
12	유통공사의 정책방향에 맞는 인사선정기준 제시 (‘04.3.8,농림부 업무보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장 공개모집 추진(04.8.4)</li> <li>◦시장개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수출사업 부문 CEO를 해외마케팅 전문가로 영입(‘04.5.19)</li> </ul>	완료 요청중

번호	주요 지시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비고
13	산림조합 부실의 책임소재, 구체적 보고('04.3.8, 농림부 업무보고서)	◦청와대 정책수석비서관 보고('04.3.12) -산림조합부실의 책임관계 및 사후조치 등	완료 요청중
14	폭설피해농민에 대한 예산 집행실태 보고, 공공근로 여부 가능여부 검토 등 ('04.3.16, 제14회 국무회의시)	◦대설피해복구계획확정('04.3.19) ※ 국고(보상금) : 1,964억원 ◦시도 자금배정 : 1차(3.9) 2차(3.23) ◦자금집행 결과 : 80%('04.12말기준)	완료 요청중
15	산불예방에 필요한 입산 지도인력 투입가능성 및 예산 검토 ('04.3.16, 제14회 국무회의시)	◦산불발생위험이 높은 4월중 산불취약지역에 산불감시 및 입산지도인력 1,410명을 증원배치('04.4) ◦산불방지 인력 및 장비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초동 진화체제 구축	완료 요청중
16	축산분뇨처리 예산투자내용을 파악, 농림부와 협조 시행 ('04.3.23, 환경부업무보고서)	◦환경부와 합동으로 T/F팀 구성 ◦가축분뇨관리·이용 종합대책 수립('04.11.9)	완료 요청중
17	가축방역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조치('04.3.23, 제15회 국무회의시)	◦가축방역종합대책 마련('04.8.25) -광우병 예방 및 발생대비 사전대책 등	완료 요청중
18	향후 FTA추진을 위한 인프라와 시스템 정비 ('04. 3. 23, 제15회 국무회의시)	◦FTA 절차규정 제정 및 FTA로드맵 보완계획을 제출 (제2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04.5.10) ◦실시중인 농림부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FTA 전담과 신설추진 예정	추진중
19	숲가꾸기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 적극 강구 ('04. 4. 28,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서)	◦숲가꾸기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계획 수립 -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 수립('03.12.6) - 사회적 일자리 사업계획 수립('04.2.11) ◦일자리 창출계획에 따른 '05년 예산 반영 완료(신규)	완료 요청중
20	주40시간제 관련 공기업 산하기관의 임단협 체결 과정에 단축취지 적극반영 ('04. 5. 4, 제21회 국무회의시)	◦ 주40시간제 시행관련 연찬회 참석('04.5.6) -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마사회 ◦ 산하단체 교섭지도를 위한 T/F구성 ('04.5.20) - 교섭완료('04.6) ◦ 주40시간제 근무협약 완료 시행	완료 요청중
21	추곡수매가 관련 추가 검토후 국무회의 재상정 ('04. 5. 4, 제21회 국무회의시)	◦'04년산 수매가격을 '03년산 대비 4%인하가격으로 국무회의('04.5.11)에서 결정하고 국회동의 요청('04.6.18)	완료 요청중



번호	주요 지시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비고
22	국회처리 상황에 따라 양곡 관리법 개정 방안 검토 ('04. 5. 4, 제21회 국무회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비축제 신설, 수매량·수매가격 결정의 국회동의제 폐지, 포장양곡 표시제도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 추진</li> <li>- 개정법률안 국회제출(11.9)</li> </ul>	추진중
23	경제활성화 관련 입법 조속 마무리 ('04. 5. 11, 제22회 국무회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04. 12)</li> <li>◦농지법중개정법률안 : 상임위계류 중</li> <li>◦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중개정법률안:'05년도 입법계획에 반영</li> </ul>	추진중
24	공공기관 이전, 논리를 가지고 노조 설득 ('04. 6. 1, 제25회 국무회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기관 지방이전 노조대표와의 대화 ('04.6.14)</li> <li>-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배경, 실무추진단 구성, 기관별 협조사항 등에 대하여 노조위원장 등에 설명</li> <li>◦공공기관 지방이전 실무추진단 회의 개최(7.12)</li> <li>◦향후추진계획 : 지속적인 노조와의 대화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공감대 형성</li> </ul>	추진중
25	창구민원 장관 직접 해결 방식 워크샵에 발표준비 ('04. 6. 8, 제26회 국무회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민원접수 및 개선추진 -'04년 상반기 총 5회 방문, 총 61건의 건의사항 접수 (정책반영 30건, 추진검토 19건, 미반영 12건)</li> </ul>	완료 요청중
26	농어촌 펜션처럼 허술한 규제로 인해 문제 발생 않도록 규제 재정비 ('04.6.29, 제29회 국무회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자체에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지도점검 관련지침'시달('04.7.1)</li> <li>◦'농어촌 펜션 종합대책' 국무회의 보고(국무조정실 주관, '04.10.12)</li> <li>◦농어촌민박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농어촌정비법 개정 추진(국회 계류중)</li> </ul>	추진중
27	각종 회의시 노트북 활용 관련 ('04.8.10, 제36회 국무회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문서회의시스템을 활용한 노트북 회의</li> <li>- 시연회 개최(1회) : 6. 25</li> <li>- 국장회의 및 확대간부회의 실시 : 10회</li> <li>- 기타회의시(빔프로젝트 활용) : 10회 등</li> <li>* 활용시기 : 국장회의, 확대간부회의 등</li> </ul>	완료 요청중
28	각 부처는 국제기구 평가 관련 체계적 관리대책 수립 ('04. 10.19, 제46회 국무회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평가지수 개편관련 실무자 회의개최('04.7.15)</li> <li>◦중장기적인 농업생산자 지지수준(PSE) 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T/F팀(팀장 : 기획관리실장)운영</li> </ul>	추진중

## 입법추진계획

□ 총 9건(개정9)

일련 번호	법령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관련이행과제	비고
1	농업농촌 기본법(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량자급률 목표 등 식량자급계획</li> <li>◦지역농업클러스터를 비롯한 지방농정 강화</li> <li>◦농업경영체 활성화</li> <li>◦개방화시대에 필요한 과제 발굴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 6. 입안</li> <li>- '05. 7. 입법예고</li> <li>- '05. 10. 국회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쌀 전업농 육성 및 쌀 생산기반 확충</li> <li>- 지역농업클러스터 지원</li> <li>- 전문농업경영체 육성</li> </ul>	
2	농업기계화 촉진법(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기계의 형식 승인제 도입</li> <li>◦농기계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안전장치 부착의무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 4. 입안</li> <li>- '05. 7. 입법예고</li> <li>- '05.11. 국회제출</li> </ul>		
3	농산물품질 관리법(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수농산물 관리 제도 (GAP)와 이력추적관리 제도의 도입으로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 공급 기반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4. 5. 입안</li> <li>- '04. 8. 입법예고</li> <li>- '05. 4. 국회제출</li> </ul>	농축산물 안전성 관리제도 확충	
4	친환경농업 육성법(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산물의 유통업자도 인증대상에 포함</li> <li>◦인증 유효기간 연장 및 사후관리 강화</li> <li>◦친환경인증종류 간소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 1. 입안</li> <li>- '05. 3. 입법예고</li> <li>- '05. 7. 국회제출</li> </ul>	자연순환형 친환경 농업 확산	

일련 번호	법령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관련이행과제	비고
5	축산물의 소비 촉진 등에 관한 법률(개정)	◦의무자조금제 도입에 따라 2개이상 단체가 1개의 자조금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관리 할 수 있는 근거마련	- '05. 1. 입안 - '05. 3. 입법예고 - '05. 6. 국회제출	자조금제도 활성화	
6	축산물가공 처리법(개정)	◦국무조정실의 '식품안전 대책' 및 우리부의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관련 법규 제·개정	- '05. 2. 입안 - '05. 5. 입법예고 - '05. 10. 국회제출	농축산물 안전성 관리제도 강화	
7	동물보호법 (개정)	◦동물학대행위의 범위 구체화, 학대행위자 처벌 강화 ◦애완동물판매업 등록제 도입, 일정연령 미만은 거래 금지 등 규정	- '04. 12. 입안 - '05. 3. 입법예고 - '05. 8. 국회제출		
8	가축전염병예 방법(개정)	◦법정 가축전염병 분류 체계를 조정하여 ◦중요 질병은 정부가 집중 방역관리 ◦가축방역 일부 사무를 지자체로 이양 ◦검역시행장 취소 법적 근거 마련	- '05. 3. 입안 - '05. 7. 입법예고 - '05. 10. 국회제출	가축방역체계 강화	
9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개정)	◦농정여건 변화에 맞추어 공사명칭 변경 ◦농업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위주에서 농산어촌 지역 개발과 농지은행 제도 도입	- '05. 3. 입안 - '05. 5. 입법예고 - '05. 9. 국회제출	농지은행제도 도입	

< 참고 >

## 성과지표별 세부내역

### 1. 정책과제

정책목표 1	쌀 산업의 체질강화
--------	------------

#### 1) 양곡관리법 개정 여부

##### 성과지표의 설정사유

- 쌀협상결과 이행에 대비한 양곡유통 투명성 확보 및 품질관리, 공공비축제 도입,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는 양곡관리법이 개정되어야 시행이 가능

##### 산식 및 측정방법

- 양곡관리법 개정 여부 및 국회설득 노력정도(비계량지표)

##### '05년 목표 및 목표설정사유

- '05 성과목표 : '05년 중 양곡관리법을 개정
- 쌀 협상결과에 따른 양정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이 되어야 후속조치인 하위법령 개정 및 제도시행 등이 가능

## 2) 쌀농가 소득안정 정도

### □ 성과지표의 설정사유

- 쌀산업 연착륙 유도를 위해서는 쌀협상이후 쌀수입증가로 인한 쌀가격 하락시 농가소득안정을 통한 쌀 생산기반 유지 필요
  - '05년 수확기(10~1월) 쌀가격 하락정도와 관계없이 1ha기준으로 '01~'03년 소득의 98% 수준이상은 보장

### □ 산식 및 측정방법

- 산식 : '05년 쌀 소득('05년 논벼 1ha당 소득 + 1ha당 고정직불금 + 1ha당 변동직불금)/ 기준년도 쌀소득('01~'03년 논벼 1ha당 소득 + 1ha당 논농업직불금) > **0.98**
- 측정방법 : 논벼 1ha당 소득 [통계청(06.3~4월)]
  - 1ha당 고정직불금 : 농림부, 예산집행 실적('05.12)
  - 1ha당 변동직불금 : 농림부, 예산집행 실적('06.5)

### □ '05년 목표 및 목표설정사유

- '01~'03년 평균 1ha당 소득의 98% 이상 유지
  - '01~'03년 소득 평균 : 7,278천원/ha
- '05년 수확기 쌀값이 '03년 대비 5% 하락할 경우, '05년 산지 쌀값과 농업인들에 지급할 고정·변동 직불을 감안하여 목표설정

#### < ha당 쌀소득 및 직불금 추이와 전망 >

(단위: 천원)

구 분	'00	'01	'02	'03	'04(p)	'05(p)
쌀 소 득	7,607	7,656	6,860	6,116	6,780	6,577
직 불 금	-	233	467	501	501	638
농가소득	7,607	7,889	7,327	6,617	7,281	7,215

### 3) RPC 쌀 매입량 비중

#### □ 성과지표의 설정사유

- 산지 쌀 유통활성화 및 브랜드화·품질고급화를 위해 미곡 종합처리장(RPC)의 벼 매입 확대가 필요함
- RPC의 쌀 매입량 비중을 성과지표로 설정함

#### □ 산식 및 측정방법

- 산 식 : [ RPC 매입물량/당해연도 생산량×유통비율(73%) ] × 100  
- 쌀 유통량 대비 RPC 벼 매입량 비율
- RPC원료벼 매입실적은 각 시·도가 RPC별 벼 매입실적을 파악하여 농림부에 보고한 자료를 활용, 농관원은 RPC별 원료벼 매입실적 확인

#### □ '05년 목표 및 목표설정사유

- '05년 목표 : 유통량의 54.5%(RPC 매입량 1,325만석)
- '05년 건조저장 시설 확충에 따른 매입량 확대를 감안하여 목표설정

#### < RPC 벼매입 실적 및 계획 >

(단위 : 천석)

구 분	'00	'01	'02	'03	'04	'05계획	'06계획	'10계획	
생 산 량 (A)	36,742	38,299	34,216	30,911	34,730	<b>33,310</b>	32,280	28,180	
유 통 량 (B)	24,503	25,194	24,875	22,472	25,194	<b>24,316</b>	23,560	20,570	
미곡종합 처리장 매입비중	매입량(C)	10,890	10,492	11,589	12,753	13,000	<b>13,250</b>	13,500	14,400
	비율(C/B)	44.4	41.6	46.6	56.8	51.6	<b>54.5</b>	57.3	70.0

#### 4) 쌀 품질 평가지수

##### □ 성과지표 설정사유

- 쌀협상 이후 수입쌀을 소비자 시판할 경우의 국내산 쌀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품질로 소비자 신뢰 확보 필요

##### □ 측정방법

- 식미평가, 품위평가, 품종 혼합비율 분석, 소비자 만족도 평가를 개별 측정
  1. 식미평가 : 백미 100g을 수압세미기로 씻은 후 수분함량(14%)을 기준으로 1.45배 물을 넣은 후 전기밥솥에서 밥을 하고, 패널요원에게 시료 제공하여 평가
  2. 품위평가 : 품위계측 평가(수분, 착색립, 분상질립, 피해립, 완전립, 잔싸라기, 누, 협잡물, 돌, 해충 등 10개 항목)와 품위 감정 평가(도정도, 투명도, 변색, 이취 등 4개 항목)를 병행 실시
  3. 품종혼합비율 :  $100 - [\text{혼합률} - \text{비의도적혼입치}(10)]/2$
  4. 소비자 만족도 평가 : 소비자 식미 평가
- 측정 주관기관
  - 식미평가 : 한국식품연구원, - 품위평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품종혼합비율 :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 - 소비자만족도 : 한국소비자연맹
  -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전체 취합하여 제공

##### □ '05년 목표 및 목표설정사유

- '05년 목표 : 전년 대비 항목별 쌀 품질 향상정도
  - \* 4개 항목중 3개 이상 달성시 우수, 2개 이상 달성시 보통, 1개 달성시는 미흡으로 평가
- 생산자의 품질인식 확산과 소비자의 선택 구매 확산을 감안하여 '04년보다 목표치 상향조정

##### < 쌀 품질평가 결과 및 '05년 항목별 목표 >

구 분	'02	'03	'04	'05목표
식 미	-	73.6	69.2	74.0
품 위	-	89.4	78.4	80.4
품 종 순 도	-	61.6	76.9	77.9
소비자만족도	-	65.0	67.9	68.9

## 5) 쌀 전업농의 농지점유비

### □ 성과지표의 설정사유

- 2010년까지 경영면적 6ha수준의 쌀전업농 7만호가 예상  
 며 재배면적의 50% 수준 담당
- 전업농 농지면적 등의 통계치를 활용하여 전업농사업의 성과 및  
 진도를 측정할 수 있는 쌀 전업농의 농지점유비를 성과지표로 설정

### □ 성과지표 산식 및 측정방법

- 쌀전업농의 농지점유비 (%)
  - 쌀전업농 경영면적/전체 벼재배면적 (연도별 재배면적 감소치 적용)
- 필요한 데이터의 입수방법, 입수가능시기
  - 최종평가(1회): 사업 종료후 당해년 사업추진실적 결과보고서(연도말)
  - 중간평가(4회) : 매 분기말 사업추진실적 결과보고서(매분기 익월)

### □ '05년 목표 및 목표설정사유

- '05 성과목표 : 쌀전업농의 농지점유비 30% (297천ha)
- 쌀전업농 논경영면적 증가추이('05년 4.2ha)를 감안하여 목표 설정

### < 과거 5년간 실적통계 및 장기목표 >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07	'10년목표
쌀전업농 경영면적 확대 실적(누계)	192천ha (18%)	233 (22%)	240 (23%)	245 (25%)	279 (28%)	<b>297</b> <b>(30%)</b>	318 (33%)	342 (37%)	430 (50%)
쌀전업농 호당 논 경영면적증가 추이	2.46ha	2.80	2.81	2.9	3.9	<b>4.2</b>	4.5	4.9	6.0

- 주) 1. '04년이후 실적은 쌀전업농육성종합대책('04.7) 수립시 목표 재설정  
 2. '05년부터 경영면적 확대실적 비율은 '04년 벼재배면적(100만ha)에서 '10년 예상  
 면적(85만ha)의 감소 추세치 적용 ('05년 “예” 297천ha/975)



## 6) 배수개선답 / 수리답 비율

### 가) 배수개선답 비율

#### □ 성과지표 설정 사유

- 집중호우와 태풍 등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침수피해를 예방하여 재해대비 안정영농 기반구축 필요
- 안정영농을 위한 재해예방의 일차적 수단은 배수개선답 비율임
  -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기반의 확충을 위해서는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영농의 실현이 매우 중요하며, 배수개선답의 비율은 생산성지표, 규모화 지표를 포괄하고 있음

#### □ 산식 및 측정방법

- 산 식 :  $(\text{배수개선완료면적} / \text{배수개선대상면적}) \times 100$ 
  - 집중호우 등 침수피해에 대비 배수관리가 원활한 논 면적 비율 평가
- 측정방법 : 시·도 및 농업기반공사 조사(연도말)

#### □ '05년 목표 및 목표설정 사유

- '05년 목표 : 배수개선답 비율 68.6% 달성
- 목표설정사유
  - '05년에 2,150억원을 투자하여 109지구 31천ha 중 11지구 1천ha를 완공할 계획이므로 배수개선율을 68.6%로 설정 ('05년까지 실적 129천ha / 대상면적 188천ha  $\times 100 = 68.6\%$ )

#### < 과거 5년간 실적통계 및 장기목표 >

구 분	'00까지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배수개선면적(천ha)	97	107	115	123	128	129	131
배수개선율(%)	51.6	56.9	61.2	65.4	68.1	68.6	69.7

\* 배수개선대상 면적 : 188천ha

## 나) 수리답 비율

### □ 성과지표 설정 사유

- 도시화 등에 따른 용수 수요증가로 수자원 부족은 점점 심화 전망
  -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총 수요량의 40%이상을 점유하는 농업용수의 개발·관리가 중요
- 가뭄(한발) 등 빈발하는 재해와 최근의 영농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고품질 쌀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안정적 용수공급이 필요하므로 수리답율을 지표로 선정

### □ 산식 및 측정방법

- 산 식 :  $(\text{수리답면적} / \text{전체논면적}) \times 100$ 
  - 전체논면적 대비 용수개발로 수리시설이 완료되어 농업용수 공급 혜택을 받게되는 면적 비율 평가
- 측정방법 : 시·도 및 농업기반공사 조사(연도말)

### □ '05년 목표 및 목표설정 사유

- '05년 목표 : 수리답율 78.1% 달성
- 목표설정 사유
  - 농업·농촌종합대책에 따른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05년에 수리답율을 78.1%까지 제고할 목표로 추진
  - '05년에는 대·중규모용수개발 총 112지구 53천ha, 2,911억원을 투자하여 10천ha준공 예정

### < 과거 5년간 실적통계 및 장기목표 >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13년
전체논면적 (천ha)	1,149	1,146	1,138	1,127	1,127	1,127	1,127	1,100
수리답면적 (천ha)	880	881	880	877	879	881	883	900
수리답율 (%)	76.6	76.9	77.3	77.8	77.9	78.1	78.3	81.8

**정책목표 2 | 전문 농업경영체 성장기반 구축**

1) 창업농 영농 정착율

□ 성과지표의 설정 사유

- 농가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60세이상 경영주가 60% 정도로 고령화되어 있는 상태로 전문화된 농업경영체육성을 위해서는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인력의 신규유입 필요
- 따라서, 전문 농업인력의 신규유입척도인 창업농 정착율을 선정

□ 산식 및 측정방법

- 산식 : [최근 3년간 창업농 지원자수-취소자(사업 미진행자)]/ 최근 3년간 창업농 지원자수
- 측정방법
  - 3~4월중 시·도의 선정결과 보고에 따라 최근 3년간 창업농 지원자수 측정
  - 취소자(사업 미진행자)는 연말 시·도 보고자료를 종합하여 측정

□ '05년 목표 및 목표설정 사유

- 창업농 영농정착률 : 84%
- \* 과거 영농정착율이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현재 창업농 지원 신청자가 과거에 비해 줄어든 점을 감안할 때 영농정착율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향후 90%대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과거실적 및 향후 전망 >

구 분	'03	'04	'05	'06	'07	'08
창업농 영농정착율(%)	81	81	84	87	90	90

## 2) 전문농업경영체 농업생산비율

### □ 성과지표의 설정 사유

- 신규인력유입, 경영역량강화, 영농규모화지원 등을 통해 경영체의 성장기반 구축정도는 전문농업경영체인 전업농의 농업생산 담당 비중을 통해 성과 측정 가능

### □ 산식 및 측정방법

#### < 쌀전업농 >

- 산식 :  $(\text{쌀전업농 경영면적} / \text{전체 벼 재배면적}) \times 100$
- 측정방법 : 쌀전업농 농지면적은 영농규모화사업 종료 후 기반공사에서 작성한 사업추진실적 결과보고서에 의거(연도말)

#### < 축산전업농 >

- 산식 :  $(\text{전업농 사육두수} / \text{전체 사육두수}) \times 100$
- 측정방법 : 전업농 사육두수 및 전체사육두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분기별 조사·발표하는 가축통계조사결과를 활용

\* 한우·젖소(50두이상), 양돈(1,000두이상), 양계(3만수이상)

#### < 과수전업농 >

- 산식 :  $(\text{전업농 과원면적} \times 10\text{a당 수량} / \text{전체과실생산량}) \times 100$
  - 측정방법 : 과수전업농 사업추진실적 결과보고서(농업기반공사, 연도말)
- \* 1.5ha이상 과수경영 농가

### □ '05년 목표 및 목표설정 사유

- 쌀전업농의 생산점유비 : 전체 쌀생산의 30%(297천ha)
- 축산전업농의 사육비율 : 전체 사육두수의 73.0%
- 과수전업농의 생산비율 : 전체 생산량의 40.7%

**< 과거실적 및 장기목표 >**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07	'13
쌀전업농 비율(%)	18	22	23	25	28	<b>30</b>	33	37	50
축산전업농 비율(%)	59.6	61.4	65.1	67.7	71.4	<b>73.0</b>	74.2	75.4	85.0
과수전업농 비율(%)				39.8	40.0	<b>40.7</b>	41.5	42.5	51.0

**< 쌀전업농 >**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07	'10년
쌀전업농 경영면적 확대 실적(누계)	192천ha (18%)	233 (22%)	240 (23%)	245 (25%)	279 (28%)	<b>297 (30%)</b>	318 (33%)	342 (37%)	430 (50%)
쌀전업농 호당 논 경영면적증가 추이	2.46ha	2.80	2.81	2.9	3.9	<b>4.2</b>	4.5	4.9	6.0

- 주) 1. '04년이후 실적은 쌀전업농육성종합대책('04.7) 수립시 목표 재설정  
 2. '05년부터 경영면적 확대실적 비율은 '04년 벼재배면적(100만ha)에서 '10년 예상 면적(85만ha)의 감소 추세치 적용 ('05년 “예” 297천ha/975)

**< 축산전업농 >**

구 분	'99	'00	'01	'02	'03	'04	'05	'06	'07	'13
전업농수	11,317 호	11,262	12,046	12,867	13,740	14,201	<b>15,148</b>	15,905	16,541	20,000
전 체 사육두수	104,938 천두	112,895	113,067	112,621	110,219	117,807	<b>114,951</b>	115,959	117,007	123,200
전업농 사육두수	58,376 천두	67,238	69,389	73,279	74,597	84,098	<b>83,858</b>	86,077	88,262	88,262
전업농 사육비중	55.6%	59.6	61.4	65.1	67.7	71.4	<b>73.0</b>	74.2	75.4	85.0

**< 과수전업농 >**

구 분	'03	'04	'05	'06	'07	'08	'13
과수 전업농 과원면적 (ha)	45,724	46,174	<b>46,624</b>	47,224	47,974	48,974	55,200
과수전업농수(호)	18,186	18,486	<b>18,786</b>	19,186	19,686	20,353	22,000
전업농생산량(천톤)	906	984	<b>994</b>	1,007	1,023	1,044	1,176
과일생산량(천톤)	2,275	2,462	<b>2,443</b>	2,425	2,406	2,386	2,307
대 비 (%)	39.8	40.0	<b>40.7</b>	41.5	42.5	43.8	51.0

### 3) 농가소득 중 직불금 비중, 농업투융자 대비 직불투융자 비중

#### □ 성과지표의 설정 사유

- 직불제는 국가재정에서 시장을 왜곡하지 않고 농가에 직접적으로 소득을 이전하는 정책으로 직불제 확충은 농가의 이전 소득 증가로 나타남.
  -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직불제가 확충되었는지 여부는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직불제 비중으로 파악할 수 있음.
-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거나 농촌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다른 정책과는 달리 직불제는 농업예산 투입과 비례하여 농가의 소득이 증가한다는 측면에서 농업투융자 대비 직불투융자 비중이 직불제 확충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 □ 산식 또는 측정방법

##### ○ 산식

- 농가소득중 직불금 비중 :  $(\text{직불 투융자}/\text{농가수})/\text{농가소득}$
- 농업투융자 대비 직불투융자 비중 :  $\text{직불투융자}/\text{농업투융자}$

##### ○ 측정방법

- 당해연도 농가소득: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차년도 5월 입수가능)
- 농업예산, 투융자: 당해연도 12월(국가 예산안 확정시기)

□ '05년 성과목표 및 관련자료

○ 농가소득 중 직불금 비중('05년): 3.3%

- 성과측정시기 : '06년 5월

- 농림부에서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의 '05년 농가소득을 활용하여 직불제 비중 파악

\* ('02) 1.4% → ('03) 2.1 → ('04P) 2.8 → ('05P) 3.3 → ('06P) 3.7

○ 농림투융자 대비 직불투융자 비중('05년) : 12.6%

- 성과측정시기 : '05년 12월

- '05년 예비비 및 추가경정예산 등이 확정되는 시기에 예산안 내역을 파악하여 직불예산 비중 측정

\* ('03) 9.7 → ('04) 10.8 → ('05P) 12.6 → ('06P) 13.5

#### 4) 재해 보험·가축공제 가입률 및 가입액

##### 가) 재해 보험 가입률 및 가입액

###### □ 성과지표 설정 사유

- 그동안 재해농가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에서 탈피하여, 농가 스스로 보험에 가입하고 재해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받아 차기 영농을 지속할 수 있는 선진 농업경영 안정 장치의 구축이 긴급
- 보다 많은 농가가 보험에 가입하여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를 극복하고 농업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 산식 및 측정방법

###### ○ 산식

- 가입률 :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면적을 재해보험사업자가 제시한 가입조건을 충족하는 가입 가능 대상면적으로 나누어 산출  
· 가입률 = 가입면적 / 대상면적
- 가입금액 :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금액을 합산하여 산출  
· 가입금액 = ∑ 개별 가입농가의 가입금액

###### ○ 측정방법

- 재해보험사업자의 보험가입 추진 후(4월) 실적 결과를 통해 측정

###### □ '05년 목표 및 목표설정 사유

- '05년 목표 : (가입률) 19.1% / (가입금액) 528,817백만원
- 가입률은 '04년 이후 매년 0.9%p 증가하여 '06년에 가입률이 20%가 되도록 설정하였고, 가입금액은 매년 3% 성장한 수치를 목표로 설정

##### < 재해보험 가입실적 및 목표 >

<단위 : %, 백만원>

구 분	`01	`02	`03	`04	`05	`06
가입률	17.6	18.3	15.2	18.2	19.1	20.0
가입금액	92,888	271,186	306,754	513,415	528,817	544,682



## 나) 가축공제 가입률 및 가입금액

### □ 성과지표 설정 사유

- 재해, 가축질병 등 피해에 대비한 축산농가의 안정적 경영 기반 구축을 위해 가축공제 가입률, 가입금액\* 측정
- \* 공제가입 농가가 사고 등 발생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 산식 및 측정 방법

- 산 식
  - 가입률 = (총 가입두수/가입대상 15개 축종 전체사육두수)×100
  - 가입금액 : ∑ 개별 가입농가의 가입금액
- 10월까지 공제 가입실적을 자체 집계

### □ '05년 목표 및 목표 설정 사유

- '05년 목표 : 가입률 26.0%, 가입 금액 1조 4,844억원
  - 축종별 가입률 : 소 10.0%, 돼지 56.1%, 말 3.7%, 가금(닭·오리·평·메추리) 24.6%
- 대상 축종을 5개 축종(소, 돼지, 말, 닭·오리)에서 '10년까지 15개 축종으로 확대하고, 가입률도 연차적으로 제고

### < 공제 가입 추이 및 목표 >

구 분	'02	'03	'04	'05(P)	'06(P)	'07(P)
가입률(%)	8.6	15.5	20.7	26.0	30.6	33.7
가입액(백만원)	771,251	976,719	1,022,741	1,484,395	1,747,183	2,123,608

## 5) 농지은행제도 도입 여부

### □ 성과지표 설정사유

- 농지은행제도의 신규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제도도입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구축 여부를 평가하기 위함

### □ 산식 및 측정방법

- 산식 : 법령 개정여부(50%), 사업시행지침 수립여부(25%), 포털사이트 구축여부(25%)
- '05년말 기준으로 설정목표의 이행여부를 점검

### □ '05년 목표 및 목표설정 사유

#### ○ '05 성과목표

- 농지법,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
- 농지은행사업 세부 시행절차 및 운용지침 수립
- 농지유통화 포털사이트 구축

#### ○ 목표설정 사유

- 농지은행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법 및 세부 사업시행 지침이 정비되어야 하며 이에따라 하위법령 개정 및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가 가능
- 또한, 농지유통화 정보제공을 위해 기 예산이 확보된 포털사이트의 구축현황을 평가

### <참 고>

- ▶ 「농지법」은 국회계류중('04.11)이며,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은 현재 개정작업중
- ▶ 농지유통화 정보관련 예산 : '05년 8억 200만원

1) 소모성 물류비 비율

□ 성과지표 설정사유

- 포장·가공 등 농산물의 상품성이 제고 될수록 물류비는 증가 경향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임
- 그러나 운송·하역비, 감모·청소비 등 부가가치 제고에 도움을 주지 않는 소모성 물류비 비중을 분석하여 파렛트화·하역기계화 등 농산물 물류효율화 정도를 측정

\* 농산물 물류비(7.2조) : 운송비 22,881억원, 포장비 22,324, 보관비 6,908, 하역비 6,426, 감모·청소비 등 13,727

□ 산식 및 측정방법

- 전체 물류비 항목 중 물류효율화를 통하여 비용절감이 필요한 운송하역비, 감모·청소비의 비중 감축정도를 평가

- (톤당 운송비 + 톤당 하역비 + 톤당 감모·청소비)/톤당 물류비 × 100

\* 청과물 9대품목(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사과, 배, 포도, 감귤) 대상

- 측정방법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유통비용조사 자료 활용(매년)

□ '05년 목표 및 목표설정 사유

- '05년도 성과목표 : 53.9%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조사한 결과를 활용
- 최근 5개년('98~'03)까지의 추세치를 활용하여 '04년 이후의 물류비 비중을 추정하여 목표를 설정
  - 주요 농산물유통실태는 차후년도 2/4분기중 그 조사 결과가 산출됨

< 과거 실적통계 및 장기목표 >

구분	'98	'99	'00	'01	'02	'03	'04(p)	'05	'06
소모성 물류비 비율(%)	67.4	61.5	58.7	58.4	46.1	55.8	55.0	53.9	52.7

## 2) 우수 브랜드 인지도조사

### □ 성과지표 설정사유

- 우수브랜드에 대한 평가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좋은 국산 브랜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
- 우수브랜드 인지도는 소비자의 구매의사의 필요조건이 되며, 나아가 국산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예측이 가능
- \* 전국 5,000여개의 브랜드 농산물에 대한 대표성 확보 및 공동브랜드 저변확대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각 시도에서 추천한 50개 이상의 브랜드 조사 필요

### □ 산식 및 측정방법

- 산식 : 소비자조사에서 나타난 대상 브랜드 인지도평균
  - 조사대상 : 시도지사가 “농산물 파워브랜드 전시회”에 출품한 농산물 공동브랜드
- 측정방법
  - 소비자에 의한 시중유통 농산물 브랜드 선호도 조사
  - '05년 하반기중 브랜드조사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전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농산물 브랜드파워 조사
  - 조사항목 : 브랜드 인지도, 신뢰도, 브랜드 충성도 등

### □ '05년 목표 및 설정사유

- '05년 목표 : 23%
  - 매년 2%의 인지도 상승목표 설정

#### < 과거 실적 및 중기 목표 >

구 분	'03	'04	'05	'06
브랜드 인지도(%)	19	미조사	23	25

- \* '03년 처음으로 시도지사가 “농산물 파워 브랜드 전시회”에 출품한 55개 농산물 공동브랜드에 대한 전국 소비자 1,000명 대상 조사 실시

### 3) 국산 농축산물 소비자 만족도 조사

#### □ 성과지표 설정사유

- 고품질의 안전한 국산 농축산물의 소비자인 일반국민이 체감하는 만족도를 조사

#### □ 산식 및 측정방법

##### ○ 산식

- 매우만족(5점), 약간만족(4점), 보통(3점), 약간불만(2점), 매우불만(1점)의 5점척도 설문조사 실시
- 응답자수로 가중하여 5점척도화하고, 이를 100점으로 환산(점수/5×100)

##### ○ 측정방법

- 조사대상 : 전국 10대권역 도시가구 1,000호
- 조사내용 : 가격, 관능, 안전성, 포장상태, 교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채소류, 과일류, 화훼류, 식품 등에 대해 소비자 설문조사 실시
- 조사시기 : '05년 하반기
- 조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소비실태조사와 병행 실시

#### □ '05년 목표 및 설정사유

- '05년도 성과목표 : 소비자만족도 과반수 달성

#### < 과거 실적 및 중기 목표 >

- 처음 실시하는 조사로 비교군이 없으므로 우선 50% 목표설정 후 '06년 이후 목표치 조정

#### 4) 농식품 수출실적

##### □ 성과지표의 설정 사유

###### ○ 농식품 수출 확대 현황을 실적통계를 통해 확인

\* 신선농산물 수출과 가공식품 수출의 연계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수출 정책이 양자의 수출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 농식품 전체 수출실적을 지표로 사용

- 단, 품목별 수출대책 수립추진을 위해 세부 품목 및 부류에 대한 수출 통계도 별도 관리

##### □ 산식 및 측정방법

###### ○ 산식

- 수출목표 달성율(%) = 2005년 연간수출실적/수출목표×100

###### ○ 측정 방법

- 수출실적은 관세청 농식품 수출통계 자료 활용

##### □ '05년 목표 및 목표 설정 사유

○ 수출 목표 : 2,300백만불

○ 목표 설정 사유 : 농업농촌종합대책에 제시한 중장기 수출목표 ('08 : 30억불, '13 : 50억불)에 연동하여 '05년 수출목표 설정

#### < 과거 실적 및 중기 목표 >

(단위 : 백만불)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목표	2006목표	2008목표	2013목표
수출실적	1,531.9	1,579.9	1,639.9	1,859.8	2,085.0	2,300.0	2,450.0	3,000.0	5,000.0

## 5) 자조금단체의 생산 점유비중

### □ 성과지표 설정사유

- 농축산물 가격변동으로 인한 경영위험 감소를 위해 생산자단체의 자율적 수급조절 대상이 되는 생산비중(자조금사업 가입비중)상승정도 평가

### □ 산식 및 측정방법

- 산식 :  $\sum [(자조금\ 단체\ 농산물\ 생산량(사육두수)/품목별\ 총\ 생산량) \times 100] / '10년도\ 목표자조금\ 품목수(채소\ 14, 과수\ 7, 축산\ 7)$
- 측정방법
  - 자율적 수급관리를 하는 자조금단체의 관리대상 농축산물 비중 측정
  - 측정시기는 매년 자조금 사업승인이 완료되는 3월하순 자조금 사업자가 제출한 품목별 구성원의 생산량 자료를 통해 실시
  - 축산물은 10월말 기준 자조금 단체의 자조금 실적 집계

### □ '05년 목표 및 목표설정 사유

- 목표 : 채소류 15%, 과실류 48.0%, 축산물 37.0%
- '05년 목표 설정사유
  - 채소류 : 자조금단체 생산비중의 연평균 증가율(채소 39%)을 감안하여 설정
  - 과실류 : 주요품목(목표 7개/실적6)의 자조금 조성으로 연평균 증가율(197%)를 적용하지 않고 '05 KREI 품목별 생산량 전망과 단체별 자체 생산량 전망을 감안하여 설정
  - 축산물 : '10년까지 양돈·한우·낙농·육계·산란계 분야에 의무 자조금을, 오리·사슴 등은 임의 자조금 조성·운영 하되 조성수준을 연차적으로 제고하여 설정

### < 과거 실적 및 중기목표 >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07
채소류(%)	2.9	3.0	7.3	11.7	10.2	15.0	19.8	27.5
과실류(%)	-	5.4	6.4	34.0	41.6	48.0	56.8	68.9
축산물(%)	24.0	26.0	26.0	24.0	26.0	37.0	51.0	57.0

1) 농축산물 안전성조사 부적합율

□ 성과지표 설정 사유

농산물

- 농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 부적합율은 농산물의 안전성 수준을 수치화로 표현이 가능한 지표로서, 많은 선진국 및 식약청 등 국내의 다른 기관에서 사용중
  - 선진국은 1% 내외(미국 0.8%, 영국 1.3%, 아일랜드 1.55 등)

축산물

- 축산물이 인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주요 요인은 항생제 등 동물약품 잔류정도 및 유통과정에서 병원성 미생물 오염 여부
- 식육중 잔류물질 검사를 위해 주사자국, 화농부위, 과거 위반 이력 농가 등 출하가축에 대해 도축장에서 중점 검사
  - 식육중 대장균 O157:H7,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등 식중독균의 오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주기적 검사 실시

□ 산식 및 측정방법

- 산식 : (부적합 농산물 건수/전체 안전성조사 건수) × 100  
(위반 건수/잔류물질 등 검사 건수) × 100
- 측정방법
  -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산물안전성조사 결과 파악
  - 매년 1월에 전년도 자료를 집계하여 부적합율을 파악할 수 있음
  - 3/4분기까지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사결과를 취합



□ '05년 목표 및 목표설정 사유

농산물

○ '05년도 성과목표 : 1.3%

-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1년간 실시한 농산물안전성조사 결과를 '05년도 말 기준으로 파악

○ 최근 3개년('02~'04) 평균이 1.3%이며 장기적으로 1.1%를 목표로 하고 있어, '05년에는 1.3%로 설정

- 부적합율은 1% 초반 부근이 한계점에 가까워 대폭 향상시키기는 현실적으로 곤란

< 부적합율 >

구 분	'02	'03	'04	'05	'06	'07	'08
농산물안전성조사 부적합율(%)	1.1	1.5	1.3	<b>1.3</b>	1.2	1.2	1.1

축산물

○ 식육중 잔류물질 위반율 0.2% 이하, 미생물 위반율 0.4% 이하

○ 주요국 위반율 및 그간의 추세 등을 감안하여 설정

\* 주요국 잔류물질 위반율('00년) : 미국 0.46, 호주 0.21, 일본 0.05

< 잔류물질 등 위반율 추이 >

구 분		'00	'01	'02	'03	'04.9	'05(P)	'06(P)
잔류물질	검사건수	70,213	102,824	105,720	115,360	87,365	<b>120,000</b>	120,000
	위반건수	75	177	145	236	203	<b>300</b>	290
	위 반 율	0.11	0.17	0.14	0.20	0.23	<b>0.25</b>	0.24
미생물	검사건수	47,072	119,668	116,257	105,036	99,893	<b>120,000</b>	120,000
	위반건수	74	285	237	483	443	<b>530</b>	520
	위 반 율	0.16	0.24	0.20	0.46	0.44	<b>0.44</b>	0.43

\* '05년 잔류물질은 규제검사 건수 확대, 미생물은 권장기준 강화로 위반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반율이 전년과 동일 하더라도 위생수준은 향상된 것임.

## 2) 단위면적당 화학농약 사용량

### □ 성과지표 설정사유

- 친환경농업의 목표 중의 하나는 국토환경관리이며, 토양 및 수질에 부담을 주는 단위면적당 합성농약 사용량 절감은 친환경농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주요지표임

### □ 산식 및 측정방법

- 산식 : 농약출하량(성분량)/경지이용면적
- 농약공업협회에서 집계하는 당해연도의 합성농약 출하량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집계하는 경지이용면적으로 나누어 산정
  - 잠정 통계는 당해연도 연말에 집계가능하나 확정된 공식집계는 차년도 6월경에 가능

### □ '05년 목표 및 목표설정 사유

- '05년도 성과목표 : 12.3kg/ha
  - \* '04년 잠정치 12.6kg보다 0.3kg 감소한 수준으로 목표 설정
- 목표설정 사유
  - 천적방제 등 신규사업 추진 등으로 전년도 감소폭보다 다소 큰 폭의 감소 목표 설정
  - \* 다만, 농약사용량은 기후변화 등에 크게 좌우되는 한계

### < 과거 5년간 실적통계 및 중기목표 >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13년
12.2kg	12.4	13.5	12.8	12.7	12.6	12.3	7.4

- \* 당해연도 기후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단기간에 추세 확인에 한계가 있고, 시설원예의 농약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90년대의 11.5kg 수준보다 증가
- \* '04년도의 잠정통계는 12.6kg 수준으로 추정

### 3) 친환경인증농산물 비율

#### □ 성과지표의 설정 사유

- 친환경농업육성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는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공급 및 우리 농산물의 품질향상임
- 따라서 친환경인증농산물의 비중 확대는 친환경농업육성 정책의 성공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기본지표로 적절함
  - 친환경인증농산물의 절대량은 당해연도 전체 작황 등에 좌우될 수 있으므로 지표로 적절치 않음

#### □ 산식 및 측정방법

- 산식 : (당해연도 친환경인증농산물 물량/전체 농산물 생산물량) × 100
-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물량은 차년도 1월 중에 집계하고, 전체 농산물 생산물량은 차년도 5-6월경 집계

#### □ '05년 성과목표 및 관련자료

- '05년도 성과목표 : 3.5%
- 목표설정 사유
  - '04년에 2.1%수준에서 2.5%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05년에는 정책지원 확대 및 농업인의 관심 증대로 3.5% 수준까지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과거 5년간 실적통계 및 중장기 목표 >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10년
1.1%	1.6%	2.6%	2.8%	2.1%	2.5%	3.5%	10.0%

\* '03년부터 자율표시제도를 없애고 모든 친환경농산물은 인증을 받도록 규정을 강화하여 '03년에는 비중이 감소

\* '04년은 잠정통계로 2.5% 수준으로 추정

#### 4) 가축분뇨 퇴비 판매량

##### □ 성과지표 설정사유

- 축분을 농경지에 환원하는 자연순환형 축산업 체계 구축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퇴비화 정도 평가
  - 부산물 비료 생산업체의 가축분뇨 퇴비 판매량을 조사하여 전체 퇴비화 증감여부 추정
  - \* 가축분뇨의 자원화 실적 평가방법은 농가단위에서 무상으로 유통·사용 되는 퇴·액비의 물량을 제외하고, 퇴비상품으로 제조한 물량기준으로 평가

##### □ 산식 및 측정방법

- 산 식 : '05년 퇴비 판매량
- 측정방법 : 농촌진흥청 조사
  - \* 매년 1월 및 7월에 정기조사

##### □ '05년 목표 및 목표설정 사유

- '05년 목표 : 1,737천톤
  - '04년 추정치(1,654천톤) 대비 5% 증가

#### < 축분 퇴비 판매량 추이 및 목표 >

구 분	'00	'01	'02	'03	'04(P)	'05(P)	'06(P)
퇴비판매량(천톤)	1,292	1,424	1,788	1,514	1,654	<b>1,737</b>	1,824

\* '04~'06년 추정치는 최근 3년간 퇴비 판매량 평균에 매년 성과 목표를 5% 추가 적용

## 5) 해외여행객 휴대육류 검색건수/ 돼지 콜레라 등 예방접종 면역 형성률

### □ 성과지표 설정사유

- 구제역 등 해외 악성 가축질병의 국내 유입경로중 가장 위험한 해외여행객의 휴대축산물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
- 돼지 콜레라, 닭 뉴캐슬병 등 주요 질병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접종 등 사전 방역 활동 평가

※ '03년말 국내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가 철새에 의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듯이 가축질병은 정부 정책 이외의 요인에 의해 발생 가능

- 또한, 소 부루세라 등 일부 주요 질병에 대해 감염축 색출 및 살처분에 집중하고 있어 질병의 발생건수는 계속 증가될 수 밖에 없음

### □ 산식 및 측정방법

- 휴대육류 검색실적 : 국제 공항만에서 해외여행객의 불법휴대 축산물 검색건수(검역원 실적)
- 예방접종률(면역형성률) : (면역형성/검사두수) × 100
  - 검역원에서 실적치 집계

### □ '05년 목표 및 목표설정 사유

- 해외여행객 휴대육류 검색 : 20천건 이상(전년대비 5%증가)
- 돼지콜레라 면역형성률 : 95%이상(실제 예방접종 100% 실시)
- 닭뉴캐슬병 면역형성률 : 88%이상(전년대비 3%이상)

### < 과거실적 및 향후전망 >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휴대육류 검색실적(건)	5,053	4,665	7,740	10,012	19,200	20,000	21,000
돼지콜레라 면역형성율(%)	96.1	96.4	-	90.4	95.4	95.5	96.0
닭뉴캐슬병 면역형성율(%)	64.5	65.0	81.8	86.0	85.7	88.0	90.0

1) 녹색농촌체험마을 방문객수 및 농촌관광 매출액 증가율

□ 성과지표 설정 사유

- WTO 출범이후 농업·농촌의 성장잠재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됨에 따라 도농교류활성화를 통한 농촌활력증진 도모
- 농촌관광활성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녹색농촌체험마을 방문객과 농촌관광 매출액의 증가율을 지표로 설정

□ 산식 및 측정방법

- 산식 :  $[(\text{당해년도 실적} - \text{전년도 실적}) / \text{전년도 실적}] \times 100$   
 - 시·도(시·군)에서 점검한 녹색농촌체험마을 방문객 및 매출액 실적을 기준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증가율 산출
- 측정방법 : 매년 11월말을 기준으로 행정조사 실시  
 \* 지방자치단체(시·군)의 조사결과를 자료로 활용

□ '05년 목표 및 목표설정 사유

- '05년 목표
  - 녹색농촌체험마을별 방문객수 : 20% 증가
  - 녹색농촌체험마을별 농촌관광 매출액 : 20% 증가
  - \* 농촌관광 매출액 : 민박, 체험프로그램 운영, 농특산물 판매
- 목표설정사유 : '03 ~ '04년도 증가율을 고려하여 목표 설정

< 과거 실적 및 향후 전망 >

구 분	'02	'03	'04	'05	'06
마을당 방문객수(명)	-	7,007	9,611	11,533	13,840
마을당 농촌관광 매출액(천원)	-	104,878	141,581	169,897	203,876

## 2) 복지지원 수혜인원 및 지원액 증가율

### □ 성과지표 설정 사유

- 농촌의 고령화, 여성의 역할증대 등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복지수요에 대응한 복지지원을 계량화하기 위하여 복지지원의 수혜인원 및 지원액 증가율을 지표로 설정
- 대안지표 검토
  - 복지정책 결과를 반영할 다른 지표를 찾기가 어려움
  - 복지지원 만족도를 조사하여 보완지표로 사용 예정

### □ 산식 및 측정방법

- 산식 :  $(\text{당해년도 수혜인원 및 지원액} - \text{전년도 수혜인원 및 지원액}) \times 100 / \text{전년도 수혜인원 및 지원액}$
- 측정방법
  - 국민건강관리공단, 농협, 보건복지부에서 작성한 통계자료를 통해 농민 지원자 및 예산집행 실적 확인(12월)

### □ '05년 목표 및 목표설정 사유

- '05년 목표 : 수혜인원증가율 12.1%, 지원액 증가율 3.9%
- 목표설정사유 : 삶의질향상 5개년계획에 따른 연차별 투자 계획에 따라 '05년도의 추진목표를 설정

### < 과거 5년간 실적통계 및 장기목표 >

(천명·천원)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수혜인원	613	615	653	726	1,344	1,506	1,560
- 증가율	-	0.3	6.2	1.2	85.1	12.1	3.6
○1인당지원액(년)	2,800	3,173	3,275	3,552	6,069	6,304	6,609
- 증가율	-	13.3	3.2	8.5	70.9	3.9	4.8

### 3) 농촌주민 만족도

#### □ 성과지표 설정 사유

-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는 농촌 주민들의 만족도가 농촌주민의 복지 등 삶의 질을 객관적·종합적으로 나타내는 대표지표이므로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선정
- 농외소득 비중변화 등 지표 대안 검토
  - 농외소득과 관련하여는 당해년도에 지표를 생산해내기 어렵고, 농외 소득은 농촌주민의 삶의질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중 하나임

#### □ 산식 및 측정방법

- 보건의료서비스, 기초생활여건, 생활환경 쾌적성, 복지수준, 교육서비스, 문화·여가시설 등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
  -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불만’, ‘매우불만’의 5개 척도로 나누어 조사
  - \*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실태 조사('04.8~'04.11)
- 측정방법
  - 전문조사기관을 선정하여 농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표본 설문 조사 실시 (11월중 조사)
  - \* '05년중 삶의질 만족도 지수화 방법 연구용역 실시 예정

#### □ '05년 목표 및 목표설정 사유

- '05년 목표 : '04년도 대비 불만족도 축소 및 만족도 제고
- 목표설정사유 : '04년 농촌주민의 만족도보다 상승을 목표로 함
  - \* 과거 통계자료 없음



□ 협상관련 계량적인 성과지표 설정이 어려워 협상과정의 대응노력과 최종 협상결과 내용 및 국내수용 분위기 등을 평가지표로 대체

□ 성과지표 산식 및 측정방법 : 과정평가

- 쌀협상 검증, WTO 및 FTA 농업협상에 능동적인 대응체계 구축 여부
- 주요 쟁점별 대응논리 등 철저한 협상대책 마련 및 대응 여부
- 협상에서 입장을 같이하는 주요국과의 적극적인 공동대응 노력 여부
- 농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협상결과의 원만한 수용분위기 조성 여부

<평가지기>

- 쌀협상 WTO 검증 : 검증완료 후
- DDA 농업협상 : 세부원칙 확정 후 및 연말평가
- FTA 농업협상 : 각 국가와 FTA 최종타결 후 및 연말평가

□ '05년 목표 및 목표설정 사유

- 쌀협상 결과 검증완료
  - 협상결과를 다자차원에서 최종 확정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대내외 절차 완료 필요
- DDA 농업협상에서는 관세 및 보조금 감축 최소화 달성
- FTA 농업협상에서는 품목별 민감성을 반영한 협상 결과 도출

## 2. 혁신과제

### 혁신과제 1

### 현장농정 구현을 통한 농정 신뢰 회복

#### 가. 주요정책 고객만족도

##### □ 성과지표 설정사유

- 정책업무의 비중이 높은 부처업무 특성상 고객위주의 현장 농정 추진 필요
- 과제의 궁극적인 목표가 고객의 만족도 향상이므로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주요정책 만족도”와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설정

##### □ 측정방법

- 실·국별 3~4개(총 25개 이내)의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
- 전문리서치기관에 의뢰하여 반기별로 면접, 전화, FAX 등을 통해 정책고객 만족도 조사

##### □ '05년 목표 및 설정사유

- '05년 목표 : '05년 상반기 대비 5% 향상
- 고객위주의 농정 추진을 통해 매년 고객만족도를 10% 향상시킬 계획이나, 이제까지 주요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준지수가 없음
- 이에 따라 '05년중 정책고객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연 2회 만족도 조사를 실시키로 하고, 상반기 대비 5% 향상을 목표로 설정

## 나. 민원서비스 만족도

### □ 성과지표 설정사유

- 고객만족도는 고객위주의 현장농정 추진은 물론 정책품질 관리 및 민원서비스 개선 노력이 따라야만 향상이 가능
- 이에 따라 “주요정책 만족도”와 함께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설정

### □ 측정방법

- '05.1.1 ~ 10.31까지 농림부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과 현장체험 학습을 실시한 농가(경영체) 중에서 소관 부서별로 무작위 추출하여 표본을 선정
- 전문리서치기관에 의뢰하여 반기별로 전화 설문조사

### □ '05년 목표 및 설정사유

- '05년 목표 : 전년 대비 10% 향상  
- '04년 58.0점 → '05년 63.8점
- 최근 4년간의 민원만족도가 50점대('02년 60.8점)인 점을 감안할 때 단기간내 민원만족도를 대폭 향상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순수한 민원서비스 개선 노력만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의 목표 설정

#### <최근 4년간 민원서비스 만족도 측정 결과>

- 2001년 59.9점, 2002년 60.8, 2003년 52.0, 2004년 58.0
- 4년 평균 : 57.6점

## 가. 통합 성과관리체계 구축 정도

### □ 성과지표 설정사유

- 과제수행에 따른 성과는 새로 구축된 시스템이 운영되어야만 나타날 수 밖에 없으므로 금년도에 측정 가능한 시스템 구축 정도를 성과지표(평가기준)로 설정

### □ 측정방법

- 통합 성과관리체계 운영지침 수립여부 조사결과로 평가

### □ '05년 목표 및 설정사유

- '05년 목표 : '06년부터 적용 가능한 통합 성과관리체계 구축 완료
- '06년부터 과장급에 대하여도 적용 예정인 성과연봉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서는 실제 운용 가능한 성과관리체계를 연도내에 구축하여야 하므로 연내 구축완료를 목표로 설정

## 나. 새로운 성과관리체계에 대한 고객(적용대상 직원) 만족도

### □ 성과지표 설정사유

- 통합 성과관리체계를 차질없이 운영하여 성과주의를 정착 시키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결과가 산출되어야 하므로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직원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설정

### □ 측정방법

- 통합 성과관리체계 적용대상 직원(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조사

### □ '05년 목표 및 설정사유

- '05년 목표 : 70%이상 만족
- 새로운 제도의 도입 첫해부터 100%의 만족을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대상직원의 70%이상 만족을 목표로 설정

「농업·농촌의 희망과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2006년 주요업무계획

2006. 1.

농 립 부

“농업·농촌사랑! 우리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힘”



# 목 차

I.	이제까지의 정책성과 및 현좌표 진단 .....	363
II.	'06년 중점추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	377
1.	농림부의 비전달성을 위한 정책목표 체계 .....	379
2.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	380
□□	정책목표 : 농업개방 확대 적극 대응 .....	㉸
□□	정책목표 : 전문경영체 육성 및 소득·경영안정 .....	㉸
□□	정책목표 : 쌀 산업의 체질강화 .....	㉸
□□	정책목표 : 농축산물 유통 효율화 및 소비촉진 .....	㉸
□□	정책목표 : 소비자 지향적 농식품 안전관리 .....	㉸
□□	정책목표 : 도시민과 상생하는 복지농촌 조성 .....	㉸
III.	'06년 역점 추진 혁신과제 .....	451
1.	지난해 혁신성과 평가 및 시사점 .....	453
2.	'06년 역점 추진 혁신과제 .....	456
IV.	성과측정 추진체계 .....	467
1.	정책성과 측정체계 .....	469
2.	혁신과제 측정체계 .....	479
V.	마무리 .....	483
<붙임> 1. 신규발굴·시행 정책 및 종료·폐기 정책		
2. 성과지표별 세부 내역		





---

# I. 이제까지의 정책성과 및 현 좌표 진단

---

1. 과거 농정의 성과 및 한계
2. 농정의 현주소
3. 중장기 농정 방향





# 1. 과거 농정의 성과 및 한계

## 가. 여건 및 정책기조

- '94년 UR협상 이후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의 관세화 개방 시작
  - 개방확대에 따른 경쟁심화로 우리 농업은 영세한 농업구조 탈피, 낮은 생산성 극복 등 국제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
    - 기반정비를 이미 완료한 선진국에 비해 농업생산기반, 유통시설 등 경쟁력 제고의 기초가 되는 농업 SOC 부족
  
- '94년 농어촌 발전대책, '94년 농특세 신설을 바탕으로 취약한 농업 SOC 투자를 통한 경쟁력 제고사업을 집중 추진
  - 전업농('97까지 육성대상자 7만호 선정) 및 영농조합법인 등 법인 경영체 육성을 통해 농업경영의 규모화 촉진
    - 농지법 제정('94)으로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허용, 진흥지역내 소유상한 폐지 등 전업화·규모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 대구획 경지정리, 저수지 등 수리시설 개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등 안전 영농 기반 구축
    - 채소·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을 통한 유리온실, 유통시설 등 확충
  - 수확기 매입 물량가격을 미리 예시하는 추곡약정수매제 도입('97)
  
- 이밖에 농특세를 재원으로 농어민연금제 도입('95), 농어촌 의료시설 지원, 농공단지 등 농어촌 소득원개발 사업 추진

- '98년 예기치 못한 **외환위기**를 맞아 경기침체에 따른 농산물 가격하락,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 등 이중고 경험
  - 외환위기로 인한 금리인상은 농가의 부채상환 부담 증가로 이어져 농가의 경영불안 심화
  
- **농업·농촌 발전계획('98), 농업·농촌기본법 제정('99)**을 기반으로 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책 추진
  - 부채경감특별법 제정('01) 등 '98~'01년간 6차례의 부채대책을 실시하고 동결되어온 추곡수매가도 계속 인상('98~'01)
  - **논농업 직불제, 농작물 재해보험('01)**등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선진제도 도입 시작
  
- 유통 H/W 건설, 친환경농업확산 등 **농업구조 선진화** 추진
  - **도매시장·유통센터** 건설과 함께 작목반, 산지유통전문조직('00) 등 생산자 조직화 및 전문화된 산지유통주체 육성
  - 친환경농업 인증제 도입,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수립('01) 등 친환경 안전농산물 공급체계 구축

< '92~'02간 중앙정부 투융자 주요 내역(62조원) >

분 야	생 산 기반정비	유 통 시설개선	축 산 구조개선	생 활 여건개선	경 영 안 정	농 업 기계화	기 타	계
금액	19.5조원	6.6	6.3	5.5	4.6	3.6	15.9	62
(비율)	(31.4%)	(10.7)	(10.1)	(8.9)	(7.5)	(5.8)	(25.6)	(100)

## 나. 성과 및 한계

□ 집중적인 투융자로 정체상태였던 농업부문 성장세가 '95년부터 회복(연평균 농업 GDP 성장률 '90~'94 : 0% → '95~'02 : 2%)

○ 농업 SOC 구축에 힘입어 '99년 최악의 가뭄에도 풍작을 기록하는 등 기상재해에도 안전한 영농기반 구축

\* '90년대 지원된 유리온실이 '00년대 들어 수출용 파프리카 재배에 활용되는 등 SOC 투자 성과가 점차 가시화

○ 규모화되고 전문화된 농가가 증가하는 등 농업구조개선 진전

\* 3ha 이상 쌀농가 / 1천두 이상 양돈농가 : ('94) 32천호 / 790호 → ('02) 41 / 2,945

○ 품질인증·포장규격화 및 브랜드화 촉진 등 유통구조도 개선

\* 품질인증 농산물 : ('94) 640건(20천호) → ('02) 1,154건(56천호)

※ 농업 SOC 구축으로 인한 성과는 참여정부의 농가소득 안정, 농촌복지지원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으로 작용

□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모화 정책으로 전업농은 크게 늘었으나 소득 및 경영안정 장치는 아직 미흡한 상황

○ 특히, 외환위기사 전업농의 경영위기는 농정불신 초래

□ 교육·의료 등 도농격차 확대로 인구 감소 등 농촌 활력 저하

○ 농촌인구 중 비농업인구 비율도 점차 확대('90 : 40% → '00 : 57) 되어 농촌문제를 농업정책만으로 해결하는데 한계

## 다. 참여정부 전반기('03~'05) 대응

- 과거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DDA·FTA·쌀협상 등에 대비, 농업·농촌 종합대책 수립('04.2, '04~'13간 119조원 투융자)
  - 시장경쟁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전업농 중심의 산업정책, 경영안정 등 소득정책, 복지인프라 확충 등 농촌정책으로 세분화
  - 철저한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를 통한 투융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투융자 심사·평가 시스템 혁신 방안 수립('04.5)·추진
- 변화된 환경에 따라 농정의 기본틀을 전면 혁신
  - 50년 이상 지속된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하는 등 가격정책을 소득정책으로 전환
  - 농지법 개정을 통한 농지은행제도 도입 및 소유이용제도 개편으로 전업농의 규모화 촉진과 경영회생의 새로운 수단 마련
  - 농협법 개정으로 협동조합 경영 전문화 및 경제사업 활성화 기반 마련
- 브랜드 마케팅 확산 등 유통 S/W 개선
  - 생산농가와 유통조직 연계를 통해 균일한 품질·규격의 농산물을 공급하는 공동마케팅 조직 및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육성
  - '04년 수출용 공동 대표 브랜드(Whimori)를 개발하고 농식품 수출 사상 처음으로 20억불 달성

□ 선진국 수준의 농식품 안전성 확보 기반 마련

- 생산에서 유통까지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 (GAP), **이력추적제도(Traceability)**, HACCP 등 선진 제도 도입·확산
  - '03년부터 전국의 소, 돼지, 닭 도축시 HACCP 의무 적용
- '03년말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를 3개월만에 종식한 이후 현재까지 악성 가축질병 미발생

□ 삶의질향상특별법을 제정('04.3)하여 농촌복지 확충, 교육개선, 지역개발 등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추진

- 범정부 위원회(15개 부처 참여)를 구성하고 5년간 20.3조원 지원

□ 한·칠레 FTA, 쌀협상 비준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으나, 선대책 (농업·농촌 종합대책, 삶의질 향상 기본계획 등)을 바탕으로 비준 마무리

- 한·칠레 FTA비준과정에서 농특세 연장, 부채경감대책, 과수산업 대책 등 예상되는 국내 피해에 대한 대책도 추가로 마련·추진
- 쌀 관세화 유예기간 10년 연장으로 쌀 경쟁력 제고 기회 확보, 농민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지원 대책 마련·추진

- ◇ 농정실패 회복을 위한 정부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시장개방 확대로 인해 **농업인의 불안 심리와 대정부 불신 잔존**
- ◇ DDA·FTA등 앞으로 예정된 시장개방에 정부와 농업인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농정성패를 좌우하는 핵심과제로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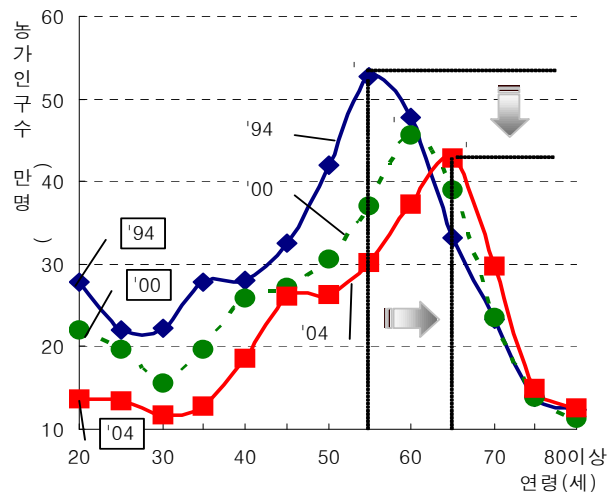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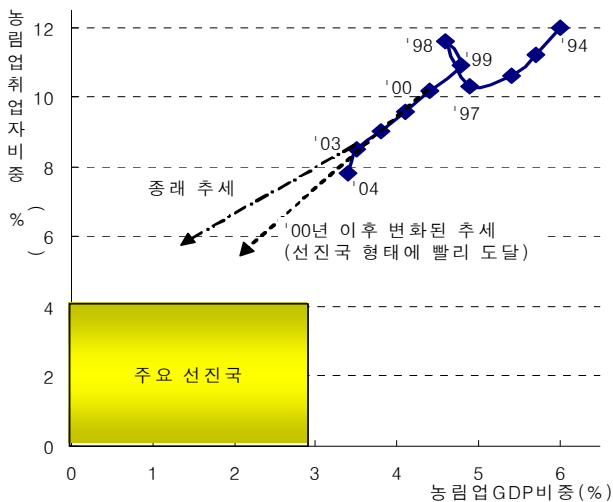


## 2. 농정의 현주소

### 가. 농업·농촌 현실과 농정의 현 좌표

#### 농업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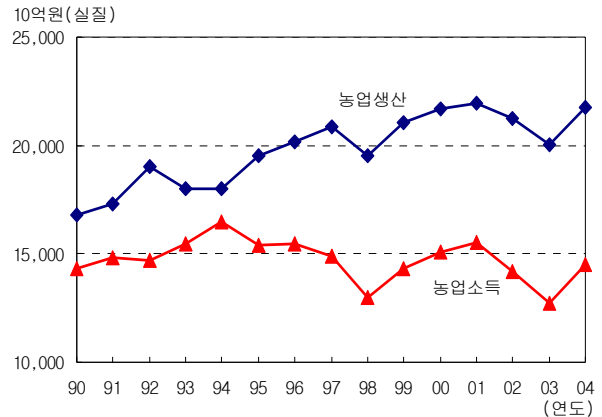
- '94~'04간 농림업 생산액은 연평균 4.1% 증가했으나, 타산업의 높은 성장으로 GDP 대비 농림업 비중은 매년 0.3%p 수준 감소
  - '90년대 시작된 농업투융자 성과로 '00년 이후 안정적인 농업 구조개선 가시화('04년은 전반적 가격호조로 높은 농업성장률 시현)
  - \* 농업성장률 : ('00) 3.0% → ('01) 1.3 → ('02) △3.2 → ('03) △5.7 → ('04) 8.5
-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추세로 전체인구 중 농가인구 비중도 감소
  - \* 농가인구(비중)/65세 이상 : ('94) 517만명(11.6%)/16% → ('04) 342(7.1)/29



- 그간 규모화·전업화 정책의 효과로 전업농 생산비중 증가
  - \* 3ha 쌀 농가 : ('90) 농가비중 1.2%, 면적비중 6.2% → ('00) 3.8, 20.0
  - \* 50두 이상 한우농가 : ('94) 농가비중 0.4%, 사육비중 7.3% → ('04) 2.9, 33.1
  - \* 1천두 이상 양돈농가 : ('94) 농가비중 1.5%, 사육비중 30% → ('04) 21.6, 75.3

## 농가 소득

○ 농업생산액은 늘었으나 투입재 가격 상승 및 수입증가에 따른 농산물 가격하락 등 교역조건 악화로 농업소득 정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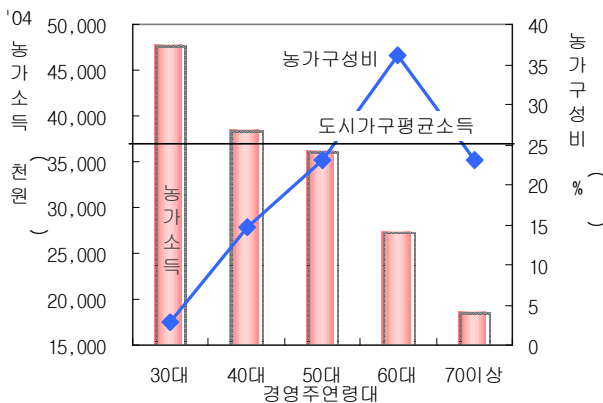
- '94 ~ '04간 실질 농업생산은 연평균 1.9% 증가, 실질 농업소득은 연평균 1.3% 감소

○ 시장개방에 대한 적응력 차이에 따라 농가 소득 양극화 심화

- 영농형태별로 규모화가 상당 수준 진행된 축산농가 소득(42,706천원)이 가장 높는데 비해 논벼 농가 소득(22,127천원)이 가장 낮음
- 농가소득 상위 20%계층(67,995천원)과 하위 20%계층(7,284천원)간 평균소득 격차는 9.3배(도시 가구의 5.4배에 비해 높은 수준)

○ 농가인구 고령화로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농가/도시 : 77.6%)

- 전체 농가의 59%를 차지하는 고령농(60대 이상)의 소득격차가 특히 심각(도시가구 평균소득 37,361천원의 50 ~ 73%)
- 30 ~ 40대 농가(전체의 18%)는 도시가구 평균소득의 103 ~ 128%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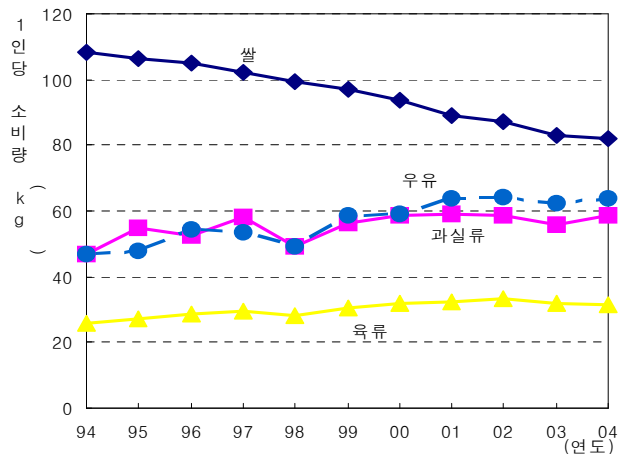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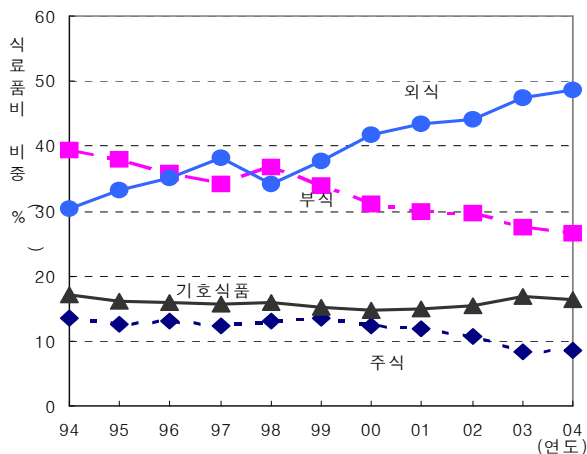
'04년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농가구성비 (%)	2.9	14.7	23.1	36.2	23.0
농가소득 (천원)	47,637	38,446	36,111	27,410	18,603
도시가구 평균대비(%)	127.5	102.9	96.7	73.4	49.8

## 농촌 생활여건

- 농촌인구 감소('90 : 11,102천명 → '00 : 9,381) 추세와 함께 농촌 사회의 고령화로 **농촌지역의 활력과 자생력이 저하**
  - \* 35개 군, 771개 읍·면은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비율 20%이상) 진입
- 농촌의 의료, 기초생활여건 등이 도시에 비해 크게 미흡
  - \* 의료부문 도시집중도 : 종합병원(94%), 의료인력(87%)
  - \* 도로 포장율 : (농촌) 51% (도시) 83%, 상수도 보급률 : (농촌) 52% (도시) 98%
-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이 전체 1,420개 읍·면의 35%(491개) 수준에 달하는 등 **보육·교육 환경 열악**
  - \* 학생수 100명 미만 소규모학교는 2,420개교('04)로 농촌에 소재한 5,149개교의 47%

## 식품소비 패턴

- 소비자의 식료품 소비 지출액은 계속 증가('94 : 332천원/월 → '04 : 556)
  - 주식(곡류)·부식(육류, 채소 등)의 비중은 줄어들고 기호식품(빵, 과자류, 음료, 주류 등)·외식에 대한 지출비중은 증가
- 1인당 쌀소비량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축산물 소비량은 증가



## 나. 향후 여건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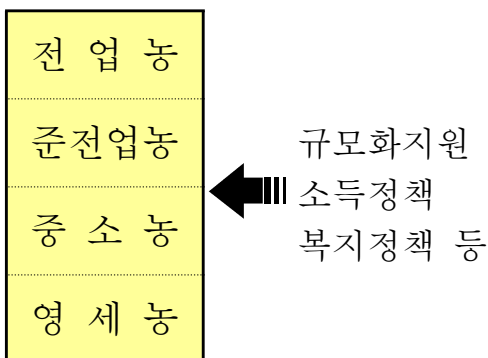
- 금년에도 개방확대 추세가 계속되면서 사회적 갈등은 심화될 전망
  - 쌀 협상 결과에 따라 수입쌀이 밥쌀용으로 시판('06.3 예상) 되면 우리 쌀과 치열한 시장경쟁 예상
  -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06.3말 예상)에 따라 농업계 불만 표출 예상
  - DDA 협상은 세부원칙 도출(4월), 이행계획서 제출(7월), 최종 타결(연말)까지 연중 밀도있게 진행될 예정
  - 우리 농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세안, 캐나다, 미국 등과 FTA 추진
- 시장개방 확대는 국내외 경쟁심화, 농업내 계층분화를 유발하여 농가 유형별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한 차별화된 정책 불가피
  - 전업농 등 농업소득 비중이 큰 농가는 가격위험에 대한 경영안정 장치 마련과 함께 산지 브랜드를 중심으로 시장교섭력을 강화
  - 중소농은 소득수준이 낮으나 고령화로 타분야 전직이 어려워 개방확대에도 크게 줄지 않을 전망, 사회안전망 확충 필요
- 국민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농식품 안전성, 농촌 휴양자원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대
  - 생산에서 유통까지 일관관리를 통한 안전성 확보가 경쟁력 제고의 핵심요소
  - 도시민들의 정주 또는 휴식공간으로서 농촌의 수용능력 확보 필요

### 3. 증장기 농정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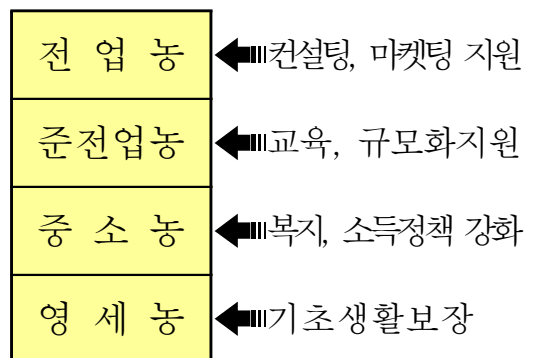
#### 기 본 방 향

- ◇ 산업정책·소득정책·농촌정책으로 세분화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업농촌 종합대책('04.2)의 증장기 정책방향을 일관성있게 유지
- ◇ 개방화, 농업내부 양극화 등 여건변화에 맞게 정책도 농가유형별로 목표와 수단을 달리하여 고객만족도와 정책효율성 제고
- ◇ 평균농가를 대상으로 정형화된 기존 정책은 변화된 여건에 따른 다양한 농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어 대정부 불신 요인으로 작용
  - 불신 해소를 위해서는 농가유형별로 맞춤형 농정이 필요하나 기본 전제가 되는 개별농가 경영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미비
- ◇ '13년까지 농가유형별로 맞춤형 농정추진체계를 완비할 수 있도록 금년말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추진
  - 기존 정책을 농가유형별로 차별화해 나가면서 농가 경영상태 파악을 위한 '농가등록제' 단계적 도입 검토

#### <평균농정>



#### <맞춤형 농정>



□□ 전업농·준전업농 : 농업소득 안정성 제고를 위한 위험관리 강화

- 품목 단위 직불제를 점진적으로 경영체 단위 직불제로 전환함으로써 가격변화에 민감한 전업농의 소득안정장치 강화
- 재해, 수급변동 등 각종 위험관리 프로그램 보강
  - i) 재해위험 : 농가 스스로 위험을 관리하도록 농작물재해보험을 장기적으로 농작물, 가축, 시설을 포괄하는 농업보험으로 발전
  - ii) 부채관리 : 농지은행의 경영회생지원 사업을 통해 일시적 경영 위기로 인한 파산을 막고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 iii) 수급불안 : 자조금 제도를 통해 소비촉진 홍보, 생산조정 등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수급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
- 전업농의 규모화를 위해 농지 등 농업자원의 유동성 강화

□□ 중소농 : 농외소득원 확충, 복지지원 등 소득안전망 구축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명목의 직불제 확대
  - 조건불리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등 다양한 메뉴의 친환경 프로그램 확충
- 농외취업이 가능한 젊은 농가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및 향토 산업 육성을 통한 취업기회 확대로 재촌탈농 기회 제공
- 취업이 어려운 고령 중소농에 대해서는 차상위 계층 지원의 일환으로 공적부조 성격의 농촌형 특별 소득보조 확대

## □□ 농산물 유통 및 안전성 : 브랜드를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 엄격하고 균일한 품질관리로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파워브랜드를 육성하고, 물류개선을 위한 단계적 대책도 추진
  - 경영전문화 및 브랜드화를 촉진하기 위해 경영컨설팅 지원 강화
- 생산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일관된 안전관리를 위해, 농업과 식품산업간 연계를 강화하고 식품산업을 적극 육성
-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이력추적제, HACCP 등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안전성 관리체계를 확립, 점검활동 강화
- 가축분뇨 자원화 및 경종농업에 소요되는 양분을 고려한 가축사육으로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 달성

## □□ 농촌 : 생활여건 개선 및 복합생활공간 조성

- '09년까지 농촌 삶의 질을 중소도시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삶의질 향상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범정부차원의 지원 추진
- 최근 확산되고 있는 도농교류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농업인과 도시민이 더불어 정주할 수 있는 복합생활공간 조성

◇ 우리 농업이 국제경쟁 추세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속적이고 일관된 농정혁신 추진

## Ⅱ. '06년 중점추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1. 농림부의 비전달성을 위한 정책목표 체계

2.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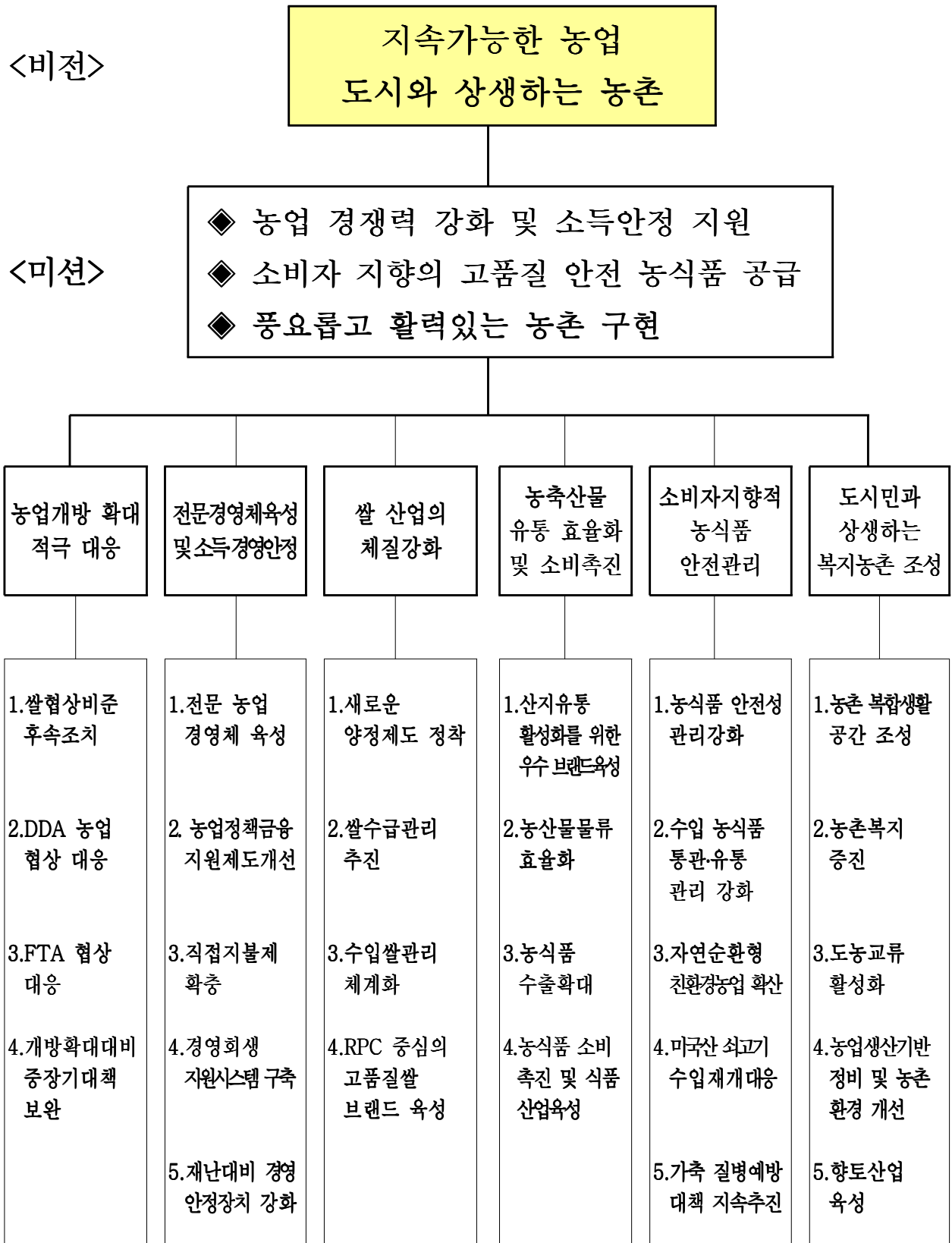
- 농업개방 확대 적극 대응
- 전문경영체 육성 및 소득·경영안정
- 쌀 산업의 체질 강화
- 농축산물 유통 효율화 및 소비촉진
- 소비자 지향적 농식품 안전 관리
- 도시민과 상생하는 복지농촌 조성







# 1. 농림부의 비전달성을 위한 정책목표 체계



## 2.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 □□ 정책목표 : 농업개방 확대 적극 대응

#### 가. 정책여건

- 우리 경제는 수출이 성장을 주도하는 대외지향적인 경제구조로 세계적인 자유무역 확대 추세속에서 개방경제 체제 강화 불가피
  - 세계 10위권의 우리 경제는 좁은 내수시장 등 여건상 수출입을 통해 성장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05 무역규모 세계11위)
    - \* 무역의존도(GDP대비 수출입총액 비율) : ('95) 50.3% → ('04) 70.3% (OECD국가 중 9위)
  - 최근 FTA('05.11월 186개)등 전세계적인 무역자유화가 급격히 진전
- 어려운 여건속에서 20년간 쌀 관세화 유예 등 나름의 협상성과를 얻었고, 사후적인 국내 보완대책도 마련하여 농업부문 연착륙 유도
  - \* '92~'98간 42조원 투융자계획, '04~'13간 농업농촌종합대책(119조원 투융자) 수립
- 그러나, 여전히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농업부문은 UR 협상을 기점으로 시작된 국제화개방화 추세를 시장개방 압력으로 인식
  - 실제 농산물 무역자유화가 본격화되면서, 국경보호와 국내 가격지지를 통한 농업보호에 한계 노출
    - \* 농산물 평균관세율(수입액) : ('95) 76.8%(9,587백만불) → ('04) 63.2(13,484)
  - UR 협상을 통해 수입제한을 철폐하고 관세도 대폭 감축함에 따라 농업부문은 취약한 시장경쟁력으로 심각한 타격 발생

## 나. 쌀협상 비준 후속조치

### 1) 기본방향 및 추진실적

◇ 쌀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대농업계 약속사항 이행**

\* 현재 추진중인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기본으로 하여 농업계가 추가로 제기한 당면 현안을 중심으로 대책을 보완

□ 쌀협상 국회 비준동의를 앞두고 「선대책·후비준」차원에서 정부는 농업인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2차례에 걸쳐 추가대책 마련**

○ 22개 농업인단체가 제기한 64건의 건의사항 중 20개 핵심건의 사항을 선정, 이중 **18건에 대한 추가지원대책 확정**

\* 1차('05.08.17) : 고정직불금 단가인상, 공공비축 매입물량 확대 등 16건

\* 2차('05.10.28) :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상환기한 연기 등 2건

□ 쌀 협상 비준동의안 최종 처리과정에서 여·야는 기존의 추가지원대책 외에 **농업·농촌종합대책을 변화된 여건에 맞게 보완**키로 합의, 2월까지 국회보고 등 정부에 후속조치 요구

○ 농업·농촌 종합대책 조정 방향·추진체계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림부 차관을 단장으로 실무 T/F를 농림부내 구성('05.12.2)

- 정부·농업인단체간 실무협의체 및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05.12.9)

## 2) '06년 중점 추진계획

- 1월중 농업인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쌀협상비준 후속조치 및 농업·농촌 종합대책 점검·조정 계획」을 2월까지 수립
  - 쌀협상 비준동의 과정에서 이미 약속한 18개 과제에 대해서는 세부 추진계획을 농업인 단체와 협의하여 수립·추진
    - \* 쌀고정직불금 단가인상(60만원/ha→70),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확대 249억원 등 '06년 관련 사업비 36,080억원을 차질 없이 확보
    - 식품산업 발전대책 수립 등 제도개선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도화 방안 강구
  - 18개 과제 이외에 추가로 제기된 과제는 농업·농촌종합 대책 등 중장기 농정방향의 기초하에서 반영여부 검토
    - 정부·농업인단체간 합의가 되고 단기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과제는 '07년 예산반영 등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추가 검토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연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농업·농촌종합대책 점검 작업과 연계하여 지속 검토
- 초안을 2월중 국회에 보고하고, 최종 확정되면 합의된 일정 대로 사업계획 수립 추진,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 마무리
  - 3자 협의기구(국회·정부·농업인단체)를 통한 논의는 국회와 협의하여 추진

## 다. DDA 농업협상 대응

### 1) 기본방향 및 추진실적

- ◇ UR협상에 비해 보다 실질적인 관세 및 보조금 감축을 목표로 진행중인 DDA의 기본틀 내에서 협상 실익을 최대화
- ◇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갈등 최소화

- UR타결 이후 DDA 출범에 대비, 다각적인 사전대응 노력 전개
  - 분석·정보교환 논의단계('97~'99)부터 수입국 공조 모색
  -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NTC)에 대한 국제적 인식확산 추진
- '01년 DDA 협상 출범 이후 NTC(농업의 비교역적 기능 주장 그룹), G10(수입국 그룹), G33(개도국 그룹) 등 유사입장국과 공조를 통해 대응
  - '04년 기본골격 채택시 민감품목 신축성 확보 등 우리입장 반영
- '05년에는 소규모각료회의, 농업협상특별회의 등에 20여 차례 대표단을 파견하여 협상에 적극 참가
  - G10 및 G33 각료회의를 통해 강력한 정치적 의지 표명
  - 급진적인 관세감축과 관세상한을 도입하려는 수출국들의 공세에 맞서 G10과 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
- 어려운 협상 여건하에서 정부의 대응노력이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협상의 투명한 공개 및 의견수렴 노력 병행
  - \* '05년 농민단체·국회관계자 협상동행(4회, 18명), 토론회·설명회(45회) 등

## 2) '06년도 중점 추진계획

□ 홍콩각료회의('05.12) 합의 일정에 맞춰 단계별로 대응하되,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급변하는 협상동향에 탄력 대처

※ 4월까지 세부원칙 타결, 7월까지 이행계획서 제출 후 연내 최종타결 일정 합의

○ 세부원칙 협상 단계 : 유사입장국과 공조하여 우리 입장 적극 개진

- G10 국가들과는 관세상한 설정 반대 및 민감품목 신축성 확보 등에, G33 국가들과는 특별품목 신축성 확보에 공조 대응
- 해외공관, 국외자문변호사 등을 통해 각국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주요국과 양자 협의도 병행 추진

○ 이행계획서 작성 단계 : 농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

- 분야별 작업팀(식량작물·원예특작·축산·가공식품)을 구성(2월)하고, 4월말까지 작성방향 수립 및 기초작업 추진
- 6월말까지 농민단체 간담회,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이행계획서 초안을 작성하고 7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최종안 마련

○ 이행계획서 검증단계 : 개도국지위 확보를 위해 주요국 설득 주력

※ 우리의 경제발전 및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주요 상대국 요구사항을 사전 파악하여 다각적 전략을 수립하는 등 최선의 노력 경주

□ 협상동향 국회보고, 농민단체·언론 설명회 등 협상과정에 농업계 참여를 확대하고 투명성 제고 노력

## 라. FTA 협상 추진

### 1) 기본방향 및 추진실적

- ◇ 국가별 FTA 진행속도를 감안, 농업분야 민감성 확보에 최선
- ◇ 대내적으로는 협상개시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면서 농업인 단체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비준단계에서 갈등요소 최소화

□ 최초로 추진한 한·칠레 FTA('99개시) 이래 협상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농업분야의 폭넓은 예외 확보 관철

- 칠레('04.4 발효)와는 쌀·사과·배 등 주요 농산물 예외 확보, FTA기금 설치 등 국내대책을 마련하여 피해 최소화
- 싱가포르와는 주요 농산물(쌀 등 농산물의 1/3)예외를 인정받아 갈등 없이 국회비준('05.12)을 마치고 '06년 3월 발효 예정
- EFTA('05.12 서명)와는 쌀 등 대부분 민감농산물 예외를 확보하였으며 '06년 상반기 국회비준 예정
- 아세안과는 농산물 민감성을 반영(초민감 품목 200개 예외인정)한 관세인하방식 최종 합의('05.12)

□ 새로운 FTA 협상수요에 대응, 농업분야 자체 역량 강화

- 농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농업분야 FTA전략회의' 운영('05.4)
- 자유무역협정과 신설('05.4), 「품목별 농업통상지문위원회」(5회) 구성
- 아세안(진행중), 캐나다(진행중), 미국 등 농업분야에 큰 영향이 예상되는 FTA에 대비하여 면밀한 사전연구 실시('05.4~)



## 2) '06년도 중점 추진계획

- 관세인하·동식물검역·원산지 등 다양한 협상 이슈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별 전담팀**을 구성(1월)하여 적극 대처
  - 금년 협상 개시 예정인 멕시코·인도·미국 협상팀 구성
- 관세인하계획 및 민감품목 결정시 **농업계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
  - 품목단체 협의회(최소 2개월에 1회), 공청회, 의견조회, 협상 결과 설명회 등 개최
- 상대국별 특성을 고려하여 **면밀한 협상전략**을 수립하고 **핵심 민감품목 예외확보** 추진
  - ① **아세안**과는 '05년 합의결과를 토대로 순조로운 마무리 추진
    - 3월까지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한 품목별 관세인하계획 확정
    - 쌀 등 주요 농산물은 관세철폐 예외를 추진
  - ② **캐나다**와는 축산물 등 관세철폐 예외품목 확보 노력
    - 4차 협상(2월)시 양허제외 리스트 교환, 6월까지 협상 완료 계획
  - ③ 1/4분기 시작하는 **멕시코, 인도**와는 경제협력 분야 협상에 중점
    - 핵심 민감품목에 대한 영향 최소화, 엄격한 원산지 규정 등에 주력
  - ④ **미국**과 FTA협상이 개시될 경우, 우리 농업의 민감성이 최대한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

다. 개방확대 대비 중장기 대책 보완

1) 기본방향 및 추진실적

◇ 쌀협상 비준·양정제도 개편 등 바뀐 여건과 DDA농업협상 진전, FTA 확산 등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 기 계획된 3년단위 점검 일정에 따라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보완

□ 「선대책 후개방」 원칙에 따라 농업·농촌종합대책 및 119조원 투  
용자계획을 수립('04.2)하여 차질없이 추진중

○ 투용자 재원도 계획된 대로 확보하여 집행중

분야	농업경쟁력 제 고	소득·경영 안정지원	농촌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생산기반정비	기 타	계
'04	2.4조원	2.3	0.8	2.1	1.2	8.8
'05	2.9	2.4	1.0	2.0	1.5	9.8
'06	3.4	3.0	1.2	1.9	1.6	11.1

□ 향후 DDA타결 및 FTA확산 등에 따라 농정여건이 크게 변  
화될 예정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보완할 필요

○ 한·칠레 FTA, 쌀협상 비준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종합대책 보완

\* 한·칠레 FTA에 대비한 과수산업발전대책 수립('04.3), 농촌 복지여건 개선을  
위한 삶의질향상기본계획 수립('05.6), 쌀시장개방에 대비한 양정제도 개편('05.7)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자 등록('05년 1,034천호), 축산업 등록제  
( '05.12월까지 51천호 완료) 등 농가 경영상태 파악 토대 구축

## 2) '06년 중점 추진계획

□ DDA 농업협상 진전, FTA 확산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2월까지 중장기 농업·농촌 종합대책 보완 추진

- ① 수입산과의 경쟁에서 국산 고품질 농축산물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수 브랜드 중심의 유통체제 구축 방안
- ② 농가단위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제 등 경영안정장치 강화 방안
- ③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농식품 안전성 관리 종합대책 수립
- ④ 「도시와 상생하는 살기 좋은 농촌」 조성을 위해 의료·교육 등 농촌의 복지 및 정주생활여건 개선대책 보완

□ 농가 유형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 시행할 수 있는 「맞춤형 농정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

- 기존 정책중 농가유형별 차별화가 가능한 정책 발굴, 보완 추진
- 정책대상인 농가의 경영상태 파악을 위해 「농가 등록제」 도입(의무등록여부, 등록대상, 등록내용 등) 검토(10월)
  - 기초지자체(3개)를 대상으로 등록제도의 현장 적응성 연구 실시
  - \* 「농업·농촌기본법」에 농가등록제 시행의 법적 근거 마련
- 상반기중 외국사례 등을 분석하고 하반기중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농가유형별 맞춤형 농정추진 기본계획 수립

## < 종합적인 농축산물 우수 브랜드 육성 추진계획 >

- ◇ 최근 농축산물 유통환경은 수입산과 경쟁심화, 고품질·안전성 중시, 대형유통업체 중심 구조로 변화
  - 소비자가 브랜드만 보고서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국산 고가 우수 농축산물 파워 브랜드를 육성할 필요
    - \* 선진국들은 썬키스트(미국), 돌(미국), 제스프리(뉴질랜드), 데니쉬 크라운(덴마크) 등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를 앞세워 국내시장 공략중
- ◇ 축산분야 중심으로 브랜드 개념 정립, 소비자 인지도 제고 성과
  - \* '04년 축산물 브랜드 육성 종합계획 수립, '브랜드 경영 지침서' 발간, 18개소의 우수 브랜드 경영체 인증('05.1), 컨설팅·홍보비 등 지원
- 쌀·과수·채소 분야는 읍·면조합 등 소규모 생산조직 단위 자체 브랜드화 진행, 체계적 인증 및 지원시스템 미흡
- ◇ 6월까지 '농축산물 우수 브랜드 육성계획' 수립·추진
  - 분야별 「우수 브랜드 육성대책 T/F」를 구성(2월), 우수 브랜드 개념을 정립하고, 품목별로 '브랜드 경영 지침서' 작성(6~12월)

### <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브랜드 마케팅 시스템 >

- i) 품종(종축), 비료·농약(사료), 재배방법(사양관리), 수확후 관리 등 통일된 생산·출하규약을 제정하고 브랜드 경영체와 농가간 계약체결
- ii) 재배규약 교육, 전문 품질관리 인력 배치, 규약 위반 모니터링, 위반시 제재 등 통일된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 iii) 읍·면 단위의 소규모 브랜드를 시군단위 이상의 광역브랜드로 통합, 시장교섭력을 제고하고 대형유통업체와 직거래

## □□ 정책목표 : 전문경영체 육성 및 소득·경영안정

### 가. 정책여건

- **고령화 및 개방확대로 젊은 전문농업인은 지속적으로 감소**
  - 60세이상 경영농가는 증가 추세인 반면, 농지값 상승·담보 부족 등으로 **젊은 인력의 창업여건은 오히려 악화**
    - \* 경영주 비율(40세미만/60세이상) : ('90) 15%/31% → ('04) 3/59
  - 기존 농업인이 지식·기술을 갖춘 전문경영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 컨설팅** 지원 필요
  
- **규모화·전업화가 진전될수록 농가의 경영위험도 함께 상승**
  - 가격 불안정, 자연재해·가축질병 등 경영위험이 더욱 증가
  - WTO체제하에서 가격정책 축소로 **소득불안요인도 확대**
  
-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재해보험 등은 아직 초기 단계**
  - **논밭 중심 직불제를 농가단위 경영안정장치로 발전시킬 필요**
    - 구조조정 지연 등 직불제간 상충문제도 해결해야 할 상황
  - 과실 6개 품목에 시행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을 주요 작물, 농업시설까지 포괄하는 **종합 위험관리시스템**으로 확충할 필요
  - 상환기간 연장 등 일시적 금융지원방식의 부채대책 이외에 **경영회생지원 등 근본적 부채 해결대책** 요구
    - 재해 등으로 경영위험에 처해도 희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나. 전문 농업경영체 육성

### 1) 기본방향 및 추진실적

◇ 정예농업인력 20만호가 농업생산량의 50%이상을 담당하도록  
유입경로를 다양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컨설팅 지원 강화

\* 20만호는 '04년 전체 농가수 124만호의 16%수준

□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을 마련('04말), 젊고 유능한 신규인력의 농업유입을 촉진

- '13년까지 45천명 양성을 목표로, '05년에 2,400명 발굴 지원
  - 농업인턴(113명), 대학생창업연수(104명) 및 후견인제(108명) 신규 시행
  - 귀농자 등도 신규인력으로 적극 유입('04년 : 1,302농가)

□ 농업인 교육과 컨설팅 체계를 현장기술과 경영능력 향상 위주로 전환하는 등 근본적으로 개편, 교육효과의 현장활용도 제고

- 가공·유통·브랜드 등 교육내용을 다양화하고, 단순집합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변경
  - 수요자가 교육과정을 선택하는 농업인 교육쿠폰제 첫 실시('05)
- 경영컨설팅 확대 : 원예·축산 → RPC·APC·쌀전업농 추가(보조율 : 50→70%)

□ 농업소득세 5년간 과세 중단,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배제 등 세제 지원으로 경영부담 완화

- 농업법인에 대한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제한도 완화(1/2 미만→3/4)

## 2) '06년도 중점 추진계획

- 올해 2,600명 수준의 후계농업인력을 확보('13년 : 45천명)하고, 성공사례 발굴 등을 통해 농업·농촌 유입분위기 확산
  - 지자체, 대출기관 심의를 거쳐 후계농업인 1,500명 선정(3월)
    - 창업농(35세미만/1,000명)과 신규후계농(45세미만/500명)으로 구분
  - 잠재 농업인력 발굴과 농업유입 촉진을 위해 다양한 채널가동
    - 농업인턴, 대학생 창업연수 및 후견인제 사업 확대(300명 → 400)
    - 농대학생에 대한 영농정착 교육과정 시범 실시(3개대학, 150명)
    - 44세미만 비농과계 출신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과정(3~6개월) 신설
      - \* 한국농업전문학교 명칭변경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상반기)
  - 전업농·벤처농업인 등 성공사례(2,000명) 발굴 및 보급(8월)
- 농업인 교육과 컨설팅 사업을 정부주도의 평균·일반교육에서 민간주도의 「배워서 돈되는 전문교육」으로 대폭 개선
  - 교육주체를 농업인단체, 농업연수원 위주에서 품목·농업인단체와 지역교육협력체로 전환하여 상호 경쟁 유도
    - 25개 품목단체('05년 3개)가 품종선택에서 마케팅·수출까지 전담
    - 대학·지자체·농협 등 지역교육협력체가 지역별 특성화 교육 실시
    - 농업인단체(8개)는 의식전환, 경영기법 및 성공사례 교육 등에 집중

- 전문농업경영체가 필요로 하는 **기술·경영중심 교육**을 집중 실시(연인원 50천여명)하고 교육인프라를 확충(36억원→122)
  - 견학위주에서 선진기술 습득방식으로 **해외연수** 전환(210명→1,000)
  - 농업인이 교육 시기·기관을 선택하는 **쿠폰제** 확대(4억원)
  - 1월말까지 **전문기술 교육장** 지정, 전문강사풀 구성, **품목별 교육프로그램 모델 개발**(20개 품목) 등 교육기관의 역량 강화

- 생산기술 중심에서 **경영전반으로 컨설팅 내용과 대상을 확충**
  - 농가(1천호, 40억원) 및 브랜드 경영체(신규 17개, 3.2억원) 컨설팅 지원
  - 종합컨설팅능력을 갖춘 업체만이 **농가컨설팅을 실시토록 인증**, 2년마다 평가 후 재인증(1월말까지 컨설팅업체 30여개 선정계획)
  - 농촌관광, 클러스터 및 경영회생지원 등으로 컨설팅 영역 다각화

□ 경영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 농업경영체 지원 인프라** 구축

- 농업법인 대표(매출액 10억원 이상)가 참여하는 「**농업CEO 연합회**」 설립 인가('06.상반기) 및 농업벤처 활성화 기반 확충
  - 수도권, 영남권외에 호남·중부권에 창업보육센터 1개소 추가
-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인정**(현재는 무보수 가족종사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
- 9월까지 **국제결혼 이주 여성농업인** 실태를 파악하고 '07년 시행을 목표로 연말까지 자치단체별 지원계획 수립



## 다. 농업정책금융 지원제도 개선

### 1) 기본방향 및 추진실적

◇ 정책자금 금리인하, 신용대출제도 개선, 대출취급기관 확대 등을 추진하여 전문농업경영체 육성을 적극 뒷받침

- 성공가능성 심사와 신용보증 지원 강화로 자금집행 효율성 제고
  - \* 과거에는 행정기관에 의한 대출심사, 담보 위주의 대출관행이 중심
- 대출심사·회수책임을 금융기관이 담당하도록 '99~'05간 기존 25개 사업을 농업종합자금 방식으로 통합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제도('71년 도입)는 '00년 이후 정부 지원 증가로 보증규모 확대('00 : 14.4조원 → '04 : 19.2)
  - \* '00년 부채대책 시행 과정에서 농신보 과다 운용 등 부실문제 대두
- 농협에 편중되어 있는 정책자금 공급체계를 시중은행으로 확대('04년부터 축산 3개자금)하여 농업인의 대출 편의성 제고

### 2) '06년 중점 추진계획

- 우수 창업농 지원한도 확대(1.2억원→2), 쌀 전업농 농지구입자금 지원단가 인상(3만원/평→4) 등 농가수준별 지원 차별화
- 기존 후계농업인 중 전업농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정책자금 지원(1,500명, 1,200억원, 3%)

□ 시중금리 동향을 감안, 정책자금 금리 인하(1.1 시행) 추진

- 농업인 대상자금은 4%에서 3%로, 비농업인 대상자금은 4~5.5%에서 4%로 인하
-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재해대책융자금(4%→1.5), 농지매매자금(3%→2), 육림사업자금(3%→1.5) 금리를 추가로 인하

□ 농업인에게 대출기관 선택권을 보장하여 금융서비스 질 개선

- 시중은행도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자금·농기계구입자금과 전체 축산발전기금 대출금을 추가로 취급토록 개선(1월)
  - 시중은행이 농신보 보증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시중은행 취급 성과를 평가하여 추가 확대 여부 결정(하반기)

□ 농업인의 취약한 담보력 보완을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제도」의 조기 건전화 방안 적극 추진

- 정부출연 확대(4,000억원 → 5,780), 금융기관 출연율 인상(0.2% → 0.3) 및 비출연기관(일선조합 등)의 신규출연 등 추진
- 금융기관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부분보증을 강화하고, 위탁보증한도·위탁보증수수료(보증료의 15% → 10) 등을 축소
  - 구상채권 회수업무를 농협자산관리회사에 위탁, 회수율 제고
-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농신보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 라. 직접지불제 확충

### 1) 기본방향 및 추진실적

◇ 2013년까지 농업예산 중 직불제 비중을 23%수준으로 확대하고, 논농업 중심의 직불제도를 '09년이후 논·밭을 포괄하는 농가단위의 소득보전제도로 단계적 개편

□ 경영이양직불제('97) 도입 이후 6개의 직불제를 운용중이며 직불예산도 크게 증가, 농가소득 보전에 기여

\* 직불예산 비중 : ('01) 4.1% → ('03) 9.8 → ('05) 13.6 → ('06.P) 23.4  
( '06년은 쌀값하락에 따른 변동직불금 대폭 증액)

○ 아직 선진국 수준에는 미흡하고 품목별 차등도 존재

직불유형	추진 실적 ('05)
□□ 농가소득 보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쌀소득보전직불제 (998천ha, 7,402억원)</li> <li>- 목표가격과 수확기 산지쌀값과의 차액 85% 보전</li> </ul>
□□ 다 원 적 기능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 470ha, 6억원)</li> <li>- 유채·메밀 등 경관작물 식재·관리시 170만원/ha 지급</li> <li>▪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 653호, 44억원)</li> <li>- 사료포 확보, 적정사육밀도 유지시 최대 1,300만원/농가 지급</li> <li>▪ 친환경농업직불제 (11천ha, 69억원)</li> <li>- 친환경품질인증단계별로 794천원/ha ~ 524 지급</li> <li>▪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시범사업, 31천ha, 123억원)</li> <li>- 경지경사도 14%이상 밭 경작시 40만원/ha 지급</li> </ul>
□□ 구조조정 촉 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이양직불제 (7.3천ha, 221억원)</li> <li>- 63~69세 농가 매도(임대)시 최대 2,317만원(연 289만원) 지급</li> </ul>

## 2) '06년 중점 추진계획

### □ 쌀소득보전직불제의 조기정착과 기타 직불제의 내실화 추진

- ①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지급단가 인상('05: 60만원/ha → '06: 70) 및 지급시기 조정(고정직불금: 11월 → 10, 변동직불금: 익년 4월 → 3)
- ② 영농여건이 열악한 밭을 대상으로 한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전국 확대 실시
  - 도서지역의 모든 밭과 경지경사도 14%이상 밭으로 확대(523억원)
  - \* 전국 밭 721천ha의 26%인 187천ha 대상으로 40만원/ha(초지 20만원/ha) 지급
- ③ 친환경농업직불제는 대상지역을 확대(16천ha → 27)하고, 친환경인증단계에 따라 차등(평균 11만원 차등) 지원(114억원)
  - 논 부문의 지급단가를 인상하고 저농약(논)으로 지급대상 확대
- ④ 축산오염 경감을 위한 친환경축산직불제는 '07년 본사업 목표로 3년차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58억원)

### □ 장기적으로는 농가단위 소득 보전 직불제로 개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마련 추진

- 농가단위 경영상태 파악을 위한 농가등록제 도입 검토(10월)
- 농가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농가단위 직불제 개편계획 수립(12월)
  - \* 전업농중 희망 농가부터 자부담과 매칭하여 과거 일정기간 평균소득과 당해연도 실제소득간 차액의 일정분을 보전하는 형태 등 도입방안 강구(캐나다 NISA 사례)

## 다. 경영회생지원시스템 구축

### 1) 기본방향 및 추진실적

◇ 규모화 진전에 따른 경영위험 대형화 추세에 대비, 전업농 등의 안정적 경영여건 구축 추진

- 부채경감대책 추진으로 농가의 당면한 부채상환 부담 경감
  - 「농어업인 부채경감법」을 제정('01.1), 정책자금 및 연대보증 피해자금 장기저리 등 지원(12.3조원)
  - 중장기 정책자금 금리인하(4% → 1.5) 및 상환기간 연장(5년 거치 15년) 등 8.2조원의 부채경감 조치('04.3)
- 경영회생자금 지원과, 자산유동화를 통한 회생지원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상시적이고 근본적인 부채해결 추진
  - '04년이후 3,782농가에 2,694억원의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연체 등으로 부채상환 능력을 상실한 농가의 경영회생 지원을 위해 「농지은행」이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농업기반공사법 개정('05.12) 및 농지매입에 필요한 422억원 예산 확보

### 2) '06년도 중점 추진계획

-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5.9조원)의 상환기간 연장 추진
  - 10%이상 원금상환시 연 3%로 5년 분할상환, 그 외는 3년 분할(5%)
    - \* '06. 6. 30일까지 분할상환 희망 농업인이 해당 농·축협 등에 신청

- 정상·조기상환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부채상환 유도
  - 상환기간내에 상환시에는 납부한 이자액(최대 1년)의 40% 환급
  - 1년이상 조기상환시, 상환원금에 대한 1년간 이자액의 40% 환급
- 본인·배우자의 금융자산이 총 부채액의 80% 이상인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하여 도덕적 해이 방지
- 재해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중 회생이 가능한 경우 경영회생자금을 집중 지원('06:2,000억원, 연리 3%, 3년거치 7년 상환)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경우 금년부터 자금지원 대상 자격을 현행기준의 50% 수준으로 완화
  - \* (현행) 농업용부채 2,500만원이상, 준전업농 이상의 영농규모 → (개선) 농업용부채 1,250만원 이상, 준전업농 영농규모의 1/2 이상
- 회생 불가능한 경우 인수 희망자에게 자금 지원, 기존 시설 활용 유도
- 농지은행(한국농촌공사)이 농지를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는 경영회생 지원사업 시범운용(422억원, 277ha)
- 「농지매입을 통한 경영회생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침 확정(1월)
  - 지원대상농가, 선정절차, 매입·환매가격 결정방법 등 구체화
- 예비수요조사(2~3월) 등을 거쳐 5월부터 사업 본격시행

\* 신청(4 ~ 5월) → 현지조사 및 경영평가(6월) → 대상자 선정 및 계약(7월)

## < 농지매입을 통한 경영회생지원 시범사업 주요내용 >

### □ 지원대상 및 대상자 선정 절차

- 지원대상 : 농업재해(피해율 50%이상) 및 연체(50백만원 이상)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대상자 평가 : 경영위기정도(연체상태 또는 재해율), 회생가능성(부채비율, 전문기술 보유·판매실태), 경영전문성(영농경력, 장부기록 등), 영농규모 등을 종합 평가
- 선정 및 지원절차 : 신청 → 현지조사 → 경영평가 → 심의위원회 심의 → 대상자 선정 → 매매임대차 계약체결 → 환매

### □ 매입대상 및 가격결정방법

- 매입대상 : 농지(논, 밭, 과수원) 및 그 부속시설(유리온실, 버섯재배사)  
\*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농지만 우선 매입, 축산시설은 별도의 대책 강구
- 매입가격 : 공시지가, 유사농지의 거래가격 및 가격동향 등을 참작하여 결정

### □ 매입농지 임대 및 컨설팅 지원

- 임대기간 : 5년 (다만, 경영실태 평가후 3년간 연장 가능)
- 임대료 : 매입가격×10/1000(국유재산 사용료 수준)
- 회생지원 : 경영실태 평가 및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 환매가격 : 추후 결정 예정



## 바. 재난대비 경영안정장치 강화

### 1) 기본방향 및 추진실적

◇ 자연재해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 하면서, 단계적으로 보험 제도를 확충하여 농가의 책임성 강화

□ 농작물재해보험제도 도입('01) 이후 거대재해에 대비한 국가 재보험 도입 등을 통해 자연재해에 대한 경영위험 완화

○ 대상품목 확대, 보험료('04: 50% → '05: 61.2) 및 운영비(90% → 100) 지원 확대로 보험 가입률 증가('04: 18.2% → '05: 23.4)

\* '01년 사과배 시범실시, '04년부터 포도·단감·감귤·복숭아 등 6개로 확대

□ 가축공제 품목확대(5개→7) 및 농업인 재해공제 보장 수준 확대 ('04 : 사망시 1,000만원 → '05 : 1,500)로 농업경영 안전성 제고

### 2) '06년도 중점 추진계획

□ 재해농가 지원 확충 및 사전 예방위주의 재해대책 추진

○ 보조금 지급대상 확대 및 재해복구자금 금리 인하(4% → 1.5)

- 금년부터 1,800㎡이상 우사·돈사 등 대규모 시설도 보조금(35%) 지원

○ 태풍·대설 등에 대한 사전·사후 단계별 재해대책 매뉴얼 개선

- 신속한 기상특보 전파 및 농작물 시설관리요령 등 체계적 홍보

- 피해지역에 초동 대응팀, 분야별 전문가 등 기술지원단 파견

○ 관계부처와 협조, 농업시설 복구지원 단가 현실화 지속 추진

□ **농작물재해보험**은 대상품목 확대 등 제도의 안정화에 주력

- 6개 보험대상 품목이외에 '뚝은 감'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키위** 등 기타 품목의 보험화 가능성도 적극 검토

\* 주택·축사·비닐하우스 등 시설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사업」(소방방재청)을 금년부터 시범실시('06예산 : 17억원)

- 거대재해에 대비, **재보험기금**을 확충('05 : 190억원 → '06 : 420)

- **손해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검증조사기관 : 농협중심 → 민영보험사·손해사정법인 참여
- 전문인력 양성 : ('05) 90명 → ('06) 170

□ **가축공제**는 대상축종을 확대하고, 다양한 상품 개발 유도

- 대상축종 : ('05) 7개 축종 → ('06) **9개**(사슴, 칠면조 추가)

- 공제대상 축사를 한우사·돈사에서 금년부터 **계사까지 확대**하고, **보장대상 피해도** 추가

- 보장피해 : 수해·화재·풍해 → 설해 추가

□ **불의의 사망·장애**에도 농업 경영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농업인 **안전 공제**의 보장 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

- 사망시 보장 수준을 확대('05 : 1,500만원 → '06 : 2,500)하고, 공제료 지원 단가도 인상('05 : 28,100원 → '06 : 46,140)

---

## □□ 정책목표 : 쌀 산업의 체질강화

---

### 가. 정책여건

#### □ UR협상 및 쌀협상 결과 관세화 개방은 '14년까지 유예

- 의무수입물량 증가, 보조금 축소로 정부수매여력은 감소, '06년부터 의무수입물량의 일정량을 소비자시판할 예정

\* 총생산중 수매 비중(쌀보조금 한도) : ('95) 29%(2조 344억원) → ('05) 14%(1조 3,598억원)

\* 의무수입량/소비자시판량 : ('95) 51천톤/- → ('05) 225/22.5 → ('14) 409/122

#### □ 쌀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IMF 이후 수매가를 인상하였으며, 소비감소·수입량증가 등의 영향으로 공급과잉기조는 지속될 전망

\* 농업소득중 쌀소득 비중 : ('95) 39.2% → ('04) 49.9

\* 수매가 인상 : '98-'00년 5.5%, '99년 5%, '01년 4%  
(일본은 '95~'98간 관세화 대비 쌀값 30%인하, 대만은 동결)

\* 1인당 소비량 : ('95)106.5kg → ('05) 80.7 → ('14p) 65.1

- 평년작(3,320만석)만 되어도 연간 150만석 수준 추가재고 발생

- 현재 쌀의 국내외 가격차가 3~5배 수준이나, 공급과잉에 따른 쌀값 하락으로 국내외 가격차는 앞으로 축소될 전망

\* '05년 국내산 가격(11~12월 평균가격 139,308원/80kg)과 비교시 미국산 대비 3.1배, 중국 3.7배, 태국 5.0배 차이

- UR협상 이후 지난 10년동안 우리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쟁력 제고대책을 집중추진한 결과, 일정부분 효과 가시화
  - 규모화·기계화 추진, 생산기반정비는 대부분 완료단계
    - \* 논벼 10a당 수량 : ('95) 445kg → ('04) 504
    - \* 기계화율 / 경지정리율 : ('95) 82.9% / 66.7% → ('04) 89.9 / 90.0
  - 수확후 품질관리를 통한 미질향상을 위해 RPC등 시설확충
    - \* RPC 증설 : ('95) 146개소(총생산의 1.9% 취급) → ('05) 328(29.6)
  
- 정부수매여력이 한계에 달함에 따라 '05년 양곡관리법·쌀소득보전기금법을 개정, 시장지향적으로 양정제도 개편
  - 쌀값은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고,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물량을 정부가 시장가격으로 매입
  -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는 쌀소득보전직불제로 보완
  
- 우리쌀이 수입쌀과의 시장경쟁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품질경쟁력 확보 및 브랜드파워 제고 대책 필요
  - 개편된 양정제도에 맞게 민간유통주체가 상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간유통기능 강화 유도
  - 근본적으로는 RPC 중심의 고품질 브랜드유통 활성화 등 시장 경쟁 적응력을 높이고, 적정생산을 유도하여 누적재고를 해소

## 나. 새로운 양정제도 정착

### 1) 기본방향 및 추진실적

◇ 새로운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 시장 수급에 따라 쌀값이 결정되고 농가소득은 직불제로 보전하는 기본 틀을 확립

□ '05.7월부터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시장가격으로 매입·방출하는 공공비축제 및 쌀소득보전직불제 실시

○ 600만석 비축, 매년 300만석씩 매입·판매, '05년은 시행원년임을 감안하여 비축용 400만석 매입(비축물량과 별도로 100만석 추가매입)

- 시장가격 확정전인 매입시기에 47천원(벼 40kg 포대당) 우선 지급

○ 목표가격(170천원/80kg, '05~'07)과 쌀값 차액 85%를 보전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

- 고정직불금(평균 60만원/ha)을 계획보다 조기 집행(12→11월)

□ 100만석 추가매입, 생산량 감소 등 유리한 시장여건에도 산지 유통업체의 제도변경 적응 부족 및 심리적 불안으로 큰 폭의 시장가격 하락(전년대비  $\Delta$ 14%) 등 수확기 혼란 발생

○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매입방식 변경 등 제도개선과 함께 RPC 등 민간유통주체의 시장대응 역량강화 필요

## 2) '06년도 중점 추진계획

□ '05년산 공공비축 매입 및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을 마무리 하여 새로운 제도에 대한 신뢰도 제고

-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은 '05.10 ~ '06.1월 평균 산지쌀값을 기준으로 3월까지 지급('06 총 소요재원 9,805억원 확보)
- 공공비축 매입은 매입기간을 1월까지 연장, '05.10 ~ 12월 산지 쌀값 기준으로 2월말까지 정산금(쌀값-우선지급금) 추가지급 완료

□ RPC 등 민간유통주체, 농업인단체 등의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6월까지 공공비축제·쌀소득보전직불제 제도보완 추진

- 공공비축은 산물벼 매입방안 재검토 등 보완
- 직불제는 등록절차 간소화, 지급시기 개선(11월→10) 등 보완

□ RPC 경영개선 대책을 마련(2월)하여 RPC가 시장에서 물량 흡수와 가격형성 역할을 주도하도록 유도

- '06년부터 RPC 퇴출, 신규진입 등 경쟁체제 도입 등 제도개선
- 계약재배 확대('05년 : 322천ha → '06 : 350), 건조·저장시설 (47→100개소) 및 저온저장시설(3→10개소) 지원확대(단가 4.5→5.5억원)

\* 농협RPC(127개소)는 '08년까지 매입물량의 100% 계약재배 추진

- 농협 RPC는 경영의 규모화·전문화를 위해 시·군단위로 통합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전환(5개 지역, 15개 조합)

## 다. 쌀 수급관리 추진

### 1) 기본방향 및 추진실적

◇ 생산감축 유도, 정부재고 특별처리 및 소비촉진 시책을 지속 추진하여 쌀 소비감소, 수입 증가에 따른 재고부담 완화 추진

□ 소비량 감소, 수입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재고 부담은 가중

	2002	2003	2004	2005(P)	2006(P)
공 급 량	4,760만석	4,429	3,867	4,196	4,179
(생 산 량)	(3,830)	(3,421)	(3,091)	(3,473)	(3,311)
(수 입 량)	82	107	134	133	327
수 요 량	3,859	3,788	3,277	3,655	3,374
(1인당 쌀소비)	87kg	83.2	82.0	80.7	79.5
재 고 량	901	641	590	541	805

※ 수입량은 통관기준, '05년 수입량은 '04년분 이월물량 수입실적임

\* 작년 국내산 대북지원 278만석(40만톤)이 없었을 경우 '06년 1,000만석 수준 재고 예상

□ 대북지원, 수입쌀 가공·주정용 특별처분 등 재고감축대책 추진

\* 국내산 쌀 대북지원 : ('02) 278만석 → ('03) 278 → ('04) 73 → ('05) 278

\* 수입쌀 가공·주정용 : ('02) 51만석 → ('03) 65 → ('04) 69 → ('05) 132

□ 휴경 및 논에 타작물재배 유도를 통해 직접적 생산감축 추진

○ '03~'05간 생산조정(3년 휴경 조건으로 연 300만원/ha 지급) 등 실시로 약 88만석 수준의 생산감축 효과(논콩 5천ha, 휴경 24천ha)



## 2) '06년도 중점 추진계획

### □ 벼 적정재배 면적 유도를 위한 생산조정 및 전작대책 검토

- 쌀 관측제도를 6월까지 구축, 분기별 재배면적·가격·수급 전망을 농업인, RPC 등에게 제공하여 농가 자율 생산감축 유도
- 생산조정은 생산감축 효과와 구조조정 저해 등 단점을 고려, 3년간 시범사업을 분석·평가하여 2월까지 시행여부 확정
- 논콩 재배는 현행 5천ha수준 유지 및 수매, 지속 추진
- 논에 벼를 대체할 수 있는 사료용 총체벼·수단그라스 등 사료작물 재배농가 실증시험 실시(20ha)
  - 초다수확 총체벼 전용품종 '수원 490호' 육성(생초 40톤이상 생산목표)
  - \* 일본은 '97년 이후로 사료용 총체벼를 도입, 재배면적은 4천ha 수준

### □ 특별 재고처분대책 지속추진

- 남북관계 진전상황에 따라 대북쌀 지원문제도 전향적 검토
- 수입쌀 가공·주정용 공급 확대('05:132만석→'06:195→'07이후:205)

### □ TV-CF, 다큐프로그램 협찬 등 쌀소비촉진대책 지속 추진

- 품질좋은 쌀 식별·보관·조리방법에 대한 소비자 교육 실시(24회)
-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아동·청소년·주부·직장인 대상으로 전통식단 우수성 홍보(40회)
- 쌀빵·쌀국수 등 쌀가공산업 활성화대책 수립·추진(6월)
  - \* 쌀빵 판매업소(농협) : ('05) 100개소 → ('06) 150

## 라. 수입쌀(시판용) 관리 체계화

### 1) 기본방향 및 추진실적

◇ 국제 통상마찰과 국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국내·외산이 동시에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그간 수입쌀은 UR협상 결과에 따라 전량 가공용으로 공급하여 밥쌀용 판매시장에는 국내산만 유통

○ 쌀협상 결과에 따라 수입물량 증가, '05년 수입분부터는 수입량의 10%를 소비자에게 시판할 예정

\* MMA 총물량 : ('05년분) 156만석 → ('06) 170 → ('14) 283

\* 소비자시판용 : ('05년분) 15만석 → ('06) 24 → ('14) 85

○ 쌀협상 국내비준 지연으로 '05년 도입물량은 '06년으로 이월

□ 쌀협상 결과, 전문가 협의회, 농민단체 설명회 등을 거쳐 '05년분 수입쌀(시판용) 도입·관리계획 수립('05.12)

### 2) '06년도 중점추진 계획

□ 3월이후 소비자시판 예정인 '05년분 수입쌀은 국내시장여건을 고려한 수입조건을 부과하여 국내 쌀시장 충격 최소화

\* 입찰공고(1월) 및 계약(2월)을 거쳐 해상운송 및 국내통관(3~4월)

\* 국내공매는 공매대상업자 자격관련 토론회(1월)를 거쳐 확정(3월)

- 전량 국영무역으로 수입, 국내산 유통가격 수준으로 공매 참가업체에게 낙찰되도록 유도
  - 수입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이를 판매이익금으로 징수하여 전액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기금으로 납입
- 입찰공고시 국내시장 여건을 고려한 수입조건을 부여
  - i) 소비자시판용은 10kg, 20kg 단위 포장된 형태의 백미로 수입
  - ii) 시판용 수입등급은 시장수요점검차원에서 1·3등급 각각 50%
  - iii) 가공용은 전량 3등급 현미로 수입
- 수입쌀 시판에 따른 부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양곡유통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책 추진
  - 시·도별로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반(228개반, 456명)을 편성, 연중 가동하여 매월 기간을 정하여 집중단속 실시
  - 원산지단속 명예감시원제도 운영을 내실화('05 : 17.4천명 → '06 : 25천명),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 제도 운용(5만원~100만원)
  - 원산지 위반 벌칙 강화 시행 : ('05)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06)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06년 수입분은 '05년분 수입·시판에 따른 국제통상측면 및 국내시장 반응을 고려하여 도입·관리계획 확정(6월)
  - 수입시기, 수입쌀 등급, 유통투명성 방안이 주요 고려사항

## 마. RPC중심의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 1) 기본방향 및 추진실적

◇ 우리쌀의 품질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브랜드 중심의 유통 체계를 확립하여 외국쌀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

□ 그간, 종자·품종·시비 등 생산단계 고품질화와 RPC시설확충 등 품질고급화 대책 추진

○ '03년부터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우수브랜드쌀(12개)을 선정·발표하여 품질경쟁 분위기 조성

○ 품종·도정일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유통관련제도를 개편하고, 쌀 품질고급화 보완대책도 수립('05.6)

- 생산부터 유통까지 단계별로 고품질 품종개발, 질소질 비료 감축, RPC 수확후 관리 강화 등 대책 마련

□ 소규모 브랜드 1,900여개가 난립하고 있으나, 시장에서 소비자의 인정을 받고 있는 브랜드는 극소수에 불과

○ 브랜드간 품질·가격차도 크지 않고 소비자 인지도도 부족

○ 이에 비해 일본의 경우 상위 10개 품종의 시장점유율이 82%를 차지하는 등 고품질 브랜드 유통체제 기정착

## 2) '06년 중점 추진계획

### □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계획을 6월까지 수립·추진

- RPC를 중심으로 품종, 재배방법 등 우수 브랜드 개념 정립
  - 현장 적용을 위한 브랜드 경영 지침서를 6월까지 제작·배포
- 시군·조합·RPC 등이 자체 브랜드 육성계획을 연말까지 수립
  - '10년까지 주산지 시군별 1개씩 대표브랜드(100여개) 육성 목표
- 우수 브랜드 경영체에 시설보완 및 운영자금 지원 우대
  - RPC 건조·저장시설·노후 도정시설 개보수 등 시설현대화 자금 우선지원, 평가시 우수 브랜드 경영체 가점부여

### □ 우수 브랜드가 소비자 신뢰를 받고 시장에서 차별화될 수 있도록 브랜드 파워향상 대책 추진

- 소비자 단체 중심의 브랜드 쌀 평가, TV 홍보, 우수브랜드로 선정된 경영체에 포상금(50만원~200) 지급
-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쌀 우수 브랜드 인증기구 설립 검토

#### — <“아산 맑은 쌀” 우수 브랜드 사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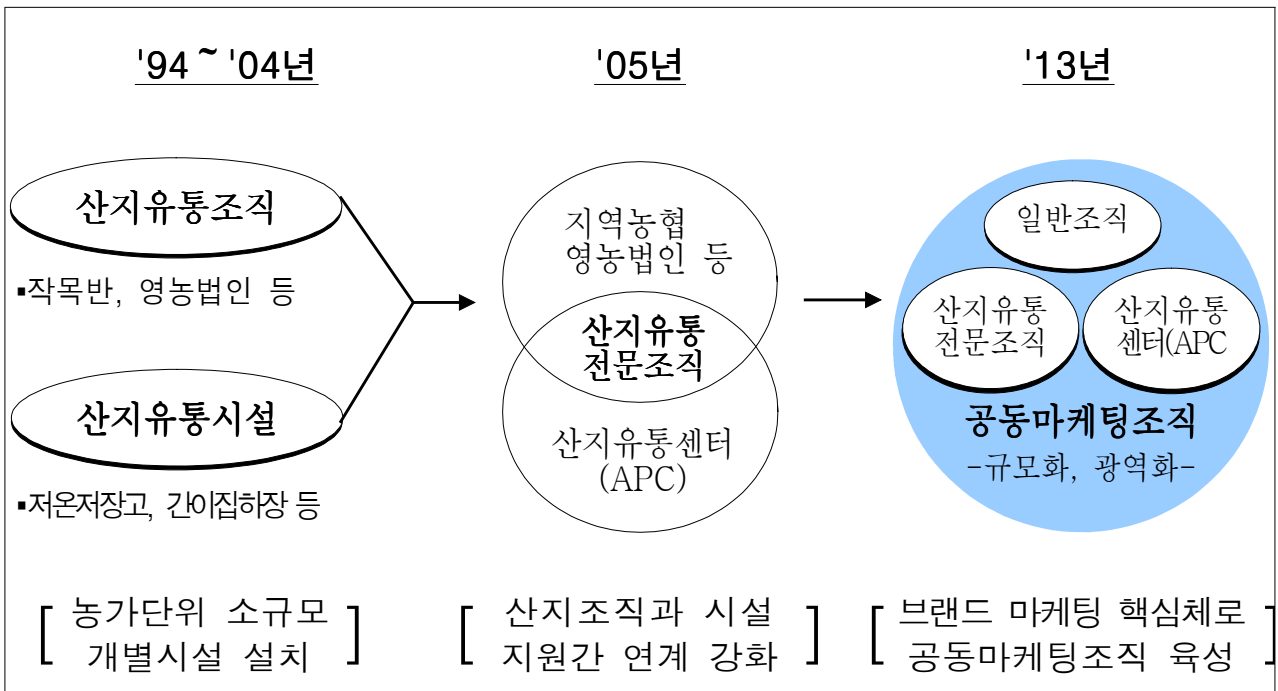
- ◇ 전국 으뜸쌀 품평회에서 '02~'04년 연속 금상·대상 수상
- ◇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시중유통 브랜드 쌀 평가에서 '04~'05년 『우수 브랜드 쌀(매년 12개)』로 선정
- 생산 농가와의 계약재배 등 철저한 품질관리로 소비자 신뢰확보
  - \* 단일품종(새추청벼) 계약재배 600ha, 품질인증 획득

## □□ 정책목표 : 농축산물 유통 효율화 및 소비촉진

### 가. 정책여건

- '90년대 이후 시장개방 확대, 소비자 수요 변화, 대형 유통업체 확산 등 유통환경이 크게 변화
  - 수입 농축산물 증가 및 소비자 선호 다양화 → 시장경쟁 심화, 농축산물의 **고품질·브랜드화** 및 **가공·간편식품화** 요구
  - 대형유통업체의 확대 → **출하의 규격화·규모화** 요구
- 소비지 물류기반 및 산지유통시설의 **확충** 등을 통해 신선 농축산물을 사계절 공급할 수 있는 유통 H/W는 어느 정도 구축
  - 산지에서 **선별-저장-포장**을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산지유통센터(APC) 확충** 및 **규모화된 산지유통전문조직** 육성
    - \* 산지유통전문조직 : 매출액 30억이상 협동조합, 영농법인 등
    - \* APC/전문조직 : ('98) 134개소/ - → ('00) 196/99 → ('05) 213/269
  - 산지-소비지간 **유통경로 다원화**를 위한 소비지유통기반 구축
    - \* 공영도매시장/종합유통센터 : ('98) 18개소/3개소 → ('00) 23/7 → ('05) 32/13
  - '94년 이후 4차례 **농안법 개정**으로 도매시장의 **상장 경매** 원칙을 정립, 농산물의 **투명한 유통** 체제 마련

- 소비자 대형유통업체는 소비자 신뢰도가 큰 우수농축산물 브랜드를 요구, 산지유통조직의 광역화·브랜드화 필요성 증대
  - 대형유통업체는 산지로부터 대량으로 균일한 품질의 농축산물을 지속적으로 직접 공급받기를 희망
    - 재래시장과 달리 하역기계화를 통한 물류비절감을 위해 산지부터 규격화·파렛타이징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한 실정
  
- 개방 확대에 대응한 수출확대, 소비자 기호변화에 대응한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도 강화되어야 할 과제
  - 개방확대는 수출 가능성도 동시에 커진다는 점을 인식, 국산 우수 농축산물의 수출확대를 보다 강화
  - 그간 미흡했던 국내 농축산업과 식품가공 및 의식산업간 연계를 강화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필요



## 나.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한 우수 브랜드 육성

### 1) 기본방향 및 추진실적

◇ 시장개방 확대, 대형유통업체 확산 등 유통환경변화에 대응, 우수 브랜드 경영체를 육성하여 국산 농축산물의 소비자 신뢰도 제고

□ 그간 과수·채소 등 원예분야는 규모화된 산지유통조직 육성을 중점 추진, 소비자 지향적 브랜드 마케팅 기반 구축

○ 산지유통전문조직(매출 30억원 이상) 269개소, 매출 100억원 이상 공동마케팅조직 15개소 및 과수 거점산지유통센터 7개소 지정

○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근거 마련('04 농협법개정), 일선조합의 자율적 광역합병 등 협동조합 유통사업의 규모화·전문화 유도

\* 강원지역 4개 조합이 「백두대간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최초설립('05.12)

\* '00~'05년간 일선조합 합병·파산 등으로 138개 조합 소멸(합병의결 포함)

□ 규모화가 상당수준 진전된 축산분야는 소비자단체와 함께 우수 브랜드 경영체 인증제를 도입, 생산자·소비자 동시만족 효과

○ 통일된 품질·규격의 브랜드 경영체 49개소('05까지)를 선발·지원

\* 전남 8개 축협 공동 브랜드 '순한한우'는 사육방법·마케팅을 통일하고, 위생적으로 생산한 고급육을 롯데마트와 대량 직거래

\* 브랜드 경영체 사육비중(한우, 돼지) : ('04) 25%, 45% → ('05) 29, 47

○ 한우·돼지 브랜드 경영지침서 제작, 현장배포('05.6)·활용

○ 소시모와 협력, 우수 브랜드 인증('05.1) : 18개 업체(한우 8, 돼지 10)



## 2) '06년도 중점 추진계획

### □ 규모화된 산지유통조직 중심으로 과수채소 우수 브랜드 집중육성

#### ○ 과수·채소분야 우수 브랜드 육성계획을 6월까지 수립추진

- 우수 브랜드 개념(품종·비료·농약 등 재배규약 준수, 수확후 품질관리 시스템 등) 정립, 브랜드 육성자금 지원계획 등
- 6월까지 사과·감귤·고추·마늘에 대해 브랜드 경영지침서 제작·보급, 12월까지 배·포도·단감·수박·딸기·양파 등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 연말까지 기존 공동마케팅 조직(15개소) 및 과수 거점산지유통센터(7개소)는 자체 브랜드 육성계획 수립

- 조합, 민간업체 등에서도 농가를 조직화, 자체브랜드 육성계획 수립

### □ '06년중 공동마케팅조직 3개소(총 18개소), 과수 거점산지유통센터(거점 APC) 4개소(총11개소) 추가 선정, 시설·운영자금 지원

#### ○ 규모화된 산지유통전문조직(공동마케팅조직 포함)의 원예 농산물 처리비율을 '05년 26%에서 '06년 28%까지 확대

#### — < 부여 “굿뜨래” 브랜드 공동마케팅 사례 > —

= 굿뜨래 : 좋은 들에, 좋은 상품(Good Farm! Good Food!) =

- ◇ 부여 9개 농협이 브랜드 통합(수박, 메론) 및 협약을 체결하고 브랜드 마케팅을 전개하여 큰 성과(매출액 : '04년 26억원 → '05년 80)
- ◇ 지자체는 조례로 브랜드 규약 제정, 상품화 장비 및 포장비 지원

□ 축산분야 우수 브랜드 육성 사업을 본격 추진, 조기 정착 유도

- 성공가능성 있는 한우·돼지 브랜드 경영체를 선정, 집중지원
  - 브랜드 경영체 지원 확대 : ('05) 31개소 → ('06) 31(누계 : 80개소)
  - 경영체 사육비중 확대(한우 : '05년 29%→'06년 32, 돼지 : 47→50)
- 한우·돼지 브랜드 인증 확대(18개→25) 및 육우·돼지 '07년 인증 준비
  - \* 한우 : ('05) 8개소→('06) 5개 추가(누계 13), 돼지 ('05) 10→('06) 2 추가(누계 12)

□ 우수 브랜드 경영체에 정책자금 집중지원

- 산지유통 조직 평가(6월)를 거쳐 우수 브랜드 경영체에 대한 브랜드 컨설팅, 홍보비 등 운영자금 금리 차등(1~3%) 지원
- 우수 브랜드 경영체 모범사례집 발간(10월), 벤치마킹 기회제공

□ 협동조합의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한 개혁 지속 추진

- 시·군단위 조합연합사업체는 3년이내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전환, 경영전문화 추진시 공동마케팅조직 자금지원
  - 원료구입자금, 농가선도금 등 조직당 150억원(금리 1%) 융자
- 조합간 자율적인 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지원 자금을 현행 2억원(무이자, 5년)에서 5억원으로 확대 지원
- 중앙회 신·경 분리문제는 조합 경제사업 지원 기능 강화 관점에서 작년 개정 시행된 농협법에 따라 검토
  - 1월부터 농림부내 「신·경분리 위원회」를 가동, 6월말 농협이 세부추진방안을 제출하면 농민단체·전문가 의견수렴 추진

## 다. 농산물 물류효율화

### 1) 기본방향 및 추진실적

◇ 소모성 물류비 절감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 및 시설현대화를 추진하여 생산자 수취가격 제고

\* 소모성 물류비 비율 : ('00) 59% → ('02) 57 → ('05) 55 → ('13목표) 50%

□ 표준규격출하 및 하역기계화를 지원하여 물류비 절감 유도

○ 「농산물표준규격」제정을 통하여 표준규격 포장출하율이 높아지고 농산물의 상품성도 향상

- 농산물 포장 출하율 : ('98) 75.1% → ('00) 79.3 → ('05P) 87.0

- 농산물 표준규격 출하율 : ('98) 17.1% → ('00) 39.8 → ('05P) 54.0

\* 표준규격농산물 포장출하시 포장재비 일부를 국고 지원(30%)

○ 공동선별·공동출하가 진전되고 파렛트 등 물류기기 이용을 통한 대형유통업체의 하역기계화가 크게 진전

- 농산물 공동출하율 : ('00) 7.0% → ('02) 8.9 → ('05P) 15.0

- 대형유통업체 파렛트 이용율 : ('00) 20.0% → ('02) 53.0 → ('05P) 80.0

\* 공동선별비(30%), 물류기기공동이용료(60%)를 국고 지원

□ 「농산물물류혁신대책」을 수립('05.12)하여 노후화된 공영도매 시장 시설개선, 배추·무 규격출하 및 포장화 추진중

\* '04 배추·무 포장화율 : 배추 4.5%, 무 14.8(전체 농산물 포장화율 : 85.9)

## 2) '06년 중점 추진계획

- 감모비·운송비·하역비 등 소모성 물류비 절감대책 적극 추진  
(전체 물류비 중 소모성물류비 비중 : '05년 55% → '06년 54%)
  - 규격포장화율이 낮은 배추·무의 포장유통을 추진하여 하역비를 절감하고, 도매시장 악취·오폐수를 억제하여 환경을 개선
    - 상반기중 계획 수립, 하반기중 시범사업, '07년부터 전면 실시
  -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보급(감모비 절감)
    - 수확 후 관리기술 표준메뉴얼 개발 : ('05까지) 9품목 → ('06) 12
  - 공동선별·출하를 통한 표준규격 출하 촉진(운송비 절감)
    - \* 공동선별비 지원 : ('05) 120억원 → ('06) 120
  - 물류장비구입지원과 공동이용 촉진 지원(하역비 절감)
    - \* 하역기계화 지원 : ('05) 143억원 → ('06) 177
  
- 도매시장 거래규모화 및 거래제도 개선을 위해 농안법 개정
  - 도매시장법인 등의 인수합병 근거, 시장거래분쟁위원회 신설 등
    - \* 법개정 추진위, 개정실무협의회,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05.12)
  
- 노후화되고 포화상태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
  - 재원분담 등에 대해 서울시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상반기중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07년 예산에 반영
    - \* 가락동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05.10)

## 라. 농식품 수출 확대

### 1) 기본방향 및 추진실적

◇ '13년 수출목표 50억불 달성을 위해 유망상품개발 및 시장다변화, 적극적인 해외홍보 추진

□ 환율하락, 유가인상, 폭설피해 등 어려움 속에도 '05년 수출액은 '04년보다 6.7% 증가한 2,224백만불(추정) 달성

\* 농식품 수출액 : ('95) 1,570백만불 → ('04) 2,085 → ('05P) 2,224

○ 수출단지 조성(129개소), **한류를 활용한 홍보**(농식품 홍보대사 해외홍보), 수출물류비 지원, **공동브랜드(Whimori) 인지도 제고** 등 중점 추진

○ 현장 수출전문 컨설팅(병해충·재배기술 등)을 확대(178회)

○ 일본에서 **Whimori Week**를 지정, 판촉행사 실시

□ 농식품 수출이 주로 교민들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수출선수출품목의 다변화가 미흡**하여 유가환율 등의 변화에 취약

○ 일본중국 수출의존도가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미흡('95: 63% → '05: 49)

\* '05 국가별 수출비중 : 일본 33%, 중국 16, 미국 12, 러시아 10 등

○ 수출품목도 김치, 인삼, 파프리카 등 일부 품목에 한정되고 있으나 새로운 품목 수출을 위해 적극 노력중

- 우리 기술로 개발한 **매향딸기 동남아 시장개척**(129톤), **포도의 대미 첫 수출**(103톤) 등

## 2) '06년 중점추진계획

### □ '06 농식품 수출목표액은 '05년보다 7.9% 증가한 24억불

\* 중점품목 : 김치, 인삼, 삼계탕, 배, 장미, 국화, 심비디움 등

### □ 일본시장 홍보 강화 및 동남아, 인도 등 신규시장 개척 추진

○ 김치, 인삼 등 수출 주력품목에 대해 재배·제조과정과 품질 우수성 홍보를 위한 TV 다큐멘터리 제작·방영

- 대 일본 김치수출 감소('04. 97백만불 → '05P. 87 △10)에 적극대처

○ 현지시장 판촉전(27회), 박람회 참가지원(7회) 등을 통해 집중 홍보

- 한류 및 한식문화 홍보를 통해 농식품 해외 인지도 제고에도 주력

○ 신규시장 개척시 수출물류비 보조 지원을 상향조정(5% → 10)

### □ 농가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수출유망품목 집중 개발·육성

○ 미국 등 검역 문제로 인한 수출 애로요인을 적극적으로 해소

\* 검토타상 품목(예) : 사과, 배, 토마토, 감귤, 선인장 등 11개국, 23품목

- 파프리카는 검역문제가 해소되어 '06년부터 대미 수출 시작

○ 브로커리, 버섯 등 수출유망품목 단계별 개발전략 수립·추진(5월)

### □ 수출농식품의 현지화, 세계화, 고급화 추진

○ 프랑스 요리학교(르 꼬르동 블루)와 김치요리 공동개발·보급 지속 추진

- 일본, 미국 등 시연·시식회(7회), Air France 기내식화 추진

○ 농산물 신선도유지 위한 냉장컨테이너 임대 지원(20대, 5.5억원)

## 마. 농축산물 소비촉진과 식품산업육성

### 1) 기본방향 및 추진실적

◇ 농식품 우수성 홍보, 국산 농축산물의 식품가공 확대를 통해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기반 구축 추진

□ 우리 농식품의 건강기능성을 부각한 TV 기획물 방영(51편) 등을 통해 소비자 인지도 제고

○ 농촌사랑 한가위 대축제(KBS 공동주최, 49만명 방문) 실시

\* 미니홈피(59만명 방문), 어린이용 홍보만화(23만부), 우리농산물 우수성 홍보캠페인(KBS 2FM 등 라디오 2개월, KTX 2개월)

\* 우리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 ('05.5) 45.7% → ('05.11) 50.5

□ 전통식품 산업육성으로 전통식품의 산업화국제화 기틀 마련

○ 전통식품 규격제정(43품목), 품질인증(221개소), 명인지정(23명)

○ CODEX 규격승인 : 김치('01)·인삼·된장·고추장 추진 중

□ 식품산업을 활용한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식품산업육성 종합대책」 수립('05.9) 추진

○ 산지 농산물가공산업육성을 통한 수요확대, 전통음식의 외식 산업화, 국산 원료 가공품 수출지원, 건전한 식문화 보급 홍보 등

## 2) '06년 중점 추진계획

### □ 대상별 맞춤형 홍보 및 생산자 자율적 홍보 지원

- TV 등 홍보효과가 큰 영상매체를 활용하여 공감대 형성
  - 계절별 건강 농식품 다큐멘터리, 어린이용 TV 만화 등(22억원)
- “우리 농식품 사랑” 미니홈피 개설,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등 청소년·네티즌 대상 인터넷 홍보 및 판촉행사 강화(14억원)
- 농산물 품목 자조금을 활용한 생산자 중심의 홍보역량 강화
  - \* 자조금 조성대상(축산/원예) : ('05) 5축종/17품목 → ('06) 6/19 → ('13) 10/34

### □ 농산물 가공식품의 규격화·세계화 촉진

- 전통식품규격, 식품KS규격 등 제정(누계) : ('05) 245개 → ('06) 302
  - KS규격·전통식품 인증업체(누계) : ('05) 337개 → ('06) 377
- 전통음식 정보의 해외 전파 및 가공식품의 세계화를 위해 제품 개발, 유통개선 등 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 컨설팅(430백만원)실시

### □ 우리 농산물 공급과 연계하여 식품업체에 대한 지원 지속추진

- 가공·외식업체의 원료수매자금 지원 확대 : ('05) 822억원 → ('06) 1,101
- 전통주 복원·상품화 및 유기식품 이력추적제·인증제 추진을 위한 ‘전통주 및 유기식품 육성계획’ 수립(상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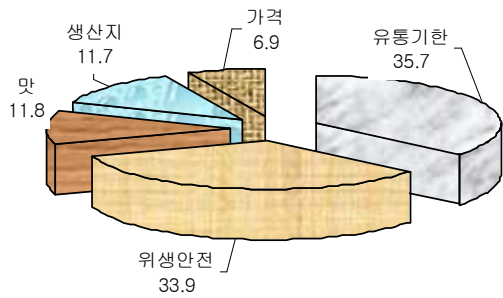


## □□ 정책목표 : 소비자 지향적 농식품 안전관리

### 가. 정책여건

□ 국민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안전하고 환경친화적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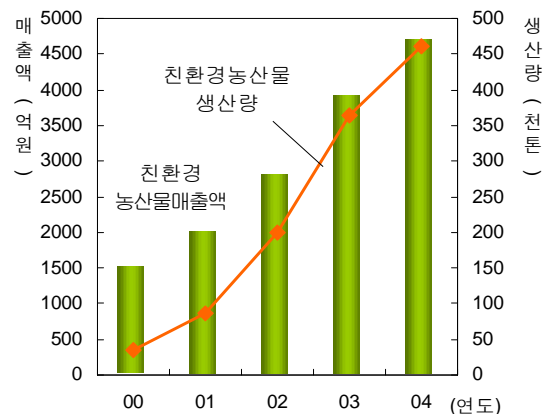
- 소비자 선택 기준이 수량·가격에서 품질 및 안전성으로 변화



소비자 구매시 고려사항('05.12)

□ 수요증가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은 지속적으로 증가(비중 '99 : 0.1% → '05 : 3.5)하고 있으나 대부분 소량 다품목 생산구조 유지

- 주로 마을 중심 중·소규모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형성



□ 전체적인 화학비료 및 합성농약 사용량은 완만한 감소세

- 가축분뇨 퇴·액비의 품질문제 및 사용불편 등으로 화학비료에 주로 의존하여 경종농업과 축산간 연계 부족

□ 농산물 수입증가 및 외국과의 인적·물적교류 확대로 농식품 안전성 문제에 대한 국제적 변수의 중요성 증대

- 수입농식품에서 위생기준을 위반하는 사례 다수 검출

- 악성가축질병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국내 방역은 물론 국경검역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
  - 특히 조류인플루엔자('03발생), 광우병 등 인수공통 전염병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 심화
- 시장 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품질 및 안전성 관리를 중점 추진하고 제도·조직 정비, 지도·단속 등 실시
  - 그동안 농축산물 안전성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소비자의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
  - 유통단계별로 식품안전 소관 부처가 달라,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성있는 안전관리에 어려움

제도 정비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도입('93), 농산물품질관리법 제정('96), 친환경농업육성법 제정('97) ·'98년 농림부로 축산물 안전관리 일원화 ·도축장 HACCP적용('98),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도입('03), 농축산물이력추적시스템 시범도입('04)
조직 개편	·'90년대 이후 생산관련 조직 축소·통합, 친환경농업정책과 ('94년 설치), 식품산업과('94), 소비안전과('03) 등 설치 ·농산물 수매검사를 주로 담당하던 '농산물검사소'를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 개편('98), 농산물 품질관리 기능 강화
지도·단속	·'92년 이후 농산물안전성 조사 지속 실시(연간 약 800 여건의 행정처분 부과)

## 나. 농식품 안전성 관리강화

### 1) 기본방향 및 추진실적

◇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된 농식품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농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부응

※ '08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농산물안전성 조사 부적합률 1.1%, 축산물 잔류물질 0.2% 이하 및 미생물 검사 위반율 0.4% 이하 유지 목표

□ 선진 안전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식품안전사고를 사전 예방

○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를 '03년 시범도입, '05년 적용을 위한 기반 마련

\* GAP : 생산·수확후 관리단계까지 농약 등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제도

- 이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하고 GAP 관리기준(필수 74, 권장 36) 및 GAP 적용을 위한 품목별 표준재배지침 마련('05. 96개)

○ 축산물에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적용 확대

- HACCP을 도축장, 축산물 가공장(264개소), 사료공장 등에 확대 적용

- 쇠고기 이력추적관리제도 시범도입(9개 한우 우수브랜드, '04.10월)

□ 농업인에 대한 안전성 교육 확대('00이후 연간 56만명) 및 조사 강화('00 : 43천건 → '05 : 62천건)로 안전성 수준 향상

\* 안전성 부적합률 : 농산물 ('99) 1.6% → ('04) 1.31 → ('05) 1.2

축산물(미생물) ('99) 3.4% → ('04) 0.47 → ('05.9) 0.29

## 2) '06년도 중점 추진계획

### < 농산물 안전성 관리 >

#### □ 생산단계에서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농업인 교육 강화

- 시·군 영농설계교육('06년 27만명, 1~2월)시 안전성 강조
- 안전성 조사 부적합농가 특별교육 실시(6·12월, 농업기술원)

#### □ GAP 및 이력추적관리제도 확대 시행

- 대상농가 수 대폭 확대 : ('05) 965호 → ('06) 3,000
- 수확후 위생관리 시설 지원 확대 : ('05) 6억원 → ('06) 14
- 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06.8, 15억원)
- 농식품안전정보 종합관리를 위한 관계부처(해수부, 식약청 등) 합동 농축수산물 안전정보시스템 구축(65억원)

#### □ 농산물안전성 조사 강화 및 검사기반 확충

- 생산단계를 중심으로 농산물 안전성 조사 확대
  - 깻잎, 상추 등 30개 품목 중점 관리, 조사건수 확대('05 : 62천건→'06 : 64)
  - 친환경, GAP 등 인증품 중심으로 시판품 조사 확대
- 도단위 농관원 정밀분석실(9개소)과 별도로 주요 시·군에 정밀분석실 설치 추진('04~'05 : 6개소 기 설치, '06 : 4개소 추가)

## < 축산물 안전성 관리 >

### □ 생산에서 소비까지 선진 위생관리기법인 HACCP 적용 확대

- '06년부터 돼지사육단계(브랜드 참여농가, 친환경 축산농가 등)에 HACCP 시범 적용, 비육우·젖소에 대한 적용지침 연내개발
- 사료공장, 축산물가공장, 판매업소 등 HACCP 지정 확대
  - 적용 사업장('05→'06) : 사료공장 35→50, 축산물가공장 264→300, 판매업소 2→8, 집유장 4(신규)
- 보관, 운반단계 HACCP 적용('07년 시행)을 위해 상반기중 조사·연구를 거쳐 11월까지 지침개발

###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쇠고기 이력추적관리제도를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현장 적용도 철저히 준비

- 쇠고기 이력추적관리제도 시범사업을 확충(57 → 100천두)하고 전면실시에 대비, 귀표·DNA검사 등 미비점 보완
  - '07년까지 제도·조직 정비를 완료하고, '08년부터 전국확대
- 개정('05.12) 식품위생법에 의한 음식점 식육 원산지표시제 시행('07.1월)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조, 시행령 등 정비

### □ '07년 닭·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표시기준, 포장 단위·방법 등 세부지침 마련(9월)

- 하반기 해당업체 교육·홍보 등 현장 사전준비 시행

## 다. 수입 농식품 통관·유통 관리강화

### 1) 기본방향 및 추진실적

◇ 범정부차원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여  
편법·부정 수입 및 유해·불량 농산물수입 근절 추진

□ 농림부에 「수입농수산물 통관·유통개선 T/F」를 설치('05.9), 수  
입 농수산물 통관 및 국내유통 실태파악 및 특별단속 실시

○ 관세청에 「불법 수입농수산물 특별단속본부」를 설치, 91개팀  
500여명을 투입하여 특별단속('05.9.13~'06.1.28) 실시

○ 사전세액심사 대상품목을 확대 지정·운영(13개→22)하고 저가  
신고 행위시 부족세액 추징과 함께 형사처벌 병행

\* 특별단속이후 채소·특작류 수입물량이 전년동기 41% 감소, 수입신고가격  
(11월)도 마늘류(39~47%), 땅콩(63~257%) 등 상승

○ 농협 등 생산자 단체에 「농산물 불법수입 및 유통신고센터」 설치

□ 농관원·수과원·식검 합동의 특별단속팀을 구성, 수입농산물 원  
산지 위반에 대한 대대적 단속실시

\* '05년 단속실적 : 3,230건(허위표시 1,751, 미표시 1,479)

○ 원산지 허위표시자에 대한 처벌강화, 상습위반자 공표 등을  
주 내용으로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06.1.1 시행)

## 2) '06년도 중점추진계획

### □ 관계기관 협력 강화를 통한 수입농산물 통관·유통관리 개선

- 농림부의 「수입농수산물 통관·유통개선 T/F」를 분기별로 개최, 사전 실태파악 및 대책 추진(관세청 협조)
- 검찰청과 협조, 밀수농산물 가액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농림부로 이관처리할 수 있도록 상반기중 제도개선 추진
  - 압수된 밀수농산물은 법원의 몰수 판결 확정시 검사로부터 인계처분을 받은 후 폐기, 매각 등 처리
  - \* 현재 가액 2,000만원 이하는 농림부, 2,000만원 이상은 검찰이 처리
- 해외 현지 모니터 요원 확충 등 정보수집 역량 강화
  - \* ('05) 모니터요원 50명, 39개 품목, 4개국 → ('06) 70명, 50개 품목, 7개국

### □ 수입농산물 검역 및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 강화

- 샘플조사수 확대 등 검역제도를 상반기중 현실에 맞게 개선
  - 품목별·국가별 병충해 위험정도를 평가하여 검사수량 조정
  - \* 샘플 조사수 : 곡류, 특용작물, 건채소류(0.5% → 1), 채소류(2% → 4)
- 원산지 단속을 위한 명예감시원 증원, 합동단속 강화
  - \* 명예감시원 확대 : ('04) 2.8천명 → ('05) 17.4 → ('06) 25
- 과학적 원산지 식별기법 도입 확대 등을 통한 단속강화
  - 연말까지 쌀, 인삼의 DNA 및 성분함량분석을 통한 원산지 식별법 개발

## 라.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확산

### 1) 기본방향 및 추진실적

◇ 가축분뇨의 경종작물 시비 확대, 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축산업으로 발전

\* 화학비료·합성농약 사용량을 '13년까지 40% 감축('99~'03대비),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을 '10년까지 10%로 확대

□ 가축분뇨 퇴·액비 등 유기질 비료 지원 확대 및 화학비료 차손보조 폐지('05.7.1)로 토양오염 감축 유도

\* 화학비료 사용량 : ('99) 398kg/ha → ('03) 350 → ('04) 385 → ('05P) 374

\* 합성농약 사용량 : ('99) 12.2kg/ha → ('03) 12.7 → ('04) 13.0 → ('05P) 11.8

○ 유기질비료 지원 : ('99) 20만톤, 100억원 → ('05) 70, 245

○ 친환경농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05.2, 연간 50억원 절감)

○ 딸기·토마토 등 시설원예작물에 대한 천적해충방제지원 사업을 시범추진('05)하여 합성농약 사용대체 유도

\* 농림부내 “자연순환농업팀”을 설치('05.9), 운영중

□ 읍·면 중심으로 10농가·10ha이상 친환경농업 지구를 조성하여 ('99년 471개소 → '05년 742개소)친환경농산물 생산확대 유도

□ 환경부와 공동으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05.12, 국회제출)하여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기반 구



축

## 2) '06년도 중점 추진계획

### □ 생산단계 : 친환경농법 확산을 위한 지원확대

○ 유기질 비료 지원 확대로 화학비료 대체 유도(120만톤, 420억원)

○ 논에 지급하는 친환경농업직불 단가를 인상하여 초기 진입 농가의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감소 부담을 해소

\* 논단가('06) : 저농약 217천원/ha(신규), 무농약 150 → 307, 유기 270 → 392

○ 천적방제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시설원예 농약사용 절감유도

\* 천적방제사업 : ('05) 321ha, 12억원 → ('06) 1,000ha, 38억원

○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친환경농업 핵심기술 개발·보급

- 품목별 친환경농업실천 표준기술 개발('09년까지 50억원)

- 천적방제기술 조기보급을 위한 컨설턴트 양성(연간 1,000명)

○ 생산·유통 및 관광을 연계한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 '06년에 3개소(개소당 1,000ha) 시범사업 추진, '13년까지 50개소 조성

### □ 유통단계 :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대책 추진

○ 도매시장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수의·정가매매 품목으로 지정, 원활한 거래를 촉진하도록 농안법 개정 추진

○ 출하선도금 지급, 계약재배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유통 활성화자금 신규 지원('06년 50억원)

## □ 축산과 경종농업을 연계하는 자연순환형 모델 구축 지원

### ○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및 경종농가의 이용 활성화 유도

- 가축분뇨 퇴·액비화시설 지원 확대('05년 333억원 → '06년 341)
  - \* 축분비료 유통센터(5개소) 및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560개소)
- 가축분뇨 퇴·액비 품질관리, 사용방법 등 매뉴얼 작성·보급(6월)
- 전문 액비유통센터를 통한 액비살포 비용 지원(27천ha, 40억원)

### ○ 사료용 총체보리 생산 확대('05 : 6,281ha → '06 : 9,686)

- 휴경지를 활용한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05 : 1,000ha → '06 : 1,200) 및 운송바·기계·장비 등 지원('05 : 65억원 → '06 : 117)

## □ 축산분뇨에 의한 환경부담 경감을 위해 제도정비 등 추진

### ○ 지역별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계획 수립 의무화('07 시행)

-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기반영

### ○ 친환경축산직불 참여농가 확대(653호 → 900), 시범사업결과를 분석, 연말까지 직불금 요건·단가 등 개선방안 마련

### ○ 가축질병 예방 및 적정한 가축분뇨 생산을 위해 축산업등록제에서 정한 두당 적정 사육면적('07.1.1 시행) 준수 사전 준비

- 농가를 대상으로 적정 사육면적 준수를 위한 지속적 홍보 추진

\* 두당적정 사육면적 : 비육우(방사) 7.0m<sup>2</sup>, 돼지(비육) 0.7m<sup>2</sup>, 산란계(케이지) 0.042m<sup>2</sup>

## 마.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대응

### 1) 기본방향 및 추진실적

◇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국제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따라 대응하되 축산농가의 우려사항도 고려

- 미국내 광우병 발생('04.12)으로 수입이 금지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전문가협의회, 가축방역협의회를 통해 검증('05.2~12)
  - 전문가들은 위험도가 높지 않고, 특정위험물질(SRM) 제거 등 미국의 안전성 제도는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
  - 가축방역 협의회는 국제기준보다 조금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 제시
- 한미 수입재개조건 협상('06.1.9~13)을 개최, ‘도축월령 30개월 미만의 뼈를 제거한 쇠고기’만을 수입하는 것으로 타결
  - i) 수입가능 부위는 뼈를 제거한 골격근육(살코기)에 한함
  - ii) BSE재발 등 상황악화시 쇠고기 수입 중단조치 가능
  - iii) 우리측 검역관이 현지점검 등을 통해 수출 작업장 승인
  - iv) 소의 나이와 관계없이 모두 SRM(특정위험물질) 제거
  - v) 미국은 ‘한국산 삼계탕의 수입허용절차’를 신속하게 추진

## 2) '06년도 중점 추진계획

-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는 금년 3월말경이 될 것으로 전망
  - 개정된 수입위생 조건의 국내 예고 및 확정, 미국내 수출 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승인 등의 절차를 완료한 후 가능
- 시장과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내대책 추진
  - 한우 등의 가격이 급락하지 않도록 사전 대책 추진
    - 홍수출하 자제 및 송아지 입식자제 교육홍보 실시(도별 1회, 8회)
    - 생산자가 납부하는 의무자조금(한우 40억원, 양돈 56)과 정부 지원금으로 국내산 축산물 소비 홍보 실시
  - 한우고기 품질 고급화 및 유통 투명성 확보 중점 추진
    - '06년까지 발전 가능성 있는 브랜드경영체 50개를 선정, 규모화 마케팅 등 집중 지원('06 : 750억원)
    - 쇠고기 이력추적관리제 조기 확대 시행(전면 시행시기 : 당초 '09년 → '08년),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 시행('07.1월)
    - '08년까지 암소 100두 내외를 사육하는 육종농가 40호('06년 10호)를 선정, 어미소의 능력을 함께 고려하는 한우개량 추진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내실화('06년 안정기준가격 : 1,300천원) 및 가축공제 가입('05.12월말 현재 158천두) 확대 등 경영안정 지원
    - 부루세라 발생 농장 재기 지원을 위한 살처분 보상금 적기 지급
    - '07년부터 송아지 폐사 방지를 위해 설사병 예방약 지원

## 바. 가축질병 예방대책 지속추진

### 1) 기본방향 및 추진실적

◇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악성 가축질병의 국내 유입 차단 및 국내 농장단위에서 소독 등 예방 활동 강화

#### □ 국경검역 강화로 악성가축질병 국내유입 차단

- 휴대 육류 검색(연간 21천건), 건초소독(연간 150건) 등 유입 경로별 차단검역을 실시하고 해외 질병 발생정보 수집·대응

#### □ 평시 국내 가축질병 방역체계 정비로 질병발생 예방

- '01년 이후 매주 수요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운영
  - 일제소독 및 취약농가 방역지원을 위한 공동방제단(3,880개) 운영
- 축산농가에 대한 방역 의무 부여 및 소독 등 의무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 강화(소독 미실시 농가 50~300만원 과태료 부과)

#### □ 가축질병 발생시 조기근절을 위한 초동 대응체계 강화

-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발생시 표준행동요령(SOP) 제정보급
  - 조기 신고 및 진단체계, 방역대 설정, 이동제한 조치 등 규정
  - \* 구제역('00,'02 발생)은 '02.6월 종식 이후 청정국 지위유지, 조류인플루엔자('03.12~'04.3 발생)는 '04년 이후 국내에서 미발생
  - ※ '04. 8월 이후 범정부적으로 가축방역종합대책을 수립·추진중

## 2) '06년도 중점 추진계획

□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국경 검역체계 강화

○ 중국·동남아 등 악성 가축질병 발생국 노선 집중 관리

- 검역관 증원 배치(56 → 81명), 검역탐지견 집중 배치(19마리)

- 전국 공항·항만(231개소)에 신발소독 카페트(392개) 설치 등

○ 주요 질병 발생국 및 국제기구와 정보교환 등 공조체계 유지

□ 주요 가축질병 추적 조사 및 조기 근절 추진

○ 농가 대상 혈청검사·병성감정 확대(1,400 → 1,450천건)

○ 소독, 차단방역, 검진 및 질병의심축 신고요령 등에 대한 농가 교육·홍보 실시(시·군별 분기당 1회 이상)

○ 돼지만성소모성 질병(설사병, 호흡기 질병 등 4개 질병) 최소화를 위해 종돈장 검사항목 확대(3 → 5종)

○ '07년 공익수의사 제도 시행을 위한 병역법 개정 등 관련 법률 국회의결(4월) 및 시행령·시행규칙 정비 추진(하반기)

□ 인수공통전염병의 효율적 방역 추진을 위해 “가축질병위기 대응매뉴얼('05.9 NSC 마련)”에 따라 관련부처와 합동 대처

○ 농림부와 보건복지부 합동 “인수공통전염병대책위원회” 활동 강화

-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여부 조사, 발생시 방역대 설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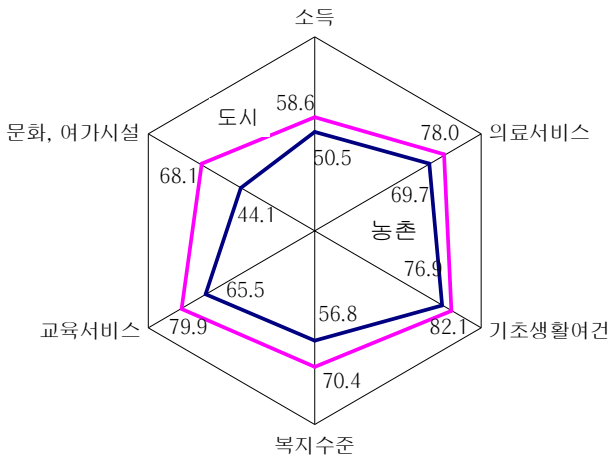
## □□ 정책목표 : 도시민과 상생하는 복지농촌 조성

### 가. 정책여건

□ 도시화·산업화·개방화의 진전과 도시중심의 개발정책 시행 결과, 농촌의 생활여건은 상대적으로 크게 취약

○ 열악한 생활여건은 농업인의 移村을 가속화하고, 이에 따른 농촌 인구 감소는 농촌투자를 다시 감소시키는 악순환 되풀이

#### <농촌과 도시의 생활만족도>



■ 기초생활 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도시와 농촌간 큰 차이가 없음

\* 기초생활여건 : 주택, 교통,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등

■ 문화·여가시설, 소득, 복지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농촌이 낮은 수준

\* 문화여가시설 : 영화관, 공원, 문화센터 등

\* 복지수준 : 연금, 건강보험, 여성노인복지 등

\* 도시·농산어촌 5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농림어업인 복지실태조사('04.11) 결과

\* 위 수치는 만족과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을 표시, 나머지는 불만족이라고 응답

○ 최근 도시 과밀화, 고령화에 따른 은퇴자 증가로 도시민이 농촌을 여가생활 및 정주공간으로 새롭게 인식

\* 도시민의 10.9%가 10년내 정주목적으로 농촌이주 고려중, 구체적으로 준비중인 도시민도 2.5% 수준(농어촌 정주의향 조사, '05.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그동안 열악한 농업생산기반 조성에 재원을 집중하여 **농촌 지역개발·중소농 복지증진**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
  - 경지정리, 수리시설 개보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등 집중 추진으로 **안전 영농기반은 어느정도 구축**
    - \* 경지정리담 비율('94 : 64% → '04 : 90), 저수지·양수장 등 수리시설('04까지 68천개소), 배수개선('04까지 128천ha), 기계화 경작로 포장('04까지 15천km)
  - 정주권 개발, 문화마을 조성, 농촌생활용수 공급 등을 추진 하였으나, **농촌 기초생활인프라 수준은 아직 미흡**
    - \* 면지역 기초생활환경정비를 위한 정주권 개발사업 : 770개면 완료(면당 30억원)
  - **중소농 부담경감** 차원에서 **고교생 학자금,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나 충분하지는 못한 상황
- **참여정부 출범이후,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국정목표로 농촌지역의 삶의질 향상 및 지역개발**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 제정('04.3) 후, 범정부 차원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05.4)·추진
    - '05~'09기간 동안 **20.3조원**을 집중 투자하여 농촌복지기반 확충, 교육여건 및 기초생활여건 개선, 복합산업 활성화 추진
  - **도시민의 농촌 정주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 정주공간 조성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

## 나. 농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 1) 기본방향 및 추진실적

◇ 삶과 휴양·산업이 조화된 복합정주공간으로 농촌을 조성하고, 도시은퇴자 등을 유치하여 농촌 거주인구를 전국민의 20%이상 유지함으로써 농촌의 활력증진, 국토균형발전 도모

#### □ 농촌 정주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 정비, 도시민 유입기반 마련

- 농촌 복합생활공간 시범마을 4개소(제천 도학마을, 상주 녹동마을, 담양 공산마을, 의령 양천마을)를 선정('05.10)
  - 6개부처 27개 사업을 연계, 종합적인 교육·의료·복지서비스 제공예정
- 은퇴도시민 등을 대상으로 농촌정주에 필요한 농지·주택 등 관련정보 제공 추진
  - 종합정보센터 개설('05.7), 포털사이트([www.nongchon.or.kr](http://www.nongchon.or.kr)) 구축('05.12)
- 농촌 정주의향 도시민을 대상으로 전원생활교육 실시(1,557명)

#### □ 농촌경관과 조화되는 지역개발로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정주여건 마련 추진

- 발전가능성이 큰 3~5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참여형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을 추진, 생활환경정비 등 종합지원
  - '05년에 36개 권역 공사착수, 40개 권역 기본계획 수립
- 전원마을 30지구를 선정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

## 2) '06년도 중점 추진계획

### □ 도시민의 농촌정주를 촉진하는 새로운 농촌 수용여건 마련

#### ○ 도시민 유치홍보를 위한 은퇴자 마을 조성 콘테스트 실시('06.10)

- 지자체가 도시민 입주수요, 전원주거단지 조성계획, 입주민의 지역 사회봉사활동 지원방안 등을 준비, 홍보 및 입주신청 접수

#### ○ 농촌 복합생활공간 시범마을 4개 지구 조성 본격 추진

- '07년중 도시민 입주를 목표로 '06 상반기 공사 착수
- 종합적인 의료·복지·문화 서비스 연계체계도 차질없이 구축

\* 연계계획 : ('06) 9개 사업(31억원) → ('07) 15 (108) → ('08) 3 (47)

### □ 기 추진중인 농촌지역개발사업은 공사착수 등 가속화

#### ○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25개 지구 신규착수 추진(총 55개 지구)

####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40개 권역중

'06년에 20권역 공사착수('05 : 36권역 → '06까지 56권역)

- 사업계획에 도시민 유치계획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추진방식 개선, 금년 예비타당성 조사 30개 권역부터 적용
- 30개 권역 예비타당성 조사 후 20개 권역 기본계획 수립(12월)

#### ○ 면소재지(중심마을) 기반정비는 연말까지 대상지역 조사·선정후 '07년부터 시범사업 실시(10개소)

□ **상향식 농촌지역개발을 주도해 나갈 인적자원 육성**

- 지역리더, 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농촌지역개발 추진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 실시**(’06계획 : 2,000명)
- 외부전문가, 출향인사와 농촌마을간 **연계 활성화** 지원
  - 전문가 DB구축 및 검색자문 시스템 운영을 통해 마을 컨설팅지원

□ **농촌 경관 관리 정책 추진을 위한 기준 마련**

- 경관작물(유채, 메밀 등) **재배 지원 시범사업**(’05~’07) 결과를 토대로, 향후 지원대상을 **주택·담장까지** 확대하는 방안 검토
- ’07년까지 **농촌경관지표** 제정을 목표로 ’06년중 연구용역, 현지실사, OECD 선진국 사례분석 등 기초작업 추진

□ **농촌 정주의향 도시민들이 불편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등 도시민 유입대책 추진**

- **포털사이트** 콘텐츠를 이용자 요구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확대, **귀농·귀촌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06.3)
- 온라인 포털 사이트와 병행, **농어촌 종합정보센터**에서 현장 안내, 전화방문 상담 등 **오프라인 서비스** 제공 추진(’06.2)
- 농촌정주의향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전원생활교육 확대**

\* 교육인원 : (’05) 27과정 1,557명 → (’06) 31과정 2,000명

## 다. 농촌복지 증진

### 1) 기본방향 및 추진실적

◇ 복지·교육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중소농·영세농 등의 기초생활 부담을 줄이고 농촌사회 안정을 도모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05.4)·추진

- 15개 부처 공동으로 향후 5년간('05~'09) 133개 과제 추진
- '05년 시행계획 수립('05.6), 시·도계획(9월) 및 시·군계획(10월) 수립, 점검·평가단 구성(12월) 등 추진체계 정비

□ 복지·교육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 실시로 중소농 등 생활안정 도모

- 건강보험료 경감율('04 : 30% → '05 : 40) 및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04 : 1.5ha미만 → '05 : 2ha) 확대 등 농촌복지 증진
- 우수고교 육성('04 : 7개교 → '05 : 14),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확대('04 : 1.5ha, 78천명 → '05 : 모든 농업인, 96) 등 교육여건 개선

### 2) '06년도 중점 추진계획

□ 삶의질 향상 기본계획('05~'09)의 내실화 지속 추진

- 점검·평가단을 통해 '05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07년 예산에 반영하고 기본계획 보완('06.4)
- 점검·평가결과를 반영, '06년도 시행계획 수립·추진('06.5)

□ 소득만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중소농업인** 등의 복지지원 확대

○ 농업인의 보육시설이용 **영유아**(만0~5세) 양육비 지원 확대

- 지원대상 : ('05) 2ha미만 → ('06) 5ha미만

○ 농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경감지원을 상향 조정**

- 건강보험료 경감지원을 : ('05) 40% → ('06) 50%

\* 가구당 연간 평균 경감액 : ('05) 293천원 → ('06) 404천원

○ 농업인의 대학생 자녀 **교육비 전액 무이자 용자 지원**

- 대학생 학자금(용자) : ('05) 25천명 637억원 → ('06) 26천명 700억원

□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등 중소농 지원대책 신규 추진**

○ 65세미만, 농지 3ha미만 농가가 농작업·교통·재해 등 사고를 당한 경우 당해 농가에 대해 **영농도우미** 지원

- 농촌평균임금(남자 57천원, 여자 38천원)의 70%를 10일간 지원

- 82개 시·군에서 시범 실시(4천명, 13억원), 평가 후 확대 계획

○ 65세이상, **고령단독·편조손 농가** 등이 안정적으로 농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사도우미** 지원

- 각 도별로 **인력지원단** 9개소 구성·운영(7억원)

- 자원봉사자, 은퇴자 등 도시와 농촌의 유희인력을 가사도우미로 활용

○ 5ha미만 농가 **여성농업인의 가정육아 비용 일부 지원**

\* 지원액 : 88천원/월(0세), 77(1세), 63(2세), 40(3~4세), 79(5세)

## 라. 도농교류 활성화

### 1) 기본방향 및 추진실적

◇ 지속적인 도농교류 확대로 농촌마을의 소득증대 및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등 도농상생 기반 구축

#### □ 1사1촌 운동을 중심으로 민간주도의 도농교류 본격 확산

○ '04~'05 기간 중 8,677건의 1사1촌 운동 자매결연 체결

\* '05년 기준 농촌체험·방문자 769천명(기업당 평균 2.9회), 농산물직거래 278억원, 농촌체험 38, 마을기증 31 등 물적교류 454억원

○ 범 정부적으로 “여름휴가, 농산어촌 고향에서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05.7~8)하는 등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 전개

\* 7~8월중 농산어촌체험마을 방문객이 전년대비 22% 증가

#### 《1사1촌운동에 관한 주변국의 관심》

◇ 日本經濟新聞, 中國 人民日報·經濟新聞 등 1사1촌 운동 특집 보도

◇ 일본 시즈오카현(靜岡縣)은 사례 조사를 위해 공무원 3인 방한('05.10)

□ '05년까지 총 123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육성(마을당 2억원 지원) 하여 도농교류 기반 확충

○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부처간 실무협의회 운영(4회)을 통해 공동개선방안 마련 등 협조체제 유지

\* 녹색농촌 체험마을 방문객수/관광매출액 : ('04) 928천명, 74억원 → ('05) 994, 111

## 2) '06년도 중점 추진계획

- **농촌체험·휴양기반을 확충하여 도시민 방문확대를 통한 농촌마을 방문객 및 관광매출액 20%증가**를 목표로 추진
  -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확대 : ('05) 47개소 → ('06) 67
  - 농촌체험활동 중 사고발생에 대비한 보험가입료 신규 지원을 통해 **보험가입마을 확대**(지원대상 마을 : '05년 20개 → '06년 65)
    - \* 마을당 1회에 한하여 연간 보험가입료 최대 100만원 지원
  
- **농촌체험마을 프로그램 개발·운영, 마을사무관리 등 농촌체험관광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마을사무장 제도 도입** 추진
  - \* 100개 마을, 월 100만원 지원(국고 50%, 지방비 40%, 마을자부담 10%)
  - 체험마을의 내실있는 운영 지원을 위해 **1인1촌 전문가 컨설팅 시스템 확대**('05 : 40개 마을 → '06 : 50)
  
- **1사 1촌 운동 등 도농교류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기틀 마련**
  - 농림부, 농협, 전경련, 마을대표, 언론계 등으로 **T/F팀 구성·운영**, 1사 1촌 운동의 이론적 토대 및 **단계별 발전전략 마련**(6월)
    - \* 1단계 : 점화 → 2단계 : 도약 → 3단계 : 국민대통합
  - 우수사례집 제작·홍보(4월) 등으로 **국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
    - 고향에서 휴가보내기 캠페인, 마을가꾸기 경진대회 등 추진
  - 도농교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도농교류촉진법안** 제정 추진(12월)



## 다. 농업생산기반 정비 및 농촌환경 개선

### 1) 기본방향 및 추진실적

◇ 자연재해대비 생산기반시설 개보수로 농업인의 안전영농을 도모하고, 낙후지역 생활용수 공급, 수질·토양관리 등 농촌 환경정비를 추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농촌공간을 조성**

□ 용수개발·배수개선 등 **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가뭄과 홍수피해 없는 안전 영농 기반 구축

○ 수리답율 : ('94) 74.2% → ('00) 76.6 → ('05) 78.4(873천ha)

○ 농어촌정비법을 개정, 홍수에 대비한 **대규모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에 필요한 법적근거 확보('05. 8)

□ **낙후된 농촌지역**에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농촌 생활환경개선

\* '94년부터 '05년까지 5,097마을에 생활용수공급(면지역 주민 1,066천명 급수)

### 2) '06년도 중점 추진계획

□ 재해대비 수리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주요시설 개보수** 추진

○ 정밀진단 후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05 : 신규 112지구 → '06 : 84)

○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대비, 물넘이시설 등 저수지 비상시설 **보강**('05 : 20개소 → '06 : 29)

○ 아산호 배수갑문 확장(120m → 290m) 등 하구둑 구조개선 추진

□ **쾌적한 농촌환경유지를 위한 낙후지역 생활용수 공급, 수질관리 및 폐농자재 수거 등 지속추진**

○ 상수도 공급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농촌마을에 양질의 **암반지하수를 개발공급**('05 : 346개소 → '06 : 266, 누계 5,363)

○ 전국 저수지 수질조사 실시, 3개지구 수질개선 추진

○ **폐영농자재 수거비 지원 확대 및 홍보 등을 통한 수거율 향상**

- 폐비닐 수거 : ('05) 26억원, 85천톤 → ('06) 30억원, 100천톤

- 전국 농기계 순회수리봉사기간(연 2회) 등을 이용 수거처리 강화

□ **새만금 방조제공사의 성공적인 마무리 및 친환경적 사업추진**

○ 공사여건이 유리한 **3월중 물막이 공사**(2.7km) 시행

\* '06년중 방조제 보강공사 완료, '07년에 도로포장 등 마무리공사

○ 하수처리장 20개소 등 **환경기초시설을 설치**('07완공)하고, 새만금 지역내 습자식생수로 등 다양한 **친환경공간 조성** 계획 구체화

□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합리적 사업시행 체계 구축**

○ 잦은 설계변경, 사업비 증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 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정('06.1)

- 대상사업 : 사업기간 2년 이상,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188개)

○ 부실설계 방지를 위한 「**설계책임제**」 및 「**감리책임제**」 도입

## 바. 향토산업 육성

### 1) 기본방향 및 추진실적

◇ 지역사회의 향토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1차, 2차, 3차 산업을 육성하여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 추진

- “향토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05.9)하여 향토산업 발전 방향 및 사업 추진방향 정립, 농외취업 활성화 기반 마련
- 지자체는 향토자원조사 및 상품개발에 역점, 중앙정부는 조사된 향토자원의 평가, 로드맵 관리 및 예산지원 등 역할 분담

#### <향토산업 발전방향>

생성단계	조직화단계	클러스터 단계	복합화 단계
향토자원 발굴 및 평가 상품화 개발	생산판매 네트워크 구축 브랜드 도입 및 활용	지역대학, 행정기관, 연구 기관 등과의 연계강화로 역량 결집	관광·서비스와의 연계

- 사업화가 가능한 향토자원을 발굴('05.12), 시범사업 추진
  - 시군별 향토자원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100개의 향토자원 발굴
  - 연구용역 및 「향토자원 평가 및 전문가 위원회」 등의 평가를 거쳐 '07년 시범사업 대상 향토자원 선정(19개)
    - 정책(사업목표의 명확성, 지역사업 파급효과 등), 기술(경쟁 우위도, 지역사회 파급효과), 브랜드(시장성, 인지도 등) 3요소별 평가 실시
- \* 선정된 향토자원 : 통영 동백화장품, 청양 구기자, 함양 죽염 등

## 2) '06년도 중점 추진계획

### □ 선정된 19개 향토자원을 대상으로 '07년 시범사업 준비

-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평가결과 및 사업설명회 개최(1월)
- 시·군별 향토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 농림부에 제출(3월)
  - 기본계획에는 향토자원개발 목표 및 연간 성과지표, 상품화 가능성, 지역내 네트워크 구축방안, 향토자원의 브랜드화 방안 등 포함
- 확정된 시군별 기본계획은 시군 지출한도 범위내에서 '07년 지역특화사업(균특회계) 예산(안)에 반영
  - 1~3년간 총 5~10억원 규모로 국고 50%, 지방비 50% 지원

### □ 향토산업육성 로드맵 수립으로 연차별 사업준비 철저

- 향토자원을 추가 발굴, 향토산업육성심의회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부여한 향토산업육성 로드맵 작성('06 하반기)
- '07년 시범사업 예정인 19개 자원을 제외한 향토자원에 대해서는 시군별 기본계획 수립, 전문기관 평가, 관계부처 의견 수렴, 향토산업 육성심의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로드맵 보완(연중)

\* 향토산업 육성심의회는 향토산업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

- 중장기적으로 로드맵에 수록된 향토자원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지역특화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

### Ⅲ. '06년 역점 추진 혁신과제

1. 지난해 혁신성과 평가 및 시사점

2. '06년 역점 추진 혁신과제

-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
- 재정혁신을 통한 119조원 투융자 사업의 효율성 제고
- 입체적인 정책홍보로 DDA 농업협상의 국민공감대 형성
- 정책품질관리를 통한 농업·농촌 종합대책 보완
- 인사혁신·학습을 통한 농림공직자 경쟁력 제고





# 1. 지난해 혁신성과 평가 및 시사점

## 가. 2005년 혁신추진 및 성과

### □□ 현장농정 추진으로 정책고객과 상호협력 기반 마련

- 정책고객 대상 “우리농업희망찾기” 정책공모 실시(2회) 및 '농정상담역' 제도 도입으로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

\* 응모 248건, 시상 37건, '농가홈닥터제' 등 예산반영 5건

- 장관순회농정토론회(17회), 농림공직자 현장체험(310명), 課의 날 행사(78회) 등으로 도·농·정 거리감 해소 노력

- 민·관 공동의 '농림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하여 농업인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개선

\* 566건 과제발굴 및 축사설치 농지전용신고 상한 완화 등 118건 개선추진

### □□ 고객중심 행정과 청렴도 개선으로 농정 신뢰 제고

- 인터넷 민원처리 확대, 휴대폰 문자·PDA 서비스 등으로 민원처리 시간을 대폭 단축하여 고객서비스를 강화

- 인터넷을 통한 축산물 수입신고율 대폭 확대(0.3% → 98%)

- PDA를 이용한 식물검역업무 현장처리시간 단축(3시간→10분)

\* 민원서비스 만족도 : ('04) 58.4 → ('05) 64.8점

- 부조리유발 제도개선, 부패취약업체 장관친서 발송(22,000개소) 등으로 청렴위 '부처 청렴도 평가'에서 '04년도 17위 ⇨ '05년도 6위로 상승

## □□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정책고객과의 유대감 형성

- PCRМ 고객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클릭농정뉴스, 정책속보 등 실시간으로 농정소식을 전하고, 농림공직자 사이버-농정 혁신교육(10만명) 등으로 On-line 홍보 활성화

\* PCRМ 고객수 : ('04) 49,880명 → ('05) 90,140명(80.7%↑)

\* 클릭농정뉴스(39건), 정책속보(73건), 설문조사(16건), 전자책(41회) 등

- '정보의제관리시스템' 도입 및 '정책발표 사전체크리스트(52건)'에 의한 사전적 홍보로 정책홍보에 대한 신뢰도 및 품질 제고

## □□ 성과·고객 중심의 조직관리 및 평가체계 구축

- 농정현안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형 부분팀제를 도입하고, 5·6급 계층제 폐지를 통해 의사결정단계 축소

\* 자연순환농업팀, 성과관리팀, 쌀비준대책팀 등 6개

- 조직목표를 달성하고 개인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농림부 특성을 반영한 통합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

- 프로세스 평가도 중요한 농림사업 특성을 감안, 균형성과관리(BSC)와 직무프로세스관리(BPM)를 연계한 성과측정모델 개발

- 정책고객이 우리부의 주요정책(27개과제)을 직접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고객중심의 평가체계 확립

\* 주요정책 고객만족도 : ('04) 48.3 → ('05) 51.6점



## 나. 평가결과 및 향후과제

### □ 평가결과

- ◇ 혁신활동이 혁신인사담당관실에서 전 사업부서·소속기관까지 확산되어 고객 편의 및 만족도 향상(혁신3단계→4단계)
- ◇ 그러나, 주요혁신과제인 성과관리 및 정책홍보관리에 있어 정책 성공모델이나 성과창출에는 미흡

- 조직·성과관리는 조직구성원 공감대 부족, 성과평가제도 미실시 등으로 당초계획보다 부진
- 정책홍보중 쌀협상 비준·수확기 쌀값 대책분야는 마을 이장을 통한 안내방송, 신문광고 등 오프라인 홍보는 일정 수준 성과를 거두었으나, 온라인 홍보는 미흡
- 학습포럼, 학습동아리(16개) 등 혁신서포터즈가 결성·확산 되었으나, 혁신문화 정착까지는 이르지 못함

### □ 시사점 및 향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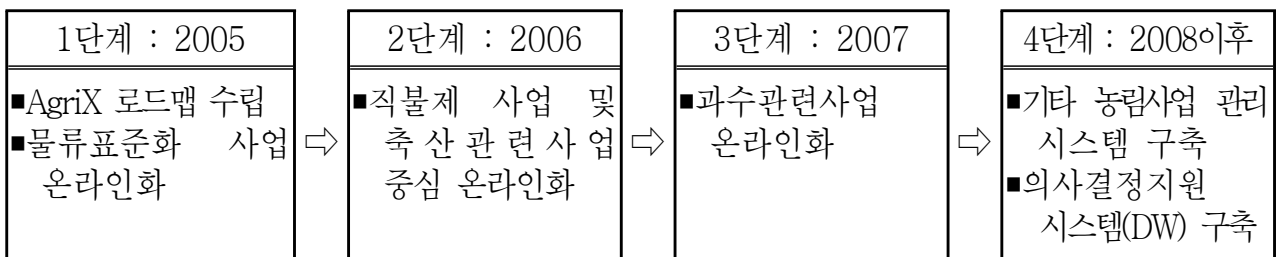
- 혁신과제와 농업정책의 연계를 통해 국민들이 공감하고 혁신 성과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과제를 선정·추진
- 학습동아리·포럼 등의 혁신서포터즈를 활성화하여 혁신과제의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혁신역량 강화
- 농업·농촌 종합대책 보완, DDA 등 농정현안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입체적인 On-line 농정홍보 시스템 구축

## 2. '06년 역점 추진 혁신과제

### □□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

#### 가. 기본방향

- 농림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신청단계부터 집행·사후관리 까지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온라인화 추진
  - 신청서식 표준화, 업무절차 개선 등 농림사업 BPR(업무재 설계) 추진, BPR 결과를 반영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
  - AgriX 사업팀 설치 및 근거법령 마련, 교육 등 추진체계 구축
- 통합정보시스템 로드맵('05. 4월)수립, 직불제 및 축산관련 사업을 대상으로 구축하고, '07년에는 과수 등으로 확대



#### 나. '06년 중점 추진계획

- 농가과급 효과가 큰 6개 직불제사업(100만호) AgriX화 추진
  - BPR 추진(1월) 및 시스템구축(5월), 하반기 시범운영
    - \* 쌀소득보전·친환경농업·친환경축산·조건불리지역·경관보전·경영이양

- 채소 및 과실수급안정사업 등 **농협 사업정보를 AgriX와 연계하여 출하동향 등 진행상황 모니터링**
  - 수급안정사업(4개) 통폐합과 연계, AgriX 시스템 구축
- 금년 하반기에는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등 **정보화 효과가 큰 사업(10여개) 중심으로 축산분야 사업 온라인화 추진('06.11)**
  - 대상사업 선정('06.2) 및 BPR('06.3), 시스템 구축('06.4~11)
  - 축산분야 AgriX 사업대상 농가와 축산업등록 농가(5만)를 중심으로 **축산농가DB를 구축하여 고객서비스 자료로 활용**
- AgriX 조기정착을 위해 **근거법령, 상설교육 등 추진체계 마련**
  - 농업·농촌기본법에 AgriX **관련근거 마련**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정보화담당관실과 사업담당과가 포함된 사업 팀 설치(상반기)**
  - 시도·시군 공무원, 농업인, 농협, 농촌공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상시교육 및 e-mail·SMS 등 다양한 홍보실시(년중)**
  - AgriX에 일선 업무담당자, 농업인 등의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업무담당자에 바란다” 코너를 개설·운영('06.5)**

#### AgriX시스템 구축 후 달라지는 점

- (농업인) 사업신청시 **첨부서류의 대폭 생략**으로 편의 확대
- (일선공무원) 내·외부 **자동보고시스템** 구축으로 업무경감
- (본부담당자) **사업진행상황의 실시간 파악 및 분석 가능**

## □□ 재정혁신을 통한 119조원 투융자 사업의 효율성 제고

### 가. 기본방향

-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를 조기 정착시켜 119조원 투융자 사업 예산편성시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
  - 전년 답습식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사업평가와 예산편성을 연계시켜 자율적인 세출 구조조정 강력 추진
  - 자체 심의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정책고객의 의견수렴 제도화
- 농림사업 자율평가 기능을 강화하여 투융자 효율성 제고
  -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투융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농정평가체계 개편

### 나. '06년 중점 추진계획

-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의 정착
  - 농림사업의 세출구조조정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 재량적 지출에 대한 의무적 세출구조조정 목표(5%) 설정 운영
    - 사업평가를 통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일몰제 적극 추진
    - 불필요한 총사업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총사업비심의위원회」 구성·운영(4월)
  - 주요사업·신규사업은 중기재정운용계획 작성 전단계에서 기본계획을 미리 수립(1월)

○ 농림예산 편성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체 예산심의 기능강화 및 의견수렴 절차 제도화

- 예산심의위원회, 예산자문위원회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 농림사업평가 결과를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 활용

○ '05년 주요사업(113개)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3월)하고, 매년 전체사업의 1/3에 대해서는 현장실사를 통한 집중점검 병행 실시

- 평가결과, 효과가 없는 사업예산은 통폐합 및 축소 조정

○ 주요성과지표(KPI) 중심의 종합평가제 도입(9월)

- 사업별 평가방식에서 주요 성과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사업, 제도, 정책 등)을 종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

\* 예) 친환경 농산물 생산비중 평가시 친환경직불제·지구조성사업, 친환경 농산물인증제도, 소비자 수요 및 신뢰도 등 관련사항을 평가

- 친환경 농산물 생산비중 성과지표 등 시범평가 후 단계적 확대

□ 지방자치단체 농정평가체계를 개편, 예산편성과의 연계 강화

○ 기존 지자체별 종합평가와 함께 사업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을 도입, 농업인후계자사업 시범평가(8월)

- 지자체 추진 우수 농림사업에 대한 예산반영 등 피드백 강화

○ 우수 사례 발표회 등을 통해 타 지방자치단체에 확산

---

## □□ 입체적인 정책홍보로 DDA 농업협상의 국민 공감대 형성

---

### 가. 기본방향

- DDA 협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농업인 및 이해관계인의 불신과 오해를 줄여 사회적 갈등 최소화
  - 농민단체, 언론, 학계 등 정책고객 그룹별 차별화된 홍보 실시
  - 협상단계마다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설명·홍보하고 이해당사자에게 충분한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 마련
- DDA 농업협상에 대한 정책발표사전점검시스템 운영 및 입체적인 On/Off-line 홍보로 홍보품질 제고

### 나. '06년도 중점 추진계획

- DDA농업협상 홍보 종합대책 수립(1월)·추진
  - 본부, 소속기관 등 전농림공직자(4천명)를 DDA홍보 요원화
    - 지자체, 농협직원 등을 DDA 협상 및 대책 내용을 집중 교육
  - DDA 홍보 전담팀 구성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 외교통상부·재경부·국정홍보처·대외경제위원회 등 **관련부처 및 기관과 협조**하여 DDA 타분야 협상홍보와 병행 홍보실시
    - 국회 및 당과 **협의채널**을 구축하여 협상이슈에 대한 이해 제고

○ On/Off-line을 통한 DDA협상 홍보 실시

- 농가현장체험, 현장상담역(1,000여 농가),과의날행사 등을 이용  
**현장농업인과의 밀착 홍보 추진**
- 설명회, 기자브리핑 등을 통해 협상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
- 농림부 홈페이지 및 인기포털 토론방 개설, PCRM 고객 등과  
**On-line을 통한 실시간 쌍방향 홍보**

□ DDA 협상단계별 기획홍보를 통해 여론을 주도

○ 세부원칙 협상단계('06.4월말까지)

- 농업협상과정에서 **농업인단체 등 참여**를 정례화·공식화
- 세부원칙 협상 동향과 대응상황을 **정확히 전달**하는데 주력
- 관세감축을 최소화, 민간품목확대 등 **우리관심사항 중점 홍보**

○ 이행계획서 작성단계('06.5월 ~ '06.7월말까지)

- 세부원칙 협상결과와 정부의 대응전략 홍보에 주력
- 관세인하 등 이행계획 작성과정에서 예상되는 품목단체간 **갈등조정**
- 공무원·유관기관·이장·언론 등 **여론 주도층** 지지여론 선점

○ 이행계획서 검증단계('06.8월 ~ 연말까지)

- **국회비준에 대비**하여 협상결과에 대한 지지 선점을 위해  
홍보대상별로 대대적 홍보 전개
- 협상결과 이행에 따른 추가대책을 농업·농촌 종합대책 보완시 반영

---

## □□ 정책품질관리를 통한 농업·농촌 종합대책 보완

---

### 가. 기본방향

- 쌀협상 비준과정에서 제기된 「근본적 농업회생대책」 수립 요구에 대응하여 **농업·농촌종합대책 점검·조정**
  - 정책형성·홍보·집행·평가의 전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정책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업·농촌정책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제고
  - 쌀·과수대책 중심의 **단기적인 보완대책**을 우선 수립하고(2월), **증장기과제**는 연중 지속 점검하여 보완대책 수립(12월)
- 단계별·이슈별로 **실시간으로 추진상황**을 공개하고 갈등관리를 통해 최대한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보완대책 신뢰도 제고

### 나. '06년 중점 추진계획

#### □ 정책형성단계

- 농업인단체·전문가 참여를 통해 정책고객 신뢰도 제고
  - 「농림부-농업인단체」간 실무협의체를 구성(식량, 유통, 축산 등 6개 분야)하여 농업계 제안과제 도출 및 검토
  - 농업인단체 간담회, 분야별 전문가 워크숍 등을 통해 **의견 수렴**
  - 중요한 국민적 관심사항에 대해선 **공개토론회, 공청회 개최**



## ○ 관련기관 및 3자 협의기구를 통한 합의 도출

-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전협의 추진
- 수시로 당정협의를 추진하고, 정치권·정부·농업인단체가 참여하는 3자 협의기구도 구성(당과 협의사항)

## ○ 이슈별 원활한 의견제시와 토론 활성화를 위한 On/Off-line 홍보

- 농림부 홈페이지·인기포털에 알림방, 토론방 및 블로그 개설, 국정브리핑에 메뉴 개설, PCRM고객 대상 의견수렴 등(1월)
- 주요 이슈에 대한 홍보물 제작 배포, 보도자료, 브리핑자료 제공, 주요 농업전문 신문에 기획기사 및 지상중계 등

## □ 정책홍보단계

### ○ 종합대책 보완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홍보

- 시·도별 순회 설명회, 전문지 기획기사 등 Off-line 홍보와 PCRM 고객(90천명) 등을 대상 On-line 홍보 병행

## □ 정책집행단계

- 입안된 정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과 투융자계획을 면밀히 수립, 농업현장에서 정책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추진('07년이후)

## □ 정책평가 및 환류단계

- 세부추진계획의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보완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

## □□ 인사혁신·학습을 통한 농림공직자 경쟁력 제고

---

### 가. 기본방향

- 농림공직자 채용·전보·승진·교육분야 인사혁신으로 조직 및 농업의 경쟁력 제고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채용 및 농업관련 공기업 등 유관기관과의 교류 활성화 추진
  - 성과관리시스템을 조기에 정착, 인사혁신에 활용
- 정부인사혁신 매뉴얼 적용 및 농림부 특성을 반영, 고유한 인사혁신 성공모델 창출
  - 혁신포럼, 동아리, 현장체험 등과 연계하여 농림부 고유의 상시학습 체계 마련

### 나. '06년 중점추진 계획

- 채용분야의 다양화·개방화를 통한 조직 활력 증진
  - 변호사(2월), 식품전문가(5월) 등 전문가 특별채용 실시
    - 농림부 및 소속기관 복수직 확대를 통하여 우수전문가 보직 확대
  - 농협, 투자기관, 농업인단체 등 농업관련 유관기관과 상호 파견제 확대 실시(2월)
    - 농림부, 농업관련기관과의 인사협의회 구성·운영(2월)

## □ 경력관리제·직위공모제 및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전보·승진

- 경력관리제도 운영 매뉴얼(CDP)을 적용하여 농림공직자 경력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하반기)

\* 경력관리분야 : 농정·농촌, 국제, 식량, 축산, 유통

- 직위공모제 대상 직위를 혁신인사기획관, 인사담당에서 국내·외 파견관 및 팀장 등으로 확대

- 다면평가 중심에서 외부전문가 포함 심사위원회 심사방식으로 개선

- On-line을 통한 정기적인 다면평가(연2회) 및 성과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직무성과형 인사 실시

- 성과관리팀을 신설하고, 국·과장 성과 평가 실시(11월)

## □ 상시 학습체계 구축으로 성공모델 창출

- 매주 수요일을 '학습의 날'로 지정, 학습동아리를 활성화 (16→20개)하고 'GREEN 아카데미' 강좌를 개설(2월), 전문 지식 습득

- GREEN 아카데미 강좌 : 농림법규, 농업회계, 농업영어 등

- 농림공직자 '현장체험(연1회)', '과의날(반기별1회)' 행사, 혁신 포럼 활성화로 문제해결방안 도출 및 성공모델 창출

- 실·국장 및 과장급 이상의 혁신포럼, 학습 동아리 참여 의무화

\* 혁신포럼 : 인사혁신포럼, 선도농가 학습포럼 등

- 학습참여자 교육점수 부여 및 해외시찰 등 인센티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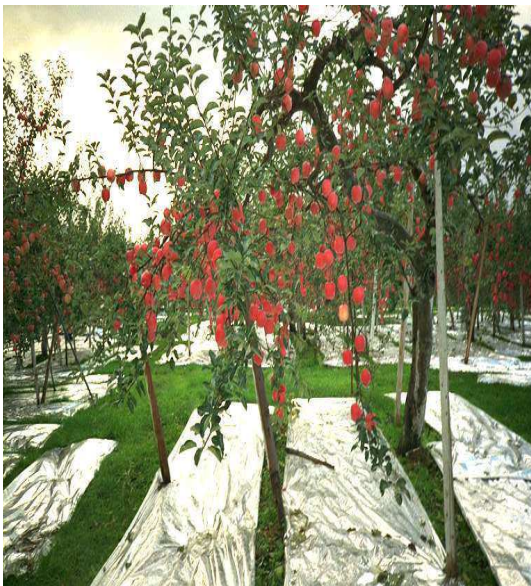


---

## IV. 성과측정 추진 체계

---

1. 정책성과 측정 체계
2. 혁신과제 측정 체계





# 1. 정책성과 측정체계

## □□ 정책목표 : 농업개방 확대 적극 대응

성과지표	성과지표 내용	당년도 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①DDA 협상에 체계적으로 대응	○전문가의 협상결과에 대한 만족도  ○농업인 단체 및 기자 간담회·설명회·토론회 등 실적	○만족도 : 50%  ○간담회 : 50회 이상 개최 * (05) 45회	○협상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DDA 협상 관련 농업인 단체 및 기자와의 간담회 실적
②FTA 협상에 체계적으로 대응	○협상전문가의 협상 결과에 대한 만족도  ○농업인 단체와의 간담회 실적	○만족도 : 50%  ○품목단체협의회 : 6회 이상 개최	○협상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DDA 협상 관련 농업인 단체와의 간담회 실적
③농업여건변화에 대응하는 농업·농촌종합대책 점검 및 조정	○농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점검 및 조정작업을 추진하고 보완대책 마련	○농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단기 보완대책(2월) 및 중장기 보완대책(12월) 수립	○농업인단체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및 간담회 실적 등을 중심으로 정성평가  ○대책수립 여부로 평가

## □□ 정책목표 : 전문경영체 육성 및 소득·경영안정

성과지표	성과지표 내용	당년도 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①전문농업경영체 농업생산비율	○쌀 전업농의 생산 점유비 : (쌀 전업농 농지면적/전체농지 면적)×100	○'06년 목표 : 32% * ('00) 18 → ('05) 30 → ( '13) 50	○한국농촌공사의 영농 규모화사업 추진실적 및 효과분석 보고서로 평가
	○축산 전업농의 사육 비율 : (전업농 사육두수/ 전체 사육두수) ×100	○'06년 목표 : 75% * ('00) 59.6 → ('05) 73.4 → ('13) 85.0	○농관원이 분기별로 발표하는 가축통계조사 결과로 평가
	○과수 전업농의 생산 비율 : (전업농 과수 면적×10a당수량/전체 과실생산량)×100	○'06년 목표 : 41.5% * ('03) 39.8 → ('05) 40.7 → ('13) 51.0	○한국농촌공사의 과원 영농규모화 사업추진 실적 보고서로 평가
②전문농업경영체 컨설팅 지원율 및 만족도	○컨설팅 지원율 : (지원 농가/희망농가)×100  ○컨설팅 만족도 : (만족 농가/지원농가)×100	○'06년 목표 - 컨설팅지원율: 60.0% * ('04)79.6% → ('05)58.4 → ('13)70.0 - 컨설팅만족도: 78% * ('03)72% → ('04)78	○시·도의 실적보고서로 평가
③창업농 영농 정착율	○영농정착율 : (최근 3 년간 창업농 수 - 영농 미종사자 수)/3년간 창업농 지원자수	○'06년 목표 : 85% * ('03) 81 → ('05P) 84	○매년 3월말 사도의 조사보고서로 평가



성과지표	성과지표 내용	당년도 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④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건전화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적립비율 : (적립금액/적립필요 금액)×100	○'06년 목표 : 65% * ('04) 56% → ('05) 61 → ('08) 95 → ('09) 100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결산보고서 결산 결과
⑤농업투융자중 직불투융자 비중 확대	○직불투융자 비중 : (직불투융자/농업투융자)×100	○'06년 목표 : 23.4% * ('03) 9.8 → ('05) 13.6 → ('06) 23.4	○농림예산 및 투융자는 당해연도 12월에 평가
⑥농지매입을 통한 경영회생 지원 시범사업 시행	○「한국농촌공사및 농지관리기금법」 하위법령 개정 ○농지매입경영회생 시범사업 추진 실적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하위법령 개정 ○시범추진 - 422억원(277ha)	○관련규정 개정여부로 평가 ○한국농촌공사의 시범사업추진실적 보고서로 평가
⑦재해보험 가입율, 가입금액	○재해보험 가입율 : 가입면적/대상면적	○'06년 목표 : 24.3% * ('02) 18.3 → ('04) 18.2 → ('05) 23.4 → ('07) 25.2	○농협중앙회 재해보험 가입실적 집계결과
	○재해보험 가입금액 : Σ 개별 가입농가의 가입금액	○'06년 목표 : 5,665억원 * ('02) 271 → ('04) 513 → ('05) 550 → ('07) 584	○농협중앙회 재해보험 가입실적 집계결과
⑧가축공제 가입율, 가입금액	○가축공제 가입율 : (총 가입두수/가입 대상 15개축종 전체 사육두수)×100	○'06년 목표 : 33.6% * ('02) 10.6 → ('04) 24.1 → ('05) 33.3 → ('07) 37.0	○가축통계자료 및 농협 중앙회 가축공제 가입 실적 집계결과
	○가축공제 가입금액 : Σ 개별 가입실적	○'06년 목표 : 17,472억원 * ('02) 7,713 → ('04) 10,227 → ('05) 12,421 → ('07) 21,236	○가축통계자료 및 농협 중앙회 가축공제 가입 실적 집계결과

## □□ 정책목표 : 쌀 산업의 체질강화

성과지표	성과지표 내용	당년도 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① 공공비축제 및 쌀소득보전직불제 개선	○공공비축제 및 쌀소득보전직불제 개선 여부	○공공비축제 및 쌀소득보전직불제 개선	○공공비축제 및 쌀소득보전직불제 개선여부
② 정부 관리 양곡(쌀) 재고량	○양곡년도말 정부보유 양곡(쌀) 재고량	○양곡년도말 재고를 500~700만석 수준으로 관리 * '05 정부양곡 재고 419만석(전망)	○정부양곡 정기재고 자체 조사 자료 활용
③ 쌀 재고 처리량	○쌀 적정 수급관리를 위해 공급한 주정용 가공용 쌀의 양	○'06년 목표: 195만석 * ('05) 132만석	○정부양곡 매출현황자료
④ 수입쌀 관리 방안 마련 및 이행 여부	○'05년 물량의 시판완료 및 '06년 도입방안 마련	○'05년 물량의 시판완료 및 '06년 도입방안 마련 * '05년 물량: 225,575톤 * '06년 물량: 245,922톤	○농수산물유통공사 판매 실적 및 '06년도 도입방안 마련 여부
⑤ RPC 쌀 매입량 비중	○RPC매입량 비중 : $(RPC\text{취급물량}/\text{당년도 생산량} \times \text{유통비율}(73\%)) \times 100$	○'06년 목표 : 56.3% * ('00) 44.4 → ('05) 54.5 → ('13) 70.0	○시도가 RPC별 벼매입실적을 파악하여 보고한 자료 및 농관원의 RPC별 원료벼 매입실적으로 평가
⑥ RPC 계약재배면적 및 공동브랜드 개발 실적	○RPC계약재배면적 ○공동브랜드 개발 실적	○'06년 목표 - 계약재배면적: 350천ha * ('05) 322 → ('07) 400 - 공동브랜드 : 5개 * ('05) 4 → ('07) 10	○농협 및 민간RPC 계약재배면적 조사 결과(연도말) ○통합RPC 공동브랜드 개발 실적
⑦ RPC 쌀 품질지수	○쌀 품질지수 : $[\text{식미}(\%) + \text{품위}(\%) + \text{품종순도}(\%) + \text{소비자만족도}(\%)] / 4$	○'06년 목표 : 76.7% * ('03) 75.0% → ('04) 77.8 → ('05) 77.5	○소비자단체 주관 시중유통 브랜드쌀 평가 결과

## □□ 정책목표 : 농축산물 유통 효율화 및 소비촉진

성과지표	성과지표 내용	당년도 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①과수채소 브랜드 육성	○과수채소 브랜드육성 수립 ○브랜드경영지침 제정 품목수	○'06년 목표 -브랜드 육성 계획 수립 -주요 6개 품목 브랜드 경영지침 제정	○브랜드육성계획 수립 및 경영지침 제정 여부로 평가
②산지유통전문조직 점유율	○산지유통전문조직 점유율 : $(\sum \text{상위} 10\% \text{ 전문 조직 매출} / \sum \text{전체 전문 조직 매출}) \times 100$	○'06년 목표: 26.2% * ('03) 22.9 → ('05) 25.2 → ('07) 27.2%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산지유통종합평가 조사결과로 평가
③브랜드경영체 사육 비율	○브랜드경영체 사육비율 $(\text{브랜드경영체사육두수} / \text{전체사육두수}) \times 100$	○'06 목표 : 한우 32%, 돼지 50% * 한우: ('03) 17.4 → ('05) 29.5 → ('13) 50 * 돼지: ('03) 41.4 → ('05) 47.7 → ('13) 70	○가축통계조사 전체사육두수 대비 사도에서 보고한 브랜드경영체 사육두수
④농산물 소모성 물류비 절감	○소모성 물류비 비율: $[(\text{톤당운송비} + \text{하역비} + \text{감모} \cdot \text{청소비})] / \text{톤당 물류비} \times 100$ * 대상 :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사과, 배, 포도, 감귤	○'06년 목표 : 53.9% * ('98) 67.4 → ('00) 58.7 → ('05) 55.0 → ('07) 53.0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주요 농산물유통실태 조사한 결과로 평가

성과지표	성과지표 내용	당년도 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⑤농산물 표준규격 출하율	○ $\Sigma$ [(부류별 평균표준 규격출하율)/부류수 (6개)]  -대상(6부류 50품목): 과실류,과채류,조미채류, 엽근채류,서류,화훼류	○'06년 목표 : 55.5% * ('05) 54.0 → ('07) 56.5%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주요 농산물유통실태 조사결과로 평가
⑥농식품 수출실적	○연간 수출액	○'06년 목표 : 2,400백만불 * ('05) 2,224 → ('13) 5,000	○수출실적은 관세청의 농식품 수출통계 자료로 평가
⑦수출원예전문단지 수출확대	○농식품수출 실적중 수 출원예전문단지 수출 비중	○'06년 목표 : 22.0% * ('05) 19.2 → ('07) 25 %	○수출원예전문단지실태 조사(농유공, 지자체)
⑧국산 농축산물 소비자 만족도 조사	○소비자 만족도 : 설문 조사(5개 주요품목 및 5개 항목을 대상)	○'06년 목표 : 52% * ('05) 50.5 → ('07) 54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설문조사 결과
⑨가공식품 규격 제·개정	○규격 제·개정실적 (전통규격, KS규격, 심사기준)	○'06년 목표 -제정 : 22건 -개정 : 35건 * ('13) 제정 31, 개정 42건	○규격 제·개정 완료 여부
⑩자조금 단체 생산 점유비율	○ $\Sigma$ [(자조금단체 생산액 /품목전체생산액×100 %)] /10년 목표자조금 품목수	○'06년 목표 : 채소32%, 과수52, 축산43 * 채소 : ('05)28→('07)35 * 과수 : ('05)48→('07)56 * 축산 : ('05)37→('07)45	○자조금단체의 생산 점유비율으로 평가

## □□ 정책목표 : 소비자 지향적 농식품 안전 관리

성과지표	성과지표 내용	당년도 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① 농식품 안전성 조사 부적합율	○농산물 안전성 조사 부적합율 : (부적합 농산물 건수/전체 안전성 조사건수)×100	○'06년 목표 : 1.2% * ('03) 1.5% → ('05) 1.2 → ('08) 1.1	○농산물은 농관원의 농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로 평가(연도말)
	○축산물 안전성 조사 잔류물질 및 미생물 위반율 : (위반건수/잔류물질 등 검사 건수)×100	○'06년 목표 - 잔류물질 : 0.24% - 미생물 : 0.43% * 잔류물질 : ('00) 0.11 → ('07) 0.24 * 미생물 : ('00) 0.16 → ('07) 0.42	○매년 3/4분기까지의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사결과로 평가 * 주요국 잔류물질 위반율('01) : 미국 0.73, 영국 0.24, 호주 0.07, 일본 0.02
② 사육단계 HACCP 시범사업 추진	○사육단계 HACCP시범 사업 참여농가수	○'06 목표 : 10농가 * ('07) 200 → ('10) 1,000	○검역원 HACCP 지정 내용 취합
③ 농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율	○원산지 표시 이행을 : 원산지표시 이행업소 /원산지표시 이행 대상업소	○'06년 목표: 97.4% * ('00) 94.9 → ('05) 96.5	○농관원에서 전국의 유통·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표본조사
④ 친환경 인증 농산물 비율	○친환경농산물 생산 비중 : (당해년도 친환경 인증물량/전체농산물 생산량)×100	○'06년 목표 : 5.0% * ('04) 2.5 → ('05) 3.5 → ('07) 6.3	○농관원 등의 인증실적이 집계되면 농산물 총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평가
⑤ 화학비료사용량	○단위면적당 화학비료 사용량 : 화학비료 판매량/재배면적	○'06년 목표: 350kg/ha * ('05) 374 → ('07) 330	○화학비료 판매량이 집계되면 재배면적을 적용하여 단위면적당 사용량을 산출하여 평가

성과지표	성과지표 내용	당년도 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⑥쇠고기 이력 추적 시스템 시범사업 참여율	○시범사업 참여율 : 시범사업 참여두수/전체사육두수)×100	○'06년 목표 : 5.5% (100천두) * ('04) 2.4(40천두) → ('08) 78(1,400천두)	○연말 시범사업 자체 평가시 실적 집계
⑦ 해외여행객 휴대육류 검색 건수	○국제공항,항만에서 해외여행객의 불법 휴대 축산물 검색 건수	○'06년 목표: 21,000건 * ('00) 5,053 → ('05) 20,000	○수과원의 실적으로 평가
⑧돼지콜레라 및 닭뉴캐슬병 예방 접종 면역형성률	○돼지 콜레라 면역형성률 : (면역형성 두수/검사두수)×100	○'06년 목표: 95.5% * ('00) 96.1 → ('04) 95.4	○수과원에서 취합한 실적으로 평가
	○뉴캐슬병 예방접종율 : (항체양성농가수/검사 농가수) ×100	○'06년 목표 : 88% * ('00) 64.5 → ('04) 85.7	○수과원에서 취합한 실적으로 평가

## □□ 정책목표 : 도시민과 상생하는 복지농촌조성

성과지표	성과지표 내용	당년도 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①농촌마을 종합 개발사업 추진 실적	○사업단계별 추진실적 - 예비타당성조사 - 기본계획수립 - 시행계획수립 및 공사 착수 - 공사진행	○'06년도 목표 - 예비타당성조사 : 30권역 - 기본계획수립 : 20권역 - 시행계획수립 및 공사 착수 : 20권역 - 공사진행 : 36권역	○'06년도 추진목표대비 추진실적을 평가(12월)
②전원마을 도시민 유치율	○도시민 유치율 : (전원 마을 도시민 입주자/총 입주자)×100	○'06년 목표: 50% (250가구) * 25지구 × 20가구 × 50% = 250가구	○'06착수지구를 대상으로 도시민 입주자모집 실적 으로 평가(12월)
③농촌복지 지원액 증가율	○농촌복지 지원액 증가율 : [(당해년도 지원액- 전년도 지원액)/전년도 지원액] ×100	○'06년 목표 : 5.2% (1인당지원액 :6,331천원) * ('05)6.0/6,016→('07)5.0/6,648	○국민건강관리공단, 농협, 보건복지부에서 작성한 통계자료로 평가(12월)
④녹색농촌체험 마을당 방문객수 매출액 증가율	○ 방문객 수 증가율 : [(당해년도 실적-전년도 실적)/전년도 실적] ×100	○'06년 목표: 전년대비 20% * ('05) 994천명 → ('06) 1,266	○자자체(시군)가 행정조사를 실시한 자료로 평가(12월)
	○매출액 증가율 : [(당해 년도실적-전년도실적)/ 전년도실적] ×100	○'06년 목표: 전년대비 20% * ('05) 111억원 → ('06) 140	○자자체(시군)가 행정조사를 실시한 자료로 평가(12월)

성과지표	성과지표 내용	당년도 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⑤수리답 비율	○수리답율(%)=(수리답 면적/전체논면적)×100	○'06년목표 : 78.8% * ('03) 77.8 → ('05) 78.4 → ('13) 81.8	○각 시도 및 한국농촌공사의 연도말 조사 결과로 평가
⑥침수대비 배수 개선답율	○배수개선답율(%)=(배수 개선완료면적/배수 개선대상면적)×100	○'06년 목표 : 71.3% * ('01) 56.9 → ('05) 68.9 → ('07) 73.4	○각 시도 및 한국농촌공사의 연도말 조사 결과로 평가
⑦농어촌마을 상수도 수혜인원 및 보급율	○수혜인원 : 전년도까지 수혜인원+ 당해년도 신규 수혜인원  ○보급율 : 당해연도 누계수혜인원/면지역 총인구(5,438천명)	○'06년 목표 - 수혜인원 : 1,977천명 * ('05) 1,943천명 → ('07) 2,016 - 상수도보급율 : 36.4% * ('05) 35.7% → ('07) 37.1	○자자체(시군)가 행정조사를 실시한 자료로 평가
⑧향토산업 육성	○우수한 향토자원의 발굴 및 지원	○'06년목표 : 향토자원의 발굴(19개) 및 기본계획 수립  * ('07) 30개 → ('08) 45	○향토자원 발굴 실적, 기본계획수립 및 예산 반영 실적으로 평가(12월)



## 2. 혁신과제 측정 체계

### □□ 혁신과제 : AgriX를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

성과지표명	성과지표 내용	당년도 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①온라인화 고객 만족도	○참여사업 관련 고객 (시도, 시군, 농업인) 만족도	○60% 이상 만족	○직불제사업 대상 고객 (시도, 시군 농업인) 표본 추출 ○업무담당자 면접, PCRM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업 마무리 단계(연말)에 평가
②업무 처리시간 단축	○ [온라인방식 소요 시간/오프라인방식 소요시간] × 100	○20%이상 단축	○참여 대상사업 중 일부 선정 ○업무처리단계별(농업인, 시군, 시도) 면접 및 설문 등을 통한 자체조사결과로 평가

### □□ 혁신과제 : 재정혁신을 통한 119조 투융자 사업의 효율성 제고

성과지표명	성과지표 내용	당년도 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①농림사업에 주요 성과지표(KPI) 중심의 종합평가 방식 시범 도입	○농림사업에 KPI 중심의 종합평가방식 시범도입	○농림사업과 전사적 차원의 주요 KPI 를 연계한 종합평가 평가 시범추진	○농림사업에 주요 성과지표 (KPI)중심의 종합평가 방식 시범 도입 여부
②예산편성시 세출 구조조정 추진	○농업·농촌종합대책 투융자 재원의 차질 없는 확보를 위해 자체 세출구조조정 추진	○2006년도 재량적 지출예산 대비 5% 이상 감축	○ 2007년도 예산편성시 재량적 지출에 대한 세출구조조정 추진실적 평가(9월)

□□ 혁신과제 : 입체적인 정책홍보로 DDA 농업협상의 국민 공감대 형성

성과지표명	성과지표 내용	당년도 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①DDA 농업협상 단계별 기획 홍보 추진	○DDA농업협상 단계별 (협상, 이행계획서 작성 및 검증단계)로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홍보 추진 여부	○단계별 기획홍보 방안마련 및 단계별 홍보 추진 ○추진실적 : 90%이상	○단계별 기획홍보 방안 마련 여부 ○단계별 추진계획대비 추진 실적조사(분기별)
②DDA 농업협상 대국민 인지도 제고	○On/Off-line 등 입체적인 홍보기법을 통한 대국민 홍보로 국민의 DDA 농업협상 인지도를 높임	○상반기 인지도 조사결과 대비 하반기 5%이상 제고	○상·하반기 DDA 농업협상 대국민 인지도를 조사

□□ 혁신과제 : 정책품질관리를 통한 농업·농촌 종합대책 보완

성과지표명	성과지표 내용	당년도 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①농업농촌종합대책 보완시 농업계 의견 수렴	○농업·농촌 종합대책 보완대책 마련시 농업계 의견 수렴 여부	○농업계 의견 수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농림부와 농업인 단체간 실무협의체 구성 여부 및 운영실적(간담회, 워크숍)
②종합대책 보완에 대한 고객 만족도	○농업·농촌 종합대책 보완대책에 대한 정책 고객의 고객만족도 조사	○고객만족도 : 50% 이상	○전문 조사업체를 활용한 고객만족도 조사(12월)

□□ 혁신과제 : 인사혁신·학습을 통한 농림공직자 경쟁력 제고

성과지표명	성과지표 내용	당년도 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①농업관련 유관 기관과 인적 교류 확대	○농협·투자기관·민간 기업 등 농업관련 기관과의 인적교류로 상호 업무협력체계를 강화, 상호 이해폭 및 공직자 경쟁력 제고	○'05년 실적(2명) 대비 100%이상 교류 확대	○농업관련기관과 인적 교류 실적 점검(연말)
②농림공직자의 현장체험 실적	○농림공직자의 현장 이해도를 증진하고 농업인과의 유대를 통한 농업정책의 현장 정착을 제고	○고위 공무원 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농림부소속 공무원 95% 이행	○농림공직자 현장체험 실적 점검(연말)



---

## V.    마    무    리

---

- ◇ 농림부 공직자들은 “한국 농업을 세계 수준의 선진 농업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와 자신감을 가지고, 개방화 시대에 농업·농촌의 희망과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 ① 우리 농업이 변화하는 국제경쟁 추세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시장지향적인 농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 ②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에 합당한 소득안정장치를 마련하여 농업인들에게 제시하면서,
  - ③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농정혁신 과정의 어려움을 이해·설득시켜 농업인 스스로의 변화와 혁신을 유도
  
- ◇ 또한, 국경 없는 열린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스스로 우리 농산물과 농촌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식품 생산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국토가꾸기에 농업계가 앞장섬으로써
  - 도시와 농촌, 소비자와 농업인이 더불어 발전해 나가는 균형발전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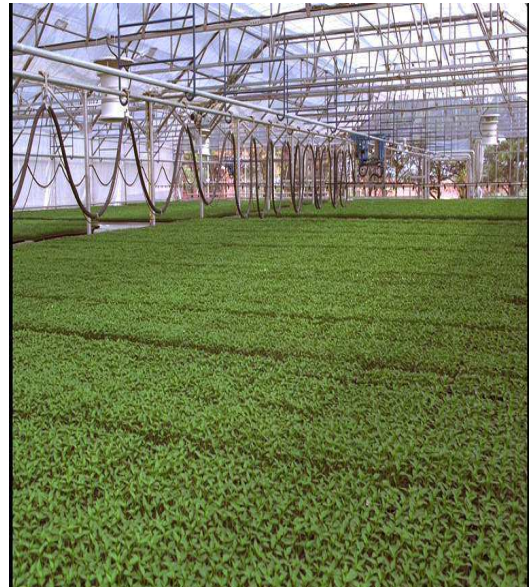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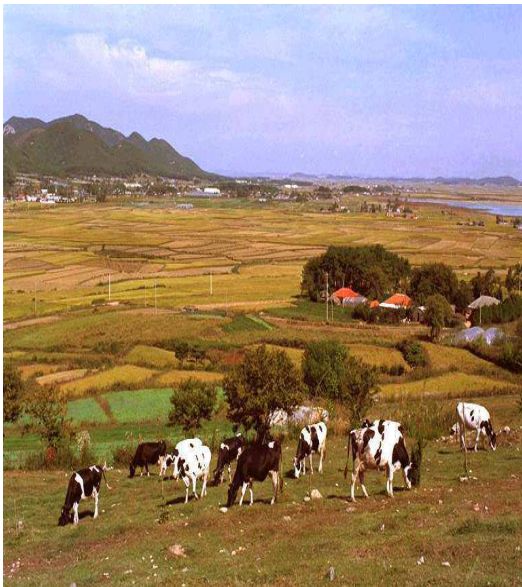


---

# 붙임 자료

---

1. 신규발굴·시행 정책 및 종료·폐기 정책
2. 성과지표별 세부내역







## 주요 신규 발굴·시행정책 및 종료·폐기정책

### 1. 신규 발굴·시행정책

대 상 정 책	추진동향 및 계획	비 고
①농지은행제도와 농지매입 경영 회생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DDA·쌀협상 이후 농지시장의 안정, 전업농의 영농규모화, 재해농가·부채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은행을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10월부터 농지임대수탁사업 등 수행</li> </ul> </li> <li>◦연체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함으로써 농가의 부채 청산 후 경영정상화를 유도하는 농지매입 경영회생지원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6년 277ha, 422억원 규모로 시범사업 실시</li> </ul> </li> </ul>	<p>2005년</p> <p>2006년</p>
②취약농가 인력 지원 및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고농가 및 취약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을 위해 영농도우미(사고농가의 영농 지원) 및 가사도우미(고령·취약농가에 대한 가사 지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6년 시범사업 실시후(21억원) '07년부터 본사업 추진</li> </ul> </li> <li>◦여성농업인이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5세 이하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자녀를 둔 여성농업인에게 육아비용 일부 지원(연령별로 매월 40천원 ~ 88천원 수준) 지원('06:206억원)</li> </ul>	<p>2006년</p>
③계약재배안정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행 최저보장가격제도에 의한 산지폐기·수매방식은 수입을 유발하고 생산과잉이 반복되는 등의 문제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지폐기·비축수매사업을 '08년까지 폐지하고 계약재배안정화사업으로 일원화 추진</li> </ul> </li> <li>◦계약재배 물량중 주출하기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의 85% 이하로 하락시, 기준가격 85%와 시장가격과의 차액의 80%를 계약재배 참여농협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6~'07년 시범사업 실시후 본사업 추진('06:80억원)</li> </ul> </li> </ul>	<p>2006년</p>

대 상 정 책	추진동향 및 계획	비 고
④지역농업 클러스터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정지역에 특화된 농작물의 생산·유통·가공 등과 관련된 주체를 중심으로 산·학·연·관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가용자원의 최적 이용을 통해 지역농업을 혁신하기 위해 도입</li> <li>- '05년 20개 지역을 농업클러스터사업단을 선정 하여 매년 최고 10억원씩 3년간 지원하는 시범 사업 실시</li> <li>◦'05~'07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클러스터 정책 및 사업성을 검증한 후 본사업 실시</li> </ul>	2005년
⑤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을 확대하고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위해 1,000ha 규모의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추진</li> <li>- '06년 3개소 시범사업 추진(75억원)</li> <li>◦시범사업 결과를 고려하여 '13년까지 50개소 조성 추진</li> </ul>	2006년
⑥원예작물천적 해충방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천적을 활용한 생물학적 방법의 해충방제로 전환</li> <li>◦'05년 4개품목(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고추)에 대해 시범사업 추진, '06년 3개품목(오이, 메론, 포도) 추가</li> <li>- '06년에는 1천ha의 천적방제 추진(37억원)</li> <li>◦'13년까지 시설원예 재배면적 10만ha중 2만ha(20%)를 천적방제로 전환 추진</li> </ul>	2005년
⑦축산업등록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효율적인 가축방역, 환경부하 저감, 친환경축산 직불제사업,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구축 등 선진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04년 시행</li> <li>* 등록농가(51,063호) : 한육우 25,630, 낙농 8,616, 양돈 9,324, 양계 6,205, 기타 1,288</li> <li>◦'05년까지 한우, 젓소, 돼지, 닭 등의 등록대상농가의 등록을 완료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자료를 갱신해 각종 사업과 제도에 활용할 계획</li> </ul>	2004년

대 상 정 책	추진동향 및 계획	비 고
⑧최고기이력추적 시스템 시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병, 안전성 등의 문제발생시 이동경로를 따라 추적 조사하여 신속한 관리 및 조치가 가능하도록 소의 생산·도축·가공·판매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DB화하여 관리</li> <li>◦우선 우수브랜드를 중심으로 '04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08년 전면 실시를 목표로 연차적으로 확대시행</li> <li>* 시범사업 추진실적 : ('04) 9개 브랜드/40천두 → ('05) 9개/59천두 → ('06)14개, 3개시/100천두(계획)</li> </ul>	2004년
⑨경관보전직불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농교류 확대 및 지역사회 활성화 도모를 위해 농지에 유채코스모스·메밀 등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농업인에게 소득 손실액을 지원</li> <li>* 직불금 지급액: 연 170만원/ha ('05년 : 470ha추진)</li> <li>◦'05~'07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 실시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직불제 대상작물의 범위 및 기준을 재정립 하여 확대 추진</li> </ul>	2005년
⑩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젊은층의 농어촌거주 유도 및 농가소득 안정 등을 위해 농업인의 영유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지급</li> <li>* 추진실적: ('04) 27천명, 146억원 → ('05) 30천명, 192억원</li> <li>◦'04년 농지소유 1.5ha 미만 농어가에서 '05년 2ha, '06년부터 5ha미만으로 단계적으로 지원대상 확대</li> <li>- '06년 27천명에 대해 157억원 지원 계획</li> </ul>	2004년
⑪조건불리지역 직불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보전 및 지역사회의 유지를 위해 영농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경지율 22%이하, 경사도 14%이상 경지면적 50%이상)에 대한 지원</li> <li>- '04~'05년 361개 오지면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년간 100억원 소요)</li> <li>◦'06년 본사업 실시 : 1,420개 읍면대상(532억원)</li> <li>- 밭 전체면적(721천ha)의 26%인 187천ha에 대해 ha당 40만원(초지 20만원) 지급</li> <li>◦향후 대상 선정기준 완화 및 단가 현실화 추진</li> </ul>	2004년

대 상 정 책	추진동향 및 계획	비 고
⑫FTA기금 과수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칠레 FTA비준 발효('04.4.1)에 따라 과수분야의 경쟁력제고 및 피해농가 지원을 위하여 '10년까지 총 1조2천억원의 FTA기금을 조성하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 및 폐업지원 등 9개 세부사업 추진 중('06:1,993억원)</li> </ul> </li> <li>* '04년 947억원, '05년 1,720억원 지원</li> </ul>	2004년
⑬축산물 브랜드 육성계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4년 축산물브랜드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소비자단체가 품질·안전성·위생관리 등 생산단계에서 도축·가공·유통의 전단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인증해주는 우수축산물브랜드 인증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인증사업을 추진하여 18개 우수브랜드(한우8, 돼지10) 선정('04)</li> </ul> </li> <li>◦농·축협조합,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를 브랜드 축산물 생산·유통사업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산지축산물 생산·유통 사업, 축산물 판매시설 현대화, 가축계열화 등으로 세분되어 추진되던 사업을 통합하여 브랜드 경영체 중심의 종합지원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랜드 경영체 사육비중('05) : 한우 29.5%, 돼지 47.7%</li> </ul> </li> <li>◦향후 브랜드 육성계획을 지속 추진하여 '13년까지 한우 50%, 돼지 70% 브랜드화 추진 계획</li> </ul>	2004년  2006년
⑭친환경축산 직불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축질병 발생, 축산분뇨 처리미흡 등의 문제로 환경친화적 선진국형 축산으로 전환필요</li> <li>◦정부가 제시한 친환경축산프로그램(가축분뇨 경지 환원, 적정사육밀도 유지 등) 이행농가에 소득감소분 또는 추가비용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우, 젓소, 돼지, 닭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04~'06년간 시범사업 실시후 '07년부터 본사업 추진</li> <li>* 참여농가수 ; ('04) 512농가 → ('05) 653 → ('06, P) 900</li> </ul> </li> <li>◦향후 축산업등록농가의 20%까지 참여 유도 목표</li> </ul>	2004년

대 상 정 책	추진동향 및 계획	비 고
⑮농촌마을 종합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촌다움의 유지·보전과 주변환경정비를 통한 쾌적한 농촌공간 조성 및 잠재자원의 특성화 등으로 농촌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년에는 기본계획을 기수립한 36개 권역 착공, 40개 권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li> </ul> </li> <li>◦'06년에는 기본계획을 기수립한 권역 중 20개 권역을 착공하고, 30권역의 예비타당성 조사후 20권역 기본계획 수립</li> </ul>	2004년
⑯쌀생산조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4년 쌀 관세화 관련 협상에서의 입지강화와 쌀 공급과잉상태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하여 논벼를 재배했던 농지에 벼와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으면 매년 ha당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03년부터 '05년까지 3년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70만석 수준의 생산감축효과(휴경 25천ha)</li> </ul> </li> <li>◦'07년 제도 재도입 추진 검토('06년)</li> </ul>	2003년
⑰우수농산물관리 제도(GAP)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일괄적으로 농산물의 안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3년부터 채소과일 중심 시범사업 실시(1,050농가)</li> </ul> </li> <li>◦'06.1.1 GAP제도 본격 시행</li> <li>◦'13년까지 GAP인증 농산물유통비율을 10%수준 까지 확대 추진</li> </ul>	2003년
⑱1사1촌운동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단체와 농촌마을간 교류를 통한 상생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농촌마을과 도시기업체간의 자매 결연을 통해 활발한 교류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12월까지 8,677건을 체결(23개 정부부처 참여)</li> </ul> </li> <li>◦향후 1사 1촌의 단계별 발전전략 마련, 우수사례집 발간, 지속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1사 1촌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li> </ul>	2004년

## 2. 주요 내용 변경 정책

대 상 정 책	추진동향 및 계획	비 고
①자경목적 소유 농지의 임대차 허용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지시장 안정화 및 농업인의 경영규모 확대를 위해 농지임대차에 대한 제한 완화</li> <li>-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하여 전업농에게 농지를 장기 임대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임대를 허용</li> <li>- 8년 자경후 이농시 1ha 소유상한 초과 소유 농지의 임대 허용</li> </ul>	2006년
②추곡수매제를 공공비축제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8년 식량증산과 국민경제 안정을 위해 정부가 농업인으로부터 쌀을 매입하여 단경기에 시중에 방출하는 수매제 도입</li> <li>◦'95년 WTO 출범 이후 보조금 감축에 따라 수매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수매제의 기능 약화</li> <li>*정부매입량 : (95) 955만석 → (04) 495 → (05) 400</li> <li>◦또한 관세화에 대비, 쌀산업 체질강화를 위해 추곡 수매제를 시가매입·방출의 공공비축제로 전환</li> </ul>	2005년
③쌀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1년 도입된 논농업직불제는 논의 공익적 기능 및 형상유지와 비료·농약의 적정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의무이행을 조건으로 지급</li> <li>◦'02년 쌀값하락에 대비하여 정부와 농업인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쌀값하락시 기준가격과 산지쌀값의 차액의 80%를 보전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li> <li>* 추진실적('04) : 농업인 납부금 48천원/ha, 가입 138천ha</li> <li>◦'05년 쌀소득등보전직불제로 통합되면서 논농업 직불제는 WTO 허용보조정책인 고정직불제로, 기존의 쌀소득보전직불제는 목표가격과 산지쌀값과의 차액의 85%를 보전하는 변동직불제로 개편</li> <li>* 농업인 납부금 제도와 대상농지의 4ha면적 상한은 폐지</li> </ul>	2005년

대 상 정 책	추진동향 및 계획	비 고
④농업정책자금 취급은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책자금 취급은행을 농협이외에 시중은행으로 확대하여 농업인이 스스로 거래은행을 선택하도록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산발전기금 3개사업 자금 우선 개방('04.8월)</li> </ul> </li> <li>◦'06년 RPC운영자금, 농기계 구입자금 2개사업과 축발기금으로 지원되는 융자사업 전체의 대출금 취급은행을 추가 개방하고 '06년 하반기 개방효과 평가 후 추가 개방여부 검토</li> </ul>	2004년
⑤경영이양직불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7년 농업구조개선촉진, 쌀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를 위해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65세 이상 고령농가가 논을 매도·임대하는 경우에 1ha당 289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영이양직불제를 도입</li> <li>◦'04년부터 고령농의 은퇴유도 및 농지유동화 촉진을 위해 분할지급형 경영이양직불제로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진흥지역안에서 2ha이하 규모의 논을 소유한 고령농(만63세~69세)이 논을 팔고 벼농사에서 은퇴할 경우 만70세까지 1ha당 매월 241천원의 경영이양직불금을 지급</li> <li>* ('97-'04) 57천명 고령은퇴농에게 1,028억원지급, 38천ha를 쌀전업농에게 경영이양</li> </ul> </li> <li>◦'13년까지 총 48천ha 경영이양 추진</li> </ul>	2004년
⑥미곡종합처리장 (RPC) 설치 및 운영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1년부터 수확후 관리비용절감, 쌀품질향상 및 민간유통기능 활성화를 위해 건조·저장·가공 등 전 과정을 일괄처리하는 RPC 설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1~'04) 총 8,432억원 투자, RPC 328개소, 건조저장시설(DSC) 639개소 설치</li> </ul> </li> <li>◦RPC 가공시설 과잉 판단에 따라 '02년부터 신규 설치를 중단하고 건조·저장시설만 지원</li> <li>◦'04년부터 모든 정부지원 희망 RPC에 대해 경영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한도 및 금리를 차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부진 RPC는 자율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추진</li> <li>* '05년 말까지 7개 시·군 26개 농협 RPC가 7개로 통합·</li> </ul> </li> </ul>	2004년

대 상 정 책	추진동향 및 계획	비 고
⑦축산자조금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2년부터 축산단체가 자율적으로 축산물의 판로 확대, 소비촉진,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 하도록 축산자조사업을 추진</li> <li>◦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고 자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04년 양돈에 의무자조금 제도를 적용하고, '05년 한우, '06년 낙농·육계 도입 추진</li> <li>◦'05년 7개 축종인 자조금 사업을 '13년까지 10개 축종으로 확대 추진</li> </ul>	2004년
⑧도시민의 농지 소유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3년부터 도시자본유치 및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비농업인도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경우 1,000m<sup>2</sup>(302.5평) 이하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li> <li>- '03년 : 70.1ha(317건)</li> <li>- '04년 : 91.6ha(384건)</li> </ul>	2003년
⑨농촌 제2주택 보유 촉진을 위한 세제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도시민이 농촌지역에 상시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 별장으로 간주하여 종과세 하던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양도세 부과 1가구 1주택 산정시 농가주택은 대상에서 제외</li> </ul>	2003년
⑩도축장 위해요소 중점 관리 제도 (HACCP) 의무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비자 지향적인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축산물 위생의 핵심단계인 도축장(소·돼지·닭)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의무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축단계의 미생물(대장균 등) 오염요소 차단</li> <li>- HACCP 미적용 도축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04년)</li> <li>- HACCP 운용수준 평가후 운영자금 차등 지원('05년)</li> <li>* HACCP적용 도축장 수('05) : 137개소</li> </ul> </li> <li>◦현재 사육단계 및 유통·판매단계까지 HACCP 지침 마련 및 적용모델 개발 중</li> </ul>	2003년



### 3. 종료·폐기정책

대 상 정 책	추진 동 향	비 고
①추곡수매 국회 동의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0년 양곡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국회동의제 도입</li> <li>◦'72년 식량증산을 촉진하기 위해 국회동의제 폐지</li> <li>◦'88년 민주화 추세와 쌀소득의 중요성을 감안, 국회동의제 부활</li> <li>◦시가로 매입하는 공공비축제 도입으로 국회동의제 폐지</li> </ul>	2005년
②마늘농가경영 안정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2년에 중국산 마늘에 대한 S/G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마늘 생산성 향상을 위해 '02.7월 마늘산업종합대책을 수립하고, '03년부터 농가경영 안정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늘주산지의 0.3ha이상 규모화된 농가의 생산 기반정비 및 생산기자재 구입 또는 생산 및 유통관련 시설 개·보수 자금지원</li> </ul> </li> <li>◦'05년까지 3년간 3,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마늘가격 안정으로 농가신청이 저조하여 사업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실적 : 총 2,339억원 지원(목표대비 78%)</li> </ul> </li> </ul>	2005년
③송아지생산기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지 등 조사료 생산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송아지 생산기반을 확충하여 값싸고 우수한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해 2001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2~'05년 동안 93개소에 137억원 투입</li> </ul> </li> <li>◦소 사육두수가 '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소 값 안정 등을 위해 '06년부터 사업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육우 사육두수 : ('01) 141만두 → ('05) 181만두</li> </ul> </li> </ul>	2005년
④중고농기계상설 판매장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고농기계 거래활성화를 위해 '02~'03까지 2년간 지역농협, 중고농기계거래전문업소 등에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20개소 설치 지원</li> <li>◦당초 사업지원계획(2년간 한시 지원)에 따라 종료</li> </ul>	2003년

대 상 정 책	추 진 동 향	비 고
⑤대규모 용수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5년부터 수리시설이 미비된 수혜면적 3,000ha 이상 지역에 저수지, 용수로 등을 설치, 농촌용수를 공급함으로써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추진실적(준공기준) : 11,392ha</li> </ul> </li> <li>◦'05년 동화·성주지구 준공 이후 3,000ha이상 개발 적지가 없고, 50ha이상 중규모 용수개발은 추진 중에 있으므로 대규모 용수개발은 종료</li> </ul>	2005년
⑥부적지 감귤 과원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7년부터 오렌지 등 감귤류 수입개방에 대비 하고, 국산 감귤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재해상습지 등 부적지 감귤과원 정비를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ha당 3천만원씩 지급, 총 993억원 소요</li> </ul> </li> <li>◦'06년까지 부적지 감귤과원 1,810ha 정비할 계획 이었으나 감귤 유통명령을 발동('03년)하는 등 과잉 생산이 지속되어 사업량을 1,500ha 추가하고 사업 추진도 앞당겨 '04년에 마무리(총사업량 3,310ha)</li> </ul>	2004년
⑦일반경지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농이 불편한 소규모의 불규칙한 논배미를 집단화 규모화하고 용·배수로를 설치하여 생산성 향상 및 영농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65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0년 농촌근대화촉진법을 제정하여 경지정리 면적 588천ha를 목표로 추진</li> <li>- '80년 경지정리대상면적을 706천ha로 확대</li> <li>- '00년 대상면적을 축소('04년까지 720천ha)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추진실적 : '04년까지 720천ha 완료</li> </ul> </li> </ul> </li> <li>◦경지정리가 어느 정도 완료되었다는 인식과 함께 재정소요여건 변화 등에 따라 '04년 일반경지정리 사업 종료</li> </ul>	2004년

#### 4. 참여정부 이전에 시행되어 계속 추진중인 주요정책

대상정책	추진동향	비고
①농작물재해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작물재해 발생시 농가경영 및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01년 사과배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2년 포도·단감·감귤·복숭아로 확대 적용</li> <li>* 사업추진실적('05) : 6개품목, 25천호 가입</li> </ul> </li> <li>◦'05년부터 손해율(보험금/보험료) 180%를 초과 거대재해 발생시 국가가 위험을 인수하는 국가재보험제 도입 및 농작물재해 재보험기금 설치·운용</li> <li>◦향후 재해보험 대상품목·재해를 연차적으로 확대</li> </ul>	2001년 도입
②시장도매인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0년 거래단계 축소를 통한 도매시장내 유통비용 절감을 위하여 농안법 개정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장도매인을 지정하고 도매시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li> <li>* 지방도매시장 : '00. 6월부터, 중앙시장 : '05. 7월부터</li> </ul> </li> <li>◦서울 강서시장에 시장도매인제(52개소)가 도입('04.6) 되어 시행중</li> <li>◦향후 개설자가 시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장도매인제 도입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도매시장 활성화 도모</li> </ul>	2000년 도입
③농산물 자조금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0년 생산자단체가 매출액의 1~3%범위 내에서 거출하고 정부가 지원(1:1 매칭)하여 조성한 자조금으로 농산물의 판로확대·수급조절·소비촉진홍보 등을 추진함으로써 품목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입</li> <li>◦'00년 파프리카와 참다래를 시작으로 '05년까지 17개 품목으로 확대</li> <li>◦'13년까지 자조금 조성품목을 32개로 확대 추진</li> </ul>	2000년 도입
④유전자변형 농산물(GMO) 표시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0년 GMO 농산물의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표시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품목 : ('01.3)콩, 콩나물, 옥수수, ('02.3) 감자</li> </ul> </li> <li>◦GMO농산물 수입·판매정보를 활용하여 조사대상 업체를 수입농산물 취급업소 위주로 전면 재조정하여 효율적인 단속 추진</li> </ul>	2000년 도입

대 상 정 책	추 진 동 향	비 고
⑤농업종합자금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품목별로 세분화된 정부지원사업을 통폐합하여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영체의 자율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99년부터 도입</li> <li>◦필요한 시설·개보수 자금과 운영자금을 농업인의 사업계획에 따라 원하는 시기에 지원하고 컨설팅도 병행하여 경영체의 자율책임경영 유도</li> <li>* 지원실적 : ('03) 4,523억원→ ('05) 8,233억원</li> </ul>	1999년 도입
⑥친환경농업 직불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9년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규제지역(11천ha)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 지원(52만원/ha)</li> <li>◦'02년 전국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로 대상 확대</li> <li>◦'03년 논부문을 분리하여 논농업직불제와 통합하였으나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도입으로 '06년 다시 친환경직불제로 통합</li> <li>◦향후 현재 이원화되어있는 논밭부문 단가 일원화, 지급기간 연장(3년→5년) 추진</li> </ul>	1999년도입
⑦지리적표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에 규정되어 지역특산품의 생산자와 관련산업을 국내외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99년 도입</li> <li>◦보성녹차('02), 하동녹차('03), 고창복분자주('04), 괴산고추, 영양고춧가루, 서산마늘 등('05) 총 13개 품목 운영</li> <li>◦'13년까지 지리적 표시품목을 60개로 확대 추진</li> </ul>	1999년 도입
⑧유통협약 및 유통명령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WTO체제 출범이후 정부의 직접적인 수급조절 정책이 어려워 '98년 농·소·상·정의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 정책을 새롭게 도입</li> <li>◦'98년 유통협약을 처음 실시한 이후 '03년까지 10회를 실시하고, 유통명령은 '03년 감귤에 처음 실시한 이후 '05년까지 3회 실시</li> <li>◦향후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수급불안이 예상될 경우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수급조절 능력향상을 위해 유통협약·명령실시</li> </ul>	1998년 도입

대 상 정 책	추진 동 향	비 고
⑨ 협동조합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동조합의 효율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농협·축협·인삼협 중앙회를 통합('00년)하고 중앙회와 지역농협의 경영혁신 지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회 회장 비상임화, 대표이사 책임경영체계 확립 등 중앙회 개혁 추진</li> <li>- 일정규모이하 지역조합의 자율적 합병을 유도하고 경영부실조합의 통폐합 추진</li> <li>-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근거 마련, 조합 상임이사 도입과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등 추진</li> </ul> </li> </ul>	1997년 도입
⑩ 채 소 · 과 수 계약재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소득 지지, 생산자단체의 시장교섭력 제고, 품목별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계약재배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지채소 : '95년 무·배추를 시작으로 '98년 7개 품목(고추, 마늘, 양파, 대파, 당근)으로 확대</li> <li>- 시설채소 : '01년부터 오이, 호박, 가지, 풋고추, 토마토를 대상으로 도입</li> <li>- 과수 : '01년부터 생산자단체와 농가의 출하계약을 통해 과실의 판로보장 및 출하조절 추진</li> </ul> </li> <li>◦ 과수계약재배는 사과, 배 등 주요 과실의 수급안정과 농가경영안정을 위해 '06년까지만 추진하고 '07년 이후 사업 종료</li> <li>◦ 채소는 '06년까지는 현수준을 유지하면서 사업내실화를 기하고, '07년부터 사업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li> </ul>	1995년 도입
⑪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 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이자 용자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용자규모 및 지원인원 : ('94) 17억원/2천명 → ('00) 204/ 21 → ('04) 599/ 22</li> <li>* 1인 1학기 평균용자금('05) : 254만원</li> </ul> </li> <li>◦ 지원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신청에 맞게 탄력적으로 확대</li> </ul>	1994년 도입

대 상 정 책	추 진 동 향	비 고
⑫농어민건강보험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8년부터 의료시설 접근성이 낮고 소득수준이 낮은 농어민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4년부터 기존 농어민건강보험료 경감(22%)이외 추가경감 지원 대책을 연차적으로 확대·추진</li> <li>* 경감을 : ('98) 15%→('01)22%→('05) 40%→('06) 50%</li> </ul> </li> <li>◦ 농어민의 실질적인 부담률 완화를 위해 농림어업의 특성을 고려한 건강보험료 산정방식 개선 지속추진</li> </ul>	1998년 도입
⑬영농규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업농가의 영농규모를 확대하고 경영농지를 집단화함으로써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쟁력 제고 도모</li> <li>◦ '88년 농지구입자금지원사업 → '90년 농가경영규모화사업 → '95년 쌀전업농육성사업 → '97년 영농규모화사업으로 사업내용·시행기관은 일부 변경</li> <li>* '04년까지 136천명에 147천ha 지원</li> <li>◦ '13년까지 6ha수준의 쌀전업농 7만호 육성 추진</li> </ul>	1988년 도입
⑭후계농업인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부문에 젊고 유능한 후계인력 육성을 위해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5년까지 12만명의 후계농업인 선정·지원</li> </ul> </li> <li>◦ '01년부터 기존의 후계농업인 제도는 신규후계농업인과 창업후계농업인 사업으로 세분하여 추진</li> <li>◦ 신규후계농업인 사업은 '04년에 농업종합자금으로 통합하고, 후계농 연령 조정(40세→45세)</li> <li>◦ '05년부터 젊고 유능한 신규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생 창업연수(104명), 창업농후견인제(108명) 농업인턴제(113명) 시범사업 실시</li> </ul>	1981년 도입
⑮농공단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민취업기회 제공, 농가소득증대 및 농촌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84년부터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공단지통합지침을 제정하여 관계부처가 소관별 사항에 대해 지원체계를 마련 추진</li> <li>* 사업추진실적 : 2004년까지 322개소(11,306억원)</li> <li style="padding-left: 40px;">2005년 32개소 472억원</li> </ul> </li> <li>◦ 향후 지역경제여건 및 기존농공단지의 분양률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추진할 예정</li> </ul>	1984년 도입

## 성과지표별 세부 내역

### 1. 정책과제

<b>정책목표 1</b>	<b>농업개방 확대 적극 대응</b>
---------------	----------------------

#### 1) DDA 협상에 체계적으로 대응

##### □ 성과지표의 설정사유

- 성과목표 : 국내 농업피해 최소화 및 농업계의 수용분위기 조성
- 협상에서 우리나라 입장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및 국내농업계의 수용분위기 조성이 중요

##### □ 성과지표 내용 및 검증방법

- 협상전문가의 협상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 Modality 협상에의 적극 대응과 이행계획서(C/S) 작성 및 WTO 검증 등 협상결과에 대한 학계, 연구원, 관계부처 전문가에 대해 설문조사 실시('06.11월 예정)
- 농민단체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설명회, 토론회 개최, 기자설명회 실적

##### □ 당년도 목표 및 설정사유

- '06년 목표
  - 전문가의 협상결과에 대한 만족도 : 50%
  - 농업인 단체 및 기자와의 간담회 실적 : 50회 이상 개최
- 과거 만족도 조사가 실시되지 않았던 점과 농업협상의 어려움, 농업인 단체 및 기자 설명회 실적('05:45회) 등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 2) FTA 협상에 체계적으로 대응

### □ 성과지표의 설정사유

- 성과목표 : FTA 협상으로 인한 농업피해 최소화
- FTA 협상에서는 국내의 취약한 산업부문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상대응이 필요

### □ 성과지표 내용 및 검증방법

- 협상전문가의 협상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 아세안, 캐나다, 미국 등과의 FTA 협상 결과에 대한 학계, 연구원, 관계부처 전문가에 대해 설문조사 실시('06.11월 예정)
- 농민단체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실적

### □ 당년도 목표 및 설정사유

- '06년 목표
  - 전문가의 협상결과에 대한 만족도 : 50%
  - 품목단체협의회 개최 실적 : 6회 이상 개최
- 과거 만족도 조사가 실시되지 않았던 점과 농업협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만족도 목표치 설정
- 협상추진과정에서의 품목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협의를으로써 효과적인 협상전략을 마련하고 FTA 협상 결과의 원만한 수용분위기 조성



### 3) 농업여건변화에 대응하는 농업·농촌종합대책 점검 및 조정

#### □ 성과지표 설정사유

- 쌀협상 국회 비준 직후 농업·농촌종합대책 내용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다시 점검하고 조정할 필요
  -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농업인단체, 전문가 등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 □ 성과지표 내용 및 검증방법

- 종합대책 점검 및 조정시 고객(농업인단체, 전문가 등)과 협의회 구성·운영, 워크숍 개최 등 의견수렴 실적을 정성평가
- 농업·농촌 종합대책 점검 및 조정 대책 수립 여부
  - 농가유형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시행하는 맞춤형 농정 시스템 구축
  - 정책대상 농가의 정확한 경영상태 파악을 위한 농가등록제 도입방안 마련 등

#### □ 당년도 목표 및 설정사유

- '06년 목표 : 농업인단체, 전문가 등과 협의회,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종합대책 점검 및 조정된 대책 수립
- 쌀 협상 비준 직후 종합대책의 점검 및 조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농업인단체를 종합대책 점검 및 조정과정에 참여토록 하여 현장 농업인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

## 정책목표 2 전문경영체 육성 및 소득·경영안정

### 1) 전문농업경영체 농업생산비율

#### □ 성과지표의 설정 사유

- 성과목표 : 전문농업경영체의 육성
- 경영체의 성장기반 구축정도는 전문농업경영체인 전업농의 농업생산담당 비중을 통해 성과 측정 가능

#### □ 성과지표내용 및 검증방법

##### < 쌀전업농 >

- 산식 :  $(\text{쌀전업농 농지면적} / \text{전체 농지면적}) \times 100$
- 검증방법 : 규모화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활용(한국농촌공사, 연말)  
\* 쌀 전업농(5ha 이상), 육성대상자(2ha 이상)

##### < 축산전업농 >

- 산식 :  $(\text{전업농 사육두수} / \text{전체 사육두수}) \times 100$
- 검증방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가축통계조사(분기)결과 활용  
\* 한우·젖소(50두이상), 양돈(1,000두이상), 양계(3만수이상)

##### < 과수전업농 >

- 산식 :  $(\text{전업농 과수면적} \times 10\text{a당 수량} / \text{전체과실생산량}) \times 100$
- 검증방법 : 과원영농규모화사업추진 실적 결과보고서(한국농촌공사, 연말)  
\* 1.5ha이상 과수경영 농가

#### □ 당년도 목표 및 설정사유

- 쌀전업농의 생산점유비 : 전체 쌀생산의 32%
- 축산전업농의 사육비율 : 전체 사육두수의 75%
- 과수전업농의 생산비율 : 전체 생산량의 41.5%

**< 과거 실적통계 및 장기목표 >**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07	'13
쌀전업농 비율(%)	18	22	23	25	28	30	32	34	50
축산전업농 비율(%)	59.6	61.4	65.1	67.7	69.6	73.4	75	76.6	85
과수전업농 비율(%)				39.8	40.0	40.7	41.5	42.5	51.0

**< 쌀전업농 생산비중 >**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07	'13년
쌀전업농 경영면적	192천ha	233	240	245	279	297	312	326	430
확대 실적(누계)	(18%)	(22%)	(23%)	(25%)	(28%)	(30%)	(32%)	(34%)	(50%)
쌀전업농 호당 논 경영면적 증가 추이	2.46ha	2.80	2.81	2.9	3.9	4.2	4.4	4.6	6.0

- 주) 1. '04년이후 실적은 쌀전업농육성종합대책('04.7) 수립시 목표 재설정  
 2. '05년부터 경영면적 확대실적 비율은 '05년 벼재배면적(98만ha)에서 '13년 예상면적(85만ha)의 감소 추세치 적용 ('06년 “예” 312천ha/964)

**< 축산전업농 사육비중 >**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13
전업농수	11,262호	12,046	12,867	13,740	14,427	14,937	15,619	16,360	16,830	20,000
전 체 사육두수	112,895천두	113,067	112,621	110,219	111,335	120,888	122,374	123,419	123,614	123,200
전업농 사육두수	67,238천두	69,389	73,279	74,597	77,462	88,749	91,750	94,487	97,193	88,262
전업농 사육비중	59.6%	61.4	65.1	67.7	69.6	73.4	75.0	76.6	78.6	85.0

**< 과수전업농 생산비중 >**

구 분	'03	'04	'05	'06	'07	'08	'13
과수전업농 과원면적(ha)	45,724	46,174	46,624	47,224	47,974	48,974	55,200
과수전업농수(호)	18,186	18,486	18,786	19,186	19,686	20,353	22,000
전업농생산량(천톤)	906	984	994	1,007	1,023	1,044	1,176
과일생산량(천톤)	2,275	2,462	2,443	2,425	2,406	2,386	2,307
전업농 생산비중(%)	39.8	40.0	40.7	41.5	42.5	43.8	51.0

## 2) 전문농업경영체 컨설팅 지원율 및 만족도

### □ 성과지표의 설정 사유

- 성과목표 : 전문농업경영체 육성
- 전문농업경영체 육성은 경영체의 경영혁신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 실적을 통해 성과 측정가능

### □ 성과지표내용 및 검증방법

- 성과지표
  - 컨설팅 지원율 : 컨설팅 수혜농가수/컨설팅 희망농가수 ×100%
  - 컨설팅 만족도 : 컨설팅 만족농가수/컨설팅 수혜농가수 ×100%
- 검증방법
  - 컨설팅 지원율 :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시·군에서 선정위원회를 거쳐 선발한 수혜농가수로 평가
  - 컨설팅 만족도 : 컨설팅 수혜농가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컨설팅 만족도 조사(매년 조사)

### □ 당년도 목표 및 설정사유

- '06년 목표
  - 컨설팅 지원율 : 58.4%
  - 컨설팅 만족도 : 78%
- 최근 연도의 컨설팅 신청 및 지원율 추세 및 만족도를 고려하여 목표치를 설정

구 분	'04	'05	'06
컨설팅 지원율(%)	79.6	58.4	60.0
컨설팅 만족도(%)	72	78	78

## 3) 창업농 영농 정착율

□ 성과지표의 설정 사유

- 성과목표 : 전문화된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신규창업농 확대
- 농가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60세이상 경영주가 60% 정도로 고령화되어 있는 상태로 전문화된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서는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인력의 신규유입 필요

□ 성과지표 내용 및 검증방법

- 산식 : (최근 3년간 창업농 지원자수-영농미종사자 수)/최근 3년간 창업농 지원자수
- 검증방법
  - 익년도 3~4월중 시·도의 선정결과 보고에 따라 최근 3년간 창업농 지원자수 측정
  - 영농 미종사자수는 익년도 3~4월중 시·도 보고자료를 종합하여 측정

□ 당년도 목표 및 설정사유

- '06년 목표 : 85%
- 과거 영농정착율이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현재 창업농 지원 신청자가 과거에 비해 줄어든 점을 감안할 때 영농정착율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필요

< 과거실적 및 향후 전망 >

구 분	'03	'04	'05	'06
창업농 영농정착율(%)	81	81	84(P)	85

####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건전화

##### □ 성과지표의 설정사유

- 성과목표 : 담보력이 미약한 농업인 등에 대한 원활한 보증지원
-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 등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서는 부실화가 심한 동 기금의 조기 정상화가 필요

##### □ 성과지표 내용 및 검증방법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적립필요금액에서 적립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평가
  - 산식 :  $(\text{적립금액} / \text{적립필요금액}) \times 100$
- 검증방법
  - 다음연도초에 작성되는 기금결산보고서의 결산결과 확인

##### □ 당년도 목표 및 설정사유

- '06년 목표 : 65%
  - '05.9.14 국회(본회의)는 기금의 부실원인 규명을 위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등 기금의 부실이 심각하여 농업인 등에 대한 원활한 보증지원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따라 기금의 조기 정상화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당초 계획('05 기금안정화 계획)보다 높게 목표 설정
- \* 당초계획 : ('06) 60% → ('07) 80 → ('08) 95 → ('09) 100

## 5) 직불제 투융자 비중

### □ 성과지표의 설정사유

- 성과목표 :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 확대 기반 마련
- 농업개방에 따라 감소하는 농가소득을 시장왜곡없이 보전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직불제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

### □ 성과지표 내용 및 검증방법

- 전체 농업투융자금액에서 직불제투융자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평가
  - 산식 : (직불투융자금액/농업투융자금액)×100
- 검증방법 : '06년 농업투융자금액 가운데 직불투융자금액이 차지하는 금액의 비중을 계산하여 확인(매년)

### □ 당년도 목표 및 설정사유

- '06년 목표 : 23.4%
- 목표가격에 비해 '05년의 수확기 쌀값 하락폭이 커 그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변동직불금이 크게 증가된 것을 감안하여 목표 설정

### < 과거 실적통계 및 장기 목표 >

(억원)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예산안
일반지출 합계	79,996	70,067	62,418	61,312	60,968	65,491	65,572	66,031	73,406	82,299
직불금 합계	607	518	534	402	2,509	4,289	6,432	8,675	10,014	19,235
직불예산 비중(%)	0.8	0.7	0.9	0.7	4.1	6.5	9.8	13.1	13.6	23.4

## 6) 농지매입을 통한 경영회생지원 시범사업 시행여부

### □ 성과지표의 설정사유

- 성과목표 : 농가의 농지매입 경영회생 지원
- 연체 등으로 부채상환 능력을 상실한 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은행을 설립하고 농지매입을 통한 경영회생 시범사업 추진
  - 다만 올해는 제도 도입 첫해인 점을 고려하여 성과지표 설정

### □ 성과지표 내용 및 검증방법

- 「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하위법령 개정 및 시범사업 추진(농지매입 경영회생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침 수립 포함)
- 검증방법 : 관련규정 개정 여부 및 사업추진 실적 평가

### □ 당년도 목표 및 설정사유

- '06년 목표
  - 「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하위법령 개정
  - 시범사업 추진 : 422억원(277ha)
- 농지은행 운영 첫해인 만큼 연체 등으로 부채상환 능력을 상실한 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등 매입 근거를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7) 재해 보험 가입률 및 가입액

### □ 성과지표 설정 사유

- 성과목표 : 농작물재해보험의 내실화
- 재해농가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에서 탈피하여, 농가 스스로 보험에 가입하고 재해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받아 영농을 지속할 수 있는 농업경영 안정장치의 구축이 긴급

### □ 성과지표 내용 및 검증방법

- 가입률 :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면적을 재해보험사업자가 제시한 가입조건을 충족하는 가입 가능 대상면적으로 나누어 산출  
- 산식 : 가입면적 / 대상면적
- 가입금액 :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금액을 합산하여 산출
- 검증방법 : 농협중앙회의 보험가입 추진 후(4월) 실적 결과를 통해 측정

### □ 당년도 목표 및 설정사유

- '06년 목표 : (가입률) 24.3% / (가입금액) 5,665억원
- 가입률 및 가입금액은 '05년 국가재보험제도의 도입 등의 제도 개선으로 급증하였으나 제도의 정착과 더불어 향후 가입율은 매년 0.9%p 증가, 가입금액은 매년 3% 성장한 수치를 목표로 설정

### < 과거 실적통계 및 장기 목표 >

(단위 : %, 백만원)

구 분	'01	'02	'03	'04	'05	'06(P)	'07(P)
가입률	17.6	18.3	15.2	18.2	23.4	24.3	25.2
가입금액	92,888	271,186	306,754	513,415	550,008	566,508	583,503

## 8) 가축공제 가입률 및 가입액

### □ 성과지표 설정 사유

- 성과목표 : 가축공제의 내실화
- 축산업 규모 확대로 각종 사고(수해, 풍해 등 자연재해, 화재) 및 질병 등으로 가축피해 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경영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가축공제 가입 확대 유도 필요

### □ 성과지표 내용 및 검증방법

- 전체 가축사육두수에 대비한 가축공제가입두수 비율로 가축공제 가입 정도를 평가
  - 가입률 = (총 가입두수/가입대상 15개 축종 전체사육두수)×100
  - 가입금액 : ∑ 개별 가입농가의 가입금액
- 검증방법 : 농림부의 가축통계자료 및 가축공제가입실적(농협) 활용

### □ 당년도 목표 및 설정 사유

- '06년 목표 : (가입률) 33.6%, (가입금액) 1조 7,472억원
  - 축종별 가입률 : 소 9.2%, 돼지 64.3%, 말 5.5%, 가금(닭·오리·꿩·메추리) 32.6%
- ※ 장기적으로 대상 축종을 7개 축종(소, 돼지, 말, 닭·오리·꿩·메추리)에서 '10년 까지 15개 축종으로 확대하고, 가입률도 연차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

### < 과거 실적통계 및 장기 목표 >

(단위 : %, 백만원)

구 분	'02	'03	'04	'05	'06(P)	'07(P)
가입률	10.6	19.4	24.1	33.3	33.6	37.0
가입액	771,251	976,719	1,022,741	1,242,056	1,747,183	2,123,608

1) 공공비축제 및 쌀소득보전직불제 개선

□ 성과지표의 설정사유

- 성과목표 : 쌀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 공공비축제 및 쌀소득보전직불제 관련 농업인 불편·불만사항 개선 필요
- 쌀산업 연착륙 유도를 위해서는 쌀협상이후 쌀수입 증가로 인한 쌀가격 하락시 농가소득안정을 통한 쌀 생산기반 유지 필요

□ 성과지표 내용 및 검증방법

- 공공비축제 및 쌀소득보전직불제 개선 여부
- 검증방법 : 공공비축제 및 쌀소득보전직불제 개선 여부

□ 당년도 목표 및 설정사유

- '06년 목표 : 공공비축제 및 쌀소득보전직불제 개선
- RPC 등 민간유통주체, 농업인단체 등의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제도보완
  - 공공비축제는 산물벼 매입방안 재검토 등 보완
  - 쌀소득보전직불제는 등록절차 간소화, 분할지급 방식 개선 등 보완

## 2) 정부관리양곡(쌀) 재고량

### □ 성과지표 설정 사유

- 성과목표 : 정부관리양곡의 적정수준 재고유지
- 비상시 대비할 수 있는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정부관리 양곡의 적정수준(600만석 수준) 재고관리 필요

### □ 성과지표 내용 및 검증방법

- '06년도 양곡년도말('06.10월말) 기준 정부양곡관리 재고량
  - 정부관리양곡 재고량 :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내산쌀과 수입쌀에 대한 재고량
  - ※ FAO는 소비량의 17~18%, 농촌경제연구원은 소비량의 15~19%(500~640만석) 비축 권고
- 검증방법 : 농림부의 정부양곡 정기재고 조사 자료를 활용

### □ 당년도 목표 및 설정사유

- '06년 목표 : 정부관리양곡 적정재고는 600만석수준이나, 수급 상황 등을 감안하여 500~700만석 수준으로 관리
- 정부관리양곡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여 식량안보 확보 및 재고과잉에 따른 보관료 등 제비용 절감 필요

### < 최근 정부양곡 재고현황 >

구 분	'01	'02	'03	'04	'05(전망)
정부관리양곡 재고량	7,677천석	5,642	3,397	3,194	4,185

### 3) 쌀 재고 처리량

#### □ 성과지표 설정 사유

- 성과목표 : 정부관리양곡의 적정수준 재고유지
- 평년작만 생산되어도 추가재고가 발생하는 수급상황을 감안할 때 쌀 시장안정을 위해서는 주정용·가공용 공급확대 필요

#### □ 성과지표 내용 및 검증방법

- '06년도 쌀 적정 수급관리를 위해 특별재고 처분 지속추진
  - 쌀협상 결과에 따라 수입쌀 증가('06년 170만석→ '14년 283)
- 검증방법 : 농림부의 정부양곡 매출현황 자료 활용

#### □ 당년도 목표 및 설정사유

- '06년 목표 : 정부관리양곡의 적정재고 유지를 위해 가공·주정용으로 195만석 수준 공급
- 정부관리양곡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여 식량안보 확보 및 재고과잉에 따른 보관료 등 제비용 절감 필요

#### < 정부양곡 가공·주정용 공급현황 >

구 분	'02	'03	'04	'05(전망)
정부관리양곡 가공·주정용 공급량	51만석	65	69	132

#### 4) 수입쌀 관리 방안마련 및 이행여부

##### □ 성과지표의 설정사유

- 성과목표 : 수입쌀 관리 제도 정착
- 2004년 쌀 협상 결과에 따라 2005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수입쌀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국내에 정착시킬 필요성
- 수입쌀 관리 체계화를 통해 WTO 이행계획서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통상마찰을 방지하는 한편 수입쌀 국내 유통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최소화

##### □ 성과지표 내용 및 검증방법

- '05년 물량이 시판완료 및 '06년 물량 도입방안 마련 완료여부
- 검증 방법 : 농수산물유통공사 판매실적, '06년 MMA쌀 도입방안 마련 여부

##### □ 당년도 목표 및 설정사유

- '06년 목표 : '05년 물량의 시판완료 및 '06년 물량 도입 방안 마련
- 쌀협상 국회비준이 늦어짐에 따라 '05년에 도입·시판하기로한 물량의 도입 및 시판이 지연되어 올해가 사실상 이행 첫 해
  - 우선 '05년 물량을 '06년 상반기에 도입·시판하고, '06년 수입분은 수출국 및 시장의 반응을 고려하여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06년말 부터 수입

## 5) RPC 쌀 매입량 비중

### □ 성과지표 설정 사유

- 성과목표 : RPC의 벼매입 확대
- 정부수매제 개편 등으로 RPC 중심의 민간 수급기능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나 RPC의 역할이 충분하지는 못한 상황
- RPC에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수확기 농가벼 매입을 확대토록 추진하고 쌀유통량대비 RPC의 쌀매입량 비중을 성과지표로 설정

### □ 성과지표 내용 및 검증방법

- 당해연도 쌀생산량을 기준으로 유통량을 산정하고 유통량에서 RPC 벼매입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평가
  - 산식 :  $RPC매입량 / 당년도 생산량 \times 유통비율(73\%) \times 100$
- 검증방법 : 지자체의 RPC별 벼 매입실적조사 자료를 활용(매년)

### □ 당년도 목표 및 설정사유

- '06년 목표 : 56.3%
- 최근 5년간 RPC의 매입비중 추세치를 적용하여 목표를 설정
  - RPC 매입비중은 차년도 1/4분기중 조사결과 산출 가능

### < 과거실적 통계 및 장기목표 >

구 분	'00	'02	'03	'04	'05	'06	'07	'10
◦RPC쌀매입 비율(%)	44.4	46.6	56.8	51.6	54.5	56.3	58.0	70

## 6) RPC 계약재배 면적 및 공동브랜드 개발 실적

### □ 성과지표의 설정사유

- 성과목표 : RPC의 고품질쌀 유통을 위한 계약재배, 품질관리 및 공동브랜드 개발
- RPC의 고품질쌀 계약재배 및 사군단위 공동브랜드 육성 노력 평가

### □ 성과지표 내용 및 검증방법

- 성과지표 내용
  - 계약재배면적 :  $(RPC \text{ 계약재배면적} / \text{전체논벼재배면적}) \times 100$
  - 공동브랜드 개발 : 통합RPC 당 1개
- 검증방법
  - 농협 및 민간단체 RPC 계약재배면적 조사자료 및 농협RPC 중 통합RPC의 공동브랜드 개발 실적을 통해 검증

### □ 당년도 목표 및 설정사유

- '06년 목표 : 계약재배면적 350천ha(36%), 공동브랜드 5개
- RPC의 계약재배 추세(최근 3년간) 및 '06년도 RPC 통합계획(5개지역, 15개 RPC)을 감안하여 목표설정
  - 성과목표는 연도말 산출가능

### < 과거실적 통계 및 장기목표 >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07
계약재배 (비율)	150천ha (15%)	180 (18)	200 (18)	250 (21)	289 (28)	322 (32)	350 (36)	400 (41)
공동브랜드	-	-	-	-	3	4	5	10



## 7) RPC 쌀 품질 지수

### □ 성과지표의 설정사유

- 성과목표 : RPC 브랜드 쌀 품질 향상
- RPC 브랜드 쌀의 품질 향상 측정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 항목 및 평가기준 설정 필요

### □ 성과지표 내용 및 검증방법

- 쌀 품질지수(%)= [식미(%)+ 품위(%)+ 품종순도(%)+ 소비자 만족도(%)] /4
- 검증방법 : 소비자단체 주관 시중 유통 브랜드쌀 평가시 전문기관 [식미(한식연), 품위(농관원), 품종순도(농진청), 소비자 만족도(소비자단체)] 에 의한 평가 결과 활용

### □ 당년도 목표 및 설정사유

- '06년 목표 : 시중 유통 브랜드쌀 평가 결과 우수 브랜드로 선정된 12개 브랜드 쌀 품질지수 : 76.7%
- 최근 3년간('03 ~ '05년) 품질평가결과를 고려하여 3개년 평균인 76.7%로 목표 설정

#### <과거 실적 통계>

구 분	2003년 결과	2004 결과	2005 결과	'06년 목표
○ 쌀 품질지수(%) - 식미, 품위, 품종순도, 소비자만족도	75.0	77.8	77.5	76.7

1) 과수·채소 브랜드 육성

□ 성과지표의 설정사유

- 성과목표 : 과수·채소류에 대한 브랜드 육성
- 소비자의 품질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믿을 수 있는 브랜드를 갖춘 규모화된 경영체 중심의 육성 계획 수립 필요

□ 성과지표 내용 및 검증방법

- 성과지표의 내용 : 과수·채소 브랜드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주요 품목 브랜드 경영지침 제정 여부
- 검증방법
  - 브랜드 육성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주요 품목 브랜드 경영지침 마련여부

□ 당년도 목표 및 설정사유

- '06년 목표 : 과수·채소류에 대한 브랜드 육성 계획의 수립 및 과수·채소 6개 품목 브랜드 경영지침 제정
- 브랜드 중심의 생산자 조직화 및 품질 균일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계획 수립
-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주요 품목 브랜드 경영지침 제정 등 추진

## 2) 산지유통 전문조직의 점유율

### □ 성과지표의 설정사유

- 성과목표 :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
- 산지유통전문조직(공동마케팅조직 포함)중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전체 전문조직중 상위10% 조직의 매출(액) 점유율을 평가

### □ 성과지표 내용 및 검증방법

- 산식 :  $(\sum \text{상위10\% 전문조직 매출} / \sum \text{전체 전문조직 매출}) \times 100$
- 검증방법
  - 매년 실시하는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전체 전문조직 및 상위 10% 조직의 매출액 조사결과를 활용(평가지기 : 매년 1월 ~ 6월)

### □ 당년도 목표 및 설정사유

- '06년 목표 : 우수조직의 매출액 점유비 매년 1% 증대
- 산지유통전문조직의 규모화·광역화 등을 감안하여 증가율을 추정하여 목표치를 설정

### < 과거 실적통계 및 장기목표 >

구 분	'00	'01	'02	'03	'04	'05(p)	'06(p)	'07
우수조직 매출액 점유비(%)	-	-	-	22.9	24.2	25.2	26.2	27.2

\* '05년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06.6월경 파악가능

### 3) 브랜드경영체 사육 비율

#### □ 성과지표의 설정사유

- 성과목표 : 우수 축산물브랜드 육성
- 우수 브랜드 중심으로 사육두수 점유비를 높여 고품질의 균일성 및 규모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

#### □ 성과지표 내용 및 검증방법

- 전체 사육두수(한우, 돼지) 중 브랜드경영체의 회원농가가 사육하는 두수를 성과지표 설정
  - 산식 : (브랜드경영체 사육두수/전체사육두수)×100
- 전국의 한우 브랜드경영체가 사육하는 두수 파악(축산물 등급판정소)
  - 전체사육두수는 가축통계조사 자료를 활용

#### □ 당년도 목표 및 설정사유

- '06년 목표 : 한우 32%, 돼지 50%
- '13년까지 브랜드경영체 사육비율을 한우50%, 돼지 70%로 확대한다는 브랜드육성계획에 맞추어 연차별로 달성해야 할 목표 설정

#### < 과거 실적통계 및 장기 목표 >

구 분		'04	'05	'06	'07	'08	'13
한우	전체사육두수(천두)	1,425	1,578	1,600	1,700	1,700	1,700
	브랜드경영체 사육두수(천두)	355	465	512	595	646	850
	점유비율(%)	24.9	29.5	32	35	38	50
돼지	전체사육두수(천두)	9,017	8,786	9,000	9,000	9,000	9,000
	브랜드경영체 사육두수(천두)	4,107	4,194	4,500	4,770	5,040	6,300
	점유비율(%)	45.5	47.7	50	53	56	70

#### 4) 농산물 소모성 물류비 절감

##### □ 성과지표 설정사유

- 성과목표 : 농산물 소모성물류비용 절감
- 농산물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모성 물류비로 인하여 농가 수취가격이 낮고, 소비자 구입가격이 인상되는 결과 초래
- 파렛트화·하역기계화 등 농산물 유통 효율화를 통한 소모성 물류비 절감으로 국산농산물의 가격경쟁력 제고 및 소비촉진 유도

##### □ 성과지표 내용 및 검증방법

- 전체 물류비 항목 중 물류효율화를 통하여 비용절감이 필요한 운송하역비, 감모·청소비의 비중 감축정도를 평가
  - $(\text{톤당 운송비} + \text{톤당 하역비} + \text{톤당 감모·청소비}) / \text{톤당 물류비} \times 100$
  - \* 청과물 9대품목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사과, 배, 포도, 감귤) 대상
- 검증방법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유통비용조사 자료 활용(매년)

##### □ 당년도 목표 및 설정사유

- '06년 목표 : 53.9%
- 최근 5개년('98 ~ '03)까지의 추세치를 활용하여 '04년 이후의 물류비 비중을 추정하여 목표를 설정
  - 주요 농산물물류실태는 차후년도 2/4분기중 그 조사 결과가 산출됨

##### < 과거 실적통계 및 장기목표 >

구분	'98	'99	'00	'01	'02	'03	'04(p)	'05(p)	'06	'07
물류비비율(%)	67.4	61.5	58.7	58.4	46.1	55.8	56.0	55.0	53.9	53.0

## 5) 농산물 표준규격 출하율

### □ 성과지표 설정사유

- 성과목표 : 농산물 품질향상
- 농산물의 비규격 출하로 인하여 국산 농산물의 품질저하, 불공정거래 및 소비자의 국산 농산물에 대한 불신 초래
- 농산물의 표준규격출하를 통하여 국산농산물의 품질향상과 포장유통으로 거래의 투명화를 유도하고 농산물 물류비 절감에도 기여

### □ 성과지표 내용 및 검증방법

- 전국 5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소재 공영도매시장 (5개)에 출하되는 50개 품목의 농산물을 매월 10일 1회 조사
  - (표준규격출하량/공영도매시장 출하량)×100
- 검증방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산물표준규격 유통실태
  - 조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정보팀(조사인원 16명)

### □ 당년도 목표 및 설정사유

- '06년도 목표 : 55.5%
- 최근 3년간의 추세치를 활용하여 차년도 목표를 설정
  - 농산물 표준규격출하율은 차년도 1/4분기중 조사 결과가 산출

#### < 과거 실적통계 및 장기목표 >

구 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농산물 표준규격 출하율(%)	17.1	26.9	39.8	46.2	49.8	53.7	50.4	54.0	55.5	56.5

## 6) 농식품 수출실적

### □ 성과지표의 설정사유

- 성과목표 : 농식품수출 확대
- WTO/DDA 농업협상, FTA체결확대, 쌀재협상 등에 의한 시장개방 가속화로 농업인 어려움 가중
- 우리농업의 활로개척과 공세적인 농식품 수출확대를 통하여 국내농산물 가격안정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 □ 성과지표 내용 및 검증방법

- 농식품 수출 증대의 정도를 파악하여 국내농산물 가격안정과 농가소득 증대에 대한 기여도 평가
- 검증방법 : '06.1.1 ~ 12.31까지 관세청의 수출통관 실적

### □ 당년도 목표 및 설정사유

- '06년 목표 : 2,400백만불(전년대비 4.3%증가)
- 환율하락·유가인상·폭설피해·경제성장률 전망치·최근 수출증가율 등을 감안하여 목표 설정(최근 5년 수출증가율 8.0%, 경제성장률 5.1% 반영)

### < 과거 실적통계 및 장기목표 >

(단위:백만불)

구 분	'99	'01	'02	'03	'04	'05	'06(P)	'13
농식품수출실적	1,680	1,580	1,640	1,860	2,085	2,224	2,400	5,000

## 7) 수출원예전문단지 수출 확대

### □ 성과지표의 설정사유

#### ○ 성과목표

- 수출원예전문단지의 수출실적 확대

○ 수출원예전문단지에서 수출을 확대하여 '06년도 수출목표 달성 및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

### □ 성과지표 내용 및 검증 방법

○ 정부에서 지정한 전국 수출원예전문단지에서 수출한 실적 (채소,과실, 화훼)

○ 수출원예전문단지 수출실적(물류비 지급시 수출실적 확인 수치)

### □ 당년도 목표 및 설정사유

○ '06년도 목표 : 22.0%

○ 최근 3년간의 농식품 수출실적(채소·과실·화훼) 추세치와 '06 수출 목표(24억불) 책정시 반영한 비율(7.9%)을 고려하여 목표설정

### < 과거 실적통계 및 금년도목표 >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수출실적 비율(%)	-	-	-	-	15.8	19.2	22.0

※ '04이후부터 실적치 확인가능



## 8) 국산 농축산물 소비자만족도 조사

### □ 성과지표 설정사유

- 성과목표 :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안전한 국산 농축산물 생산·공급
- 농업과 식품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다양하고 안전한 식품의 공급기반 마련으로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 국내 농축산물의 신뢰회복 및 소비기반 구축으로 가격경쟁력 제고 및 소비촉진 유도

### □ 성과지표 내용 및 검증방법

- 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
- 검증방법
  - 전국 10대 권역 도시가구 1,000호를 대상으로 양곡류, 채소류, 과일류, 축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구입가격, 품질, 안전성, 포장상태, 위치 등을 설문조사 (2006. 하반기)
  - 응답자수로 가중하여 5점 척도화하고, 이를 100점으로 환산(점수/5×100)

### □ 당년도 목표 및 설정사유

- '06년 목표 : 52.0%('05 실적 : 50.5%)
  - 매년 만족도 상승 목표(2%)

#### < 과거 실적통계 및 장기목표 >

구분	'98	'99	'00	'01	'02	'03(p)	'04	'05	'06	'07
만족도(%)	-	-	-	-	-	-	-	50.5	52.0	54.0

## 9) 가공식품 규격 제·개정

### □ 성과지표 설정사유

- 성과목표 : 식품 규격 제·개정
- 가공식품의 KS규격, 전통식품 규격, 인증심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식품의 품질향상 기반구축 및 대국민의 신뢰도 제고

### □ 성과지표 내용 및 검증방법

- 가공식품의 KS규격, 전통식품 규격 및 KS 인증심사 기준의 제·개정 여부
- 검증방법 : 규격의 제·개정 사항 공고 여부

### □ 당년도 목표 및 설정사유

- '06년 목표
  - 규격 제정 : 22건
    - 가공식품 KS 규격(16), 전통식품규격(5), 유기식품(1)
  - 규격 개정 : 35건
    - 가공식품 KS 규격(25), 전통식품규격(5), KS심사기준 (5)
- 식품 규격 전문인력 및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설정
  - '06년도 예산 확보시에 사전에 규격개발의 목표치를 설정함

### < 과거 실적통계 및 장기목표 >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규격 제정	7	5	-	-	-	22	21	25	31
규격 개정	30	21	-	44	16	35	30	35	42

## 10) 자조금 단체의 생산점유 비율

### □ 성과지표의 설정사유

- 성과목표 : 자조금단체의 농산물의 판로확대, 소비촉진, 수급 조절 및 가격안정
- 품목별 생산자단체의 자조금단체화 및 조성된 자조금단체의 생산점유비율 상승정도 평가

### □ 성과지표 내용 및 검증방법

- 산식 :  $\sum [자조금단체\ 생산량(액)/품목전체생산량(액)*100\%]$  /'10년 목표 품목수

\* '10년 자조금단체 목표 품목수 : 채소 14품목, 과수 7품목, 축산 7품목

#### ○ 검증방법

- 자율적 수급관리를 하는 자조금단체의 관리대상 농·축산물 비중 측정
- 측정시기는 매년 자조금 사업승인이 완료되는 3·8월하순 자조금 사업자가 제출한 품목별 구성원의 생산량 자료를 통해 실시

### □ 당년도 목표 및 설정사유

- '06년 목표 : 채소류 32%, 과수류 52%, 축산물 43%
- 자조금단체의 품목확대 및 생산점유비율 증가를 감안

#### < 자조금단체 생산점유비율(%) >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07
채소류	2.9	3.0	7.3	11.7	10.2	28.0	32.0	35.0
과수류	-	5.4	6.4	34.0	41.6	48.0	52.0	56.0
축산물	24.0	26.0	26.0	24.0	26.0	37.0	43.0	45.0

## 1) 농식품 안전성조사 부적합율

## □ 성과지표 설정 사유

농 산 물

- 농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 부적합율은 농산물의 안전성 수준을 수치화로 표현이 가능한 지표로서, 많은 선진국 및 식약청 등 국내의 다른 기관에서 사용중

축 산 물

- 축산물에 의해 인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주요 요인은 항생제 등 동물약품 잔류정도 및 유통과정에서 병원성 미생물 오염 여부
- 주사자국, 화농부위, 과거 위반이력 농가 출하가축 등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가축에 대해 도축장에서 잔류물질 중점검사
  - 식육 중 대장균 O157:H7,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등 식중독균의 오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주기적 검사 실시

## □ 성과지표 내용 및 검증방법

- 산식 : (부적합 농산물 건수/전체 안전성조사 건수) × 100  
(위반 건수/잔류물질 등 검사 건수) × 100
- 검증방법
  -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산물안전성조사 결과 파악
    - 매년 1월에 전년도 자료를 집계하여 부적합율을 파악할 수 있음
  - 3/4분기까지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사결과를 취합

## □ 당년도 목표 및 설정사유

### 농 산 물

○ '06년 목표 : 1.2%

-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1년간 실시한 농산물안전성조사 결과를 '06년도 말 기준으로 파악

○ 최근 3개년('02~'04) 평균이 1.3%이며 장기적으로 1.1%를 목표로 하고 있어, '06년에는 1.2%로 설정

- 부적합율은 1% 초반 부근이 한계점에 가까워 상향조정에 한계

\* 선진국은 1% 내외(미국 0.8%, 영국 1.3%, 아일랜드 1.55 등)

#### < 부적합율 >

구 분	'02	'03	'04	'05	'06	'07	'08
농산물안전성조사 부적합율(%)	1.1	1.5	1.3	1.2	1.2	1.2	1.1

### 축 산 물

○ '06년 목표 : 식육중 잔류물질 위반율 0.24% 이하,  
미생물 위반율 0.43% 이하

○ 주요국 위반율 및 그간의 추세 등을 감안하여 설정

\* 주요국 잔류물질 위반율('01년) : 미국 0.73, 영국 0.24, 호주 0.07, 일본 0.02

#### < 과거 실적통계 및 장기목표 >

구 분		'00	'01	'02	'03	'04	'05.9	'06	'07
잔류 물질	검사건수	70,213	102,824	105,720	115,360	114,057	92,679	120,000	120,000
	위반건수	75	177	145	236	290	225	290	290
	위 반 율	0.11	0.17	0.14	0.20	0.25	0.24	0.24	0.24
미생물	검사건수	47,072	119,668	116,257	105,036	135,598	101,389	120,000	120,000
	위반건수	74	285	238	483	633	297	520	500
	위 반 율	0.16	0.24	0.20	0.46	0.47	0.29	0.43	0.42

## 2) 사육단계 HACCP 시범사업 추진

### □ 성과지표의 설정사유

- 성과목표 : 사육단계의 HACCP 국내 정착 도모
- 가축 사육단계의 종합적인 안전성확보를 위해 새로이 도입하는 사육단계 HACCP 제도에 대한 국내 축산농가의 이해도 제고, 행정·기술적 제반사항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범사업 추진

### □ 성과지표 내용 및 검증방법

- 성과지표 내용 : 시범사업 참여 농가 수
- 검증방법
  - 수의과학검역원 결과

### □ 당년도 목표 및 설정사유

- '06년 목표 : 10농가(양돈)
- 대규모로 시설화가 되어 있고, 사육단계의 청결관리가 중요한 돼지사육 농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시범사업 참여농가 수를 성과지표로 선정

※ 양돈이외의 축종은 연차적으로 확대 : '07년(젓소), '08년(비육우), '09년(산란계), '10년(육계)

### < 사육단계 HACCP 신규지정 및 사후관리 농가수 >

(개소)

년 도	'06	'07	'08	'09	'10
농 가 수	10	200	400	600	1,000

### 3) 농산물원산지표시 이행율

#### □ 성과지표 설정 사유

- 원산지표시 이행율은 판매·유통중인 농산물에 대해 법령(농산물품질관리법)상 원산지표시의무에 대한 이행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서, 원산지표시 준수 여부의 척도로서 사용가능

#### □ 성과지표 내용 및 검증방법

- 산식 : 원산지표시 이행 업소(개소) / 원산지표시 이행대상 업소(개소)
- 검증방법
  -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국의 유통·가공업체 대상으로 표본조사

#### □ 당년도 목표 및 설정사유

- '06년 목표 : 97.4%
- 원산지표시대상 품목 확대시('06년 예정) 신규 표시대상 품목의 일부 미표시가 예상되며, 원산지표시제도 정착에 따라 이행율 증가에 한계가 있으므로, '05년 대비 0.1%증가치를 성과목표로 설정('01 ~ '05평균증가율 0.12%)

#### < 과거 실적통계 및 장기목표 >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농산물 원산지표시 이행율(%)	94.9	95.9	미조사	96.1	미조사	96.5	97.4

#### 4) 친환경인증농산물 비율

##### □ 성과지표 설정사유

- 성과목표 :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확대
- 소비자의 식품안전과 품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친환경농산물 공급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경종과 축산이 연계하는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의 성공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비중 평가필요

##### □ 성과지표 내용 및 검증방법

- 산식 :  $(\text{당해연도 친환경인증농산물 물량} / \text{전체 농산물 생산량}) \times 100$ 
  -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물량은 차년도 1월 중에 집계하고, 전체 농산물 생산물량은 차년도 5~6월경 집계
- 검증방법 : 농관원에서 인증실적이 집계되면, 작물생산량 통계치를 적용하여 인증물량 비중을 산출, 검증

##### □ 당년도 목표 및 설정사유

- '06년 목표 : 친환경인증농산물 비중 5.0%
- '10년까지 1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평균 30~40%씩 확대

##### < 과거 실적통계 및 장기목표 >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친환경농산물 비율	0.4%	1.1	2.1	2.5	3.5	5.0	6.3



## 5) 화학비료 사용량

### □ 성과지표 설정사유

- 성과목표 :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
-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고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하려면 화학비료 사용량을 절감해야 하며, 화학비료 사용량의 절감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단위면적당 사용량 평가 필요

### □ 성과지표 내용 및 검증방법

- 산식 : 화학비료 출하량(성분량)/경지이용면적
- 검증방법 : 비료공업협회에서 집계하는 당해연도의 화학비료 출하량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집계하는 경지 이용면적으로 나누어 산정

### □ 당년도 목표 및 설정사유

- '06년 목표 : 화학비료 사용량 350kg/ha
- '13년까지 40% 절감을 위해 매년5%씩 사용량 감축

#### < 과거 실적통계 및 장기목표 >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화학비료 사용량(kg/ha)	343	341	350	385	374	350	330

## 6)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 참여율

### □ 성과지표의 설정사유

- 성과목표 :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조기 확대
-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질병추적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성 확보와 수입쇠고기의 둔갑판매 차단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축산물의 소비촉진 유도

### □ 성과지표 내용 및 검증방법

- 국내에서 사육중인 소 두수 중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소 두수의 비율로 성과지표 설정
  - 산식 : (시범사업참여 사육두수/전체사육두수)×100
- 시범사업 자체평가지 참여 브랜드지역 회원농가의 등록두수 파악
  - 전체사육두수는 가축통계조사 자료를 활용

### □ 당년도 목표 및 설정사유

- '06년 목표 : 5.5%(100천두)
-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 자체평가 및 개선계획 ('05.11.14)에 따라 연차별로 참여두수 설정

#### < 과거 실적통계 및 장기 목표 >

구 분		'04	'05	'06	'07	'08	'09~'13	계
한육우 젖 소	브랜드/지역(개소)	9	9	17	50	전국	전국	
	참여두수(천두)	40	59	100	400	1,400	전두수	
	참여비율(%)	2.4	3.2	5.5	22	78	100	
	소요예산(억원)	8	10	10	130	240	1,525	1,923

## 7) 해외여행객 휴대육류 검색 건수

### □ 성과지표의 설정사유

- 성과목표 : 가축질병 예방 강화
- 구제역 등 해외 악성 가축질병의 국내 유입경로 중 가장 위험한 해외여행객의 휴대축산물 반입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해외 여행객의 휴대 축산물 검색이 중요

### □ 성과지표 내용 및 검증방법

- 해외여행객 휴대육류 검색실적 : 국제 공·항만에서 해외 여행객의 휴대축산물 검색건수
- 검증방법 : 검역원의 실적(11월말까지)결과로 평가

### □ 당년도 목표 및 설정사유

- '06년 목표 : 해외여행객 휴대육류 검색 21천건 이상
- 해외여행객의 증가 및 검역 탐지건 투입 확대, 최근 년도의 국제 공·항만의 휴대축산물 검색 실적 등을 감안하여 목표치 설정

### < 과거 실적통계 및 당년도 목표 >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휴대육류 검색실적(건)	5,053	4,665	7,740	10,012	19,200	20,000	21,000

## 8) 돼지콜레라 및 닭 뉴캐슬병 예방접종 면역형성을

### □ 성과지표의 설정사유

- 성과목표 : 가축질병 예방 강화
- 돼지 콜레라, 닭 뉴캐슬병 등 주요 질병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접종 등 사전 방역 활동 평가

### □ 성과지표 내용 및 검증방법

- 성과지표 산식
  - 돼지콜레라 면역형성을 : (면역형성/검사두수) × 100
  - 뉴캐슬병 예방접종을 : (항체양성농가수/검사농가수) × 100
- 검증방법 : 돼지콜레라와 뉴캐슬병의 면역형성률은 수과원에서 취합한 실적(3/4분기까지)결과로 평가

### □ 당년도 목표 및 설정사유

- '06년 목표
  - 돼지콜레라 면역형성을 : 95.5%
  - 닭뉴캐슬병 예방접종을 : 88%이상
- 청정화 목표달성을 위해 최근연도의 면역형성과 예방접종을 감안하여 목표치 설정

#### < 과거 실적통계 및 당년도 목표 >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돼지콜레라 면역형성을(%)	96.1	96.4	-	90.4	95.4	95.5	95.5
닭뉴캐슬병 예방접종을(%)	64.5	65.0	81.8	86.0	85.7	88.0	88.0

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실적

□ 성과지표 설정 사유

- 성과목표 :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 조성
- 마을종합개발사업이 권역당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동 사업이 시행 초기임을 고려, 단계별 추진계획대로 적정하게 수행되었는지의 여부를 측정

□ 성과지표 내용 및 검증방법

- 연간 사업진행단계(예비타당성, 기본계획수립, 시행계획수립 및 공사착수, 공사진행)별 사업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평가
- 검증방법 : 단계별 추진계획대비 실적을 평가(12월중)

□ 당년도 목표 및 설정사유

- '06년 목표
  - 예비타당성 조사 : 30권역
  - 기본계획권역 : 20권역
  - 사업시행권역 : 36권역
  - 공사착수권역 : 20권역(실시설계 및 공사착수)
- 권역별 사업이 5개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사업 초기년도임을 감안, 단계별 추진계획을 성과목표로 설정

## 2) 전원마을 도시민 유치율

### □ 성과지표 설정 사유

- 성과목표 : 도시민 유치를 통한 농촌 활력 제고
- 농촌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성과는 사업지구내에 도시민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유치했는가 여부에 따라서 나타남

### □ 성과지표 내용 및 검증방법

- 전원마을조성사업지구에 대한 도시민 유치계획에 따른 도시민 유치실적
  - 지구당 20가구 이상을 목표로 도시민비율을 50%로 설정
- 측정방법
  - 전원마을조성사업지구의 도시민 유치실적을 입주자 모집결과를 기준으로 성과 검증(12월)

### □ 당년도 목표 및 설정사유

- '06년 목표 : 50% (\* 25지구 × 20가구 × 50% = 250가구)
- 사업시행 초기연도임을 감안하여 '06년도 착수예정인 25 지구에 대하여 입주민중 50%에 해당하는 250가구의 도시민 유치계획을 '06년도 목표로 설정

### 3) 농촌복지 지원액 증가율

#### □ 성과지표 설정사유

- 성과목표 : 농촌복지 지원 증대
- 농촌은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농촌의 복지지원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농촌주민에 대한 지원자 수 및 지원액을 파악하여 농촌형 사회안전망 구축 진행상황을 점검

#### □ 성과지표 내용 및 검증방법

- 농업인에 대한 지원액의 증가율을 평가
  - 산식 :  $[(\text{'06지원액} - \text{'05지원액}) / \text{'05지원액}] \times 100$
  - \* 대상사업 : 농어민건강보험, 농어민안전공제, 영유아양육비, 대학생학자금(융자), 경영이양직불제
- 검증방법 : 측정에 필요한 데이터는 매년 2회(7월, 익년 1월) 국민건강관리공단·농협·보건복지부에서 작성한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

#### □ 당년도 목표 및 설정사유

- '06년 목표 : 6,331천원(5.2%)/연 1인 기준

#### <과거 실적통계 및 장기목표(최소한 2년 전망치)>

(천명·천원)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07
°1인당지원액(년)	2,800	3,173	3,275	3,452	5,674	6,016	6,331	6,648

\* '04년 신규사업 : 건강보험료, 영유아양육비 지원

#### 4) 녹색농촌체험마을 방문객수 및 매출액 증가율

##### □ 성과지표의 설정사유

- 성과목표 : 녹색농촌체험마을의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 WTO 출범이후 농업·농촌의 성장잠재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됨에 따라 도농교류활성화를 통한 농촌활력증진 도모
- 농촌관광활성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녹색농촌체험마을 방문객과 소득의 증가율을 지표로 설정

##### □ 성과지표 내용 및 검증방법

- 시·도(시·군)에서 점검한 녹색농촌체험마을 방문객 및 매출액의 전년도 대비 증가정도를 평가
  - 산식 : (당해년도 실적-전년도 실적)/전년도 실적 × 100
- 검증방법 : 지방자치단체(시·도·시·군)의 행정조사자료 활용(매년)

##### □ 당년도 목표 및 설정사유

- '06년 목표 : 전년대비 20%증가
- '04 ~ '05년도 증가율을 고려하여 목표 설정

#### < 전년실적 통계 및 당년 목표 >

구 분	'05	'06
◦ 마을 방문객수(천명)	994	1,266
◦ 마을 농촌관광매출액(억원)	111	140



## 5) 수리답 비율

### □ 성과지표 설정 사유

- 성과목표 : 재해대비 안전영농을 위한 생산기반 정비
- 가뭄(한발) 등 빈발하는 재해와 최근의 영농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안정적 농업용수공급이 필요하므로 수리답율을 지표로 선정

### □ 성과지표 내용 및 검증방법

- 성과지표 내용 : (수리답면적 / 전체논면적) × 100
  - 전체논면적 대비 용수개발로 수리시설이 완료되어 농업용수 공급 혜택을 받게되는 면적 비율 평가
- 검증방법 : 시·도 및 농업기반공사 조사(연도말)

### □ 당년도 목표 및 설정사유

- '06년 목표 : 수리답율 78.8% 달성
- 농업·농촌종합대책에 따른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06년에 수리답율을 78.8%까지 제고할 목표로 추진
  - '06년에는 101지구 43천ha, 2,436억원을 투자, 4천ha준공 예정

#### < 과거실적 통계 및 장기목표 >

구 분		'03	'04	'05	'06	'07	13
전체논면적(천ha)		1,127	1,115	1,113	1,112	1,110	1,100
수 리 답 (평년빈도)	면적(천ha)	877	870	873	876	880	900
	비율(%)	77.8	78.0	78.4	78.8	80.0	81.8
수리안전답 (10년빈도)	면적(천ha)	440	479	493	507	521	604
	비율(%)	39.0	43.0	44.3	45.6	47.4	54.9

## 6) 침수대비 배수개선담 비율

### □ 성과지표 설정 사유

- 성과목표 : 재해대비 안전영농을 위한 생산기반 정비
- 안정영농을 위한 재해예방의 일차적 수단은 배수개선담 비율임
  -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기반의 확충을 위해서는 자연 재해에 대비한 안전영농의 실현이 매우 중요하며, 배수개선담의 비율은 생산성지표, 규모화 지표를 포괄하고 있음

### □ 성과지표 내용 및 검증방법

- 성과지표 내용 : (배수개선완료면적 / 배수개선대상면적) × 100
  - 집중호우 등 침수피해에 대비 배수관리가 원활한 논 면적 비율 평가
- 검증방법 : 시·도 및 농업기반공사 조사(연도말)

### □ 당년도 목표 및 설정사유

- '06년 목표 : 배수개선담 비율 71.3% 달성
- '06년에 2,179억원을 투자하여 130지구 35천ha중 17지구 4천ha를 완공할 계획이므로 배수개선율을 71.3%로 설정 ('06년까지 실적 134천ha / 대상면적 188천ha × 100 = 71.3%)

### < 과거 실적통계 및 장기목표 >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배수개선면적(천ha)	107	115	123	128	129	134	138
배수개선율(%)	56.9	61.2	65.6	68.2	68.9	71.3	73.4

\* 배수개선대상 목표면적 : 188천ha

## 7) 마을단위 생활용수 개발

### □ 성과지표의 설정사유

- 성과목표 : 농어촌마을에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
-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전국 면지역 농어촌 자연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 공급
- 농어촌 오지마을까지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한 수혜인원 및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성과지표로 설정

### □ 성과지표 내용 및 검증방법

- 수혜인원과 상수도보급율 측정 산식
  - 수혜인원 : 전년도까지 수혜인원 + 당해연도 신규 수혜인원
  - 상수도보급율(%) : 당해년도 누계 수혜인원(천명)/5,438(천명) ×100
- 검증방법 : 지방자치단체(시군)의 행정조사자료 활용(매년)

### □ 당년도 목표 및 설정사유

- '06년 목표 : 누계수혜인원 1,977천명('06년도 34천명 전망), 상수도 보급율 36.4%
- 목표설정사유 : 과거의 실적(추세)을 감안하여 목표설정

#### < 과거 실적통계 및 장기목표 >

구 분	'04	'05	'06	'07	'08
◦ 수혜인원(천명)	1,896	1,943	1,977	2,016	2,055
◦ 면지역 상수도 보급율(%)	34.9	35.7	36.4	37.1	37.8

## 8) 향토산업 육성

### □ 성과지표의 설정사유

- 성과목표 : 사업성이 있는 향토자원의 발굴 및 지원
- 지역성과 전통성이 있는 향토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산업으로 육성
- \* 향토산업(자원)이란 재배·가공·관광 및 서비스산업이 복합 융합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함(보성 녹차, 함평 나비 등)

### □ 성과지표 내용 및 검증방법

- 성과지표 내용 : 향토자원 기본계획수립 및 예산반영 여부
  - 향토자원 발굴 및 지원절차 : 향토자원 조사(지자체) → 향토자원 평가 등 발굴(농림부, 전문기관등 심의) → 자원별 기본계획수립(지자체) → 예산반영(농림부, 지자체)
- 검증방법 : 향토자원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반영 실적으로 평가

### □ 당년도 목표 및 설정사유

- '06년 목표 : 19개 향토자원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반영
- 기 조사된 향토자원을 평가하여 발굴한 19개 향토자원의 사업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범사업('07년) 추진 준비

### < 과거 실적통계 및 장기목표 >

(단위 : 개소)

구 분	'05	'06	'07	'08
◦향토자원 조사(지자체)	100	100이상	100이상	100이상
◦향토자원 기본계획수립(농림부)	-	19	30	45

## 2. 혁신과제

혁신과제 1	AgriX를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
--------	---------------------

### 가. 온라인화 고객만족도

#### □ 성과지표 설정사유

- 농림사업 온라인화를 통해 기존 처리방식의 비효율적인 측면을 제거하면서 “일하는 방식개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참여고객(농업인, 시군, 시도)의 만족도가 중요
- 따라서,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온라인화 고객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설정

#### □ 측정방법

- AgriX 대상사업(직불제사업, 산지유통활성화 사업)의 주요 고객을 선정
- 면접, PCRM, 전화, 설문조사 등을 통해 고객 만족도 조사(연말)

#### □ 당년도 목표 및 설정사유

- '06년 목표 : 60%이상 만족
- 시스템 도입 초기에는 기존에 익숙한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온라인화가 완전정착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전망
- 따라서, 온라인화 초기에는 공감대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60%이상 고객만족도를 목표로 조사를 한 후 결과에 따라 수정·보완 후 연차적으로 목표를 높여나갈 계획임

## 나. 업무 처리시간 단축

### □ 성과지표 설정사유

- 농림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선현장에서는 집계·보고·사후관리 등에 상당시간을 소요됨에 따라 사업추진부서에서 진행상황 파악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였음
- 따라서 온라인화로 실시간 상황파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업무처리시간 단축”을 성과지표로 설정

### □ 측정방법

- AgriX 대상사업(직불제사업, 산지유통활성화 사업)중 일부를 선정, 업무처리 단계별로 기관별(농업인, 시군, 이행점검기관) 기존방식과 비교하여 업무 단축시간 조사
- 면접, PCRM, 전화, 설문조사 등을 통해 자체조사(연말)

### □ 당년도 목표 및 설정사유

- '06년 목표 : 20%이상 단축
- AgriX가 완전 정착 시, 업무 처리시간 30%를 목표로 두고 있는 만큼, 적용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20%로 설정

**가. 농림사업에 주요성과지표(KPI) 중심의 종합평가방식 시범도입****□ 성과지표 설정사유**

- 성과목표 : 주요 성과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재정사업, 제도 등),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선방안 제시
- 농림사업에 대하여 단위사업별 평가(재정사업자율평가) 만으로는 관련정책,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환류가 불충분

**□ 성과지표 내용 및 검증방법**

- 농림사업을 단위사업별 평가가 아닌 전사적으로 중요한 주요 성과지표(KPI)와 연계하여 종합평가하는 체계, 시범도입
- 검증방법 : 농림사업에 주요 성과지표(KPI)중심의 종합평가 방식 시범 도입 여부

**□ 당년도 목표 및 설정사유**

- 농림사업을 단위사업별 평가가 아닌, 관련된 전사적으로 중요한 주요성과지표(KPI)와 연계하여 종합평가하는 방식의 시범도입 여부
- 주요 성과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재정사업, 제도 등),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선방안 제시

## 나. 예산 편성시 세출 구조조정 추진

### □ 성과지표 설정사유

-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방식으로 정착됨에 따라 한정된  
재원범위내에서 효율적 자원배분 필요
- 농업·농촌종합대책 투융자사업 재원의 차질없는 확보를 위해  
자체 세출구조조정 추진

### □ 측정방법

- 2007년 예산편성시 2006년도 재량적지출 예산의 5%이상 감축  
여부 점검
- \* 융자사업의 이차보전전환,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일몰제 추진 등

### □ 당년도 목표 및 설정사유

- '06년 목표 : 5%이상 감축
-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가 부진하거나 연례적으로 이월,  
불용이 발생하는 사업 및 대외기관 지적사업 등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축소



## 가. DDA 협상단계별 기획홍보 추진

### □ 성과지표 설정사유

- WTO/DDA 농업협상결과는 국내농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농업계의 큰 저항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DDA 협상단계별로 기획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의 DDA협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농업인 등 이해관계인의 불신과 오해의 여지를 최소화하여 농업인 및 일반국민들의 농업협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DDA 협상결과의 원만한 국내비준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 □ 측정방법

- 협상단계별 기획홍보 방안 마련 여부
  - 협상단계, 이행계획서 작성단계, 이행계획서 검증단계 등
- 협상단계별 기획홍보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 조사(분기별)

### □ 당년도 목표 및 설정사유

- '06년 목표 : 단계별 기획홍보 방안 마련, 추진실적 : 90%이상
- 협상단계별로 기획홍보 추진방안은 정성적 분석으로 마련 여부를 판단하고, 실제로 단계별로 계획했던 홍보를 추진했는지 실적조사 실시

## 나. DDA 농업협상 대국민 인지도 제고

### □ 성과지표 설정사유

- DDA농업협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DDA협상 결과의 원만한 국내비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DDA 농업협상 진전동향, 영향 및 국내대책 등을 농업인·농관련업계·관련전문가 및 일반국민들이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DDA농업협상 관련사항들을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일반국민들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입체적 홍보가 필요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국민 DDA 농업협상 인지도 조사가 필요

### □ 측정방법

- 상·하반기 DDA 농업협상 인지도 조사

### □ 당년도 목표 및 설정사유

- '06년 목표 : 상반기 결과 대비 하반기 5%이상 인지도 제고
- 상·하반기 2회에 걸친 여론조사를 통해 DDA농업협상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지도가 높아졌는지를 파악 필요

가. 종합대책 보완시 농업계 의견수렴

□ 성과지표 설정사유

- 농업·농촌 종합대책 점검·조정 작업의 주안점은 농업인단체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지에 있음
- 농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정도를 성과 지표로 삼아 평가할 필요

□ 측정방법

- 「농림부-농업인단체」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농업계가 점검작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는지 평가
- 실무협의체 중심으로 농업인단체간담회, 전문가워크숍, 공개 토론회 등의 의견수렴 제도를 운영하였는지 평가

□ 당년도 목표 및 설정사유

- '06년 목표 : 실무협의체 구성 및 정상적인 운영
- 농업인단체와 농림부가 공동작업으로 농업·농촌종합대책 점검작업을 추진하는지 평가

## 나. 종합대책 보완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 □ 성과지표 설정사유

- 농업인과 함께 만든 종합대책이 정책고객들에게 만족을 주었는지를 평가하여 종합대책 완성도를 점검하고 종합대책 점검 및 보완작업의 결과 홍보에 활용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향후 농업정책 시행과정에 반영

### □ 측정방법

- 전문여론조사기관 선정, 조사방법, 조사내용 등 고객만족도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실무협의체 등을 활용하여 농업인 단체와 협의하여 결정

### □ 당년도 목표 및 설정사유

- '06년 목표 : 고객만족도 50% 이상
- 비교 가능한 통계항목이 없는 첫 조사라는 의미에서 중간정도의 만족도 목표 설정
- 지난해 쌀협상비준, 쌀값하락 등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 종합대책을 점검하는 시기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만족도 목표 설정

가. 농업관련 유관기관과 인적교류 확대

□ 성과지표 설정사유

- 농정여건 변화에 따른 농업정책 보완 및 대책수립도 중요하지만, 농업 투자기관 등 정책시행을 담당하는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정책의 현장 적용 가능성 및 원활한 적용 등을 위해서는 상호교류가 중요한 요소임
- 이에 농림부 본부와 농협, 투자기관, 민간기업 등 농업관련 기관과의 인적교류 확대로 상호 업무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상호 이해폭을 넓혀 농업정책의 적용 및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측정방법

- 농업관련기관과 인적교류 실적 점검(연말)

□ 당년도 목표 및 설정사유

- '06년 목표 : '05년 실적(2명) 대비 100%이상 교류 확대
- 정책기획과 집행기관이라는 업무성격차이, 교류자 파견기관 적응력 등을 감안하여 2005년 실적정도로 목표치를 설정

## 나. 농림공직자의 현장체험 실적

### □ 성과지표 설정사유

- 농림부 특성상 농업경영이 일어나고 있는 농업현장을 도외시하고 농업정책의 계획·시행할 수 없는바, 농림공직자의 현장체험 또는 현장학습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농림공직자의 현장체험 및 현장학습을 통하여 농업현장 이해도를 증진하고 농업인과의 유대로 농업정책의 현장정착을 제고하는 기회로 삼음

### □ 측정방법

- 농림공직자 현장체험 실적 점검(연말)

### □ 당년도 목표 및 설정사유

- '06년 목표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농림부 소속 공무원 95% 이행
- 2006.7월 고위공무원단 도입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1~3급 공무원은 제외하고, 국외훈련·파견자 복귀·병가 등으로 이행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 95% 이행으로 목표치 설정

# 2007년도 농림부 업무계획

2007. 1.



“함께가꾼 우리농업! 함께누릴 푸른미래!”





# 보고 순서

I. 이제까지의 정책성과 평가 및 현 좌표 진단 .....	561
1. 과거 농정의 성과 및 평가 .....	563
2. 농정의 현좌표 .....	570
3. 2007년 전망 및 향후 농정방향 .....	573
II. 07년 전략목표 및 주요 성과목표 .....	577
1. 업무계획의 주요특성 .....	579
2. 업무계획의 목표체계 .....	581
(1) 전략목표 : 농업개방 확대에 대응한 농정시스템 체계화 .....	582
(2) 전략목표 : 소비자에게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 공급 .....	597
(3) 전략목표 : 농업체질 강화 및 경쟁력 제고 .....	616
(4) 전략목표 : 농업인 소득향상 및 경영안정 강화 .....	630
(5) 전략목표 : 도시민과 상생하는 활력있는 농촌구현 .....	645
III. 혁신과제 .....	661
IV. 성과측정 체계 .....	673
V. 통계인프라 확충 .....	685



---

# **I . 이제까지의 정책성과 평가 및 현 좌표진단**

---

**1. 과거 농정의 성과 및 평가**

**2. 농정의 현 좌표**

**3. 2007년 전망 및 향후 농정방향**



1

과거 농정의 성과 및 평가

역대 농정 개관

구 분	여 건	정책 방향	성 과	한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민 정부 ('94~'97)</li> </ul>	UR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어촌 구조개선대책</li> <li>-전업농육성</li> <li>-생산기반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곡의 안정적 지급 달성</li> <li>◦농업구조개선 진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영안정 장치 미흡</li> <li>◦도·농간 생활환경격차 확대</li> <li>◦농업인 자생력 미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의정부 ('98~'02)</li> </ul>	외환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농촌발전계획</li> <li>-농가경영안정</li> <li>-유통H/W 확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통 구조 선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정부 4년 ('03~'06)</li> </ul>	쌀협상 FT/ODA 등 개방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농촌 종합 대책</li> <li>-양정제도 개편</li> <li>-유통S/W 개선</li> <li>-직불제 확충</li> <li>-농촌의료·복지·지역개발</li> <li>◦중장기 투융자계획 수립·추진</li> <li>◦농식품육성 및 안전성 정책 본격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구조개선 가속화</li> <li>◦소득정책 본격화</li> <li>◦1사1촌 운동 등 도농교류 및 지역균형 발전 여건 조성</li> <li>◦농업인·지자체의 농정 참여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종사자 인구 감소 추세 지속</li> <li>◦계층간 농업 소득 양극화 심화</li> <li>◦개방 확대로 인한 불안감 확산</li> </ul>
---	-------------------	--	---	--

《 문민 정부 》

- '93년 UR타결 이후 본격적인 개방화로 접어들면서 우리 농업의 취약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인식
  - 이미 기반정비가 완료된 선진국에 비해 농업생산기반, 유통 시설 등 농업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인프라가 크게 부족**  
⇒ 농업 SOC 구축 등 **경쟁력 제고사업**에 집중적인 투자 요구
- 전업농 중심의 **규모화 정책**으로 전환하고 '94년 농어촌 발전 대책, 농특세 신설을 바탕으로 **선진국형 농업인프라 구축**에 중점
  - 전업농 및 법인경영체 육성을 통해 **농업경영의 규모화** 촉진
    - 농지법 제정('94)으로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허용, 진흥지역내 소유상한 폐지 등 전업화·규모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 대구획 경지정리, 수리시설 확충,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등 **효율적인 영농 기반 구축**
    - 시설온실, 축사 등 생산시설 현대화 및 기계화를 추진하는 한편, 농산물 안전성 조사제도 도입('96)
  - 농특세를 재원으로 농어민연금제 도입('95), 농어촌의료시설 지원, 농공단지 등 **농어촌 소득원개발 사업** 추진
  - 수확기 매입 물량가격을 미리 예시하는 추곡 약정수매제 도입('97)
    - 민간유통기능 활성화를 위해 쌀값의 계절진폭을 15%까지 허용

## 《 국민의 정부 》

- '97년말에 발생한 외환위기는 농산물 생산비 급증과 소비위축 및 가격하락을 유발하여 농가 경영불안이 고조
  - 특히, 금리의 급상승은 규모화 추진에 따른 농가들의 차입금 부담 증가로 이어져 농가부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 ⇒ 농가경영회생 및 부채대책 등 농가경영안정이 최우선 과제
- 농업·농촌 발전계획('98), 농업·농촌기본법 제정('99)을 기반으로 농가 경영안정과 유통구조 혁신, 농업관련 조직 정비에 중점
  - 부채경감특별법 제정('01) 등 '98~'01년간 6차례의 부채대책을 실시하고, 영농자재 부가세 환급 등 조세감면 확대
    - '94년 이후 동결기조를 유지해왔던 추곡수매가를 다시 인상('98~'01)
    - 논농업 직불제, 농작물 재해보험('01) 등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 시작
  - 유통 H/W 건설, 친환경농업확산 등 농업구조 선진화 추진
    - 도매시장·유통센터 건설과 함께 작목반, 산지유통전문조직('00) 등 생산자 조직화 및 전문화된 산지유통주체 육성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도입,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수립('01) 등 친환경 안전농산물 공급체계 구축
  - 농진공·농조·농조연을 통합한 농업기반공사 출범('00.1), 농축·인삼협 중앙회 통합('00.7) 등 비효율적인 관련기관 대대적 정비

## 나 과거 농정의 평가

- UR 타결 당시 팽배했던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관세에 의한 국경보호와 생산성 향상으로 시장개방 영향을 최소화
  - UR 이후('94~'02) 농축산물 수입 증가율(41%)은 이전('86~'94) 증가율(392%)보다 낮은 수준
  
- 생산기반 정비, 시설 현대화 및 기계화의 진전 등으로 노동생산성('94~'02)은 연평균 5.1%, 토지생산성은 1.7% 증가
  - \* 진흥지역 논 경지정리율/수리답률 : ('94) 71.1% / 74.0% → ('02) 81.8 / 77.3
  
- 규모화되고 전문화된 농가가 증가하는 등 농업구조개선 진전
  - \* 3ha 이상 쌀농가 / 1천두 이상 양돈농가 : ('94) 32천호 / 790호 → ('02) 41 / 2,945
  
- 품질인증·포장규격화 및 브랜드화 촉진 등 유통구조도 개선
  - \* 품질인증 농산물 : ('94) 640건(20천호) → ('02) 1,154건(56천호)
  
- 그러나, 쌀 수급관리 대처 부족으로 과잉재고 발생
  
- 기반정비가 완료된 선진국과 달리 생산기반 정비와 소득안정 병행 추진에 따른 재원의 제약으로 소득 및 경영안정 장치는 미흡
  - 직불제, 재해보험 등이 도입되었으나 초기 단계에 불과하고 재해 등 경영 위기시 희생수단이 부족
  
- 농업경쟁력강화에 치중하여 농촌복지분야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
  - 교육·의료·주거환경 등에 있어서의 도농간 격차 확대로 농촌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농촌활력 저하



## 다 참여정부 4년('03~'06)의 성과

- ◇ FTA/DDA 협상, 쌀협상 등 시장개방 확대 움직임 속에서 농가소득은 정체되고 농업인 불안감은 확산
  - ⇒ 개방확대에 따른 농가불안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지속적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농정시스템 혁신 필요
- ◇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 속에서 농업·농촌 종합대책 수립('04.2, '04 ~ '13간 119조원 투융자)
  - 농정 패러다임을 생산, 가격지지 위주에서 소비자 안전 및 품질, 소득지지 중심으로 전환
  - 농업중심의 농정방향을 전업농 육성 등 산업정책, 경영안정 등 소득정책, 복지인프라 확충 등 농촌정책으로 세분화

### □ 양정·농지·협동조합 등 농정의 근간이 되는 제도를 개편

- 50년 이상 지속된 가격지지 성격의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시장지향적으로 양정제도를 개편
  - 시장가격으로 매입·방출하는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되, 쌀값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는 쌀소득보전직불제로 보완
- 농지임대 허용 범위 확대 등 규제를 완화하고 종합적인 농지관리 기구로서 농지은행제를 도입하여 농업구조개선을 촉진
-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앙회의 부서별 책임경영 체제 구축 및 일선조합 연합사업 활성화 추진

## □ 직불제, 재해보험 등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장치를 내실화

- 쌀소득보전 직불제, 조건불리 직불제 도입 등 직불예산 대폭 확대
  - \* 농업예산 중 직불예산 비중 : ('01) 4.1% → ('03) 9.8% → ('06) 23.6%
- 농가의 경영위험 부담 완화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확대 및 국가재보험 도입, 정책자금 금리인하 등 추진
  - \* 재해보험 대상품목/정책자금 금리 : ('01) 2개/0~6.5% → ('06) 7개/0~3%
- 연체로 생산수단 상실위기에 처한 농가에 대해 경영회생지원제도 도입

## □ 고품질 우수 브랜드 농산물 유통 체계 구축

-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파워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농축산물 우수브랜드 육성 계획' 수립('06)
- 생산농가와 유통조직을 연계시켜 균일한 품질·규격의 브랜드 농산물을 공급하는 규모화된 공동마케팅 조직 육성

## □ 선진국 수준의 농식품 안전성 확보 기반 마련

- 생산에서 유통까지의 위생관리를 위해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이력추적제도 등 선진 제도 도입·확산
  -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도입('04), 210천두에 대한 이력추적 관리('06.12)
- 가축분뇨자원화 등 경종농업과 축산을 연계하는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시스템 확산
- 농약·중금속 등에 대한 검사인력·장비 확충 등 검사 강화
  - 안전성 부적합율이 1% 내외로 선진국 수준에 근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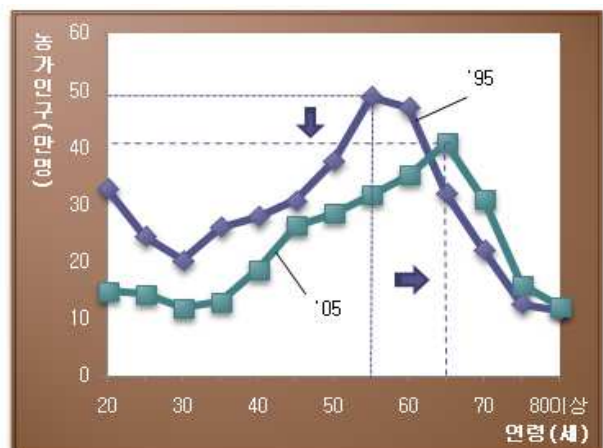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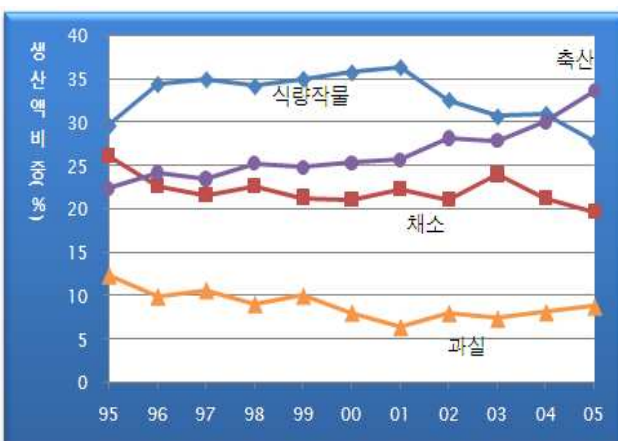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을 제정 ('04.3)하여 복지·교육·지역개발 등 농촌문제 해결에 본격 착수
  - 범정부 위원회를 구성, 5개년 기본계획('05~'09) 수립·추진
  - 농촌을 가서 살고 싶은 매력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05.12)”마련·추진
  
- 1사1촌 운동을 중심으로 민간주도의 도농교류 본격 확산
  - '06.12월말 현재 결연건수 14,498건, 교류실적 1,854억원
    - \* 농산물직거래 974억원, 일손돕기 341억원, 농촌체험 204억원 등
  - 도시민의 농촌유입 촉진을 위해 전국 55개 지구를 대상으로 전원마을 조성사업(20~50호) 추진
    - \* 「'06 전원마을 페스티벌」 개최('06.10.12~15)
  
- 한·칠레 FTA, 쌀협상에 따른 대책 추진
  - 한·칠레 FTA에 대응한 FTA 지원특별법 제정('04.3) 및 기금설치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 추진
  - 쌀산업의 취약한 경쟁력을 감안, 쌀 관세화 유예기간을 10년 연장('05~'14)하고 쌀산업종합대책 추진
  
- 정책고객의 참여 확대 및 농촌 현장과의 점점 확대
  - 농업인단체가 정책 수립·집행 과정에 적극 참여, 농정 신뢰 제고
  - 농업정책 제안 및 성공사례 공모 등 ‘우리농업 희망찾기운동’ 본격 추진
  - 농림공직자의 현장체험학습 및 농가자매결연 등을 통해 현장감 있는 농정시책 수립·집행 노력 강화

## 2

## 농정의 현 좌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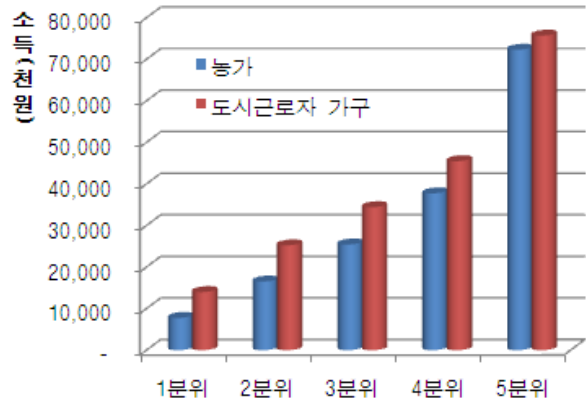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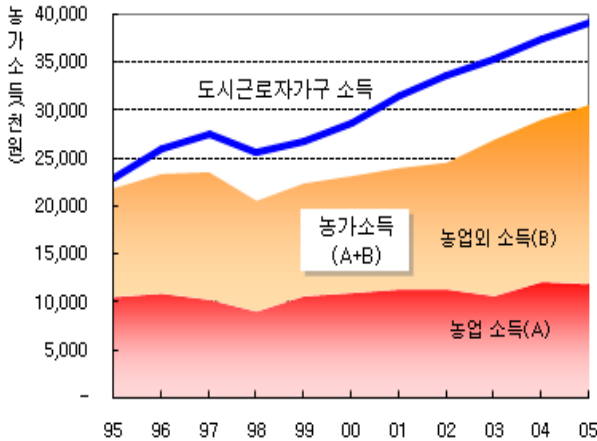
### 농업 구조

- 지속적인 규모화 정책에 따라 전업농이 증가하고 전업농이 차지하는 생산비중도 크게 증가하는 등 **규모화·전업화** 진전
  - \* 3ha이상 쌀농가(농가비중/면적비중) : ('95) 2.8%/15.8 → ('05) 5.4/22.0
  - \* 1천두이상 양돈농가(농가비중/사육비중) : ('95) 2.4%/36.5% → ('05) 24.0/77.8
- 소비패턴 변화 등에 따라 쌀 등 식량작물 생산액 비중은 감소 ('95 : 29.6% → '05 : 27.8)하고, 축산 비중은 증가(22.4→33.5)
- 기계화율 제고(벼농사 '95 : 80% → '05 : 90) 등으로 생산성이 증대되고 미곡종합처리장(RPC), 산지유통센터(APC) 등 유통 기반도 구축
  - \* RPC 매입비중 / APC 처리비중 : ('95) 14% / 1% → ('05) 34% / 16%
- 농가인구 감소('95대비 △29.2%)와 함께 고령화 급진전(65세 이상 : 29.1%)
  - 구조개선 과정에서 1ha미만 영세농 비중도 증가('95 : 58% → '05 : 62%)
    - \* 농가인구(비중)/65세이상 비중 : ('95) 485만명(10.8%)/16.1% → ('05) 343(7.3)/29.1



## 농가 경제

- 농가소득은 '95~'05년간 연평균 3.4% 증가(21,802천원 → 30,503)
  - 농업소득은 '95년 이후 정체상태이나 직불제 확충 등으로 농업외 소득이 증가(농업소득 비중 '95 : 48%→ '05 : 39)
  - 영농형태별로는 축산농가 소득(44,061천원)이 가장 높은 반면, 논벼농가(22,648천원), 일반 밭작물 농가(19,432천원) 소득이 낮음
  - 부채/자산 비율은 규모화된 농가, 젊은 경영주, 원예·축산의 경우 높게 나타나 상업적 영농으로 진전될수록 경영안정 장치 필요
- 도·농간 소득격차는 '95년 95.1%에서 '02년 73%까지 하락했으나, '05년 78%로 회복
  - 농가소득 5분위(상위 20%) 계층과 1분위(하위 20%) 계층간 소득 격차는 9.3배(도시 가구의 경우 5.4배)
    - 농가 5분위 소득은 도시가구 5분위 대비 95.2%이나 1분위 소득은 55.5%로 저소득 계층일수록 도농간 소득 격차가 확대



## 농촌 생활여건

### □ 농촌의 복지·교육 등 생활여건 개선 지원을 계속 확대

- 농촌 기초생활환경 정비를 위해 '04년까지 농촌정주기반 확충 사업(770개면) 1단계 완료, 오지종합개발사업(399개면) 2단계 완료
- 농업인 연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규모 확대
  - \* 연금보험료 지원액(1인당) : ('95)13천원→('05)224, 건강보험료 경감액 : ('99)51천원→('05)293
  - \*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인원) : ('95) 190억원(19천명) → ('05) 637(25천명)

### □ 부담경감 차원의 지원은 확대되었으나 농촌 인구 감소에 따른 투자저하로 인프라는 부족

- 농촌인구는 전체인구의 18.5%(8,764천명)이나 농촌지역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 비율은 9.0%, 12.4%에 불과
-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은 476개로 전국 1,420개 읍면의 34%
- 전체 농촌지역 학교 5,176개 중 학생수 100명이하 소규모 학교 수는 2,563개교(49.5%)
- 농촌의 주택보급율은 100%를 상회하나 25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은 도시의 5배 이상 수준(농촌 46.5%, 도시 9.1%)

- 수도시설이 없는 농촌지역 가구는 37.9%(도시지역 0.7%)

□ 농촌 고령화, 외국인민자 증가 등은 농촌의 새로운 여건으로 부각

○ 농촌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9%(도시지역 7%)로 초고령사회 근접

○ 농촌지역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 14천여명('05년 추정)

## 가 여건 전망

- 금년은 FTA, DDA 등 포괄적이고 강도 높은 개방협상이 추진될 전망
  - FTA 협상은 '06년 개시된 미국을 비롯,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협상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
  - 주요 쟁점에 대한 이해대립으로 중단('06.7)되었던 DDA 협상은 다보스 포럼('07.1)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추진이 예상
    - ⇒ 소득비중이 높은 민감품목을 중심으로 시장개방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충분한 보완대책에 대한 요구도 가중
- 국내적으로는 AI 등 가축질병 발생, 식품안전 사고 등에 따라 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눈높이는 더 높아질 전망
  - ⇒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국내산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와 함께 수입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단속 및 철저한 검역이 요구
- 농촌 고령화 및 인구감소 추세는 지속되는 반면 도시민의 농촌 휴양자원에 대한 수요는 더욱 높아지는 추세
  - ⇒ 농촌을 생산·정주·휴양을 연계한 복합생활공간으로 확대 조성 필요



- ◇ 소비자 중심의 **농식품 정책을 강화**하고 전업농 중심의 농업 경쟁력 제고 및 삶의질을 향상할 수 있는 농촌정책 추진에 중점
- ◇ 특히, 전업 경영체 육성을 위해 '13년까지 농가유형별 맞춤형 농정체계를 구축, **선택적·차별화된 농정지원 체계로 전환**

□ **농식품에 대한 위생·안전성** 관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여 소비자 신뢰 제고

○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와 발전을 위한 농식품정책** 적극 모색

\* 「농업·농촌기본법」을 「식품·농업·농촌기본법」으로 개정하고, 「식품산업진흥법」을 제정하여 식품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 제공

○ GAP, HACCP, 이력추적제, 원산지표시제 등을 내실화하고 **비료·농약, 항생제 감축 및 중금속 등 허용기준 관리 강화**

○ **중장기 식량자급 목표**를 설정하여 건강한 국민 식생활을 유도하고 농업정책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 **농업이 개방화 속에서도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종자산업·신기술 개발 등 신성장 동력 확충

○ 성장가능성에 따라 농가유형을 구분하고 **농가등록제**를 통해 농가의 수준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 지원**

-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성장 가능한 전업농 중심으로 산업·소득 정책 집중 지원**하고 고령농에 대해서는 복지정책 강화
  - 규모화된 전업농 및 성장가능한 중소농에 대해서는 직불제 확충, 경영위험관리 프로그램 및 규모화 지원에 중점
  - 고령농 및 취미농에 대해서는 농업정책 대상에서 제외하되, 고령농에 대해서는 복지차원의 지원 확대
- 품목별 우수 품종개발 및 신기술 개발, 유통 차별화 및 브랜드화 등에 대한 지원 확대로 **농산물 품질고급화**
  -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우수 농산물 브랜드 육성 추진
  - 지역농협의 유통혁신 및 전국단위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
-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농촌의 생활여건을 중소도시 수준으로 개선, **농촌주민의 삶의질 향상 및 도시민의 농촌 유치 확대**
- 면지역의 기초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면소재지 및 배후 **중심마을에 대한 집중적인 개발** 추진
  - 노후·불량 주택개량, 상수도 보급 확대 등 농촌 주거환경 개선
- 연금·건강 보험료 부담 경감 등 **농촌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여성·노인 등 농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강화
- 농촌을 산업·휴양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향토자원, 농촌관광 등 소프트웨어 산업**을 집중 개발하고 1·2·3차 산업 융복합화
  - 도시민 농촌체류(5도2촌) 및 이주(2도5촌)를 통해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



---

## Ⅱ. 2007년 전략목표 및 주요 성과목표

---

1. 업무계획의 주요특성
2. 업무계획의 목표체계



# 1

## 업무계획의 주요특성

- ‘2007년도 업무계획’은 성과관리 전략계획에서 제시한 임무와 비전하에서 **당면 현안 및 농정의 현위치를 감안하여 전략목표 조정**
- 중장기 계획인 ‘성과관리 전략계획’에서는 농정을 농식품안전·농업체질강화·농업인 소득안정·농촌 활력증진 체계로 수립
- 2007년도 업무계획은 전략목표를 **농정시스템 체계화, 농식품 안전, 농업 체질강화, 농업인 소득안정, 농촌 활력증진** 순으로 배열
  - 2007년도는 한미 FTA, DDA협상 등이 가장 큰 현안으로 예상됨에 따라, 협상 대응 및 농정시스템 개편을 첫 번째 전략목표로 선정
  - 이어서 농정의 우선순위를 농식품 안전 및 농업체질 강화, 농업인 소득 안정, 농촌 활력 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
- 2007년도 업무계획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추진했던 **농정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고 개방화시대 새로운 핵심정책을 제시하는데 초점**
- 농정개혁 마무리 차원의 과제로는,
  - (i) (농업·농촌 종합대책 조정) : 한미 FTA 등 농정환경 변화에 맞도록 '04.2월에 수립되었던 농업·농촌 종합대책과 119조원

투융자계획을 조정하여 중장기 농정대책을 실효성있게 재정립

- (ii) **(맞춤형 농정추진체계 정립)** :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과적인 농정 추진을 위해 평균농가를 대상으로 한 기존 정책들을 전면 개편, 전업농 또는 성장가능성 있는 농가를 중심으로 정책역량 집중
- (iii) **(협동조합 경제사업 활성화)** : 농식품의 고품질 브랜드화 및 물류효율화 촉진을 위해 협동조합 중심의 산지·소비지 유통 활성화 대책 추진

○ 개방화시대 농정을 이끌어갈 새로운 핵심정책으로는,

- (i) **(식품산업 육성)** : 외식비중 증가 등 달라진 소비자의 식생활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
- (ii) **(농축산물 우수브랜드 육성)** : 수입산과의 경쟁심화, 소비자의 고품질·안전성 선호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 브랜드 경영체를 중심으로 통일된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광역 브랜드로의 통합을 통해 시장교섭력 확보
- (iii)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 : 농식품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해 가축질병 방역대책을 강화, AI·소부루세라병·구제역 등 주요 가축질병의 예방 및 초동 방역체계를 추진
- (iv) **(체계적인 농촌지역 개발사업 추진)** : 농촌에 대한 시·군단위, 면단위, 마을단위 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농촌주민의 정주 생활 기본수요 충족을 위한 기초생활환경을 확충하고, 도시민들의 휴양 및 이주 수요를 적극 유치



## 2

# 업무계획의 목표체계

### < 임무 >

국민에게 안전한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며, 농촌을 풍요로운  
산업·생활·휴식공간으로 조성한다

### < 비전 >

농식품 세계일류, 농촌 Global Top 10



- ◇ 한미 FTA를 비롯하여 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협상이 예정되어 있고 DDA협상도 본격 추진될 전망
  - 협상이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더라도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농업부문의 일정수준 피해는 불가피
- ◇ 개방 확대라는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농정시스템 개편 필요
  - 협상 단계에서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체계적인 농업협상 시스템 구축
  - ‘농업·농촌종합대책’(’04.2 수립)과 중장기 투융자계획이 개방화 시대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조정
  - 평균 농가 중심의 정형화된 농정지원체계를 전면 개편,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농가유형별 차별화된 정책지원 체계 구축
  - '05년 도입된 공공비축제·쌀소득보전직불제 등 새로운 양정제도를 조기정착
  - 농업·농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정부·지자체·농업계간 현장중심의 농정 협력 시스템을 구축, “농업계 대화합” 추진

(1) 주요 내용

- ◇ FTA·DDA협상 등에 적극 대응, 개방 피해를 최소화하고 협상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 노력
- ◇ 농업분야 국제협력을 통해 국가위상을 강화하고 향후 농업 협상에서의 발언권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활용

- 한·미 FTA 협상에서는 민감 품목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와 농산물세이프가드를 확보하여 피해 최소화
  -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는 다른 나라와의 FTA 협상에서도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하는 데 협상력을 집중
- DDA 협상은 급진전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쟁점별 실익 확보 노력
  - 관세 감축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G10(수입국 그룹) 등과 공조강화
  - 최종 양자협상 과정에서 개도국 지위 확보에 주력
- 개도국 등과의 농업분야 국제협력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강화하고 향후 WTO협상 등에서 협상력 제고 기반 확보
- 농업인 등 이해관계인들의 협상 참여와 의견수렴을 확대하여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의 협상력을 강화

## [2] 세부 추진계획

### 가 한미 FTA 협상

#### □ '07년 3월 협상타결을 목표로 양국간 입장차이 해소 노력

- 민감품목은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양허방식과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등을 통하여 타협안 마련
  - 쌀은 양허에서 제외하고, 기타 품목은 양허제외, 관세 부분감축, 관세 철폐기간의 장기간, 세이프가드, 수입 쿼타 설정 등으로 보호

우리측	미국측
○ 쌀은 양허에서 제외	○ 쌀을 포함한 모든 품목이 협상대상
○ 민감 품목은 양허제외, 장기간 관세철폐, 세이프가드, 수입 쿼타 설정 등 예외적 취급	○ 민감 품목이라도 축산물, 과일 등 미국측 관심 품목은 전향적으로 양허방향 검토
○ 쇠고기 검역문제는 협상과 분리하여 대응	○ 쇠고기 검역문제도 협상과 연계하여 협상 타결시까지 합의 추진

#### □ 협상타결까지 단계별로 예상되는 다양한 협상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상황별 전략을 마련하여 적극 대응

- 협상전략 수립과정에서 품목단체 등 농업인들의 참여확대와 의견수렴을 통하여 협상에 대한 피해의식, 불안감을 경감
- 협상결과로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하는 품목은 농업계와 협의하여 범정부적 국내 보완대책 마련

□ 협상과정 및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 공감대 형성

- 협상 전에 농민단체 등과 워크숍, 협상 후에 설명회를 개최하여 협상 진행상황에 대한 이해당사자 이해제고
- 국회 한미 FTA특위, 상임위에 수시로 협상내용 보고
- 언론 브리핑, 기고, 인터뷰를 통하여 협상정보 전파

나 기타 FTA 협상

□ 현재 진행 중인 FTA : 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처

- 아세안 : '06. 4월 상품분야 협상이 타결, '07년 상반기 중 국회 비준동의 후 상품분야의 조기 자유화
- 캐나다 : '07년말 타결 목표, 축산물 등 민감 품목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 확보
- 인 도 : '07년말 타결 목표, 쌀 등 민감 품목 양허 제외노력

□ 향후 추진 예정 FTA :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협상 대응

- EU : '07년 협상개시 예정, 축산물 등 민감 품목은 양허에서 제외되도록 노력
- 중국·호주·뉴질랜드 : '07년 산·관·학 공동연구 개시, 농업의 상당부분 제외 등 실익 확보 노력

□ '07.1~3월중 관세와 보조금 감축폭 등 협상쟁점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상이 극적으로 진전될 가능성

○ '06.7월 협상 중단 이후 '06.11월 협상이 재개되었으나, 관세·보조금 감축폭 등에 대한 주요국간 입장차는 지속

\* '07.1.27 스위스 다보스포럼 계기 소규모 각료회의 개최

○ '07.6월말로 종료되는 미국 무역촉진권한(TPA)과 연계하여 3월말까지 협상 논의가 집중될 전망

- 3월까지 핵심사항에 대한 진전이 있을 경우, '07년말 최종 타결 가능성

□ 우리나라가 속한 G10(수입국 그룹), G33(수입개도국 그룹)의 입장이 집중 공격받을 가능성에 대비, 주도면밀한 전략 마련

○ 핵심쟁점별로 우리와 입장이 유사한 나라들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개도국 지위 확보를 위해 협상력 집중

- 관세 상한 도입 저지 및 관세감축 최소화 쟁점은 G10 국가 그룹과, 개도국 특별품목 확보 문제는 G33과 공조체제 유지

○ 최종 양자협상 과정에서 개도국 지위 확보를 위해 주요국 관심사항 사전 파악 및 대응전략 마련

- 개도국들의 농업·농촌개발 경험전수 및 기술협력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협력 사업추진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
  - 농촌진흥청, 농촌공사 등 유관기관간 「국제농림협력사업 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사업추진 정보공유, 홍보 등 유기적 협력 도모
  - 평가결과를 익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하는 환류시스템 구축
  
- 농업분야 인력 및 기술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뒷받침
  - 농업투자환경조사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마련
    - 유망국가에 대한 농업조사와 정보제공으로 민간의 해외투자 지원
  - 농업협력사업과 연계하여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 확대
    - 아세안, 몽골, CIS 등에 농기자재·유통관련 업체/인력 진출지원
  
- 범정부 차원의 자원 외교활동, 국제사회에서의 입지 강화 등을 고려하여 협력대상국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집중 지원
  - 중점지원대상국을 중심으로 인도적·전략적 협력사업 확대
    - 지역별 핵심국가를 중심으로 MOU체결 등 협력기반 확대
    - 아세안의 AI 진단기술 전수(6월), 몽골의 축산물 위생 가공기술(9월), 아세안의 신선식품 유통기술 개발(11월) 등 협력추진
  - 농업기술연수 등을 통한 CIS지역 고려인 동포 자립기반 지원
    - 농업환경조사단 파견 및 체계적인 지원방안 수립

(1) 주요 내용

◇ '04.2월 수립한 농업·농촌종합대책과 119조원 투융자계획을 3년간의 실적 평가와 한미 FTA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보완

- 시장개방 가속화에 대응하여 농업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하고, 농식품정책·농촌정책을 대폭 강화
  - 농업구조개선 촉진을 위해 농가유형별로 선택·집중 지원하는 「맞춤형농정」 제도 도입
    - 고령농이 생계비 걱정없이 은퇴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
  -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보장을 위해 농식품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고품질 브랜드·이력추적제도 등 소비자 중심 대책 강화
  - 주5일제 실시에 따른 도시민 농촌체험 수요 증가에 맞추어 농촌관광·전원마을 조성 및 농촌지역개발사업 강화
- 새로운 농정방향에 맞게 119조원 투융자 계획을 조정
  - 집행성과 분석에 따라 투자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비, 투융자 시기도 정책단계에 맞춰 대폭 조정
  - 농업구조개선 촉진, 농식품 산업 육성, 농촌활성화 사업에 집중투자
    - \* 대외 개방시 경쟁력이 취약하여 집중육성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투자 확대



## [2] 세부 추진계획

- 농업인·소비자 등 국민적 공감대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농업·농촌종합대책 조정 및 119조원 투융자 계획 확정(상반기)
  - 공청회, 농업인 단체 토론회, 지방설명회 등을 통해 농업인의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
  - 한·미 FTA협상과 연계하여 대책안을 확정하고 국회 보고

### < 중점 보완과제 >

**농식품정책** : ① 항생제 등 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 ② 친환경 고품질 농식품 산업 육성, ③ 농산물 신규 수요 창출 방안 등

**농업정책** : ① 전업농업경영체 중심의 맞춤형 농정 도입, ② 직불제 확충·재해보험 확대 등 농가 경영안정, ③ IT·BT와 연계, 농업의 성장동력 확충 방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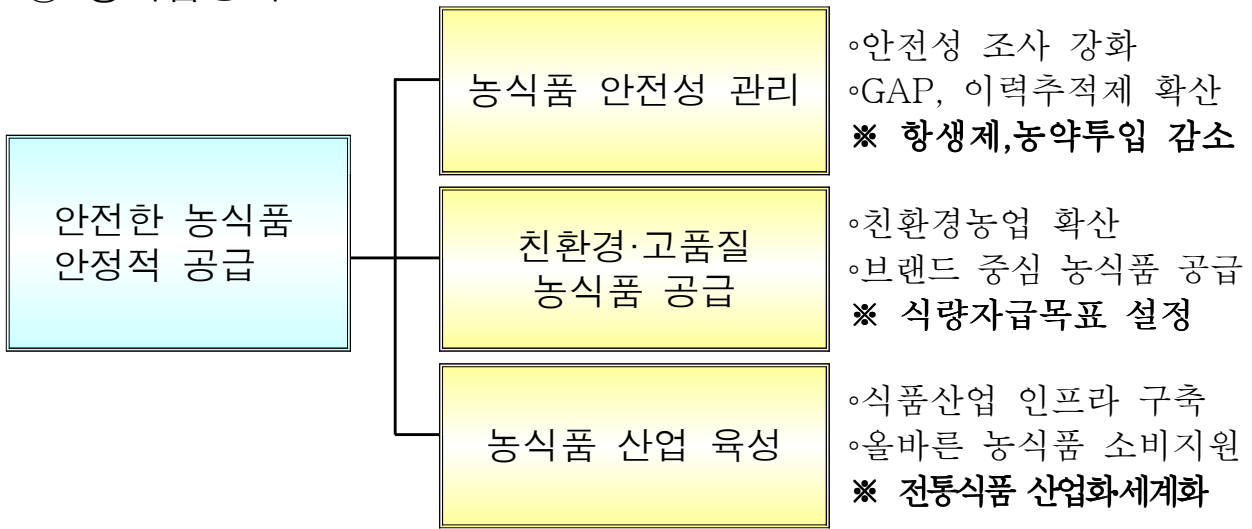
**농촌정책** : ① 농촌지역개발 체계화, ② 농촌자원 산업화, ③ 농촌의 복지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 새로운 농정비전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119조원 투융자 조정

-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농업·농촌기본법」을 「식품·농업·농촌기본법」으로 개정
    - 농식품·농업·농촌정책을 균형있게 지원하는 법체계와 내용으로 개편
  - 「FTA이행특별법」을 개정하여 한·미 FTA 등 여러 나라와의 FTA 추진으로 인한 농가 피해 보전 등 보완대책을 뒷받침
    - \* 현행법은 한·칠레 FTA에 대응한 과수산업 중심으로 구성
  - 「식품산업진흥법」을 제정하여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식품화 및 농업과 식품산업의 균형 발전을 정책적으로 지원

# 《 주요 정책과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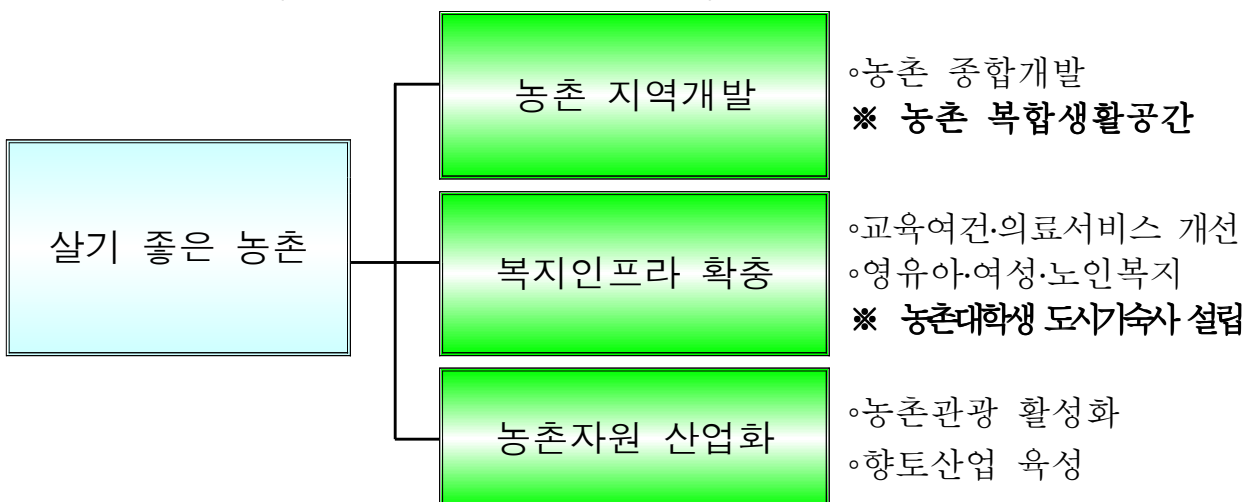
## ① 농식품정책



## ② 농업정책



## ③ 농촌정책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1] 주요 내용

- ◇ 농가 소득문제 해결을 위해 농정을 맞춤형 패러다임으로 전환
  - 농업인력 육성을 전업농 집중 체제로 전환, 도시가구 이상 소득 실현
  - 농가 등록제 등 맞춤형농정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 농가유형을 구분, 정책대상을 명확히 하고 유형별 정책수단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맞춤형 농정 기본 틀 마련

- 농업의 주업 여부, 경쟁력 정도에 따라 농가를 4개 유형으로 구분
  - 전업농, 중소농, 고령농, 취미·부업농으로 분류
- 전업농과 중소농에 농업정책을 집중하여 지원
  - 규모화 촉진, 직불제 확충 등을 통해 실질적 소득안정 도모
- 고령농에게는 생계비 걱정 없이 은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 방안 마련(조기은퇴직불, 농촌형역모기지론 등)
- 취미·부업농은 농업정책 대상에서 제외

□ 맞춤형 농정의 기반이 되는 농가 등록제 도입

- 등록여부는 농업인이 선택, 미등록 시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
- '07년 시범사업을 거쳐 '09년 본사업 실시

'07년 상반기	'07년 하반기~'08년	'09년
농가 등록 프로그램 개발	시범사업 실시	본사업 실시

## [2] 세부 추진계획

### □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맞춤형농정 핵심정책 확정(상반기)

- 농가유형별 정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농업인단체와 공감대 형성
  - 농업인단체, KREI, 학계 등과의 토론회,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농업인의 수용 분위기 조성
  - 농업·농촌 종합대책 조정안 의견수렴 절차와 연계하여 추진
- 직불제 개편, 농촌형 역모기지론 등 맞춤형농정 주요정책을 구체화
  - 농업인 단체,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대상자, 지급조건, 지급수준 등 세부시행 방안 마련

### □ 농가 등록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과 연계, 등록프로그램 개발(6월)
- 다양한 농가형태의 현장적용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하반기)
  - 평야지, 중산간지, 도시근교 등에서 시범지역을 선정·추진

### □ 맞춤형농정 추진을 위한 제도·조직 정비

- FTA이행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농가 등록제 등 농가유형별 지원 차등화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상반기)
- 농가 등록제 추진을 위한 관련조직 정비(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업통계 조사기준과 방식을 모든 농가대상 평균개념에서 전업농과 중소농 위주로 개편

(1) 주요 내용

◇ '05년 도입된 공공비축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의 조기 정착을 통해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시장기능 활성화 유도

○ 쌀 600만석 비축 및 쌀 소득보전 목표가격 조정(3년단위)

□ 수확기 공공비축 매입물량을 당초 목표대로 점진적으로 축소

○ 공공비축 매입물량('05 : 400만석 → '06 : 350 → '07 : 300)

\* 작황 및 쌀값 동향 등에 따라 필요시 수확기 별도의 시장안정 대책 검토

○ 쌀 수급 안정을 위해 가공용 처분 확대 등 대책 추진

○ '08~'10년에 적용되는 쌀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에 대해 '07년중 국회 동의 추진

□ 시장 개방폭 확대에 대비하여 민간 시장 기능의 활성화 추진

○ RPC 경영평가에 따른 운영자금 차등지원 및 시·군 단위 RPC 통합 등으로 산지 쌀 유통업체의 경쟁력을 제고

\* 농협 RPC : ('05) 182개소 → ('10) 100개소(1시군 1RPC)

○ 쌀 대표 시장가격 제시를 위한 '쌀가격 형성센터 설치'를 검토하고, 쌀 관측정보 제공

□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유통 투명성 제고를 위해 양곡 표시제 정착

## [2] 세부 추진계획

- 농업인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07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방안을 조기 확정(8월)하고, 쌀 소득보전 목표가격('08~'10) 조정
  - 농민단체 등과 의견수렴(2~5월)을 거쳐 산물벼 매입 수준 결정
    - \* 공공비축/산물벼 매입 물량 : ('05) 400만석/67만석 → ('06) 350/83 → ('07P) 300/50
  - 수확기 시장안정을 위해 재고 축소 등 수급관리대책 추진
    - 수입쌀 가공·주정용 처분 확대 : ('06) 281천톤 → ('07P) 340
  - '08년 영농기 시작(4월)전에 '08년산부터 3년간 적용될 목표가격 확정·고시를 위해 목표가격 변경 국회 동의 추진
  
- 개방폭 확대에 대비한 민간 시장기능 활성화 기반을 마련
  - 쌀수급·가격동향 등 관측정보를 산지유통업체에 분기별로 제공
    - 금년중에 「쌀가격형성센터」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실시
  - '07년 RPC 경영평가 결과(3~7월)에 따라 운영자금(4,600억원)을 등급별로 차등 지원
  - 경영부진 RPC의 자율적 통합 유도를 위해 통합 RPC 우대 지원
    - \* 건조·저장시설 우선지원, 통합 개소당 10억원 운영자금 지원(무이자, 1년)
  
- 쌀·현미에 대한 양곡 표시제 단속을 본격 시행
  - 양곡 판매시 품종, 원산지, 생산연도 등 7가지 사항을 반드시 표시
  - 특히, 품종명은 순도가 80% 이상인 경우에만 단일품종명을 표시
    - 다른 품종 혼입율이 20% 초과시에는 일반계로 표시
    - \* 허위표시의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 주요 내용

◇ 정부와 지자체간 농정 파트너십 구현, 정부와 농업계의 대화합을 통해 함께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

- 중앙과 지자체간의 농정격차 해소 및 지방 농정의 발전을 위해 지자체장 중심의 새로운 「농정 포럼」 설립 유도
  - 지자체장들의 농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지방 농정 및 농업인 성공사례 확산 및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정시책 개발
- 농업인단체 등 모든 농업계가 미래 농업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농업계 대화합」의 토대를 구축
  - 농업인단체의 농정참여 확산을 위해 정책 간담회 정례화, 정책 심사평가단 구성 등 다양한 참여방안을 마련
- 농림공직자들의 현장 체험학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농촌 현장의 농업인들에 대한 효율적 홍보 시스템 구축
  - 농정현장체험 학습 및 현장 농업인과 결연 등을 강화하여 농림공직자들의 현장감있는 정책 수립 능력을 제고
  - 현장 중심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로 농정에 대한 오해와 불신,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

## [2] 세부 추진계획

- 지자체장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가칭) 지자체 농정 포럼’ 설립 유도
  - 농정경험이 있고 농업비중이 높은 지자체장(20~30명)을 중심으로 농정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워크숍 개최
  - 성공한 농업인과 연계하여 특색있는 지방 농정시책을 발굴·확산하고, 정책개발 건의 유도
    - \* 타 지자체 확산 등을 위해 『지방농정 브랜드 경진대회』 개최(10월)
  
- 금년을 「농업계 대화합」의 元年으로 설정, 농업계 전체가 농정의 수립과 집행에 참여하여 함께 고민하고 책임지는 새로운 풍토 조성
  - 농업인 단체별 정책 관심사항을 조사, 정책간담회 정례화
    - 농업계 대표(매월) 및 지방 농업계 대표(분기별)와 간담회 개최
      - \* 중앙단위는 장관이 주재, 지방단위는 지역담당 실·국장을 지정하여 추진
  - 시책에 대한 현장 집행점검 및 평가·보완을 위한 정책심사평가단을 구성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담조직 운영
  
- 현장 중심의 농업·농촌 체험 강화로 농림공직자의 현장 인식을 높이고, 현장 농업인 중심의 홍보를 강화
  - 소관 업무별로 농촌현장 반응을 점검하는 ‘과의 날’ 행사, 현장 체험 학습 강화 및 현장 농업인 대상의 ‘정책공모제’ 내실화
  - 농촌지역의 리더층인 마을 이장을 홍보구심체로 활용하여 농정홍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정 신뢰기반을 확보



- ◇ 국민소득 증대에 따라 농식품의 안전성, 고품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고 소비 패턴도 변화
  - '90년대 중반 이후 친환경 농업 육성, 안전성 조사 확대, 품질 고급화 등 생산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품질고급화에 주력
    - \* 친환경 농산물 생산비중 : ('99) 0.1% → ('02) 1.1 → ('05) 4.4 → ('06P) 6.2
  - 최근 빈발하는 가축질병, 농식품 안전사고 등에 따라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불안심리도 확대
- ◇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농식품 공급을 위해서는 생산에서 유통까지 체계화된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 필요
  - 농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생산과 소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식품산업을 적극 육성
  - 우수브랜드 경영체를 중심으로 통일된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농식품의 품질경쟁력을 제고
  - 생산-유통-소비단계 농식품 안전성 통합 관리 및 농식품 정보공개 확대 등 선진화된 농식품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가축질병에 대한 예방체계 강화 및 방역 대책 추진으로 농식품, 나아가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
  - 증가하고 있는 수입농식품 관리를 체계화하고 국내 친환경 농업 확산 등을 통해 소비자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

(1) 주요 내용

◇ 식품산업 육성을 통해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달성

○ '13년까지 식품·외식산업 매출액 110조원 달성

□ 식품산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성장토록 지원하여 농업과 식품산업의 상호 발전 도모

\* 식품·외식산업 매출액 추이 : ('00) 72.7조원 → ('04) 96.2 → ('07p) 101

\* 우리 농식품 소비자 만족도(%) : ('05) 50.5% → ('06) 52.1 → ('07p) 53%

□ 기초 인프라 확충 및 경쟁력 제고 지원을 통해 식품산업을 육성하고 농업생산과의 연계를 강화

○ 관계법령 제정, 통계체제 정비, 식품규격의 표준화 및 식품 품질인증제 정비 등 산업발전을 위한 기초 인프라 조성

○ 식품외식업계의 위생시설 개선, 전문인력 교육 등 경쟁력 제고 및 식품원료의 안정적 공급기반 조성 등을 통한 농업과의 연계 강화

\* 농업과의 연계발전을 위해 전통주·유기식품 산업발전 종합대책 수립('06.7)

○ 한국음식·식문화의 세계화로 국가이미지와 경제적 부가가치 제고

□ 우리 농식품의 소비자 신뢰제고 및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 추진

## [2] 세부 추진계획

### □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인프라 구축

#### ○ 기술개발, 경영개선 지원 등 식품산업 발전 종합대책 수립

- 농산물 수급에서 식품 가공·소비까지 통계정비를 위한 현황도 조사

#### ○ 식품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가칭)식품산업진흥법’ 제정

- 식품산업 전반에 대한 육성 지원 및 전통식품·유기식품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구축

#### ○ 식품규격 제정 및 지리적 표시 등록 확대·내실화

-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표준규격을 확대(제개정 40건)하는 한편, 지리적 표시의 지속적 확대(10개) 및 권리보호 강화

\* 지리적 표시 등록품목이 지역 브랜드화할 수 있도록 홍보비 지원

### □ ‘韓 브랜드, 한식 세계화 지원 계획’ 확정(2월) 및 추진

#### ○ 해외 한식당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주요 권역별 실태조사 추진

- 실태조사를 토대로 해외 한식당 국가인증제 단계적 도입 추진('08년 이후)

#### ○ 우리 음식 및 식문화의 해외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외교관·언론인 등 오피니언 리더 대상 해외 식문화 홍보행사(6회) 추진

#### ○ 전통식품 100종에 대한 표준조리법 개발('06년 개발 100종 해외홍보 병행) 및 지역별 전통음식을 발굴하여 외식산업화 지원

## □ 전통주의 체계화·저변확대 및 유기농식품 인증제 도입 추진

- 전통주의 체계적 분류·표준화 및 소비촉진홍보를 통한 저변확대
  - 전통주 실태조사('07 상반기), 주종별 표준규격 설정(30종) 및 소비촉진 캠페인('07 하반기)을 통해 인식전환 및 저변확대 유도
- 유기농식품 인증제 도입을 위한 인증기준 마련

## □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농업과의 연계 강화 지원

- 식품외식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경영자금 지원
  - 위생시설(HACCP, ISO 22000 등) 확충을 위한 자금 및 원료 구매에 소요되는 운영자금 지원
- 생산자와 식품외식업체 및 중간 유통업체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생산자 조직과 식품유통, 식품외식업체와의 수직계열화 유도를 위한 표준거래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 □ 어린이, 주부 등 홍보대상별 맞춤형 소비촉진 홍보

- TV·인터넷 등 홍보효과가 큰 영상매체 활용 및 계층별 맞춤형 홍보 추진
  - 애니메이션 방영, 캐릭터 활용 등 어린이·청소년 대상 소비촉진 홍보, 직장인 대상 건강프로그램 제작 등
- 쌀 등의 소비촉진 홍보를 위해 연령별 차별화된 홍보 추진
  - 아동·청소년(학습능력), 주부(다이어트 및 웰빙), 직장인(웰빙) 등
  - 지자체·품목단체별로 특색있는 프로그램 추진 및 전문가 그룹 활용 홍보

(1) 주요 내용

- ◇ 농축산물 브랜드화 및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시장개방 확대 등 유통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 '13년까지 브랜드 경영체의 품목별 유통량 50% 달성

-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 일관된 품질관리, 안정적인 상품공급, 마케팅 시스템을 갖춘 우수브랜드 경영체 집중 육성

\* 「농축산물 우수브랜드 육성계획」 수립·발표('06.6)

- 쌀은 '10년까지 소비자가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군 단위 대표브랜드 100개소를 육성

\* 브랜드경영체 육성목표(누계) : ('07) 8개 → ('08) 40 → ('10) 100

\* 브랜드 쌀 취급비율 : ('07) 10% → ('08) 20 → ('10) 30

- 원예농산물은 '13년까지 채소류 50개소, 과실류 21개소(전국 1, 광역 20)의 브랜드 경영체 육성

\* 브랜드경영체 육성목표(채소/과실) : ('07) 2개/8개 → ('10) 39/15 → ('13) 50/21

- 축산물은 규모화된 광역브랜드 조성 등을 통해 '13년까지 총 80여개소 내외의 우수브랜드 경영체 집중 육성

\* 브랜드경영체 사육비중(한우/돼지) : ('06) 32%/50% → ('07P) 35/53 → ('13) 50/70

## [2] 세부 추진계획

가	쌀
---	---

### □ '07년부터 우수 쌀 브랜드 경영체를 선발·집중지원(8개소)

- 쌀 브랜드 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대해 전문가평가·심의를 거쳐 우수 브랜드 경영체 선발·지원
  - 시설현대화 : 개소당 20억원 기준(국고 40%, 지방비 20, 자담 40)
  - 교육·홍보 및 컨설팅 : 개소당 2억원 기준(국고 50%, 지방비 50)
- \* '10년까지 우수브랜드 경영체 등 건조·저장시설 1,220개소 신규지원

### □ 시장·군수가 주도하여 브랜드경영체 통합 등 규모화 추진

- 시·군단위 공동브랜드를 활성화하여 개별브랜드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품질관리 및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 인지도 제고
- 계약재배 내실화를 위해 마을 단위로 농가를 조직화하고 쌀 품질별 구분 관리를 위해 품종통일 등을 실시
  - 지자체의 대표브랜드 관리·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운영 유도
- 쌀브랜드육성 매뉴얼을 제작하여 RPC·지자체·지역농협 등에 배부 및 교육
  - 중앙단위 쌀브랜드육성지원팀을 구성하여 현장교육·지도 실시

### □ 소비자단체 주관 「시중유통 브랜드 쌀 평가」를 실시하고, 12개 우수브랜드를 선정하여 홍보 실시

□ **채소류 주산지를 중심으로 우수브랜드 경영체 선발·지원**

- 우수브랜드 경영체가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 계열화,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관련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2개소, 국고 82억원)
  - 지원 내용 : 교육·컨설팅, 종합처리시설, 공정육묘장 등
  - 지자체는 지역여건에 맞는 원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브랜드 경영체는 상품화·브랜드화를 위한 생산관리 프로그램 개발 수행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브랜드 경영체에 대해 정기적으로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 마련

□ **과실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 일관된 품질관리, 상품 차별화 및 소비자 신뢰도 확보를 위한 과실 브랜드사업 추진**

- 과실류 전국 및 광역 공동브랜드를 핵심 브랜드 주체로 육성
  - 지원규모 : 8개소(전국 1, 광역 7), 22억원
  - 지원내용 :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운영, 홍보비 등
- 거점산지유통센터 중심의 과실 브랜드화 및 계열화를 위해 운영 상황을 지속 점검·평가하고, 경영안정화를 위한 컨설팅 추진

□ **고려인삼을 세계적으로 명품화하고, 수출 주력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삼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 '04~'06년까지 선정된 73개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규모화내실화 추진

○ 브랜드 관리 및 사업평가 결과 우수한 경영체에 대하여 무이자 인센티브자금(200억원) 지원

○ 브랜드 경영체를 대상으로 「축산물브랜드컨설팅」을 실시하여 브랜드 경영체의 체질강화 및 경영마인드 개선

- '07년 계획 : 10개소, 5억원(국고 50%, 자부담 50)

○ 기존 브랜드경영체 상호간 통합 및 인근 미브랜드 농가 유인 등 브랜드 광역화로 시장 교섭력 강화 유도

- 조합간 공동사업법인 등을 통해 광역브랜드 추진시 인센티브 부여

- 한우의 경우 도별 1~2개 광역브랜드 육성

□ 브랜드 기반 확충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브랜드 경진대회」·「브랜드 인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고품질, 위생·안전, 브랜드관리 등을 평가하는 브랜드경진대회(9월)를 통해 최고의 브랜드를 선정하여 인지도 강화

○ 일정 수준의 요건을 갖춘 브랜드를 인증하여 소비자 신뢰 확보 및 경영체 유통기반 확충에 기여

\* 연도별 인증 : '04년 18개(한우8, 돼지 10) → '05년 25개(한우 13, 돼지12)

→ '06년 36개(한우15, 돼지14, 육우 2, 육계5)



(1) 주요 내용

- ◇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이력추적제, HACCP 등 선진 안전관리 제도를 확대하여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성 확보 체계 구축
- '13년까지 농산물에 대한 농약 등 잔류허용기준 적합율 98%, 축산물 잔류물질 적합율 99% 유지

□ 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해 선진안전관리제도 도입 및 확대 추진

○ 우수농산물 관리제도(GAP) 확산을 위해 대형유통업체를 GAP 민간인증기관으로 지정(21개소)하고 인증농가 지속 확대

\* 참여 농가수 : ('05) 965농가 → ('06) 3,600 → ('07) 10,000 → ('13) 100,000

○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 및 잔류허용기준 초과 농가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축산물 안전성 관리 철저

○ HACCP 적용 및 쇠고기 이력추적관리제 연계사업장 확대

- 사료공장, 축산물가공장, 판매업소 등 지정 확대

□ 농약 안전사용 등을 위한 농업인 안전성 교육 확대('00이후 연간 50만명 이상) 및 조사 강화

\* 농산물/축산물 잔류허용기준 적합율 : ('04) 97.3%/99.7% → ('06) 97.6%/99.7

## [2] 세부 추진계획

### 가 | 농산물 안전성 관리

#### □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및 이력추적제(Traceability) 확대

- GAP 유통비율 1%수준 확보(참여농가 '06 : 3,600호 → '07 : 10,000호)
- GAP 확대를 위한 수확후 위생관리 시설 지원 및 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보강 등 **인프라 구축 추진**('07 : 38억원)
- 농림부·해수부 합동으로 식품안전정보의 공동 활용 및 소비자 정보 제공을 위한 **농식품안전정보시스템 확충**('07 : 174억원)
  - 민간분석기관과 정부기관간의 안전성 검사 정보 연계시스템 구축

#### □ 생산단계에서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농업인 교육 강화

- 생산자단체(농협) 주관 **주산지 안전성교육 실시**('07년 1만명, 연중)
- 안전성 조사 부적합농가 특별교육 실시(6·12월, 농업기술원)

#### □ 농산물 안전성조사 강화 및 검사시설 설치 확대

- **생산단계를 중심으로 농약·중금속·미생물 등 위해물질에 대한 농산물 안전성 조사 확대**
  - 깻잎, 상추 등 **30개 품목** 중점 관리, 조사건수 확대('06 : 66천건 → '07 : 68)
  - 농약위주 조사에서 **중금속**(1만건, 125개 폐광산)으로 확대
- 농약 정밀 분석을 위한 **거점분석실을 5개소 추가 설치**('06 : 10개소 → '07 : 15개소)

## 나 축산물 안전성 관리

### □ 잔류물질 검사 등 축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

#### ○ 식육 중 잔류물질 규제검사 물량 확대

- 잔류검사 120천건 중 규제검사 물량을 확대 : ('06) 10.8% → ('07) 13.5

\* 규제검사 대상 : 위반농가 출하카축, 긴급도살주시자국 등 위반가능성이 높은 축산물 등

#### ○ 축산물(식육, 가공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 물량 확대

- 검사물량 : ('06) 6,720건 → ('07) 7,500

### □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범사업 확대 및 법적 근거 마련

#### ○ 이력추적제 시범사업 범위를 한우 위주에서 육우까지 확대 하고, 시·군 단위에서 도단위까지 사업 추진방식 다양화

- 이력추적제 참여 규모 : ('06) 210천두 → ('07) 650

#### ○ '08년 본사업 시행을 위한 관련법 개정 추진

### □ HACCP 확대 적용 및 도축장 운용수준 평가 추진

#### ○ 소 사육단계, 축산물 보관·운반·집유단계 HACCP 지침 및 모델개발

- 지침 및 모델 개발 후 농가관련기관에 배포하고 평가기준을 마련·적용

#### ○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향상을 위한 평가 사업 추진

- 평가위원회와 실무평가단에 의한 평가실시 및 결과발표(12월)

(1) 주요 내용

- ◇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해외 악성 가축질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 발생시 신속한 초동방역으로 조기 종식
- 주요 질병인 소부루세라병은 '13년까지, 돼지콜레라는 '10년까지 청정기반 조성

□ 해외 악성 가축질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검역 강화

- 해외여행객의 신발소독·휴대축산물 검색, 밀수축산물 단속, 발생국가산 수입 축산물 정밀검사, 예방 홍보활동 추진
  - \* 유입가능성이 높은 11월~2월(AI), 3월~5월(구제역) “특별대책” 추진
- 국내 유입시 예찰을 통한 조기 발견과 신속하고 철저한 살처분·이동제한 등 초동 방역조치로 근절

□ 국내 주요 질병의 청정화 기반 조성을 위해 감염농장 색출 검사 강화 등 사전방역 대책 추진

- 검사대상을 확대하여 감염가축을 색출, 인근 전파 및 확산 방지
- 예방약 공급, 방역규정 미이행 농가에게 보상금 감액 추진을 통해 농가 예방 노력 확립
  - 부루세라 살처분 보상금 지원 : ('95.7) 100% → ('06.11) 80% → ('07.4) 60%
- 일선 방역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공익수의사” 도입·운영

## [2] 세부 추진계획

- AI는 '06년 발생에 대한 방역조치를 조기 마무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상시 방역대책 추진에 총력
  - 조기 검색·경보발령, 현장조치 및 부처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NSC 위기관리매뉴얼 및 SOP 보완
  - 유입경로별 차단검역과 소독·예찰 등 상시 방역대책 추진
    - 해외 발생정보 수집(매일), 발생국 가금류 수입중단, 여행객 검색 등
    - 전국 가금류 농장의 소독·예찰(주1회), 종오리 농장(66개소) 및 도축장 출하오리에 대한 혈청검사(10천건), 농가 교육·홍보 등
  - 국내 유입 위험성이 높은 11~2월에는 특별방역 추진
    - 철새 도래시기에 가금류의 철새 접촉 차단, 철새 포획검사, 전국 종오리 일제 분변검사 등 더욱 강화된 예방·정보체계 가동
- 구제역은 3~5월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 추진, 비발생 상황을 계속 유지
  - 수입건초의 소독·정밀검사, 모든 입국자의 신발 소독(발판 소독조 232개소), 여행객의 휴대육류 검색 등 실시
    - 검역관(63→ 87명) 및 검역탐지견(21두) 기동 배치 등
  - ‘일제소독의 날’(매주 수요일)에 공동방제단(3,880개반)을 동원하여 소독, 시·군별 가상훈련(CPX), 예찰활동 및 교육·홍보
    - \* 구제역 발생시 이미 마련되어 있는 ‘표준행동요령(SOP)’에 따라 이동통제, 가축 살처분 등 초동방역을 신속히 수행, 확산 방지

- 소부루세라병은 단기간내 근절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검사대상 확대 및 사람 감염 예방을 강화하는 방역대책 마련
  - 거래 수소 추가 및 농장에서 사육중인 1세이상 모든 소까지 검사대상 확대
  - 발생농장 인근 지역(500m이내) 및 역학관련 농장에 대한 검사 의무화
  - 사람 감염 실태조사 확대 및 감염자 치료 지원방안 강구
    -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하여 사람 감염실태 조사 대상 확대 및 감염자 치료 지원방안 등 강구
  - 농장 감염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 상황 악화시 예방접종 검토
    - \* '07년 농장 감염율은 '06년(2.2%)보다 감소한 2% 이내 달성 목표
- 돼지콜레라는 예방약 100% 공급 및 혈청검사 실시,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에게 과태료 부과 등 방역대책으로 청정화 기반 구축
  - 예방약 40백만두(34억원) 공급 및 혈청검사 210천두 실시
    - \* 발생건수 : ('03) 72건 → ('04) 10건 → ('05) 5건 → ('06) 2건
- '07년부터 매년 150명씩 공익수의사를 지자체·가축위생시험소·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배치하여 가축방역 업무를 수행
  - 군사·직무교육(3~4월)을 거쳐 현장 배치(5월), 3년 복무
  - '09년부터 연간 450명의 공익수의사 운영

(1) 주요 내용

- ◇ 수입농산물 관리 체계화로 비위생적 수입농산물의 국내 시장 접근을 차단하고 부정유통 방지 등 국내유통 투명성 확보
- '13년까지 원산지 표시 이행율을 98%까지 확대

□ 농산물 원산지 표시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원산지 표시제도를 가공·포장단계에서 최종 소비단계인 음식점 단계까지 확대

- 원산지 표시대상품목은 '06년 531품목에서 '13년 580까지 확대
- '07년 구이용 쇠고기, '08년부터 쌀에 대한 음식점원산지 표시제를 적용하는 등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추진

□ 원산지 단속 인력 확대 및 전문가 양성을 통한 단속 강화 및 내실화

- 단속 및 수사전문가를 '13년까지 200명 이상으로 확대
  - \* 단속·수사 전문가 양성 : ('06) 44명 → ('07) 64 → ('10) 130 → ('13) 200
- 부정유통의 대형화, 지능화에 대응, 입체적인 단속이 가능한 기동단속인력을 '13년까지 110명으로 확대
  - \* 기동단속반 : ('06) 77명 → ('07) 80 → ('10) 95 → ('13) 110

□ 사회적 감시기능 활성화로 농산물 원산지 부정유통방지

- 민간신고비율을 '13년까지 25%이상 확대(명예감시원 25천명 운영)
  - \* 적발대비 신고비율 : ('06) 12% → ('07) 13 → ('10) 20 → ('13) 25

## [2] 세부 추진계획

- 과학적인 원산지식별기법 개발을 확대하고 민관 합동 단속 추진
  -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중국산 벼 DNA 마커 51점 개발(상반기)
  - 원산지 단속을 위한 명예감시원 정예화 및 합동단속 강화
    - 명예감시원을 정예감시원(3천명), 신고감시원(22천명)으로 구분·운용하고 감시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신설
  - 음식점원산지 표시제를 '07년 구이용 쇠고기(음식점 300m<sup>2</sup>이상)에 대해 우선 시행, 대상 품목 및 업소 확대 등 관계부처 협의 추진
  
- 쌀 의무수입물량 도입에 따라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대책 추진
  - '06년분 쌀 의무수입물량 246천톤 중 소비자시판물량 34천톤은 수확기부담 최소화를 위해 8월까지 판매 완료 노력
    - \* MMA/시판용 물량 : ('06) 245,922톤/34,429톤 → ('14) 408,700/122,610
  - Non-GMO 쌀 도입을 위해 3단계 원칙을 마련하여 운영
    - 선적전 수출국 정부기관 확인, 국제검정기관 검사, 국내도착시 식약청 검사 실시 의뢰 등
  - 부정유통 예방을 위해 수입쌀 단속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수입쌀 입찰정보를 활용하여 전 유통과정을 집중 추적감시
    - 특별사법경찰(456명), 명예감시원(25천명) 등을 활용
  
- 식물 해외병해충 유입방지 등 수입농산물 검역 강화
  - 유전자합성시스템, 세균검사기 등 첨단 검역장비(61종 525대)를 구입하고 전문 검역인력 확충(18명)



(1) 주요 내용

- ◇ 가축분뇨 퇴·액비의 경종작물 시비 확대,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축산업으로 발전
- '13년까지 친환경 농산물 생산비중을 10%수준으로 확대 하고 가축분뇨 자원화율을 90%로 확대

□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 및 친환경농법 지원 확대

- \*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 : ('00) 0.2% → ('05) 4.4% → ('09) 9% → ('13) 10%
- \* 가축분뇨자원화율 : ('04) 81% → ('06) 82% → ('09) 85% → ('13) 90%

□ 친환경농법의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및 생산기반 조성

- 친환경농업육성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내실화 및 친환경인증농가 편의 도모
- 친환경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및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확대

□ 자연순환농업 선도 조직 육성 및 가축분뇨 처리 효율화 추진

- 경종·축산 조직간 자연순환농업 추진 협약을 확산('10년 50 개소)시켜 동반성장 도모
- 농지법 개정에 따라 경종과 연계된 친환경 축산 표준모델 개발

## [2] 세부 추진계획

### □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친환경농자재 지원 확대

- 시·군 중심으로 생산·유통 및 관광을 연계한 1,000ha 규모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06 : 3개소 → '07 : 6개소 추가)
  - 읍·면에는 10ha 규모의 **친환경농업지구** 조성('06 : 78개소 → '07 : 59개소 추가)
- **유기질비료 지원 확대**로 화학비료 대체 유도(135만톤, 473억원)

### □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내실화

- **무항생제축산물**과 인증품을 **재포장**하는 자에 대한 인증제 도입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및 인증기관 재지정 요건 등 규정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의 **이력추적제** 참여 확대 유도
- **자재선택** 편의 제공을 위한 **친환경농자재 목록공시제도** 도입

### □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 농업의 다원적 기능, 친환경농업 중요성 등 **초등학생용** 친환경농업 부교재를 제작, 초등학교에 제공(2만부)하고 교육 실시
- **자조금 사업** 추진으로 친환경농업 단체의 **홍보활동** 지원
  - 소비촉진 홍보, 품질관리, 시장개척·관측활동 등(8억원)

- **가축분뇨 자원화 효율성을 증진시켜 해양배출 물량 감축 추진**
  - 우수 자원화 시스템 정보 제공 및 공동자원화 시설 설치 확대
    - '07년 5개소를 시범 설치하고 '08년부터 연간 10개소로 확대
  - '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에 대비하여 '07년부터 연간 40만톤 이상 감축하여 전량 육상처리 추진
    - 지자체 감축노력을 평가하여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 자금 차등지원
  
- **가축분뇨 퇴·액비 생산·유통 우수 조직 중점 육성**
  - 농·축협 등 자연순환농업 협약('07 : 30개소)을 추진하고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자금 지원('07 : 160억원, 3년거치 일시상환)
  - 살포실적 우수 액비유통센터에 장비 추가지원('07 : 6개소, 개소당 1억원)
  
-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 준비 및 제도 개선 추진**
  -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이 용이하도록 하위법령 제정
    - 축산농가에 액비화 시설 설치시 전문 유통조직과 살포계약을 체결하면 농경지 확보 의무 면제
  - 시·군별 양분 정보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한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시범사업 계획 수립
  
- **경종농가와 연계된 친환경축산 표준 모델 개발 및 보급 추진**
  - 축종, 사육규모,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표준화된 설계도 제작보급

- ◇ 시장개방은 확대되는 반면, 농산물의 국내외 가격차, 농업 구조의 영세성 등으로 **농업의 경쟁력은 취약한 수준**
  - 농촌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농업을 지킬 인력이 부족하고 협동조합의 농산물 유통능력도 미흡
    - \* 경영주 비율(40세미만/65세이상) : ('95) 9.8%/24.7% → ('05) 3.3%/43.2%
  - 반면에 농산물 수입이 확대되고 소비자들이 수요 변화 등으로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
- ◇ 시장개방 확대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농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 체질 및 경쟁력 강화가 시급**
  - 신규인력 유입 등 전문 농업경영체를 육성, 농업인적 기반확충
  - 농산물 물류 효율화를 추진하고 협동조합을 산지와 소비지 유통의 핵심주체로 육성
  - 농식품 수출을 적극 확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농식품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
  - 종자산업 육성, 신기능성 물질 개발 등 새로운 영역 개척을 통해 농업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

(1) 주요 내용

- ◇ 농업인력 고령화 및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 창업농의 신규유입을 촉진하고 농업경영체의 경영·기술혁신 지원
  - '13년까지 연간 신규인력 5천명 확보 및 전업농 5만명에 대한 맞춤형 교육 실시로 정예농업인력 20만호 육성
  
- 젊은 우수인력의 농촌유입을 위한 신규인력 유입대책 강화
  - 농과비농과계의 영농진입 경로별 체계적인 유입프로그램 마련
  - 발전가능성·경영역량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창업농을 선별, 정착자금 및 교육 지원 확대
  
- 전업농이 농업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업가 정신 함양 및 기술·경영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집중 지원
  - 생산자단체·대학 등을 중심으로 기술·경영교육, 마케팅 교육 및 선진지 연수를 연계하여 수요자 위주로 추진
  - 농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한 농업교육 인프라 구축 강화
  -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화를 통한 역량 강화
  
- 농업특화 창업보육센터 확충, 투자펀드 조성확대, 신용보증 지원 및 규제완화 등 농업법인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확대

## [2] 세부 추진계획

### 가. 젊은 신규 농업인력 확보

#### □ 안정적인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농업계 학교의 인력양성 기능 확충

##### ○ 각 지역별로 우수 농고의 특성화 지원(10개교, 18.5억원)

- 농업경영 성공사례 특강·선진지 견학 등 현장중심 교육과정 지원 및 우수 농고생 포상, 농고교사 재교육 실시
- 「농고-농과대학」 연계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추진

##### ○ 한국농업전문학교를 한국농업대학으로 개편(3월)하고 농과대학생 영농정착교육과정 확대(3개대학, 160명 → 6, 470)

- 여성농업인 양성을 위해 한국농업대학 모집정원 30%이내 여성 우선선발

#### □ 진입경로별 맞춤형 교육 확대 및 영농정착지원과의 연계 강화

##### ○ 선도농가 연수방식의 농업인턴제 지원단가 인상(100명, 50만원/월→ 60)

##### ○ 영농희망 도시민을 위한 직업훈련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수료 후 후계농업인 선정시 연령제한 완화 및 가점 부여

#### □ 후계농업인에 대한 자금지원 방식 개선 및 교육 지원 내실화

##### ○ 영농정착지원자금의 효과적 투자 및 자금활용도 제고를 위해 종전 1년내 지원방식에서 3년간 분산지원방식으로 개편

- 후계농업인 선정후 3년내 본인이 원하는 시기, 원하는 금액 지원

##### ○ 후계농업인 교육을 강화하고 평가를 거쳐 우수자는 우대 지원

## 나 전업농 중심 맞춤형 교육 및 법인경영체 지원 강화

### □ 지역별·품목별 농업인 맞춤형 교육·컨설팅 확대

- 품목단체 중심으로 현장과 연계된 기술교육 확대('06:19개→'07:22)
  - 생산 기술부터 유통·마케팅까지 현장실습·문제해결 중심 토론식 교육·소규모 스터디그룹 운영 등 추진
- 지역브랜드 조직·산지유통전문조직 등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화 교육」 확대('06 : 8개소 → '07 : 10개소)
- 컨설팅 희망농가의 자가진단 의무화 및 바우처 방식 도입

### □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교육인프라 확충과 여성농업인 경영능력 제고

-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AgriEdu.net)구축·시범 운영(상반기)
  - 전체 교육기관 교육과정의 통합검색, 온라인 교육 신청 및 커뮤니티 운영 등 수요자 편의 기능 구현
- 경영수준별 교육선택이 가능한 교육과정 등급제 시범 실시
- 여성농업인 경영참여, 성취감 고취를 위한 농가경영협약 시범추진(100농가)

### □ 농업법인 등에 대한 창업 및 투자유치·경영 혁신 인프라 확충

- 농업특화 창업보육센터 추가 설립
  - ('02)수도권 3개소 → ('05)영남 1 → ('06)호남 1 → ('07)강원1, 충청1
- 농업전문투자펀드 추가 결성('06 : 100억원 → '07 : 200)
- 농업법인 등에 대한 전문인력 활용지원 시범 도입
  - 상품기획, 마케팅, 회계등 전문인력 영입시 보조금 지원(월120만원)

(1) 주요 내용

◇ 농축산물 유통의 규격화·표준화를 촉진하고, 산지·운송·소비지 물류 인프라 구축

○ '13년까지 소모성 물류비 비중을 50% 수준까지 저감

□ 농산물 표준규격 출하 확대 및 위생적인 유통체계 마련,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등을 통해 **규모화 기반을 구축하고 물류비를 절감**

\* 농산물표준규격 출하율 목표 : ('04) 50.4% → ('07) 60 → ('13) 80

\* 소모성물류비 비중 저감 : ('04) 55% → ('07) 54 → ('13) 50

○ 산물유통 관행 개선을 위해 **배추무 포장 유통 전면 실시**

- 수도권 도매시장('06.9~10) 시범사업에 이어 '07년부터 전국 도매시장에 적용

○ **닭·오리고기**의 유통과정에서 미생물 등에 의한 재오염 방지 등을 위해 **포장유통 의무화** 추진

□ 차세대 물류표준으로 정착될 RFID를 '09년부터 도입

○ 농산물 분야 표준을 마련('07)하고, 표준코드 사용을 활성화 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체계 정비('08)

\* RFID : 포장단위로 물류흐름, 생산이력 등을 무선주파수를 통해 관리



## [2] 세부 추진계획

- 규격화·표준화를 통한 물류효율화를 위해 **농축산물 포장유통** 추진
  - **배추·무 포장유통**은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에서 시행
    - 포장출하로 인한 추가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적정 수준의 포장재비 지원
      - \* 그물망, 골판지상자 등 포장재 가격의 60~90%수준 지원('07예산 : 172억원)
  - **닭·오리고기**는 1일 평균 도축수 8만 이상인 도축업자에 대해 포장유통 의무화 시행
    - 금년중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의무화 대상 확대 추진
- 소비지 수요에 부응하여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농축산물 저온 유통체계 구축방안** 마련
  - 예냉·저온저장 시설 확충과 저온수송 장비 보급 확대 등
    - \* 생산자단체에 농산물 수송용 적재함(탑) 차량 개조 우선 지원(100대)
- 농산물 하역기계화 촉진을 위해 **물류장비 구입비 및 물류기기 공동이용 임차료 지원 확대**('06 : 177억원 → '07 : 210)
- **농산물 RFID 수요조사** 등을 통해 코드 설계 및 **표준 제정**
  - 품목별·생산지별·포장단위별 고유한 코드를 부여하여 물류효율화·이력추적관리·품질인증 등에 활용
- 32개 도매시장별 거래품목 및 거래특성을 반영한 **운영 제도 개선 및 시설현대화 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 라인 설정

(1) 주요 내용

◇ 산지-소비지를 연결하는 농산물 판매체계를 구축

- '13년까지 농협의 농산물 산지유통 점유비를 58%, 소비지 유통 점유비 13%로 확대

□ 협동조합이 산지유통의 핵심이 되도록 농산물 판매사업 대폭 강화

- '13년까지 출하농산물의 58%(17조원) 이상을 일선조합이 책임지고 판매토록 경제사업 역량 강화

\* 산지유통 점유비 : ('05) 45.4% → ('07) 48.1 → ('13) 58

- 일선조합 합병 및 공동사업법인 설립 등 조합의 규모화·전문화 추진

- '13년까지 조합공동사업법인(74개소), 품목조합(40), 선도조합(402) 육성

□ 중앙회는 소비지 마케팅 기능을 강화하여 일선조합의 판매사업 지원

- 농협의 소비지 농산물 점유비를 현재 7%에서 '13년 13%로 확대

- 수도권, 지방 대도시권 등 권역별로 도시조합의 중대형 판매장 확충을 지원('06 : 150개소 → '13 : 400개소)

- 대형 판매장은 현재 13개소에서 '13년 42개소로 확대

\* 소비지 유통 점유비 : ('05) 6.7% → ('07) 8.0 → ('13) 13

- NH 식품 등을 설립('07),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부가가치 제고

## [2] 세부 추진계획

- 정부와 중앙회의 자금 지원, 부실액 보전 등을 통한 일선조합 구조조정 가속화('07 : 50개 합병 등)
  - 조합의 사전 부실예방을 위해 위험가중자산비율, 재고자산 회전율 등 사전부실 징후 지표 개발·지도
- 연간 300억원 이상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 5개소 신규 설립 및 과수·축산 등 품목조합 10개소 육성
  -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을 핵심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해 출하협약 표준안 마련
- 일선조합 경제사업 평가 및 리스크관리체계 구축 등 중앙회의 일선조합 경제사업 지원 방식을 체계화
  - 경제사업 매출액, 출하협약 체결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지조합 경제사업 평가시스템 마련, 차등하여 인센티브 지원
  -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조합(경제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중앙회에 경제사업 안정화기금을 설치·운영
    - \* 자본금 확충, 사업 확대 등으로 경제사업 독자생존 기반 구축 및 신용사업 경쟁력 강화
- 농협의 소비지 유통 활성화 적극 지원
  - 도시조합의 중대형 농산물판매장(3,300㎡미만) 25개 신설(누계 175)
    - 정부의 시설자금 융자 지원규모 확대('06 : 50억원 → '07 : 440)
  - 중앙회 자체 자금 2,000억원을 투자, 대형판매장 2개소 신설(누계 17)

(1) 주요 내용

- ◇ 농식품 수출지원 및 시장개척 활동 강화로 우리 농식품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안정적 수출기반 구축
- '13년 농식품 수출 40억불 달성 추진

□ 고유가 환율하락 등에 대응, 장기 수출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 추진

\* 농식품 수출 : ('06P) 2,300백만불 → ('07P) 2,450 → ('13P) 4,000

- 수출단지 중심의 수출 경영체 육성 및 수출물류비 등 수출 지원제도 개선
- 주요 품목별·시장별 수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 마련

□ 농업구조조정 촉진과 새로운 수출수요 확대를 위한 수출유망 상품 육성 및 신규시장 개척

- 기술·자본집약적 품목인 파프리카, 딸기, 화훼 등 시설 원예작목과 삼계탕 등을 주력 수출품목으로 육성
-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4대 시장이외에 동남아, 중동 등 신규시장의 적극적 개척으로 안정적 수출기반 마련

\* 4대 시장 수출비중 : ('95) 64.3% → ('00) 69.0 → ('06P) 63.0 → ('07P) 62.0

## [2] 세부 추진계획

- 품목별·지역별 농식품 수출 확대 중장기 로드맵 마련과 수출지원 제도개선 등 추진
  - 고품질 농산물 공급을 위한 수출전문 원예생산단지 지정을 확대('06 : 149개 → '07 : 155)하고 단지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 수출물류비가 실질적인 수출증대로 연계되도록 지원방식 개선
    - 신규시장 개척에 대한 인센티브 상향조정(10%→30)
-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수출 유망품목 발굴육성
  - 멜론, 토마토, 딸기 등 수출 확대 가능성이 있는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적극 발굴·육성
  - 현지 마켓테스트, 상품개발비, 홍보비 등 해외시장 개척비용을 특별지원
  - 안정적인 현지 정착을 위한 지원기간 조정(1년 → 3년)
- 농식품 수출업체의 해외 마케팅 지원활동 강화
  - 신규시장 개척 가능성이 높은 동남아, 인도 등 박람회 참가지원(24회)
    - \* 자카르타 식품박람회(3월), 상파울로 식품박람회(7월), 인도 식품박람회(12월)
  - 해외대형유통업체 입점을 위한 판촉행사 개최
    - 동남아 지역 입점시 인센티브 지원제도 시범도입
  - 시장개척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해외 마케팅 전담 인력보강
    - \* 싱가포르·상하이·도쿄·모스크바 상주인력 증원, 두바이 시장조사요원 파견

(1) 주요 내용

◇ 성장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신품종개발·보급을 지원하고, 육종가의 지식재산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 '15년까지 세계 5위권 품종개발 강국으로 도약

\* 국산품종 점유율을 장미 30%, 딸기 60%이상으로 제고, 종자수출 1억불 달성

□ 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종자산업 발전 중장기대책」을 수립('06.9)·추진

○ 분자육종 집중 투자로 고추·배추 품종육성의 세계 최강국 지위 확보('07~'11 : 총 100억원)

\* 분자육종 :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육종기간 단축 등 효율적 신품종 육성방법

○ 산·학·연으로 구성된 “장미·딸기 사업단” 운영 활성화로 국산품종 점유율을 제고하여 로열티 절감('06~'10 : 총 100억원)

○ Virus가 없는 과수 묘목 생산·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과수 우량 묘목생산 지원사업” 추진('05~'10 : 총 197억원)

○ '08년까지 벼 보증 종자 공급을 22,000톤까지 확대하여 갱신율을 50%수준으로 제고('06 : 16,800톤, 36%)

□ 국가자원으로써 농업유전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보전하고, 육종가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 정비

\*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제정, “종자산업법” 개정 등

## [2] 세부 추진계획

- 민간주도의 종자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민간육종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육종가의 권리보호 강화
  - 세계 최고 수준의 고추·배추 품종 육종을 위한 MAS (Marker Assisted Selection) 분자육종 연구 지원 추진('07 : 20억원)
  - '07년부터 개인 육종가의 신품종 등록 및 해외 품종보호출원 지원 강화(품종당 지원금 : '06 : 3백만원 → '07 : 5백만원)
  - 품종보호권 분쟁조정제도 신설, 농업인의 자가채종 범위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한 종자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07년 국산 품종 보급률을 장미는 4%, 딸기는 22% 이상 확대 추진('06 : 장미 2%, 딸기 18%)
  - 장미 : 13품종을 신규로 개발·보급('06 : 17개 품종 개발)
  - 딸기 : '매향', '설향' 등 우량 묘주 보급 체계 구축
    - \* 우량묘 생산시범사업 : ('06) 30개소 → ('07) 31개소, 개소당 20백만원
  
- 개발된 우수 품종의 보급 확대 지원 추진
  - 우수 품종 생산 업체를 대상으로 '07년부터 증식·채종·수매·가공비 등 저리 융자('07 : 60억원, 5년 거치 3%)
  -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 벼 보급종 공급을 '07년 19,400톤 ('06 : 16,800톤)으로 확대하여 갱신율을 42%('06 : 36%)로 제고
  - 우량 육묘 공급을 위해 육묘 자조회 구축 지원
    - 우수 육묘 생산기술 교육 및 출하조절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1) 주요 내용

◇ 신기능성 물질의 개발, 바이오에너지원 작물 발굴 등으로 농업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 BT, IT, NT 등 첨단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여 가축질병 예방백신, 나노-바이오 기술 이용 신소재 물질, 기능성식품 등 개발 추진

○ 기술이전 및 연구성과활용 촉진을 위해 농림기술개발사업을 산업화·실용화 위주로 개편하고 농산업체 참여 의무화

\* 기능성소재 및 가공식품 개발비 비중 : ('04) 12% → ('06) 16 → ('10) 20

\* 기술이전율 : ('03) 20% → ('04) 18% → ('05) 18 → ('13) 25

□ 고유가 등으로 인한 에너지 문제에 대응하여 바이오에너지 원료작물의 발굴, 국내생산기반 확보 및 관련기술 개발

○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 유기성폐기물·똥짚 에너지화 생산시스템 구축 등 추진으로 새로운 소득원 발굴

\* 유채바이오디젤생산기술, 다수성 유채품종 등 개발(9억원, '05.11 ~ '08.11)

□ 겨울철 휴경지 이용 및 보리대체 작물개발을 통해 조사료자급율 향상, 농촌경관 개선, 농가소득향상 및 경지이용율 제고 추진

\* 조사료자급률 : ('05) 83% → ('13) 87, 푸른들가꾸기: ('06) 131천ha → ('13) 280



## [2] 세부 추진계획

- 돼지콜레라 경구용백신, 가축사료용 항생제 대체물질, 배추분자마커 개발을 통한 분자육종 등 연구개발 추진(60과제 59억원 지원)
-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사이버기술거래시장 활성화, 업체방문 기술설명 및 컨설팅 추진
  - \* 산업체·농가 기술이전을 : ('03) 20% → ('05) 18% → ('07) 19%
- '07년부터 '09년까지 3개 시·군을 대상으로 1,500ha 규모의 바이오디젤 유채생산 시범사업 추진(사업비 매년 26억원)
- 「지자체-생산자단체-바이오디젤 제조사」간 협약으로 생산량, 가격 등을 결정, 농협에서 구매·보관 대행
  - \* 보조금 지급단가 : 170만원/ha(쌀보리 재배시 소득과의 차액을 보조)
- 바이오디젤용 유채품종 개발 및 생력화 기술·기계 연구 지원
  - 올레인산 고함유 다수성·조숙성 1대잡종 유채품종개발, 유채 바이오디젤 생산기술개발, 유채 생력화 기술 및 기계개발 등
- 겨울철 대체작물 재배 확대 등을 통한 경지이용률 제고
- 사료용 총채보리 재배 확대('06 : 9,686ha → '07 : 15,000)
  - 총채보리를 대량 이용하는 섬유질 사료공장에 시설자금 지원(36억원)
- 수입되고 있는 자운영·호밀종자를 대체할 호밀신품종 개발('07~'09) 및 녹비종자의 다양화·품질고급화 추진

- ◇ 규모화·전업화에 따라 가격불안정, 자연재해 등 경영위험은 증대되는 반면 개방확대, 생산성 향상 등으로 농업 소득은 정체
- WTO체제하에서 가격지지 축소에 대응하여 선진국 방식의 직불제 및 재해보험을 도입하였으나 초기 단계
- ◇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 밭농업·축산 등을 포괄하는 다양한 직불제의 도입·체계화
  - 농가의 경영희생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상시 지원시스템 구축 추진
  - 농작물재해보험·가축공제 등을 지속 확대하고 농업관련 재해보험의 통합체계 구축방안 마련
  - 기상이변에 대비한 수리시설 능력 강화, 노후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를 통해 재해 대비 안전영농기반을 구축
  - 선진 농업금융 지원시스템 구축, 계약재배 내실화 및 품목별 자조금 사업 활성화로 안정적 농업경영 여건 조성

(1) 주요 내용

◇ 맞춤형농정의 농가유형별 특성에 따라 실효성 있는 직불제 신규도입 및 기존사업 정비

- 밭농업·과수·축산까지 포괄하는 직불제 체계화로 농가소득 안전망 확충, 도시근로자가구 이상 소득실현 뒷받침

□ WTO 규정상 감축대상 직불제는 지원대상 감축, 소득보전 효과 제고

- 농업구조개선 촉진 및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현행 품목별 가격차 보전방식을 보완하는 중장기 직불제 개편방안 마련
- 쌀 소득보전 직불제는 농가등록제 시행후 취미·부업농 등을 지원대상에서 제외 검토

□ WTO 허용보조 유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확충

- 고령농 은퇴촉진을 위해 경영이양 직불제를 조기은퇴 직불제로 개편하는 방안 등 검토
- 경종과 축산을 연계하는 자연순환 농법을 적극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친환경농업 직불제 개선 및 확대
-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경관보전직불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를 대폭 확충하고 도로변 꽃길조성 등 새로운 영역 발굴

## [2] 세부 추진계획

- '09년 시범사업 추진을 목표로 직불제 개편방안 마련
  - 발농업, 과수, 축산까지 포괄하는 직불제 체계화 방안 검토
  - 외국 사례 및 농가소득 현황분석 등을 통해 모델 개발('07)
    - 농가등록제 시범사업 기간중('08) 농가소득 파악을 위한 등록 방안 마련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및 경관보전 직불제 대상지역 확대
  - 조건불리지역직불은 도서지역 지급대상을 도서개발촉진법상 도서에서 전 도서(제주도 포함)로 확대하고 경사도에 관계없이 지원
    - 육지는 현행 지원조건(경지율 22%, 경사도 14%이상) 유지
    - \* 대상지역/예산규모 : ('06) 119천ha / 331억원 → ('07) 188 / 523
  - 경관보전직불은 대상면적과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향후 새로운 사업 발굴 및 영역 다양화를 위한 세부시행방안 수립
    - \* 대상품목 : ('06) 유채,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목화, 야생화 → ('07) 연, 자운영 추가
    - \* 대상 면적 : ('06) 470ha(6억원) → ('07) 800ha(10억원)
  
- 친환경농업직불은 지속 확대('06 : 27천ha/141억원 → '07 : 43/175)
  - 경종·축산 연계, 자연순환농법에 대한 직불제 시행 방안 마련
  
- 바람직한 농업구조 실현을 위한 구조조정형직불 강화대책 마련
  - 고령농 은퇴 촉진을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
  - 조기은퇴 직불제는 고령농 은퇴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

(1) 주요 내용

◇ 가격폭락, 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경영회생 지원시스템을 확충, 농가 경영안정 도모

○ '13년까지 농지은행 경영회생 지원농가 회생율 70% 수준으로 확대

\* 농지은행 지원농가의 회생율 : ('11) 60% → ('13) 70%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제정('01.1) 이후 5차례의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인하 등 부채경감대책 추진

○ 농기계·시설자금, 연대보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총 8.2조원을 지원하여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인하 조치

○ FTA, 쌀개방 등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어 '01년 부채대책 자금('06 상환도래분 5.3조원)의 상환기간을 다시 추가 연장

- 원금 10%상환시 5년 분할상환(3%), 그 외는 3년 분할상환(5%)

□ 부채를 연기조치하거나 농지 등을 활용하여 상환한 후 정상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가 경영회생지원시스템 상시 운영

○ 가격폭락, 재해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 회생을 지원하는 농업경영회생제도 시행

○ 부채농가의 농지를 위탁하여 부채를 상환하고, 임차해 경영 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확충

## [2] 세부 추진계획

- **농업경영회생자금 1,100억원 지원**(연리 3%, 3년거치 7년 상환)
    - 준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 2,500만원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회생가능성 여부를 평가 후 자금 지원
    - 회생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평가된 경우 인수 희망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시설 활용을 유도
    - 이와 별도로 자연재해, 가격폭락 등으로 불가피하게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에 대한 효율적 경영회생 지원방안 검토
  
  - **농지은행을 통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대상 확대**
    - 현행 지원 대상 요건(연체금액 5천만원 이상)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
    - 경영위기 농가 매각 희망농지 372ha('07 : 566억원) 매입
  
  - **'07년 상환도래 예정되는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3,389억원)에 대해서도 추가연장 조치**(1~6월 신청 접수, 12월말까지 대출 실시)
    - 본인이 몰라 지원을 못받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 홍보실시
- \* '06.12.31 기준, 순지원대상 3조8,438억원 중 3조7,046억원(96%) 신청

(1) 주요 내용

- ◇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공제의 대상 품목(축종)과 보상범위를 확대하여 재해로 인한 경영위기를 차단하는 경영안정장치 구축
- '13년까지 대상품목 및 축종을 30개 품목, 15개 축종으로 확대

□ 농업관련 정책보험(공제)의 대상품목·축종을 지속 확대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 보장범위를 확대

○ 수도작(논벼)·채소류 등 주요품목을 대상으로 하여 연차적으로 지속 확대 추진

\* 대상품목(농작물보험) : ('01) 2개 → ('06) 7 → ('07) 10 → ('13) 30

\* 대상축종(가축공제) : ('01) 3개 → ('06) 9 → ('07) 11 → ('13) 15

○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정책보험을 「농업재해보험」으로 개편, 운영 효율성과 위험관리 능력 극대화

□ 재해발생 후 체계적인 복구지원으로 조속한 경영회복 지원

○ 재해복구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복구비를 신속히 지원하여 재해농가가 조속히 경영안정이 되도록 지원

○ 재해농가에 대해 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금리를 인하



## [2] 세부 추진계획

- 보험 대상품목(축종)을 확대하고, 조기에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시범사업에 대해 국가재보험 보장범위 확대 추진
  - 대상 품목/축종 : ('06) 7개/9개 → ('07) 10개/11개
    - 품목확대의 제약요건인 기초자료 미비와 민간보험사 참여 기피를 해소하기위해 시범사업 추진 품목의 국가재보험 보장범위를 확대
  - '08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품목(예 : 콩, 감자, 고추 등)에 대한 표준수확량 및 손해평가방식 연구용역 등 실시
-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공제, 농업시설부분을 통합하여 「농업 재해보험」으로 확대 개편 추진
  - 농업시설 부문을 포함한 농업 재해보험 확충방안 마련
- 재해복구비용 기준단가 조정 및 시설 표준규격 강화 등도 지속개선
  - 복구비단가(96개 항목) 상향조정 및 항목확대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
    - \*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가 조정 및 지원대상 항목 확대 추진
  - 원예특작시설 표준규격을 내재해형으로 기준 강화('07 : 127억원)
  - 축사 전기안전점검 및 가축진료 무료 실시 등 사전 예방조치 강화

(1) 주요 내용

◇ 재해에 안전한 농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농업 기반 시설의 보강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 체계 마련

○ '13년까지 배수개선을 83%, 수리답을 82% 수준으로 제고

□ 벼 재배면적 감소 등 농업 구조변화에 적극 대응, 안전영농을 위한 체계적인 생산기반시설의 보강 및 유지관리를 강화

○ 벼 재배 수리시설에 대한 신규개발은 축소하고 기존 시설의 개보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중점 추진

○ 시설원예 등 새로운 소득작목에 대한 재해대비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 선진국 수준의 재해대응 및 안전영농을 위한 용배수개선 추진

○ 재해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큰 저수지와 배수장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확대 및 시설보강으로 재해대응능력 향상

○ 신규시설 개발 대신 농업용수 여유지역의 물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물부족 지역의 농업·생활·공업·환경용수 확보

□ 대단위 간척농지에 대한 복합 농산업단지의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새만금은 정부차원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추진

## [2] 세부 추진계획

- 영농여건 변화에 따른 생산기반 추진체계 정비 및 효율적인 수리시설 유지 관리 방안 마련
  - 작목 구조 변화에 따른 적정 지역 및 추진 목표, 논에서의 밭작물 재배를 위한 기준 및 추진방식 등 검토
  
- 저수지, 양배수장 등 주요 수리시설을 재해대비 위주로 보수보강 추진(수리시설 개보수 예산의 60%이상 집중지원)
  - 홍수량 증가로 인한 재해 예방을 위해 아산만 배수갑문 확장(120m→290m) 등 하구둑 구조개선 추진('07 세부설계)
  - 정밀안전진단 대상을 확대하고(저수지, 양·배수장→대형수로교, 터널), 개보수이력관리시스템 구축(시설점검, 진단정보 등 DB구축)
  
- 재해대응 능력강화를 위해 비상대처계획, 물관리 자동화 추진
  - 이상홍수로 인한 저수지 붕괴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저수지 비상대처 계획 수립(16개소)
  - 주요 시설을 원격 관리하여 물관리비용 절감 및 재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물관리 자동화 사업 추진(10지구)
  
- 상습침수 농경지 119지구(31천ha)에 배수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그중 20지구(3.3천ha) 준공(배수개선율 '06 : 71%→'07 : 73%)
  - 논에서의 원예작물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개선 4개지구 시범 추진

□ **농촌용수개발은 용수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이용 체계 재편 추진**

- 개발된 수자원의 체계적인 배분·이용으로 지역간 용수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추진**
  - 타당성조사 2지구, 기본조사 1지구, 세부설계 2지구
- 농촌용수개발은 시행중인 5만ha 중 6.6천ha 준공(수리답율 '06 : 78.8% → '07 : 79.2%)

□ **새만금 방조제 마무리 공사 시행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

-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토지이용계획 수립**
  - 농지로 우선 활용하되 장래수요에 따라 타용도 이용방안 모색
  - 습지·식생수로 등 다양한 친환경 공간을 충분히 확보
  - 토지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새만금특별법안 제정 필요성 검토
    - \* 현지 총괄관리 기구 설치, 향후 유지관리비 자체 조달 자원 마련 등
- **수질보전 등 환경대책은** 범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
  -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를 통해 점검·평가하고 환경대책은 새로운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토록 보완
- **방조제는** 보강성토, 도로공사 및 조경 등을 거쳐 '08년까지 완공

□ **간척지에서 벼농사 뿐만 아니라 밭작물, 초지, 원예 등 복합 영농이 가능하도록 복합농산업단지조성 방안 마련**

- 간척지내 밭, 원예지구 등 조성 연구 및 시험포 조성 등 착수

(1) 주요 내용

◇ 농업자금의 원활한 지원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업금융 시스템을 시장 지향적으로 개편

○ '10년까지 농업정책자금 공급방식을 완전 경쟁체제로 전환하고, 농가유형에 따른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 체제 구축

□ 시중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을 단계적으로 확대

\* ('04 ~ '06) RPC운영자금, 농기계구입자금, 촉발기금 → ('07 ~ '08) 농축산 경영자금 등 용자사업의 50%이상 → ('10) 전면개방

□ 성장단계별 농가유형에 맞는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체제 단계적 구축

○ 영농정착과 성장가능성을 고려, 금리상환기간 등 지원조건 차등

- 기본방안 수립('07), 시범사업('08 ~ '09)을 거쳐 '10년 본격 실시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06 ~ '09) 및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07 ~ '11) 건전화 추진

○ '06년은 농신보에 대한 정부출연확대(4,000억원→5,780), 금융기관 출연율 인상(0.2%→0.3) 및 일선조합 등 신규출연 추진

- '08년까지 총당금 100% 적립이 가능하도록 정부출연 확대

\* 정부출연(억원) : ('06) 5,780 → ('07) 7,357 → ('08) 7,353 → ('09) 5,890

○ 자본잠식 상태인 '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 건전화 대책 추진('06.8)

## [2] 세부 추진계획

- 시중은행 취급대상 정책자금의 단계적 확대방안 마련
  - 자금규모, 용자조건, 대출취급의 전문성, 수혜자의 범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개방대상 정책자금 선정
    - '08년에 개방되는 대상사업의 시행지침 개정
  - 시중은행의 취급대상 정책자금 확대에 따라 정책자금 관리단의 관리범위 확대 추진
    - 관리범위 확대 : (현행) 농특회계 용자금 → (추가) 이차보전자금
- 신규 창업농 등 농가유형별 지원조건을 차등화 하는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기본방안 마련
  - '08년부터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사업 시범실시를 위해 농업 종합자금, 창업농지원자금 등 관련사업 시행지침 개정
- 정책자금의 원활한 대출을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건전화 등 농업금융기반 확충
  - 농신보 건전성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을 7,357억원('06 : 5,780억원)으로 확대하고, 일선조합이 심사하는 위탁보증 비율 축소
    - \* 직접보증 점유율(건수 기준) : ('05) 2.8% → ('06) 3.3 → ('07P) 10.6
  - 대손보전기금 건전화를 위해 정부지원(160억원) 및 농·수협 특별출연, 신용대출한도 축소 등 제도개선

(1) 주요 내용

- ◇ 생산자 자율적 수급체계 구축으로 가격 및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
  - '13년까지 원예 32품목, 축산 10개 품목에 대하여 자조금 단체 결성
  - \* 농축산물 자조금 품목/조성액 : ('04) 16품목/55억원→('06) 27/175→('07) 29/200

- 채소류 「최저보장가격제도」를 시장가격하락에 따른 손실을 일부 보전하는 「계약재배안정화사업」으로 전환하여 시장기능 강화
  - \* 사업대상 품목 : ('06) 4품목 → ('07) 8 → ('08) 11

□ 품목별 자조금 제도 활성화 및 생산자단체 역량강화

- 원예 자조금은 '06년 마련한 발전 로드맵을 단계적으로 실행
  - ('07) 자조금의 목적기금화 → ('08) 차등지원체계 구축 → ('10) 회원범위 확대 및 의무자조금 도입
  - \* 원예품목 자조금단체 생산점유비중 : ('04) 15% → ('06) 33 → ('07) 38 → ('13) 68
- 의무자조금인 축산자조금의 품목, 자조금 거출율 및 규모 확대
  - \* 축산품목 자조금 거출율 : ('04) 68% → ('06) 75 → ('07) 77 → ('13) 89

□ 연중 정확한 품목별 관측 정보를 생산자단체에게 제공

- 관측품목을 확대('07부터 쌀추가, 28개 품목)하고 문자서비스, 이메일, 지리정보시스템(GIS) 등을 활용하여 정보제공 방법 효율화

## [2] 세부 추진계획

### □ 원예분야 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수급안정 추진

- 계약재배물량 : ('06) 900천톤 → ('07) 940(증 5%)
- 계약재배사업을 산지유통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시설채소·과실 수급안정 사업 자금을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산지유통활성화 자금과 통합 지원
  - 계약물량에 대하여 사업농협 개별판매에서 전국단위 공동마케팅 시범사업 추진으로 사업효과 제고(대상품목 : 깎마늘·대파)
-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의 공동부담으로 자율적인 생산조정을 유도하는 「계약재배안정화사업」으로 전환('08)
  - 시범사업('06 : 무·배추 등 4품목 → '07 : 양파·대파 등 8품목) 결과를 바탕으로 본사업 계획 확정

### □ 원예분야 자조금 조성 품목 확대 및 제도 활성화

- 인삼 등 2개 품목에 대한 신규 자조금단체 결성 추진
  - 자조금 단체 결성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발굴 육성
  - 자조금 조성 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 교육 및 홍보
- 영세한 원예자조금의 규모화를 위해 현행 ‘당해년도 거출, 당해연도 소진 원칙’을 적립이 가능한 목적기금으로 제도 개선
  - 자조금 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농안법 시행령 개정



- 자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 및 차등지원체계 구축
  - '06년 자조금 사업에 대한 시범평가 및 평가지표 개발

## □ 축산분야 자조금 조성 품목 확대 및 제도 활성화

- 수납기관 수수료 인상 및 대의원 총수 하향 조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자조금 활성화 추진
  - 개정안을 마련, 관계기관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안 확정시행
- 육계 임의자조금을 의무자조금으로 전환('08년 목표)하기 위해 의무자조금 준비 대의원회 개최 및 관리위원 선출
- 오리 등 기타 가축의 임의자조금 도입방안 마련

## □ 농업관측 품목 확대 및 농업관측 정보의 활용도 제고

- 생산자 자율 수급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쌀관측 실시
  - 표본농가, 모니터, 자문위원 등을 선정하고 관측정보 가공시스템 구축
- 소비자의 구매정보를 수집하여 농업인들에게 연중 제공
  - 소비자패널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및 관련자료 DB 구축
- 지리적정보표시(GIS)를 활용한 농업관측 정보에 수출입정보 추가

\* 추가 콘텐츠 : ('05)생산 및 기상, ('06)도매, ('07)수출입, ('08)산지 (완료)

- ◇ 도시화·산업화·개방화 과정 속에서 농업인의 이촌 및 고령화로 농촌의 생활여건은 상대적으로 더욱 악화
  - 도시 과밀화 및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여가 수요증가로 도시민이 농촌을 여가생활 및 정주공간으로 새롭게 인식
- ◇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서는 지역개발을 통해 농촌을 삶과 휴양·산업이 조화된 복합생활공간으로 조성 필요
  - 선진국 수준의 농촌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기초생활환경 정비, 노후·불량주택 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
  - 여성·고령 농업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확대 및 교육비 부담 경감 등 농촌 복지·교육여건 개선
  - 1사1촌 등을 통해 도농교류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도시민 농촌 유치로 적정 농촌인구 유지 도모
  -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 농촌관광 및 향토산업 등 다양한 형태의 농촌 소득원 확충
  - 농촌다움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농촌 환경보전 및 농촌 경관 관리 체계 구축

[1] 주요 내용

- ◇ 낙후된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및 주거환경을 선진국 수준 (Global Top10)으로 개선
- ◇ 마을-권역-면소재지 등 정주체계에 따라 농촌지역개발 사업 체계를 정비하여 삶의질 및 지역개발 계획에 따라 추진

- 모든 농촌 지역의 정주 및 생활 기본수요충족을 위해 기초생활환경을 정비
  - 마을안길, 상·하수도, 복지시설 등 기초생활환경 정비·확충
    - 일반면(800개면)을 대상으로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오지면(361개면)을 대상으로 오지종합개발 사업 추진
  -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소규모 마을(20~50호)에 대하여 '13까지 농촌생활용수시설 7,398개소('06까지 5,364개소) 개발
  - 농촌주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불량주택 개량 등 농촌 주거개선대책 추진
    - 노후·불량주택의 지속적인 개량('07 : 5.6천동 → '13 : 32.6)
    - 고령·영세 농업인과 귀농·귀촌자 등의 특수성을 고려한 주거 지원대책 검토

- 면소재지 및 배후중심마을을 농촌지역의 선도거점으로 형성하기 위해 생활환경정비, 경관정비 등을 종합지원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17까지 1,000개 권역(면소재지 200, 배후중심마을 800) 형성·지원
  - 농촌에서 제공이 어려운 고품질 복지·의료·교육서비스 등은 인근 중소도시에서 제공토록 연계체계 구축
-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부처간 업무 조정 및 사업체계를 정비하고 시·군단위 지역개발계획 수립·추진
  - '07년부터 신활력사업 등 4개 사업이 농림부로 이관되면서 유사사업 통합 및 지원조건을 조정하여 사업간 형평성 제고
  - 시·군 단위 지역개발 종합계획을 삶의질 및 지역개발특별법에 의한 계획으로 통합·추진

## [2] 세부 추진계획

- 면단위 기초생활 환경정비사업을 체계화하여 농촌지역개발 사업의 혁신사업으로 지속 추진
  - 일반면 300개면(2,401억원), 오지면 223개면(1,620억원)에 대한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및 오지종합개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 '08년부터 오지면, 일반면의 특성을 감안하여 농촌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통합하는 방안 수립

□ 면소재지 및 배후 중심마을을 대상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 136개 권역**(사업시행 56, 시행계획 40, 기본계획 40) 추진(836억원)

○ 기본계획 40개 권역 중 4개 권역은 거점면 기능강화를 위한 **면소재지 중심마을개발** 시범추진('07 기본계획, '08~'10 사업시행)

□ **농촌주택개량 지원 확대** 및 고령·영세농 등 주거지원대책 추진

○ 농촌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5,600동의 노후불량주택 개량(2,240억원)  
- 효율적 건축과 관리방안, 세부비용 산정 등

○ 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한 **다양한 주거지원대책** 추진

- 농촌 주거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농촌표준주택 설계도** 개발·보급  
- 사이버 컨설팅 센터를 운영, 농촌주택관련 법적·기술적 문제 지원

□ **농촌지역개발사업 체계화**를 위한 세부추진계획 마련

○ 유사사업을 통합하여 단일사업으로 '08년 예산에 반영

- 오지종합개발과 농촌정주기반확충, 농어촌 주거환경개선과 농촌주택정비, 신활력지원과 지역특화사업 등의 통합 검토

○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농촌주택정비사업은 '07년에 지원 조건을 **단일화**, '08년 이후 지원한도 확대 및 금리 추가인하 검토

- 지원한도 : ('06) 30, 40백만원/호 → ('07) 40

- 대출금리 : ('06) 3~4% → ('07) 3.4%

○ 농어촌정비법 개정 등 사업이관에 따른 관련법령 정비 추진

(1) 주요 내용

- ◇ 농업인 및 농촌주민에 대한 의료·교육·복지 등 지원을 강화
  - '13년까지 농업인의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의 1인당 지원액을 1,249천원/년으로 확대

- 농업인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등 농촌 사회안전망 확충 지원 확대
  - 건강보험료 지원률('05 : 40% → '06 : 50%→ '07 : 차등 또는 배제)
    - \* 농업인 1인당 평균 지원액 : ('05) 293천원/년→('06) 420→('07) 426→('13) 677
  - 농업인 연금보험료 기준등급 : '13년까지 23등급으로 상향 검토
    - \* 농업인 1인당 최대 지원액 : ('06) 259천원/년→('07) 280→('13) 572
- 여성 농업인과 취약농가에 대한 복지지원 확대
  - 여성 농업인의 보육부담 경감을 위한 양육비 지원 확대
    - \* 지원대상 : ('04) 농지소유 1.5ha → ('05) 2 → ('06) 5
  - 사고농가에 영농도우미, 고령취약 농가에 가사도우미 지원('06)
  - 방문교육 도우미를 통한 여성결혼 이민자 지원사업 신규 추진('07)
- 농업인 및 농과계 대학생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비 부담 경감
  - 학자금 무이자 융자 지원 확대('01 : 18천명→ '06 : 25→ '07 : 26)
  - 농과계 대학생 영농희망농업인 자녀 성적우수 장학금 지원 확대 ('06 : 5,706명, 55억원 → '07 : 6,500명, 70억원)

## [2] 세부 추진계획

### □ 농가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지원 차등화 및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 농업인 가구에 대해 건강보험료 지원을 소득별 차등(22~50%) 또는 배제하여 형평성 제고('07년중 관계 법령 개정)

\* 건강보험료 50% 지원시 연간 평균 경감액 : ('06) 420천원 → ('07) 426

-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등급 상향조정('06 : 13등급 → '07 : 14등급)

- 기준등급까지는 각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기준등급 초과시 기준등급 보험료의 50% 정액으로 지원

\* 연금보험료 연간 1인당 최대 지원액 : ('06) 259천원 → ('07) 280

### □ 사고나 질병시 농가의 생활불안 해소를 위해 농업인 안전공제 강화

- 농업인 안전공제의 가입률 확대('06 : 37% → '07 : 51%) 및 보상수준 상향 조정(사망시, '06 : 25백만원 → '07 : 35백만원)

- 사고시 휴업급여(30일 상한, 3만원/1일) 특약 도입(하반기)

### □ 여성농업인의 보육여건 개선과 취약농가 지원 확대

- 영유아 양육비 및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액 인상

- 만 6세 취학유예아동 및 준농어촌지역 거주 농업인 자녀 신규 지원

\* 영유아 양육비 지원 : ('06) 정부보육료의 50%(128천원/월) → ('07) 70%(176.5천원/월)

\*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 ('06) 정부보육료의 25%(64.3천원/월) → ('07) 35%(88.3천원/월)

- 농업인이 농작업 및 교통사고시 농사일을 대행해 주는 '영농도우미' 지원 대상 확대('06 : 13억원 → '07 : 28억원)

\* 지원조건 : ('06) 65세미만, 3ha미만 → ('07) 69세이하, 5ha 미만



- 지역의 자원봉사자를 활용, 취약농가의 가사일을 돕는 ‘가사도우미’ 지원대상 확대('06 : 7억원 → '07 : 11억원)

\* 지원조건 : ('06) 65세이상 단독편조손 농가 → ('07) 65세이상 고령 취약가구

#### □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지원

-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말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는 교육도우미 제도 운영('07년 30개 시군 시범실시, 국고 19억원)
  - 방문 교육도우미 300명 선발, 이주여성 1,800명에게 교육
- 부부교실, 가족캠프, 모범가정 모국방문 지원 및 정착사례집 발간 등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통합 지원

#### □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 확대

-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 지원(26천명, 747억원, 등록금 한도)
- 영농 종사 희망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2,500명, 30억원, 120만원/학기)
- 농업인 대학생 자녀 중 성적우수 장학생 지원(4,000명, 40억원, 100만원/학기)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액 평가시 휴·폐경농지, 직접지불금 등 공제범위 확대 추진

- 휴·폐경농지 등 처분이 곤란한 일정 수준 이하의 재산을 소득액 환산대상에서 제외 또는 경감(50%) 적용

#### □ 농촌 공동체 복지증진을 위한 농촌 커뮤니티 시설 지원방안 마련

- 농촌 인구구조·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 개발

(1) 주요 내용

- ◇ 도농교류 및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하여 도시민의 농촌전원 생활수요를 충족하고 적정 농촌인구 유지를 통한 농촌활력 증진
- '13년까지 전원마을 300개소 조성 추진(도시민 2만명 유치)

□ 민간 주도의 도농교류를 내실화하고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교류성과 창출('06~'08), 확산('08~'10) 및 국민 운동정착('10이후) 등 발전 로드맵에 따라 1사1촌 운동 내실화 및 교류촉진
- 체험·휴양마을의 음식제공·공동숙박 특례, 초·중등학생들의 농촌체험교육 근거마련 등을 위한 도농교류촉진법 제정

□ 도시민 농촌정주지원을 위해 전원마을조성, 정보제공 등 추진

- 농촌정주공간조성을 위한 전원마을조성사업(20호 이상) 확대
  - \* 전원마을조성(누계) : ('06) 55개소 → ('07) 70 → ('11) 230 → ('13) 300
- 시·군의 도시민 농촌유치활동 독려를 위한 지원책 마련
- 농촌이주에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한 토털서비스 보완·발전
  - 농촌생활정보서비스 개선, 주택 등 전문분야 상담기능 보완 등

## [2] 세부 추진계획

### □ 1사1촌 운동의 내실화 및 국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

- 자매결연 사례별 교류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상반기) 실적이 미흡한 사례는 자매결연 사례에서 제외
- 1사1촌 자매결연 시범마을 육성('07년 15개) 및 홍보 추진
- 농촌사랑지도자 대회 개최 등 대국민 참여 분위기 조성
  - 마을지도자 등 도시민 수용역량 강화를 위해 1만명 교육 실시

### □ ‘(가칭)도농교류촉진법’ 제정 추진(4월 국회제출)

- 체험·휴양마을의 음식제공, 공동숙박 등 특례마련
- 도시민 현장체험, 초·중등학생들의 농촌체험교육 근거 마련
- 농촌체험 지도사 등 도농교류 전문인력양성 근거 마련 등

### □ 전원마을조성사업은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내실 있게 지속 추진

- 추진중인 55개소는 실태조사 후 추진방식 등 재조정
  - 신규지구 15개소를 추가착수하고 '08년 사업지구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공모방식으로 선정
- 입주자 형태, 지역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개선
  - 전원마을조성주체를 시·군, 한국농촌공사에서 민간으로 확대
  - 마을정비구역지정시 도시계획구역 결정 등 관련법령 의제사항 확대

## □ 시·군의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에 대한 신규 지원

- 도시민 유치를 희망하는 시·군이 ‘도시민 유치대책’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 재원의 일부를 중앙정부가 지원

\* 지원프로그램(안) : 도시민 유치홍보, 농촌이주 도시민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봉사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컨설팅 비용 보조 등

- 10개 시·군을 선정(6월)하여 최대 3년간 10억원 내에서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실시

-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이미 도시민 유치사업을 부분적으로 추진 중인 시·군, 인구 과소화 시·군 등을 대상으로 선정

## □ 도시민의 농촌정주지원 토털서비스 지속 보완·발전

- 농촌의 교육·복지·문화·인프라 등 생활정보서비스 강화

- 행정리 단위로 교육·복지·문화, 기초생활시설 정보로 온라인상으로 제공하는 (가칭)「삶의질 서비스맵」 구축(하반기 시범서비스)

- 포털이용자가 정보 콘텐츠를 구성·발전시키는 ‘이용자 참여형 (UCC, User Created Contents)’서비스 체계 구축

- 전원생활, 주택건축 등 분야별로 전문적인 전화상담, 현장안내 등 오프라인 서비스 개선

- 농촌정주의향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전원생활교육 지속

- 바람직한 농촌주택모델 및 농촌마을정비모델 등 홍보·안내를 위해 「미래농촌전원마을 홍보관」 조성·운영

(1) 주요 내용

- ◇ 농촌지역의 향토자원을 토대로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 1·2·3차 산업의 융·복합화 추진
- '13년까지 200개 향토자원을 발굴·산업화하고, 670개소의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 지역의 향토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산업화 하는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관련전문가 컨설팅 지원 및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
- 신활력사업, 지역농업클러스터 등 농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 신활력 1단계('05~'07) 사업 성공적 마무리 및 2단계('08~'10) 추진
  - 지역농업클러스터를 육성하여 새로운 농산업 모델 정립
  - 향토산업 육성, 농공단지 조성 등 다양한 농촌소득원 확충
- 농촌체험·휴양기반을 확충하여 농촌관광을 사회적 트렌드로 정착
  -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업·농촌 테마공원 등 기반구축
  - 농촌마을 승마장 설치 등 체험관광 콘텐츠 보강

## [2] 세부 추진계획

- 1단계 **신활력사업** 마무리 및 2단계('08~'10) 사업 준비
  - 신활력사업과 유사사업간 체계화, 지원조건 등 제도개선 추진
    - \* 신활력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의 심사컨설팅을 위한 “농촌활력지원센터” 설립 검토
  
-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의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방안 강구
  - 20개 사업단 추진 성과를 평가, 우수 사업단에 인센티브(21억원) 부여
  - 지역농업클러스터를 포함한 **지역농산업 혁신방안 마련**
  
- **향토자원의 발굴·산업화 및 농공단지 조성** 지속 추진
  - 19개 자원(기본계획 기수립) 사업시행 및 30개 자원('06 선정) 기본계획 수립
  - 금년중 향토자원 관련 제도개선 및 향토자원 30건 추가 발굴
  - 농촌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공단지 조성 지원('07 : 6개소)
  
- **농촌체험마을 도시 방문객의 전년대비 15% 증가 추진**(1,544천명)
  - **녹색농촌체험마을**(84개소),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4개소) 및 마을사무장 채용지원(150명) 확대
  - 농촌체험활동 중 사고발생에 대비한 **보험가입**(65개), 전문 컨설팅이 필요한 마을에 **전문가 지원**(50개) 지속추진
    - \* 도농교류페스티벌(5.3~6), 초등교사 농촌체험(7~8월), 여름휴가 캠페인(7~8월)
  - **농로, 임도 등을 활용한 농촌형 승마모델 정립·보급**(상반기)
    - \* 농촌 승마장 설치 지원 : ('06) 4개소 → ('07) 10개소

(1) 주요 내용

◇ 농촌경관개선, 폐농자재 처리, 농업용수 수질개선 및 농경지 오염방지를 통하여 농촌의 쾌적성 제고

- 농촌경관보전직불제 지원면적을 '13년까지 7,000ha로 확대
- '13년까지 수질기준초과 농업용 호소 44개소 수질개선사업 추진

□ 농촌경관지표, 농촌경관계획수립 기준 등을 마련하여 농촌 경관관리 체계를 구축('07)하고 농촌경관개선 정책사업 확대

- 농촌개발사업은 先농촌경관계획 후 사업을 시행하는 체계마련
- 경관보전직불제 지원면적을 확대('06 : 470ha → '07 : 800 → '13 : 7,000)
- 농업생산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도 친환경적으로 추진

□ 폐농자재 수거 확대, 농업용 저수지·담수호에 대한 종합적 수질 개선 및 농경지 산성화 방지 등 농촌환경개선 도모

- 폐비닐, 폐농기계 등 폐농자재 수거 지원사업 확대
  - \* 폐비닐 수거율 : ('04) 63% → ('06) 63 → ('07) 67 → ('13) 70
- 수질기준초과(72개) 농업용 저수지·담수호 수질개선 사업 추진
  - \* 수질개선사업 : ('03) 1지구 완료 → ('07) 2 착수 → ('13) 44 → ('15) 72
- 농경지 산성화 방지를 위한 토양개량 및 중금속 오염방지 추진

## [2] 세부 추진계획

- 「농촌경관지표 적용 → 경관맵 작성 → 경관보전협약 체결」 후 농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先농촌경관계획-後사업시행’ 체계 구축
  - 농촌경관지표, 경관맵 및 경관보전협약체결 활용 매뉴얼 개발
  - 매뉴얼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에 시범적용 후 확정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3곳, 전원마을조성사업 1곳에 시범적용
  - 지자체에서 일정지역단위로 종합적·계획적인 농촌경관개선이 가능하도록 「농촌경관계획 수립기준」 제정
  
- 농촌주민의 자발적인 농촌경관 보전·형성 활동 촉진
  - 경관작물에 대한 직불제는 지원대상면적 및 작물범위확대
    - \* ('06) 유채,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목화, 야생화(460ha) → ('07) 연, 자운영 등(800ha)
  - 주택·마을안길·담장 등의 정비를 통해 농촌경관을 개선하는 마을정비·경관개선 사업 도입 추진
  - 농촌주택·마을, 농업용시설, 마을숲 등 농촌경관 주요 구성요소별 우수경관선정 및 홍보(DB화하여 관리, 인터넷 등으로 홍보)
  
- 농업생산기반시설은 기능적인측면 이외에 농촌경관을 개선하고 생태환경을 유지·보전할 수 있도록 설치·보수
  - 「환경친화적 농업생산기반정비 설계기준」을 제정('07~'08) 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 추진 및 총사업비 변경시 활용



□ 폐농자재 수거 확대로 농경지 오염방지 및 농촌 환경 보전

- 영농 시작기(3월)과 종료기(11월)를 「폐비닐 수거의 달」로 지정하여 집중 수거('07 폐비닐 수거비 지원 : 30억원, 100천톤)
  - 마을단위 공동수거를 유도하고 우수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 농기계 순회수리봉사기간(연 2회) 등을 이용, 폐농기계 수거 처리
  - 폐농기계 처리 전문업체에 처리장비 구입 등 자금 지원(3억원)

□ 환경부와 공동으로 최근 5개년 평균 수질기준 초과 72개 농업용 저수지·담수호에 대한 사업 계획을 수립·추진

- 농업용수 수질관리 지침을 제정하고, 지구별 상류부 대책과 호소내 대책의 공동 수질개선계획 수립
- 주요 농업용 저수지·담수호 500지점의 수질조사를 실시(분기별)하고, 수질기준 초과 저수지는 수질개선 사업추진

□ 산성화된 농경지에 토양개량제 살포가 편리하게 입상(알갱이)화 된 토양개량제 공급확대 및 중금속 오염방지 노력 강화

- 가루형태의 개량제를 입상으로 전환 확대('06 : 47% → '07 : 62)
  - \* '07 토양개량제 공급계획 : 401억원(규산 294천톤, 석회 253천톤)
- 중금속 오염우려가 높은 산업단지, 쓰레기매립장 주변 농경지 오염도 조사 실시
  - 안전성 조사를 실시, 중금속잔류허용 기준초과 농산물 수매·폐기
  - \* '07 토양오염조사 계획 : 10억원(31개 산업단지, 쓰레기 매립장 주변 농경지)



---

## Ⅲ. 혁 신 과 제

---



## 혁신추진 성과 및 07년 추진방향

### ◇ 혁신추진 성과

- 비전전략체계 재정립, 혁신역량 강화 및 혁신문화 정착
  - 급변하는 농정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부처 비전 재정립
  - 그린아카데미, 과제뱅크 운영 등으로 학습 및 혁신내재화 기반조성
- 일하는 방식개선을 통한 업무효율화 추진
  - BPR 기법을 적용한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구축하여 농림사업 신청, 대상자 선정 등 사업추진 전 과정을 온라인화
  - 성과와 함께 업무프로세스를 평가하는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 정책품질 제고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향상
  - 농식품안전성검정시스템 '세잎Q', 농식품수출입검사시스템 'Clean-Pass' 등 정책을 브랜드화 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

### ◇ '07년 추진방향

- 변화선도와 문제해결의 학습문화 정착으로 혁신역량 강화
  - 현장학습 및 '그린아카데미' 등 상시학습체제의 정착
  - '혁신과제뱅크'를 중심으로 문제해결 학습동아리 운영 활성화
-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의 도입·정착 및 성과관리시스템의 고도화
  - 교육강화, 업무적용 의무화 등을 통한 시스템의 조기정착
  - 성과관리의 정착을 통해 성과와 보상이 연계되는 조직문화 정착
- 가시적인 성과창출과 국민체감형 과제추진으로 고객만족도 제고
- 혁신기법적용, 고객·전문가 참여확대 등을 통해 정책 명품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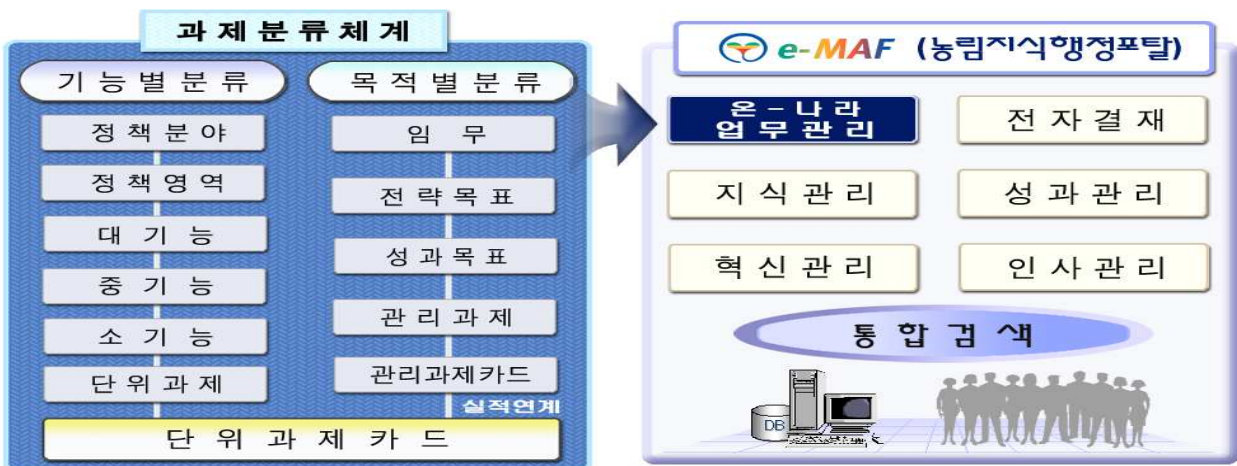
= 혁신의 내재화 기반 위에 시스템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 구현 =

(1) 시스템 구축현황

□ 과제분류 : 22개 대기능, 80개 중기능, 363개 소기능, 1,308개 단위과제

□ 시스템 구성

- e-MAF(농림지식행정포털)에 업무관리와 기존의 전자결재 및 혁신관리 등 내부 행정업무시스템을 연계한 통합활용체계 구축('06.12)
- 업무관리 시스템 서버 이중화로 안정성 확보 및 처리속도 향상



(2) 활성화 계획

□ 과제분류

- 정책 및 업무여건 변화에 따른 사용자들의 업무과제 변경이 가능하도록 연중 지속적으로 과제분류 정비 추진
- 내부포털 및 메일을 활용하여 새로 도입된 ‘업무관리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실시

## □ 과제 관리

- 단위과제는 필요시 신속하게 변경토록 하는 등 탄력적 운영을 위해 각 과(팀)에 관리책임자 권한 부여
- 관리과제는 농림부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 권한을 부여 하여 효율적 관리 및 점검

## □ 문서 관리

- 주요 농정현안에 대해 서면으로 보고하던 **우선보고 형식을 온라인 메모보고를 활용하도록 의무화**
- 각 과(팀)별 문서카드 등록 및 메모보고 건수를 **개인통합성과 평가에 반영**
- 각 과(팀)별 실적을 파악, e-MAF(지식포탈)에 지속적으로 공지

## □ 일정·일지 관리

- 각 과(팀)별 실적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e-MAF(지식포탈)에 공지하는 등 조기정착 유도
- 문서관리와는 별도로 일정·일지 사용 활성화를 위해 우수 부서와 우수자에 대해 시상

## □ 회의·지시 관리

- 기존에 과·팀별로 또는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해 오던 회의 및 지시사항을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일원화**
- 결재권자 구두지시 대신 업무관리시스템 '지시사항' 활용 의무화



(1) 주요 내용

- ◇ 각 기관 및 부서별로 분산 관리하던 농지·농촌용수 및 토양 정보 등을 통합하여 농지종합정보 제공체제로 개편
- 금년 중 농지 및 농촌용수 물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합하고, '08년 이후 농업토양 정보시스템을 통합

□ 농지 및 농업생산기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보화 사업 추진

- 전국 농지 면적, 재배작물, 소유경작자 DB 등 농지정보시스템 구축('00)
- 농촌용수의 개발·보존·수질관리 및 수리시설의 체계적 운영을 지원하는 농촌용수 물관리정보시스템 마련('99)
- 인터넷으로 토양지도 정보를 제공하는 농업토양정보시스템 운영('99)
- ⇒ 정보화 기반은 갖추어졌으나 관련 DB간 연계 부족, 농지 업무 처리과정에서 서류 과다 등 비효율성 초래

□ 행정비용 절감과 농지정보의 활용도 제고, 농업인 편의증진을 위해 농지관련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 농지의 양적 관리에서 질적 관리로의 전환을 위해 농지정보와 농촌용수정보 및 토양정보를 통합하는 종합시스템화
- 기존 농지정보시스템을 행정기관간 농지관련 DB연계, 농지 전용심사 전자자료관 구축, 위성영상자료 활용 등 확대 개편

## [2] 세부 추진계획

### □ 농지정보시스템의 혁신

#### ○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농지관련 DB 연계 강화

- 지적 전산망과 연동, 토지대장에 소유자나 지목 변경이 될 경우 농지정보시스템에 자동 변경 처리되도록 개선
- 농림사업 대상자 관리 등에 농지관련 DB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과 연계 추진

#### ○ 인터넷을 통하여 농지전용 심사자료를 제출토록 업무 개선, 행정서류 간소화 및 민원인의 편익 제고

- 도로 건설 등 장기 사업은 농지전용 협의내용 변경이력 관리

#### ○ 위성 영상(Remote Sensing) 자료, PDA 등 IT기술을 활용, 불법 전용 농지적발, 휴경, 직불제 이행상황 점검 등 업무 효율화

\* 위성영상자료 활용시 약 80%정도 현지 확인 생략 가능

### □ 농지·농촌용수·농업토양 등의 관련 정보를 통합, 농지관련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지종합정보 제공 체계 확대

#### ○ 농지 및 농촌용수 정보시스템을 연계, 필지별로 경지 정리, 배수 개선, 수질 및 지하수 정보 등을 종합 제공, 농업인의 영농편의 도모

#### ○ 농업토양 DB를 활용하여 작물 재배적지, 시비 처방 등의 영농정보 동시 제공

(1) 주요 내용

- ◇ 가축전염병 발생자료관리·예찰방역 및 대응시스템을 통합하여 디지털 가축방역통합시스템 구축
- 현재 운영중인 가축전염병 발생정보 프로그램의 통합 및 범정부 재난관리 시스템과 연계 구축

□ '00년 이후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국가 재난형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사회·경제적인 피해 증가

- 가축전염병 관련 정보화 시스템(3종)의 개별적 운영으로 종합적인 상황분석이 어려워 효율적 방역추진에 애로

\* 현행 운영시스템(3종) : 가축전염병 발생자료 관리시스템(AIMS), 가축전염병 대응시스템(CAIS), 국가가축질병 예찰방역시스템(NAHMS)

□ 기 구축된 3종의 정보화시스템을 상호 연계하고 선진형 방역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가축방역 통합관리체제 구축

- 통합시스템에 법정전염병 이외의 질병발생 정보자료 DB도 연계하여 종합적인 전염병 예방활동 정보로 활용(1단계)

- 가축 사육농가의 가축질병 진단·예찰 등 현장에 피드백

- 초동방역 대응을 위해 가축전염병 발생지점을 중심으로 '전자방역대'를 설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운용(2단계)

- 중장기적으로 국가재난 관리시스템과 정보공유 체계 구축(3단계)

## [2] 세부 추진계획

- 가축방역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악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발생시 조기차단을 위한 방역체계 선진화
  - 현장 방역요원용 PDA/UMPC(휴대용컴퓨터) 보급 등 실시간 정보 제공체제 구축으로 선진형 가축전염병방역시스템 구축
  - 가축질병 정밀검사 실적관리시스템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조류 인플루엔자 등 주요 가축전염병 관리대상 추가
  - 시·도 등 방역기관에서 작성한 예찰실적 자료를 웹(Web)을 통해 DB화(돼지콜레라 검사실적 등)하고 자료 공유
- 가축전염병 발생 시 초기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전자 방역대 설정 프로그램 개발 및 지리정보시스템(GIS) 공유 기반 마련
  - 전자방역대 설정프로그램(Mapping Program)을 통한 지역별 가축질병 발생지도 제공으로 즉각적인 대응체제 마련
  - 지역별·농가별 축산관련정보를 GIS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시 즉각적인 대비체계 확보
  -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주요 전파요인 위험도 분석에 따른 가축전염병 전파예측 모델 개발
- 중·장기적으로 소방방재청, 질병관리본부 등 범정부 재난관리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가축방역통합시스템 정보 공유체제로 발전

(1) 주요 내용

◇ 수입농산물 등에서 발견된 병해충을 신속·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응하기 위해 식물병해충 원격진단네트워크 구축

○ 식물검역소·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병해충 전문가들이 Web상의 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단하고 신속히 대처

□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면서 국내에는 발생하지 않는 해외 악성 식물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될 위험성 상존

○ 해외 악성 식물병해충 유입시 막대한 피해와 방제비용 소요

\* 2006년 기준으로 외래병해충은 총 55종(병 22종, 해충 33종)

\* 소나무재선충 : '88년 부산에 처음 발생 이후 53개 시군 확산('06년 방제비용 553억원)

○ 농업과 산림, 자연생태계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어 발견된 병해충을 신속 진단·관리하는 시스템 필요

□ 병해충 진단 전문가 Pool을 확보하여, 실시간 화상진단 또는 저장된 영상을 통해 언제든지 전문가가 확인·진단할 수 있는 Web방식 원격진단 네트워크 구축

○ 원격진단 실시로 신속성과 효율성 획기적 개선

구 분	방 법	소요시간	전문가	정보제공
기존 진단방식	샘플송부	5~7일	제한	문서
원격 진단방식	화상전송	1일	다수	인터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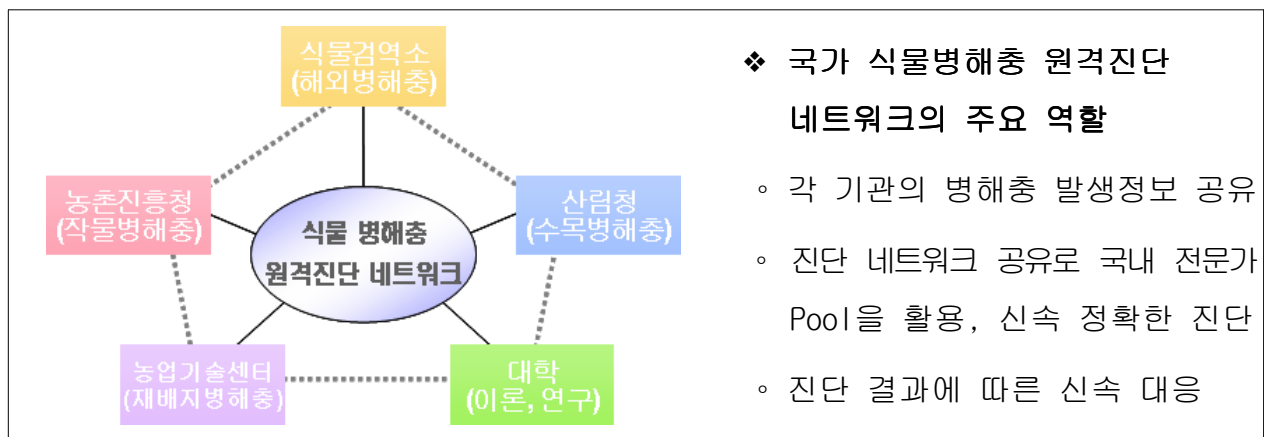
## [2] 세부 추진계획

- 식물 병해충 정밀진단을 위한 병해충 진단 전문가 Pool 확대
    - 식물검역소·농촌진흥청 및 대학 등 각계의 식물병해충 전문가 Pool을 확대 구성, 범국가 차원의 진단전문가 인프라 구축
      - 현재 구성된 진단전문가 Pool(78명)을 100명 수준으로 확대
  - 전국에 산재해 있는 진단 전문가가 병해충 화상샘플을 보고 동시에 진단에 참여할 수 있는 식물병해충 원격진단체제 구축
    - 수입 농산물 검사와 수입식물 재배지 예찰 및 국내 재배작물 등에서 발견된 식물병해충의 신속·정확한 진단에 활용
    - 1차로 국립식물검역소 본소와 전국 지·출장소 30개소를 화상진단 네트워크로 연계, 원격진단체제로 전환
      - 전국의 병해충 진단 전문가가 원격진단 홈페이지를 통해 화상으로 실시간 또는 DB에 저장된 화상을 보고 Web방식 원격진단 실시
- \* 화상전송 30개 : 국립식물검역소 본소 1, 지소 5, 출장소 22, 격리재배소 2



○ 1차 원격진단 성과분석을 통해 농진청과 산림청 등 국내 관련 기관과도 범국가 차원의 원격진단네트워크 구축('08)

\* 국내 진단 관련기관 : 농진청, 산림청, 농업기술원, 대학 등



□ 발견된 병해충의 종합정보 및 진단결과 등을 제공하기 위해 원격진단 네트워크 홈페이지 구축('07)

○ 식물병해충에 대한 최신의 다양한 정보와 발생정보를 제공하여 농업인, 관계기관 등에서 방제에 활용토록 지원

□ 병해충의 위험정도와 관리방안 협의를 위해 오프라인으로 개최하는 현행 병해충위험평가회의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전환('08)

○ 식물검역소·농진청 및 산림청 등 외부 관련기관 병해충 전문가가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화상회의 시스템 도입

○ 화상회의를 통한 외부전문가 참여확대를 통해 병해충 경제적 피해수준 설정 및 유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관리

---

## IV. 성과 측정 체계

---

1. 기관 대표 성과지표

2.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 1

## 기관 대표 성과지표

성 과 지 표	측 정 방 법	목표치 (2007)
①농축산물 안전성 관리 -소비지 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 적합율 -식육중 미생물 검사 위반율	·소비지(출하단계) 잔류농약 모니터링 결과 품목군별 적합율의 가중평균 ·시중유통되는 식육 중 미생물 검사 건수 대비 위반건수 비율	97.7% 0.42%
②농림업 식품산업 성장율 -농림업 총생산액 -식품산업 매출액 증가율	·최근 5개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 ·전년대비 식품산업 매출액의 성장률을 측정	36.9조원 7.1%
③농업인 전업화율 -쌀전업농의 경영면적 비율 -축산전업농의 사육비율 -과수전업농의 생산비율	·전체 벼 재배면적 중 쌀 전업농 경영면적 ·전체 사육두수 중 축산전업농 사육두수 ·전체 생산량 중 전업농 과수생산량	34% 76.6% 43%
④농산물 브랜드화율 -쌀 공동브랜드 유통비율 -채소류 브랜드 유통비율 -과실류 공동브랜드 유통비율 -한우 브랜드 사육비중	·전체 쌀 브랜드 유통량 중 공동브랜드 유통비율 ·채소류(양파) 생산량 중 브랜드 유통비율 ·주요과실의 생산량 중 공동브랜드 유통비율 ·전체 한우 사육두수 중 브랜드 경영체 사육두수	10% 2% 3% 34.0%
⑤농식품 수출액	농림축산물의 당해연도 수출금액	24.5억불
⑥농가소득 증가율	최근 5개년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3개년 평균 증가율	4.1%
⑦삶의질 만족도 지수	농촌주인을 대상으로 농촌 복지·의료·교육 등 13대 분야에 대해 만족하는 응답비율	45%
⑧도농교류 촉진 -1사1촌 교류금액 증가율 -전원마을 도시민 유치비율	·전년대비 1사1촌 교류금액 증가율 ·목표(8,400가구) 대비 도시민 유치 실적율(누계)	15% 15%

## 2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 (1) 성과지표 총괄현황

(단위: 개)

부 문	전략목표	성과목표 혁신과제	성 과 지 표						
			지표수	지표성격				계량	국제 지수
				투입	과정	산출	결과		
정책부문	5	28	108	-	3	44	61	85	-
비율	-	-	100%	0.0%	2.7%	40.7%	56.5%	78.7%	0.0%
혁신부문	-	4	19	-	-	15	4	15	-
비율	-	-	100%	0.0%	0.0%	78.9%	21.0%	78.9%	0.0%

### (2) 전략목표 및 주요 성과목표

성과목표	주요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목표치	지표 종류	
					계량화	성격
I. 농업개방 확대에 대응한 농정시스템 체계화						
농업협상 대응 및 국제협력 강화	한·미 FTA 협상	농업협상 만족도	설문조사 만족도	55%	비계량	결과
	기타 FTA 협상	농업협상 만족도	설문조사 만족도	55%	비계량	결과
	DDA 협상 대응	농업협상 만족도	설문조사 만족도	55%	비계량	결과
	국제 농업협력 강화	신규MOU 체결 증가율	2006년 누계 MOU체결 실적 대비 증가율	15%	계량	결과
		농업협력사업에 대한 만족도	협력사업 종료시점에서 상대국 연수생 만족도조사	50%	비계량	결과
농업·농촌 종합대책 조정	농업·농촌 종합 대책 조정	조정안 만족도	조정(안)에 대한 설문조사 만족도	50%	비계량	결과
	농업·농촌 종합 대책의 제도적 뒷받침	농업·농촌기본법 개정 추진	개정(안) 국회제출 여부	국회제출	비계량	산출
		FTA이행 특별법 개정	특별법 개정(안) 국회제출 여부	국회제출	비계량	산출

성과목표	주요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목표치	지표 종류	
					계량화	성격
맞춤형 농정 추진체계 정립	맞춤형정책 구체화	맞춤형농정 기본 계획 수립	기본계획 보고서	계획수립	비계량	산출
	농가 등록제 시범사업 실시	등록제 시범사업 실시	등록제관련 계획 보고서	시범사업 실시	비계량	산출
시장지향적인 양정제도 정착	공공비축 및 쌀 소득 보전 직불제	공공비축미 매입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	300만석	계량	결과
		농가소득지지율	기준년도 목표가격대비 사업년도 실적	97.0%	계량	결과
	양곡 유통 투명화 및 산지 민간유통 활성화 추진	RPC 처리비중	RPC 비 매입량/유통량	58%	계량	결과
현장중심의 농정협력 시스템 구축	지자체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지자체 포럼 설립	포럼 설립여부를 확인	포럼 설립	비계량	산출
	농업인 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책 간담회 실시	농업정책에 대한 농업인 만족도	주요 농업정책에 대한 농업인의 만족도를 조사	60점	비계량	산출
	농림공직자의 농촌 체험 강화	농림공직자 현장 체험 실적	농림부 소속 공무원의 현장체험 실적 점검	70%	계량	결과
<b>II. 소비자에게 안전한 고품질 농식품 공급</b>						
식품산업 육성	식품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식품산업 매출액 성장률	'06년 매출액 대비 '07년 매출액을 비교	7.1%	계량	결과
	전통음식 육성 및 세계화 추진	전통주업체 평균 매출액	전통주업체 운영 실태 조사를 통해 매출액 산출	7억원	계량	결과
		전통식품 인증건수	인증받은 전통식품 건수(누계)	300건	계량	결과
	농업과 식품 업체간 균형성장	가공업체 평균매출액	정부지원 농산물 가공업체의 운영 실태조사를 통해 매출액 산출	17억원	계량	결과
	맞춤형 소비촉진 홍보	우리농산물 소비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하여 만족도 산출	53.0%	계량	산출
쌀 브랜드 육성		쌀 품질지수	[식미(%)+품위(%)+품종순도(%)+소비자 만족도(%)]/4	78.0%	계량	결과
		쌀 공동브랜드 유통비율	(공동브랜드 유통량/사군 전체 쌀 브랜드 유통량)×100	10%	계량	결과

성과목표	주요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목표치	지표 종류	
					계량화	성격
고품질 브랜드 농산물 공급	원예 농산물 브랜드 육성	채소류 브랜드 유통비율(양파)	품목별 전국 유통량 중 브랜드 유통비율 조사	2%	계량	결과
		원예농산물 표준 규격출하율	공영도매시장 출하 50개 품목의 표준규격 출하실적	65.0%	계량	결과
		과실류 공동브랜드 유통비율	주요과실의 생산량 대비 공동브랜드 유통물량	3%	계량	결과
	축산물 브랜드 육성	한우브랜드 생산비중	전국 사육두수 대비 브랜드 경영체 사육두수	34.0%	계량	결과
		돼지브랜드 생산비중	(돼지 브랜드 출하두수/전체 출하두수) *100	53%	계량	결과
농식품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농산물 안전성 관리	GAP 인증 농산물 생산비중(%)	과일·채소인증품생산량/전체 과일·채소생산량 × 100	1.0	계량	결과
		소비자 농산물 잔류농약허용기준 적합율(%)	Σ(품목군별 적합율 × 가중치)	97.7	계량	결과
	축산물 안전성 관리	식육중 잔류물질 검사건수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보고한 검사실적	120천건	계량	결과
		쇠고기 이력추적 시스템 등록비율	전산등록 두수/국내산 소 전두수(230만두) × 100	28.3%	계량	산출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대책	A.I 방역대책 마련	AI 발생지역 청정화율	발생지역 수 대비 청정화선언 지역 수	100%	계량	결과
		AI 예찰 실적	특별방역대책 계획 대비 실적 확인(오리 혈청검사)	20,000건	계량	결과
	구제역·돼지콜레라 방역대책	수입건초 소독·정밀검사 실시율	구제역 발생국산(중국·인도네시아산) 조사료 소독·정밀검사 실시비율	100%	계량	산출
		돼지콜레라 면역형성율	검역원 집계실적 확인	95.0%	계량	결과
	소부루세라병 방역 강화	소부루세라병 검사비율	시도별 검사실적 확인 (사육농가수 대비 검사 농가수)	80%	계량	결과
	공익수의사 제도 운영	공익수의사 현장 배치 인원	공익수의사 운영인원수	150명	계량	산출
수입 농축산물 검역관리 체계화	원산지 단속강화	원산지 표시이행율	표시대상업소의 표시 품목 건수/표시대상업소의 표시 대상품목 건수 * 100	97.2%	계량	결과
	수입농산물 검역	여행객 휴대품 검역실적	해외여행객의 휴대축산물 검색 건수	23,000건	계량	결과
자연 순환형 친환경 농업육성	친환경농법 확산	친환경축산물 생산비중	전체 축산물 생산량 대비 친환경 축산물 생산량	0.2%	계량	산출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	전체 농산물중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산물 비율측정	7.0%	계량	결과
	가축분뇨 자원화 제고	가축분뇨 자원화율	전체 가축분뇨 발생량 대비 자원화 물량	83%	계량	결과

성과목표	주요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목표치	지표 종류	
					계량화	성격
<b>Ⅲ. 농업체질 강화 및 농업경쟁력 제고</b>						
<b>농업인력 확보 및 역량확충</b>	젊은 신규 농업 인력 확보	후계농업인 선정자 수	매년 지자체에서 선정한 후계농업인 수 실적	1,400명	계량	산출
		영농정착율	최근 3년간 선정된 창업농의 영농종사 비율	90.0%	계량	결과
	전업농 중심 맞춤형 교육 및 법인 경영체 지원 강화	교육만족도	외부 전문 평가기관을 통해 교육생 일부 중 표본 추출하여 조사	77점	비계량	결과
		연간매출액 50억원 이상 농업법인 수	통계청의 농업법인 사업체 통계조사	300개	계량	결과
<b>농산물 물류효율화</b>	농산물 포장유통 추진	원예농산물 표준 규격출하율	공영도매시장 출하 50개 품목의 표준규격 출하실적	65.0%	계량	결과
		소모성 물류비중	유통비용 조사자료 활용 (매년)	53%	계량	산출
	도매시장 현대화 및 유통개선 대책 수립	제도개선을 위한 농안법 개정	농안법 개정여부를 확인	개정	비계량	결과
<b>협동조합 경제사업 활성화</b>	일선조합 경영개선 및 규모화 지원	순자본비율 4%미만 조합수	익년초에 당해연도 조합별 결산결과를 토대로 조합수 파악	90	계량	결과
	일선조합 경제사업 지원체계화	경제사업 120억원 미만 조합수	익년초에 당해연도 조합별 결산결과를 토대로 조합수 파악	456개소	계량	결과
	농협 소비지 유통활성화	농협의 소비지 농산물 점유율	농협 소매매장의 농산물 거래액 대비 도시근로자 식료품비를 비교	8.0%	계량	결과
<b>농식품 수출확대</b>	농식품 수출 중장기 대책 추진	농림축산물 수출실적	농림축산물 수출입동향	24.5억달러	계량	결과
		원예생산단지 수출비중	원예단지 수출실적/국가 전체 원예작물(채소,과실, 화훼) 수출실적	25.0%	계량	결과
	수출유망품목 육성 및 해외 마케팅 지원 강화	수출유망품목 수출실적	수출유망품목지원사업 대상업체 수출실적 집계	3백만달러	계량	결과
		박람회 투입비용 대비 계약금액	박람회 투입비용과 실제로 계약한 금액을 비교	68배	계량	결과
<b>종자산업 육성</b>	민간육종연구 개발 지원강화	종자(종묘) 수출액	당해연도 종자수출액 누계	2천만달러	계량	결과
		장마·딸기 국산품종 점유율	국산 품종의 점유율	장미 : 4% 이상 딸기 : 22% 이상	계량	결과
	우수품종 보급판매	우수벼 종자보급량	벼 보급종 공급물량	19천톤	계량	산출

성과목표	주요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목표치	지표 종류	
					계량화	성격
신성장 동력확충	신기술 개발지원	농림기술개발 기술이전율	기술개발 완료과제 대비 실제 기술이전한 건수 비율	19%	계량	결과
	대체작물의 재배확대	사료작물 재배면적	시도 사료작물 재배면적	110천ha	계량	산출
IV. 농업인 소득 향상 및 경영안정 강화						
직접지불제 확충	소득안정형직불제 방안 마련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 확충방안 수립여부	방안 수립여부	방안마련	비계량	산출
	조기은퇴직불제 도입 검토	경영이양직불제 개편방안 마련	개편방안 마련 여부	개편방안 마련	비계량	산출
경영회생 지원시스템 활성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부채농가 감소율	(지원후 부채감소 농가수 / 지원농가수) × 100	75%	계량	산출
	경영회생지원 제도개선	경영회생자금 상환율	최근 3개년 경영개선 자금 상환율	79.3%	계량	산출
재해대비 경영안정 장치강화	보험대상 확대 및 국가재보험 확충	재해보험 가입률	보험추진 완료후 보험 가입실적 계수를 통해 측정	24.5%	계량	결과
		가축공제가입률	공제가입대상 축종의 공제가입두수	37%	계량	결과
	농업분야 정책보험 통합체계 구축	농업관련 재해보험 통합체계 구축	통합방안 마련여부 확인	통합방안 마련	비계량	산출
	재해복구 단가 조정 등	단가현실화 협의	재해복구 단가 현실화 협의 반영여부 확인	고시개정	비계량	산출
안전 영농기반 구축	노후시설 개보수	수리시설 개보수율	사도의 사업추진실적 집계	65.1%	계량	결과
	한·수해 대비 생산기반 구축	배수개선율	사도의 사업추진실적 집계	73.0%	계량	결과
		수리담율	수리담면적이 전체 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79.2%	계량	결과
	새만금 공사 마무리	새만금토지 이용 계획 수립	새만금토지 이용계획 수립여부 확인	이용계획 수립	비계량	산출
선진농업 금융시스템 구축	시중은행 취급 확대	정책자금 시중은행 취급율	전체융자사업중 기본방안상 확대사업	50%	계량	산출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체계 구축	기본방안 수립 여부	기본방안 수립 여부	수립여부	비계량	산출
	농업금융건전화	구상채권상각총당금적립비율	(총당금 적립금액 / 적립 필요금액) × 100	80%	계량	결과
	계약재배를 통한 수급안정 추진	노지채소 가격진폭율	월평균 최고가격에서 최저가격을 뺀 값을 평균 가격으로 나눔	55%	계량	결과

성과목표	주요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목표치	지표 종류	
					계량화	성격
생산자 단체 자율적 수급조절 강화	원예분야 자조금 육성	원예품목 자조금단체 생산점유비중	자조금조성단체의 생산량 (액) 대비 품목전체의 생산량(액)	38%	계량	과정
	축산자조금육성	축산품목 자조금 거출율	자조금단체 거출계획 금액 대비 거출금액	77%	계량	과정
		하위법령 개정여부	축산물소비등에관한법률 하위법령 개정여부	법령개정	계량	과정
	농업관측 활용	농업관측 품목수 확대	관측 품목수 확대여부	28품목	계량	산출
		농업관측정보 활용도	농업관측 활용도	78%	계량	결과
V. 도시민과 상생하는 활력있는 농촌 구현						
체계적인 농촌지역 개발추진	농촌지역 생활 환경 정비	정주기반확충사업 시행면수	계획대비 추진실적	300개면	계량	산출
		오지종합개발대상 사업시행면수	계획대비 추진실적	223개면	계량	산출
	농촌마을종합 개발 추진	농촌마을종합개발 계획수립 권역수	계획대비 추진실적	40권역	계량	산출
	농촌지역 개발 사업 체계화 방안 마련·추진	농촌산업진흥체계 개편	체계개편방안 마련	방안마련	비계량	산출
농촌의료· 교육·복지 여건개선	건강·연금보험료 지원확대	건강보험료 1인당 지원율	1인당 지원액 실적/계획	91%	계량	산출
		연금보험료 1인당 지원율	1인당 지원액 실적/계획	92%	계량	산출
	농업인 안전공제	안전공제 가입율	가입건수/ 농림업 경제 활동인구	51%	계량	산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율	영유아 양육비 지원인원 /농업인의 전체 영유아 인원	60%	계량	산출
	취약(사고·고령) 농가 지원확대	취약(사고·고령) 농가 지원율	(지원인원/지원계획인원) × 100	85%	계량	산출
	농촌여성 결혼 이민자 정착지원	결혼이민자 적응 지원 실적	(지원인원/지원대상인원) × 100	25.6%	계량	산출
도농교류 및 도시민 유치	1사1촌 운동의 내실화	1사1촌 교류금액 증가율	전년대비 교류금액 증가율	15%	계량	산출
	전원마을 조성	전원마을 도시민 유치비율	'13년 도시민 유치계획 (8,400가구) 대비 도시민 유치 가구 수(누계)	15%	계량	산출
	농촌정주 토탈 서비스 보완	포탈회원 신규 가입자 수	'07년 신규포탈회원 신규 가입자수를 기준으로 평가	15,000명	계량	산출



성과목표	주요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목표치	지표 종류	
					계량화	성격
농촌자원 산업화	신활력사업 추진	농촌산업진흥체계 개편	체계개편 방안 마련	방안마련	비계량	산출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 추진	지역농업 클러스터 특화품목 매출액 증가율	측정년도 매출액/전년도 매출액 * 100	13%	계량	결과
	향토자원 발굴	향토자원 개발건수	향토자원 사업 개소수	19건	계량	산출
		지역특화사업집중도	지원예산/지역특화사업 개소(품목)수	1.3억원	계량	산출
	체험마을 지원확대	녹색농촌체험마을 방문객 증가율	전년대비 녹색농촌체험 마을 방문객수 증가비율	15%	계량	산출
		농촌관광 매출액 증가율	(당해년도 실적-전년도 실적)÷전년도실적×100	15%	계량	산출
과적한 농촌환경 조성	농촌경관계획 수립기준 제정	농촌경관지표 제정여부	농촌경관관련 지표를 제정	제정	비계량	결과
	농촌경관보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시행면적	계획대비 실적	800ha	계량	산출
	폐영농자재 수거	폐비닐수거율	폐비닐 발생량 대비 수거율 비율	66.6%	계량	결과
	농업용수 수질관리	농업용수 수질기준 충족율	수질측정망 492개소 수질조사 결과	83.5%	계량	산출
	토양개량 및 지력유지	논토양유효규산함량	전국의 표본을 대상으로 실측조사(4년1주기)	122.8ppm	계량	결과

### (3) 혁신 과제

혁신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목표치	지표 종류	
				계량화	성격
	과제분류의 적절성	적절성 유지 노력, 개선실적	활성화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비계량	산출
	과제관리카드 작성의 충실성	단위과제카드 : 표본조사 관리과제카드 : 전수조사 * 항목별 입력사항 확인	활성화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비계량	산출

혁신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목표치	지표 종류	
				계량화	성격
온라인 정부업무 관리 시스템 활성화	문서관리카드 생산율	문서관리카드 건수 / $\sum\{(전자문서생산건수 + 문서관리카드 건수)\} \times 100$ * 문서관리카드 작성 체크리스트 준수시 가정 부여	50%	계량	산출
	1인당 일정·일지 등록건수	$\sum(1인당 1일 평균 일지건수) /$ 사용자수 $\geq 1$ * 1인당 1일 평균 일지건수 = 등록일지건수/기간(일)	1인 1일 1건 이상 일정·일지 작성	계량	산출
	회의체 평균 안건건수	시스템에 등록된 안건건수/ 시스템에 등록된 회의체수	월 2건	계량	산출
	지시 이행실적 등록비율	이행실적이 등록된 지시건수/ 전체 지시건수	90%이상	계량	산출
농지종합 정보 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 완성도	농지정보 시스템 및 전자 자료관 구축 정도	100%	비계량	산출
	정보시스템 고객만족도	정보시스템 이용자의 만족도 결과	70%	비계량	산출
	업무 처리시간 단축	전산화 이전대비 이후 업무 처리시간 단축률	20%	계량	결과
	행정·경제적 비용절감	인터넷을 통한 농지전용 자료제출로 자료제작비, 방문 회수 감소 등에 따른 절감 효과	30%	계량	결과
디지털 통합 가축방역 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 완성도	가축전염병 발생, 예찰 및 맞춤형 관리시스템 구축정도	100%	비계량	산출
	가축전염병별 데이터 베이스 구축률	주요가축전염병 44개에 대한 질병 DB 구축률	39개 이상 질병 DB구축 (대상 질병의 90%이상)	계량	산출
	가축전염병 발생정보 활용 건수	월간 발생정보 산출 및 활용건수	연간 12회	계량	산출
	이용자 만족도	시스템 이용자의 만족도 결과	70%	비계량	산출
	발생상황도, 현황 제공 시간	시스템 구축전후 발생상황도, 현황 제공시간 단축률	70%	계량	산출
식물병해충 원격진단 네트워크 구축	시스템 구축 완성도	식물병해충 원격진단 시스템 구축 정도	100	계량	산출
	업무처리시간 절감률	$[(기존소요시간 - 원격진단시간) /$ 기존소요시간] $\times 100$	50%	계량	결과
	병해충 원격진단율	(진단병해충/의뢰병해충) $\times 100$	80%	계량	결과
	네트워크 만족도	외부 설문조사기관 용역	75%	비계량	산출



## V. 통계인프라 확충

1. 총괄 현황
2. 주요 새로운 통계 발굴
3. 기존통계와 정책성과 상충사례 및 개선방안



# 1

## 총괄 현황

계	새로운 통계 발굴	정책성과 상충사례			
		소계	해당통계 수정·보완	보조지표 발굴·활용	기 타
5	4	1	-	1	-

# 2

## 주요 새로운 통계 발굴

연번	통계명	통계지표내용	활용사항	기대효과
1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실태 조사	- 생산량, 출하량, 출하처 - 판매량, 농가수취가격 등	- 친환경 농산물 수급 실태 파악 및 관련 대책 활용	- 친환경농업 육성 대책 수립
2	농업경영인력 변동실태조사	- 이농·취농 실태 - 취농 인력의 주요 경영실태	- 신규 취농인력 실태 파악, 이농 원인 분석 등	- 농업분야 인력 변동에 따른 대책 수립
3	농촌사회·복지· 문화·관광 실태 조사	- 실태조사 : 연금·보험 가입현황, 자녀의 유학 현황, 도농교류 실태, 컴퓨터 보유·활용 등 - 만족도조사 : 소득, 의료서비스, 교육 서비스, 문화수준 등	- 농촌의 삶의 질 실태 조사 및 농촌대책 수립	- 농촌정책의 적시성과 효과성 제고
4	농업·농촌동향 조사	- 주요 농업·농촌정책에 대한 현장 농업인의 의견 * 농정에 대한 농업인 인지도, 호응도, 신뢰도 등	- 농업·농촌정책의 효과 및 보완사항 파악	- 현장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농정 추진

## 3

## 기존통계와 정책성과 상충사례 및 개선방안

연번	통계지표	상충사례	개선방안
1	농가부채통계	- 농업정책자금 이자율 감면 및 상환 연기 등 농가부채 감소 대책을 추진하였으나, 통계지표상 농가부채 증가	- 농가부채 관련 보조지표 발굴 · 정책자금지원 이자율 감면 및 부채 경감대책 추진에 따른 정책 성과를 통계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보조지표 개발 예)정책자금지원액, 상호금융 금리인하율 등

# 희망이 사는 농촌, 미래를 여는 농업인

2007. 3

농림부 해양수산부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 보고 순서

I. 참여정부 농정의 성과 .....	695
1. UR이후 농정의 대응과 평가 .....	697
2. 참여정부 농정 4년의 노력과 성과 .....	701
3. 농정의 현좌표 .....	715
II. 수요자별 정책 성과 .....	725
1. 농업인 .....	727
① 농업인도 이제 전문경영인으로 거듭납니다.	
② 소득불안에 대한 걱정이 줄었습니다.	
③ 자연재해에도 점차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④ 부채부담이 한결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⑤ 고품질 농산물 브랜드 마케팅에 눈떴습니다.	
⑥ 농업정책이 현장에서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⑦ 여성도 당당한 경영 주체입니다.	

<b>2. 품목별 농업인</b> .....	<b>761</b>
<b>2-1. 쌀 농업인</b> .....	<b>762</b>
① 개방에 대비할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② 우리 쌀 품질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③ 쌀값은 떨어져도 쌀 농업인의 소득은 안정되었습니다.	
<b>2-2. 원예 농업인</b> .....	<b>770</b>
① 품질좋은 농산물로 세계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② 수급·재해에 따른 소득불안이 크게 줄었습니다.	
<b>2-3. 축산 농업인</b> .....	<b>777</b>
① 세계수준의 품질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② 경영위험 및 수급변동에 관한 걱정이 줄었습니다.	
<b>3. 농촌 주민</b> .....	<b>786</b>
① 질병과 노후에 대한 걱정을 한층 덜게 되었습니다.	
② 출생에서 대학까지 자녀 교육 걱정이 줄었습니다.	
③ 농촌생활이 더욱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④ 찾아오는 도시민으로 마을에 활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⑤ 향토자원으로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b>4. 소비자</b> .....	<b>814</b>
① 선진 농식품 안전제도로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② 다양한 먹거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Ⅲ. 2007년 업무추진 계획 .....	825
1. 2007년 농정여건 전망 .....	827
2. 2007년 농정추진체계 및 중점 추진과제 .....	828
과제 1 : 농업협상 대응 및 국내대책 보완 .....	829
과제 2 : 맞춤형 농정 추진체계 정립 .....	834
과제 3 : 식품산업 육성 및 농식품 수출확대 .....	836
과제 4 : 고품질 농산물 생산·유통·판매 지원 .....	839
과제 5 : 농식품 안전관리 시스템 및 가축방역 .....	843
과제 6 :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육성 .....	848
과제 7 : 농업인의 소득 향상 및 경영안정 제도 강화 .....	850
과제 8 : 농촌지역개발 추진 및 의료·교육·복지여건 개선 ..	854
과제 9 : 도농교류 촉진 및 농촌자원의 산업화 .....	856
Ⅳ. 2030년 우리 농업·농촌의 모습 .....	861
1. 비전 2030 추진체계 .....	863
2. 미래 우리 농업·농촌의 모습 .....	864



---

## I. 참여정부 농정의 성과

---

1. UR이후 농정의 대응과 평가
2. 참여정부 농정 4년의 노력과 성과
3. 농정의 현좌표



1

UR이후 농정의 대응과 평가

역대 농정 개관

구 분	여 건	정책 방향	성 과	한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민 정부 ('93~'97)</li> </ul>	UR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어촌 구조개선대책</li> <li>-생산기반 구축</li> <li>-전업농 육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곡의 안정적 공급 달성</li> <li>◦농업구조개선 진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영안정장치 미흡</li> <li>◦도·농간 생활환경격차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의정부 ('98~'02)</li> </ul>	외환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농촌발전계획</li> <li>-농가경영안정</li> <li>-유통H/W 확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통구조 선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인 자생력 미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정부 4년 ('03~'06)</li> </ul>	쌀협상 FTA/DDA 등 개방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농촌 종합대책</li> <li>-양정제도 개편</li> <li>-유통S/W 개선</li> <li>-직불제 확충</li> <li>-농촌 의료·복지·지역개발</li> <li>◦중장기 투융자계획 수립·추진</li> <li>◦농식품육성 및 안전성 정책 본격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구조개선 가속화</li> <li>◦소득 정책 본격화</li> <li>◦1사1촌 운동 등 도농교류 및 지역균형발전 여건 조성</li> <li>◦농업인·지자체의 농정 참여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종사자 인구 감소 추세 지속</li> <li>◦계층간 농업소득 양극화 심화</li> <li>◦개방 확대에 인한 불안감 확산</li> </ul>
---	--------------------------	--	---	---



(1) 문민정부

■ '93년 UR타결 이후 본격적인 개방화로 접어들면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 확보가 농정의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었습니다.

- 이미 기반정비가 완료된 선진국에 비해 농업생산기반, 유통시설 등 농업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인프라가 크게 부족하여 농업 SOC 구축 등 경쟁력 제고사업에 집중 투자

\* '93년 : 경지정리율 43%, 배수개선율 34%, 도매시장 8개소

■ '94년 농어촌 발전대책, 농특세 신설을 바탕으로 전업농 중심의 규모화 정책 등 선진국형 농업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전업농 및 법인경영체 육성, 농지법 제정('94)으로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허용 및 진흥지역내 소유상한 폐지 등 경영 규모화 촉진
- 대구획 경지정리, 수리시설 확충,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등 효율적인 영농 기반을 구축하고 시설온실, 축사 등 생산시설 현대화 및 기계화도 추진
- 농특세를 재원으로 농어민연금제 도입('95), 농어촌의료시설 지원, 농공단지 등 농어촌 소득원개발 사업을 추진
- 양정제도에서는 수확기 매입 물량가격을 미리 예시하는 추곡 약정수매제가 도입('97)되었고 민간유통기능 활성화를 위해 쌀값의 계절진폭을 15%까지 허용

## (2) 국민의 정부

### ■ '97년말에 발생한 외환위기는 농산물 생산비 급증과 소비위축 및 가격하락을 유발하여 농가 경영불안이 고조되었습니다.

- 특히, 금리의 급상승은 규모화 추진에 따른 농가들의 차입금 부담 증가로 이어져 농가부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농가 경영희생 및 부채대책 등 농가경영안정이 최우선 과제로 인식

### ■ 농업·농촌 발전계획('98), 농업·농촌기본법 제정('99)을 기반으로 농가 경영안정과 유통구조 혁신, 농업관련 조직 정비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 부채경감특별법 제정('01) 등 '98~'01년간 6차례의 부채대책을 실시하고, 영농자재 부가세 환급 등 조세감면을 확대
  - '94년 이후 동결기조를 유지해왔던 추곡수매가를 다시 인상('98~'01)
  - 논농업 직불제, 농작물 재해보험('01) 등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 시작
- 유통 H/W 건설, 친환경농업 확산 등 추진
  - 도매시장·유통센터 건설과 함께 작목반, 산지유통전문조직('00) 등 생산자 조직화 및 전문화된 산지유통주체 육성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도입,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수립('01) 등 친환경 안전농산물 공급체계 구축
- 농진공·농조·농조연을 통합한 농업기반공사 출범('00.1), 농·축인삼협중앙회 통합('00.7) 등 농정 관련기관을 대대적으로 정비

## 나 | 과거 농정의 평가

### ■ UR 타결 당시 팽배했던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관세에 의한 국경 보호와 생산성 향상으로 시장개방 영향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UR 이후('94~'02) 농축산물 수입 증가율(41%)은 이전('86~'94) 증가율(392%)보다 크게 낮은 수준

○ 농업성장율은 UR 등 개방화 요인보다는 자연재해, 가축 질병 등에 따라 크게 변화



### ■ 생산기반 정비, 시설 현대화 및 기계화의 진전 등으로 노동 생산성('94~'02)은 연평균 5.1%, 토지생산성은 1.7% 증가하였습니다.

○ 품질인증·포장규격화 및 브랜드화 촉진 등 유통구조도 개선

\* 진흥지역 논 경지정리율/수리답률 : ('94) 71.1% / 74.0% → ('02) 81.8 / 77.3

\* 품질인증 농산물 : ('94) 640건(20천호) → ('02) 1,154건(56천호)

### ■ 기반정비가 완료된 선진국과 달리 생산기반 정비와 소득안정 병행 추진에 따른 한계로 소득·경영안정 장치가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 직불제, 재해보험 등이 도입되었으나 초기 단계로 재해 등 경영 위기시 희생수단이 부족

### ■ 농업 경쟁력 강화에 치중하여 농촌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 교육·의료·주거환경 등에 있어서의 도농간 격차가 확대되었고 농촌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는 등 농촌활력도 저하

## 가 참여정부 출범시 당면 여건

■ 한·칠레 FTA, 쌀협상 등 개방 확대 움직임 속에서 농가소득은 정체되고 농업인들의 불안감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 '02년 호당 농가소득은 24,475천원으로 IMF 외환위기 이전 소득 수준('97 : 23,488천원)으로 겨우 회복한 상태로 도농간 소득격차는 '94년 99.5%에서 '02년 73.0%로 지속적인 하락 추세

■ WTO 협정에 따른 국내보조금 감축과 과잉생산 기조에 따라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의 농정으로 전환이 요구되었습니다.

- WTO보조금 감축(매년 750억원)으로 '95년 생산량의 29%를 차지 하던 추곡수매 물량이 '04년에는 14%로 감소하는 등 가격지지 정책이 더 이상 효과를 나타내기 어려운 상황
- 농업생산성 향상, 수입물량 증가, 국내 소비량 감소로 인한 과잉 생산구조 속에서 생산중심의 기존 정책들의 전환이 필요

■ 농촌에서는 고령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농촌 인구도 급속히 감소 하는 등 농촌사회의 활력이 저하되었습니다.

- 농촌의 열악한 생활여건은 농촌인구 감소를 유발하고 인구 감소는 농촌에 대한 투자효율성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

\* 인구 3천명 이하 面(전체 1,224개) : ('90) 152개 → ('00) 447

## 나 참여정부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



### □□ 정책대상 : 농업 ⇒ 식품·농업·농촌

- 농업부문에 편중된 정책의 관심을 농업·식품·농촌으로 확대하여 개방화시대 농업·농촌 문제에 전방위적으로 대응

### □□ 정책추진 : 정부주도 ⇒ 생산자·소비자·정부 상호협력

- 개방화시대 정부가 모든 농업·농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 정부·농업인·생산자단체·소비자·지자체 등 주체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유도

## □□ 투융자 : SOC 중심 ⇒ 소득 · 복지 · 지역개발

- 그간 성과를 바탕으로 직불제 등 소득안정 및 복지지원, 농촌지역개발, 전문농업경영체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기술농업 육성을 중점 지원
- 상당 수준 마무리된 생산기반정비 등에 대한 투융자는 축소하되, 노후시설 개보수·배수개선 등 재해예방 위주로 내실화

## □□ 경영안정 : 가격지지, 부채경감 ⇒ 직불제, 재해보험, 경영회생지원

- 개방확대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는 가격지지 정책 대신 다양한 직접지불제 도입 등 직접적인 소득보전정책으로 대응
  - 소비자 부담방식에서 재정(납세자) 부담방식의 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
- 농가부채 문제는 상환기간 연장, 금리 인하 등 임기응변식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방식으로 사전 예방하고 사후적인 부채문제는 경영회생지원으로 대응

## □□ 농업정책 : 생산 중심 ⇒ 소비자 안전 · 품질 중심

- 국내생산성 증대, 수입물량 증가 등에 따라 농업정책의 중심을 양의 문제에서 質의 문제로 전환
- 「농장에서 식탁까지」 농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역점

## □□ 농촌성격 : 농업생산 공간 ⇒ 농업인 · 도시민의 복합생활공간

- 농촌을 농업생산, 정주, 휴양공간 등 농업인과 도시민의 복합생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농촌개발 추진

# 다 참여정부 4년의 노력과 성과

	참여정부 이전	참여정부 이후	대표지표 성과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관주도 생산기술 중심의 농업인 교육</li> <li>▪ 직접지불제 도입 - 논농업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등</li> <li>▪ 금리인하·상환연기 등 단기부채대책</li> <li>▪ 친환경농업기반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차원의 다양한 기술경영마케팅교육</li> <li>▪ 직접지불제 본격화 - 조건불리,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li> <li>▪ 경영회생지원 등 근본적 부채대책</li> <li>▪ 친환경농업 확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농 소득 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2년 73%</li> <li>↓</li> <li>▶ 2005년 78%</li> </ul> </li> <li>◆농식품 수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2년 1,639백만불</li> <li>↓</li> <li>▶ 2006년 2,307백만불</li> </ul> </li> <li>◆친환경농산물 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2년 1.1%</li> <li>↓</li> <li>▶ 2006년 6.2%</li> </ul> </li> </ul>
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곡수매가 인상 등 가격지지 방식의 소득정책 추진</li> <li>▪ 증산을 위한 화학비료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소득지원 강화</li> <li>▪ 화학비료 지원을 중단, 유기질 비료 지원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쌀 직불금 수령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2년 467천원/ha</li> <li>↓</li> <li>▶ 2006년 1,160천원/ha</li> </ul> </li> <li>◆질소질비료 시용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2년 15.4kg/10a</li> <li>↓</li> <li>▶ 2006년 9.5kg/10a</li> </ul> </li> </ul>
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규모의 생산·유통조직 육성</li> <li>▪ 농작물 재해보험 시범사업 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유통조직의 광역화·전문화 추진</li> <li>▪ 거대재해에 대응, 국가재보험 제도 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마케팅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2년 -</li> <li>↓</li> <li>▶ 2006년 15개</li> </ul> </li> <li>◆농작물재해보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2년 2개 품목</li> <li>↓</li> <li>▶ 2006년 7개 품목</li> </ul> </li> </ul>

## 축산물 농민

- 축사시설·장비 등 H/W 중심의 개선
- 가축계열화 사업을 통한 조직화, 규모화



-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 등 품질 경쟁력 제고
- 환경과 조화된 축산을 위한 자연 순환 농업 추진

### ◆한우 1등급 출현율

- ▶ 2002년 35.2%
- ↓
- ▶ 2006년 44.5%

### ◆축산농가 소득

- ▶ 2002년 31,512천원
- ↓
- ▶ 2005년 44,061천원

## 농촌 주민

- 개별부처 차원의 농촌정책
- 개별사업 단위로 마을 환경을 개선하는 하향식 개발
- 일시적 지원을 위한 기업, 단체의 농촌 마을 방문



- 삶의질특별법 제정, 범정부 차원의 농촌 복지·교육지역개발
- 생활관영농권이 같은 소권역 단위의 상향식 개발
- 1사1촌 운동 등 도농교류 활성화

### ◆건강보험료 경감율

- ▶ 2002년 22%
- ↓
- ▶ 2006년 50%

### ◆농어촌대학특별전형

- ▶ 2002년 10,149명
- ↓
- ▶ 2006년 13,460명

### ◆1사1촌 자매결연

- ▶ 2002년 -
- ↓
- ▶ 2006년 15천건

## 소비자

- 농산물 가격안정 중시 정책
- 일부 도축장·가공장에만 HACCP 적용
- 가공·판매단계의 원산지표시제 정착



- GAP, 이력추적제 등 식품안전성 제도 신규 도입
- 농장에서 판매까지 HACCP 전단계 적용
- 음식점 단계에서의 원산지 표시제 도입

### ◆HACCP 적용 작업장

- ▶ 2002년 107개
- ↓
- ▶ 2006년 572개

### ◆이력추적 등록농가

- ▶ 2002년 -
- ↓
- ▶ 2006년 8,808호

### ◆원산지 명예감시원

- ▶ 2002년 2,600명
- ↓
- ▶ 2006년 25,353명



## 농정일반

연도	주요 법·제도 개선	효 과
2003	▪농어촌특별세법 개정	▪'14년까지 농특세 시한 연장 -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자원 확보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특별조치법 개정('03, '04, '05)	▪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2004	▪농업·농촌 종합대책 수립	▪중장기 농정방향 및 로드맵 제시 - '04~'13년, 119조원 투융자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협동조합 경제사업 활성화
	▪제1차 농업경영체 활성화 방안	▪농업소득세 한시 면제, 농업법인에 대한 비농업인 출자비율 완화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친환경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2005	▪농지법 개정	▪농지은행 제도 도입 ▪농지임대 허용범위 확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	▪지역실정에 맞는 여성농업인정책 수립
	▪야생동·식물보호법 제정	▪야생동물에 의한 농어민 피해 예방 및 보상 규정 신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하향조정
2006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특별조치법 개정	▪'01년 상호금융 저리대체 자금 상환기간 연장
	▪농신보법 시행규칙 개정	▪출연요율 인상 및 출연기관 확대로 농어업인 보증지원 자원 확충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농지매입 경영회생 지원사업 도입
	▪농업교육체계 개편	▪민간중심의 기술·경영교육으로 전환
	▪제2차 농업경영체 활성화 방안	▪Inno-biz인증체계에 농업분야 신설 ▪농업법인 법인세 감면시한 연장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	▪친환경농산물 인증 단계를 간소화하고 무항생제 축산물 신설
▪농지법 개정	▪농지에 축산시설 설치 규제 완화	
▪풍수해보험법 제정	▪농업용시설에 대한 보험제도 도입	

■ **개방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농촌 종합대책('04~'13년간 119조원 투융자를 수립·추진하였습니다.**

- 농업중심의 농정방향을 전업농 육성 등 산업정책, 경영안정 등 소득정책, 복지인프라 확충 등 농촌정책으로 세분화
- 재원마련을 위해 농특세법을 개정, '14년까지 농특세 시한 연장

■ **종합적인 농지관리 기구로서 농지은행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변화된 환경에 맞게 농지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 농지임대 허용 범위 확대,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등 규제 완화
- 농지은행을 통해 부채로 생산수단 상실위기에 처한 농가를 대상으로 농지매입 경영회생지원사업 실시
  - \* 부채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재임대, 영농지속 및 환매권 보장

■ **협동조합의 효율성·전문성이 높아지고, 경제사업 활성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앙회의 부서별 책임경영체제 구축 및 일선조합 경제사업 활성화 추진

■ **개방화 시대에 경쟁력있는 농업인 육성을 위해 '06년부터 농업인 교육이 현장 중심의 맞춤형교육으로 전면 혁신하였습니다.**

- 품목단체·기술센터·대학 등을 통해 농업인 수준에 맞는 다양한 기술·경영·마케팅 교육 추진('02 : 28억원 → '06 : 122)

■ **농촌 현장에서도 농정에 보다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농업정책 제안 및 성공사례 공모 등 '우리농업 희망찾기운동' 본격 추진
- 농림공직자의 현장체험학습 및 농가자매결연 등을 통해 현장감 있는 농정시책 수립·집행 노력 강화

시기	주요 법·제도 개선	효 과
2003	▪추곡 수매가격 동결(~'04)	▪'01년까지 인상하던 수매가 동결로 국내외 가격차 확대 최소화
	▪생산조정제 도입·운영(~'05)	▪약 100만석 수준의 생산 감축으로 공급 과잉 기조를 완화
2005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 개정	▪쌀값 하락시 목표가격과 산지 쌀값과의 차액 85%를 보전
	▪양곡관리법 개정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시장가격으로 매입·방출하는 공공비축제 도입
	▪쌀협상 국회 비준	▪'05~'14년까지 관세화 유예 추가 연장
	▪쌀 품질고급화 보완대책 수립	▪고품질 쌀 생산대책 추진
2006	▪식품위생법 개정	▪'08년부터 쌀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
	▪쌀 우수 브랜드 육성대책 수립	▪대표 쌀브랜드 100개 육성 추진

■ 쌀협상으로 개방을 준비할 시간을 10년 더 갖게 되었습니다.

- 9개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화 유예를 10년 연장하는 대신 의무 수입물량을 증량, 쌀 경쟁력 제고 기회를 확보

■ 추곡수매제를 시장지향적 공공비축제도로 개편하고 소득보전 제도가 도입되어 쌀값이 떨어져도 농가 소득이 안정되었습니다.

- 시장가격으로 매입·방출하는 공공비축제 도입(864천톤(600만석) 수준 비축)
- 쌀값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는 쌀소득보전직불제로 보완
  - 목표가격(170,083원/80kg)과 수확기 전국 평균 산지 쌀값과의 차액의 85%를 농가에게 직접지불금으로 보전

■ 우리 쌀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품질 쌀생산 및 우수 브랜드 육성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기	주요 법·제도 개선	효 과
2004	▪FTA 지원특별법 제정	▪1조2천억원의 FTA기금을 설치하고 과수 산업 발전대책 추진
2005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	▪농작물재해보험기금 설치 ▪국가재보험제도 도입
	▪공동마케팅조직 도입	▪공동출하조직 등을 기반으로 전문경영·광역화된 사업권역 구성
	▪농안법 시행령 개정	▪자조금 거출한도액 상향조정으로 자조금 사업규모 확대
2006	▪농산물 물류혁신대책 수립	▪'06년부터 배추·무 규격출하 및 포장화 시범추진
	▪원예 농산물 우수 브랜드 육성 대책 수립	▪시군단위 차별화된 지역공동브랜드 50 개소 육성 추진

■ 과수농가의 경쟁력 제고 및 경영 안정을 위해 FTA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FTA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 '04~'10년까지 7년간 1조2천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과수 생산 유통지원사업, 과원규모화사업, 폐업지원사업 등 추진

■ 산지유통 주체의 규모화·조직화로 시장교섭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매출액 100억원 이상 연합판매조직을 공동마케팅조직으로 지정 ('06년까지 15개)하여 운영자금, 마케팅 지원 등으로 산지유통능력 확대

■ 농작물재해보험에 국가재보험제도 도입으로 거대 재해가 발생 하더라도 더욱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빈발하는 거대 재해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보험운용을 위해 '05년부터 국가가 위험의 일부를 책임지는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

시기	주요 법·제도 개선	효 과
2003	▪원유 생산감축 대책 추진	▪잉여원유 감소로 인해 우유수급 안정화 도모
2004	▪축산물 브랜드 육성 종합계획 수립	▪브랜드 인증 등 품질경쟁력을 바탕으로 소비자 인지도 제고
	▪가축방역종합대책 수립	▪악성 가축질병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 마련
2005	▪가축질병위기대응 매뉴얼 마련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관계부처와의 합동 대처방안 수립
2006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정 ▪병역법 개정	▪'07년부터 공익수의사 제도 시행
	▪자연순환 농업대책 수립	▪퇴·액비를 농경지에 환원하는 자연 순환농업 추진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	▪자연순환형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
	▪농지법 개정	▪농지에 축사시설 설치 규제 완화

■ **축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우수 브랜드 경영체를 중점 육성 하고 있습니다.**

- 일정규모 이상 농가 조직화, 품질·위생관리 브랜드 규약 제정 등 일정기준을 갖춘 경영체를 선발('04~'06년간 73개)하여 집중 지원
- '05년부터 소비자단체와 함께 우수 브랜드 인증 추진

■ **악성 가축질병에 대응하여 체계적 방역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 가축방역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방역체계 기틀을 마련하였고, 인수 공통 전염병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대처방안 수립
-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인력 증원 및 공익수의사 도입 추진

■ **친환경 축산을 위해 가축분뇨 자원화 등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대책이 수립·추진되고 있습니다.**

시기	주요 법·제도 개선	효 과
2003	▪지방세법 개정	▪양도세 부과 1가구 1주택 산정시 농가 주택 제외
	▪1사1촌 자매결연 추진	▪기업·단체와 농촌마을간 자매결연으로 도농상생 도모
2004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농어업인 보건의료 및 복지지원 확대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 제정	▪범정부 차원의 농어촌 복지·교육·지역 개발 본격추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농어촌지역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 '06부터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서도 지원 확대	▪농업인의 보육 부담 완화
2005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추진	▪쾌적한 정주공간과 교육·복지·문화 등 서비스 연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농어촌특별전형의 정원외 입학비율을 3%에서 4%로 확대
	▪농어촌 보육시설 설치 지침 개정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시 농산어촌에 우선적으로 설치
2006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제도 도입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체험마을 운영 원활화
	▪농어촌복합체육시설 설치 지원	▪읍면 지역에 복합체육시설 설치
	▪농어촌 순회교사수당 및 복식 수업수당 지급규정 제정	▪농어촌 교원중 순회교사 및 복식수업 담당교사 수당 지급
	▪교장 초빙·공모제 시범운영	▪농어촌 학교에 유능한 교장 임용
	▪학교급식법 개정	▪농어촌지역 초등학생 대상의 급식비 지원을 중·고등학생까지 확대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정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농어촌 복지·교육·지역개발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5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위원회를 구성하고 5개년 기본계획('05~'09, 20.3조원 투입) 수립·추진

■ **도농교류가 확산되고 농촌이 농업인과 도시민이 더불어 정주할 수 있는 복합생활 공간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 1사1촌 자매결연 건수 및 농산물 직거래 금액 등 관광 매출액도 증가
  - \* 1사 1촌 자매결연 건수 : ('04) 2,404건 → ('06) 14,498건
  - \* 농산물직거래 등 금액 : ('04) 36억원 → ('06) 1,400억원
- 농촌을 가서 살고 싶은 매력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05.12)” 마련·추진
- 도시민의 농촌유입 촉진을 위해 전국 55개 지구를 대상으로 전원 마을 조성사업(20~50호) 추진

■ **농어촌 주민 자녀들의 보육 및 교육여건이 개선되었습니다.**

- 국공립 보육시설을 농어촌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농어업인에게 정부보육료의 70%수준으로 영유아 양육비 지원
- 교장 초빙·공모제, 순회교사·복식수업 수당 지급 등으로 농어촌 교원의 후생 및 자질 향상 도모
- 농어촌 정원의 특별전형 입학비율 확대(3%→4)로 대학진학 기회 확대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정으로 **건강보험료 경감 등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여건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 식 품

시기	주요 법·제도 개선	효 과
2003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를 모든 도 축장에 의무 적용
2004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범 사업 도입	▪수입쇠고기 둔갑판매 방지 및 위생·안전성 제고
2005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	▪GAP, 이력추적제 법적근거 마련
	▪식품위생법 개정	▪'07년부터 음식점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실시
2006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	▪허위표시위반자 벌칙강화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	▪친환경농산물 인증 단계를 간소화하고 무항생제 축산물 신설
	▪농안법 개정	▪관세청·검찰청이 몰수한 밀수 농산물을 농림부로 이관·처분 ▪도매시장 출하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실시
	▪식품위생법 개정	▪'08년부터 음식점의 쌀 원산지 표시제 실시

### ■ 선진국 수준의 농식품 안전성 확보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생산에서 유통까지의 위생관리를 위해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이력추적제도 등 선진 제도 도입·확산
- '04년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시범 도입하여 이력추적 관리

### ■ 원산지 표시제도 확대로 더욱 정확한 먹거리 정보가 제공됩니다.

- 이미 정착단계인 가공·판매단계에서의 원산지 표시 제도를 '07년부터 음식점 단계로 확대 적용 추진('07 : 쇠고기, '08 : 쌀)
-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소비자 참여를 통한 명예감시원 확대로 단속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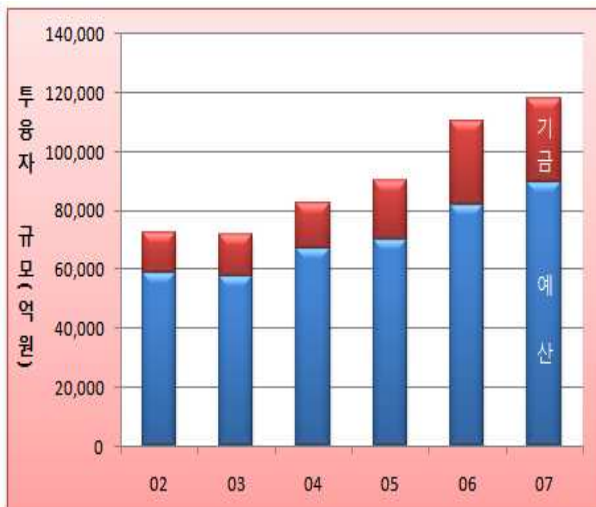
## 농업·농촌 분야 투융자 추이

**■ 참여정부 4년간('03 ~ '06) 35조4,989억원이 농업·농촌분야에 투입되었고, '07년말까지 47조2,810억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 '07년을 '02년과 비교시 전체 투융자는 62% 증가, 분야별로는 소득경영안정(246.6%), 농촌개발·복지증진(263.4%) 등이 대폭 증가

(단위 : 억원)

구 분	2002실적	2003실적	2004실적	2005실적	2006계획	2007계획
계	72,614	71,790	82,590	90,037	110,572	117,821
▫ 예 산	58,528	57,712	66,972	70,339	81,845	89,724
▫ 기 금	14,086	14,258	15,618	19,698	28,727	28,097
▪농가소득경영안정	11,949	11,594	17,375	18,669	30,313	29,466
▪농업체질강화	19,645	17,746	24,479	29,239	33,408	36,995
▪농산물 유통혁신	6,079	6,745	6,040	7,994	7,242	7,095
▪산림자원 육성	5,467	4,759	5,825	6,568	7,763	9,195
▪농업생산기반	23,621	24,779	20,380	18,429	19,557	19,656
▪농촌개발·복지증진	5,853	6,347	8,491	9,138	12,289	15,414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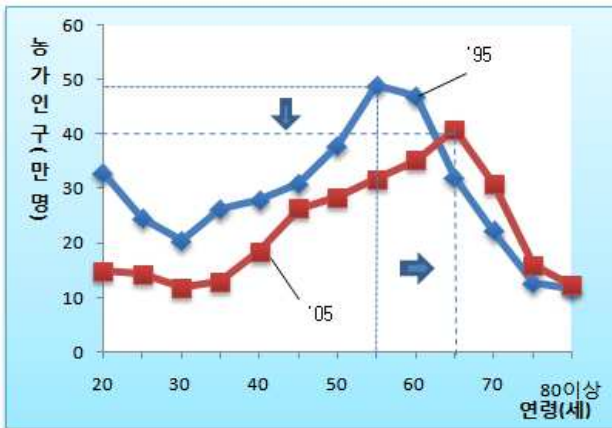
## 농정의 현자표

### 가 농업구조 및 농가소득 변화

#### ■ 농가인구 감소('95년 대비 △29.2%)와 고령화가 진행(65세이상 : 29.1%)되고 있습니다.

○ 농가인구가 농가수('95년 대비 △15.2%)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가구당 농가인구도 '95년 3.2명에서 '05년 2.7명으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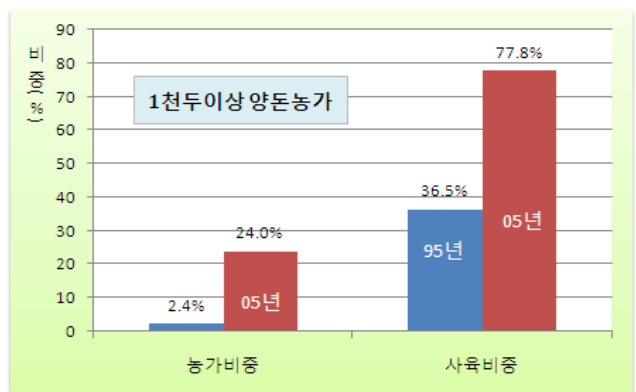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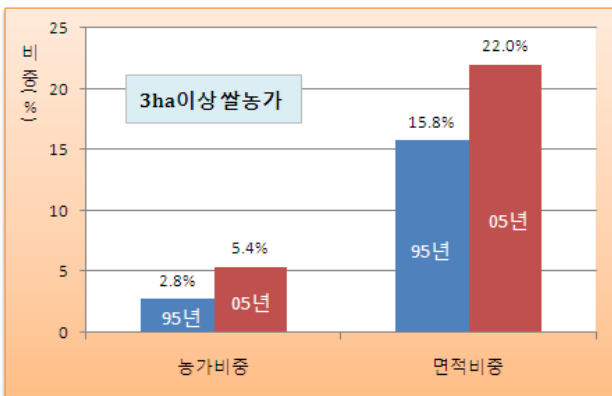
\* 농가인구/농가수 : ('95) 4,851천명/1,501천호 → ('05) 3,304천명/1,273천호



#### ■ 지속적인 규모화 정책에 따라 전업농이 증가하고 전업농이 차지하는 생산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 3ha이상 쌀농가(농가비중/면적비중) : ('95) 2.8%/15.8 → ('05) 5.4%/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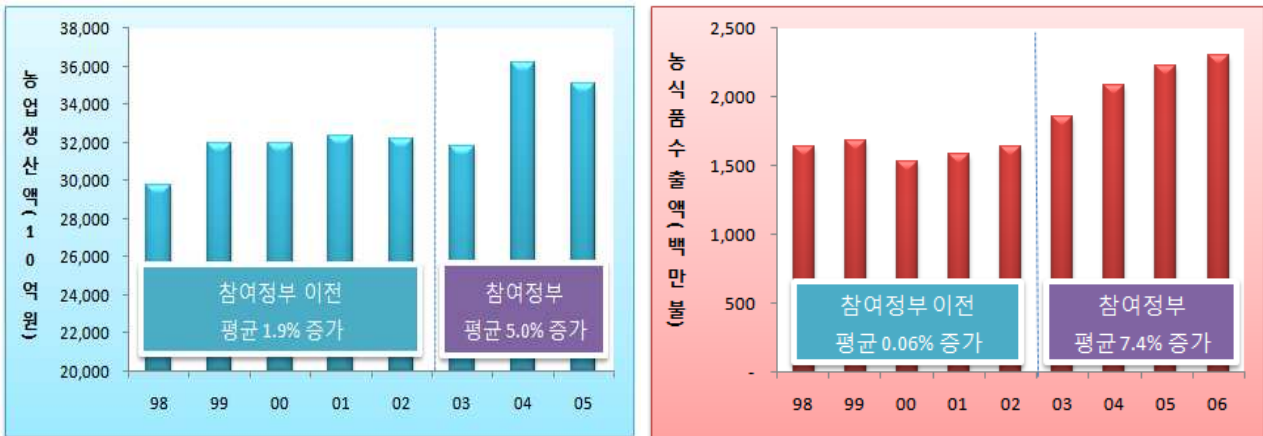
\* 1천두이상 양돈농가(농가비중/사육비중) : ('95) 2.4%/36.5% → ('05) 24.0%/77.8



■ 지속적인 생산성 증대와 농축산물 가격안정 등에 힘입어 참여 정부 3년간('03~'05) 농업생산액은 연평균 5.0% 증가하였습니다.

○ 농식품 수출액도 '03~'06년간 연평균 7.4%가 증가('06 : 2,307백만원)

\* 한국산 파프리카는 '06년말 현재 일본 시장점유율 63.9%를 차지



■ 농가소득 상위 20% 계층과 하위 20% 계층간 소득 격차는 9.3배 (도시가구 : 5.4배)로 농업내부 소득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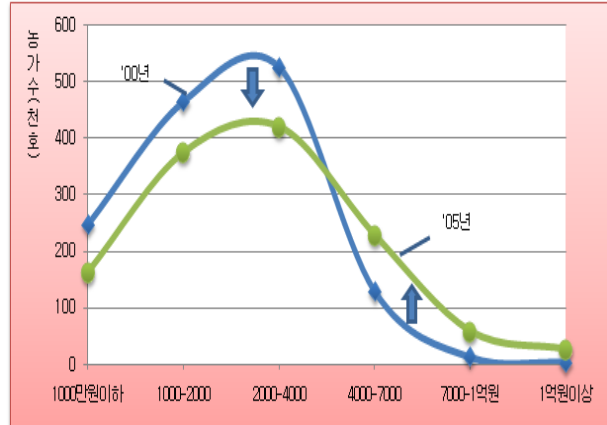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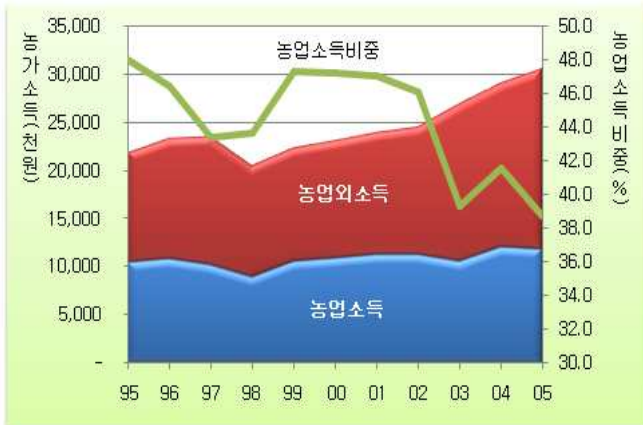
○ 농가 5분위(상위 20%) 소득은 도시가구 5분위 대비 95.2%이나 1분위 (하위 20%) 소득은 55.5%로 저소득 계층의 도농간 소득 격차 확대

○ 고령화 등에 따른 시장개방 적응력 차이가 원인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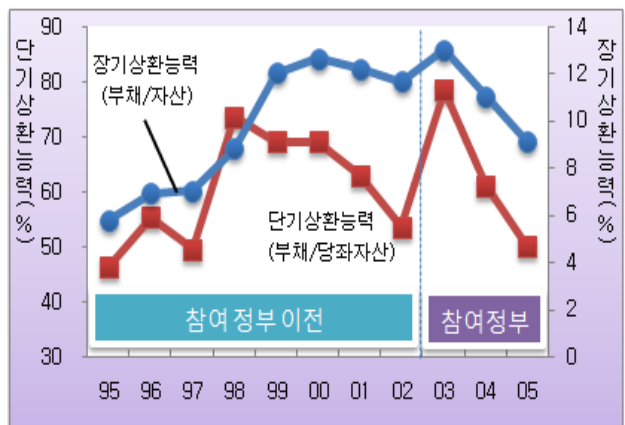
■ **농업소득은 '95년 이후 정체상태이나 직불제 확충 등 농업외 소득 증가로 농가소득은 '95~'05년간 연평균 3.4% 증가하였습니다.**

- '00~'05년간 소득 1억원 이상 농가가 6배 이상 증가하는 등 고소득 농가비중은 증가한 반면, 4천만원 미만 농가비중은 감소
  - \* 농가소득 1억원 이상 농가수 : ('00) 4,096호 → ('05) 26,531호
  - \* 농가소득 1천만원 이하 농가수 : ('00) 246,658호 → ('05) 162,226호



■ **직접지불제 등 소득·경영안정 장치 덕분에 '02년 73%였던 도농간 소득 격차가 '05년 78%로 회복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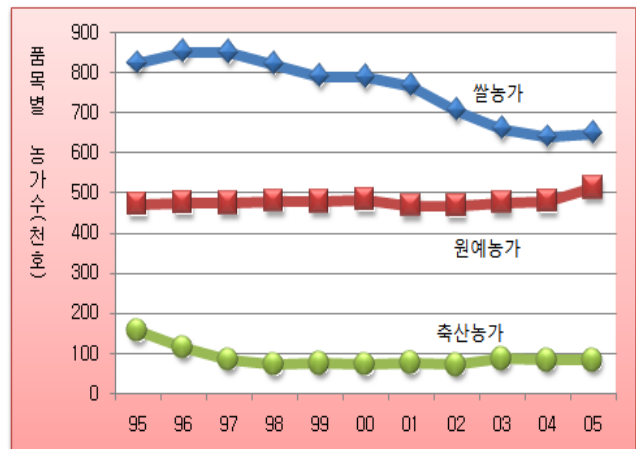
- 농업소득 정체에도 불구하고 쌀소득보전 직불제, 조건불리 직불제 도입 등 직불예산 확대로 농가소득은 '03년부터 연평균 6.5% 증가
  - \* 농가소득 : ('02) 24,475천원 → ('03) 26,878천원 → ('05) 30,503천원
  - \* 농업예산 중 직불예산 비중 : ('02) 6.5% → ('03) 9.8% → ('06) 23.6%
- '03년 이후 부채/자산비율인 장기상환능력('03 : 13.0% → '05 : 9.1) 및 부채/당좌자산 비율인 단기상환능력('03 : 78.4% → '05 : 50.1)이 호전



## 나 품목별 농업구조 변화

■ 소비패턴 변화에 따라 쌀 등 식량작물 생산액 비중은 감소('95 : 29.6% → '05 : 27.8)하고, 축산비중은 증가(22.4% → 33.5)하였습니다.

○ 품목별 농가수는 쌀의 경우 '95년 823천호에서 '05년 648천호로 줄어든 반면 채소·과실 등 원예농가는 470천호에서 511천호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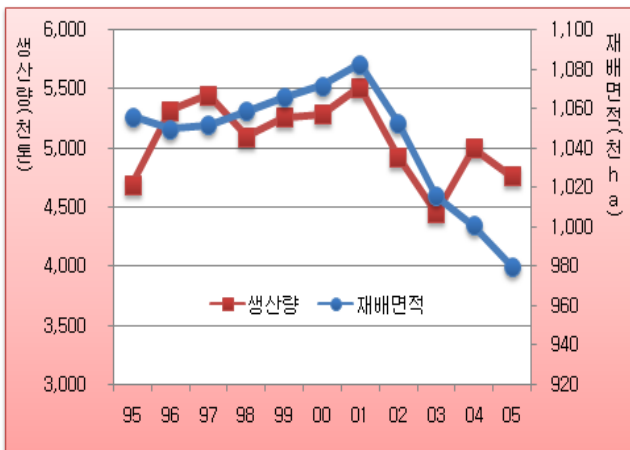
■ 축산농가(44,061천원)가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반면, 쌀농가(22,648천원), 일반 밭작물 농가(19,432천원) 소득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 축산 등 전업화가 상당수준 진행된 품목과 쌀의 경우처럼 전업화 속도가 늦은 품목간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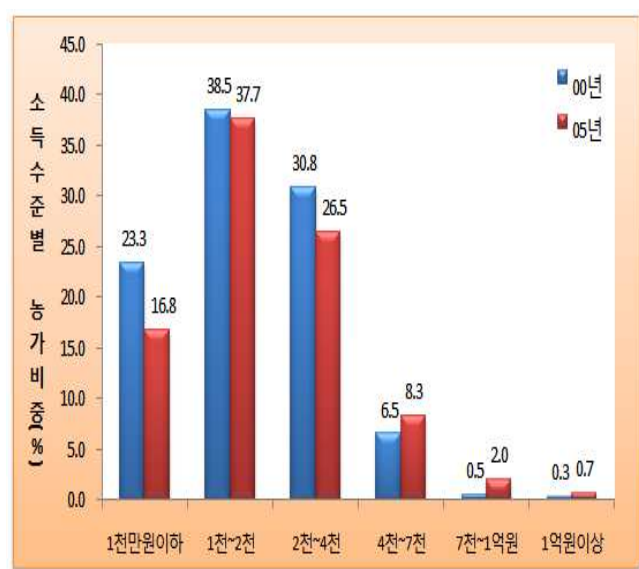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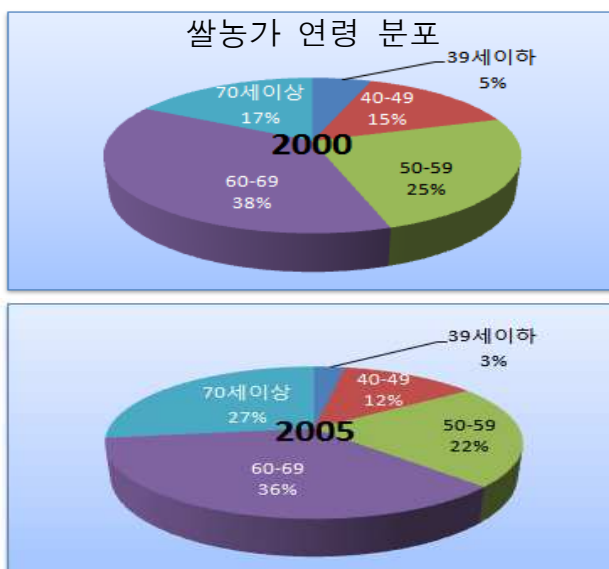
■ **쌀은 재배면적 감소에도 규모화·전업화 진전으로 안정적인 생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RPC 벼 매입량이 '95년 460만석에서 '05년 1,119만석으로 증가하면서 농가 판로확보 및 편의성이 증대되고, 수확후 관리비용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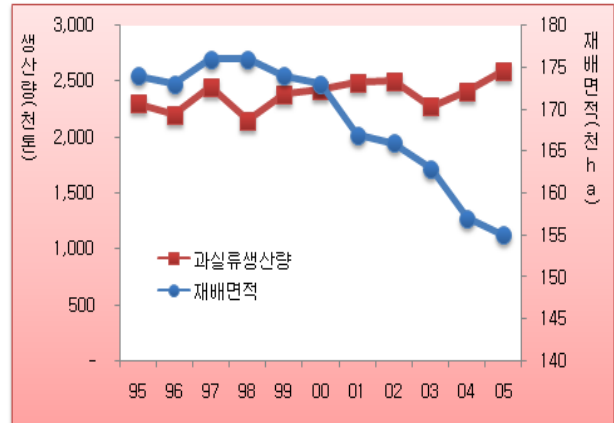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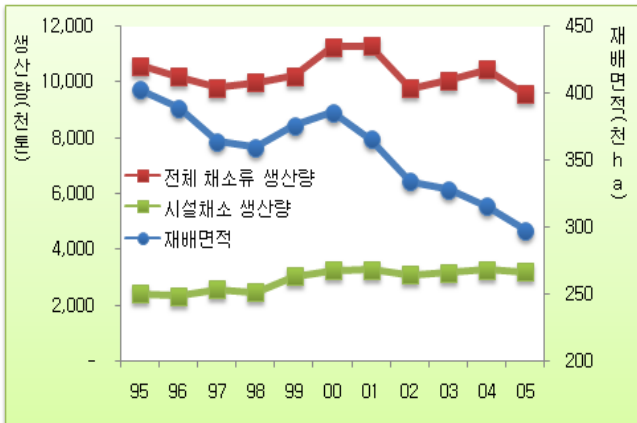
■ **60대 이상 쌀농가가 전체 쌀농가의 63%를 차지하는 등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농가소득 4,000만원 이하의 쌀농가 비중은 '00년 93%에서 '05년 81%로 감소, 4,000만원 이상 농가비중은 7%에서 11%로 다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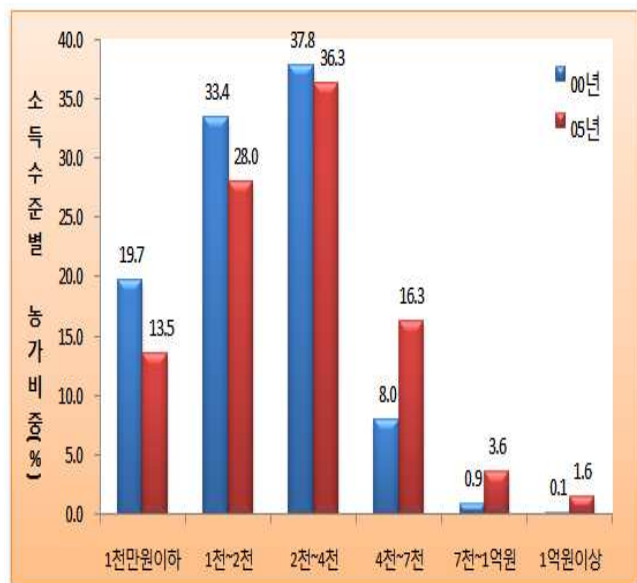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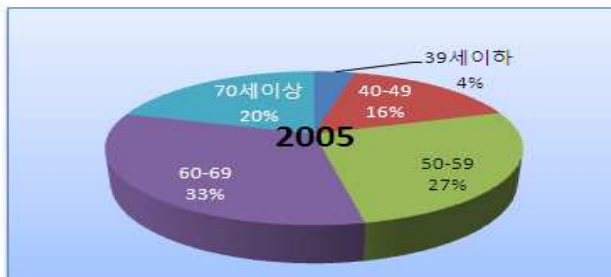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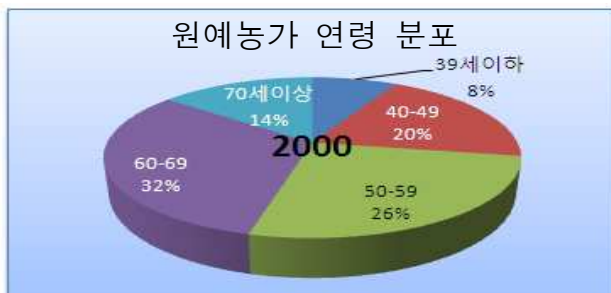
■ 원예품목의 재배면적은 감소하고 있으나 생산성이 향상되어 생산량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특히, 시설채소 생산 비중이 확대('95 : 23% → '05 : 34%)되고 화훼생산액('95 : 5,089억원 → '05 : 10,105)이 크게 늘어나는 등 국민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원예생산 구조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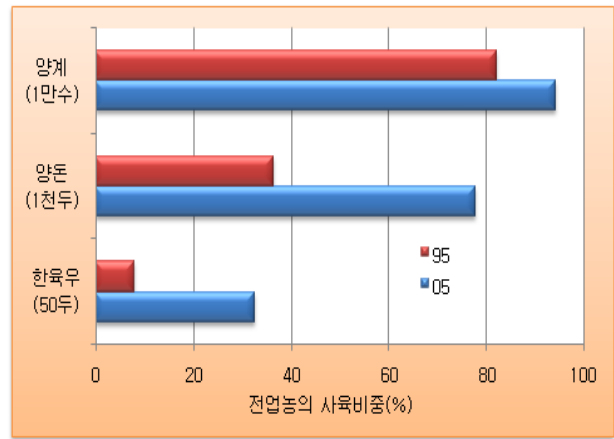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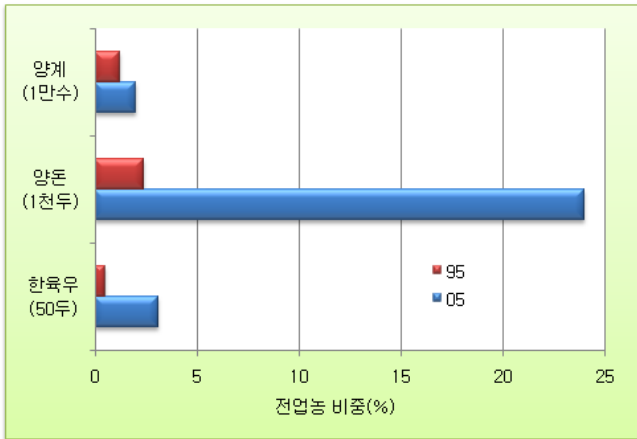
■ 원예농가의 연령별 구조는 60대 이상 농가가 전체 원예농가의 53%, 40대 이하 농가가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농가소득 4,000만원 이하의 원예농가 비중은 '00년 91%에서 '05년 78%로 감소, 4,000만원 이상 농가비중은 9%에서 22%로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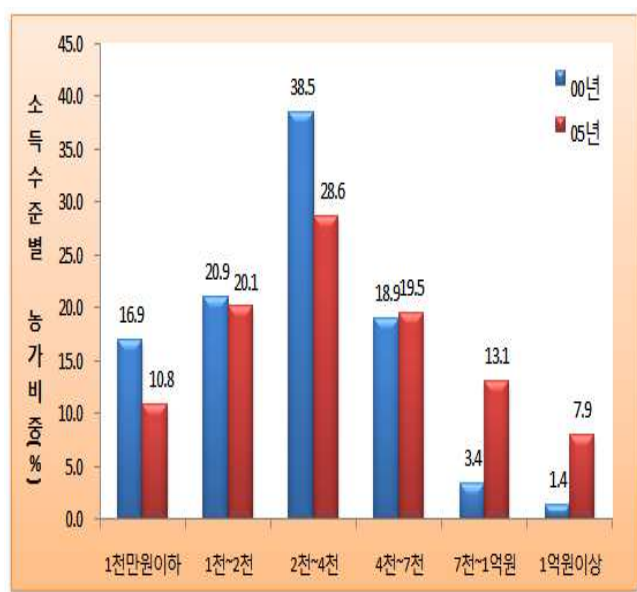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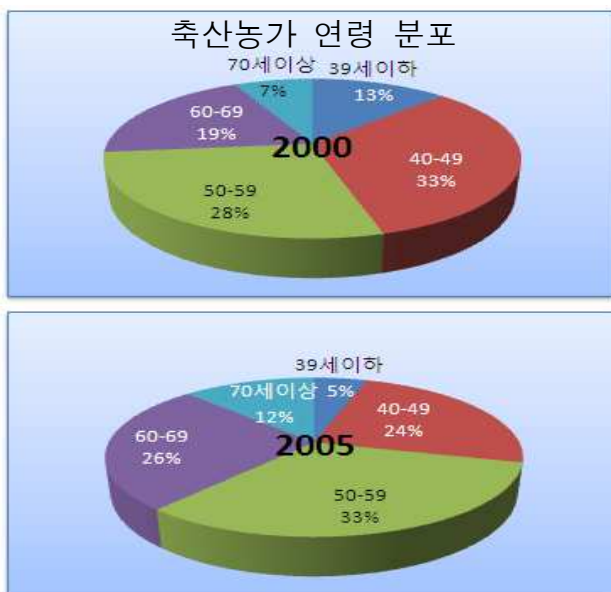
■ 축산은 전문화·규모화가 뚜렷하게 진행되면서 전업농이 차지하는 사육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 한육우는 3.1%의 전업농이 32.5% 한육우를 사육, 양돈은 24.0%의 전업농이 77.8% 사육, 양계는 2.0%의 농가가 94.3% 사육을 담당



■ 50대 미만의 축산농가가 전체의 62%로 타품목에 비해 젊은 경영주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농가소득 4,000만원 이하의 축산농가 비중은 '00년 76%에서 '05년 59%로 감소, 4,000만원 이상 농가비중은 24%에서 41%로 크게 증가





## 다 농촌 구조 변화

### ■ 농촌인구는 '95년 이후 연평균 0.9% 감소'05 : 8,764천명한 반면 총인구는 0.7% 증가, 농촌인구 비중은 21%에서 18%로 감소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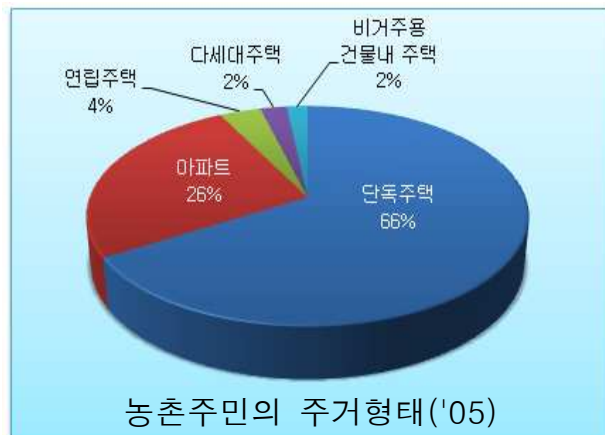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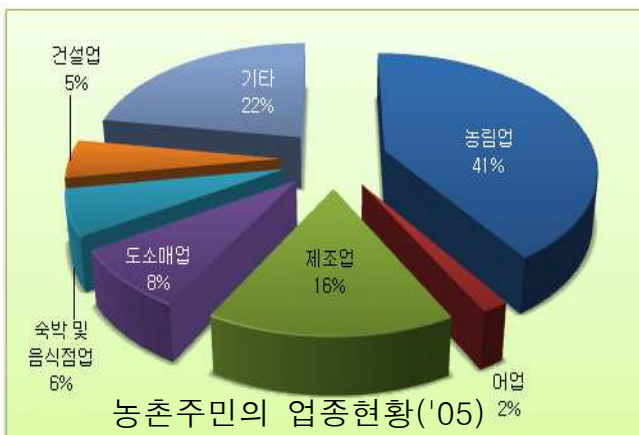
○ 노령화 지수(65세이상 인구/14세이하 인구)는 농촌이 108.2%로 도시 36.7%와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

\* 총 88개 郡중 57개 군이 65세 이상 인구 20% 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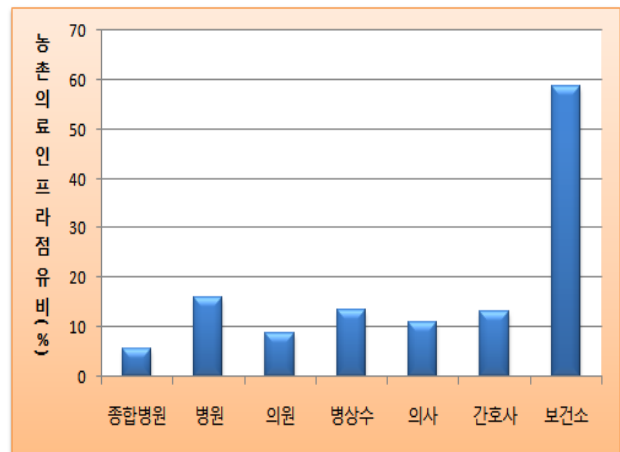
### ■ 농촌지역의 산업다각화로 '95년 농촌 거주 취업자 중 52%를 차지하던 농림업 종사자는 '05년 41%로 감소하였습니다.

○ 농촌의 주택보급율은 100%를 상회하나 25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은 도시의 5배 이상 수준(농촌 46.5%, 도시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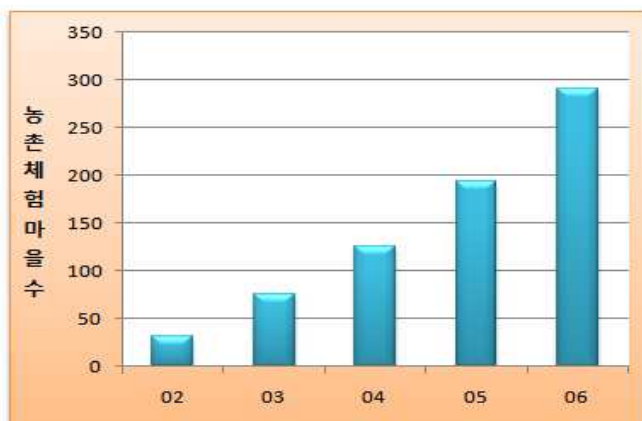
■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이 늘었으나, 농촌지역 의료기관(9.0%) 및 의료인력(12.4%) 등 의료 인프라는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 건강보험료 경감률은 '02년 22%에서 '06년 50%로 확대,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액은 '02년 표준소득월액 1등급 월보험료의 1/2(3,300원)에서 '06년 13등급 월보험료의 1/2(21,600원)으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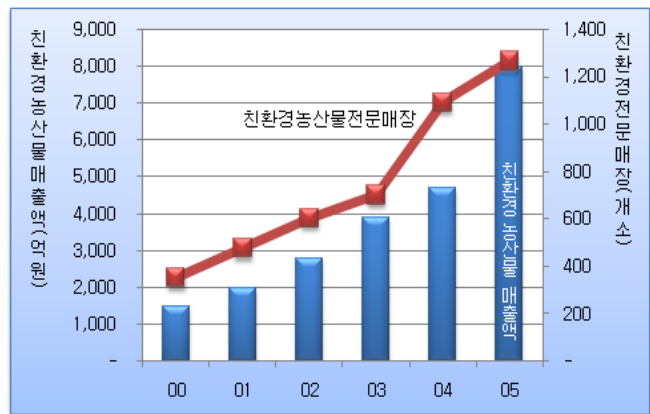
■ **농촌 상·하수도 보급이 늘어나고 대부분의 농촌지역에 초고속 인터넷망이 설치되는 등 농촌주민의 삶의질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 도시민의 농촌 휴양수요가 증대되고 1사1촌 운동 등 도농교류 확산
  - \* 상수도/하수도 보급률 : ('02) 31% / 25% → ('06) 42% / 40%
  - \*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률(이용가능 가구수) : ('02) 82%(308만호) → ('06) 99%(373만호)
  - \* 농촌체험마을(방문객수) : ('02) 31개소/170천명 → ('06) 291개소/1,882천명



■ **국민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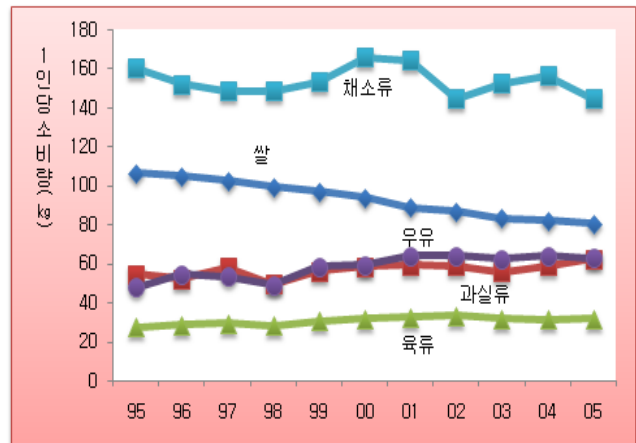
○ 소비자 선택기준도 수량 및 가격에서 품질 및 안전성으로 변화



■ **소비자의 식료품 소비 지출액은 증가('95 : 367천원/월 → '05 : 552) 하는 가운데 소비자의 소비패턴은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 외식·기호식품에 대한 지출비중은 늘어난 반면 주식(곡류)·부식(육류, 채소 등)의 비중은 감소

○ 1인당 소비량도 쌀은 계속 감소('95 : 106.5kg → '05 : 80.7)하는 반면 육류, 우유, 과일 등 소비량은 다소 증가



## Ⅱ. 수요자별 정책 성과

1. 농업인
2. 품목별 농업인
3. 농촌 주민
4. 소비자



구분	2002년	2006년	2007년
□ 전문경영체 육성			
○ 창업농자금 지원한도(금리)	8천만원(4%)	1억2천만원(3%)	1억2천만원(3%)
○ 농업인 교육과정수	55개	179개	200개
○ 농업전문 펀드운용규모	100억원	180억원	300억원
□ 소득안정			
○ 농가소득	24,475천원	30,503천원('05)	
○ 농가당 직불금	335천원	1,500천원	1,689천원
○ 농가소득 중 직불금 비중	1.4%	5.3%	5.7%(P)
○ 농가당 조세감면액	1,524천원	2,705천원	
□ 경영안정			
○ 농업인 재해공제료 지원(1인당)	11천원	23천원	27천원
○ 재해복구자금 금리	4.0%	1.5%	1.5%
○ 배수개선율 / 수리답율	63.1%/77.3%	71.1%/78.8%	73.0%/79.2%
○ 농업금융(금리 및 상환조건)			
-중장기 정책자금	3% (2년거치 3년상환)	1.5% (5년거치 15년상환)	1.5% (5년거치 15년상환)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6.5% (5년 일시상환)	3~5% (3~5년 분할상환)	3~5% (3~5년 분할상환)
□ 생산 및 수출			
○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농가	1.1%/12천호	6.2%/80천호	7.0%/90천호
○ 벼 보급종 갱신율	20.8%	35.5%	42.0%
○ 농식품 수출액	1,639백만불	2,307백만불	2,450백만불

## 가. 체계적인 창업준비를 위한 교육·자금 지원이 늘어났습니다.

### ◇ 농업계 학생, 도시민 등을 위한 차별화된 영농준비교육 강화

- '06년 창업농자금 금리인하(4%→3), 영농확대를 위한 추가자금 지원
  - \* 창업지원 자금 : ('02) 1,000억원(금리4%) → ('04) 855(4%) → ('06) 2,093(3%)  
→ ('07) 2,048(3%) → ('13) 2,894(1%)

## ■ 창업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 연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 '02년에는 창업농으로 선정되어야 4주간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 창업농 : 시·군이 35세이하 영농희망자 중 영농의지·교육경력을 평가 선발한 자로서 정부로부터 경영·기술교육 및 창업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
- '06년부터 농고 및 농과대 재학생도 창업연수와 영농정착교육 등 (농고생 10개교 5,365명, 농대생 16개교 362명)을 통하여 다양한 농업경영 성공사례와 현장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도시 출신 영농희망자도 3~6개월간 경영기술교육(직업훈련과정, 52명)을 받거나 선도농가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농업경영 현장을 체험(농업인턴제, 100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현장체험창업교육지원 : ('02)1,075명 → ('04)1,125 → ('06)6,825 → ('07)7,155 → ('13)9,565

○ '07.3월부터 한국농업전문학교가 한국농업대학으로 개편되어 식품·가공 등 심화교육을 이수한 학생은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후계농업인으로 우선 선정되어 정착자금을 지원

\*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수 : ('02) 640명 → ('04) 1,043 → ('06) 1,4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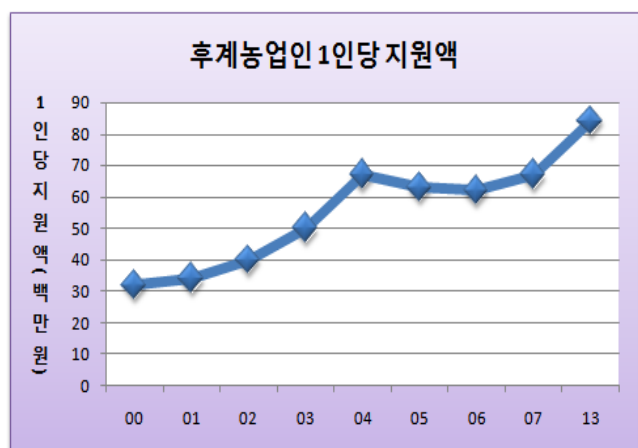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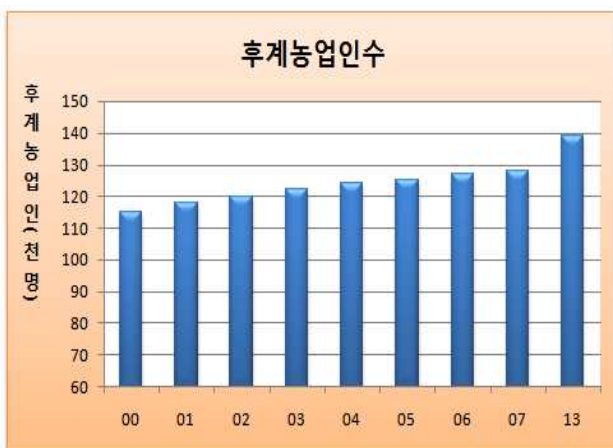
## ■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금리 3%의 조건으로 창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02년에 창업자금을 연 4% 금리로 8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06년부터 연 3% 금리로 1억2천만원까지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 '06년부터 창업후 5년이 지난 농업인 중 영농실적이 우수한 사람은 영농 확대를 위한 자금(1인당 8천만원, 금리 3%)을 추가 지원

※ 한국농업전문학교를 졸업한 △△△씨(경기 화성, 31세)는 '04년 창업농으로 선정되어 1억원을 지원받아, 0.5ha규모 비닐온실에 다솜추(꽃양배추 일종의 특수채소)를 재배하여 연간 8천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음

○ '07년부터 창업농 자금지원 기간이 선발 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어 3년이내 원하는 시기에 나누어 지원받게 됩니다.





## 나. 필요한 교육·컨설팅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 ◇ '06년부터 농업교육을 전면 개편, 민간전문가의 현장중심 교육·실습·토론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 체계 구축

- 교육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농업경영 컨설팅 우수업체 인증, 서비스 영역 다각화 등 컨설팅 품질을 향상

\* 교육예산 : ('02) 28억원 → ('04) 28 → ('06) 122 → ('07) 130 → ('13) 200

### ■ 민간 중심의 품목·경영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 '02년에는 공공기관 중심의 생산기술 교육을 받았으나 '06년부터 농업인단체·기술센터·대학 등을 통해 다양한 기술·경영·마케팅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 교육과정도 '02년 55개 과정에서 '06년 179개 과정, '07년에는 200개 과정으로 늘어나 더욱 다양한 선택이 가능

\* 교육과정수 : ('02) 55개 → ('04) 62 → ('06) 179 → ('07) 200 → ('13) 300

- 1인당 교육지원비도 '02년 4만원에서 '06년 16만원까지 확대되어 고품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1인당 교육지원비 : ('02) 4만원 → ('04) 6.7 → ('06) 16.2 → ('07) 16.3 → ('13) 20

\* 교육 실적 : ('02) 695백명 → ('04) 413 → ('06) 750 → ('07) 800 → ('13) 1,000

- '07년부터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AgriEdu.net)에서 농업인 스스로 교육정보를 찾아 필요한 교육을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 전체 농업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교육과정 등을 일괄 제공하고, 농업인이 온라인으로 교육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

※ '01년 귀농한 ○○○씨는 수국차를 생산하며 연 2천만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으나, '04년 농업연수원의 친환경농업 교육을 받은 이후 5천만원까지 소득 증대

## ■ 전문 컨설팅 업체로부터 다양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02년에는 컨설팅 비용의 50%를 부담하면서도 영세 컨설팅 업체가 많아 서비스도 취약했습니다.
- '05년부터 농업인이 부담하는 컨설팅 비용이 30%로 줄고 '06년에는 농림부가 인증한 경영·마케팅 전문 컨설팅 업체로부터 품질 좋은 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수혜농가 및 예산 : ('02) 759농가(17억원) → ('04)873(19) → ('06)1,009(44)

※ 파프리카 재배 청록영농조합법인은 정부지원 하에 민간 컨설팅 회사인 S社로부터 기술, 경영기법 등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1년만에 생산성·품질 향상 및 매출액 50%(4억원 → 6억원) 신장 효과 달성

- '07년에는 컨설팅 업체와 컨설팅 제공 분야(세제, 특허출원 등)가 늘어나 농업인이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컨설팅 이전에 농업인 스스로 자가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컨설팅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컨설팅분야 : ('02) 농업생산, 회계·재무 → ('06추가) 마케팅, 브랜드, 농촌관광  
→ ('07추가) 세제, 특허출원



## 다. 농업법인 창업이 쉬워졌습니다.

◇ '05년부터 농업법인 창업 2년내 취득한 농업용 재산의 취득등록세 감면, 농업회사 농업소득세 부담을 완화

\* 농업전문펀드 조성규모 : ('02) 100억원 → ('06) 180 → ('07) 300 → ('13) 1,000

### ■ 농업특화 창업 보육센터 설치 확대, 세금 부담 완화 등으로 농업인들의 농기업 창업·운영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 '02년에는 수도권에서만 농업창업보육센터를 활용할 수 있었으나, '06년 영·호남권, '07년에는 강원, 충청권에서도 창업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농업창업보육센터: ('02)수도권3 → ('05)영남1 → ('06)호남1 → ('07)강원, 충청 각1

\* 졸업업체중 벤처기업 인증업체 : ('02) - → ('04) 13 → ('06) 18 → ('07) 22 → ('13) 35

※ (주)강화명품은 한국농업전문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 후 전담 컨설턴트로부터 마케팅기법 개발, 품질 고급화 전략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받아 창업 3년만에 중견 벤처기업으로 발전(매출액 4억원 → 11억원)

○ '05년부터 농업인·농업법인은 5년간 농업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취득세·등록세 감면, 친환경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09년까지 영농조합법인의 배당소득 소득세가 감면됩니다.

※ 매출액 11억원규모의 벼 재배 당진영농조합법인은 연간 28백만원의 소득세 감면, 350백만원 상당 농지 취득시 10백만원의 취득·등록세 감면

○ '07년부터는 우수경영체가 전문인력 채용 시 고용장려금을 지원받게 되어 조합공동사업법인, 산지유통센터(APC) 등의 상품기획, 마케팅, 경영분야 전문인력 확보가 보다 쉬워졌습니다.

\* 경영실적 및 경영능력이 우수한 경영체에 전문인력 1인당 월120만원씩 12개월간 보조지원('07년 : 288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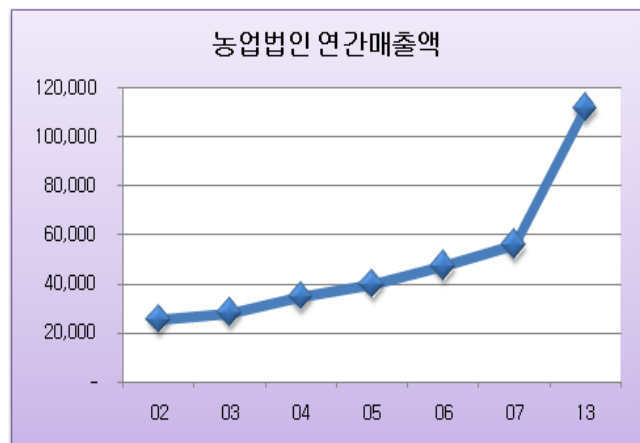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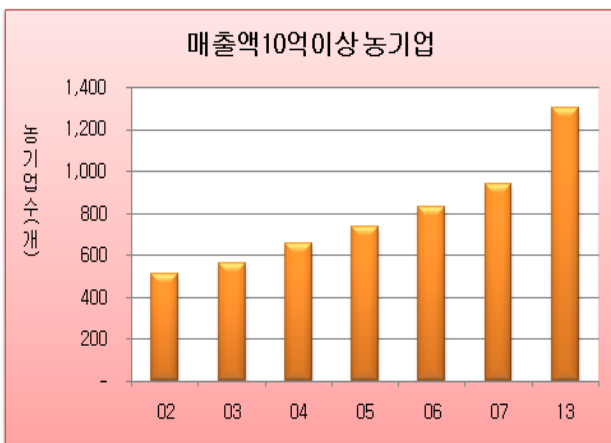
## ■ 농업전문 펀드 조성 확대로 농기업 투자유치가 보다 쉬워졌습니다.

○ '02년 100억원에 불과했던 농업투자펀드 규모가 '06년에는 180억원으로, '07년에는 300억원으로 늘어납니다.

- '06년부터는 농식품가공업체, 농자재 업체 등이 농업전문투자펀드로부터 투자유치가 더욱 쉬워졌습니다.

\* 펀드조성액: ('02) 100억원 → ('04) 180 → ('06) 180 → ('07) 300 → ('13) 1,000

※ RNL 생명과학(주)이 농업전문 펀드로부터 5억원의 투자 및 컨설팅을 지원받아 기능성 쌀과 가축 소독약을 개발하여 매출 70억원 규모의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성장



## 가. 직불제 확충으로 농가소득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 농가소득보전제도를 대폭 강화하여 농업예산 중 직불예산 비중이 '02년 6.5%에서 '06년 24%로 확대

\* 직불 예산 : ('02)4,289억원→('04)8,675→('06)19,441→('07)20,825→('13)38,727

### ■ 농업인이 더 많은 직접지불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 농가당 평균 직불금이 '02년 335천원에서 '06년 1,500천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농가소득 중 직불금 비중도 '02년 1.4%에서 '06년 5.3%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13년까지 직접지불금 예산이 단계적으로 늘어나 농가소득의 10% 정도를 직접지불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 ■ 다양한 직불제 도입으로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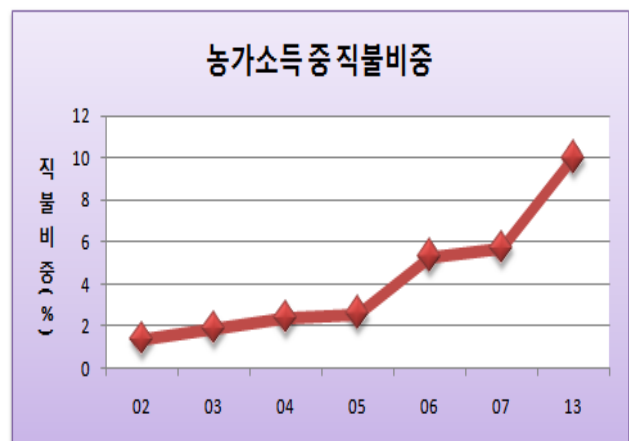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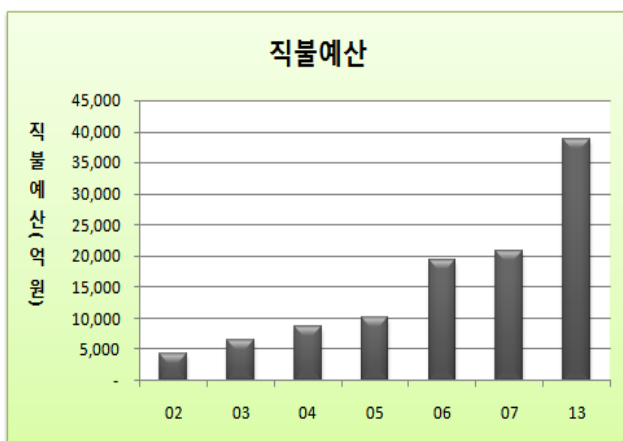
- '02년까지는 경영이양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논농업직불제 등 주로 쌀 농업인만 직불제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 '04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05년 경관보전직불제가 도입되어, 생산여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밭농사를 짓거나 유채·코스모스 등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05년에는 쌀소득보전 직불제가 시행되어, 쌀농가의 소득이 더욱 안정되고 있습니다.

## ■ 기존에 시행되던 제도가 현실에 맞게 개선되었습니다.

- 일시불로 수령하던 경영이양직불금을 '04년부터 분할 수령할 수 있게 되고 직불금도 증가하여, 고령 은퇴농의 생활이 더 안정되었습니다.
  - \* 농지매도시 경영이양직불금(ha당) : ('02) 2,810천원(일시불, 임대·매도 동일) → ('04) 연2,896천원, 최대23,168천원(대상자 연령별로 2~8년 동안 수령)
- '03년부터 친환경농업직불금이 인증단계별로 차등 지급되어 유기나 무농약 농법을 사용하는 농업인은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 \* 친환경 직불금(밭, ha당) : ('02) 524천원 → ('06) 무농약 674천원, 유기 794천원

## ■ 농업의 환경보전 및 농촌사회 유지 등 공익 목적의 직불제가 확대되어 더 많은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대상 도서가 도서개발촉진법상 도서에서 '07년부터 경사도와 관계없이 제주도를 포함한 전체 도서로 확대됩니다.
  - \* 대상지역/예산규모 : ('06) 119천ha / 331억원 → ('07) 188 / 523
- 경관보전 직불제가 '07년부터 연, 자운영까지 확대됩니다
  - \* 대상품목 : ('06) 유채,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목화, 아생화 → ('07) 연, 자운영 추가
- 친환경농업 직불제 시행면적 확대에 따라 자연 순환농법으로 농사 짓는 농가도 지원받는 방안이 강구됩니다.
  - \* 시행면적/예산 : ('06) 27천ha / 141억원 → ('07) 43 / 175



## 나. 농업부문 세금감면 확대로 영농비가 절감되었습니다

◇ 농지 등 취득, 보유, 경작 및 이전,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농업법인의 경영 등과 관련한 각종 세금을 감면

### ■ 농업부문 세금감면액이 '02년 23,060억원에서 '06년 37,454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 농가당으로 보면 1,524천원에서 2,705천원으로 늘어나 그만큼 영농비 부담이 줄었습니다.
- '04년부터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키토산, 목초액 등 친환경 농업용 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 농업부문 세금감면액(추정) >

(단위 : 억원)

연 도	2002	2003	2004	2005	2006
□총 감면액	23,060	25,397	28,680	33,373	37,454
■농업용 면세유	8,733	11,102	11,451	12,437	13,119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6,139	6,407	6,807	7,609	8,263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사후환급	435	531	643	662	719
■8년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	1,747	1,395	2,148	4,448	4,831

가. 농업보험 제도 기반 강화로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 자연재해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공제를 내실화하고, '06년부터 농업용 시설에 대한 풍수해보험 실시

○ '05년부터 거대 재해에 대응한 안정적인 농작물 재해보험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국가 재보험 제도 도입

■ 농작물재해보험에 국가 재보험 제도가 도입되어 거대재해가 발생해도 더욱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국가가 위험 일부를 책임짐으로써 민영보험사의 재참여를 유도하고, 적극적인 보험 상품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습니다.

■ 가축공제 민간 보험사 참여로 더 나은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 농협이 독점하던 가축공제에 '07년부터 민간 보험사(LIG, 현대, 동부, 삼성 컨소시움)가 참여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 풍수해에 의한 재산피해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06년 풍수해보험이 실시되어 시설(주택, 축사, 온실)에 발생하는 풍수해 피해를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국고지원으로 농업인은 보험료의 35~51%만 부담

■ 농작물·가축 등에 대한 보험제도가 농업재해보험으로 개편되어 종합적 재해위험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 나. 농협 안전공제에 가입한 농업인이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 농작업 중 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농협의 농업인 안전공제와 농기계 종합공제 가입 시 공제료의 50%를 지원

○ 사망시 보상수준을 '02년 300만원에서 '06년 2,500만원으로 상향

◇ '06년 처음으로 농작업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농작업 안전관리 모델 마을 조성사업을 '06년에 도입

■ 농업인이 농작업 재해로 사망할 경우 '02년 300만원을 받았으나, '06년에는 2,5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망시 보상수준 : ('02) 300만원 → ('04) 1,000 → ('05) 1,500 → ('06) 2,500

○ '07년에는 3,500만원(일반재해 사망시 500만원), '13년에는 산재보험 수준인 9,0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작목별 농작업 안전모델 확산으로 농업인이 안전하게 영농에 종사할 수 있게 됩니다.

○ '06년 9개소의 농작업안전모델 마을이 형성되었으며, '07년에는 8개소가 신규로 늘어나고, '14년까지 총 990개소로 늘어나게 됩니다.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신성리의 경우 농작업 안전모델 마을로 선정된 이후 농약노출에 대응하여 농약무인방제시스템 구축, 농약빈병 수거함·샤워실, 세탁실을 설치하고, 부적절한 작업 자세에 따른 농부증 예방을 위해 포장작업대 설치·건강관리기구 구비·운동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

## 다. 더욱 신속하게 재해복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복구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원스톱 지원 시스템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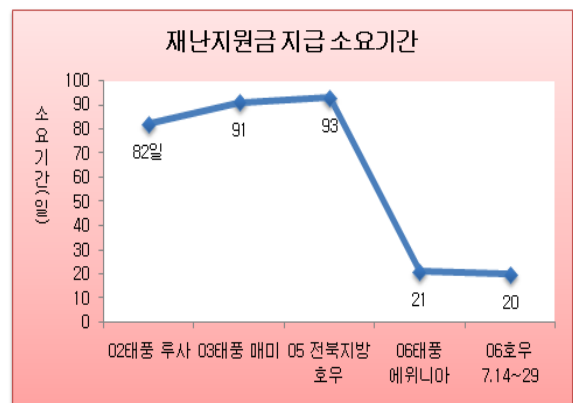
- '06년부터 7개 부처에서 분산지원하던 복구비를 소방방재청에서 일괄하여 신속하게 처리

### ■ 영농규모에 관계없이 재해복구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 '02년에는 소규모 농가만 재해복구비를 지원받았으나, '06년부터 영농규모에 관계없이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 \* 농업시설 복구비 : 축사1,800㎡, 계사2,700㎡, 농경지3ha미만 → 규모제한 폐지
  - \* 생계지원, 영농자금이자감면 등 간접지원 : 5ha미만 농가 → 규모제한 폐지
- 과거에 제외되었던 하천부지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하는 농업인의 농업시설 및 농작물에 피해 발생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지원대상 재해범위 : 폭설·가뭄·지진·서리·우박

### ■ 재해복구비를 신속하게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 '02년에는 생계지원, 농작물, 가축, 축사 등의 복구비를 종류별로 지원받았으나, '06년부터 농가별 총 피해사항을 합산·등급화하여 일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 '02년에는 재해복구 확인후 재난 지원금을 지원받았으나, '03년부터 지자체가 확보하고 있는 예비비로 복구이전에 미리 받게 되었습니다.
- 복구지원 융자금 금리도 '02년 4%에서 '06년 1.5%로 낮아졌습니다.



라. 웬만한 수해나 가뭄에도 안심하고 농사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태풍, 홍수 등에 대비하여 수리시설을 개보수하고 가뭄 대비 농촌용수개발 사업 및 받기반정비사업 추진

- '02년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의 35%가 재해대비 사업에 투입되었으나 '06년 50%, '07년에는 60%로 확대

■ 배수개선으로 농경지 침수 걱정이 많이 줄었습니다.

- '02년까지 배수개선대상 188천ha중 119천ha(63.1%), '06년까지 137천ha(71%)가 완료되어, 농경지 침수면적이 '02년 250천ha에서 '06년에는 18천ha로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 농경지 침수면적 : ('02) 250천ha → ('04) 39 → ('06) 18

- 상습침수 저지대 농경지 31천ha에 시행중인 배수개선사업이 '07년에 3.5천ha가 완료되며, '13년까지 163천ha(86.4%)의 농경지 침수 문제가 줄어들 것입니다.

■ 노후된 수리시설이 현대화되어 논물 걱정이 줄었습니다.

- 노후된 수리시설 8,769지구 가운데 '02년까지 5,257지구(59.9%), '06년까지 5,622지구(64.1%)를 개보수하여, 최근 4년간('03~'06) 365지구의 노후 수리시설이 현대적 시설로 보강되었습니다.

- '07년에는 개보수사업 5,728개 지구(65.3%)까지 완료

\* 수리시설 피해건수 : ('02) 7,151건→('04) 1,967 → ('06) 2,138

\* 수리시설 피해금액 : ('02) 4,901억원→('04) 866 → ('06) 1,373

○ '04년부터 홍수 발생시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큰 저수지에 물넘이 시설 확장, 제방 높이기 및 사전 수위조절을 위한 비상수문 등 비상시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 '06년까지 30개소중 6개소 완료, '07년은 31개소중 3개소 완료

**■ 저수지, 양수장 등 수리시설 확충으로 웬만한 가뭄은 이겨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수리시설을 갖춘 수리답율은 '02년 전체 논(1,105천ha)의 77.3%에서 '06년말 78.8%로 높아졌습니다.

- '07년까지 전체 논 면적의 79.2%인 875천ha에 수리시설이 완비

○ '06년부터는 기존의 수리시설을 통합·보강하는 ‘용수이용체계 재편사업’이 새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 '07년 추진계획 : 타당성조사 2지구, 기본조사 1지구, 세부설계 2지구

**■ 밭에도 농업용수개발과 농로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어 밭작물 재배농가도 영농이 편리해졌습니다.**

○ 마늘 등 채소류의 집단화된 주산지 밭 11만ha를 대상으로 '02년까지 53천ha(47.8%), '06년까지 73천ha(66.2%)의 밭이 정비되었습니다.

- '07년 4.6천ha가 추가 정비되는 등 '13년까지 99천ha(90%)를 정비



가. 금융서비스가 향상되고, 금융부담도 완화되고 있습니다.

◇ **농업인의 부채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04년(8.2조원) 및 '06년(5.6조원) 농업용자금 상환연기 및 금리인하 시행**

-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02년 4%~5.5%이던 정책자금 금리를 '06년 3%~4%로 점진적으로 인하

■ **부채로 인한 농가의 금융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있습니다.**

- 중장기 정책자금 상환조건이 '02년 금리 3%, 2년 거치 5년 상환에서 '04년 금리 1.5%,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개선되었습니다.
  - \* 상호금융 대체자금 및 농업경영개선자금 금리 인하(6.5% → 3%)
- '06년에는 '01년 지원된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8.2조원 중 미상환된 5.6조원에 대해서 3~5년간 추가로 상환이 연기되었습니다.
  - '07년 중 상환기한이 도래되는 상호금융저리자금(3,389억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상환 연기
    - \* 원금 10% 상환시 5년 분할상환(금리 3%), 미상환시 3년 분할상환(5%)

■ **농업정책자금을 싼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정책자금 금리는 '02년 4%~5.5%였으나, '06년에 농업인 3%, 비농업인 4%로 낮추어 연간 158억원의 이자부담이 줄었습니다.

○ 재해대책융자금(4%→1.5), 농지매입자금(3%→2), 일부 육림자금(3%→1.5)은 금리가 더 인하되어 연간 240억원의 금리 부담이 추가로 완화되었습니다.

\* 정책자금 금리인하 : ('02)4% ~ 5.5% → ('05)3% ~ 5.5% → ('06) 3% ~ 4%

\* 금리인하에 따른 부담 완화 : ('02) 99억원 → ('05) 264억원 → ('06) 398억원

○ '07년 이후에는 농업인의 성장단계별로 농가유형에 적합한 조건(대출금리, 상환기간 등 지원조건 차등)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 연대보증이나 담보 없이 농업자금을 쉽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농업인의 경우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10억원(법인은 15억원) 까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신용조사) 3천만원까지, (약식신용조사) 2억원까지, (정식신용조사) 2억원 초과

○ 특히, 후계농업인 등 선도농업인과 부채대책자금, 재해대책자금 등은 간이신용조사방식으로 쉽게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시중은행을 통해서도 농업정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02년에는 농협, 산림조합 등을 통해서만 정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으나, '06년에는 축발기금 융자금과 RPC운영자금, 농기계 구입자금 등은 시중은행에서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08년에는 농업정책 자금의 50%이상, '13년까지 모든 농업정책 자금이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나. 부채를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재해, 가격급락 등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영회생지원제도를 '03년 도입하여 '04년부터 상시적으로 지원
- ◇ 부채농가의 실질적인 회생을 돕기 위해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매입 경영회생 지원제도를 '06년 도입

### ■ 워크아웃 방식으로 경영회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경영회생지원을 통해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높은금리(8.5%), 단기상환(1~2년) 조건의 농업용 상호금융 대출금을 낮은 금리(3%), 장기상환(3년거치 7년분할)의 자금으로 대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03년부터 준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 2,500만원 이상 농업인은 회생가능성 평가 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03년 171농가가 215억원을 지원받았고, '06년에는 572농가가 330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 \* 연도별 지원액(누계) : ('03) 215억원 → ('04) 1,854 → ('05) 2,964 → ('06) 3,294
    - \* 지원 농가수(누계) : ('03) 171농가 → ('04) 2,286 → ('05) 3,839 → ('06) 4,411
- '06년부터 특별재난지역의 피해농업인에 대해서는 준전업농 영농 규모의 1/2이상, 농업용 부채는 1,200만원 이상으로 지원조건이 50% 수준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 농지은행을 통해 영농을 계속하면서 부채를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

- 종래에는 부채로 인해 농지가 법원에서 경매처분되는 경우 자산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여 경영회생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 '06년부터 실시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부채농가는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각하여 부채를 상환하고 다시 임차하여 영농을 계속(환매권도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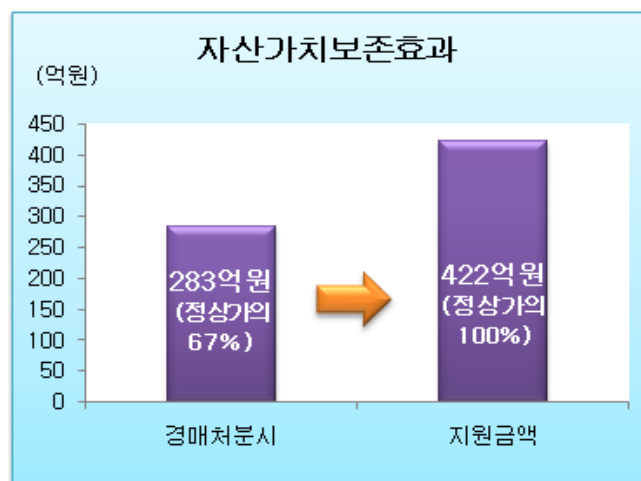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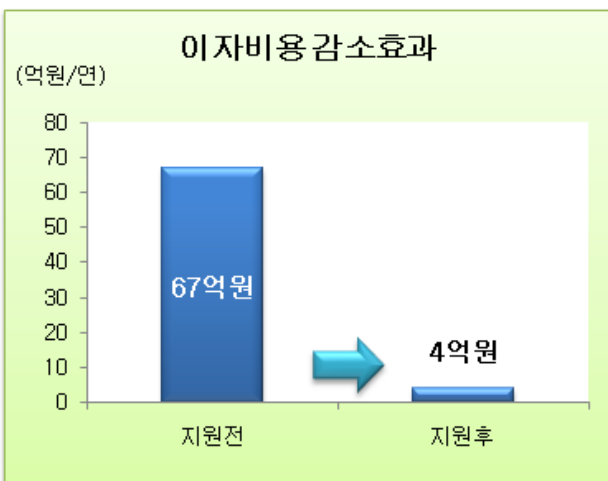
- '06년 자연재해, 연체로 파산직전에 있던 183농가가 311ha의 농지를 422억원에 농지은행에 매각하고 경영위기를 극복

※ 강원도 정선에서 고랭지배추(2.2ha)를 재배하는 조성개씨(49세)는 '03년 태풍 매미와 '04년 배추값 폭락으로 부채 2억3백만원, 연체 97백만원이 발생  
 ◦ 소유농지 밭 2.2ha를 경매처분시 정상가(2억67백만원)의 60% 수준(1억 6천만원)밖에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농지은행 사업대상자로 선정  
 ⇒ 농지값을 정상가(2억67백만원)로 받아 부채를 청산하고도 64백만원이 남았고, 연체이자 연 800만원 대신 임차료 270만원만 부담하면서 영농을 유지

○ '07년에는 지원 요건(연체액 5천만원 이상)이 연체액 기준에서 부채액 기준으로 완화되고, 사업량도 372ha(566억원)로 확대되며

- '08년부터는 사업비가 연간 1,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2006년 농지매입 경영회생지원사업 추진효과 >





## 가. 친환경농업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 개방에 대응한 우리 농산물의 품질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친환경 농업생산 기반을 확대

### ■ 점점 더 많은 농가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은 '02년 1.1%에 불과하였으나, '06년에는 6.2%로, '07년에는 7%로 증가하였고, '13년에는 더 많은 농가(13만호)가 참여하게 되어 생산비중은 10%수준으로 확대됩니다.

\* 친환경농산물 비중 : ('02) 1.1% → ('04) 2.5 → ('06) 6.2 → ('07) 7.0

\*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 ('02) 12천호 → ('04) 29 → ('06) 80 → ('07) 90

※ 친환경농업은 관행농가에 비해 노동력(28.4%)과 생산비(17.7%)는 증가하지만 평균 판매가격이 13.2%증가하고 순수입이 4.9% 증가('05년 농경연 연구)

### ■ 집단화된 친환경 농업지구 및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등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이 확대되어 친환경농업 여건이 좋아졌습니다.

○ 읍·면 중심 친환경농업지구(10ha이상)가 '02년 613개소였으나, '06년에는 820개소로 늘어나고 시·군 중심 광역친환경농업단지(1,000ha, 개소당 100억원)도 3개소가 조성되었습니다.

- '07년에는 친환경농업지구와 광역친환경농업단지가 각각 879개소(신규 59)와 9개소(신규 6)로 늘어나고, '13년에는 1,250개소와 50개소로 확대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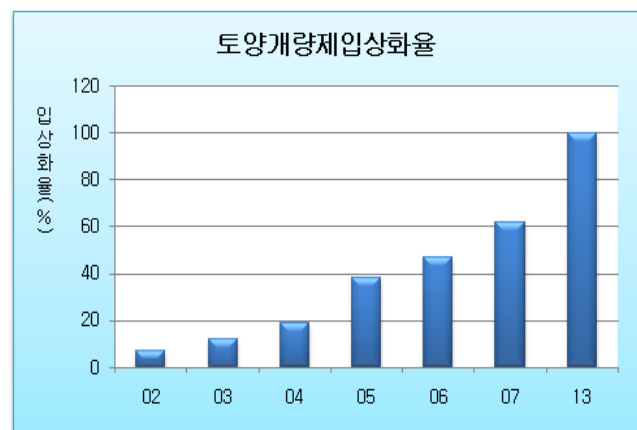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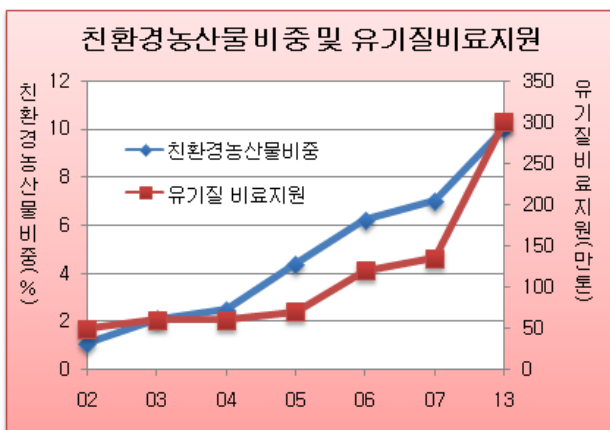
## ■ 친환경 농자재 이용이 수월해졌습니다.

- 유기질비료 지원이 '02년 50만톤(175억원)에서 '06년 120만톤(420억원)으로 늘었고, '07년 135만톤(473억원), '13년 300만톤(1,200억원)으로 확대됩니다.
- 시설원예작물에 대한 천적방제비 지원이 '05년 321ha에 12억원, '06년 1,000ha, 38억원으로 늘었으며, '07년에도 1,000ha에 38억원, '13년에는 4,200ha에 92억원으로 늘어납니다.
- '07년부터 친환경 농자재 목록 공시제도가 도입되어 농업인들의 친환경 농자재 선택이 용이해 집니다.

## ■ 입상(알갱이)화된 토양개량제로 살포가 편리해 졌습니다.

- 가루형태 토양개량제(규산석회질비료)의 입상화율이 '02년 7%에서 '06년 47%로 늘었고, '07년에는 62%, '13년까지 100% 입상개량제로 전환됩니다.

\* 토양개량제 지원 : ('02) 809천톤 → ('06) 644 → ('07) 547 → ('13) 896



## 나. 가축분뇨를 양질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경종과 축산이 상생하면서 자연생태를 보전하는 자연순환농업 구현

- 가축분뇨 자원화율을 높이고 토양환원 촉진을 위한 「자연순환농업 추진대책」 수립·시행('06.6)

### ■ 자연순환농업으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 부담이 줄어들고, 경종농가는 경영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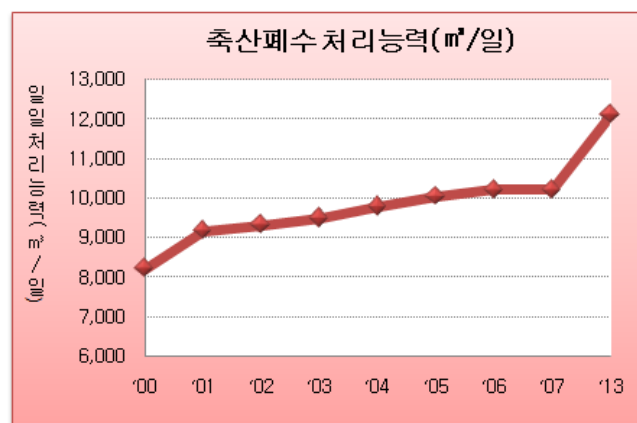
- '02년 가축분뇨 중 80%, '06년에는 82% 정도가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되었으나 '07년 83%, '13년에는 90%이상이 자원화 됩니다.

### ■ 환경친화적으로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영세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가 하천오염의 원인이었으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확충으로 농가부담은 줄어들고 하천수질도 개선되었습니다.

\* BOD 오염물질 삭감량 : ('03) 81톤/일 → ('04) 88 → ('06) 90 → ('07) 92 → ('13) 102

-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에 축사설치가 용이하게 됨에 따라 '07년부터 경종농가와 연계된 친환경축산 표준모델이 마련됩니다.



## 다. 고품질 우량종자를 더 많이 보급받게 되었습니다.

### ◇ 민간의 품종개발연구 집중지원으로 종자 R&D 투자 효율성 제고

- 우수 품종 보급·판매 지원을 통한 종자수출 증가로 종자 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

## ■ 고품질 우량종자 확보가 더욱 용이해집니다.

- 정부가 공급하는 고품질 벼 보급종 갱신율이 '02년 약 20%수준에서 '06년 35.5%로 확대되었고 '07년에는 42%로 확대됩니다.
  - \* 벼 보급종 갱신율 : ('02) 20.8% → ('04) 28.5 → ('06) 35.5 → ('07) 42.0
  - \* 벼 보급종 공급량 : ('02) 10,782톤 → ('04) 14,028 → ('06)16,799 → ('07) 19,400
- '08년에는 보급종 갱신율이 50%로 늘어나 농업인들이 2년에 한 번씩 고품질 벼 종자 갱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 육종가는 더 많은 신품종 개발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 육종가가 신품종 개발시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02년 24억원에서 '06년에는 5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 \* 품종개발 지원규모 : ('02) 24억원 → ('04) 26 → ('06) 50 → ('07P) 70 →('13P) 100
- 또한, 육종가가 신품종을 등록하거나 해외 품종보호출원을 할 경우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06년 품종당 3백만원에서 '07년 5백만원까지 늘어났습니다.

## ■ 종자산업 육성 지원으로 종자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종자산업 육성지원으로 종자수출이 '02년 17백만불에서 '06년 20백만불로 증가하였고 '13년 50백만불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 '07년부터 우수 품종을 생산, 수출하는 종자업체는 최대 30억원 까지 저리 융자지원(5년거치, 3%)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종자수출 : ('02) 17,449천불 → ('04) 16,861 → ('06) 20,010 → ('07P) 22,000 → ('13P) 50,000

## ■ 국산 우수 품종의 개발·보급 확대로 화훼류, 딸기 농가의 로열티 부담이 완화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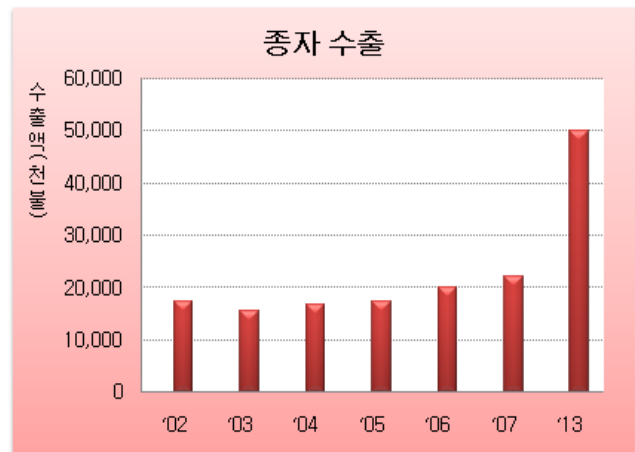
○ '06년부터 '10년까지 딸기·장미사업단에 매년 20억원을 투입하여 국산품종 재배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 딸기 : ('05) 9% → ('06) 18% → ('07P) 22% → ('13P) 55%

\* 장미 : ('05) 1% → ('06) 2% → ('07P) 4% → ('13P) 25%

○ '07년부터는 국화 사업단을 운영하여 국산품종 개발과 보급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국화 : ('06) 1% → ('07P) 2% → ('08P) 4% → ('13P) 15%



라. 브랜드 마케팅으로 더 나은 조건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 '06년 세계 유명 농산물 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는 우수 브랜드  
육성 대책 수립·추진

\* 브랜드 육성목표('13) : 쌀(100개), 채소·과수(71개), 축산(80개)

■ 브랜드를 통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 '03년 축산물을 시작으로 '07년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 우수 브랜드 경영체 육성이 추진됩니다.
  - 농가를 조직화하고 품질관리 기준을 만들어 브랜드를 구축하고 판매전략 컨설팅지원을 강화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립
- '07년에 우수 브랜드 경영체 18개소(쌀 8개소, 채소류 2개소, 과실 8개소)를 선정·지원하고, '04~'06년 선정된 73개 축산물 브랜드가 규모화·내실화 됩니다.

■ 선정된 우수 브랜드 경영체는 충분한 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 금년에는 컨설팅, 기반조성, 시설현대화 등에 172억원이 지원됩니다.
- 브랜드사업 평가와 컨설팅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조기에 개선하고, 우수 경영체는 인센티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인센티브 자금은 공동마케팅조직 및 축산경영체 평균 20억원 수준

※ 경기·충북 복숭아 연합사업단을 구성하여 '03년부터 '햇사레' 공동 브랜드를 출범하고 4개 농협 조합원(1,682농가)이 생산량(연간 9천여톤)을 단일 브랜드로 출하하고 재배 및 수확 후 관리를 통일  
⇒ '05년 농가수취가격 : (일반) 14,200원/4.5kg → (햇사레) 16,700원/4.5kg

## 마. 농가가 수출로 개방화 시대에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됩니다.

### ◇ '04년부터 수출유망상품 지원사업을 시작하는 등 적극 지원

- '07년 신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물류비 인센티브 대폭 확대

## ■ 우리의 농산물이 더 넓은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 100만불 이상 수출국가가 '02년 49개국에서 '06년 56개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수출액도 '02년 16억불에서 '06년 23억불로 증가하였고 '07년 24.5억불, '13년 40억불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 ■ 농업인의 수출 비용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 농가의 수출 물류비용 부담이 '02년 70%에서, '06년 60%로 낮아졌고, '07년부터 40%만 부담하게 됩니다.

※ 농업인이 러시아로 배를 100톤 수출할 경우, 수출물류비용 부담이 '02년 55백만원에서 '06년 47백만원, '07년 32백만원으로 감소

- 수출전용 냉장컨테이너(12FT)가 '02년 10대에서 '07년부터 50대로 늘어나 수출 소요 비용이 대폭 절감됩니다.
- '05년부터 '환변동보험' 가입비(500만원)를 지원받았고, '06년에는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 받았습니다.

## 가.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농림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05년 개발된 AgriX를 통해 사업신청에서 자금집행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화하여 농업인 편의증진, 업무간소화 등 도모

\* 적용대상사업 : ('05) 직불제중심 → ('06) 축산관련사업 → ('07) 과수원에분야

### ■ 지원받을 수 있는 농림사업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06년부터 AgriX에 접속하여 본인의 영농상황 등을 입력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06년부터 130여개 사업 시행지침(5권, 3,000페이지)을 DB화하여 정보제공

○ '13년에는 PDA, IP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도 가능하게 됩니다.

### ■ 안방에서도 사업 신청과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종래에는 농림사업 신청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했으나, '06년부터 업무담당자가 AgriX에 연계된 전자민원시스템(G4C)을 열람·확인할 수 있게 되어 서류제출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 사업신청 후 진행상황도 SMS나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07년에는 전년도에 신청한 신청서를 토대로 변동 사항만 수정하여 제출하면 되며, 인터넷을 통한 사업신청도 가능하게 됩니다.



## 나.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현장의 의견과 고객요구를 농정에 반영하고 쌍방향 의사소통을 위해 '04년 현장체험학습 도입, '06년까지 3개의 상시채널 유지

- 직원 개별의 '농정상담역', 2~5명 단위 '체험학습단', 부서(과팀) 단위의 '과의 날 행사' 운영

### ■ 농림공직자의 현장체험학습 및 현장토론 확대로 농가들의 정책제안 및 의견제기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 '04년 처음 도입한 「현장체험학습」에 이어 '05년 「과의 날 행사」를 통해 농림공직자들에게 농업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 감각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 농업인들과의 토론 또는 교류를 통해 현장농정을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며, 현장애로 상담과 제도개선의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 연도별 현장체험학습 인원 : ('04) 81명 → ('05) 386명 → ('06) 345명

### ■ 농업인이 현장 컨설턴트로 농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05년 「농정상담역」 제도를 도입하여 현장경험 부족과 현장의 요구에 둔감할 수 있는 농림공직자별로 2~3명의 선도농업인이 현장의 여건과 상황 등을 전화, 메일 등으로 알려줍니다.

- 또한 농업인들도 상담역 활동을 하면서 농림공직자로부터 농업에 필요한 정책정보와 지원방안들에 대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농정상담역 : ('05) 1,029명 → ('06) 1,253명

## ■ 현장 농업인의 경험과 아이디어가 농업정책에 직접 반영되고 있습니다.

- '05년부터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정신뢰회복, 소비촉진·수출촉진, 도·농상생 등 3개 분야로 구분한 정책공모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 '05 ~ '06년 2년 동안 334명이 정책공모에 참여하여 그중 47건이 선정(상금 2억원)되었고 여성농업인아카데미 교육과정 등 10여건의 정책은 '06년부터 예산이 반영되어 운영
- '07년부터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참여하게 되어 농업 정책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 '07년을 「농업계 대화합」의 元年으로 삼아 정부와 농업계가 합심하여 개방에 대비하는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 농업인단체와 정책간담회 정례화를 통해 현장농업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인 단체와 시책에 대한 정책심사평가단을 구성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나가겠습니다.

## 다. PCRM(정책고객관리서비스)으로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합니다.

### ◇ '04년부터 정책고객의 정책과정 참여를 통한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PCRM을 통한 쌍방향 의사소통 전개

- 정책정보 제공 대상이 '04년 5만명에서 '06년 9만명으로 증가

### ■ 9만명의 고객이 농업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 '06년 현재 9만명에 달하는 농업인·주부 등 정책고객과 전문가들이 '주간 뉴스레터', '정책 속보' 등으로 만들어진 농정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신속하게 제공받고 있습니다.

- '07년말까지 11만명 수준, '13년에는 20만명으로 확대

-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06년부터 음성을 통해서(읽어주는 보도자료) 새로운 정보를 접할 수 있고, 농정을 쉽게 이해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만화(햇살이네 집)를 통해 정책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농업인들의 소중한 의견이 농업정책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 많은 분들이 농업정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개봉률 68%)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직접 참여하고(설문 참여율 20%) 있습니다.

※ '04년 농가 부채 상환연장 신청이 저조하여 PCRM을 통해 설문조사(2회)를 한 결과, “몰랐다”는 의견이 많아 상환기간을 연장, 33%에 불과했던 신청률이 94%로 크게 증가

※ '06년 2차에 걸친 농업·농촌종합대책 설문조사 결과, 1만여 명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고 이를 반영하여 대책을 수립중

## 가. 여성농업인이 전문적인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 **농업경영주 중 여성농업인 비중이 '02년 15.3%에서 '06년 17.2%, '13년에는 20%수준으로 확대**

○ 협동조합 조합원 중 여성농업인이 '02년 21.2%에서 '06년 26.4%로 늘었으며, '13년에는 30%이상으로 확대

### ■ 다양한 전문교육으로 여성농업인 역량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 여성 농업인 교육이 '02년 6개 과정에서 '06년 16개 과정으로 확대되어 보다 다양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후계농업인 선정, 한국농업대학 입학 시 여성이 우대받고 있습니다.

○ '02년부터 후계농업인 20% 범위에서 여성농업인이 우선 선발 되고, '05년부터 농업인턴이나 대학생 창업연수생 및 창업농 선발시 여성이 가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한국농업대학에 지원하는 여학생의 우선 선발비율이 '02년 모집 정원의 20%에서, '04년 30%로 늘어났습니다.

## 나. 여성농업인들의 창업이 보다 쉬워졌습니다.

### ◇ '06년부터 지역농산물과 여성 특유의 솜씨, 전통기술을 연계·활용한 여성농업인의 소규모 창업을 지원

- 창업에 필요한 컨설팅과 시설 및 장비구입 등을 위한 자금을 개소당 45백만원씩 지원

### ■ 여성농업인들이 창업 컨설팅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07년 처음으로 30명의 창업컨설팅 전문가가 양성되어 여성농업인들이 창업시 사업의 타당성, 관련법령, 마케팅 등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11년까지 창업컨설팅 전문가 169명 양성

### ■ 여성농업인들이 창업 시 시설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06년부터 농촌 여성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개소당 45백만원의 창업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 '06년 지평선토속한과(전북 김제) 등 9개소 4억원 창업 지원
- '07년에 9개소가 창업지원금 45백만원씩을 지원받게 되며, '13년까지 156개소가 지원받게 됩니다.

※ 경기 안성의 김금희씨는 새송이버섯 단일품목으로 고용인구 95명에 연간 매출액 48억원 달성

※ 경남 합천의 강영란씨는 돼지고기와 홍삼이 만난 '심바우 포크'를 개발하였으며, 돼지 1,800두 규모의 월계축산 공동대표로 활약

## 다. 여성농업인의 지위와 권리가 향상되고 있습니다.

◇ 여성농업인 등 가족구성원의 지위향상과 농가경영 개선을 위해 「농가경영협약」을 도입, '04년 처음으로 22농가 시범 추진

○ '06년부터 여성농업인단체 주관의 농가경영협약 교육 지원

### ■ 여성농업인 등 가족종사자가 지위와 권리를 보호받게 됩니다.

○ '04년 처음으로 22개 선도농가가 농가경영협약을 맺은 후, '06년에 92농가가 체결, '07년 214농가, '13년 1천농가로 늘어나게 됩니다

\* 농가경영협약 : 가족구성원이 공동으로 농업경영에 참여하여 역할분담 하고, 경영 계획 수립, 보수, 휴가, 경영승계 등 합의한 사항을 문서로 작성·실천

○ 협약농가는 창업농 및 부부후계농 선발, 정책자금 우선 지원 등 우대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06년 협약농가 등은 부부간 협의 증가(99.3%), 여성지위향상(94.2%), 경영개선(95.6%) 등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 여성농업인이 제도적으로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 관련법규 보완을 통해 읍·면장이 농업종사사실을 확인해 주는 '농업인 확인제도'가 '07~'08년중 마련됩니다.

- 이를 통해 여성농업인이 농업종사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교통 사고 발생시 전업주부로 보험기준액을 산정받는 불이익을 방지

## 라. 여성 결혼이민자가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됩니다.

### ◇ 농촌총각의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결혼이민자가 농촌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토록 '07년부터 방문 교육도우미 등 지원

○ '07년 30개 시·군에서 시범 실시, '11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 수('05) : 14천명

\* 농업인 국제결혼 비율 : 35.9%

### ■ 방문교육도우미의 도움으로 언어 및 문화차이를 극복합니다.

○ '07년 1,800명의 여성결혼이민자가 300명의 방문교육도우미로부터 한국어교육, 생활상담 등을 지원 받게 되며, '13년에는 11천명이 지원받게 됩니다.

### ■ 여성결혼이민자 부부교실 및 가족캠프 등을 통해 화목한 가정 및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07년에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1,200명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다문화 교육에 참여할 수 있으며, '13년에는 4천명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07년에 모범가정 중 8농가에게는 모국방문, 16농가에게는 선진지 견학 기회가 주어집니다.

구 분	2002년	2006년	2007년
□ 쌀 농업인			
○ 쌀전업농 소득	3,713만원	4,444만원	4,600만원
○ 쌀전업농 생산비중	23%	32%	34%
○ 쌀 직불금(ha당)	467천원	1,160천원	
○ 공공비축 매입량	549만석	350만석	300만석
○ 완전미 비율	71.4%	88.9%	90.0%
○ 질소질 비료 시용량(10a당)	15.4kg	9.5kg	9.3kg
○ RPC건조·저장시설	81개소	110개소	110개소
□ 원예 농업인			
○ 과수전업농가(생산비중)	18천호(39%)	19천호(42%)	19.5천호(43%)
○ 화훼 신품종 개발	319개	633개	710개
○ 원예자조금 조성 품목	3개	21개	23개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2개	7개	10개
-가입농가수(가입율)	18,549호(18.3%)	27,327호(24.5%)	28,693호(26.5%)
□ 축산 농업인			
○ 한우/돼지 브랜드 유통비율	17%/41%('03)	32%/51%	34%/53%
○ 한우 1등급 출현율	35.2%	44.5%	48.0%
○ 한우 체중(18개월령, 수소)	522.1kg	566.8kg	580.0kg
○ 가축공제 대상축종/가입율	4개/10.1%	9개/40.7%	11개/42.7%
○ 우유잉여량	314천톤	97천톤	93천톤
○ 가축질병 발생율	1.5%	1.2%	1.1%



1

**개방에 대비할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 '04년 쌀 협상으로 '14년까지 10년간 추가유예 권리를 확보

- '93년 UR협상 결과로 '95~'04년까지 관세화를 유예
- '14년까지 의무수입물량을 도입, 이중 일부를 밥쌀용으로 시판
- \* 쌀 의무수입 물량 : ('95) 51천톤 → ('04) 205 → ('14) 408

■ **수입쌀의 부정유통 차단으로 농가 피해가 최소화됩니다.**

- 가공용 쌀은 육안식별이 쉬운 태국산 쌀과 혼합하여 중국산 쌀의 국내산 둔갑판매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 '06년부터 시판되는 밥쌀용 수입쌀은 유통단계별로 추적 조사 하고 부정유통 개연성이 있는 업체는 잠복근무 등의 집중 감시됩니다.
  - 원산지 표시위반자 처벌 강화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05.8)
  - \* 허위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중전 5년/ 5천만원)

■ **'08년부터 수입쌀의 대량 소비처인 음식점에서도 쌀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수입쌀의 둔갑판매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 가. 쌀 품질고급화로 수입쌀과 경쟁할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 ◇ 쌀의 생산에서 유통까지 체계적인 품질향상 대책 추진

- 완전미 비율이 '02년 71.4%에서 '06년 88.9%로 확대

### ■ 정부 보증 우량종자 공급이 늘어나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정부 보증종자 공급율이 '02년 소요량의 20%에서 '06년에는 35%로 향상되었으며 '07년에는 42%까지 확대됩니다.
- '08년부터 공급율이 50%까지 확대되어 농가가 2년마다 순도 높은 우량종자를 보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 질소질비료 지원이 중단되고 유기질비료 공급이 늘어나 지력 증진 및 쌀 품질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유기질비료 지원액은 '02년 210억원에서 '06년에는 420억원으로 늘어났고, '07년에는 473억원, '10년에는 750억원으로 확대됩니다.
- 단백질 함량을 높여 쌀 품질을 저하시키는 질소질 비료 사용량은 '02년 10a당 15.4kg에서 '06년에는 9.5kg으로 감소하였고 '07년에는 9.3kg까지, '13년에는 9.0kg까지 줄어나갈 계획입니다.

## 나. 쌀 대표브랜드 육성으로 쌀농가가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 농가와 브랜드 경영체는 품종통일 등 계약재배를 내실화하여 품질균일성이 확보된 대표브랜드를 육성

○ '07년부터 '10년까지 시·군단위 대표브랜드 100개 육성

### ■ 대표 쌀 브랜드 경영체가 우리쌀의 30%를 생산하게 됩니다.

○ 쌀 브랜드 수는 총 1,873개이나 개별브랜드가 전체의 96%를 차지하고 농가조직화·규모화 및 품질관리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 '07년도 시설현대화 자금 및 교육·홍보·컨설팅 비용을 8개소에 지원하고 '08년 32개, '10년까지 총 100개 브랜드경영체에 지원되어 대표브랜드쌀 취급비율이 '07년 10%에서 '10년 30%로 늘어납니다.

\* 시설현대화 : 개소당 20억원(국고 40%), 교육·홍보 비용 : 개소당 2억원(국고 50%)

### ■ 소비자단체 주관의 브랜드쌀 평가를 통해 소비자가 신뢰하고 선호하는 쌀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 '03년부터 매년 평가를 통해 12개 우수브랜드가 선정되고 있으며 '07년에는 평가내용이 개선·보완됩니다.

\* 평가방법 : 품위, 식미, 품종순도, 소비자만족도 대해 연중 3회 실시

\* 평가내용 개선 : 추천업체 매출액강화, 판매가격 기준상향조정, 품종순도 하한선 설정 등

### ■ '07년부터 쌀 품종표시제가 실시되어 소비자의 알권리가 존중되고 정직한 쌀농가가 보호받게 됩니다.

\* 품종표시 방법 : “품종명”(품종순도가 80%이상 이어야 함), “계통명”(국내산은 일반계나 다수계로 표시), “혼합”(품종이나 계통이 혼합된 경우)

⇒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다. 쌀 전업농의 규모화가 진전되고 소득도 크게 늘었습니다.

◇ 쌀 전업농에 대한 영농규모화사업 지원으로 전업농가의 평균 경작규모가 '02년 2.8ha에서 '06년 4.4ha로 증가

○ '06년 농지구입자금 금리 인하(3→2%)로 이자부담 경감

### ■ 쌀 전업농이 도시근로자 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쌀 전업농 평균소득은 '02년 3,713만원에서 '06년 4,444만원으로 20% 증가, '07년 4,600만원, '13년에는 5,900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 '06년 기준 쌀 전업농 평균 농가소득은 전체농가 평균소득보다 51% 높고 도시가구 소득보다 8% 높은 수준

### ■ 쌀 전업농이 규모화되면서 생산비중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 전업농의 평균 경작규모는 '02년 2.8ha에서 '06년 4.4ha로 늘어났고, '07년 4.6ha, '13년에는 6.0ha로 늘어나게 됩니다.
- 전업농의 생산비중은 '02년 23%에서 '06년에는 32%로 증가하였고, '07년 34%, '13년에는 50%로 늘어나게 됩니다.

### ■ 쌀 전업농의 농지구입자금 금리 부담이 줄었습니다.

- 농지구입자금 지원금리가 '02년 3%에서 '06년에는 2%로 낮아졌습니다.
- 쌀 전업농의 연간 이자부담이 '06년에 179억원 줄었으며 '07년에는 187억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 \* 1ha 농지를 매매사업으로 지원받은 농가는 이자상환액이 연간 39만원, 20년 분할 상환기간 동안 774만원 경감

## 라. RPC가 농업인의 쌀 판로확보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 RPC가 수확기에 벼를 많이 매입하고 저장할 수 있도록 벼 매입자금 및 건조·저장시설 확충 지원

\* 건조저장시설 예산 : ('02) 157억원 → ('06) 249 → ('07) 258 → ('13) 408

### ■ RPC의 벼 매입이 늘어나 수확기 판매여건이 좋아졌습니다.

- 수확기에 농가벼 매입 확대를 위해 매년 RPC가 벼 매입자금 9,184억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 '04년에 RPC 경영평가 제도를 도입, 수확기 벼 매입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업체에게 벼 매입자금을 우대지원하고 있습니다

\* A등급 27.5억원(0%), B·C등급 25~17.5억원(1%), D·E등급 15~7.5억원(2%)

- 벼 매입이 부진하거나 매입을 기피하는 업체에게는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RPC의 통·폐합이 촉진되고 있습니다.

\* RPC통·폐합 실적 : ('04) 8개소→ 3(△5) ('05) 17→4(△13), ('06) 7→3(△4)

### ■ RPC시설 확충으로 쌀 품질이 더욱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 '02년에는 건조·저장시설 81개소가 설치되었으나, '06년에는 110개소로 확대되었고 지원단가도 인상(4.5억원→5.5)되었습니다.

- '07년에는 고품질 브랜드쌀 유통에 필요한 저온저장시설 10개를 포함하여 110개소가 신규 설치됩니다.

\* 건조저장시설 지원개소 : ('02) 81개→ ('06) 110→ ('07) 110→ ('13) 210

### 가. 목표가격의 85%까지 보장받게 됩니다.

#### ◇ 논농업직불제와 추곡수매제 등 쌀농가 소득안정장치를 '05년 목표가격과 산지쌀값의 85%를 보전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로 개편

-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신청절차를 간소화 하였고, 직불금 지급시기도 앞당겨 조정(고정 : 11월→ 10, 변동 : 4월→ 3)

\* 예산 : ('02) 3,983억원 → ('04) 4,760 → ('06) 16,175 → ('07) 16,672 → ('13) 17,240

### ■ 더 많은 쌀 농업인이 직접직불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 '05년부터 지원면적 제한(4ha)이 있는 논농업직불제와 소득지지 기능을 상실한 추곡수매제(전체생산량의 17%수매)를 폐지하고 모든 쌀 농가를 지원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하였습니다.

- '02년 논농업직불금으로 평균 467천원/ha을 지급받았으나, '05년 쌀소득보전 직불금으로 평균 1,558천원/ha, '06년에는 평균 1,160천원/ha을 지급받았습니다.

\* 쌀 수입(직불금 포함시) : ('05) 165,574원/80kg → ('06) 166,727원(1,153원 증가)

- '07년에도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의 차액의 85%를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 ■ 쌀값이 떨어져도 쌀농가의 소득감소는 크지 않습니다.

- '05년에 수확기 쌀값이 '04년 대비 13.4% 감소하였지만 고정 직불금과 변동직불금 지급으로 95.9%가 보전되어 쌀 소득은 4.1% 감소하는데 그쳤습니다.

\* 수확기쌀값 : ('04) 161,630원/80kg → ('05) 140,028 (△13.4%)

\* 쌀농가소득 : ('04) 172,686원/80kg → ('05) 165,574 (△4.1%)

- '06년에는 직불금으로 목표가격의 98% 수준까지 보전 받게 되었고, '07년에도 쌀값 하락시 직불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수확기쌀값(147,715원/80kg) + 직불금(19,012) = 166,727(목표가격의 98%)

## ■ 직불금 신청절차가 간소화되고 더 빨리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02년 논농업직불제는 영농일지를 비치토록 하였으나 '05년에 폐지되었고, 신청도 행정기관에서 출력한 내용을 농업인이 확인 하는 것으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 '05년산 변동직불금은 당초 '06.4월에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3월로 앞당겨 지급되었습니다.

- '06년도 고정직불금도 당초 11월에서 10월로 앞당겨 지급받아 수확기 부족한 자금 마련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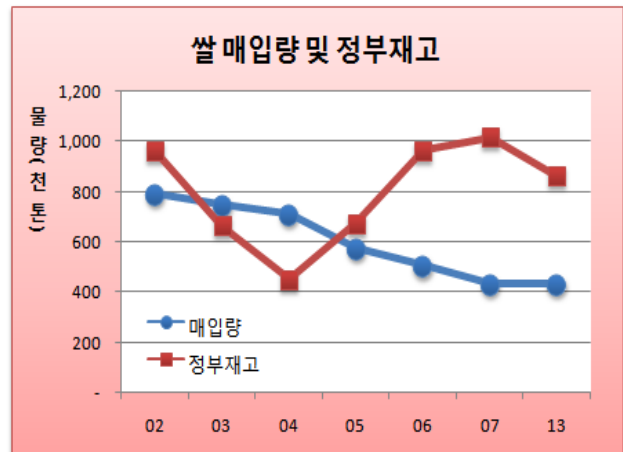
## 나. 공공비축제 도입으로 시장기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 ◇ '05.7월부터 대표적 가격지지 정책인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시장가격으로 매입·판매하는 공공비축제 도입

- 양곡연도말 정부재고를 864천톤(600만석) 수준으로 비축·운영  
\* FAO는 국내 식용소비량의 17~18%수준을 적정재고량으로 권장

### ■ 공공비축 매입물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농가의 부담이 최소화되었습니다.

- '05년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면서 농가 불안 최소화를 위해 공공비축 물량으로 576천톤(400만석) 매입했습니다.  
- 매년 72천톤(50만석)씩 감축하여 '06년 504천톤(350만석), '07년에는 432천톤(300만석)매입



\* 매입량 : ('02) 791천톤(549만석) → ('05) 576(400) → ('06) 504(350) → ('07P) 432(300)

### ■ 산물벼를 포대벼로 전환할 수 있고 매입시기도 앞당겨져 산물벼의 조기 출하가 가능해졌습니다.

- '06년부터 매입시기도 '05년보다 10일 빠른 9.20일로 앞당겨졌습니다.  
\* 매입시기 : 산물벼(9.20 ~ 11.15), 포대벼(10.25 ~ 12.31)

### ■ 흉년이나 기상이변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약 2개월분의 국민 식량이 안정적으로 비축되고 있습니다.

- 정부재고는 '06년말 966천톤(671만석), '07년말 1,017천톤(706만석)이 유지됩니다.



## 1

**품질 좋은 농산물로 세계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가. 고품질 브랜드 채소 생산으로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시장개방 확대와 대형매장 증가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채소 전문생산단지가 확대되고 우수 브랜드경영체 육성 추진**

■ **시설채소 전문생산단지가 확대되어 고품질의 채소 생산을 통해 농가가 더욱 쉽게 수출판로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 '02년 17개소(506ha)의 시설채소 전문생산단지가 '06년에는 42개소(842ha)로 늘어났습니다.
  - 채소류 수출실적도 '02년 89백만불에서 '06년 134백만불로 증가
    - \* 채소 주요수출품 : 파프리카 48백만불, 채소종자 18, 딸기 6, 토마토 6
    - \* 한국산 파프리카의 일본시장 점유율 : ('02) 55% → ('06) 64%

■ **우수 농산물 브랜드 경영체로 선정되면 생산에서 유통까지 패키지로 지원받게 됩니다.**

- '07년에 브랜드경영체 2개소, '13년까지 50개소를 육성하여 우수 브랜드농산물 유통비율을 21%까지 확대
- 채소류 우수브랜드 유통비율이 '07년 2%에서 '13년에는 21%까지 늘어나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합니다.
  - '07년 선정되는 브랜드 경영체 2개소에는 비가림시설 등 고품질 생산시설지원, 공정육묘장이나 종합처리시설, 조직결성과 브랜드 개발·관리 등에 총 200억원이 지원됩니다.

## 나. 과수농가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 '04년에 과수산업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고품질생산 및 차별화된 유통체계 정착에 필요한 사업을 집중 지원

### ■ 규모화된 과수 전업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02년 1.5ha이상 규모화된 전업농가 18천호가 과실 생산량의 39%를 생산하였으나, '06년에는 전업농가 19천호가 42%를 생산했습니다.
- 전업농가는 '07년 19.5천호, '13년에는 22천호로 늘어나 과실 총 생산량의 50%를 담당하게 됩니다.
- '07년부터 규모화 지원 융자금 이자율은 '04년 3%에서 2%로 낮아져 연간 17억원의 농가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 과원현대화로 과수농가가 더 적은 생산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 과원 현대화사업으로 '04~'06년까지 15천ha에 키낮은 사과원, 비가림 시설, 지주시설, 관배수시설 등 고품질생산시설이 지원되었습니다.
- '07년에 4천ha, '08~'10년까지 13천ha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 \* 키낮은사과원 효과 : 노동력절감(162 → 110시간/10a), 생산비절감(890 → 400원/kg)
  - \* 비가림재배 효과(포도) : 약제살포(13 → 5회), 당도(13.7 → 14.4°bx)

### ■ 명품 과실브랜드 육성으로 더 높은 소득을 올리게 됩니다.

- '07년부터 과실공동브랜드 경영체 8개소를 지원하여 고품질 생산과 공동출하·공동계산 체제를 구축하고 '13년까지 총 21개소로 늘려 과실 유통량의 30%를 브랜드과실로 출하하게 됩니다.
  - \* ('07) 8개소 / 22억원 → ('08) 5 / 46 → ('09) 4 / 52 → ('10년이후) 4 / 66

## 다. 인삼계열화사업으로 고품질 청정인삼 생산이 늘어나고 경영비 부담이 줄었습니다.

### ◇ 고품질 청정인삼 생산과 재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인삼계열화 사업이 '04년 500ha를 시작으로 '06년 1,450ha로 확대

- 사업주체(농협, 제조업체)와 농가간의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이력 관리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확된 인삼은 전량 수매·가공·판매

### ■ 안전성이 확보된 고품질 청정인삼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 계열화 사업 확대로 재배단계부터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안전성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 고품질 청정 원료삼 수매가 '04년 800톤에서 '06년 1,150톤으로 늘어났고 '13년에는 2,660여톤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 ■ 계약재배 확대로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하고 소득도 안정됩니다.

- 계열화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ha당 27백만원의 경영비를 무이자로 지원받게 됩니다.
- 계약재배 면적이 '04년 500ha에서 '06년 1,450ha까지 확대되었고, '07년에는 1,850ha, '13년에는 3,540ha까지 확대되어 많은 인삼 재배 농가들이 경영비를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 화훼농가가 품종개발, 시설 현대화, 유통혁신 등에 힘입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 **고품질 화훼류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을 위해 전문화, 집단화된 화훼전문 생산단지를 선정·관리**

○ 전문생산단지 중심으로 수출컨설팅, 전담지도사 배치, 재배지 검역 서비스 등 운영지원을 통해 화훼류 수출을 지속적 확대

\* 생산단지 수출실적(비중) : ('03) 24백만\$(52%) → ('04) 28(57)→ ('05) 31(60)

■ **국내산 신품종이 지속적으로 확대 개발·보급되고 화훼류 소비도 증가하여 화훼농가의 판로개척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장미, 국화, 백합 등 국내산 신품종의 개발·보급이 확대되었습니다.

\* 신품종 : ('02) 319품종 → ('05) 541→ ('06) 633 → ('07) 710→ ('13) 1,300

○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고품질 제품의 생산·공급에 힘입어 화훼류 소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1인당 화훼소비액 : ('02) 16천원→ ('05) 21→ ('06) 23→ ('07) 25→ ('13) 44

■ **화훼생산단지 조성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유통구조가 개선되면서 공영도매시장 출하가 확대되고, 거래가격 공개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 거래물량 : ('02) 65백만본 → ('05) 73 → ('06) 76 → ('07) 80 → ('13) 110

○ 화훼전문생산단지를 중심으로 농가를 조직화하여 품질이 우수한 꽃을 생산·판매함으로써 농가 수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농가 조수입 : ('02) 58백만원→ ('05) 79→ ('06) 85→ ('07) 91→ ('13) 138

## 가. 유통협약 · 유통명령이 수급조절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농업인, 유통인, 소비자 등이 자율적으로 농산물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켜 나가기 위해 유통협약 제도를 운용

○ '03년에는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유통명령 제도 도입

## ■ 유통명령 제도로 생산과잉 시 수급조절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생산과잉에 의한 가격하락으로 농가 소득감소 및 판로걱정이 많았으나 '03년 유통명령 제도 도입으로 소득불안이 크게 줄었습니다.

※ 감귤의 경우 유통명령제 시행으로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던 '02년을 기준으로 '03년 963억원, '04년 1,983억원, '05년 2,117억원의 농가 조수입 증대 효과

## ■ 생산자 자율적인 유통협약으로 품질 나쁜 농산물의 출하와 유통을 제한함으로써 수급조절과 품질향상을 이루었습니다.

○ '07년 이후에도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유통협약과 유통명령을 통하여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과 수급불안을 해소하여 농가는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게 됩니다.

\* 유통협약 : ('98) 2회(양파, 무·배추) → ('02) 2회(대파, 양파) → ('04) 2회(감귤, 심비디움) → ('05) 2회(대파, 양파)

## 나. 생산자 자율적인 수급안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 **생산자조직 중심의 자율적 수급안정체계 구축을 위해 생산자 단체가 조성한 자조금만큼 정부가 매칭 지원**

○ '00년 2개 자조금 단체로 시작하여, '06년 21개 자조금 단체로 확대

### ■ 생산자단체의 자조금 조성 확대로 소비촉진 등 수급안정사업을 실시하는 품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자조금 단체 결성 품목이 '02년 파프리카, 참다래 등 3개에서 '06년에는 21개 품목으로 늘어났습니다.

- '07년 인삼 등 2개 품목이 자조금 단체를 결성하고 '13년 주요 원예 농산물의 대부분 품목(32개)에서 자조금 단체가 결성

○ '05년부터 생산자의 자조금 조성 한도가 출하액의 1%에서 3% 이내로 확대되었고 정부가 지원하는 규모도 커졌습니다.

- '07년에는 자조금을 적립이 가능하도록 목적기금화하여 사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10년에는 의무자조금 제도를 도입

### ■ 자조금 사업 참여가 늘어나 수급조절능력이 향상됩니다.

○ 자조금 단체 소속 농업인의 생산량이 '02년 주요 원예 농산물 (32개 품목)의 5%에서 '06년에는 39%로 늘어났습니다.

○ '07년에는 40%를 넘어서고, '13년에는 70% 정도를 차지하여 생산자단체 스스로 수급 조절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 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으로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자연재해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은 대상 품목이 '02년 2개 품목에서 '06년 7개 품목으로 확대

○ 보험료지원율은 '02년 59%에서 '06년 69%로 확대

### ■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이 '02년 41%에서 '06년 31%로 줄었습니다.

○ '07년 보험료 부담율은 전년대비 3% 증가하였으나, 보험료율이 전년대비 약 10% 인하되어 농가의 실질적인 부담은 줄었습니다.

\* 농가 보험료 부담율 : ('02) 41% → ('04) 38 → ('06) 31 → ('07) 34

※ 경남 진주에서 배 1.4ha를 재배하며 연평균 8,0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A씨는 '06년 태풍 등으로 87%의 피해를 입고 5,626만원 보험금 수령 - '02년 A씨는 보험료 605만원 중 302만원 부담(303만원 정부부담), '06년에는 보험료 1494만원 중 538만원만 부담(956만원 정부부담)

### ■ 보험 대상 농작물과 보장 대상 재해가 늘어나 더 많은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02년에는 주산지에서 재배되는 사과·배만 보험가입이 가능하였지만, '06년에는 전국의 사과·배·포도·복숭아·단감·감귤 및 뽕은감(주산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대상재해도 '02년 태풍·우박·동상해에서 '06년 집중호우·과수 보상 등으로 재해 범위가 확대

○ '07년에는 주산지의 참다래, 자두, 밤 등으로 품목을 확대되며, '13년까지 식량작물·채소류 등 약 30개 농작물로 확대됩니다.

## 1

**세계 수준의 품질로 인정받고 있습니다.****가. 고품질 브랜드 축산물 생산으로 소득이 높아졌습니다.**

◇ '03년부터 우수 축산물 브랜드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위생·안전성을 갖춘 고품질 축산물을 공급

-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03), 우수브랜드 인증('04), 경영컨설팅사업('05) 등을 실시, '06년까지 우수 브랜드 73개소(한우44, 돼지29) 육성 지원

**■ 고품질 브랜드 축산물을 더 많이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 '03~'06년 4년간 브랜드 유통비율이 한우는 17.4%에서 32.2%로, 돼지는 41.4%에서 50.9%로 증가하였습니다.

- '13년까지 브랜드 유통비율은 한우 50%, 돼지 70%로 확대

- 브랜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브랜드 축산물 소비자 인지도 : ('04) 18% → ('05) 20.8 → ('06) 34.4

**■ 고품질 브랜드 축산물로 더 높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 '06년 브랜드 한우(1등급이상)의 가격이 kg당 19,299원으로 일반 한우(1등급이상)와 비교하여 5%이상 더 높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 ■ 브랜드 인증 및 경진대회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있습니다.

-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에서 사육·도축·가공·유통·판매 단계까지 전 과정의 관리가 우수한 브랜드를 인증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시장교섭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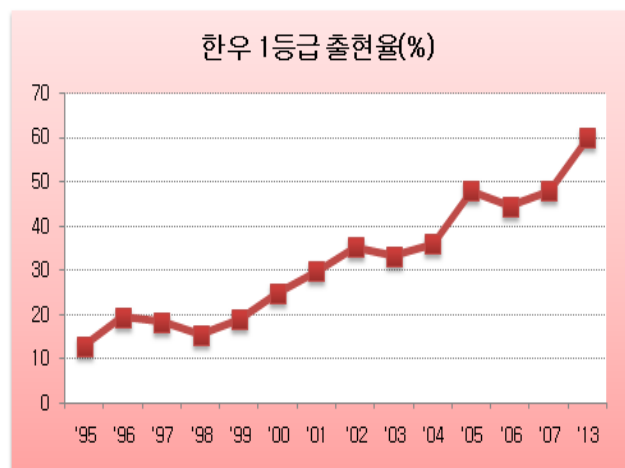
\* 인증브랜드 : ('04) 18개(한우 8, 돼지 10) → ('05) 25개(한우 13, 돼지12) → ('06) 36개(한우15, 돼지14, 육우2, 육계5)

## ■ 규모화된 광역브랜드가 늘어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04년까지 전국에 1개소뿐인 광역브랜드가 '06년말 도별 1개소 이상, 총 15개소로 확대 되었습니다.
- '07년에는 광역브랜드 운영을 위한 브랜드 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가 강화됩니다.

※ 전남 동부권 7개 시·군 축협이 통합하여 구성한 연합사업단은 '03년 “순한한우” 광역브랜드를 출범하고('05년 “지리산 순한한우”로 변경) 420농가 25천두를 사육, 연간 4천여두를 단일 브랜드로 출하·판매

- '05.12월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을 도입, 롯데쇼핑(64개소)에 판매
- 광역브랜드 출하두수 : ('04) 1,083두 → ('05) 3,050 → ('06) 3,709



## 나. 체계적인 가축개량을 통해 생산성과 품질이 높아졌습니다.

### ◇ 유전능력이 뛰어난 종축을 통해 우수 정액을 생산, 농가에 공급하여 생산성 제고 및 품질 고급화 도모

- '05년부터 보증씨수소의 검정방식을 부계 혈통 중심에서 모계 혈통까지 확대하여 효과 배가

## ■ 가축개량으로 한우의 체중이 증가하고 육질이 고급화되는 등 한우사육농가의 생산성이 높아졌습니다.

- 한우 18개월령 수소 평균체중이 '02년에 522kg에서 '06년에는 567kg (8.6%)으로 크게 향상되고, 같은 기간중 육질 1등급 출현율은 35.2%에서 44.5%로 높아져 마리당 수취액이 높아졌습니다.
  - 인공수정에 의하여 생산된 송아지는 자연교배로 생산된 송아지 보다 10~20%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
- '07년에는 체중을 580kg, 1등급 출현율을 48%로 높이고 '13년까지 비육기간을 6개월 더 늘려 체중 700kg과 1등급 출현율 60%가 달성됩니다.

## ■ 젖소의 산유량이 많이 늘어나서 낙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02년에 두당 평균산유량이 7,962kg이었으나 '06년에는 8,362kg로 늘어났고, '07년에는 8,510kg, '13년에는 8,650kg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 다. 사료작물 생산 확대로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 ◇ 조사료 생산 확충사업을 통해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를 공급하여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강화

- '06년부터 주 조사료 생산지역인 남부지방의 조사료를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 중부지역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유통 지원

### ■ 더 많은 조사료 생산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 '02년에는 종자 및 볏짚처리용 가스·비닐 구입, 초지조성 비용을 지원 받았으나, '06년에는 총체보리 제조비, 기계·장비 구입비, 장거리 운송비를 추가 지원받고 있습니다.
- '07년에는 조사료를 이용한 사료가공시설 설치시 개소당 9억원씩 용자로 지원받게 됩니다.

### ■ 조사료 급여량 확대로 한우 1등급 출현율이 크게 증가하는 등 고품질 한우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 한우의 조사료 두당 급여량이 '02년 1.5톤에서 '06년 1.9톤으로 높아져 1등급 출현율이 상승하는 등 축산물 품질이 높아졌습니다.
- 조사료 두당 급여량이 '07년에는 2.0톤, '13년에는 2.5톤으로 늘어나고 1등급 출현율은 '07년에는 48%, '13년에는 60%로 높아져 한우 품질고급화가 더욱 촉진될 것입니다.

\* 한우1등급 출현율 : ('02) 35.2% → ('04) 35.9 → ('06) 44.5 → ('07) 48 → ('13)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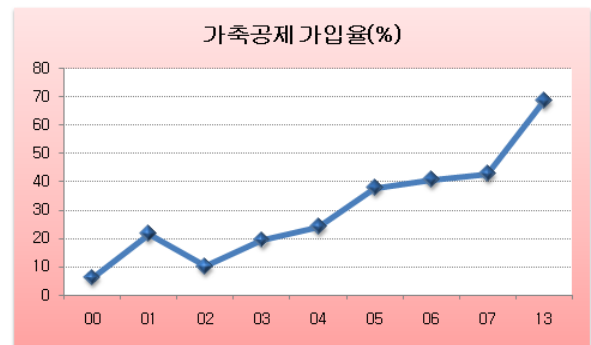
## 가. 가축공제로 재해·질병위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재해 및 질병 등으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가축공제는 매년 확대되어 '06년 9개 축종에 대해 시행

- '07년부터 공제로 지원대상을 가축이외에 축사까지 포함

## ■ 가입 축종과 보장범위 확대로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 '02년에는 가축공제에 가입 가능한 축종이 4개였으나, '06년에는 9개 축종으로 늘어났습니다.
- '07년에는 2개 축종이 추가되고, 가금류에 대한 보장범위가 설해 피해까지 확대되며, '13년까지 가입대상이 15개 축종으로 확대됩니다.



※ 강원 평창에서 77만원을 납부(공제로 154만원 중 77만원은 정부 부담)하고, 가축공제에 가입('06.3)한 A양돈농가는 '06.7월 집중호우로 돼지 350여두가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으나, 5,338만원의 공제금을 지급받아 경영위기 극복

## ■ 가축공제로 납부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 축산농가는 '02년에 가축공제료의 50%, 축사 공제료는 전액을 부담했으나, '07년부터 축사공제료의 경우 70%만 부담하게 됩니다.
- 또한, '02년에는 가축공제료를 일시금으로 납부하였으나, '06.8월부터 공제료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 2회 분납이 가능해졌습니다.

## 나. 축산자조금 확대로 농가의 자율적 대응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 ◇ 임의적으로 운용되오던 자조금이 '04년 양돈을 시작으로 '06년 한우·낙농까지 의무자조금으로 개편되고, 자조금 조성품목도 확대

### ■ 자조금 조성 품목이 3개에서 6개로 늘어났습니다.

- 축산자조금 품목이 '02년 양돈, 양계, 낙농 등 3개 품목에서 '06년 한우, 양돈, 낙농, 산란계, 육계, 양육 등 6개 품목으로 늘어났습니다.
- '07년 이후에는 오리, 양봉 등으로 자조금 조성 품목이 확대됩니다.

### ■ 의무자조금 제도로 인해 농가의 수급조절 능력이 확대되었습니다.

- 양돈('04), 한우('05), 낙농('06)의 의무자조금 도입으로 재원이 대폭 확대되어 '02년 38억원이던 축산자조금 조성액이 '06년 25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 확대된 재원으로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농업인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해 농가의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양돈자조금의 경우 '02년 3.6억원의 재원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의무자조금이 도입되어 '06년에는 104억원을 조성하여 소비홍보 (81억원), 교육 및 정보제공(10억원), 조사연구 (3억원) 실시

## 다. 우유공급 과잉 최소화로 낙농가 경영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 ◇ 우유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수급 조절사업을 추진

- 잉여우유 차등가격제와 우유생산 감축대책 시행으로 수급 안정도모('02 : 861톤/일 → '06 : 266)

### ■ 우유 생산조절시스템 구축으로 낙농가의 경영이 안정되었습니다.

- '03년부터 농가별로 생산쿼터를 할당함에 따라 '02년에 314천톤이었던 잉여량이 '06년에는 97천톤으로 감소되었습니다.
- 잉여 우유량이 '07년에 93천톤으로 줄어들고, '13년에는 74천톤으로 감소될 경우 우유수급 불안정 문제가 해소됩니다.

### ■ 우유수급 안정화로 더 높은 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 잉여우유 감소와 우유 품질향상 등으로 농가 평균 우유 수취단가는 '02년 610원/kg에서 '06년 680원/kg으로 상승하였습니다.
- '07년 이후에도 우유 수급 불균형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면 낙농가의 소득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라. 가축방역 강화로 고품질·안전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효율적인 가축방역을 위해 '04년 6개 관련부처 합동으로 「가축방역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 가축질병 무료 예방접종을 '02년 13종에서 '07년 15종으로 확대

### ■ 해외 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 노력 강화로 농가의 걱정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 '00년 이후 빈발하고 있는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광우병 등 해외 악성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여행객에 대한 발판소독조 운영이 강화되었습니다.

\* 공·항만 발판소독조 : ('02) 358개 → ('04) 395개 → ('06) 405개

○ 여행객이 소지한 축산물 등 불법휴대품 검색을 위한 검역탐지견이 '02년 2두에서 '06년 20두로 확대·운용되고 있습니다.

\* 검역탐지견 : ('02) 2두 → ('04) 12두 → ('06) 20두

\* 휴대품 적발건수 : ('02) 7,740건 → ('04) 19,963건 → ('06) 29,225건

### ■ '05년부터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방역대책이 추진되어 농가가 더욱 안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가축질병도 국가 위기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주관으로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신속한 방역을 실시하게 되어 피해를 신속히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대상질병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 관련부처 : 중앙 안전관리 위원회, 행자부, 외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 **가축질병 예방접종 대상 가축이 확대되어 질병 발생이 감소하고 농가피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 가축질병 무상 예방접종 대상이 '02년 13종에서 '07년에는 15종으로 '13년에는 17종으로 늘어나 농가의 부담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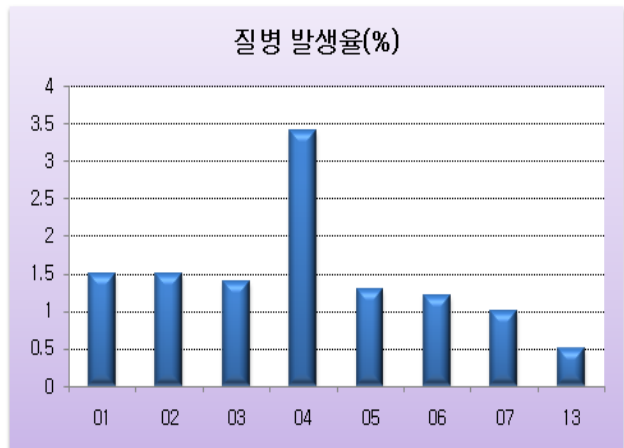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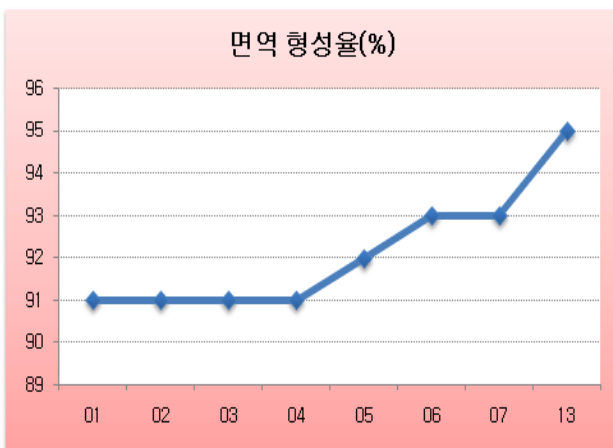
\* 예방접종 : 소(탄저 등 6종), 돼지(콜레라 등 5종), 닭(뉴캐슬 등 2종), 개(광견병 등 2종)

○ 질병발생율은 '02년 1.5%에서 '06년 1.2%까지 낮아졌고, '07년 1.1%, '13년에는 0.5%까지 낮아져 축산농가의 피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 **'07년부터는 공익수의사가 배치되어 가축 질병관리가 용이해 집니다.**

○ 일선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과의와 같이 '07년부터 현장에서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할 “공익수의사”가 시·군에 배치됩니다.

○ '07년에 150명으로 시작해서 '09년까지 시·군·구 등 지자체에 2명의 공익수의사(450명)가 근무하게 되면 보다 편리하게 가축 방역에 관하여 상담하거나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 분	2002년	2006년	2007년
□ 의료·복지			
○ 건강보험료 경감율	22%	50%	50%
-가구당 지원액	94천원	420천원	426천원
○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	최저등급(1등급) 보험료의 1/3	최대 13등급 보험료의 1/2	최대 14등급 보험료의 1/2
-1인당 지원액(최대)	62천원	259천원	572천원
○ 건강관리실(누계)	604개소	1,150개소	1,342개소
□ 농촌생활환경			
○ 상수도 보급률(급수인구)	31%(1,860천명)	42%(2,191천명)	48%(2,505천명)
○ 하수도 보급률	24.5%	40%	44%
○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률	82%	99%	100%
○ 농촌주택개량자금 금리	5.5%	3~4%	3.4%
□ 도농 교류			
○ 1사1촌 자매결연	-	14,498건	15,000건
-교류 금액	-	1,400억원	1,930억원
○ 농촌체험마을 개소수	31개	291개	409개
□ 교육 여건			
○ 영유아 양육비 지원(1인당)	-	1,333천원	1,763천원
○ 고교생 학자금 지원	632천원	866천원	926천원
○ 대학생 학자금 융자(학기당)	150만원	271만원	287만원
○ 대학특별전형 모집대학/인원	181개/10,149명	192개/13,460명	193개/13,568명

## 가. 의료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과 불편이 줄었습니다.

- ◇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농어업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50%를 국고에서 지원
  - 보험료 지원율이 '02년 22%에서 매년 늘어나 '06년 50%로 확대
- ◇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 지역을 대상으로 군지역당 1개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을 지원

## ■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 '02년에는 건강보험료의 78%를 부담하였으나, '06년부터 50%만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농가의 월평균보험료는 '04년 58,510원에서 '06년 69,910원으로 상승하였으나 동시에 보험료 경감률도 매년 높아져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는 '04년 40,957원에서 '06년 34,955원으로 하락
  - \* 농가 보험료 부담률 : ('02) 78% → ('04) 70% → ('05) 60% → ('06) 50%
- '07년 중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08년부터 농업인의 소득 또는 재산 등에 따라 건강보험료 경감률이 최소 0%부터 최대 50%까지 차등화됩니다.

## ■ 농어업인이 더 많은 보험료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 농어업인 가구당 평균 보험료 지급액이 '02년 연간 94천원에서 '06년 420천원으로 늘어났습니다.
- '07년에는 426천원으로 늘어나고, '13년에는 677천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 ■ 농어촌 군 지역에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 확대로 농촌에서 더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06년에는 농어촌지역 28개 응급의료기관이 인력과 장비를 지원 받았고 '07년에는 33개 기관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 '09년까지 농어촌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인력과 장비가 확충되어 지역응급의료체계가 확립됩니다.

## ■ 농어촌지역의 공공보건기관의 시설과 장비가 현대화되고 있습니다.

- '06년 보건소 14개소, 보건지소 100개소, 보건진료소 100개소에 시설·장비가 지원되었고, '07년 보건소 23개소, 보건지소 94개소, 보건진료소 133개소에 시설·장비가 지원됩니다.
- '13년 보건소 86개소, 보건지소 513개소, 보건진료소 1,151개소로 늘어납니다.

## 나. 농촌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 ◇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정부가 지원

- 보험료 지원 기준을 '02년 1등급에서 '06년 13등급으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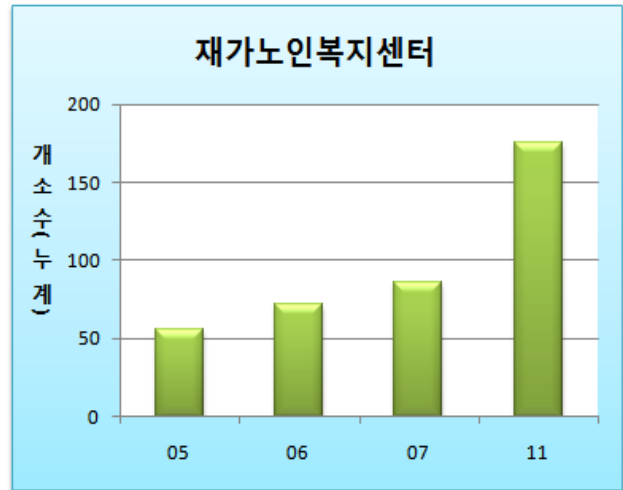
### ◇ '05년부터 농어촌지역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재가노인 복지센터를 설치

## ■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 '02년에는 최저등급(1등급) 보험료의 1/3(연간 최대 62천원)을 지원받았으나, '06년에는 최대 13등급 보험료의 1/2(259천원)로 지원액이 늘어났습니다.
- '07년에는 최대 지원 등급이 확대되어 최대 14등급 보험료의 1/2(280천원)을 지원받게 되고, '13년에는 23등급(572천원)으로 상향 조정될 계획입니다.

## ■ 노인들이 가정에서 신체수발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시설 이용이 곤란한 농촌노인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간보호, 단기보호, 가정봉사원을 파견하는 재가노인 복지센터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 '05년에는 56개소의 재가노인복지센터가 설치되었고, '06년에는 추가로 16개소가 늘어났습니다.
- '07년 14개소, '08~'11년까지 89개소가 설치되어 '11년까지 농어촌 지역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이 175개소로 늘어나게 됩니다.



## ■ 건강장수마을에서 다양한 장수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건강장수마을은 '05년 100개소를 시작으로 '06년 300개소로 늘어났고 '07년에는 350개소, '11년까지 800개소로 늘어나게 됩니다.
- 1병원-1마을 결연(36마을), 보건소 연계 건강검진(100개소) 등 지역 의료기관과의 건강관리 협조체계가 구축되고 소공예품 등 생활용품 개발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 마을 환경개선 등을 통해 장수여건을 만들고, 마을단위 자생적 노인보호 체계도 구축될 것입니다.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안골마을의 경우 주2회 생활건강체조, 게이트볼 육성, 시보건소와 협조한 연 2회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노년층의 건강은 물론, 마을주민간의 화합 및 교류를 증진

다. 농촌현장에서 필요한 도우미를 때 맞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고발생농가의 지속적인 영농활동과 고령가구의 안정적인 농촌 생활 영위를 위해 '06년부터 영농·가사도우미 지원**

- '06년 82개 시군에서 시범실시 후 '07년 전국으로 확대

■ **농업인이 뜻밖의 사고를 당할 경우 영농도우미를 이용하여 농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농업인이 농작업·교통사고 등이 발생시 농촌평균 임금의 30%만 부담하면 영농을 대행할 도우미를 10일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06년 82개 시·군의 만65세 미만, 농지소유 3ha미만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07년에는 전국의 만69세 이하, 농지소유 5ha미만 농업인, '13년에는 전농가가 30일간, 질병 및 교육시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지원액/1인 : ('06)남자 399천원, 여자 266천원 → ('07)350천원(남녀 공통)

■ **고령 농가가 힘든 가사일을 도움받게 되었습니다.**

- '06년 처음 82개 시·군의 65세이상 고령농가가 청소·빨래 등을 도와줄 도우미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07년에는 전 농어촌의 65세이상 고령가구가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라. 건강·체육시설이 늘어나 건강유지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 농촌마을에 건강기구실, 샤워실, 찜질시설, 건강정보실 등을 설치하는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이 추진
- ◇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시설, 마을단위 체육시설, 농구대 등 농어촌에 부족한 체육시설 설치 확대

■ 마을 사랑방 역할을 하는 건강관리실이 늘어나 농촌주민들이 더욱 활력있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 농업 노동부담을 덜고 농촌주민간 화합과 활력있는 농촌마을 조성을 위한 건강관리실이 '02년 120개소, '06년 158개소가 설치되었고 '07년 192개소를 설치, 총 1,342개소로 늘어나게 됩니다.
- '08년부터 마을별로 건강생활습관 실천을 위한 개인별 건강력 측정과 맞춤형 건강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다양한 체육시설 설치로 더욱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농촌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02년 마을단위체육시설 등 205개소, '06년에는 28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 '07년에는 농촌복합체육시설 등 262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15년까지 2,000개소 이상의 농촌 지역 체육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가. 영유아 보육부담은 줄어듦고 보육시설은 늘었습니다.

### ◇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정부보육료를 받지 못하는 농업인에게 '04년부터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

- '06년부터 보육여건상 영유아를 보육시설 등에 보내지 못하는 경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로 가정육아비용 일부 지원

## ■ 대부분의 농업인이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 '04년부터 농어촌에 거주하는 1.5ha미만 농지소유 농업인이 만 5세이하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 정부보육료의 50%(연평균 973천원)를 지원 받았습니다.
  - '06년에는 대상농가가 5ha미만 농지소유 농업인까지로 확대(연평균 1,333천원)되었습니다.
- '07년부터 정부보육료의 70%(연평균 1,763천원)를 지원받고, 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취학 유예 만 6세아도 지원받게 됩니다.
  - \* 만0세의 자녀의 경우 '06년 연간총액 210만원에서 '07년 252만7천원 지원
  - \* 만3세의 자녀의 경우 '06년 연간총액 94만8천원에서 '07년 151만2천원 지원
- '13년에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모든 농업인이 정부보육료 75%(연평균 2,053천원) 수준의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못하는 경우에도 가정육아비용의 일부를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 '06년부터 농업인이 만5세이하 영유아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못하는 경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를 통해 연평균 83만 6천원의 가정육아비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지역 : ('05) 476개 읍·면

- '07년에는 연평균 172만6천원을 지원받게 되며, '13년에는 연평균 215만원의 가정육아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농촌에 국공립 보육시설이 늘어나서 아이를 키우는데 어려움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 농촌 지역의 국공립 보육시설이 '02년 216개소에서 '06년 282개소로 늘어났습니다.
- '07년에는 농촌지역에 37개소의 국공립보육시설이 추가 설치되어 총 319개소로 늘어나게 되고, '13년에는 600여개소로 늘어나게 되어 보육여건이 더욱 개선됩니다.

\* 국공립시설 설치계획 : ('02) 13개소 → ('04) 16 → ('07) 37 → ('09) 50

## 나. 도시민보다 농촌주민의 교육비 부담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 ◇ 경제적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게 학자금, 장학금, 급식비 지원을 확대

- 농어촌의 고교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및 급식비 지원은 '02년 714억원에서 '06년 1,611억원으로 확대
-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게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02년에 233억원, '06년에는 677억원을 융자

### ■ 농업인의 고등학생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 농업인이 자녀 1인당 지원받는 금액이 '02년 632천원에서 '06년 866천원으로 늘어났으며, '07년에는 926천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 ■ 대학생 자녀 학자금이 무이자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 학기당 학자금 융자액이 '02년에는 150만원에서, '06년에는 271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 '07년에는 학기당 287만원, '13년에는 381만원으로 늘어납니다.
- '02년에는 농촌출신 대학생 16천명이 학자금 융자 지원을 받았고, '06년에는 25천명이 받았습니다.
  - '07년에는 26천명, '13년에는 32천명으로 늘어납니다.

■ **농수산계열 대학 졸업후 영농(어)에 종사할 대학생은 학기당 120만원의 영농(어) 장학금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 '06년에 1,998명의 장학생이 19억원의 장학금을 받았으며, '07년에는 2,500명의 장학생이 30억원의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 **농업인의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은 학기당 100만원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06년에 3,708명의 성적우수 장학생이 37억원의 장학금을 받았으며, '07년부터 매년 4,000명이 40억원의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 **학교급식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 학교 학생의 급식비로 '02년 449억원을 지원받고 매년 지원규모가 확대되어 '06년 747억원, '07년 768억원, '11년도에는 1,063억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 다. 농촌에서 대학에 진학할 기회가 훨씬 넓어졌습니다.

◇ '04년부터 전국 군지역에 1개 이상 우수고교를 육성하고 '06년부터 농어촌지역 학생의 대학특별전형 비율을 상향 조정

### ■ 농촌에서도 우수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군지역 1개교 이상의 우수고교를 선정하고 교육시설 현대화 등을 위한 재정지원과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선발 자율성 보장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04년 7개소를 시작으로 '06년까지 44개소, '07년도에는 전국의 88개 모든 군지역에 1개 이상의 우수 고교가 선정됩니다.
- 선정후 4년제 대학 진학률이 증가(선정전 : 69.4% → '06 : 73.2%)하고 학부모, 교사, 학생의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 만족도 평균 : ('05) 53% → ('06) 59.7%(6.7% 상승)

### ■ 농어촌학생 대학특별전형 비율이 '02년 3%에서 '06년 4%로 늘어나 더 많은 대학진학 기회가 생겼습니다.

- '02년 181개 대학에서 10,149명을 모집인원으로 선발하던 것이 '06년에는 192개교 13,460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 '07년에는 193개교 13,568명으로 늘어납니다.



라. 농어촌 학교에서도 알찬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06년부터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교원, 교육과정, 시설을 공동 운영하는 학교군 조성 추진

○ '06년부터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방과 후 학교 운영을 지원

■ 소규모학교 운영 정상화로 농촌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06년도 20개 학교군에 30억원 지원을 시작하여 '07년도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모델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 학교군 구성·운영 결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83.8%로 높습니다.

■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농어촌학생들도 도시학생 못지 않게 배우고 싶은 것을 마음껏 배울 수 있습니다.

○ '06년 19개 군에 정규교육 외에 초등보육, 특기·적성, 교과 프로그램, 평생학습 프로그램, 다문화가정 학부모 및 자녀를 위한 한글 교육·문화이해 교육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 영어·중국어 등 원어민 외국어 프로그램, 수학·논술 등의 무학년 수준별 프로그램, 예·체능 특기적성 프로그램 등

○ '07년에는 88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09년에는 139개 시·군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초등학생과 소규모 실업계고등학교의 기초·기본 실습 원격교육 콘텐츠 등이 보급되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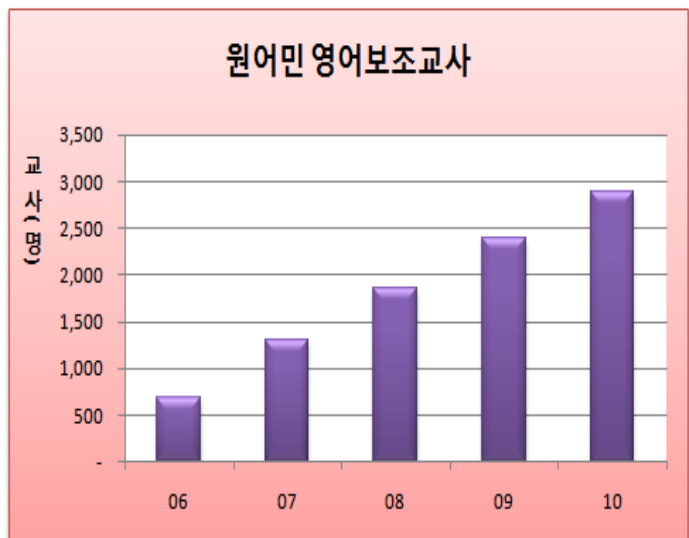
- '06년에 초등 3학년용(국어, 사회, 수학, 과학) 200주제의 교재와 개발교재 적용방안이 보급되고 실업계고등학교의 계열별 기초 기본 실습 교재가 보급되어 현장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 '07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용 교재 등이 개발·보급되고, 복식수업 교재가 개발되어 교육과정의 질이 개선됩니다..

■ **농어촌 학생들도 원어민 선생님과의 수업으로 영어에 자신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 '06년부터 농어촌지역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가 680명이 배치되어 학원에 가지 않아도 학교에서 영어를 제대로 배울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원어민 영어교사 자격 :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영어 상용 사용 7개국의 국적 소유자로 학사 학위 이상 학력

- '07년에는 1,300명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하고 '10년까지 소규모·농어촌 학교를 포함해서 모든 중학교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 ('07) 1,300명 → ('08) 1,850명  
→ ('09) 2,400명 → ('10) 2,900명



가.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농·산촌마을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 농산촌 마을을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 '04년부터 농산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시행

- 발전가능성이 있고 생활권이 같은 권역을 대상으로 생활환경정비, 경관개선, 소득기반확충, 지역혁신을 위한 S/W사업 등 종합지원

■ 마을주민이 살기 좋은 농산촌마을을 바꾸기 위해 계획수립부터 사업시행까지 전 과정에 스스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04년부터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도입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농촌지역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지역주민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마을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사업제안을 위한 예비계획서를 작성, 기본계획·세부설계시 의견을 제시, 사업시행 및 운영·관리 등 사업추진 전과정에 참여
- 주민들 스스로 지역 발전문제에 적극 참여하고, 마을간 대화가 활발해지는 등 주민참여의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농촌마을 종합개발과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농촌에서 더욱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04년도에 시작하여 현재 56개 권역이 추진 중입니다.
  - 40개 권역은 사업시행을 위해 시행계획이 수립중이며, 40개 권역은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13년까지 496개 권역이 추진
-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은 '06년까지 138개소를 조성하였고 '07년에는 33개소의 마을조성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 33개소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설계가 추진되고 있으며, '13년까지 354개소가 조성

■ **규제완화로 산촌생태마을 조성이 더욱 용이해졌습니다.**

- 산촌생태마을 조성시 농지전용 허가를 신고로 변경하고 체험시설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50% 감면, 임업용 산지에 조성할 수 있으며 산촌개발 사업시 국유림 대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나. 생활여건이 개선되어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면당 3~5년간 25~30억원을 지원하여 농촌정주기반확충, 오지종합개발 등 추진
- ◇ 농촌지역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주택 개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금리인하 및 대출한도 상향조정

### ■ 전국 1,146개 면지역에 마을안길, 상·하수도, 복지회관 등 기초생활환경 정비로 생활이 더욱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 '04년까지 농촌정주기반확충 1차('90~'04)사업으로 770개면, 오지종합개발 2차('90~'04)사업으로 399개면에 대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 '05년부터는 정주기반 확충 2차('05~'14)사업(800개면) 및 오지종합개발 3차('05~'09)사업(361개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08년부터 오지개발사업과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이 '농촌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통합되어 생활여건개선에 집중 투자되고, 소득기반사업은 기존 사업들과 연계하여 체계화될 계획입니다.

### ■ 농촌주택 개량에 따른 비용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 대출한도가 확대되고 이자율이 5.5%에서 3.4%로 인하되어 연간 84만원(4,000만원 기준)의 이자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 \* 용자금리/한도 : ('02) 5.5%/20백만원 → ('05) 3~4/30~40 → ('07) 3.4/40
- '13년까지 금리 3%, 대출한도 80백만원까지 지원조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됩니다.

## 다. 읍·면소재지의 생활서비스 제공기능이 강화되어 농촌생활이 더욱 편리해 집니다.

### ◇ '03년부터 읍지역을 경제·사회·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춘 중추 도시로 육성하는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

- '07년부터 거점면 소재지를 농촌지역 주민의 생활서비스를 충족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 육성

## ■ 읍소재지 개발로 농촌생활에 활력이 생기고 있습니다.

- 읍소재지를 지역경제의 활력과 도시기능의 확충, 주민생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자족적 생산능력을 갖춘 농어촌 지역의 중추 소도시로 육성됩니다.
- '03년 14개읍을 시작으로 '06년까지 66개 읍을 개발, '07년에는 72개, '12년까지 194개 모든 읍에 대한 개발이 추진됩니다.
  - \* 주말시장 현대화(전남 장흥읍), 도심공원화사업(경북 봉화읍), 황토 테마랜드 조성(충북 보은읍), 역사문화거리 조성(충남 홍성읍) 등

## ■ 거점면 소재지 중심마을의 생활서비스 기능 강화로 농촌마을 생활이 편리해 집니다.

- 면소재지 중심마을의 생활편의·문화·복지시설 등이 종합적으로 정비·확충됩니다.
- '07년부터 4개면에 대해 시범사업이 추진되며, '13년까지 70개면이 농촌지역 생활서비스 거점공간으로 육성되게 됩니다.

## 라. 도시 수준의 정보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농촌지역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 농촌지역의 마을단위로 가구별 PC 무료보급, 마을정보센터 신축, 마을 홈페이지 구축 등 정보화마을 조성을 추진

## ■ 농어촌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02년까지 농어촌 지역의 82%인 308만 가구에 초고속 인터넷망이 구축, '06년까지 373만 가구(99%)가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07년까지 인터넷을 희망하는 모든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이 완료됩니다.

\* 농어민 인터넷 이용률 : ('02) 11.9% → ('04) 16.9 → ('06) 29.4 → ('07) 34 → ('13) 68

## ■ 정보화 교육을 통해 인터넷이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내 고향 IT봉사단과 정보화교육 강사지원단이 파견되어 '02년 115천명에서 '06년까지 349천명이 정보화 교육을 받았습니다.
- '07년 이후에도 매년 3만여명이 정보화교육을 받게 되며, '13년 농어업인의 인터넷이용률이 68%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 ■ 도시와 같은 수준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02년까지 103개 마을이 정보화마을로 선정되었으나 '06년까지 306개 마을로 확대, '07년에는 32개 마을을 추가하는 등 '14년까지 787개 정보화마을이 조성됩니다.

**마. 문화공간조성 및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농촌주민의 문화향수권이 신장되었습니다.**

**◇ 농촌주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소규모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 지방문화원에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향유기회 제공
- 폐교 등을 활용하여 소규모 생활친화형 문화공간 조성

**■ 지방문화원에서 다양한 문화생활 체험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공예교실, 인형 극단 등 실버 문화 프로그램과 역사문화 탐방, 예술체험, 전통문화체험 등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 지방문화원 : ('04) 876개 → ('05) 696 → ('06) 191 → ('07) 200

**■ 농촌지역의 유휴공간이 주민친화형으로 문화공간으로 조성되어 주민의 문화향수권이 신장되었습니다.**

- 농촌지역 폐교 등 유휴공간이 문화공간으로 조성되어 공연, 박물관, 창작 스튜디오 등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향유하게 되었습니다.

\*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 ('04) 28개 → ('05) 39 → ('06) 51 → ('07) 66

## 가. 1사1촌 자매결연으로 찾아오는 도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기업(단체)과 농촌마을이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매결연을 맺고 지속적인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04년부터 1사1촌 운동 추진

○ 1사1촌 자매결연은 '04년 2,404건에서 '06년 14,498건으로 확대

### ■ 재계, 사회·종교단체, 학교 등의 1사1촌 운동 적극 참여로 도농교류가 확산되어 농촌에 활력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 '04년에는 자매결연을 체결한 기업·단체의 마을방문실적이 평균 1회 미만이었으나, '06년에는 3~4회로 확대되었습니다.

- 기업(단체)가 자매결연을 체결한 마을을 방문하여 마을발전을 위한 컨설팅, 애로사항해소 등을 추진하는 사례가 증가

### ■ 농산물직거래, 농촌체험관광 확대로 소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04년 36억원에 불과했던 교류금액이 '06년에는 1,400억원으로 39배나 증가하였습니다.

※ ○○○연구소는 강원 정선군 ○○마을과 자매결연 후 ○○마을의 주력 작목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 생산작목 대체(고랭지배추 → 메론, 피망) 및 신기술 지원을 통해 매출액을 3.9~5.4배 증가

※ ○○○회사는 전북 김제시 ○○마을과 '04.9.13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06년까지 214개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건강봉사대 운영, 농촌환경 보호, 일손돕기 등 6억 2천여만원을 농촌에 지원

## 나.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및 생태·녹색관광 거점개발로 농촌의 활력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 ◇ 농외소득증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농촌 체험관광사업이 '02년 31개 마을에서 '06년 291개 마을로 확대
- ◇ 농촌의 주요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생태·녹색관광거점육성, 문화관광축제 활성화 추진

### ■ 농촌체험마을을 방문하는 도시민이 늘어나서 농가 소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06년 기준으로 농촌체험마을은 체험관광을 통해서 평균적으로 약 1억원의 농외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 체험마을(전체) 매출액 : ('02) 28억원 → ('04)124 → ('06) 252 → ('07) 302

\* 체험마을(전체) 방문자수 : ('02) 170천명 → ('04)1,061 → ('06) 1,882 → ('07) 2,214

### ■ 마을주민 공동으로 농촌체험관광사업을 추진할 경우 체험시설 설치비용, 교육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농촌체험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마을당 2억원의 체험시설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13년까지 834개의 농촌체험마을 조성을 지원합니다.

\* 농촌체험마을지원(누계) : ('02) 31개소 → ('04)125 → ('06) 291 → ('07) 409 → ('13) 834

○ '05년부터 농촌체험관광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마을경영, 마케팅, 회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교육훈련과정 및 인원 : ('05) 14개, 1,707명 → ('06) 21, 2,258 → ('07) 21, 2,300

## ■ 농촌체험마을 보험가입지원으로 관광사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농가의 부담이 줄었습니다.

○ 도시민이 체험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농촌체험마을의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체험마을에서 납입하는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 보험가입마을 : ('05) 20개소 → ('06) 65 → ('07) 65

## ■ 마을사무장지원 확대로 체험마을의 사업 운영이 쉬워졌습니다.

○ 마을에서 농촌체험관광사업의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전담하는 마을사무장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월 100만원)를 지원합니다.

\* 사무장 인건비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40%, 마을부담 10%

\* 마을사무장 채용지원 마을 : ('06) 100개 → ('07) 150 → ('13) 350

○ 마을사무장 채용이 농촌체험마을의 방문객과 매출액 증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전년 동기 대비 마을방문객수 35.7%, 농촌관광매출액 17.2% 증가('06.6)

## ■ 「도농교류촉진법」 제정으로 도농교류가 더욱 활성화됩니다.

○ 체험·휴양마을의 음식제공, 공동숙박 등 특례마련과 도시민 현장 체험, 학생들의 농촌체험교육 근거, 농촌체험지도사 등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 근거 등이 마련됩니다.

■ 숲, 습지, 갯벌, 동굴 등 생태·녹색관광자원이 관광명소화 되고 자연휴양림 방문객이 증가하여 농촌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 생태·녹색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공공기반시설(진입로, 관광시설 등)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지원됩니다.

\* 지원규모 : ('02) 11개 사업/43억원 → ('06) 26/132 → ('07) 26/133

○ 자연휴양림이 '02년 90개에서 '06년 107개로 늘어났으며, 방문객은 '02년 4,076천명에서 '06년 5810천명으로 늘어났습니다.

\* 자연휴양림 개소/방문객 : ('02) 90개/4,076천명 → ('06) 26, 132

■ 문화관광축제를 보러 오는 방문객이 증가하여 농촌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 지역 축제 중 상품성 높은 축제가 선정되어 집중 육성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축제 육성현황 : ('02) 29개 → ('06) 52 → ('07) 52

○ 방문객이 증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방문객/파급효과 : ('02) 13.5백만명/4,132억원 → ('06) 35.2백만명/13,000억원  
→ ('07P) 36백만명/14,000억원





## 다. 도시민의 농촌 정착으로 농촌에 활력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 ◇ 도시민 농촌유입을 위해 '04년부터 도시민 농촌정주공간조성을 지원하는 전원마을조성사업 등 추진

- '05년 「농어촌 복합생활공간조성방안」을 마련, 도시민의 농촌 이주·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세부정책수단 및 추진체계 구축
- '06년 「전원마을페스티벌」을 개최, 농촌이주 도시민이 기존주민과 공동체를 형성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실현 모델 발굴·지원

### ■ 농촌전원생활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기존농촌주민과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농촌 정주공간이 조성됩니다.

- '04 ~ '06년 기간 중 전원마을 55개소가 조성되었고, '07년에는 15개소를 추가 조성, '13년까지 전원마을 300개소가 조성됩니다.
  - 전원마을 조성과정에서 인근에 있는 기존농촌마을의 상하수도 등 기초생활여건도 함께 개선
    - \* 조성되는 전원마을 규모에 따라 10~30억원 지원(국고 80% 지방비 20%)
- 전원마을에 입주하는 도시민이 인근 농촌주민과 공동체를 형성하여 보람되게 살 수 있도록 전원마을운영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 전원마을내 편의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전원마을과 기존마을간 다양한 교류프로그램을 운영
- 전원마을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 시·군, 한국농촌공사 등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
    - \* 중대규모(50호 이상) 전원마을은 시·군, 한국농촌공사가 사업시행

## ■ 도시민이 농촌에 이주·정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종 정보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농어촌종합정보포탈([www.nongchon.or.kr](http://www.nongchon.or.kr))을 통해 전원생활, 농지, 농촌주택 등 다양한 농촌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 '06.12월말 기준, 포탈회원 104천명, 일일평균 3천명이상 방문

- 전화상담(1577-1417), 전원생활교육에도 참여

- '09년까지 농어촌종합정보포탈에서 농촌의 교육·복지·문화·인프라 등 각종생활정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전원생활, 주택건축 등 분야별로 전문적인 전화상담, 현장안내 등이 가능하도록 오프라인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 ■ 농촌에 이주한 도시민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농촌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 시·군에서 도시민 유치홍보, 정착지원 및 이주한 도시민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프로그램은 지자체가 중심되어 마을, 지역사회단체(NGO) 등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운영하도록 할 계획

- '07년부터 '09년까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지원 대상 시·군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가. 지역 대표 특화품목으로 소득을 늘려나갑니다.

### ◇ 농촌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지원

- '05년부터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전환
- '07년부터는 무형의 기술·문화 등을 포함하여 1·2·3차 산업이 융합된 지역 향토산업 육성 지원

## ■ 시·군별로 4~5개의 경제성있는 특화품목이 육성되어 지역브랜드 이미지가 높아지고 소득원도 확충되고 있습니다.

- '06년말 현재 157개 시·군에서 686개의 지역특화품목을 지정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 지역특화 품목당 사업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단위사업(품목)당 지원규모 : ('05) 90백만원 → ('06) 126 → ('07) 178

## ■ 향토자원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제품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3년간 최대 10억원이 지원됩니다.

- '07년에 19개 향토자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후 '08년부터 매년 30개 향토자원을 대상으로 본 사업이 추진됩니다.

## 나. 기업체 유치를 통해 농촌에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 ◇ 농촌소득원 다양화를 위해 농공단지 조성을 추진

- '04년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경영안정을 통한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입주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 확대

### ■ 농촌지역의 취업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농촌에 공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부지조성,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기업체 유치·운영이 지원됩니다.

\* 농림부(부지조성), 산업자원부(공장유치 및 운영지원), 건설교통부(단지지정), 환경부(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등)가 공동으로 추진

### ■ '06까지 322개소의 농공단지가 만들어졌으며, '13년까지 400개의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 농공단지 일자리는 '02년보다 8천개가 늘어났습니다.

- 연간 28조 7,299억원 생산, 61억불 수출성과 달성

\* 농공단지 취업인원 : ('02) 109천명 → ('04) 112 → ('05) 115 → ('06) 117

-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시설·운전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특화산업단지 지정기준인 지역특화업종비율이 75%에서 50%로 완화되었습니다.

\* 운전자금 : ('02) 10억원 → ('04) 10억원 → ('06) 25억원

\* 농공단지 추계 : ('02) 295개소 → ('06) 322 → ('07) 328 → ('13) 400

구 분	2002년	2006년	2007년
□ 농식품 안전성			
○ GAP 인증농가	-	3,659농가	10,000농가
○ 이력추적제도			
- 이력추적 등록농가	-	8,808농가	10,000농가
- 쇠고기 이력추적 등록소(비중)	-	21만두(9%)	65만두(28%)
○ HACCP 적용작업장	107개소	572개소	600개소
○ 안전성 조사대상 농산물	56천건	66천건	68천건
○ 원산지 표시제			
- 표시 대상품목	442개	531개	531개
- 표시 이행율	95.9%	97.1%	97.2%
- 원산지 명예감시원	2,600명	25,353명	25,000명
- 위반건수	6,427건	3,634건	
□ 품질인증 등			
○ 가공식품 KS인증 공장	80개소	116개소	118개소
○ 전통식품 품질인증 공장	175개소	269개소	301개소
○ 생산자 단체의 농산물판매장	57개소	150개소	175개소
○ 농산물종합유통센터	9개소	14개소	15개소

## 가. 까다로운 주부들이 GAP 농산물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위해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우수농산물관리(GAP)제도 도입

○ '03년부터 시범추진(9농가)하여 '06년부터 본격추진(3,659농가)

### ■ '03년부터 GAP 도입으로 재배과정은 물론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더욱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GAP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된 농식품 안전관리 체계로 FAO, Codex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선진제도입니다.

○ GAP 인증은 이마트·롯데마트 등 민간인증기관 주도로 운영되어 인증활성화를 통한 우수한 농산물 공급 확대가 기대됩니다.

\* GAP인증기관 : ('06) 21개 기관 → ('07) 25 → ('13) 50

### ■ GAP 인증 농산물이 다양화되고 늘어나 우리 농산물을 더욱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 '03년 9농가를 시작으로 '06년에 3,659농가가 GAP인증을 받았고, '07년 1만 농가, '13년에는 10만 농가가 인증을 받게 됩니다.

\* GAP인증농가 : ('04)357농가 → ('06)3,659 → ('07)10,000 → ('13)100,000

○ GAP인증 대상품목이 '05년 89품목에서 '06년에는 96품목, '07년에는 100개 품목으로 확대되어 소비자들이 구입할 수 있는 GAP 인증농산물이 다양해집니다.

■ 수확 후 관리시설의 위생기준 강화로 더욱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05년부터 GAP위생 시설을 보완하고 있으며 '07년부터 신축되는 농산물 산지유통 센터는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건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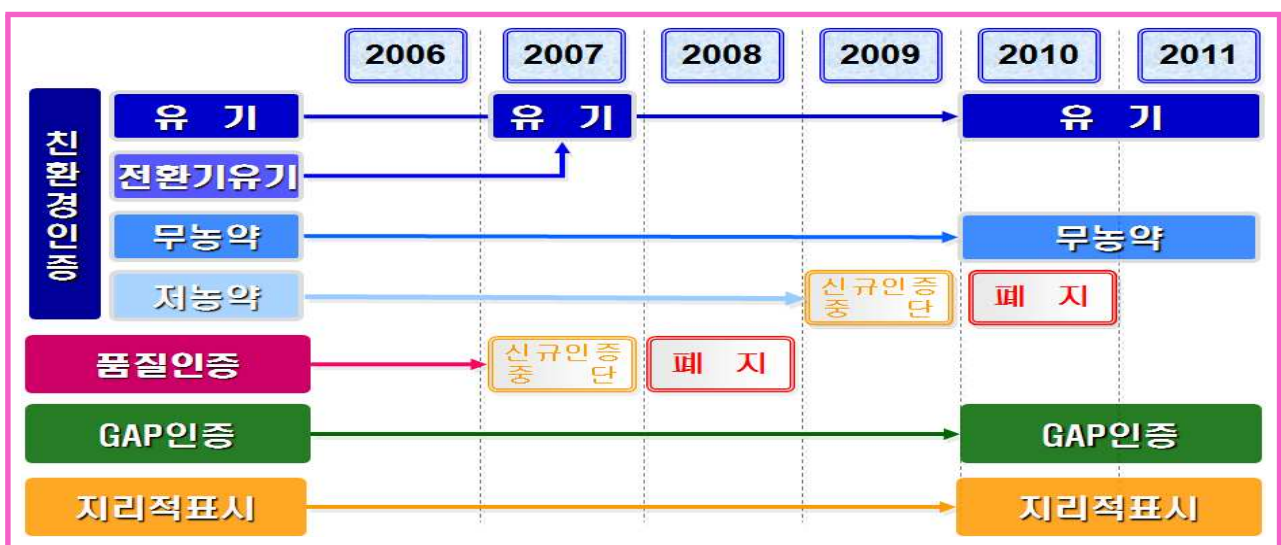
\* GAP위생시설 : ('06) 183개소 → ('07) 200 → ('13) 500

■ 농산물 인증제도가 알기 쉽게 간소화되어 소비자가 인증농산물을 더욱 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 농산물 인증제도가 '10년까지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연차별로 통합·폐지되어 인증농산물의 선택이 쉬워집니다.

- '07년에는 ‘전환기유기인증’이 ‘유기인증’에 통합되고, '08년에는 ‘품질인증’, '10년에는 ‘저농약인증’이 폐지됩니다.

- '10년 이후에는 ‘GAP인증’, ‘무농약인증’, ‘유기인증’만 남게되어 소비자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 나. 구매하는 농산물의 이력을 알 수 있습니다.

- ◇ 농산물 안전성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규명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력추적제도를 '06년 도입
- ◇ 유통경로의 투명성과 거래 공정성을 높이고 둔갑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04년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 도입

### ■ 농산물에 안전성 문제 발생시 원인을 알 수 있게 됩니다.

- '03년 이력추적관리제도를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06년부터 본격 시행하여 등록농산물에 대한 이력정보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 이력추적 등록 농산물이 '06년 전체 농산물의 0.3%에서 '07년 1%, '13년 10%까지 확대됩니다.
-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농산물에 대해 용도전환·폐기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 : 96품목(식량작물 12, 약용 29, 채소 28, 과수 14, 버섯 9)

### ■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가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농산물 이력추적 정보시스템([www.agros.go.kr](http://www.agros.go.kr))에 등록된 농가는 '06년에는 8,808호로 증가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10만 농가가 등록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등록농가 : ('03) 9농가 → ('05) 965 → ('06) 8,808 → ('07) 10,000 → ('13) 1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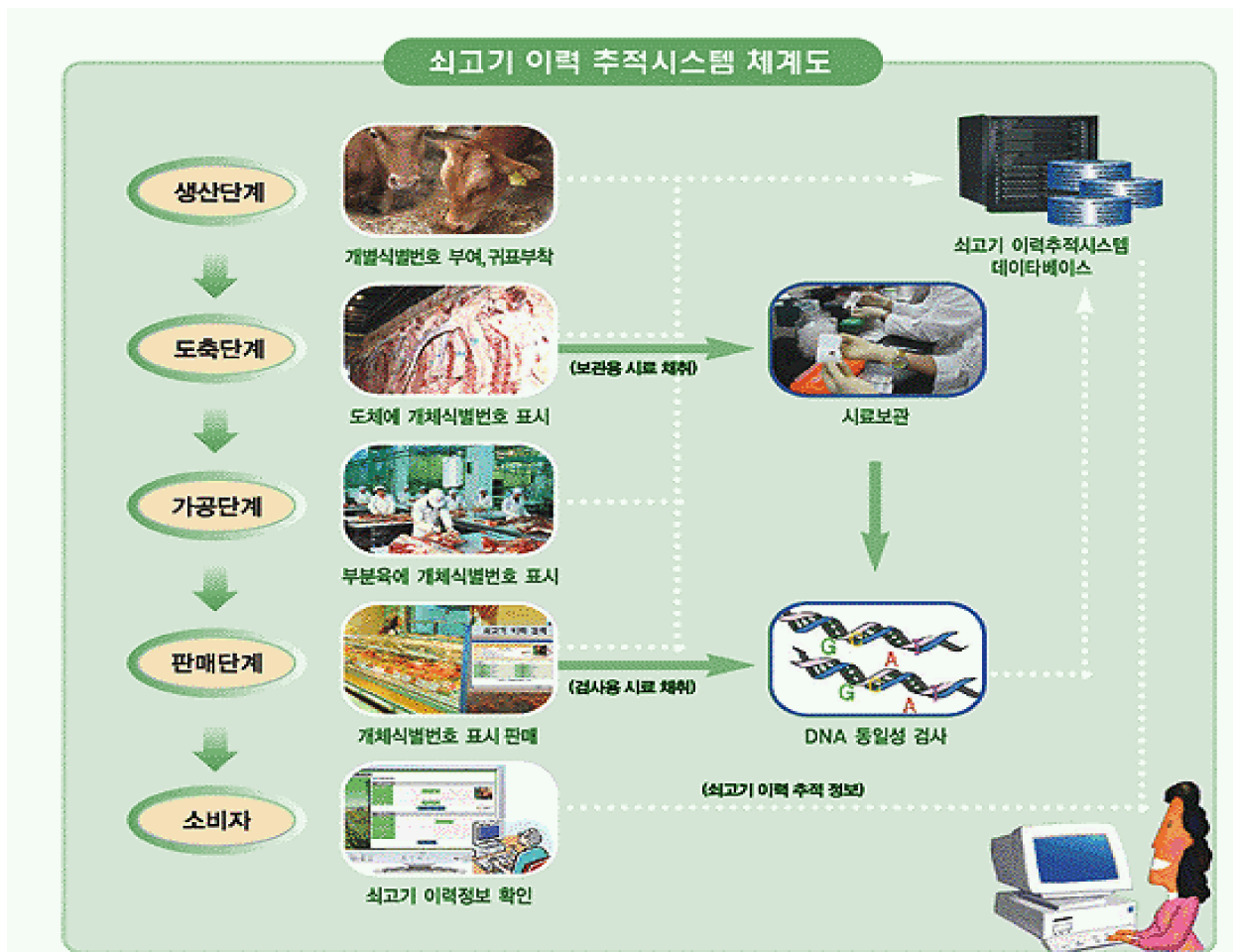


■ 쇠고기 이력추적제 등록이 늘어나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쇠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됩니다.

- 쇠고기 이력추적제도에 등록된 소가 '04년말 4만두(2%)에서 '06년말 21만두(9%)로 증가하였습니다
- '07년에는 등록소가 65만두(28%)로 대폭 확대되고, '08년부터 모든 한우와 육우에 대한 이력추적이 가능하게 됩니다.

■ 돼지 등으로 이력추적이 확대되어 소비자의 편의가 더욱 증대됩니다.

- '08년부터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시범적으로 이력추적제가 도입되어 육류에 대한 이력추적제도가 한층 확대됩니다.



**다. 위해요소 중점관리 제도(HACCP) 강화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 **위해요소를 사전 차단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위해요소 중점관리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

- '03.7월부터 모든 도축장에 의무적용, '07년부터 농장에서 판매까지 전 단계로 확대

■ **농장부터 판매단계까지 HACCP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소비자가 축산물을 더욱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 됩니다.**

- '02년에는 일부 도축장 및 가공장에 대해서만 적용되었으나 '03.7월부터 모든 도축장에 HACCP 제도가 의무적용 되었고, '04년 보관·운반·집유·판매 등 유통단계에도 도입하였습니다.

- '06년 돼지, '07년 소, '08년 닭의 모든 사육 단계로 적용이 확대됩니다.

■ **HACCP 적용 작업장 증가로 더욱 안전한 축산물을 먹게 됩니다.**

- HACCP 적용 작업장이 '02년 107개소에서 '06년 572개소로 확대되었습니다.

- '07년에는 600여개, '13년까지 2,500여개로 적용 작업장이 확대되어 축산물의 안전성이 더욱 강화됩니다.



라. 안전하지 않은 농산물의 시중유통이 방지되어 소비자가 더욱 안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하여 출하 전에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기준 초과 농산물의 시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

-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한 농산물의 비중이 '01년 96.9%에서 '06년 97.7%로 개선

■ **국내산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가 농약에서 중금속으로 확대되어 소비자들도 더욱 안심할 수 있게 됩니다.**

- 안전성 조사 농산물이 '02년 56천건에서 '06년 66천건으로 늘어났고, '07년에는 6만8천건으로 늘어나며, '13년까지 9만건으로 확대됩니다.
- 안전성이 우려되는 품목위주로 조사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깻잎, 상추 등 안전성이 우려되는 30개 품목을 중점관리대상 품목으로 선정하고, 수출농산물·인삼 등도 조사를 확대해 나갑니다.
- 조사성분도 농약위주에서 중금속으로 확대되고, 중금속을 '07년부터 '09년까지 매년 1만건씩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 **안전성 조사 인프라가 확충되고 교육도 강화됩니다.**

-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군 단위 정밀분석실을 '10년까지 38개소로 확대해 나가고, 안전성 교육도 새기술 실용화 교육(1~2월) 등을 활용하여 매년 30만명 이상 실시됩니다.

## 마. 농산물 원산지확인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 ◇ 수입 농산물의 원산지 둔갑판매로 인한 유통질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추진

- '06년에 표시대상 품목을 531개, 표시이행율을 97.1%로 확대

### ■ 농산물 원산지표시가 가공·포장단계에서 최종 소비단계인 음식점 단계로 확대되어 소비자의 원산지 확인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 원산지 표시의무화 품목이 '02년 442개 품목에서 '06년에는 531개 품목으로 확대되었으며, '13년까지 580개 품목으로 계속 확대됩니다.
- 음식점에서도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여 쇠고기는 '07년부터, 쌀은 '08년부터 시행됩니다.

### ■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 '02년 2,600명이었던 명예감시원이 '06년 25,000여명으로 늘어나 사회적 감시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 원산지표시 이행율은 '02년 95.9%에서 '06년 97.1%로 상승하였으며, '13년에는 98%까지 제고됩니다.
- 위반건수도 '02년 6,427건에서 '06년 3,634건으로 줄어드는 등 원산지위반으로 인한 소비자와 농업인의 피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 바. 포장 유통 확대로 더욱 위생적인 식품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그동안 수확 후 관행적으로 포장되지 않은 산물형태로 유통되던 배추·무에 대해서도 '07년부터 포장유통으로 전환
- ◇ 유통 중에 수입산의 국내산 둔갑 및 미생물 오염방지를 위해 '07년부터 닭·오리고기 포장유통을 의무화

### ■ 배추·무가 산지에서 깨끗이 다듬어져 표준규격으로 포장판매되어 소비자가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 배추·무가 비포장 산물로 도매시장에 반입되어 중도매인이 다듬고 선별하여 판매하였으나, '06.9월부터 수도권 도매시장 8개소에서 배추 포장유통이 시범 실시되었습니다.
- '07년 1월부터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전체 유통물량의 70% 수준)에 의무적으로 시행되어 소비자는 깨끗하고 품질 좋은 배추·무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공영도매시장에서 배추·무 포장유통이 정착되면 앞으로 재래시장 및 유사 도매시장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닭·오리고기 포장 유통 시행으로 수입산과 국내산이 구별 표시되어 둔갑판매를 사전에 막을 수 있고, 깨끗하고 안전한 고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07년부터 1일 8만수 이상 도축작업장의 닭, 오리 도축장에 대한 포장유통이 의무화되고, '08년부터 단계적으로 닭·오리 도축장, 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 판매업 등으로 점차 확대됩니다.

## 가. 식품·외식산업의 성장으로 다양한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고품질 먹거리 제공을 위해 식품의 품질인증, 전통식품 개발 등을 추진

- KS·전통식품·유기가공식품 등의 품질인증 도입·확대 시행
- '06년 전통식품 조리법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고, '07년부터는 전통식품의 우수성 홍보 등의 세계화 본격추진

### ■ 품질인증 확대로 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KS인증, 품질인증 등을 획득한 식품이 '03년 이후 급격하게 늘어나 고품질의 식품을 보다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 \* 가공식품 KS인증/가공식품 품질인증 : ('02) 80개/175개 → ('06) 116/269
- '07년에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제가 도입되어 유기 농산물을 원료로 만든 유기식품을 믿고 찾을 수 있게 됩니다.

### ■ 우리의 고유한 전통식품을 보다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 '06년부터 까다로운 전통식품 조리법이 표준화되고 전통식품 명인 확대 등 전통식품이 대중화되어 이용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 \* 전통식품 명인지정(24명), 전통식품 조리법 표준화('06 : 100종 → '08 : 300)
- '07년부터 전통식품·향토식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우리 음식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우리 음식이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갑니다.

## 나. 고품질 농산물을 값싸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농산물직판장 등 규모화된 소비지 농산물 유통망을 확충

\* 농산물종합유통센터 : ('02) 9개소 → ('06) 13 → ('07) 15 → ('13) 40

\* 농산물판매장 : ('02) 57개소 → ('06) 150 → ('07) 175 → ('13) 410

### ■ 소비지의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직판장 등을 통해 소비자가 고품질 농산물을 값싸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산지와 직거래를 통해 고품질 농산물을 싸값으로 신속하게 공급하여 소비자의 후생이 증가하였습니다.

\* 종합유통센터를 통해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일반유통경로보다 농산물 소비자 구매가격이 8.8% 낮음('05 농산물유통실태조사)

### ■ 산지와 연계한 소비지의 농산물판매장이 크게 늘어나 소비자가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15년까지 산지와 연계한 생산자단체의 소비지 중·대형 농산물 판매장이 550개소로 늘어나게 되어 소비자는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소요예산 : 총 6.5조원(대형마트 3.7조, 중·대형농산물판매장 2.8)

○ 생산자 단체가 통합 구매하여 도매하는 품목을 계속 확대시켜 소비자가 신선하고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살 수 있게 됩니다.

\* 통합구매품목 : ('06) 19개 품목 → ('07) 24개 품목 → ('10) 전품목

\* 통합구매물량 : ('06) 2,702억원 → ('07) 4,670억원 → ('13) 14,470억원

---

## Ⅲ. 2007년 업무추진 계획

---

1. 2007년 농정여건 전망

2. 2007년 농정추진체계 및 중점추진과제





■ **FTA, DDA 등 포괄적이고 강도 높은 개방협상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 FTA 협상은 '06년 개시된 미국을 비롯,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협상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
- 주요 쟁점에 대한 이해대립으로 중단('06.7)되었던 DDA 협상은 다보스 포럼('07.1)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추진이 예상
  - ⇒ 소득비중이 높은 민감품목을 중심으로 충분한 보완대책 요구 가중

■ **국내적으로는 SI 등 가축질병 발생, 식품안전 사고 등에 따라 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눈높이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 ⇒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국내산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와 함께 수입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단속 및 철저한 검역이 요구

■ **농가 고령화 및 소득양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 농가 고령화에 따른 농가구조변화 및 농가유형별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수단 강구 필요

■ **농촌 고령화 및 인구감소 추세는 지속되는 반면 도시민의 농촌 휴양자원에 대한 수요는 더욱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 ⇒ 농촌을 생산·정주·휴양을 연계한 복합생활공간으로 확대 조성 필요

2

2007년 농정 추진체계 및 중점 추진과제

< 임무 >

국민에게 안전한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며, 농촌을 풍요로운  
산업·생활·휴식공간으로 조성한다

< 비전 >

농식품 세계일류, 농촌 Global Top 10



- ◇ FTA·DDA협상 등에 적극 대응, 개방 피해를 최소화하고 협상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 노력
- ◇ '04년 2월 수립한 농업·농촌종합대책과 119조원 투융자계획을 3년간의 실적 평가와 한미 FTA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보완

가 한미 FTA 협상

■ '07년 3월 협상타결을 목표로 양국간 입장차이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 민감품목은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양허방식과 농산물 셰이프가드 적용 등을 통하여 타협안 마련

우 리 측	미 국 측
○ 쌀은 양허에서 제외	○ 쌀을 포함한 모든 품목이 협상대상
○ 민감 품목은 양허제외, 장기간 관세철폐, 셰이프가드, 수입 쿼타 설정 등 예외적 취급	○ 민감 품목이라도 축산물, 과일 등 미국측 관심 품목은 전향적으로 양허방향 검토
○ 쇠고기 검역문제는 협상과 분리하여 대응	○ 쇠고기 검역문제도 협상과 연계하여 협상 타결시까지 합의 추진

■ 협상 타결까지 단계별로 예상되는 다양한 협상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상황별 전략을 마련하여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협상전략 수립과정에서 품목단체 등 농업인들의 참여확대와 의견 수렴을 통하여 협상에 대한 피해의식, 불안감을 경감
- 협상결과로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하는 품목은 농업계와 협의하여 범정부적 국내 보완대책 마련

■ **협상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 여러분과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 협상 전에 농민단체 등과 워크숍, 협상 후에 설명회를 개최하여 협상 진행상황에 대한 이해당사자 이해제고
- 국회 한미 FTA특위, 상임위에 수시로 협상내용 보고
- 언론 브리핑, 기고, 인터뷰를 통하여 협상정보 전파

나	기타 FTA 협상
---	-----------

■ **현재 진행 중인 FTA 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 아세안 : '06. 4월 상품분야 협상이 타결, '07년 상반기 중 국회 비준동의 후 상품분야의 조기 자유화
- 캐나다 : '07년말 타결 목표, 축산물 등 민감 품목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 확보
- 인 도 : '07년말 타결 목표, 쌀 등 민감 품목 양허 제외노력

■ **향후 예정된 FTA에도 철저하게 준비하여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EU : '07년 협상개시 예정, 축산물 등 민감 품목은 양허에서 제외 되도록 노력
- 중국·호주·뉴질랜드 : '07년 산·관·학 공동연구 개시, 농업의 상당 부분 제외 등 실익 확보 노력

■ **관세와 보조금 감축폭 등 협상쟁점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상이 극적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06.7월 협상 중단 이후 '06.11월 협상이 재개되었으나, 관세·보조금 감축폭 등에 대한 주요국간 입장차는 지속
- '07.6월말로 종료되는 미국 무역촉진권한(TPA)과 연계하여 3월말 까지 협상 논의가 집중될 전망
  - 3월까지 핵심사항에 대한 진전이 있을 경우, '07년말 최종 타결 가능성

■ **우리나라가 속한 G10(수입국 그룹), G33(수입개도국 그룹)의 입장이 집중 공격받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주도면밀한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핵심쟁점별로 우리와 입장이 유사한 나라들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개도국 지위 확보를 위해 협상력 집중
  - 관세 상한 도입 저지 및 관세감축 최소화 쟁점은 G10 국가 그룹과, 개도국 특별품목 확보 문제는 G33과 공조체제 유지
- 최종 양자협상 과정에서 개도국 지위 확보를 위해 주요국 관심 사항 사전 파악 및 대응전략 마련

■ **시장개방 가속화에 대응하여 농업정책의 근본적 변화와 함께 농식품 정책·농촌 정책이 대폭 강화됩니다.**

- 농업구조개선 촉진을 위해 농가유형별로 선택·집중 지원하는 「맞춤형농정」 제도 도입
-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보장을 위해 농식품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고품질 브랜드·이력추적제도 등 소비자 중심 대책 강화
- 주5일제 실시에 따른 도시민 농촌체험 수요 증가에 맞추어 농촌 관광·전원마을 조성 및 농촌지역개발사업 강화

■ **새로운 농정방향에 맞게 119조원 투융자계획을 조정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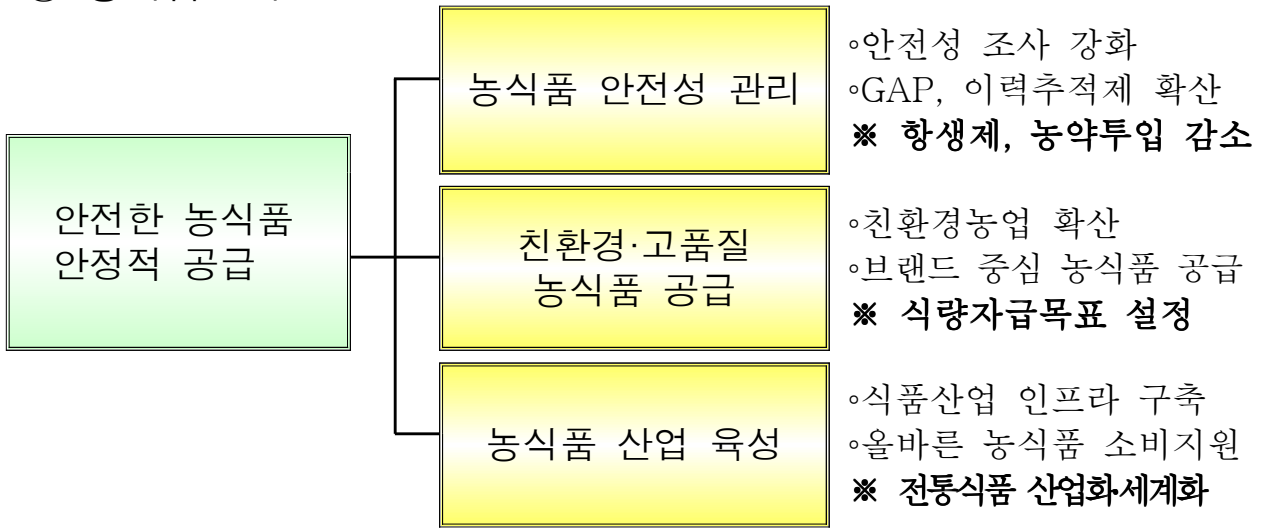
- 집행성과 분석에 따라 투자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비, 투융자 시기도 정책단계에 맞춰 대폭 조정
- 농업구조개선 촉진, 농식품 산업 육성, 농촌 활성화 사업에 집중투자

■ **농업·농촌 종합대책 및 투융자 계획 조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됩니다.**

- 「농업·농촌기본법」을 「식품·농업·농촌기본법」으로 개정하고, 농업과 식품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식품산업진흥법」도 제정
- 「FTA이행특별법」을 개정하여 한미 FTA 등 여러 나라와의 FTA 추진으로 인한 농가 피해 보전 등 보완대책 근거 마련
  - ※ 농림사업 전반을 재검토하여 현장 적용에 문제가 있거나 투융자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업 등을 발굴하여 법규 개정 등 ‘농림정책 리모델링’을 추진

# 《 농업·농촌 종합대책 정책과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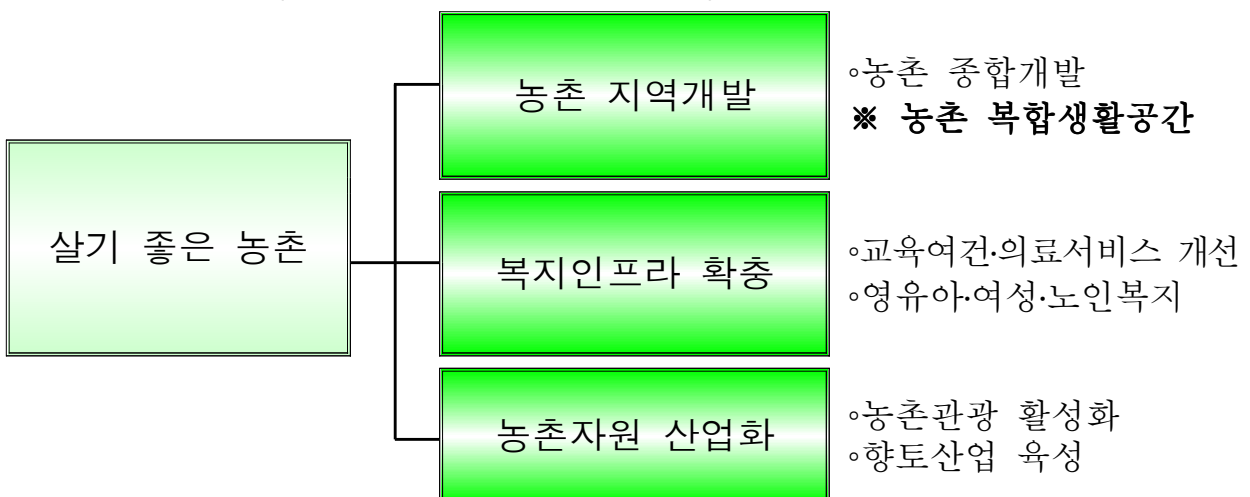
## ① 농식품정책



## ② 농업정책



## ③ 농촌정책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 **농가 소득문제 해결을 위해 농정을 맞춤형 패러다임으로 전환**

- 농업인력 육성을 전업농 집중 체제로 전환, 도시가구 이상 소득 실현
- 농가 등록제 등 맞춤형농정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 **농가유형을 구분, 정책대상을 명확히 하고 유형별 정책수단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맞춤형 농정 기본 틀이 마련됩니다.**

- 농업의 주업 여부, 경쟁력 정도에 따라 농가를 4개 유형으로 구분
  - 전업농, 중소농, 고령농, 취미·부업농으로 분류
- 전업농과 중소농에 농업정책 지원을 집중
  - 규모화 촉진, 직불제 확충 등을 통해 실질적 소득안정 도모
- 고령농에게는 생계비 걱정 없이 은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방안 마련(조기은퇴직불, 농촌형역모기지론 등)
- 취미·부업농은 농업정책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금년 상반기중에 맞춤형 농정의 핵심 추진정책이 확정됩니다.**

- 농가유형별로 차별화된 구체적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농업인 단체,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 직불제 개편, 농촌형 역모기지론 등 **맞춤형농정의 주요정책**을 구체화
  - 농업인 단체,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대상자, 지급조건, 지급수준 등 세부시행 방안 마련

**■ 맞춤형 농정 추진의 핵심이 되는 농가 등록제가 금년 하반기에 시범 실시됩니다.**

- 등록여부는 **농업인이 선택**, 미등록 시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
-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과 연계, **등록프로그램 개발(6월)**
- 다양한 농가형태의 현장적용을 위해 '07~'08년 **시범사업을 거쳐 '09년 본 사업 실시**

'07년 상반기	'07년 하반기~'08년	'09년
농가 등록 프로그램 개발	시범사업 실시	본사업 실시

**■ 맞춤형 농정 추진을 위한 제도·조직이 정비됩니다**

- 농가 등록제 등 농가유형별 지원 차등화를 위한 근거법률 마련
- 농가 등록제 추진을 위한 **관련조직 정비(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업통계 조사 기준과 방식**을 모든 농가대상 평균 개념에서 **전업농과 중소농 위주로 개편**

- ◇ 식품산업 육성으로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13년까지 식품·외식산업 매출액 110조원 달성
- ◇ 농식품 수출지원 및 시장개척 활동으로 '13년 농식품 수출 40억불 달성

가 식품산업 육성

■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 기술개발, 경영개선 지원 등 식품산업 발전 종합대책 수립
  - 농산물 수급에서 식품 가공·소비까지 통계정비를 위한 현황도 조사
- 식품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가칭)식품산업진흥법’ 제정
  - 식품산업 전반에 대한 육성 지원 및 전통식품·유기식품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구축
- 식품규격 제정 및 지리적 표시 등록 확대·내실화
  -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표준규격을 확대(제개정 40건)하는 한편, 지리적 표시의 지속적 확대(10개) 및 권리보호 강화

■ ‘韓 브랜드, 한식 세계화 지원 계획’ 이 수립·추진됩니다.

- 해외 한식당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주요 권역별 실태조사 추진
  - 실태조사를 토대로 해외 한식당 국가인증제 단계적 도입 추진('08년 이후)
- 우리 음식 및 식문화의 해외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외교관·언론인 등 오피니언 리더 대상 해외 식문화 홍보행사(6회) 추진

## ■ 전통주의 저변을 확대하고 유기농식품 인증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전통주의 체계적 분류·표준화 및 소비촉진홍보를 통한 저변확대
  - 전통주 실태조사('07 상반기), 주종별 표준규격 설정(30종) 및 소비촉진 캠페인('07 하반기)을 통해 인식전환 및 저변확대 유도
- 유기농식품 인증제 도입을 위한 인증기준 마련

## ■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농업과의 연계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 식품외식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경영자금 지원
  - 위생시설(HACCP, ISO 22000 등) 확충을 위한 자금 및 원료 구매에 소요되는 운영자금 지원
- 생산자와 식품외식업체 및 중간 유통업체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생산자 조직과 식품유통, 식품외식업체와의 수직계열화 유도를 위한 표준거래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 ■ 어린이, 주부 등 홍보대상별 맞춤형 소비촉진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 TV·인터넷 등 홍보효과가 큰 영상매체 활용 및 계층별 맞춤형 홍보 추진
  - 애니메이션 방영, 캐릭터 활용 등 어린이·청소년 대상 소비촉진 홍보, 직장인 대상 건강프로그램 제작 등
- 쌀 등의 소비촉진 홍보를 위해 연령별 차별화된 홍보 추진
  - 아동·청소년(학습능력), 주부(다이어트 및 웰빙), 직장인(웰빙) 등
  - 지자체·품목단체별 특색있는 프로그램 추진 및 전문가 그룹 활용 홍보

■ **품목별·지역별 농식품 수출 확대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수출지원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고품질 농산물 공급을 위한 수출전문 원예생산단지 지정을 확대 ('06 : 149개 → '07 : 155)하고 단지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 수출물류비가 실질적인 수출증대로 연계되도록 지원방식 개선
  - 신규시장 개척에 대한 인센티브 상향조정(10%→30)

■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육성하겠습니다.**

- 멜론, 토마토, 딸기 등 수출 확대 가능성이 있는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적극 발굴·육성
- 현지 마켓테스트, 상품개발비, 홍보비 등 해외시장 개척비용을 특별지원
- 안정적인 현지 정착을 위한 지원기간 조정(1년 → 3년)

■ **농식품 수출업체의 해외 마케팅 지원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 신규시장 개척 가능성이 높은 동남아, 인도 등 박람회 참가지원(24회)
  - \* 자카르타 식품박람회(3월), 상파울로 식품박람회(7월), 인도 식품박람회(12월)
- 해외대형유통업체 입점을 위한 판촉행사 개최
  - 동남아 지역 입점시 인센티브 지원제도 시범도입
- 시장개척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해외 마케팅 전담 인력보강
  - \* 싱가포르·상하이·도쿄·모스크바 상주인력 증원, 두바이 시장조사요원 파견

◇ **농축산물 브랜드화로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규격화·표준화를  
통해 물류효율화 추진**

○ 산지-소비지를 연결하는 농산물 판매체계를 구축

\* '13년 브랜드 육성 목표 : 쌀 100개, 채소류 50개, 과실류 21개, 축산물 80개

가 고품질 브랜드 농산물 공급

■ **쌀 : 전문가평가를 거쳐 브랜드 경영체 8개소를 선정·지원합니다.**

- 시장·군수가 주도하여 시·군단위 공동브랜드를 활성화
  - 계약재배 내실화를 위해 마을 단위로 농가를 조직화하고 쌀 품질별 구분 관리를 위해 품종통일 등 실시
  - 브랜드 매뉴얼을 제작하여 RPC·지자체·지역농협 등에 배부 및 교육
- 우수 브랜드 경영체에 대해 개소당 20억원 기준의 시설현대화 자금, 개소당 2억원 기준의 교육·홍보비를 지원
- 소비자단체 주관 「시중유통 브랜드 쌀 평가」를 계속 실시하고, 12개 우수브랜드를 선정하여 홍보 실시

■ **채소류 : 주산지를 중심으로 우수브랜드 경영체 2개소를 선정·지원합니다**

-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 계열화,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 종합처리시설, 공정육묘장 등 지원
  - 개소당 200억원(국고 38억원, 지방비 43, 용자 105 등)을 3년간 분할 지원

- 지자체는 지역여건에 맞는 원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브랜드 경영체는 상품화·브랜드화를 위한 생산관리 프로그램 개발 수행

## ■ 과실류 : 전국·광역 공동 브랜드경영체 8개소를 선정·지원합니다.

- 브랜드 경영체에 대해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운영, 홍보비 등 지원
  - 사업량 : 8개소, 총 22억원(품질관리 5억원, 마케팅 6, 홍보 11)
- 거점산지유통센터 중심의 과실 브랜드화 및 계열화를 위해 운영 상황을 지속 점검·평가하고, 경영안정화를 위한 컨설팅 추진

## ■ 축산물 : '04~'06년까지 선정된 73개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를 집중 지원하여 규모화·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브랜드 관리 및 사업평가 결과 우수한 경영체에 대하여 무이자 인센티브자금(200억원) 지원
    - 브랜드경진대회 입상 경영체 20개소, 개소당 10억원 내외 지원
  - 브랜드 경영체를 대상으로 「축산물브랜드컨설팅」을 실시하여 브랜드 경영체의 체질 강화 및 경영마인드 개선(10개소, 5억원)
  - 기존 브랜드경영체 상호간 통합 및 인근 일반농가 참여를 통한 브랜드 광역화로 시장 교섭력 강화 유도
    - 한우의 경우 도별 1~2개 광역브랜드 육성
  - 브랜드 기반 확충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브랜드 경진대회」·「브랜드 인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품질, 위생·안전, 브랜드관리 등을 평가하는 **브랜드경진대회** 개최(9월)
- \* 연도별 브랜드 인증 : '04년 18개(한우8, 돼지 10) → '05년 25개(한우 13, 돼지12) → '06년 36개(한우15, 돼지14, 육우 2, 육계5)

■ **규격화·표준화를 통한 물류효율화를 위해 농축산물 포장유통을 추진합니다.**

- 산물 유통관행 개선을 위해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에서 배추·무 포장유통 전면 시행
  - 포장출하로 인한 추가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적정 수준의 포장재비 지원
    - \* 그물망, 골판지상자 등 포장재 가격의 60~90%수준 지원('07예산 : 170억원)
- 유통과정에서 미생물 등에 의한 재오염 방지를 위해 닭·오리 고기의 포장유통 의무화 시행
  - 금년에는 1일 평균 도축수 8만 이상인 도축업자에 대해 시행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의무화 대상 확대 추진

■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저온유통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예냉·저온저장 시설 확충과 저온수송 장비 보급 확대 등
  - \* 생산자단체에 농산물 수송용 적재함(탑) 차량 개조 우선 지원(100대)

■ **'09년 차세대 물류표준으로 정착될 RFID 도입을 준비하겠습니다.**

- 농산물 분야 표준을 마련('07)하고, 표준코드 사용을 활성화 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체계 정비('08)
  - \* RFID : 포장단위로 물류흐름, 생산이력 등을 무선주파수를 통해 관리

■ **32개 도매시장별 거래품목 및 거래특성을 반영한 운영 제도개선 및 시설현대화 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겠습니다.**



■ **협동조합이 산지유통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농산물 판매사업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일선조합 합병·공동사업법인 설립 등 조합의 규모화·전문화 추진
  - 정부와 중앙회의 자금 지원, 부실액 보전 등을 통한 일선조합 구조조정 가속화('07 : 50개 합병 등)
  - 연간 300억원 이상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 5개소 신규 설립 및 과수·축산 등 품목조합 10개소 육성
- 일선조합 경제사업 평가 및 리스크관리체계 구축 등 중앙회의 일선조합 경제사업 지원 방식을 체계화
  - 경제사업 매출액, 출하협약 체결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지조합 경제사업 평가시스템 마련, 차등하여 인센티브 지원

■ **중앙회는 소비지 마케팅 기능을 강화하여 일선조합의 판매 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 도시조합의 중대형 농산물판매장(3,300㎡미만) 25개 신설(누계 175)
  - 정부의 시설자금 융자 지원규모 확대('06 : 50억원 → '07 : 440)
- 중앙회 자체 자금 2,000억원을 투자, 대형판매장 2개소 신설(누계 17)
- NH 식품 등을 설립('07),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부가가치 제고
  - \* 소비지 유통 점유비 : ('05) 6.7% → ('07) 8.0 → ('13) 13

◇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축산물 공급을 위해 농식품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해외 악성 가축질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 초동방역 실시**

- 비위생적 수입농산물의 국내 시장접근을 차단하고 부정유통 방지

가 농식품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농산물 안전성 관리 >

■ **우수 농산물 관리제도(GAP)를 확산하고 및 이력추적 제도의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 참여농가를 1만호 수준('06 : 3,600호)으로 확대, GAP 유통비율 1% 확보('13년까지 10만호, 유통비율 10% 목표)
- 대형유통업체의 GAP 민간인증기관 지정을 25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인증대상품목도 100개로 확대('06 : 21개 기관, 96개 품목)
- 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보강 등 인프라 구축 추진

\* 농림부·해수부 합동으로 농식품안전정보시스템 확충

■ **농산물 안전성조사를 강화하고 검사시설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 생산단계를 중심으로 농약·중금속·미생물 등 안전성 조사 확대
  - 깻잎, 상추 등 30개 품목 중점 관리, 조사건수 확대('06 : 66천건 → '07 : 68)
  - 농약위주 조사에서 중금속(1만건, 125개 폐광산)으로 확대
- 농약 정밀 분석을 위한 거점분석실을 5개소 설치('07 누계 : 15개소)

## < 축산물 안전성 관리 >

### ■ 잔류물질 검사 및 수거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 식육 중 잔류물질 규제검사 물량 확대
  - 잔류검사 120천건 중 규제검사 물량 확대 : ('06) 10.8% → ('07) 13.5
  - \* 규제검사 대상 : 위반농가 출하카축, 긴급도살주사자국 등 위반가능성이 높은 축산물 등
- 축산물(식육, 가공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 물량 확대
  - 검사물량 : ('06) 6,720건 → ('07) 7,500
- 포장육 및 판매지육 등 유통중 식육에 대한 미생물 권장기준 설정

### ■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확대하고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습니다.

- 시범사업 범위를 한우 위주에서 육우까지 확대하고, 시·군 단위에서 도 단위까지 사업 추진방식 다양화
  - 이력추적제 참여 규모 : ('06) 210천두 → ('07) 650
- '08년 본사업 시행에 대비하여 법적근거 마련

### ■ HACCP을 확대 적용하고 도축장 운용수준 평가도 추진합니다.

- 소 사육단계, 축산물 보관·운반·집유단계 HACCP 지침 및 모델 개발
  - 지침 및 모델 개발 후 농가관련기관에 배포하고 평가기준을 마련·적용
-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향상을 위한 평가 사업 추진
  - 평가위원회와 실무평가단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도축장에 운영자금 차등 지원('07 : 638억원)

■ **시는 기발생 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를 마무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상시 방역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조기 검색·경보발령, 현장조치 및 부처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NSC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및 SOP 보완
- 유입경로별 차단검역과 소독·예찰 등 상시 방역대책 추진
  - 해외 발생정보 수집(매일), 발생국 가금류 수입중단, 여행객 검색 등
  - 전국 가금류 농장의 소독·예찰(주1회), 종오리 농장(66개소) 및 도축장 출하오리에 대한 혈청검사(10천건), 농가 교육·홍보 등
- 국내 유입 위험성이 높은 11~2월에는 특별방역 추진
  - 철새 도래시기에 가금류의 철새 접촉 차단, 철새 포획검사, 전국 종오리 일제 분변검사 등 더욱 강화된 예방·경보체계 가동

■ **구제역은 3~5월을 “특별방역기간” 으로 정해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을 추진하여 비발생 상황을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 수입 건초의 소독·정밀검사, 모든 입국자의 신발 소독(발판 소독조 232개소), 여행객의 휴대 육류 검색 등 실시
- ‘일제소독의 날’(매주 수요일)에 공동방제단(3,880개반)을 동원하여 소독, 시·군별 가상훈련(CPX), 예찰활동 및 교육·홍보

■ **소부루세리병은 단기간 내 근절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사람 감염 예방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 거래 수소 및 농장에서 사육중인 1세 이상 모든 소까지 검사대상 확대
  - \* 현재는 거래 암소, 10두 이상 농장 및 다발지역의 사육소에 대해 검사
- 발생농장 인근 지역(500m이내) 및 역학관련 농장에 대한 검사 의무화
- 사람 감염 실태조사 확대 및 감염자 치료 지원방안 강구
  -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하여 사람 감염실태 조사 대상 확대 및 감염자 치료 지원방안 등 강구
- 농장 감염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 상황 악화시 예방접종 검토
  - \* '07년 농장 감염율은 '06년(2.2%)보다 감소한 2% 이내 달성 목표

■ **돼지콜레라는 예방약 100% 공급 및 혈청검사 실시,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에게 과태료 부과 등 방역대책으로 청정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 예방약 40백만두(34억원) 공급 및 혈청검사 210천두 실시
  - \* 발생건수 : ('03) 72건 → ('04) 10건 → ('05) 5건 → ('06) 2건

■ **'07년부터 매년 150명의 공익수의사가 지자체·가축위생시험소·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배치되어 가축방역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군사·직무교육(3~4월)을 거쳐 현장 배치(5월), 3년 복무
- '09년부터 연간 450명의 공익수의사 운영

■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를 가공·포장단계에서 최종 소비단계인 음식점 단계까지 확대하고 민관 합동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 '07년 구이용 쇠고기(음식점 300㎡이상), '08년부터 쌀에 적용하는 등 음식점원산지 표시제 확대 추진
- 원산지 단속을 위한 명예감시원 정예화 및 합동단속 강화
  - 명예감시원을 정예감시원(3천명), 신고감시원(22천명)으로 구분·운용하고 감시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신설

■ **쌀 의무수입물량 도입에 따른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 부정유통 예방을 위해 수입쌀 단속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수입쌀 입찰정보를 활용하여 전 유통과정을 집중 추적 감시
- 수입쌀 식별능력 제고를 위해 중국산 벼 DNA 마커 51점 개발(상반기)
- Non-GMO 쌀 도입을 위해 3단계 원칙을 마련하여 운영
  - 선적전 수출국 정부기관 확인, 국제검정기관 검사, 국내도착시 식약청 검사 실시 의뢰 등

■ **식물 해외병해충 유입 방지 등 수입농산물 검역을 강화하겠습니다.**

- 유전자합성시스템, 세균검사기 등 첨단 검역장비(61종 525대)를 구입하고 전문 검역인력 확충(18명)

◇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가축분뇨 퇴·액비의 경종작물 시비 확대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축산업으로 발전**

- '13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 10%, 가축분뇨 자원화율 90% 달성

■ **친환경농업 기반을 조성하고 친환경농자재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시·군 단위로 생산·유통 및 관광을 연계한 1,000ha 규모의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06 : 3개소 → '07 : 6개소 추가)
  - 읍·면 단위는 10ha 규모의 친환경농업지구 조성('07 : 59개소 )
- 유기질비료 지원 확대로 화학비료 대체 유도(135만톤, 473억원)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내실화하여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 무항생제축산물인증제 신설 및 인증품 재포장에 대한 인증제 도입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위반행위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의 이력추적제 참여 확대 유도
- 자재선택 편의 제공을 위한 친환경농자재 목록공시제도 도입

■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 농업의 다원적 기능, 친환경농업 중요성 등 초등학생용 친환경 농업 부교재를 제작, 초등학교에 제공(4만부)하고 교육 실시
- 자조금 사업으로 소비촉진 홍보, 품질관리, 시장개척 등(8억원) 추진

## ■ 가축분뇨 자원화 효율성을 증진시켜 해양배출 물량을 감축하겠습니다.

- 우수 자원화 시스템 정보 제공 및 공동자원화 시설 설치 확대
  - '07년 5개소를 시범 설치하고 '08년부터 연간 10개소로 확대
- '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에 대비하여 '07년부터 연간 40만톤 이상 감축하여 전량 육상처리 추진
  - 지자체 감축노력을 평가하여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 자금 차등 지원

## ■ 가축분뇨 퇴·액비 생산·유통 우수 조직을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 농·축협 등 자연순환농업 협약('07 : 30개소)을 추진하고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자금 지원('07 : 160억원, 3년거치 일시상환)
- 살포실적 우수 액비유통센터에 장비 추가 지원('07 : 6개소, 개소당 1억원)

## ■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에 대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이 용이하도록 하위법령 제정
  - 축산농가에 액비화 시설 설치시 전문 유통조직과 살포계약을 체결하면 농경지 확보 의무 면제
- 시·군별 양분 정보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한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시범사업 계획 수립

## ■ 농지법 개정에 따라 경종농가와 연계된 친환경축산 표준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겠습니다.

- 축종, 사육규모,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표준화된 설계도 제작·보급



- ◇ 재해에 안전한 영농기반 구축을 바탕으로 직불제, 재해보험, 자조금 조성 등 가격, 재해, 수급불안에 대응한 소득안정장치 마련

가 직접지불제 확충

■ 농업구조개선 촉진 및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현행 품목별 가격차 보전방식을 보완하는 중장기 직불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밭농업, 과수, 축산까지 포괄하는 직불제 체계화 방안 검토
- 외국 사례 및 농가소득 현황분석 등을 통해 모델 개발('07)
  - 농가소득 파악을 위한 등록 방안 마련후 '09년 시범사업 실시 목표
  - \* 농가등록제 시행후 취미·부업농 등을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대상에서 제외 검토

■ 조건불리 직불제 및 경관보전 직불제 등 기존 직불제가 확대됩니다.

- 조건불리지역 직불은 도서지역 지급대상을 전 도서(제주도 포함)로 확대
  - \* 대상지역/예산규모 : ('06) 119천ha / 331억원 → ('07) 188 / 523
- 경관보전직불은 대상품목과 대상면적을 확대
  - \* 대상품목 : ('06) 유채,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목화, 야생화 → ('07) 연, 자운영 추가
  - \* 대상 면적 : ('06) 470ha(6억원) → ('07) 800ha(10억원)
- 친환경농업직불 지속 확대('06 : 27천ha/141억원 → '07 : 43/175)

■ 바람직한 농업구조 실현을 위해 고령농 은퇴촉진을 위한 조기은퇴 직불제 도입 등 구조조정형 직불제 강화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 **농지은행을 통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 지원요건을 완화(연체금액 5천만원 이상→부채금액 5천만원 이상)
- 경영위기 농가 농지매입 확대('06 : 311ha/422억원 → '07 : 372/566)

■ **'07년 상환도래 예정인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3,389억원)에 대해서도 추가연장 조치를 실시합니다.**

- 원금 10%상환시 5년 분할상환(3%), 그 외는 3년 분할상환(5%)
  - \* '06.12.31 기준, 순지원대상 3조8,438억원 중 3조7,046억원(96%) 신청
  - \* '07.1~6월 신청접수, 12월말까지 대출 실시

■ **농업관련 정책보험(공제)의 대상품목 및 축종을 지속 확대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 보장범위도 확대하겠습니다.**

- 대상 품목/축종 : ('06) 7개/9개 → ('07) 10개/11개
- 품목확대의 제약요건인 기초자료 미비와 민간보험사 참여 기피를 해소하기 위해 시범사업 추진 품목의 국가재보험 보장범위를 확대
- '08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품목(예 : 콩, 감자, 고추 등)에 대한 표준수확량 및 손해평가방식 연구용역 등 실시

■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정책보험을 「농업재해 보험」으로 개편, 운영 효율성과 위험관리 능력을 극대화하겠습니다.**

- 금년부터 농업시설 부문을 포함한 농업 재해보험 확충방안 마련

## 다 안전 영농기반 구축

### ■ 저수지, 양·배수장 등 주요 수리시설을 재해대비 위주로 보수·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개보수 예산의 60%이상 주요시설 집중지원)

- 홍수량 증가로 인한 재해 예방을 위해 아산만 배수갑문 확장(120m→290m) 등 하구둑 구조개선 추진('07 세부설계)

### ■ 상습침수 농경지 119지구(31천ha)에 배수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그중 20지구(3.3천ha)를 준공하겠습니다.(배수개선을 '06 : 71%→'07 : 73%)

- 논에서의 원예작물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개선 4개지구 시범 추진

## 라 선진 농업금융지원 시스템 구축

### ■ 시중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정책자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자금규모, 용자조건, 대출취급의 전문성, 수혜자의 범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개방대상 정책자금 선정
  - \* ('04 ~ '06) RPC운영자금, 농기계구입자금, 축발기금 → ('07 ~ '08) 농축산 경영자금 등 용자사업의 50%이상 → ('10) 전면개방

- 시중은행 취급 확대에 대응하여 정책자금 관리단의 관리범위 확대 추진
  - 관리범위 확대 : (현행) 농특회계 용자금 → (추가) 이차보전자금

### ■ 정책자금의 원활한 대출을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건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농신보 건전성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을 7,357억원('06 : 5,780억원)으로 확대하고, 일선조합이 심사하는 위탁보증 비율 축소
  - \* 직접보증 점유율(건수 기준) : ('05) 2.8% → ('06) 3.3 → ('07P) 10.6

■ '08년부터 채소류 「최저보장가격제도」를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을 공동으로 부담토록 하여 자율적인 생산 조정을 유도하는 「계약 재배안정화사업」으로 전환합니다.

- 시범사업('06 : 무·배추 등 4품목 → '07 : 양파·대파 등 8품목) 결과를 바탕으로 본사업 계획 확정

■ 자조금 조성 품목을 확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 원예는 인삼 등 2개 품목에 대한 신규 자조금단체 결성을 추진, 축산분야는 오리 등 기타 가축의 임의자조금 도입방안 마련
  - 육계 임의자조금을 의무자조금으로 전환('08년 목표)하기 위해 의무자조금 준비 대의원회 개최 및 관리위원 선출
- 영세한 원예자조금의 규모화를 위해 현행 ‘당해년도 거출, 당해년도 소진 원칙’을 적립이 가능한 목적기금으로 제도 개선
  - 자조금 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농안법 시행령 개정
  - \* 원예자조금 발전로드맵: ('07) 자조금의 목적기금화 → ('08) 차등지원체계 구축 → ('10) 회원범위 확대 및 의무자조금 도입
  - \* 원예품목 자조금단체 생산점유비중 : ('04) 15% → ('06) 33 → ('07) 38 → ('13) 68
- 축산자조금은 수납기관 수수료 인상 및 대의원 총수 하향 조정 등 자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 관계기관·단체의견 수렴
  - \* 축산품목 자조금 거출율 : ('04) 68% → ('06) 75 → ('07) 77 → ('13) 89

- ◇ 마을-권역-면소재지 등 정주체계에 따라 농촌지역개발 사업 체계를 정비하여 삶의질 및 지역개발 계획에 따라 추진
- ◇ 농업인 및 농촌주민에 대한 의료·교육·복지 등 지원을 강화

가 체계적인 농촌지역개발 추진

■ 면소재지 및 배후 중심마을에 대해 농촌마을종합개발 136개 권역(사업시행 56, 시행계획 40, 기본계획 40)이 추진됩니다.

- 기본계획 40개 권역 중 4개 권역은 거점면 기능강화를 위한 면소재지 중심마을개발 시범 추진('07 기본계획, '08~'10 사업시행)

■ 농촌 노후 불량주택(5,600동)에 대한 신개축이 지원됩니다.

- 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한 다양한 농촌표준주택 설계도 개발·보급, 농촌주택 사이버 컨설팅 센터 운영 등을 추진

■ 농촌지역개발사업 체계화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이 마련됩니다.

- 오지종합개발과 농촌정주기반확충, 신활력지원과 지역특화사업 등 유사사업을 통합하여 단일사업으로 '08년 예산에 반영
-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농촌주택정비사업은 '07년에 지원조건을 단일화, '08년 이후 지원한도 확대 및 금리 추가인하 검토
  - 지원한도/대출금리 : ('06) 30, 40백만원/3~4% → ('07) 40/3.4%
- 농어촌정비법 개정 등 사업이관에 따른 관련법령 정비 추진

## ■ 건강보험료 지원을 차등화하고 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합니다.

- 농업인 가구에 대해 건강보험료 지원을 소득별 차등(22~50%) 또는 배제하여 형평성 제고('07년중 관계 법령 개정)
  - \* 건강보험료 50% 지원시 연간 평균 경감액 : ('06) 420천원 → ('07) 426
-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등급 상향 조정('06 : 13등급 → '07 : 14등급)
  - \* 연금보험료 연간 1인당 최대 지원액 : ('06) 259천원 → ('07) 280

## ■ 여성농업인의 보육여건 개선과 취약농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영유아 양육비 및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액 인상
  - 만 6세 취학유예아동 및 준농어촌지역 거주 농업인 자녀 신규 지원
    - \* 영유아 양육비 지원 : ('06) 정부보육료의 50%(128천원/월) → ('07) 70%(176.5천원/월)
- 농업인이 농작업 및 교통사고시 농사일을 대행해 주는 '영농도우미' 지원 대상 확대('06 : 13억원 → '07 : 28억원)
  - \* 지원조건 : ('06) 65세미만, 3ha미만 → ('07) 69세이하, 5ha 미만
- 자원봉사자 활용, '가사도우미' 지원대상 확대('06 : 7억원 → '07 : 11억원)
  - \* 지원조건 : ('06) 65세이상 단독·편조손 농가 → ('07) 65세이상 고령가구

## ■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말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는 방문교육도우미 제도 운영('07년 30개 시군 시범 실시, 국고 19억원)
  - 방문 교육도우미 300명 선발, 이주여성 1,800명에게 교육
- 부부교실, 가족캠프, 모범가정 모국방문 지원 및 정착사례집 발간 등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통합 지원

- ◇ 도농교류 및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하여 농촌활력 증진을 도모
- ◇ 농촌지역의 향토자원을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과 연계하여 1·2·3차 산업의 융복합화 추진

가 도농교류 촉진 및 도시민 농촌유치

■ 1사1촌 운동을 내실화하여 국민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 자매결연 사례별 교류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상반기) 실적이 미흡한 사례는 자매결연 사례에서 제외
- 1사1촌 자매결연 시범마을 육성('07년 15개) 및 홍보 추진

■ ‘(가칭)도농교류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4월 국회제출)

- 체험·휴양마을의 음식 제공, 공동숙박 등 특례 마련
- 도시민 현장체험, 초·중등학생들의 농촌체험교육 근거 마련
- 농촌체험 지도사 등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 근거 마련 등

■ 전원마을조성사업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추진중인 55개소는 실태조사 후 추진방식 등 재조정
  - 15개소 추가 착수하고 '08년 사업지구는 지자체 공모방식으로 선정
- 입주자 형태, 지역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개선
  - 전원마을조성주체를 시·군, 한국농촌공사에서 민간으로 확대

## ■ 시·군의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을 신규 지원합니다.

- 도시민 유치를 희망하는 시·군이 ‘도시민 유치대책’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 재원의 일부를 중앙정부가 지원
  - \* 지원프로그램(안) : 도시민 유치홍보, 농촌이주 도시민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봉사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컨설팅 비용 보조 등
- 10개 시·군을 선정(6월)하여 최대 3년간 10억원 내에서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실시
  -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이미 도시민 유치사업을 부분적으로 추진 중인 시·군, 인구 과소화 시·군 등을 대상으로 선정

## ■ 도시민의 농촌정주지원 토털서비스를 지속 보완·발전시키겠습니다.

- 농촌의 교육·복지·문화·인프라 등 생활정보서비스 강화
  - 행정리 단위로 교육·복지·문화, 기초생활시설 정보로 온라인상으로 제공하는 (가칭)「삶의질 서비스맵」 구축(하반기 시범서비스)
  - 포털이용자가 정보 콘텐츠를 구성·발전시키는 ‘이용자 참여형 (UCC, User Created Contents)’서비스 체계 구축
- 전원생활, 주택건축 등 분야별로 전문적인 전화상담, 현장안내 등 오프라인 서비스 개선
  - 농촌정주의향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전원생활교육 지속
  - 바람직한 농촌주택모델 및 농촌마을정비모델 등 홍보·안내를 위해 「미래농촌전원마을 홍보관」 조성·운영



■ **신활력사업, 지역농업클러스터 등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1단계 신활력사업 마무리 및 2단계('08~'10) 사업 준비
  - \* 신활력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의 심사·컨설팅을 위한 “농촌활력지원센터” 설립 검토
-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의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방안 강구
  - 20개 사업단 추진 성과를 평가, 우수 사업단에 인센티브(21억원) 부여
  - 지역농업클러스터를 포함한 지역농산업 혁신방안 마련
- 향토자원의 발굴·산업화 및 농공단지 조성 지속 추진
  - 19개 자원(기본계획 기수립) 사업시행 및 30개 자원('06 선정) 기본계획 수립
  - 금년중 향토자원 관련 제도개선 및 향토자원 30건 추가 발굴
  - 농촌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공단지 조성 지원('07 : 6개소)

■ **농촌체험마을 도시 방문객의 전년대비 15% 증가(1,544천명)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 녹색농촌체험마을(84개소),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4개소) 및 마을사무장 채용 지원(150명) 확대
- 농촌체험활동 중 사고발생에 대비한 보험가입(65개), 전문 컨설팅이 필요한 마을에 전문가 지원(50개) 지속 추진
  - \* 도농교류페스티벌(5.3~6), 초등교사 농촌체험(7~8월), 여름휴가 캠페인(7~8월)
- 농로, 임도 등을 활용한 농촌형 승마모델 정립·보급(상반기)
  - \* 농촌 승마장 설치 지원 : ('06) 4개소 → ('07) 10개소

■ 「**농촌경관지표 적용 → 경관맵 작성 → 경관보전협약 체결** 후 **농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先농촌경관계획-後사업시행’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농촌경관지표, 경관맵 및 경관보전협약체결 활용 매뉴얼 개발
- 매뉴얼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에 시범적용 후 확정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3곳, 전원마을조성사업 1곳에 시범적용
- 지자체에서 일정지역단위로 종합적·계획적인 농촌경관개선이 가능하도록 「농촌경관계획 수립기준」 제정

■ **환경부와 공동으로 최근 5개년 평균 수질기준 초과 72개 농업용 저수지·담수호에 대한 사업 계획을 수립·추진하겠습니다.**

- 농업용수 수질관리 지침을 제정하고, 지구별 상류부 대책과 호소내 대책의 공동 수질개선계획 수립
- 주요 농업용 저수지·담수호 500지점의 수질조사를 실시(분기별) 하고, 수질기준 초과 저수지는 수질개선 사업추진

■ **산성화된 농경지에 살포가 편리한 입상(알갱이)화 된 토양개량제 공급을 확대하고 중금속 오염방지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 가루형태의 개량제를 입상으로 전환 확대('06 : 47% → '07 : 62)
  - \* '07 토양개량제 공급계획 : 401억원(규산 294천톤, 석회 253천톤)
- 중금속 오염우려가 높은 산업단지, 쓰레기매립장 주변 농경지 오염도 조사를 실시, 중금속잔류허용 기준초과 농산물 수매·폐기
  - \* '07 토양오염조사 계획 : 10억원(31개 산업단지, 쓰레기 매립장 주변 농경지)



---

## IV. 2030년 우리 농업·농촌의 모습

---

1. 비전 2030 추진체계

2. 미래 우리 농업·농촌의 모습



비·전

농식품 세계일류, 농촌 Global Top 10

목·표

경쟁력을 갖춘  
전문화된 농업소비자가  
신뢰하는 농식품활력 있고  
쾌적한 농촌세  
부  
과  
제

- 농업 생산·유통 구조혁신
-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
-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 및 수출확대

- 농식품 안전성 강화
- 농식품 친환경·고품질화
- 한국식문화의 세계화

- 농촌의 생활인프라 확충
- 농촌의 경관·환경 개선
- 교육·복지·문화 여건 개선

농 업

농 식품

농 촌

## ■ 규모화·전문화된 농업경영체 중심의 경쟁력있는 농업을 실현하겠습니다.

- 농가인구가 총인구의 3%수준인 선진국형 농업경영구조로 개편
  - \* 총인구 중 농가인구 비율 : ('05) 7.1% → ('10) 6 → ('20) 4 → ('30) 3
- 농업생산은 전문경영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경쟁력있는 농업 실현
  - \* 쌀 전업농 생산 비중 : ('05) 30% → ('10) 41 → ('20) 60 → ('30) 79
- 농가소득은 규모 확대와 직불제 확충 등으로 도시가구소득과 균형 달성
  - \* 1인당 도농간 소득격차 : ('05) 95.2% → ('10) 98 → ('20) 102 → ('30) 105

## ■ 안전하고 다양한 농식품 생산·공급과 건강한 식생활을 유도하여 세계 일류의 한국 식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농식품의 친환경·고품질화로 소비자가 믿고 찾는 우리 농식품
  - \* 농산물 잔류농약 허용기준 적합률 : ('05) 97.7% → ('10) 97.9 → ('20) 98.2 → ('30) 98.5
- 바람직한 식생활 지침개발 및 올바른 식문화 운동 전개를 통한 건강한 식생활 형성으로 국민건강에 기여
- 한국 식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농산물 수출 확대
  - \* 농산식품 수출액 : ('05) 20.7억불 → ('10) 40 → ('20) 70 → ('30) 100

## ■ 도시수준의 교육·복지·문화 서비스를 누릴 수 있고 전통과 문화가 보전되는 살고싶은 농촌을 구현하겠습니다.

-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 공공의료 시설 및 생활인프라 확충
  - \* 상수도 보급률 : ('05) 34.3% → ('10) 60 → ('20) 90 → ('30) 100
  - \* 농촌주민의 삶의질 만족도 : ('05) 37.4% → ('10) 49 → ('20) 55 → ('30) 60
- 농촌경관개선, 농촌체험마을 확대 등을 통해 단순한 도농교류활동이 체류형 농촌관광으로 발전
  - \* 국내관광에서 농촌관광 비중 : ('05) 15% → ('10) 20 → ('20) 40 → ('30) 45

2008년 업무계획

**농어업에 밀물시대를 열겠습니다**

**= 긍정, 신뢰, 희망, 창조 =**

**2008. 3. 18.**

**농림수산식품부**





## 보고 순서

I. 현황과 평가 .....	869
II. 비전과 전략 .....	874
III. 농어업 및 식품산업 혁신방안 .....	877
IV. 농어업인 복지지원 강화 .....	898
V. 조직 융합 및 입법 추진계획 .....	901

< 참고 1 > 주요 세부과제 실천계획

< 참고 2 > 2008년 정부입법 주요내용



# I. 현황과 평가

## 가 국가경제와 농림수산물산업

□ 식품산업(식품제조·외식업)은 총 생산액 100조원, 고용인력 163만명에 이르는 국가경제의 중요산업

○ 농림어업 총 생산액은 WTO 체제 출범 이후 정체

(단위 : 조원, 천명)

구분	농림어업		식품산업	
	생산액	종사자수	생산액	종사자수
'00	37.2	2,243	72.7	1,608
'06	41.7	1,785	99.8	1,629

□ 곡물자급률은 사료곡물 수입증가 등으로 다소 하락하는 추세, 쌀은 소비와 생산이 동시에 감소되어 수급균형 유지

\* 곡물자급률 : ('00) 29.7% → ('06) 28.0

\* 쌀 수급('07) : 수요 5,061천톤, 공급 5,756, 재고 695

◆ 식품산업 육성을 통해 농어업과의 동반성장 및 부가가치 창출 필요

## 나 생산 단계

□ 65세 이상 경영주가 전체의 47%('07)로 영농인력이 고령화

\* 65세 이상 경영주 농가 수(비중) : ('00) 452천호(33%) → ('07) 572(47)

○ 농가당 평균 경지면적은 1.45ha('07)로 영세·소농 구조

□ 축산농가의 전업화·규모화가 과수·쌀 등에 비해 빠르게 진전

\* 돼지 1천두 이상(호수비율/두수비율) : ('90) 0.3%/23.3% → ('06) 27.4/80.0

\* 논 3ha 이상(호수비율/면적비율) : ('90) 1.2%/6.2% → ('06) 5.3/30.0

□ 생산인프라는 안전 영농이 가능한 수준

\* '06년 진흥지역 논 경지정리율 90%, 수리답률 79, 벼농사 기계화율 90

◆ 젊고 유능한 30~40대 영농주체의 발굴·육성 필요

다 가공·유통·판매 단계

□ 품목별 농어가 조직화가 미흡하고 협동조합·농어업법인은 영세

○ 협동조합의 산지농산물 취급비율이 50% 미만('06 : 47%)

○ 농업법인(영농조합·농업회사)의 평균매출액이 17억원 수준,  
매출액 10억원 미만 법인 비율은 67.2%

\* 농업법인 수(영농조합/농업회사) : ('00) 3,852개/1,356개 → ('06) 4,410/898

※ 파프리카, 양돈, 양계 등의 경우, 점차적으로 생산-가공-유통 일관  
처리 시스템을 갖춘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유통채널이 도매시장 위주에서 대형마트·전자상거래 등으로 다변화

\* 대형마트 유통 비중(천톤, %) : ('00) 871(6.5) → ('06) 1,885(14.1)

\* 전자상거래·직거래 비중(천톤, %) : ('00) 1,022(7.7) → ('06) 1,999(14.5)

◆ 지역단위로 「생산-가공-유통」의 주체 육성 및 조직화 필요

## 라 농어촌 현황

### □ 농어촌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8% 수준

\* 농어촌인구(전체인구대비 비율) : ('95) 9,572천명(21.5%) → ('05) 8,764(18.5)

### ○ 88개 군 중 57개 군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 초과(초고령사회)

\* 노령화 지수(65세이상 인구/14세이하 인구)는 농어촌(108.2%)이 도시(36.7%)와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05년 기준)

### □ 도시지역에 비해 노후주택이 많고 상·하수도 등 기초시설 미흡

\* 농촌주택 노후화율(35년 이상 주택 비율, '05) : 15.4%(도시 2.8)

\* 상수도 보급률('05) : 56.9%(도시 98.3), 하수도 보급률 : 35.8%(도시 94.2)

### □ 보육시설 부족, 학생 수 감소 등으로 교육의 질 저하

\* 1,418개 읍·면 중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이 500여개(35% 수준)

### □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이 늘었으나, 농어촌지역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 등 의료 인프라는 아직 부족한 상황

\*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률 : ('00) 22% → ('06) 50

※ 30대 도시민들은 농어촌 이주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교육·문화 등 생활여건 개선을 희망 : 46.3%('06.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교육·복지·문화」 등 생활여건이 갖추어진 정주공간 조성 필요

## 마 | 과거 정책에 대한 평가와 새정부 정책 방향

□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으로 농어업인의 자생적 경영 혁신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부족

⇒ 농어업인·지자체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기 위해 권한과 책임 부여

□ 개방으로 인한 농어가 소득 하락에 대응하여 소득안정 정책에 치중,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노력 부족

⇒ 농어촌에 소득을 창출시키는 ‘돈 버는 농어업 정책’이 농어촌의 복지여건을 개선하는 핵심 요소

□ 생산기반 확충·기계화 등으로 생산성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소비자 선호 및 유통환경 변화로 새로운 수요 창출에 애로

⇒ 농어업의 범위를 식품산업, 수출 등 2, 3차 산업으로 확장하여 농어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

□ 개별 농가 차원의 규모화·전업화로 농업구조 개선에 진전이 있었으나, 좁은 국토면적과 농가 고령화 등 경쟁력 제고에 한계

⇒ 사람·조직·시스템 등 S/W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작지만 내실있는 농어업 강국을 지향

◆ 창조적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농어업에도 경영의 개념을 도입하고, 시장개방에 적극적·공세적으로 대응

## < 네덜란드 농업의 시사점 >

### ◆ 한국농업과의 비교('06)

	네덜란드(A)	한 국(B)	A/B
경지면적 (천ha)	1,899	1,800	1.1배
농 가 수 (천호)	80	1,245	1/16
호당 경지면적 (ha)	23.9	1.45	16
농가소득 (만원)	8,155	3,230	2.5
농산물 수출액 (억불)	582	23	25.3
농산물 수입액 (억불)	336	110	3.1

### ◆ 네덜란드 농업의 성공요인

#### - 규모화·조직화·차별화·기업가정신 -

#### ① (규모화) 생산은 「기업형 가족농」 중심

- 규모화(호당 규모가 우리의 16배), 소수 정예화된 농업경영체제
- 대규모 간척지 장기임대 방식으로 토지비용 절감

#### ② (조직화·차별화) 유통은 「협동조합 기업」이 주도

- Aalsmeer 경매장(회원 5,000여명), Greenery 등 유통회사 주도

#### ③ (기업가 정신 함양) 농업인력 교육 중시

- 농업전문교육기관(PTC+, 지도자 150명)에서 전문인력 양성
- Wageningen 대학을 중심으로 산·학·관·연 네트워크 구축

### ◆ 네덜란드 농업의 성과

- 미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3위의 농산물 수출국(농업 무역흑자로는 세계 2위, 네덜란드 무역 흑자의 44%)
- 화훼류의 경우 세계 시장에서 60% 수준을 점유



## Ⅱ. 비전과 전략

□□ 비전 : 4,800만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성장산업

□□ 목표 : 돈버는 농어업, 살맛나는 농어촌

○ 매출 1천억원 이상 농식품 유통법인 100개 육성

□□ 전략

① 공급 push → 수요 pull 방식으로 정책 전환

- 농수산식품유통법인이 생산자를 이끌어 가는 방식

② 농어업을 2·3차 산업과 융복합화

- 1차산업에 2·3차산업을 접목하여 부가가치 제고 및 수출산업화

③ 농어업인이 주인이 되도록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

- 생산·유통 조직화 실현 및 민간의 인력·자본 활용 유도

□□ 실천과제

농식품 유통혁신	핵심인력 양성	식품산업 육성	규제 완화
·시·군단위 유통회사 ·품목별 국가대표 조직 ·대규모 농어업회사	·30-40대 인력유치 (뉴타운 조성) ·CEO 100명 확보	·식품제조업 활성화 ·외식·한식산업 육성 ·국제곡물가격 상승 대응 ·쌀 가공식품 개발	·농지·산지 규제완화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사례 발굴·개선

조직화·차별화·기업가정신으로 성장 견인

## 〈 정책의 구분 : 창과 방패 〉

◆ 농정의 틀을 ‘돈 버는 농어업’과 ‘살 맛 나는 농어촌’으로 구분

- 돈 버는 농어업 ⇒ 공격적인 ‘창’의 정책 : 농식품 유통회사, 핵심인력 육성, 규제완화 등
- 살 맛 나는 농어촌 ⇒ 방어적인 ‘방패’의 정책 : 직접지불제, 지역사회유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 등

구분	경쟁력 강화정책	생활 지원정책
목표	돈 버는 농어업	살 맛 나는 농어촌
성향	창(공격적 정책)	방패(방어적 정책)
가치	효율성(Efficiency) - 시장경쟁의 촉진	형평성(Equity) - 시장실패의 보완
전략	1. 산업으로서 농식품산업 육성 2. 핵심 경영주체의 육성 3. 규제완화 및 경영효율화	1. 농어가 소득과 경영안정 2. 균형발전 및 지역사회 유지 3.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

## < 돈 버는 농어업과 살 맛 나는 농어촌 재정구분 >

◆ '08 투융자 13.7조원 중 「돈 버는 농어업」 비중 12.7%

- 돈 버는 농어업 : 1.7조원(12.7%)
  - 교육훈련, R&D, 수출확대, 유통혁신 등
- 중간 영역(Mixed area) : 5.7조원(41.2%)
  - 시설·장비 현대화, 생산기반 정비, 영농규모화 등
- 살 맛 나는 농어촌 : 6.3조원(46.1%)
  - 직접지불제, 재해보험, 복지·교육여건 개선 등

⇒ 「돈 버는 농어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할 필요

### 분야별 투융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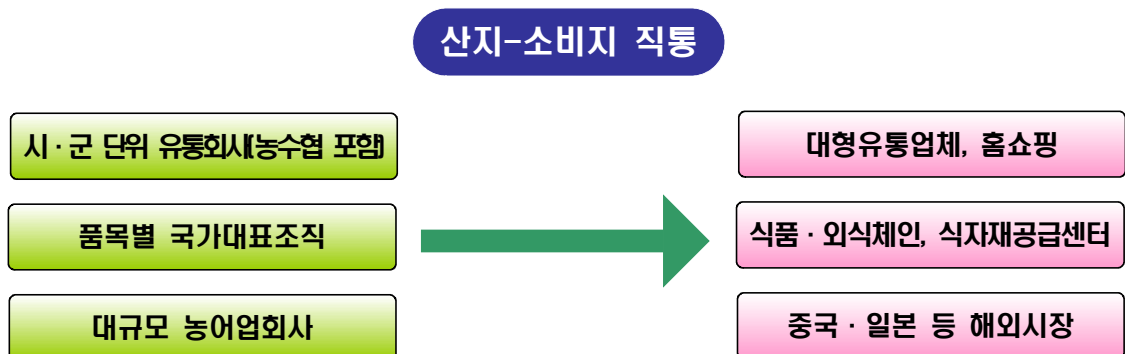
(단위 : 억원, %)

돈 버는 농어업	17,328	12.7	중간 영역	56,353	41.2	살 맛 나는 농어촌	63,010	46.1
맞춤형 농정 추진시스템	95	0.1	영농규모화 사업	3,774	2.8	직접지불제 확충	17,314	12.7
농업인 교육훈련	593	0.4	시설장비 현대화	27,164	19.9	경영안정 강화	10,471	7.6
수출확대 지원	1,037	0.8	농축산물 안전관리	2,084	1.5	복지여건 개선 (경영이양직불 포함)	4,138	3.0
성장동력 확충	5,457	4.0	친환경·고품질 농식품	2,131	1.5	교육여건 개선	493	0.4
농식품 유통혁신	7,673	5.6	건강 식생활 교육홍보	168	0.1	농촌 지역개발	13,151	9.6
식자재·외식산업 육성	80	0.1	생산기반정비	18,530	13.6	산림자원 관리	10,134	7.4
수산식품산업육성	1,758	1.3	어업자원관리	2,107	1.5	감척 및 수산경영안정	4,327	3.2
수산분야 성장동력	635	0.4	어업질서 정착	395	0.3	어촌개발 및 농업인 복지	2,982	2.2

### Ⅲ. 농어업 및 식품산업 혁신방안

#### 1 농식품 유통혁신

- 생산자를 조직화하고 산지 유통을 주도할 마케팅 주체 육성
  - 시·군 단위 유통회사를 설립, 대형유통업체 등과의 거래 교섭 능력 확충
  - 품목별 국가대표조직을 육성,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생산자 스스로 해당 품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
- 소비지에는 기존 유통망 확충과 함께 다양한 직거래 채널 확대
  - 식품·외식업체의 식재료 공동구매 유도(가공·공급센터 운영)
  - B2B·B2C 사이버 거래, On-Line 통합결재시스템 확충
- 대규모 농어업회사를 설립, 효율적인 경영체제를 바탕으로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수출전진기지로 육성



## 가 시·군 단위 유통회사 설립

- ◇ 시·군에 전문경영체제를 갖춘 유통회사 설립
  - 회사설립 여건이 갖춰진 지역 중 경쟁을 통해 선발
- ◇ 유통회사가 시·군 행정주체와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지역농림 수산물 마케팅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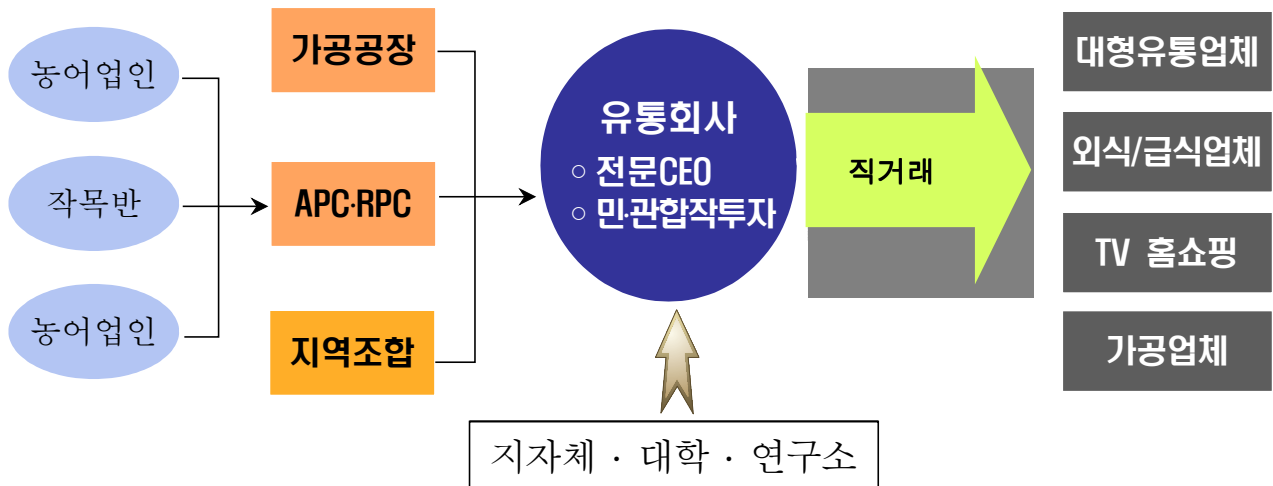
□ 지역생산물의 1/3이상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매출액 1천억원 규모 이상으로 기준 설정

○ 조직 : 전문 CEO중심 책임경영이 가능한 독립법인

- 전문 CEO와 중견 전문인력을 공모, 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

○ 출자 : 농어업인·지자체·농수협·기업 등의 출자 유치로 사업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본(약 100억원) 확충

- 농어업인·농수협·시군이 각각 일정비율(20%)이상 출자 의무화



□ 여건이 갖춰진 시·군의 자발적 참여 유도

- 시장·군수 농정 워크숍을 개최하여 세부계획 확정
- 지자체가 출자금 조달(농어업인 포함), 전문경영인 영입방안 등 계획을 제시하면 「민·관 합동평가단」에서 평가

□ 「농어업 CEO 인재 Pool」에서 전문경영인의 영입 추진

- 대기업 임원 출신 등을 대상으로 농어업 CEO 후보자(100명) 공모
  - CEO 후보자에 대해서는 농업마케팅 등 전문교육 실시
- 유통회사가 인재 Pool에 등록된 CEO영입시 인센티브 지원방안 마련

□ 매년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브랜드 개발, 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비 등 차등 지원

- 가공·상품화시설은 별도 지원없이 기존 APC·RPC 등 활용
- 판매전문조직으로 특화하여 기존 조직과 경합문제 해결

\* 고속도로 휴게소에 유통회사 판매장(SSM) 설치 추진(국토해양부 협의중)

	향후 20일	상반기	하반기
실천계획	·T/F 및 자문단 구성 (3.20)	·유통회사 세부계획 확정 (4.30) ·CEO 교육기관 공모(5.31)	·유통회사 추진계획 공모(8.31) ·대상 시군확정(9.30) ·CEO 후보자 선정(9.30) ·CEO 후보자 교육(12.31)

## 나 품목별 국가 대표조직 육성

◇ 품목별 대표조직이 주인이 되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품목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역량 강화

□ 쌀, 한우, 돼지, 사과, 감귤, 넙치 등 생산액이 3,000억원 이상인 품목을 중심으로 전국 대표조직 구성 유도

- 역할 : 수급조절, 국내외 시장조사 및 시장개척, R&D, 교육훈련 등
- 정부·농수협·전문가 등 전담지원팀을 구성, 기술·마케팅을 지원하고 조직화 정도를 보아가며 수급조절 등 권한이양
- ※ 조직화 정도가 높은 감귤·양돈·넙치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

◆ 미국 Sunkist 연합회 : 생산자협회를 설립, 'Sunkist'라는 공동상표로 전세계 마케팅  
\* 6천여명의 조합원으로 '04년 사업실적은 총 9.8억달러

□ 단계별 품목조직 발전방향(안)

1단계 : 조직화정도에 따라 R&D 과제선정, 자조금 조성 등의 권한과 책임을 대표조직에 부여

\* 정부역할 : 사업자 추천 등의 권한과 책임을 단계적 이양

2단계 : 품목조직 스스로 수급조절, 시장조사, 브랜드 개발 등의 당면문제 해결

\* 정부역할 : 자금집행권 등 권한의 대폭이양

실천계획	향후 20일	상반기	하반기
	·조직 현황 파악(3.30)	·대표조직 육성 세부계획 마련(6.30)	·법인 설립방안 마련(9.30) ·법인 설립(12.31)

## 다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

◇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농어업회사를 육성, 농식품 수출의 전진기지로 활용

□ 대규모 생산·가공·유통을 통해 농어업을 2·3차 산업으로 확장하는 모델 창출

○ 생산, 가공, 유통 및 연구시설 등이 결집된 농업 Complex 형태

○ 농식품 기업과 농어업인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를 설립·운영

- 펀드 방식을 활용하여 외부자본도 적극 유치

○ 농지는 우선 간척지 장기 임대 방식으로 확보(300~500ha 규모)

- 외해 양식산업을 운영하는 대규모 회사도 설립 추진

□ 정부는 간척지 임대, 기반시설 등 인프라 구축 지원

○ 간척농지 장기임대(30~50년)

○ 경지정리, 용수로 개발 등 인프라 구축

○ 참여 농업회사에 대한 시설자금 융자 등

□ 금년 상반기에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개최

실	향후 20일	상반기	하반기
천			
계	·민·관 전문가 T/F 구성(3.31)	·시범사업 계획 수립(6.30) ·농어촌정비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방안 수립(6.30)	·민간기업 투자 설명회 개최(9.30)
획			·회사 설립(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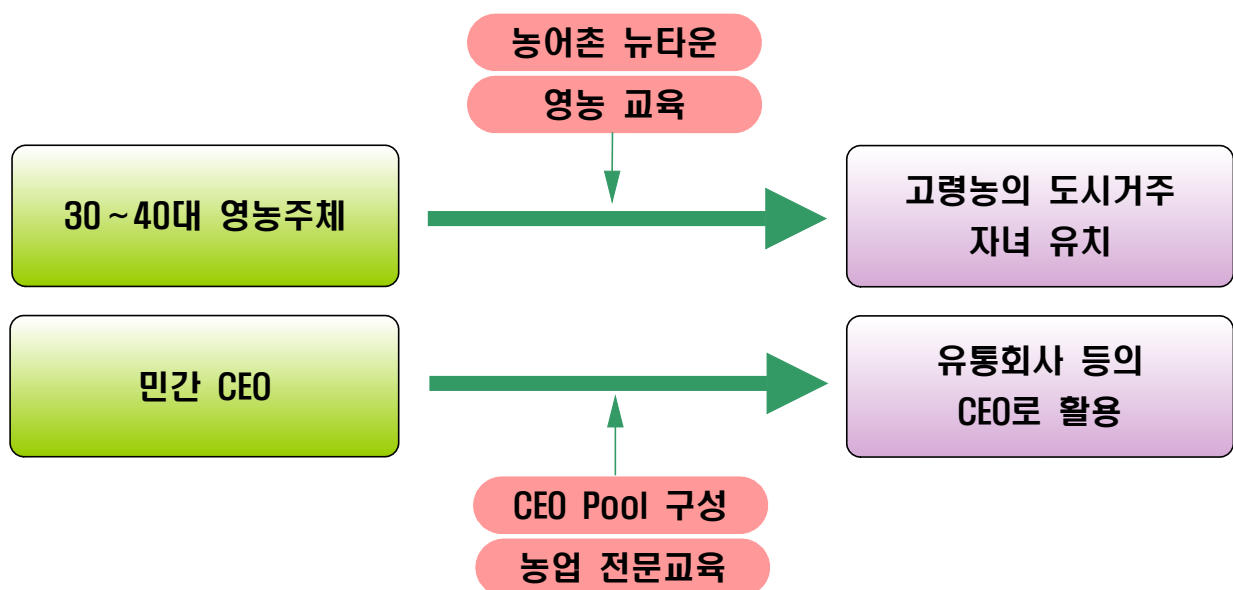


## 2

## 핵심인력 양성

- ◇ 농어업·농어촌의 성장을 주도할 30~40대의 젊은 인력 양성
- ◇ 고수의 농어업 실현을 위한 유통·가공분야 전문인재 영입

- 30~40대 인력이 농촌에 거주를 꺼리는 문제를 One-Stop 해결
  - 뉴타운 조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양질의 자녀 교육여건, 교우관계 등 해결
  - 별도의 교육과정, 맞춤형 지원으로 조기 정착 유도
- 타산업 분야 CEO를 농어업 부문에 유치하여 경영혁신 유도
  - 농업전문 교육과정 이수 후 지역 농수산물 마케팅 주체로 활용



## 가 30~40대 농업 인력 확보

◇ 고령 농어업인의 도시거주 30~40대 자녀를 농어촌으로 유치하여 지역 농산업의 핵심 인력으로 성장토록 지원

- 도시보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양질의 자녀교육 여건 조성
- 개인별 영농계획에 맞는 맞춤형 교육 및 지원 실시

□ 일정 수준 이상의 생산기반이 갖추어진 고령 농어업인의 도시거주 30~40대 자녀를 농어촌 지역에 유치

- 귀향한 자녀들이 주거환경과 교육여건이 좋은 일정 지역에 모여 살도록 농어촌 뉴타운 조성
- 농어촌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사업을 통합·연계함으로써 기존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시너지 효과 도모

□ 경영승계 의사가 있는 젊은 출향자녀를 시장·군수 주도 하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모집

- 수요가 확인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09년 10개소)
-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계획 중 일부를 활용, 100~300세대 규모의 전원형 임대주택 단지로 조성

\* 입주자격, 공급면적 등은 농어촌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

- 개인별 영농·영어계획에 맞는 맞춤형 생산기술 및 경영기법을 지도하고 경영에 필요한 자금·토지·컨설팅 종합 지원
  - 이론·실습·해외연수를 연계한 분야별·발전단계별 종합 교육 실시(네덜란드 등 선진 사례 벤치마킹)
  - 선도 농어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규 영농창업자금, 경영 개선자금 등 단계적 지원 실시
    - 선도 농어가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 영농 애로사항 해결 지원
- 영유아 보육에서 대학졸업까지 자녀들의 고품질 교육환경 조성
  - 뉴타운 지역에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설치하고 영유아 양육비 지원
  - 기숙형 공립고 등을 유치하여 질 높은 공교육 환경을 제공
    - ‘10년까지 150개 기숙형 공립고 선정(교육과학기술부)
    - \* 기숙사 및 도서관·어학실 등 시설 확충, 원어민 강사 배치 등
  - 대입 특별전형 확대와 지역할당제 등의 방식으로 농어촌 지역 학생의 대학진학 기회 확대

	향후 20일	상반기	하반기
실천계획	·국토해양부와 공동TF 구성(3.20)	·추진계획 마련(4.15)	·시·군 공모 추진(8.31) ·법령 제·개정 및 예산 확보(12.31)

## 나 마케팅 CEO 100명 확보

- ◇ 타 산업분야 임원출신을 선발, 축적된 마케팅·경영 노하우를 빠르게 접목시켜 농업마케팅 혁신의 새 바람 확산
  - 선진 농업현장 방문 등 전문교육을 지원하여 농어업 CEO로 육성
  - 시·군 유통회사, 품목대표조직 등의 전문 CEO로 영입

□ 타 분야 임원급 출신 공모·선발('08년 50명, '09년까지 100명)

- 식품제조업·유통업·서비스업 분야 임원급 이상 경력자 우대

□ CEO 후보자의 농어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집중적인 「농어업 CEO MBA 교육」 기회 부여

- 농산업 현황, 농어가와의 갈등관리, 국내외 선진지 방문 등

□ 선발된 농어업 CEO 인재 Pool 정보를 담은 농어업 CEO 정보망을 구축, CEO 후보자와 업체간 정보교류의 장 마련

- 고용 전까지 CEO 후보자의 경영·마케팅 자문 기회 등 알선

실천계획	향후 20일	상반기	하반기
	·CEO 영입수요조사(3.31)	·CEO육성계획 확정(4.30) ·교육기관 공모(5.31)	·후보자 선정(9.30) ·정보망 구축(9.30) ·후보자 교육 완료(12.31)

## 〈 시장·군수 및 대형유통업체와 파트너십 구축 〉

### ◆ 시장·군수가 지방농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

#### ◦ 장관과 시장·군수가 함께하는 농정 워크숍 개최(4.16 ~ 4.30)

- 4월 중 125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워크숍 개최

\* 전국 165개 시·군 중 농가인구/전체인구 비중이 10% 이상인 지역

- 시·군 단위 유통회사, 농어촌 뉴타운 조성방안 등 토론

#### ◦ 장관과 시장·군수가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쌍방향 화상대화 채널 구축(3.24 개통)

※ 농림수산식품부 직원의 현장경험을 활성화하여 실용적이고 창조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분위기 조성

### ◆ 산지·소비자 상생공동협약 선포

#### ◦ 내용 : 농어업인 대표와 소비자 대표가 상호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 소비자 : 우리농산물 안정적 구매, 홍보 및 브랜드 개발

- 산지 : 소비자 수요에 맞는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공급

- 정부 : 상호협약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지원 등

#### ◦ 일시 및 장소 : '08. 3. 24(월), aT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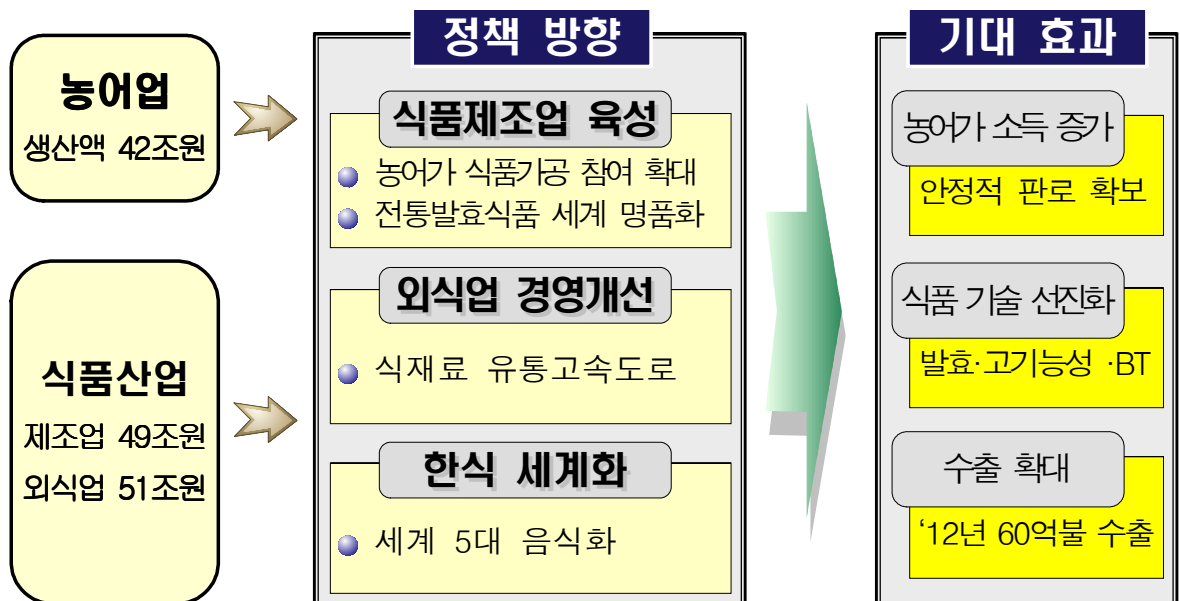
#### ◦ 참석 : 대형유통업체 및 외식업체 등 소비자 유통주체(50여명), 농협 조합장 등 산지대표(50여명), 정부대표

3

식품산업 육성

-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융·복합화로 고부가가치 실현
  - 「전통·발효식품」을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명품으로 육성
- 농수산물의 최대 소비처인 외식산업의 경영 효율화 지원
  - 식재료 공급체계 혁신으로 외식업체 경영비 절감
- 「韓食 세계화」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및 국가 이미지 제고
  - 한식의 표준화·글로벌화 기반을 확립하여 세계 5대 음식화 추진
- ‘12년까지 60억불 농식품 수출 목표 달성
  - 농식품 수출에 해외공관 적극 활용(LA, 오사카, 상하이 등 20개소)

<식품산업 육성 추진체계 및 효과>



## 가 식품제조업 활성화

- ◇ 전통·발효식품 국제화, 식품안전시설 확충 및 식품 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식품제조업을 활성화
- 국가 식품클러스터와 시·군 단위 클러스터를 병행 추진

### □ 「6대 전통·발효식품」을 세계 명품으로 육성

- 고추장·된장·간장·김치·천일염·젓갈의 생리 활성화·질병예방·건강기능성 등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규명
  - 세계 시장을 겨냥한 신상품 개발, 품질개선 등 지원
  - \* 순창 고추장연구소는 영국 켐덴연구소와 유럽시장조사·상품개발 공동추진
- 고추장·된장의 국제식품규격 채택 추진('11년 CODEX 채택 목표)

### □ 세계적 식품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식품 R&D 허브로서의 「국가 식품클러스터」를 전복에 조성(총 사업비 6,300억원 추정)

- R&D·생산·유통·수출까지 일관 추진체계를 형성
  - 국내외 식품기업, 연구소, 연구기관 등으로 식품전문단지 조성
- 입지선정 등 기본계획을 수립('08.8), '12년까지 단지조성
  - 민관 합동 「국가 식품클러스터 추진단」 구성(4.7)

### □ 「1시·군 1특산식품 클러스터」 140개 조성

- 생산자, 가공·판매업자, 연구·지원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축
  - \* '08년 중 시·군 특성을 살린 모델 개발 및 클러스터 추진단 구성

- ◆ **일본** : '05년부터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 현재 **48개소** 운영('08.1)
- ◆ **순창 장류 클러스터** : 식품클러스터 초기 형성단계
  - 고추콩 계약재배 확대 : ('04) 6업체, 31농가, 45백만원 → ('06) 27, 543, 10억원

□ R&D 투자 확대 및 민간자본 유입 촉진

- **미래 성장형 핵심 식품기술**(발효식품, 고기능성, 친환경, 포장, BT·NT)에 R&D 집중 투자
  - 기술개발 수요조사, 컨설팅, 상용화·보급 담당조직 신설(한식연)
  - \* 농림 R&D 중 식품분야 투자 규모 확대('09 : 200억원 → '12 : 400)
- **농업관련 펀드 투자대상을 식품기업 등으로 확대·다각화**
  - 농업전문펀드·농협사모펀드를 '07년 600억원에서 '12년까지 2,300억원으로 확대

□ 농어가 소규모 식품가공·판매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 농어업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식품제조판매업**」을 별도로 신설, **시설기준 완화 추진**(현재는 일반 식품업체와 동일기준 적용)
- **중소식품 및 OEM 업체 등에 시설현대화 지원 확대**
  - ('08) 용자 150억원 → ('12) 190

	향후 20일	상반기	하반기
실천계획	·국가 식품클러스터 사업 추진단 구성(4.7)	·식품산업발전대책 확정(6.20) ·식품정책 조직 정비(6.28) ·식품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제정(6.28)	·농어가 식품제조·판매 규제완화(7.31) ·국가 식품클러스터 기본 계획 수립(8.31) ·'09 지역식품클러스터 대상 시군 선정(12.20)



## 나 외식산업 육성 및 한식[韓食] 세계화

- ◇ 식재료 가공시설 운영·직거래 확대 등으로 외식업체 경영 개선 및 국산 농수산물 소비 촉진
- ◇ 조리법·명칭 표준화, 해외 한식당 인증제 등을 통해 한식의 세계 5대 음식화 구현

### □ 외식산업의 현대화 및 국내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

#### ○ 식재료 계약생산 및 산지 직배송 확대

- ‘식재료 중개센터’ 설치(6.30), 계약생산자금 융자지원

\* 외식기업 롯데리아와 대관령원에농협은 가공채소의 직공급을 통해 식재료 원가 절감 및 농가의 안정적 소득원 확보

#### ○ 산지 식재료 가공시설, 집중조리시설(CK) 등 설치 운영

- '08년 신선편이 농산물 가공시설 5개소(100억원 융자)를 시범 설치 하고, '09년부터 주요권역별·거점도시별 확대

\* 일반 외식업체의 프라임 코스트(식재료비+인건비)는 65~70% 수준이나, CK를 갖춘 선도 외식기업은 45~50% 수준

#### ○ 식자재 이용현황·경영여건 등의 실태조사 및 관련정보를 DB화하여 업계에 제공

\* '07년부터 추진 중인 식품외식정보 조사·분석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

□ 표준화·메뉴개발 등 「한식의 세계 5대 음식화」 토대 마련

- 대표 한식 300종의 조리법·명칭 표준화 및 국가별·지역별 대표 상차림·메뉴를 개발하여 대내외 홍보·보급
- 우수 한식 교육기관 2~3개를 지정하여 국제 교육기관으로 육성
  - \* 프랑스 ‘르꼬르동 블루’ 아카데미 : 15개국, 26개 학교 개설(연 2만명 교육)

□ 해외 한식당 인증제 도입 및 해외진출 지원

- 한식당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식당 인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
  - 실태조사 : 일본('07 완료), 미국·중국('08), EU·동남아('09)
    - \* 태국은 해외 자국 식당 인증제를 통하여 국산 식자재 연 60억불 매출 (태국음식 세계화 프로젝트 ‘Kitchen of the World’를 '01부터 추진)
- 해외 진출 한식업체에 정보 및 금융지원 검토
  - \* 국내 외식기업 ‘제너시스BBQ’는 38개국, 46개 법인, 300여 점포 운영
- 「한식 세계화 선포식」 개최(9.3) 등 다각적 홍보 추진

	향후 20일	상반기	하반기
실천계획	·한식 세계화 포럼 구성 (4.4)	·‘식재료 중개센터’ 설치 (6.30)	·조리 아카데미 모델 개발(7.31) ·한식 세계화 선포식(9.3)

## 〈 Global Food Festival 개최 〉

### ◆ 목적 : 「국민과 함께 하는 농림수산물식품산업」 선포

- 4,800만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성장산업으로서 식품산업의 본격 육성 선언
- 농림수산물식품부 출범이후 6개월간의 정책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발표, 정부의 농식품산업 정책의지를 대내외 천명

### ◆ 일시 : 2008. 9. 1 ~ 7

### ◆ 행사성격 : 온 국민과 함께하는 식품축제 한마당

#### <주요행사(예시)>

- 우수농산물, 명인인증식품, 민속주, 발효식품 등 전시
- 식품가공업체, 프랜차이즈 업체, 외식업체 소개 및 상담
- 식품관련 정책홍보(한식세계화, HACCP, 이력추적시스템, GAP 등)
- 지역·해외식품 전시행사와 연계
- 해외한식당 경영자, 재외공관 조리사 및 수입업체 초청행사

## 다 국제곡물가격 상승 대응

- ◇ 단기적으로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구입 부담을 완화 하면서, 청보리·밀 등 국내생산 확대 추진
- 장기적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 안정적 곡물확보능력 강화

### < 가격 동향 >

- 국제곡물가격은 '07부터 급상승, 당분간 상승추세 유지 전망
  - \* '06/'07 평균대비 밀은 141%, 옥수수는 56%, 대두는 91% 상승('08.3.10 기준)
- 에너지용 수요 증가와 기상이변으로 인한 공급 감소가 원인
  - \* 세계 곡물재고율(14.7%)은 '75/'76년 이래 최저 수준
- 높은 곡물 해외의존도(72%)로 인해 축산물 생산비 및 소비자의 식품구입비 부담 증가 우려
  - \* 배합사료 가격인상('07년 26%)으로 축산농가 경영비 1조 4천억원 증가

### < 대응 방안 >

- 사료구매자금 1조원 특별 지원(연리 3%, 1년 일시상환)
  - 농협자금으로 우선 지원하고 정부는 일반대출 금리와의 차액을 축산발전기금에서 이차 보전
  - 담보력이 미약한 농가의 원활한 대출을 위해 농신보 특례 보증(간이신용조사) 추진
    - \* 특례보증 : 일반 축산농가(한우·젓소 등) 5천만원, 양돈농가 1억원

□ 겨울철 노는 땅을 최대한 활용, 청보리·밀 등 재배 확대

○ 청보리 등 조사료 재배면적을 24만ha까지 조기('12)에 확대

- \* 조사료 재배면적 : ('07) 155천ha → ('12) 240 (청보리 100천ha 포함)
- 조사료 급여 비율을 45%에서 60%까지 확대하여 배합사료 수입 대체 및 쇠고기 품질 개선
- \* 조사료 24만ha 재배시 소 배합사료 140만톤 대체효과(5,000억원의 수입 대체 및 2,000억원 사육비용 절감)

○ 국제가격 상승으로 국내외 가격차가 줄어든 밀 재배면적 확대 추진

- \* 밀의 국내외 가격차 : ('02) 4.4배 → ('04) 3.8 → ('07) 1.7
- \* 재배면적(생산량) : ('07) 1,928ha (7천톤) → ('12) 14,300 (50)

□ 해외농업자원을 개발하여 안정적 국제곡물 확보 능력 제고

○ 국내 곡물수입업체들의 수입선 다변화, 공동·장기 구매 및 선물거래 활용 등 구매방법 다양화 유도

○ 민간기업의 해외 농업자원 개발 지원

- 농지관리기금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 \* 금년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 추진

실천계획	향후 20일	상반기	하반기
	·밀 생산 확대 민간·정부 협의체 구축(3.31)	·밀 등 곡물과 사료원료의 할당관세 인하(4.30)	·농지기금 지원 방안 마련(12.31)

## 라 쌀 가공식품 시장 확대

◇ 밀가루 식품을 대체할 수 있도록 쌀 가공식품 시장 확대

- 수입쌀 저가공급을 통해 우선 쌀국수 시장 수요를 창출한 후 국산 쌀로 범위를 확대

□ 의무 수입되는 쌀(MMA)을 쌀면(국수·라면)용으로 밀가루가격 수준으로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

- 쌀함량이 높은 제품과 웰빙 수요를 겨냥한 생면 등의 개발 지원

◆ 한국식품연구원에서 '08.2월, 밀가루가 첨가되지 않은 쌀국수 개발 (쌀 80% 이상, 녹차 등 기능성 소재 첨가)

□ 연구기관·업체간 기술교류 확대 및 가공업체 시설개선 지원

- 쌀 가공업체(제분, 제조 등)의 시설현대화 등 지원 검토

◆ 대선제분에서는 국산쌀을 이용한 쌀가루 제분 및 무균포장떡 등 가공 식품 제조공장을 건설 중('08.6월 준공 예정, 연간 24천톤 처리 규모)

□ 국산 쌀 제품은 기능성·고급 상품으로 차별화

- 가공용 다수확 품종을 개발, 원가 절감 추진

\* 한아름(753kg/10a), 다산1호(718kg) 등은 일반쌀에 비해 1.5배 이상 수확 가능

	향후 20일	상반기	하반기
실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쌀가공 산업화 추진 T/F 구성(3.20)</li> <li>·쌀면 수요조사 및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4.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쌀면 제조업체 간담회 (4.30)</li> <li>·쌀 저가공급 시범사업 실시(6.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쌀 가공식품 종합 지원 방안 마련(8.31)</li> </ul>

- ◇ '09년까지 총 84건의 규제를 완화, 금년에는 48건 개선 추진
  - \* 전체 농림수산 분야 규제 400건(46개 법률) 중 규제개혁 대상 100건
  - 특히,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농지·산지 규제를 적극 완화
  -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사례도 발굴하여 개선

#### □ 농지 소유거래규제를 완화하고 전용허가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 한계농지의 소유 및 거래제한을 철폐하고, 한계농지의 전용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 \* 한계농지는 진흥지역 밖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 또는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ha미만인 농지로서 시장·군수가 고시(전국에 약 20만6천ha로 추정)
- 자연녹지·계획관리 지역의 농지·산지 전용허가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및 이양
  - \* 현재 농지 20ha, 산지 200ha 초과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산림청장이 허가
- 농업회사법인 대표이사의 농업인 조건을 폐지하고, 업무집행 이사 중 농업인 비율 완화(1/2 → 1/4) 등 농지소유요건 완화
- 비농업인 상속농지 소유한도(3ha) 폐지(농지은행 위탁조건)

#### □ 농업진흥지역 관리제도 개선 및 농업보호구역 조정

- 진흥지역 해제시 대체지정 의무화 제도 폐지(3.5일 시행)

- 농업용수 보호 목적으로 지정된 농업보호구역 중 수질오염 우려가 미미한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약 62천ha)
- 농림수산식품부 협의를 거쳐 지정된 택지·산업 단지 안에서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경우 장관 승인절차 폐지
- 농업진흥지역에 설치 가능한 가공시설 면적 확대(3천→1만㎡)

□ **준보전산지 확대 및 산지전용 허가제도 개선**

- 산지구분타당성조사로 개발가능한 ‘준보전산지’ 확대(147만ha → 157)
  - \* 연간 9천ha 산지전용을 감안하면 12년간 개발가능 물량
- 보전산지 내 허용되는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 확대(27개→57)

□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사례를 발굴하여 개선**

- 비농업인의 농업회사법인 출자 한도 제한(3/4) 완화
- 정책사업 지원시 민간기업과 협동조합·영농법인 등 생산자 조직간 차별적 지원 폐지 또는 완화

	향후 20일	상반기	하반기
실천계획	·준보전산지 확대를 위한 산지구분조정지침 마련(3.31)	·경쟁제한 사례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6.30) ·농지법 시행령 개정(6.30) ·산지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6.30)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6.30)	·준보전산지 확대를 위한 산지구분 완료(10.31) ·농지법 개정안 국회제출(12.31) ·농업보호구역 보완정비(12.31)



## IV. 농어업인 복지지원 강화

### 1 농어업인 소득 안정

◇ 농어가 유형별 특성에 따라 실효성 있는 직불제 신규 도입 및 기존사업 정비로 농어가 소득 안전망 확충

-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로 (가칭)「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WTO 허용보조 유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익형 직불제 확대
  - 경관보전직불제 지원대상을 경관작물 재배에서 농촌환경·문화경관의 종합적 보전활동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
  - 배합사료 직불제 확대 및 조건불리지역 수산보전제 도입
- 고령 농업인 생활안정보장을 통한 조기은퇴 촉진 방안 추진
  - 고령농업인에 대한 「경영이양직불제」 지원 확대 개편
    - 대상농지를 진흥지역 밖까지 확대하고 지급기간 및 지급단가 인상
  - 농지·주택 등을 담보로 한 농촌형 역모기지론 도입방안 마련

실천계획	향후 20일	상반기	하반기
		·경관보전직불제 개편방안 마련(6.30)	·농촌형 역모기지론 도입방안 마련(12.31)

◇ 여성·고령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교육비 부담 경감 등 농어촌 복지·교육여건 개선

### □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건강보험·국민연금·재해공제 지원 확대

○ 농어업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50%를 지원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율을 차등 또는 배제하여 실질적 형평성 제고

- 경감율 : ('07) 50% → ('08) 0~50

○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 소득금액을 상향 조정

- 기준 소득금액 : ('07) 52만원 → ('08) 62

- 1인당 연간보험료 최대 지원액 : ('07) 280천원 → ('08) 335

○ 사고시 농업인의 재해공제 보상수준을 '13년까지 산재보험 수준(사망시 90백만원)으로 확대

- 사망시 보상수준 : ('07) 35백만원 → ('08) 45

### □ 농어업인의 보육여건 개선 및 취약 농어가 복지 지원 확대

○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 조손가정을 양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

\* 호적상 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1인이 없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농어가

-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와 여성농어업인 일손돕기를 통합·운영

\* 시설이용 : 법정저소득층 지원단가의 70%, 시설미이용 : 35%

○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중단 사유가 발생시 농사일을 대행해주는 ‘영농도우미’ 지원 확대('07 : 28억원 → '08 : 47억원)

\* 지원사유 추가 : ('07) 사고 → ('08) 사고, 질병(2주 이상 입원시)

○ 지역의 자원봉사자를 활용, 고령취약 농어가의 가사일을 돕는 ‘가사도우미’ 지원

\* 지원대상 : 65세이상 고령가구, 65세미만 사고발생 가구

#### □ 농어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

○ 농어촌지역 거주 학부모의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 무이자 융자

- 지원규모 : 26천명, 816억원

○ 농수산 계열 대학생 중 졸업 후 영농·영어를 희망하는 자 및 농어업인의 대학생 자녀 중 성적우수자에게 장학금 지원(65억원)

- 영농·영어 희망 대학생 장학금(2,400명, 120만원/학기)

- 농어업인 대학생 자녀 중 성적우수자(4,000명, 100만원/학기)

#### □ 농어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시 소득 및 재산평가 방법 개선방안 마련

○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직불제 유형 확대, 휴·폐경 농지의 재산 환산 제외 등 검토

## V. 조직 융합 및 입법 추진계획

### 1 조직 융합방안

#### □ 농업과 수산의 화학적 융합을 위한 조직·인사 운영

- 통합 초기단계에는 조직안정을 위해 기존 인력 중심으로 배치 하되, 농업분야와 수산분야를 1/3수준 교차 배치
  - 특히, 농수산물 유통·식품산업 등 양 부문간 유사한 기능은 교차 배치 강화
- 사무실 재배치는 3.15~16일 마무리, 3월말까지 모든 인사 완료
  - 희망부서 지원을 받아 직상급자가 함께 일할 사람을 뽑는 인사방식

#### □ 초과인력(279명)은 정규조직에 준해서 운영

- 「규제개혁 T/F」, 「현장점검 T/F(농어업인 단체 파견 포함)」, 「유류사고피해 지원 T/F」 등에 초과인력 우선 활용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6.28)으로 본격적인 식품정책을 추진할 때까지 「식품정책 T/F」 한시 운영

#### □ 조직통합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문화 및 분위기 조성 확산

- 직급별 워크숍을 개최, 농림수산식품부 비전·미션 공유
  - 타분야 직원 파악 및 상호 교류의 장 제공
- 상호 업무영역의 이해촉진을 위한 공동 현장체험학습 실시
  - 농수산 분야 직원 20~30명 단위 현장체험 및 간담회 실시

◇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입법수요를 반영하여 총 28개 법률 제·개정 추진(제정 6건, 전부개정 5건, 일부개정 17건)

○ 주요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계획 수립

□ 농어업 경쟁력 강화, 농어업인 소득·경영안정시스템 구축 등 공약사항 및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입법수요 반영

○ 농가의 악성부채 해소를 위한 「(가칭)부채대책특별법」 제정

○ 농가등록제 및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접지불제 도입을 위한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농협의 유통·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 농기계임대 활성화를 위한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

□ 농지, 농어촌개발, 양곡관리 등 규제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

○ 농지구제 완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 임업진흥권역 대체 지정제도 폐지 등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 마을정비구역 행위제한 완화 등 농어촌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개정

○ 양곡가공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 양곡가공업 활성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참고1**

**주요 세부과제 실천계획**

		실 천 내 용	실천일정
<b>&lt; 농식품 유통혁신 &gt;</b>			
<b>향후 20일</b>		·시·군 단위 유통회사 설립 T/F 및 자문단 구성 ·품목별 조직 현황 파악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을 위한 민·관 전문가 T/F 구성	3.20까지 3.31까지 3.31까지
<b>상반기</b>		·시·군 단위 유통회사 세부계획 확정 ·유통회사 CEO 교육기관 공모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 세부계획 마련 ·대규모 농어업회사 시범사업 계획 수립 ·농어촌정비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 수립	4.30까지 5.31까지 6.30까지 6.30까지 6.30까지
<b>하반기</b>		·유통회사 추진계획 공모 ·유통회사 설립대상 시군 확정 및 CEO 후보자 선정 ·품목별 대표조직 법인 설립방안 마련 ·대규모 농어업회사 설립 관련 민간기업 투자 설명회 개최 ·유통회사 CEO 후보자 교육 ·대규모 농어업회사 설립 ·품목별 대표조직 법인 설립	8.31까지 9.30까지 9.30까지 9.30까지 12.31까지 12.31까지 12.31까지
<b>&lt; 핵심인력 양성 &gt;</b>			
<b>향후 20일</b>		·국토해양부와 농어촌 뉴타운 공동T/F 구성 ·농업CEO 영입 수요조사	3.20까지 3.31까지
<b>상반기</b>		·농어촌 뉴타운 조성 추진계획 마련 ·농업CEO 육성계획 확정 ·농업CEO 교육기관 공모	4.15까지 4.30까지 5.31까지
<b>하반기</b>		·농어촌 뉴타운 조성 대상 시·군 공모 ·농업CEO 후보자 선정 및 정보망 구축 ·농업CEO 후보자 교육 완료 ·농어촌 뉴타운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예산 확보	8.31까지 9.30까지 12.31까지 12.31까지
<b>&lt; 식품산업 육성 &gt;</b>			
<b>향후 20일</b>		·쌀가공 산업화 추진 T/F 구성 ·밀 생산 확대 민간·정부 협의체 구축 ·한식 세계화 포럼 구성 ·국가 식품클러스터 사업 추진단 구성 ·쌀면 수요조사 및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3.20까지 3.31까지 4.4까지 4.7까지 4.7까지

	실 천 내 용	실천일정
상반기	·밀 등 곡물과 사료원료의 할당관세 인하	4.30까지
	·쌀면 제조업계 간담회	4.30까지
	·쌀 저가공급 시범사업 실시	6.1 ~
	·식품산업발전대책 확정	6.20까지
	·식품정책 조직 정비 및 식품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제정	6.28까지
	·식재료 중개센터 설치	6.30까지
하반기	·농어가 식품제조·판매 규제완화	7.31까지
	·조리 아카데미 모델 개발	7.31까지
	·국가 식품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	8.31까지
	·쌀 가공식품 종합 지원방안 마련	8.31까지
	·한식 세계화 선포식	9.3
	·'09 지역식품클러스터 대상 시군 선정	12.20까지
	·해외농업자원 개발을 위한 농지기금 지원방안 마련	12.31까지

### < 규제완화 추진 >

향후 20일	·준보전산지 확대를 위한 산지구분조정지침 마련	3.31까지
상반기	·농지법 시행령 개정	6.30까지
	·산지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6.30까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6.30까지
	·공정한 경쟁제한사례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	6.30까지
하반기	·준보전산지 확대를 위한 산지구분 완료	10.31까지
	·농지법 개정안 국회 제출 및 농업보호구역 보완 정비	12.31까지

### < 농어업인 복지지원 강화 >

상반기	·경관보전 직불제 개편방안 마련	6.30까지
하반기	·농촌형 역모기지론 도입 방안 마련	12.31까지

**참고2**

**2008년 정부입법 주요 내용**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국회 제 출
농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정)	농업경영정보 등록제 및 농가소득안정 직접지불제 도입	6월
부채대책 특별법(제정)	농가의 악성부채 해소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	7월
한국농업대학설치법(일부개정)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 운영	"
산림보호법(제정)	산불방지장기계획 수립·시행 근거 마련	"
농수산물과학기술육성법(제정)	농림과학기술정책 수립·추진근거 마련	8월
농촌진흥법(전부개정)	지방농촌진흥기관간의 연계 강화	"
농산물품질관리법(전부개정)	농산물품질인증제도 폐지	"
농어촌정비법(전부개정)	지역·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부당신청자 제재강화 등 미비점 개선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일부개정)	농특회계 용자사무위탁기관에 서민금융기관 추가	"
양곡관리법(일부개정)	양곡가공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	"
농수산물유통공사법(일부개정)	식품산업육성 지원기능 강화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일부개정)	감독규정 구체화 등 미비점 보완	"
한국마사회법(일부개정)	마주·조교사·기수 등 등록료, 면허수수료 폐지	"
수산자원관리법(제정)	수산자원상태에 따른 자원회복계획 수립	"
수산물품질관리법(일부개정)	수산물·특산물 품질인증제를 우수수산물인증제로 전환	"
어선법(일부개정)	어선의 건·개조 허가기준 구체화	"
수산업법(일부개정)	육성수면 승인 권한 지방이양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	임업진흥권역 대체 지정제도 폐지	"
수산업협동조합법(전부개정)	중앙회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9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녹색자금의 기금전환 및 관련조문정리	10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일부개정)	수산 및 어업부분 통합	11월
농작물재해보험법(전부개정)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가축·농업시설 등으로 확대	12월
농지법(일부개정)	비농업인 상속 소유한도 폐지, 회사법인 소유자격 완화	"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	농업인의 조합선택권 확대 등 조합 경쟁시스템 구축	"
농업기계화촉진법(일부개정)	농기계공동이용 추진주체에 농협중앙회 추가	"
낚시등 유어행위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정)	낚시 및 유어행위 관련법령 통폐합	"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	입출항시 승선선원의 보험가입확인제 도입	"